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영화

2-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영화

2-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Contents

73

010 편집의 방향과 원칙

011 일러두기

014 73·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014 1. 의결주문

01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16 제1절 조사 개요

016 1. 직권조사의 취지

016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016 제2절 조사 경과

016 1. 문건 등 자료조사

019 2. 대인조사

020 제3절 조사 내용

020 1. 부산국제영화제

022 2. 기존 조사결과

032 3. 부산국제영화제와 블랙리스트

033 4.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외압

048 5.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관련

062 6. 우파단체 및 언론 공세와 외압

072 7. 영화제 조직위 집행위 관련자 고발 등 추가외압

082 8. 사건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083 제4절 조사 결과

083 1. 진상규명 사실

08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087 3. 이 사건의 성격

74

092 74·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092 1. 의결주문

09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93 제1절 조사 개요

093 1. 직권조사의 취지

094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095 제2절 조사 경과

095 1. 문건 등 자료조사

09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98 제3절 조사 내용

098 1. 기초사실

101 2. 이명박 정부 시기 특정 사업 취소 및 상영 검열

111 3.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이사 선임 부당 개입

131 4.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상영 검열

151 5. 블랙리스트 등재 자료원 직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



74

75

76

160	제4절 조사 결과
160	1. 진상규명 사실
16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67	3. 제도 개선 의견
172	75·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72	1. 의결주문
17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 요지
173	제1절 조사 개요
173	1. 직권조사의 취지
17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174	제2절 조사 경과
174	1. 문건 등 자료조사
179	2. 대인조사
181	제3절 조사 내용
181	1. 기초사실
185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영화계 블랙리스트 기초
197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
218	4. 문제영화·영화인(단체) 블랙리스트 관리
232	5.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238	6.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
320	7. 영화계의 피해와 영진위 반성·책임
324	제4절 결론
324	1. 진상규명 사실
33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37	3. 이 사건의 성격
340	76·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340	1. 의결주문
34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41	제1절 사건 개요
341	1. 신청 및 직권조사의 취지
34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43	제2절 조사 경과
343	1. 문건 등 자료조사
34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45	제3절 조사 내용
345	1. 영화심의제도의 변화
361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통한 상영 제한
370	3. 사후관리제도의 활용과 검열(영화 <불안한 외출> 고발 건을 중심으로)
383	4.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배제
384	제4절 조사 결과
384	1. 진상규명 사실

Contents

76

77

78

38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388	제5절 의견
388	1. 권고사항
388	2. 제도개선 관련 의견
392	77·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392	1. 의결주문
392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93	제1절 사건 개요
393	1. 신청의 취지
39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94	제2절 조사 경과
394	1. 문건 등 자료조사
39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97	제3절 조사 내용
397	1. 기초사실 -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399	2. 독립영화전용관에서의 <잼 다큐 강정> 등 특정영화 검열
417	3. 영화 <다이빙벨> 상영 불허 및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 배제
427	4. 피해사실
428	제4절 조사 결과
428	1. 진상규명사실
43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433	3. 이 사건의 성격
438	78·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438	1. 의결주문
43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40	제1절 조사 개요
440	1. 신청 취지
44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40	제2절 조사 경과
440	1. 문건 등 자료조사
442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42	제3절 조사 내용
442	1. 기초사실
443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사유
445	3.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한 사안별 배제 의혹
452	제4절 조사 결과
452	1. 진상규명 사실
45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79

80

458 **79·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 458 1. 의결주문
- 45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59 **제1절 조사 개요**

- 459 1. 신청인 취지
- 45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60 **제2절 조사 경과**

- 460 1. 문건 등 자료조사
- 464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64 **제3절 조사 내용**

- 464 1. 기초 사실
- 468 2. 조사내용

490 **제4절 결론**

- 490 1. 진상규명 사실
- 492 2. 피해사실
- 492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496 **80·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 496 1. 의결주문
- 49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98 **제1절 사건 개요**

- 498 1. 신청사건의 취지
- 49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99 **제2절 조사 경과**

- 499 1. 문건 등 자료조사
- 50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01 **제3절 조사 내용**

- 501 1. 영화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 503 2. 영화등급분류 면제추천 취소와 영화 상영 방해
- 511 3. 면제추천제도 개정 시도와 표현의 자유 침해

518 **제4절 조사 결과**

- 518 1. 진상규명 사실
- 520 2. 이 사건의 성격 및 특징

Contents

81

524	81·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524	1. 의결주문
52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25	제1절 조사 개요
525	1. 신청 취지
526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26	제2절 조사 경과
526	1. 문건 등 자료조사
527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528	제3절 조사 내용
528	1. 기초사실
529	2.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경과
534	3.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실행 여부
539	제4절 조사 결과
539	1. 진상규명 사실
54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42	3. 사건의 성격

82

546	82·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546	1. 의결주문
54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47	제1절 사건 개요
547	1. 신청의 취지
548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549	제2절 주요 조사 경과
549	1. 문건 등 자료 조사
55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51	제3절 조사 내용
551	1. 기초 사실
553	2. 이 사건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555	3. 메가박스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561	4. IPTV사의 <천안함 프로젝트> VOD 서비스 조기 중단 경위
564	5. 영화인대책위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이유
564	6. 이 사건 이외에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을 방해하려는 정황
566	7. 영진위의 동성아트홀에 대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배제의 원인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에 있는지 여부
568	제4절 조사 결과
568	1. 이 사건의 성격
570	2. 진상규명 사실
571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83

576 **83·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576 1. 의결주문

57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77 **제1절 사건 개요**

577 1. 신청사건의 취지

57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78 **제2절 조사 경과**

578 1. 문건 등 자료조사

58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80 **제3절 조사 내용**

580 1.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582 2. 기존 조사(수사)결과

584 3.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상영과 대구동성아트홀 등 지원배제

593 4. 예술영화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의 재편과 문제영화 검열

606 **제4절 조사 결과**

606 1. 진상규명 사실

609 2. 이 사건의 성격

84

612 **84·‘(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612 1. 의결주문

61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13 **제1절 사건 개요**

613 1. 신청 취지

613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614 **제2절 조사 경과**

614 1. 문건 등 자료조사

61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616 **제3절 조사 내용**

616 1. 기초사실

616 2. (주)시네마달(김일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경위

621 3. (주)시네마달에 대한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배제

635 4. 피해사실

637 **제4절 조사 결과**

637 1. 이 사건의 성격

638 2. 진상규명 사실

642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643 **제5절 의견**

Contents

85

646	85·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646	1. 의결주문
64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47	제1절 조사 개요
647	1. 신청인 취지
648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48	제2절 조사 경과
648	1. 문건 등 자료조사
649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650	제3절 조사 내용
650	1. 기초 사실
651	2. 조사내용
663	제4절 결론
663	1. 진상규명 사실
66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86

668	86·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지원 축소 의혹 사건
668	1. 의결주문
66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69	제1절 조사 개요
669	1. 신청인 취지
66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70	제2절 조사 경과
670	1. 문건 등 자료조사
672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673	제3절 조사 내용
673	1. 기초 사실
673	2. 조사내용
680	제4절 결론
680	1. 진상규명 사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Ⅰ 편집의 방향과 원칙 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칙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의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의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총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3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73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영1[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2017. 9. 1. 제5차 전원위원회는, 이 사건은 청와대·문체부, 나아가 부산시 등 권력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삭감이 이뤄졌고, 영화제 집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퇴 압박과 고발, 시민단체·언론을 동원한 여론조작 등 광범위한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직권조사 개시 결정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조사결과, “세월호 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담은 영화 <다이빙벨>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알려지자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문체부, 부산시 등에 의한 광범위한 ‘상영차단’ 외압이 실행되었음이 확인이 된다.

- 2) 위와 같은 외압에는 청와대가 주도하여 전경련 등이 주도한 화이트리스트 단체(보수단체)들인 OOOOOOOO, 어버이연합 등과 연계되었고, 심지어 전 정부는 세월호 피해 유족 중 ‘일반인 유족’을 분리하여 활용한 사실, 위 영화제에서의 이 영화 관람표를 일괄 매입하여 일반 관객의 접근 차단을 행한 사실들 또한 확인이 된다.
- 3) 그럼에도 결국 이 영화가 상영이 되자 청와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전면적 지원배제 등 ‘페널티’를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내 개최 영화제에서 ‘문제영화’를 상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축소 등의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하여 전면 지원 배제할 경우 생길 ‘파장’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2 삭감방안을 제안하여 청와대에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하달하였다.
- 4) 위와 같이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예산이 편중되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여 결국 전년 14억 6천에서 8억 원의 지원 금액을 의결함으로써 ‘문제영화 상영을 이유로 한 지원배제’를 실행하였다.
- 5) 더불어 부산시의 지도점검과 고소,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등 또한 영화제에서 정부에 반하는 문제영화 상영을 이유로 한 ‘사후조치’였음이 확인이 된다.

붙임 :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영1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2017. 9. 1. 제5차 전원위원회는, 이 사건은 청와대·문체부, 나아가 부산시 등 권력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삭감이 이뤄졌고, 영화제 집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퇴 압박과 고발, 시민단체·언론을 동원한 여론조작 등 광범위한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 개시 결정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이 사건의 조사개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 제②항 제3호(직권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조사 목적(규명 과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은 ①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조치 ② 시민단체 및 언론을 동원한 여론왜곡 및 외압 ③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의 경위 ④ 영화제 조직위 집행위원장 사퇴압박 등 이후 추가 외압 등에 대한 것이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49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다큐 상영 보도 관련 보고(2014. 9. 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5.	
2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보고(문영1-2~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5.	
3	<다이빙벨> 영화 개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5.	
4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9~1-20)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5.	
5	영화 <다이빙벨: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등급분류 보고(문영1-21, 2015. 4. 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5.	
6	다이빙벨 상영반대 입장 보도 요지 (문영1-22)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5.	
7	주요사업현황(2015. 4. 10.)	영화진흥위	2017. 9. 6.	
8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2015. 4.)	감사원	2017. 9. 6.	
9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2017. 6.)	영화진흥위원회	2017. 9. 6.	
10	문체부 관련자 징계기록	문체부	2017. 9. 11.	
11	고발장(2017. 1. 25.)	부산국제영화제	2017. 9. 11.	
12	도종환 의원실 제출자료(부산국제영화제 논란 관련 영진위 및 문체부의 기고문 '부산국제영화제가 먼저 실천할 것들 (2015. 6. 16.)' 등 이메일)	문체부, 영진위 등	2017. 9. 15.	
13	위 같음 예술영화전용관 관련(2015. 7. 1.)	이OO	2017. 9. 15.	
14	위 같음 기존 사업 문제점 추가(2015. 7. 1.)	이OO	2017. 9. 15.	
15	위 같음,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관련 보도자료(2015. 7. 2.)	임OO	2017. 9. 15.	
16	위 같음, 보도자료 초안에 대한 의견 (2015. 7. 2.)	김세훈	2017. 9. 15.	
17	(문영5-10)140414 과장업무인수인계서 (정OO)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15.	
18	(문영5-2)160704 영상과장인수인계서	위 같음	2017. 9. 15.	
19	(문영5-3)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참고자료(대외주의)	위 같음	2017. 9. 15.	
20	(문영5-4)150216 다이빙벨 경과보고	위 같음	2017. 9. 15.	
21	(문영5-5)'다이빙벨' 관련 부산국제영화제 쟁점 보고(2015. 2. 16.)	위 같음	2017. 9. 15.	
22	(문영5-6)130912 천안함 프로젝트 경과 보고	위 같음	2017. 9. 15.	
23	(문영5-7)140313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 관련	위 같음	2017. 9. 15.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24	(문영5-8)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관련 문건(2015. 1. 7.)	위 같음	2017. 9. 15.	
25	(문영5-9)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 문건(2015. 2.)	위 같음	2017. 9. 15.	
26	BIFF 사건일지 등 임OO 제출자료	임OO	2017. 9. 18.	
27	위 같음, 전용관 보도자료 최종(2015. 7. 2.)	임OO	2017. 9. 18.	
28	위 같음, 부산영화제 관련 언론기고 대필 관련 자료	이OO, 박OO, 임OO, 김OO 등	2017. 9. 18.	
29	위 같음,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언론동향(사건일지, 기사 등, 2016. 3. 22.)	임OO	2017. 9. 18.	
30	위 같음, 예술영화전용관 개편안 보고서(2015. 10. 16.)	김OO	2017. 9. 18.	
31	위 같음, [대외비] 영진위 주요현안 경과보고 등 4건	영화진흥위	2017. 9. 18.	
32	위 같음, 예술영화전용관 관련 보도자료 등 6건	영화진흥위	2017. 9. 18.	
3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인 2,665명 리스트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9. 26.	
34	2017. 10. 18. JTBC뉴스룸 기사 및 부산국제영화제가 김OO 의원실에게 제공한 자료	강OO 기자	2017. 10. 18.	
35	영진위, 언론중재위 중재요청 등 자료	임OO	2017. 10. 18.	
36	'영상과 국감 예상질의 답변자료' (2015. 9. 1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손OO→임OO)	2017. 10. 18.	
37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국제행사심사 관련(2015. 9. 15.)	위 같음	2017. 10. 18.	
38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지도점검 결과 (2015. 1.)	부산시	2017. 11. 13.	
39	2014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 소명 및 개선방안(2015. 2.)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2017. 11. 13.	
40	지도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2017. 11. 13.	
41	부산국제영화제 2012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2013. 5. 14.)	부산시	2017. 11. 13.	
42	2012년 보조금 정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2017. 11. 13.	
43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2013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2014. 5. 29.)	부산시	2017. 11. 13.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44	2013년 보조금 정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2017. 11. 13.	
45	김OO 프로그램어 인터뷰 기사(JTBC, 2015. 1. 26.)	JTBC	2017. 11. 13.	
46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승인보고	이용관	2017. 11. 13.	
47	<다이빙벨> 티켓판매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2017. 10. 23.)	부산은행	2017. 11. 13.	
48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티켓판매관련 자료요청 추가 회신	부산은행	2017. 12. 14.	
49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심사위원 후보 명단	영화진흥위(김OO)	2018. 2. 6.	

2.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6인에 대하여 18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진술청취 보고(2017. 9. 12.)
2	임OO	사건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진술조서(2017. 9. 15.)
3	김OO	사건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진술조서(2017. 9. 20.)
4	이OO	201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진술청취보고(2017. 9. 20.)
5	윤OO	사건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진술조서(2017. 9. 22.)
6	OOO	위 같음의 주무관	진술조서(2017. 9. 25.)
7	손OO	2015.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진술서(2017. 9. 26.)
8	김OO	2015. 영진위 글로벌마케팅팀장	진술조서(2017. 10. 11.)
9	OOO	영화진흥위원회 2015. 홍보협력팀	진술조서(2017. 10. 11.)
10	이OO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진흥본부장	녹취록(2017. 10. 18.)
11	이OO	당시 영진위 기획홍보부장	진술조서(2017. 10. 20.)
12	김OO	당시 영진위 글로벌마케팅팀장	진술조서(2회, 2017. 10. 26.)
13	임OO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진술조서(2회, 2017. 10. 27.)
14	김OO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진술청취 보고(2017. 11. 9.)
15	강OO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진술조서(2017. 11. 22.)
16	한OO	영화진흥위 2016. 글로벌마케팅팀장	진술조서(2018. 1. 19.)
17	김OO	영화진흥위원회 2016. 글로벌마케팅팀장	진술조서(2018. 2. 6.)
18	박OO	사건 당시 영진위 국제사업부장	진술조서(2018. 4. 16.)

제3절 | 조사 내용

1.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및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영상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시아 영화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의 확대에 아시아 내 영화교육의 증추적인 역할”, “아시아필름마켓의 개최로 아시아와 세계영화를 잇는 교량 역할”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96. 2. 13.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 16. 문체부의 법인설립허가를 얻어 같은 해 9. 13.~9. 2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듬해인 1997. 2. 17. 에는 PIAFE(세계영화제작자연맹)로부터 국제영화제로 공인을 받았다.

2011년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제 전용관 ‘영화의 전당’이 완공되었고 영문 표기를 ‘PIFF’에서 ‘BIFF’로 변경하였고, 2012년에는 아시아영화 발전과 다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유네스코 펠리니 메달을 수상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누리집에 의하면, 2014년 제19회 영화제는 2014. 10. 2.~ 10. 11. 까지 79개국 312편이 상영되었고 총관객수는 226,473명이다.

이 영화제 성과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역대 최대 관객동원 기록인 221,002명을 뛰어넘는 226,473명의 관객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관람층과 관람 서비스 대폭 확충, 시네키즈 부문 신설, 배리어프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실시 등 관람층과 관람서비스 대폭 확충으로,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노력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작가 발굴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이라크, 레바논,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세계무대에서 소외된 지역의 뛰어난 작가들을 대거 발굴하여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재능의 등용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아시아필름마켓, 글로벌 비즈니스의 영역 확장부스 및 참가자의 역대최고기록 갱신뿐 만이 아니라, 미주, 유럽권 특히 중국권 참가자들의 대폭 증가로 아시아필름마켓이 글로벌 필름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제20회 영화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역대 최대 관객동원 기록인 226,473명을 뛰어넘는 227,377명의 관객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올 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객들의 사랑과 지지로 안정적인 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 “‘아시아영화 100’, ‘한국영화 회고전 - 1960년대 숨은 걸작’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프로그램이 국내외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아시아영화의 허브’로서의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역대 최다 GV와 무대인사,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담론의 장을 확장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등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영화제 조직위 집행부 현황을 보면, 1회~11회까지 김OO가 단독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이용관은 7회~11회까지 부집행위원장, 12회~15회까지 김OO와 공동집행위원장, 16회~19회까지 집행위원장, 20회는 강OO와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체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영5-2)160704 영상과장인수인계서(정OO→이OO)」를 보면, 2015. 12. 부산시는 부산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및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이용관 2016. 5. 3.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해 2. 12. 이용관은 자문위원 68인을 신규 위촉(총회 구성원, 기존 87인에서 155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산시는 같은 해 3. 14. 부산영화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부산지방법원은 4. 11. 이를 인용 결정하였는데, “신규 자문위원이 기존 임원, 집행위원 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조직위 인적 구성의 본질적 변경 및 의결권 행사구조의 왜곡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2016. 4. 18. ‘부산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대위’는 부산시장 조직위원장 사퇴, 부산영화제 독립성 보장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반 마련을 요구하며 부산영화제 참가 거부를 발표하였다.

2016. 5. 9. 민간조직위원장에 김OO 명예위원장(강OO 집행위원장)을 위촉하고, 조직위원장의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을 개정하여(2016. 5. 27. 정관변경 허가 요청, 같은 해 6. 1. 문체부의 허가) 2016.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토록 하였다.

참고로 영진위의 2009~2014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금액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영화제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부산국제영화제	1,800	1,500	1,500	1,500	1,500	1460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500	450	500	500	550	550
전주국제영화제	1,000	700	700	700	650	61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400	300	350	350	330	340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250	200	200	200	180	200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50	250	250	250	290	290
DMZ국제다큐영화제	-	-	-	-	-	50
계	4,200	3,400	3,500	3,500	3,500	3,500

2. 기존 조사결과

가. 감사원 감사

1) 감사의 과정

감사원은 2016년 국정농단 의혹사건 상당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추진한 각종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2016. 12. 30.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따라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감사는 2017. 1. 9.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 19.부터 3. 10.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의 결과(요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2017. 6. 12.)를 보면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장 정OO은 2015년 4월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신OO로부터 영화<다이빙벨>을 상영하였다는 사유로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 지원금의 50% 내외 수준(약 730백만 원)으로 삭감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후 콘텐츠정책관 최OO¹⁾에게 보고하였으나 최OO은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두었다.

영진위원장은 정OO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후 영진위(사무국)로 하여금 2015. 4. 17.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이 집중-지원사업에 신청한 영화제 중에서 가장 낮거나 두 번째로 낮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비중이 43%인 점을 부각-되어 있는 점과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제행사의 유지·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으로 7회 이상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제외 대상-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예산을 1,000백만 원 이하로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을 부각하는 등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는 심사 자료를 배포하도록 결재하였다²⁾.

1) 전임은 박OO. 당초 정OO은 2015년 1월말 신OO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지시받은 후 위 박OO과 최OO에게 보고한 후 일부 삭감 검토 요청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2) 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2013. 12. 10.) 「국제행사의 유지·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10억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에 대해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영진위원장은 2015. 4. 27. 위 지원사업의 결정심사를 진행하면서 총 7명 중 4명(의결 정족수 4명)의 심사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750백만 원으로 삭감 등)에 반대하자 가결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으로 제안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심사위원 중 2명에게 휴회 시간 중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문체부(콘텐츠정책관실)의 지시사항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남은 심사위원 2명이 반대의견을 거세게 내자 예비 심사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일부 상향을 전제로 재심사하는 내용을 제안한 후 위원들의 찬성의견을 유도하여 이와 같이 예비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하였다.

이후 예비심사위원회는 2015. 4. 28.경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결정 심사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액을 800백만 원으로 결정, 영진위원장은 이를 결정심사에 재상정하여 결정심사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전년도 대비 660백만 원 삭감-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하였다.

3) 감사원의 징계요구(통보)와 징계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관련자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다.

대상자	소속 및 직위	비위사실	요구
박OO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 신OO 행정관의 지원금 삭감지시 보고를 받고도 거부하도록 하지 않음	(경징계 이상)
최OO	위 같음(후임)	• 위 같음	(주의를 촉구)
정OO	영상콘텐츠 산업과장	• 청와대의 지시 보고 및 이행	(주의를 촉구)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	• 다이빙벨 상영관 지원배제 지시 이행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삭감 지시 이행	(인사자료로 활용) 2017. 5. 18. 자진사퇴

나. 특별검사³⁾ 수사

1) 특검의 설치 및 수사의 경과

① 2016. 10.경부터 민간인 최순실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참여하여 국

는 이를 심사하는 데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부산영화제 심사 중단시점은 2018년 이후였다(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국제행사심사 관련」(2015. 9. 15.).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가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등을 설립하여 이 과정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여 사익을 취하였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 ② 이에 2016. 11. 17.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 1.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다.
- ③ 특검은 2016. 12. 21.경부터 70일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각 국정농단 의혹사건들을 수사하였고 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

2014. 9. 2.경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위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해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⁴⁾의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조운선 정무수석은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소통비서관 및 정무수석실 소속 강OO 행정관 등에게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도록 하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의 전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하여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토록 하라, 부산 의원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영화 상영에 대해 항의토록 하라, 해외공관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대응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하라’ 등을 지시하였다(특검 2017년형제3호(분리) 공소장).

3) 피고인별 구속여부 및 죄명

특검 수사결과 이 사건 관련 구속여부, 죄명 및 구형은 다음과 같다.

4) 김영한 비망록, “長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다이빙벨, 파주, 김현”

피고인	소속 및 직위	구속	죄명	구형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2017. 1. 21. 구속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7년
조윤선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	위 같음	위 같음	6년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불구속	위 같음	6년
김소영	문체비서관	불구속	위 같음	3년
김종덕	문체부장관	2017. 1. 11. 구속	위 같음	5년

다.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판결

1) 범죄 일람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사건2017노2425/2424(병합) 사건 판결 중 ‘범죄일람표(3)’의 5번과 관련이 있다.

순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담당 (문체부/ 산하기관)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	비고
5	2015- 04-30경	부산국제 영화제	2014년 14억 6천만 원에서 2015년 8억 원으로 지원금 삭감	영상콘텐츠 산업과 손OO/ 국제사업부 박OO	부산국제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지시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 상정	영화 다이빙 벨 상영

2) 판결내용

이 사건과 관련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중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요청 거부(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 및 부산국제영화제,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배제(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다이빙벨’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이 상

5)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부분)은 피고인 김상률의 경우 교문수석 부임(2014. 11. 18.) 이전에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조운선 정무수석은 그 무렵 정무수석실 피고인 정관주 소통비서관 등에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 저지를 위하여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다이빙벨>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되었고,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김소영은 신OO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정OO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이OO 사무관에게 <다이빙벨>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정관주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

피고인 김상률, 김소영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피고인 김종덕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한다 음 문체부 정OO을 통해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여,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인 영진위 국제사업부

박OO는 부산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김종덕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인디스페이스’, ‘아리랑 시네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문OO 부장은 이OO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는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OO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조윤선의 이 사건 관련 부분⁶⁾

이 사건 관련하여 위 같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 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김종덕 장관의 2014. 10.경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정무수석실에서 공유하거나 위 보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OO이 2014. 12.경 작성하여 보고한 부산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방안 보고서, 문체부 이OO이 2015. 3.경 작성하여 보고한 부산국제영화제 반액삭감 등 방안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2014. 9. 3.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 정무, 교문’이라는 기재가 있어 다이빙벨 상영 문제에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 대응한다는 지시 또는 논의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삭감 문제까지 공동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정관주가 2014. 11.경 다이빙벨 상영 결과와 진행상황을 피고인 조윤선에게 보고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6) 판결문의 182~184쪽

시기에 비추어 지원금 삭감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무수석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제2 원심은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김종덕 장관의 2014. 10.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정무수석실에서 공유하거나 위 보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OO이 2014. 12.경 작성하여 보고한 부산국제영화제 반액삭감 등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다이빙벨 상영문제에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대응한다는 지시 또는 논의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삭감 문제까지 공동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관주가 2014. 11.경 다이빙벨 상영결과와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는 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비추어 지원금 삭감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나 정무수석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인디스페이스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배제 등을 지시, 승인하였다거나 달리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경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2014. 10. 22.경 실수비에서 일반 상영관에서의 다이빙벨 상영 확산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정무수석실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의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정관주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문체비서관과 협의하여 일반 상영관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2014. 8. 22. 실수비 및 2014. 8. 25. 대수비에서 송광용 교문수석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보고를 하였는데(순번 제 1365호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 순번 제1404호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송광용 진술), 그 주된 내용은 심사위원 풀을 7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여 문제인사를 배제하고, 문제영화를 상영한 독립예술영화관을 지원에서 배제하며, 문제영화 상영관을 지원 대상에서 거르기 위하여 심사절차에 영진위 2차 심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심사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② 한편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8. 23. 실수

비에서 전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광주비엔날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전시하려는 시도 등을 사례로 들면서 “각 부처의 일부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하여 바로잡아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순번 제1366호 2014. 8. 23.자 실수비 회의결과). ③ 2014. 10. 18.경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보고’ 문건(증거기록 6491쪽)에는 ‘상영 후 조치’로서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을 기재하면서, ‘예술영화 전용관의 영화발전기금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라고 부기하고 있고, 그 후 2014. 12.경까지 이루어진 문체부의 다이빙벨 관련 보고서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원 중단을 향후 대책으로 거론하면서 각 상영관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6493쪽~6514쪽). ④ 2014. 10. 21.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7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정리하여 건전 영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위원회 심사위원 후보를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내부인력이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 외에 영화제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평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14. 12.경 교문수석실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있었던 대수비 회의에서는 김상률 교문수석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생태계 건전화 추진’ 방안 중 ‘사후 제재’로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 방침을 보고하였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김소영, 제2 원심 증인 신OO 각 진술, 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⑤ 2015. 1.경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 문건(증거기록 20042쪽)에서는 다이빙벨 및 자가당착을 상영한 인디스페이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1안으로 면제추천 취소를, 2안으로 2015년 영진위 지원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 ⑥ 한편 김소영의 특검 및 제1, 2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이빙벨과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제도개선, 예산삭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모두 정무수석실 정관주 비서관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정관주 역시 특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다이빙벨과 관련하여 받은 보고서는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독

립영화관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삭감 등에 관한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인 김소영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0~132쪽, 제2 원심 증인 김소영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1, 132쪽, 제2 원심 증인 정관주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4쪽 등). 이러한 김소영과 정관주의 일치된 진술, 다이빙벨의 상영저지 및 그에 대한 제재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그에 부응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의 주요 관심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별히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이 공동으로 다이빙벨 문제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관주를 통하여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로부터 받은 다이빙벨 관련 보고서에 관하여 모두 보고를 받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2014. 8.경부터 이미 ‘문제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방침이 실수비 및 대수비에서 논의되었고, 비서실장이 ‘정부철학과 배치되는’ 작품 전시를 예로 들면서 보조금 지원 차단 등을 지시한 점, 2014. 10.~12.경 실수비, 대수비 등을 통하여 다이빙벨을 ‘문제영화’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로서 그 상영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과 공동으로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및 상영관 확산 억제 등을 위하여 대응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이빙벨 상영 영화관과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배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영진위의 지원을 받는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해서는 영진위 지원의 배제가 효과적인 상영저지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부의 보고서 등에도 다이빙벨의 상영저지와 함께 상영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가 대응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및 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한 지원배제를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함께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정무수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김기춘 등 공범과의 관계, 다이빙벨 상영저지를 위한 활동 등을 고려하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김기춘 등 공범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라. 박근혜의 국정농단 관련 판결

1) 범죄일람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은 박근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사건(2017고합364-1/분리)과 관련하여 판결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범죄일람은 앞서 기재한 김기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과 같다(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8’의 순번 5.)

2) 유죄판단의 부분

이와 관련하여 판결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노2425 등의 판결문의 기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판결문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000⁷⁾이 2014. 10.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다이빙벨>과 관련하여 00수석실에 송부한 일일보고서에, 상영 전 조치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상영 후 조치로 ‘<다이빙벨>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000은 2014. 12.경 00, 00의 지시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보고서’를 작성하여 00, 00에게 보고한 후 000과 피고인(박근혜)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순번 1책 3124의 13,802쪽), ③ 000로부터 이러한 청와대의 전액 삭감 방침을 전달받은 문체부의 000과장⁸⁾ 등은 2015. 1.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나 논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000에게 보고한 후 교문수석실에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④ 이에 따라 2015. 3.경 00수석실과 문체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내외로 감축하기로 조정하였고, 000이 이를 000실장에게 보고한 후 000이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⑤ 이후 영진위는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

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윤00 사무관으로 보임

8) 정00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 보임

한 사실이 인정된다.

OOO이 법정에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것은 7년까지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그때가 6년째 들어가는 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억원 이상 계속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증인 OOO 2017. 9. 7. 녹취서 38쪽)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가 2015년부터 바로 10억 원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4. 30.에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영진위 임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 박근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죄가 모두 해당된다고 보았다.

3. 부산국제영화제와 블랙리스트

- ① 2017. 10. 30.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10. 31.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였다.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 중 2014. 3. 19.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BH보고서)를 보면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249명 중 영화분야는 104명이며 여기에는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기재됨)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위 국정원이 제출한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2014. 12. 31.)」에는 정부지원 국제영화제에서의 스크린(사전검열) 방안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 영화 >

- 1) 투자지원 영화 제작 : 투자조합 관계자 정기 간담회를 통해 문체성 작품 투자 자제 유도
- 2) 정부지원 국제영화제 : 국가나 정부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영화 상영 자제(아동 선정 이전 후보집도 단계에서 스크린)
- 3) 독립영화진흥관(3개) 지원 : 현저히 객관성을 잃거나 반사회적 영화상영 자제(영진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권고)
- 4) 독립영화 제작 지원 : 심사위원 선정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인사 배정(후보자 5배수 선정, 위원장이 우선순위 결정)

4.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외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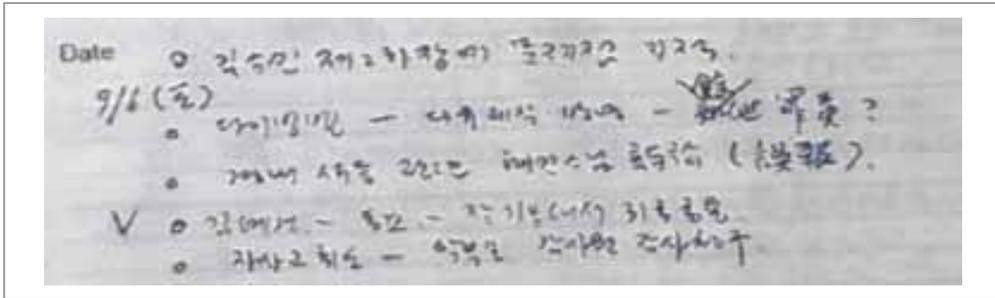
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프로그램 확정 과정

위 같은 이용관(진술청취 보고, 2017. 9. 8.)은 “당시 홍OO 다큐 프로그래머가 <다이빙벨> 작품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선정 원칙은 프로그래머들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다이빙벨>처럼 프로그래머 혼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구하면 이때 위원장이 함께 검토한다. <다이빙벨>은 워낙에 핫이슈였고 작품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영화의 취지가 좋긴 하나 부족한 것 같다, 돌려보내라’라고 했다. 영화제 개최를 한 달 가량 앞두고 기자회견(2014. 9. 2.)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날 상영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하면 8월 25일 정도, 상영작 선정이 마감된다. 이런 와중에 <다이빙벨>을 보게 되었고 작품성이 떨어져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된 때가 8월 20~25일 무렵이다. 제작자인 정OO 감독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좋지 않냐’라고 묻자 ‘그렇다, 너무 심하다’라고 답하였다. 정OO 감독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편집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하여 진술인도 ‘기다리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관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일주일 후에 정OO 감독의 편집본이 왔는데 작품이 좋아졌다. 작품에 대해 ‘어떠냐’고 프로그래머들에게 물으니 ‘많이 좋아졌으나 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들이었다. 그래서 같은 해 8. 30.경 진술인이 상영을 ‘최종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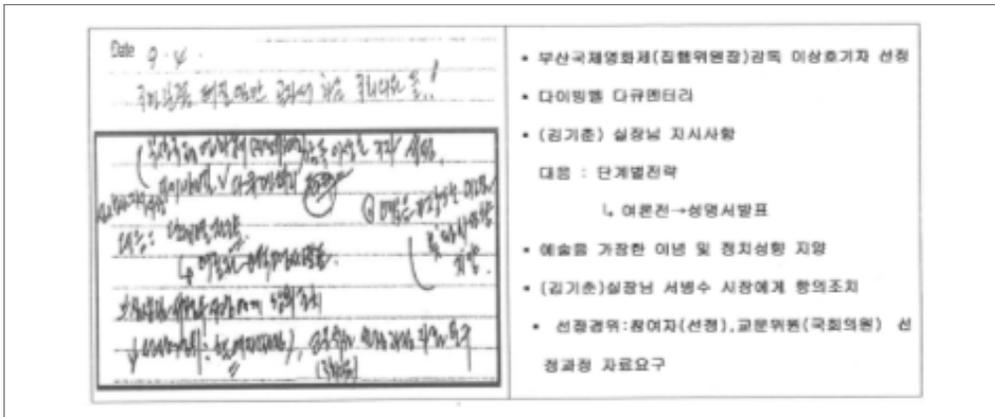
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차단

1) 청와대의 관여

① 2014. 9. 2. 부산국제영화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다이빙벨>을 포함한 상영 프로그램이 공개되었다. 이후 청와대 등은 이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2014. 9. 6.자에는 “다이빙벨 - 다큐 제작·방영 - 餘他罪責(여타죄책)?” 이, 같은 해 9. 20.자에는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查”등이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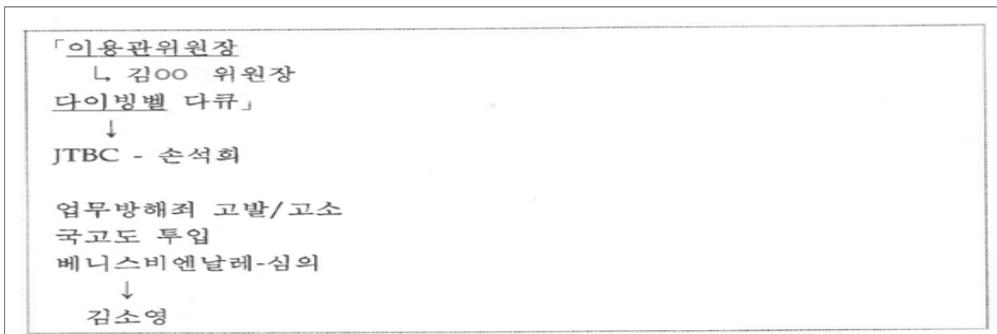


또한 당시 청와대 소통비서관실 강OO 행정관의 수첩에는 2014. 9. 4.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다큐멘터리 실장님 지시”, “대응: 단계별 전략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2014. 9. 20.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보수문화인 ‘다이빙벨 사건의 전모’ 영화”, 2014. 9. 26.자: “다이빙벨 문제점 → 차세대연대 ‘다이빙벨’에 한하여 퍼포먼스”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같은 사건2017고합102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기록 중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 오OO의 진술조서(2017. 1. 24.)에는 “신동철 비서관이 말하기를,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된다고 하는데, 당장 중단 시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회의석상에서 ‘당장 중단 시키라고 하는데 되겠냐,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당장 될 수 있겠냐, 억지로 막으면 그 영화 광고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 토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조운선은 비서관 및 행정관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항의하도록 지시하고, 흥OO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에 상영 불가 취지의 서병수 부산시장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⁹⁾.
-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2017고합102 증거록 중 당시 문체부 1차관 김희범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같은 증거기록 중 김희범의 진술조서(2016. 12. 31.)에는 “김소영 비서관이 자신에게 김OO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용관 위원장에게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용성위는 대통령 직속이니 청와대에서 직접 김OO 위원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소영 비서관이 얘기한 <다이빙벨> 문제는 당시 교문수석(아마도 송광용 수석)이 직접 김종덕 장관에게 연락하여 서병수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김종덕 장관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부탁을 한 다음 저에게 그런 사실에 대해 얘기해주면서 ‘차관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고 하였다. 마침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전직 기재부 출신인 저의 지인이어서, 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⑤ 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기록 중 신OO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2013. 12.~2014. 10. 8.)의 진술조서(2016. 12. 17.)에는 “2014. 8.~9.경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문제로,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그래서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통화하여 ‘다이빙벨’ 상영 여부가 청와대의 관심사항으로 알려주고 그 내용을 부산시장에게도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반대 여론전 배후조종의 전말」, 미디어오늘, 2017. 2. 2.

- 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기록 중 당시 문체부 윤OO 사무관이 작성한 진술서(2017. 2. 1.)에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김OO 국장이 부산시 문화예술국장에게 전화하여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신OO 실장이 부산시 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부산시 영상과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저는 청와대로부터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으라’ 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문체부·부산시 등의 외압

- ① 부산시장 서병수는 2018. 12. “2014년 9월 당시 하OO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다이빙벨 상영에 반대의견을 내놓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영화제 조직위원장과 부산시장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권유한 것이지 청와대 등의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이빙벨> 상영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걱정하는 전화는 받았지만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 “김 실장 등의 압력에 따라 상영 금지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등의 요구와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 “이용관 위원장은 압력을 받아 사퇴한 것이 아니라 2016년 2월 임기를 모두 마치고 사임했다. 사퇴압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을 상대로 말한 바 있다.¹⁰⁾
- ② 부산시 이OO 문화관광국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다이빙벨 사태’ 당시 서 시장은 조직위원장으로 유가족의 상영만류 의견을 감안해 해당영화를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했었다.”, 부산시의 지도점검과 감사와 관련해서는 “BIFF의 사업비 절반 이상(70여억 원)이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임무수행이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역시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 따라 임기만료로 자동퇴임한 것으로 집행위원장직에 대한 어떠한 강요나 물리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¹¹⁾

10) 서울신문, 2018. 1. 12.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논란은 정치적 의도”」

11) 프레시안, 2017. 8. 9.자 등

③ 위 같은 주장에 대해 이용관(진술청취보고, 2017. 9. 8.)은 “2014. 9. 2. 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은 오전에 부산에서, 오후에 서울에서 있었다. 이날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부산시장 서병수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날 유난히 기자들이 질문이 많았는데 <다이빙벨>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2014. 9. 3. 부산시 담당 국장 김OO와 담당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이빙벨을 안 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진술인은 기자회견까지 한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답하였다…그런데 2014. 9. 4. 이후 ‘논란’이 확산되었고 긴장관계가 이어졌다… 2014. 9. 4. 부산시장이 직접 ‘상영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시장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시장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유족이 반대한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후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진술인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발표한 걸 안 틀은 적은 없으니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답하였다…국정원 부산시 문화담당 이OO는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당시 조직위 사무국장에게 전했다고 한다. 사후에 보고 받기를 당시 사무국장에게 이OO가 <다이빙벨> 상영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영화제 개최 이전, 9. 30. 또는 10. 1.경에 김OO 교수와 함께 정OO 부시장을 직접 만났는데 ‘다이빙벨 영화상영은 절대 안 된다, 큰일난다.’라고 요구했는데 진술인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정도로 답하였다. ‘이미 손을 떠난’ 느낌이었다. 부산시가 기자회견 때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다가 태도가 급변한 것은 ‘최순실 라인’이 ‘다이빙벨’ 상영 사실에 대해 본 것 같다. 그리고 뒤늦게 청와대나 문체부 담당 직원이 깨졌을 거라고 추정되고 김기춘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본디 보수적인 색채를 가져서 영화 상영을 반대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지인들에게 ‘저 사람(이용관) 고집쟁이니까 말해봐라’ 말려보라는 요구를 듣고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진술인이 하OO 의원에게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여 하OO이 사전시사에 오기로 해서 보여줄 준비를 했더니 하OO 보좌관이 와서 보고 갔다. 그리고 나중에 하OO으로부터 ‘안 좋은 영화 아니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왜 상영하냐’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영화제 개막 파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초청된다. 이 자리에서 당시 교문위 상임 위원장 한OO는 진술인에게 반말로 ‘뭐 그런 영화 트냐’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다이빙벨> 개봉과 상영 금지 외압

- ① 2017. 10. 31. 국정원 개혁위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 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u>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처물</u>	
2014.10.24	<p>홍도대, '새물초' 다큐상영 논란 관련 문체부 실무자 경고 지시 2014. 10. 27[21] □ 홍도대 비서실장권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 벨'이 상영된 것과 관련 "국고가 지원되는 영화제에 문제작이 상영된 것은 명백히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다"면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실무진들의 징계를 지시(10.22) * "노조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시 새물초 부각 기도"(9.15) * "부산영화제조직총, '다이빙벨' 영화상영 논란 확산 우려"(9.30) * "비관세력의 다큐 '다이빙벨' 상영확산 우려 여론"(10.14) 등 경보 보고 □ 이에, 문체부(장관 : 김종익)는 부산영화제를 담당할 김재원 콘텐츠정책관 등 3명에게 영상분야 압무 추진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히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장관명의 경고장을 전달(10.23)하였으며 ○ 청와대(고석문화수석실)에서 다큐 '다이빙벨' 개봉(10.23)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뉴데일리·미디어펜 등 건전 인터넷 언론을 통해 상영반대 주장을 담은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 10.23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 문체부 종합감사서(10.24) "다이빙벨"을 정경화할 경우 비관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회의 자</p>

- ②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제출한 2014. 10. 18. 「(문영1-2) 다이빙벨 상영관 관련 현황 보고」에는 2014. 10. 23.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그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이에는 향후 대책으로 "(상영 전 조치)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및 "상영 후 조치"로 예술영화전용 전용관의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

□ 보고 개요

- 10월 23일(목)부터 다큐 영화 '다이빙벨' 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
- 현재 9개 상영관에서 개봉예정이며, 이 중 5개가 영화발전기금 (영진위)을 지원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 * 차석규로 편성한 황해 보도관(14년 6억 원)기금당 평균 40여만원 내외

□ 상영 예정 영화관 현황(9개, 10.18<금> 기준)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7개 (K11시네마테크(영광)공감주인아르나인시네코드선재, 아트하우스모모(이당) 영진위 지원 예술영화전용관) 2 (K11시네마테크, 인디스페이스)
- 일반 극장 2개 (메가박스 인스, 인왕산당시네마)

□ 영우 대책

- (상영 전 조치)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 영진위 지원 예술영화전용관 5개 중 대화가 가능한 1곳(에네코드선재)에 요청(10.17)하였으나, 거절당함(원칙 전 방문 필요로 회답)이라고 답변
 - 영진위선임 부장(가 대표) 통화, 당일 10.17일 에네코드선재(영광)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7개(10.18 현재) 현황은 상영할 예정인 영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개봉 예정 종료
 - 기타 상영관에 요청시 민간에 대한 권일 및 억압 논란 야기,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다이빙벨 측에 상영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음
 - 나머지 상영관인 광성 문화사·포로그레머(이화)나인, K11시네마, 아트하우스모모, 전주달 지역극우관, 독립영화 전용관(인디스페이스), 단원극 추세시(메가박스) 전산으로 요청 관련
 - 특히, 메가박스, 인스은 원학생업으로 분사 통해 피하기 어려움, 또한 메가박스(모모)의분을 중앙실업(가) 보유하고 있으며, "K11 시네마테크(영광) 상영 중단 결정으로, 외부상영 민선
- (상영 후 조치)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 예술영화전용관의 영화발전기금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실효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 2012년 창간창조프로젝트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들 2014년 사업에서 제외
 -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지원을 받지 못한 에네코드선재, 영진위에는 예산 결정(14.10월)

< 참고 >

<다이빙 벨> 상영 예정 영화관 현황

□ 개봉현황 (10월23일 개봉 예정)

○ 영화상영권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7개
(2014.10.18(토) 14:00 기준)

구분	상영관 수	상영 횟수	스크린 수	상영관명(지역)
기타	1	3	3	*K11시네마테크(영광)전용 관(에)인공(영)
		3	3	*K11시네마테크(영광)전용 관(영)인공(영)
		7	7	*인디스페이스(과)서울
		-	1	*영광공감주인(공)영진위(영)남구
		1	1	*에네코드선
	4	4	인왕산당시네마	
CGV	-	-	-	
올레시네마	-	-	-	
메가박스	1	1	1	메가박스(영)영
포티팩스	-	-	-	
합계	7	19	7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대상 상영관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 기타(홍피어지에 상영예정작으로 홍보 중) : 2개
- 시네코드선재, 아트하우스모모

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기록 중 당시 문체부 영상 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의 진술조서(2017. 1. 3.)에는 “청와대 신OO 행정관이 보고를 요청했던 것 같고, 윤OO 사무관과 제가 함께 작성하여 윤OO 사무관이 정OO 과장과 국장(아마도 박OO 콘텐츠정책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장·차관에게도 보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 대책까지 수립해서 달라고 하였고, 그 전에 있던 「천안함 프로젝트」사건 때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OO 사무관이 영진위 문OO 부장에게 전화하여 영진위가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에 상영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문OO 부장이 그나마 대화가 되는 ‘씨네코드선재’에 연락하여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지만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라고 거절하는 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무렵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보류하기도 하고, 사업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술전용영화관에서 영진위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영진위에서 오랜 기간 일한

문OO 부장이 전화할 만한 곳이 ‘씨네코드선재’ 뿐이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윤OO 사무관(진술조서, 2017. 9. 22.)은 “다이빙벨이 10. 23. 개봉되었는데요, 10. 19.경 담당 과장에게 전화가 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영진위 담당 부장에게 전화하여 우호적인 독립 예술전용관 중 씨네코드선재 측에 조심스럽게 상영 자체가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영진위 문OO 부장이 연락하기를 씨네코드선재 쪽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당시 메가박스를 통해서 예술영화를 상영하는데 당시 도청 김OO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진한 결과 경기도 김OO 팀장님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보고할 때는 청와대에서 보고 양식도 정해주었는데 정부지원금 현황, 극장 좌석수, 상영횟수와 시간 등에 대하여 양식을 정해주고 제출하라고 하여서 계속 보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일도 많은데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지 담당 과장과 함께 무의미한 일을 왜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2015. 1.까지 현황파악을 했는데, 11월 중순까지는 거의 집중적으로 매일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윤OO이 작성한 일일보고(〈다이빙벨〉 상영관 현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14-122

<다이빙 벨> 상영관 현황

*4.10.27. 기준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2015년 10월 27일 현재, 누계 실적

일	상영관명(지역)	상영횟수	스크린수	상영횟수	예매	동영상제작사(제작사명)	비고	
1	KM시네마테크(서울 강남구)	3(10.27~10.31)	1	3	○	○(예술영화진흥원, 41석당)	민간취득	
2	아트하우스 모토(서울 서대문)	3(10.27~10.31)	1	10	○	○(예술영화진흥원, 80석당)		
3	필름포럼(서울 서대문)	3(10.27~10.29)	2	9	○	○(예술영화진흥원, 33석당)		
4	씨네코드선재(서울 종로구)	3(10.27~11.3)	1	3	○	○(예술영화진흥원, 70석당)		
5	에코나인(서울 동작구)	3(10.27~10.29)	1	20	○	○(예술영화진흥원, 21석당)		
6	민트스퀘어(서울 종로구)	1(10.27~11.3)	1	24	○	○(독립영화진흥원, 30석당)		
7	메리퀸시네PLEX(서울 성북구)	3(10.27~10.29)	1	4	○	○(독립영화진흥원, 100석당)		
8	KM시네마테크(서울 교차)	3(10.27~11.3)	1	7	○	○	민간취득	
9	씨네마PLEX(서울 종로구)	3(10.27~10.29)	1	11	○	○		
10	대형나인(서울 종로구)	3(10.27~10.29)	2	9	○	○		
11	무인	국립현대미술관(부산 남구)	3(10.27~11.3)	1	14	○	○(예술영화진흥원, 41석당)	
12	무인	씨네마PLEX(부산 남구)	4(10.27~ 11.3)	1	3	○	○	
13	민간	영화공간주한(부산 남구)	1(10.28)	1	1	○	○(예술영화진흥원, 20석당)	
14	상수	동주아트(광주 동구)	6(10.27~11.1)	1	9	○	○(예술영화진흥원, 70석당)	
15	민간	씨네시네(광주 서대문)	3(10.27~10.29)	1	3	○	○	
16	대진	대진 아트시네(대전 동구)	3(10.28~10.29)	1	2	○	○	
17	상수	영구아트시네	3(10.27~10.29)	1	9	○	○	
18	민간	광동아트시네(광주 서대문)	1(10.27~11.3)	1	22	○	○(예술영화진흥원, 30석당)	
19	정부	인동아트시네(부산 동)	4(10.27~11.3)	1	7	○	○	

□ 문화부 조직사항, 실려, 계획

※ '14.10.24(일) 오후 3시, '어버이 연합' 당회에서 상영관대 기자회견 개최(서울극장 및 150여명 참석)

※ 10.26(수) 문화간사 서(28일) '다이빙벨' 관련할지 물어봄(방문 추진, 세누리움 직원실 방문, '다이빙벨'관련 할지 자체 검토요청)

※ 미디어 및 영화 학연, 문화계 노리코미제할 후회과 나하나 다이빙벨 측에 상영 일의실용 14로 늘려줄 수 있음

※ 계속적 모니터링 및 필요방안 강구

④ 위 윤OO(진술조서, 2017. 9. 22.)은 위 보고에 대하여 “신OO 행정관의 연락을 받고 정OO 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 서식까지도 청와대에서 수정해 주었고 특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독립영화관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지원을 받는 영화관에서는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 10. 21.경 국민소통실을 통해 언론사를 접촉, 기사 노출 협조 요청사실 경위에 대해) 당시는 박OO 국장이 부임했는데 그 분은 국민소통실에서 온 분으로 뭔가 청와대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와서 실적을 내놓으라하고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니 박OO 국장이 언론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영화계 블랙리스트 작동의 강화

① 결국 부산국제영화제와 영진위가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 등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문체부는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였는데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직접적 지시 아래 이뤄진 것이다.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윤OO(진술조서, 2017. 9. 22.)은 <다이빙벨> 상영을 막는 것은 과장 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김희범 차관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서병수 시장이 상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고 청와대 등에서도 상영을 막기 위해 크게 현안으로 잡고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상영이 되어버리니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니까 그 징계가 국장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상영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이 이뤄지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시 국장님 선까지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정황상 이러한 것들이 당시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에 본격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비상임 이사 임명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압력이 있었는데, 다이빙벨이 터지고 나서 영화계에 대한 압력이 청와대 등에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인데요, 처음에는 다이빙벨 상영을 못 막았다는 초안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정OO 과장도 갓 부임하였지만 징계사유에 다이빙벨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여서 막연하게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²⁾.

12) 2014. 10. 23. 문체부는 전 콘텐츠정책관 김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OO, 영상콘텐츠산업

관련하여 제349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17. 2. 14.)에서 유은혜 의원은 문체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을 상대로 영화 <다이빙벨>, <불안한 외출>이 2014년 부산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으나 상영을 막기 위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에 대해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이 영화제에서 문체부 김OO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수근은 장관의 지시 아래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서면경고를 하였으며 그 사유 중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바는 위 두 가지 영화가 상영된 데 대한 책임을 적시하기 어려워 그와 같이 표현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 ② 위와 같이 ‘문제영화’ 상영을 가로막지 못하거나 사전에 “검색(검열)”하지 못한 이유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종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하여 “검색(검열)”을 강화하여 보고해왔다.

아래의 예를 보면 2015. 8. 제7회 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해서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수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에 대해 1차 걸러내고 다음으로 “세월호” 등을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해 추가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2016.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해서는 영화 <불안한 외출>, <자가당착>, <다이빙벨>, <레드헌터> 등 상영과 관련하여 향후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평가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보고)하고 있다.

과 사무관 윤OO에 대해 “영상콘텐츠 분야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필요한 혼선 초래”를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2017. 2. 21. 이에 대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된 검찰 및 특검수사, 국회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취소하였다.

(4-6)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개요

2015. 9. 25(화) / 경상콘텐츠산업과

□ 영화제 현황

- 주 제: 평화, 소통, 생명
- 기간: 2015. 9. 17(목)~19. 24(목), 8일간
- 장 소: 일산 베기박스 배의 6개관, 과주 베기박스 과주출판도시 3개관
- 상영작품: 40개국 101편
- 주 최: 강(도, 중앙시, 과주시, DMZ Docx조직위원회(위원장 남영환 경기도지사)
- 주 관: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조계원)

■ 문제부 지원 내용

- 영화기록 1억 원 · 음향선 17억 (지원비) 15억, 영화기록1억, 기타 1억
- 기관홍보 및 후원물품 사용승인(제출)

□ 특이사항

- 다큐영화제로 국가정책성이나 국가수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은 없음
- 다만, 세월호 소재 다큐 영화 2편 포함

- 웹사이트 다룬(감독 김동민) : 다룬, 70분 ※ 한국영화 부문

세월호 질서 유지축이 위기가치는 그 날의 소용돌이와 침몰의 현문가들이 꺾히는 숨겨진 이면을 통해 한국사회의 병폐를 들여다본다. 인위무로만 구할만 별다른 하나의 이야기기 되어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오랜 모순을 입체적으로 파헤치고, 우리가 왜 지금 전회해하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 연이질 분석으로 자석해 대한 그리움, 시조에 대한 전말기의 폭군적 분석 등 알찬적 내용을 다뤄서 변질부척 서자, 재국되거나 열명처럼 배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599.4km(감독 김요민) : 다룬, 6분 ※ 청소년영화 부문

고동작적인 감독이 세월호 사건 이후 1년 간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4-7)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검토

'16. 7. 4(화) / 경상콘텐츠산업과

01

참사개요

- 주 제: 사랑, 환상, 모험
- 주 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정지영(76) / 영화감독
 - 집행위원장: 최윤재(76.3)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기간: 2016. 7. 21(목)~ 7. 31(일), 11일간
- 장 소: 부천시청, 한지연아트센터, 부천시 일대 영화관 30여개, 다목적
- 상영작품: 49개국 315편
- 예산: 49억 원 (9-지방비 33억, 후원합산 1억, 영화기록 3억)

02

특이사항

- 신설된 인디스트리 세션인 “코리야 나우”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영화 표현의 자유 지수를 위한 포럼 및 특별상영’ 실시
 - (포럼) '16.7.29(금) 16:00-18:00 / 부천시청 판타스틱루프
 - (특별상영) 레드윈드, 자가당차, 불안한 귀환, 다이빙벨

작품명 (감독/장르)	작품내용	상영 일정	등급 판정	비고
세드, 환상, 2D영화, 120분 CCV(무선 2D)	비오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	0	-
제기날개 (22분) 120분 판타스틱 3D영화	신화 속 신(신) 조종이 판타스틱 3D 4D 판타스틱 3D 영화 비판적인 영화	14	0	국립대관 3D영화 판타스틱 3D영화
불편한 귀환 (22분) 120분 판타스틱 3D영화	최의 동종종로 주세 감독, 김복영감독 현직 판타스틱을 주인공으로 판타스틱영화의 신화	14	0	국립대관 3D영화 판타스틱 3D영화
다이빙벨 (22분) 140분 판타스틱 3D영화	비밀호 사건 관련 다 큐멘터리	14	0	국립대관 3D영화 판타스틱 3D영화

03

검토

- 정보 조직(정치)·김현(비용)·위원장과 상당 단체(업권)는 소속
계에서 열리는 영화제로 정부의 관심 유무를 묻는 정치이슈를 회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포럼 및 특별상영에 대한 작품의 대응 지체
- 최근 세월호 관련 3D에 대한 2016년 영화제에 대해 시도 음향 선은 1억 5천만 원으로
상영의 중 3편은 평균분류용 통해 지체 일변에 상영된 작품으로,
관람객수 제로 등으로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할
- 향후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평가시 등 영화제에 대한 상향한 조치 추진

③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 000(진술조서, 2017. 9. 25.)은 “저희가 다이빙벨 사건 등을 겪었기 때문에 사무관 등에게 출품작에 대하여 그대로 전달만 할 수는 없고 사회여론화 될 소지가 있는 작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추슬러 사무관에게 보고하거나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영화제 측에서 출품작 리스트를 보내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영화들에 대하여 색깔을 달리하여 그것을 사무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실·국장 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가 보다 BH 등 윗선의 관심사이다 보니 작성하여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BH 또한 실무선에서 동향파악을 먼저 해두고 이슈화되면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다이빙벨> 표 사재기 등 상영방해

- ① 2017. 10. 18. JTBC 뉴스룸은 2014. 9. 25. 09:06:06부터 09:32:56까지 약 33분 동안 부산은행의 현금거래를 통해 약 114장(전체 티켓의 4분의 1)이 팔려나갔다고 사재기 의혹을 보도하였다.
- ②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은 2014. 10. 6. CGV센텀시티 5관, 10. 10. 메가박스해운대 6관에서 2회에 걸쳐 상영되었는데, 이의 판매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영일	상영관	판매현황				좌석 점유율
		예매	현장판매	게스트본부	합계	
10. 6.	CGV센텀시티 5관	117	27	117	261	100%(매진)
10. 10.	메가박스 해운대6관	138	0	70	208	100%(매진)

위와 같이 영화 <다이빙벨> 관람표는 전체 매진되었는데, 아래의 스케줄코드 975(10. 6. CGV센텀시티 상영 회차)¹³⁾와 관련하여 2014. 9. 25. 09:00:06부터 09:28:09까지 115석, 11:59:18까지 2석 추가 모두 116석이 판매되었다. 이는 10. 6. 예매 가능 좌석 117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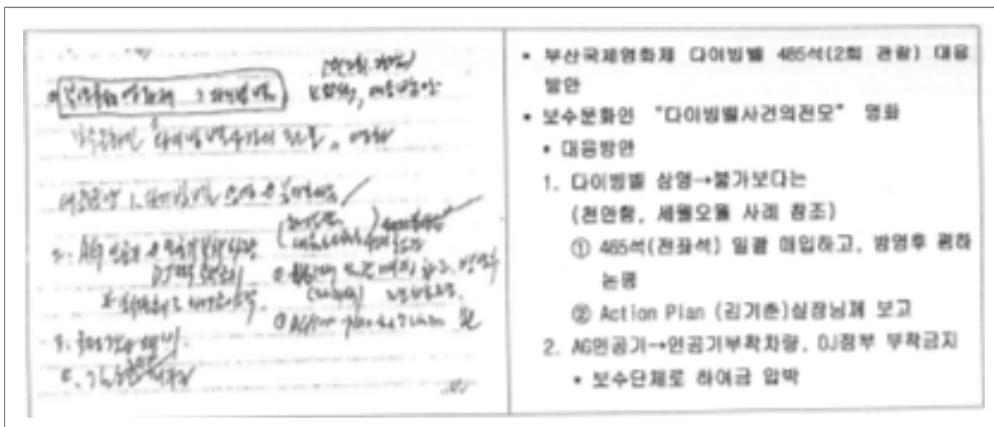
그리고 이중 부산은행을 통한 현금구매는 09:00:06부터 09:13:07까지 67석이 판매되었고, 신용카드 등은 09:16:42부터 09:28:09까지 47석(휴대폰 5석, 쿠폰 2석 포함), 그리고 11:59:18까지 2석이 추가되어 모두 49석이 판매되었다.

2017. 10. 23. 부산은행이 부산영화제에 제출한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티켓 판매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지점별 판매현황을 보면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 분은 모두 113매로 여의도 30매, 광안동지점 및 부산시청 지점 12매 등이다.

- ③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 000의 수첩, 2014. 9. 20.자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3) 이 스케줄코드와 관련하여 부산영화제 티켓 담당인 서비스개발팀장 강OO(진술조서, 2017. 11. 22.)은 “개막작부터 폐막작에 이르기까지 300편의 영화가 있는데 개막작이 말하자면 영화제 첫 번째 상영이므로 001번이 스케줄 코드가 되”고 “2014. 9. 2. 당시에는 다이빙벨 상영을 하기로 기자 회견을 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장 등이 상영을 하지 말라는 간섭이랄까 강요로 인하여 스케줄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 상영 결정을 하면서 그 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수첩 내용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사건의 증거기록 중 위 같은 오OO의 진술조서(2017. 1. 24.)에는 “신동철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의 상영 중단이 안 되어 대응방안으로 ① 465석(전좌석) 일괄 매입하여 보수단체에서 객석을 채워버리자고 하였는데, 정무비서관실에서 일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영 후 폼하 논평을 하기로 하고, 조금 전 이야기한 ‘차세대 문화인 연대’ 등 보수문화단체에서 폼하 논평을 부탁하여 실제 논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Action Plan은 위와 같은 방안입니다. 그 내용을 (김기춘) 실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인데, 조윤선 정무수석 아니면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님께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산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다이빙벨’ 관람석 표를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정무비서관실 박OO 행정관으로부터 듣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이야기 해 준 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당시 티켓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국제영화제 강OO 작성의 진술서(2017. 11. 9. 제출)는 “우리 티켓은 크게 개막 전 예매, 게스트용 좌석, 현장판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개막 전 예매는 온라인예매와 부산은행 현장판매(ARS와 폰뱅킹 포함)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다이빙벨>을 보면, 예매 오픈 첫날 30분 내에 매진이 되었는데 부산은행을 통해 나간 것과 온라인으로 나간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황상 사람들이 동원돼 각 은행 지점에 첫 번째로 줄을 서서 <다이빙벨>을 예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사무관, 시청 주무관,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저에게 티켓 판매현황, 좌석의 구분, 티켓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물어보았던 것도 <다이빙벨> 상영을 철저히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반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⑥ 또한 위 강OO(진술조서, 2017. 11. 22.)은 “문체부 사무관의 경우 예매를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우리 영화제 티켓 판매와 관련하여 A에서 Z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좌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언제 어디로 가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모든 티켓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영화제 개최 이후부터 다이빙벨을 첫 번째 상영하기 전까지는 예매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수시로 문의를 하여서 그렇잖아도 영화제 업무로 바쁜데 엄청 시간을 빼앗겼습니다.”라 하고, 위 판매현황과 관련하여 “코드번호를 볼 때 975, 976이 나뉘어 있는데 부산은행에서 동시에 판매되었는데 유독 첫 번째 상영의 경우에만 부산은행 여의도 지점과 부산시청 지점에 몰려 있지만 두 번째 상영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티켓이 많이 판매되는 부산은행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 관객이든 또는 다른 기관에서이든 첫회 상영에 초미의 관심사를 기울여 구매했다고 볼 수 있는데 975코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상영 예매는 13분대에서 끝났고 두 번째 976코드의 것은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09:32에 끝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⑦ 이용관(진술청취 보고, 2017. 9. 8.)은“2014. 10. 6. ‘다이빙벨’ 첫 상영시 상영관의 좌석이 대부분 비어 있었는데 최근 조윤선의 지시 아래 그 표를 사갔다고 하던데 기록상으로는 매진이었다.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시에 영화관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선의로 그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공격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일반관객들이 많이 관람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겼나보다고도 생각했다. 영화제 조직위 측에서 가끔 블로킹을 해서 사전 구매를 해서 소년가장 등 특정 집단에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와 같은 블로킹을 한 적은 없다. 10. 10. 두 번째 상영도 거의 매진인 걸로 아는데 관람석은 1/3정도만 찼다. 당시 전산 담당은 강OO, 티켓 담당은 김OO인데 이들로 부터 추가 조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후에 회의가 있었다. 티켓 예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전산담당자는 개개인이 예매를 했었다고 말했다. 일괄매입이라던가 특수한 예매형식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티켓 판매는 현장판매와 온라인 예매가 있는데 그

비율 중 현장판매가 20퍼센트를 넘기지 않는다. 프레스석까지 합하면 200석 중 30석 정도가 현장판매이고 게스트석까지 합하면 50석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된다. 150석은 온라인 예매인데, 매진이 되었다는 건 온라인 예매가 매진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게스트, 프레스 등의 관람석은 비어 있을 수 없고 상당수 관람석이 비었다는 건 온라인 구매좌석들이 관람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티켓 온라인 구매는 기자회견 시 개폐막작에 대해, 9월 20일경 일반 상영작 등 2번 나뉘어 열린다. 누군가 일시에 티켓을 상당수 구매해갔다면 티켓 구매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 ⑧ 당시 영진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담당(글로벌마케팅 팀장)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회 상영(2014. 10. 6.) 시에 관람하였는데 당시 좌석이 “꽤 헐렁하고 빈자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박OO 부장과 함께 앉아서 ‘매진이라더니 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저는 표를 누가 대량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⑨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김OO(진술조서, 2017. 9. 20.)는 “이전에 문체부를 통해 <자가당착>과 <잼 다크 강정> 등 작품에 대하여 ‘요주의 작품’이라고 지원하지 말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14. 9.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 소식을 듣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직감을 했었다며, 그래서 “당시 영진위 내부에 있어서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는데, 제작자나 감독에게 200석 2회 정도가 상영되었는데, 아마 시청 직원들이 좌석을 막 매입해서 좌석이 비어버리게 되어서 그러면 100명 남짓 정도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될 텐데 두 번에 배정된 회차를 비우고 차라리 장외에서 선언하고 상영을 하면서 외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OO 기자나 주OO 기자를 잘 아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영이 되고 파국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한꺼번에 표를 구매하는 경우는 없었지요. 그런데 당시 부산시가 상당 부분을 예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넷으로 부킹을 하니깐 직원들이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상당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시에서 선매를 했다면 직원들 보라고 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서 관람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5.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관련

가. 지원금 삭감 방침 수립

- ①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시한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국제영화제 육성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있고 지원근거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금의 용도) 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지원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1998년 문체부 소관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2005년 영화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시작하다가 2011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집행재원을 변경하였고, 2013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제로 전환하였다. 2014년 및 2015년 예산은 3,580백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 ② 2014. 10. 22. 문체부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은 김종덕 장관에 의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정치 편향 등 문제 작품 선정 및 상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영화제는 사후 평가 반영 후 예산 삭감과 연계”, “국제영화제는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5%인 만큼, 예산 삭감 시 영화제 운영과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이라고 기재되었다.

② 영화제 지원 개선방안

• 지원현황

- (규모)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총 3,200백만 원
- (분야)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 (방법) 공모 방식이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절차)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9인)
 - * 예비심사위원회 5명 내외 단수로 위원장이 섭외 확정

• 개선방안

- (심사기준 강화) 정치 편향 등 문제 작품 선정 및 상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영화제는 사후 평가 반영 후 예산 삭감과 연계
 - * 국제영화제는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5%인 만큼, 예산 삭감 시 영화제 운영과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국제영화제 심사 강화) 기재부 국제행사관리지침 상 7회 이상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

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는 바, **문체부 국제문화행사심사(차관주재) 시 단계별 사전 적용 검토**

* 부산국제영화제는 2012년~2018년까지는 기재부 국제행사심사 대상

③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가 제출한 2015. 1. 7.(문영5-8)「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대외주의)」¹⁴⁾을 보면, 2015. 2월말 예비심사를 예정하여 “정치 편향 등 문제 작품 선정 및 상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영화제는 사후 평가 반영 후 예산을 대폭 삭감토록 하겠다는 국제영화제 지원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

□ 지원규모

- (예산) 35억원(영화발전기금)
- (대상) 국내개최 국제영화제(지정영화제 수는 매년 증감 할 수 있음)
 - 74년 설치 부산국제, 한국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 (방법) 영진위 주관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절차) ①예비심사위원회(예산과) → ②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안)
 - 예비심사위원회는 정보 내역도 무성하여, 영진위원장이 위촉

□ 개선방안

- (심사기준 강화) 정치 편향 등 문제 작품 선정 및 상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영화제는 사후 평가 반영 후 예산 삭감과 연계
 - 4년제회 국제영화제회 경우, 영진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 12-20%내외(상정회 회차지 20%)

예비 심사
(지원예산 규모 결정)

공정성을 유지한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 회로및관 사전 협의하여 직할 및사 심의

심의 과정
(영진위원회 심의의결)

한년도 영화제 평가 결과를 지원 예산과 연계
→ 정치편향 관련 영화 상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영화제는 예산 삭감, 삭감 필요

사후 관리단계
(평가 및 환류)

정량적 또는 영화제로 성장가능도 평가
→ (평가자 선정) 영화제 평가 연구용역 차질되는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심사위원 선정
→ 평가기준 강화, 정치적 논란유무 관련 영화 상영사 부당성 평가 필요

□ 추진일정(안)

- 공모사업 공고 : '15. 1.19~30 (2주)
- 평가 수 : '15. 2. 2~6(1주)
- 예비심사 : '15. 2월 말
- 심의의결 및 정보 : '15. 3월 초중순(이후로 비공개) 관련 연구 및 평가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계획

□ 지원규모

- (예산) 35억원(영화발전기금)
- (대상) 국내개최 국제영화제(지정영화제 수는 매년 증감 할 수 있음)
 - 74년 설치 부산국제, 한국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부산국제
- (방법) 영진위 주관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절차) ①예비심사위원회(예산과) 3월 중순 → ②영진위원회 심의·의결 3월 말
 - 예비심사위원회는 정보 내역도 무성하여, 영진위원장이 위촉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계획

(1안) 지원액제

- 영진 지원중단 시 고려사항
 - (지역구의원 반대) 지원 중단 시 부산지역 국제영화제회와 국제영화제, 새누리당 김부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38명) 반발 우려
 - (정치영향) 고문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보복이라는 논란과 함께 세월호 이후 제정화 촉발 우려
 - (영화계 반대) 영화단체의 성명, 사명 등 조직적 행동이 예상되며, 해외 유수 영화제와 연대하여 국제 이슈로 확대 우려
 - 박용진(21)에니스트영화와 김용환(영진) 등이 부산영화제에 지지 및 연대 표시 보류

(2안) 전년대비 50%내외(7~8억원) 지원

- 지원 축소 필요성
 - 부산영화제 계획가 20년이 되는 만큼 영화제의 자율성(준영입) 확대 측면에서 자부담 비율의 지속의 증가를 통해 자체행사로 지원 필요
 - 기재부 규정에 따라 동 영화제가 '18년 이후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비지원을 원칙적 감액하여 영화계 운영의 연착륙 유도
 - 지원액 예산 2015년 7~8억원, 2016년 5~6억원, 2017년 2억원, 2018년 지원액제
 - 부산영화제 지원 예산이 전체영화제 지원 예산 대비 25%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타 신규/확성화 영화제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릴 필요
 - '14.12월 실시된 부산시의 지도영입 결과 부산영화제의 양산한 예산 집행이 지적된 바, 국비 지원을 일부 중단 필요

④ 뒤이어 2015. 2. (문영5-9)「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계획」에서는 “(1안) 지원배제”, “(2안) 전년대비 50% 내외(7~8억원) 지원” 등 2개의 안을 검토하였다.

2015. 3. 3. 문체부의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문건을 보면 국제영화제 지원개선과 관련하여 “지원배제”에서 전년 대비 50% 내외(7~8억) 지원으로 “수정”하고, 수정사유로는 지역의 반대와 야당·언론의 정치쟁점화, 국내의 영화

14) 이 문서의 본래 한글파일명은 '150107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관련 문건(대외주의)'이다.

계 반대 등 “지원 배제 시 발생할 문제점 완화”이고, 지원축소의 논리는 “2018년 국제행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적 감액을 통해 연착륙 유도”, “영화제 지원 예산 중 부산영화제 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43%)”, “방만한 집행(부산시 지도점검 결과)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축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논리들은 아래의 기재, 영진위의 심사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근거	주요 근거	주요 사항	수정 사유(당당성 문제 포함)
국제영화제지원 예산	지원 배제	경남대학 2015년 2차(2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배제 시 발생할 문제점 완화 - [지적 반대] 지원 중단 시 부산 지역 국제화 및 부산시-시민 결합 • 문화의 격차(특히,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해소 - [예산 - 예산 집행률] 예산 집행률 저하 • [국내외 영화제 반대] 영진위내외의 운영, 지원 등 소극적 행동과, 해외 유수 영화제와 연대하여 국제적으로 활동 • 지원 축소 논리 - 2018년 이후 국제행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적 감액을 통해 연착륙 유도 - 영화제 지원 예산 중 부산영화제 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43%)에 따른 조정 - 방만한 집행(부산시 지도점검 결과)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축소

-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사건의 증거기록 중 이OO의 진술조서(2017. 1. 3.)에는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그 결정이 다소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윤OO 사무관에서 손OO 사무관으로 중간에 변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청와대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없애라고 했는데, 저희 과에서 장관에게 완전히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드리고 청와대에도 동일하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⑥ 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증거기록 중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의 진술조서(2017. 1. 6.)에 의하면 “제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신OO 행정관과 만났는데, 신OO 행정관이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

화제에 패널티를 주기 위한 기본입장은 지원배제이다. VIP워딩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라는 것”이었다고 듣고 박OO 국장과 윤OO 실장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영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분명히 직접 청와대의 뜻이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당초 VIP워딩이 지원배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한 것이라는 것까지 위원장과 공유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정OO, 박OO, 윤OO 등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는 논란이 클 것 같아 전액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들여 50% 삭감되어 14.6억에서 8억이 지원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⁵⁾

나. 심사 과정

1) 심사위원 구성

- ① 위 같은 임OO(2회 진술조서, 2017. 10. 27.)은 “부산국제영화제에 한 푼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심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인사로 채워 넣어야 할 것이고, 물론 당시 예비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제적인 인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특정해서 넣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이 사업 담당자인 당시 영진위 글로벌 마케팅 팀장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당시 예비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가 박OO 부장과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후보자 5배수 명단을 작성해서 박OO 부장에게 제출하였고 일정 시간 후에, 박OO 부장이 5명의 심사위원이 결정되었다며 그 명단을 메모 형태로 갖고 와서 저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 5명의 명단을 후보자 명단에 포함하여 위원장에게 우선 순위를 받았습니다.¹⁶⁾ 그런데 이 5명의 명단 중 3명의 후보자는 원래 논의하여 선정할 때 있었으나 김OO 위원은 분명히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포함된 것이고 김OO 위원은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원래 명단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기

15) 이와 관련하여 윤OO은 삭감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6.).

16) 이에 대해 박OO 부장은 ‘5명의 심사위원이 결정되었다고 불러준 적이 없으며, 최종 후보자 명단은 당초 실무진에서 구성한 명단에서 위원장이 추가 요구한 두분을 포함하여 동 사업의 실무 담당인 김OO팀장이 최종 구성(안)을 마무리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 섭외 등을 진행하여 섭외를 받아들이는 분으로 확정해서 결재를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술분야 사람들이라 국제분야 사업 평가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OO와 김OO와는 위원장과 영화기술협회 활동을 같이 하여서 친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직접 연락했으리라 추정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정OO은 박OO 부장이나 문체부에서 연락하였을 것인데 영진위 관련된 연구용역을 꽤 했고 영화제 평가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며 본래 후보자 명단에는 포함된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2015년도 심사위원 후보 명단

구 분			소 속
분야	성명	우선순위	
위원 (1인)	박OO	2	영진위 위원
	김OO	1	영진위 위원, 백석문화대 교수
영화계 및 학계 (2인)	정OO	4	동국대 교수
	왕OO	5	감독, 경성대 교수
	강OO	3	제작자
	김OO	1	용인대 교수
	김OO	6	NEW 한국영화사업본부장
	소OO	7	감독, 서울예대 교수
	김OO	2	서울예대 교수
	김OO	8	수원대 교수
	권OO	9	영상면 교수
	백OO	10	세종대 교수
평가전문가 (1인)	김OO	3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정OO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정OO	5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최OO	4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
	유OO	2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여성 (1인)	정OO	3	동국대 교수
	조OO	2	중앙대 교수
	허OO	4	이수장류 심사역
	손OO	1	M-Line 대표
	안OO	5	쇼박스 부장

- ③ 당시 국제사업부장 박OO(추가진술서 제출, 2018. 4. 16.) 작성의 진술서에도 “심사위원 구성(안)과 관련하여, 당시 동 사업 담당 팀장이자 담당자였던 김OO 팀장과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하여 짠 구성(안)을 위원장께 보고했고, 위원장이 김OO, 김OO 교수를 추가하기를 원해서, 김OO 팀장에게 구성(안) 등 내용을 적어서 전달하면서 구두로도 전달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예비심사 과정

- 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심사위원으로 김OO(영진위 부위원장), 김OO, 조OO, 정OO, 김OO로 구성이 되고 2015. 4. 17. 예비심사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 ② 2015. 4. 17. 「2015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예비심사 회의록」을 보면, 당시 심사위원은 김OO(영진위 부위원장, 심사위원장), 정OO, 김OO, 김OO, 조OO으로 진행은 국제사업부 글로벌마케팅 팀장 김OO이 담당하였다. 이 회의록을 보면 먼저 정OO은 “지원금 배분과 관련하여 안을 내보면, 부산은 그동안 지원금이 집중화되어 타 영화제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타 영화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7억~7억 5천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라고 하고, 조OO은 “부산영화제가 어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그 시점에 가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알아서 챙길 거라고 봐서 굳이 지금부터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라고 하고 김OO은 “부산은 베니스나 베를린에 견줄만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글로벌한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은 명성 때문에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규모나 국가적인 지원을 보면 역시 베를린이나 베니스만큼이나 글로벌화 되어 있는 영화제가 부산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이 20회가 되는 동안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이만큼 컸으니까, 타 영화제들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반 정도만 지원해도 부산은 충분히 용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영화제 7.3억을 생각을 하고요”, 김OO의 경우는 “부산영화제에 대한 다른 영화제들의 불만들이 있고 그리고 부산영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그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서식 4호>

심사평가의결서

영화제명	지원 신청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적합성 (Y/N)	평가점수				지원추천금액 (백만원)
			전년도 결과①	당해연도 계획②	합계 ①+②	평균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1,800	가	74.80	89.20	133.6	76.8	700
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400	나	73.89	86.20	150.09	72.05	350
제19회 부산국제판타스틱영화제	700	가	75.45	92.60	153.05	76.93	600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500	가	70.83	77.20	148.03	72.02	350
제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460	가	67.74	50.40	118.14	59.07	-
제 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400	가	65.27	68.00	133.27	66.32	100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1,460	가	78.02	82.60	160.62	78.31	750
제 7회 서울국제요양영화제	200	나	59.60	54.80	114.40	57.20	-
제14회 광주국제영화제	150	가	62.60	59.40	120.00	60.00	-

위 심사 평가의결서를 결정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첨부합니다.

2015. 4. 19

심사위원장 2200

심사위원 7600

심사위원 2000

심사위원 2800

심사위원 7000

③ 그런데, 기획재정부 훈령과 관련하여 김OO 등은 2018년부터 아예 지원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진행자는 “국제행사의 지원금의 경우 10억 이상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10억 미만을 받으면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토론을 거쳤으나 의견이 엇갈렸으므로 조OO이 제시한 12억은 소수의견으로, 다수가 7.5억에 동의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액을 7.5억으로 정하였다.

④ 위 같은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예비심사일이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이유는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마침 청소년영화제 문제(임금체불과 관련한 분쟁)”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 심사·결정할 때 기준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 사업계획서로 배점을 주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꼭 맞추어

하기는 어려웠고 이 사업은 애초에 문화부에서 지원해온 역사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원해 온 규모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체부가 6개 영화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액수를 가감하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부산영화제가 전년도에 인프라 구축도 잘 되었고 관객 동원 수도 많은 등 점수가 좋으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한다든지 전년도에 전주영화제에서 조직위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래머들이 사퇴하는 사태가 있었다면 패널티 차원에서 일정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반액 삭감은) 의외의 조치였습니다”라 하고, 위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정OO 위원이 바로 7억~7억 5천 이야기가 나오고 조OO 위원을 제외하여 그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렐(회의록 중 민감 부분이 가감, 수정되는 것)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OO 위원이 바로 반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시하는 순간 바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심사위원 후보들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조OO 위원을 제외하고) 이미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이미 당연하게 심사위원이 예정된 것을 알고 있었고”, “(예비심사위원들이 부산영화제 지원액 대폭 삭감에 대해서 이미 의견을 지니고 왔던 것인지에 대해) 예,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형성되어서 다수였고 다만 반액을 삭감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엇치락뒤치락 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또한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기재부 훈령에 대해 예비심사 과정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김세훈 위원장과 기재부 훈령에 대한 대화를 한 기억이 있고 박OO 부장에게 그 훈령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문화부로부터 그 훈령을 받으라고 하여서...당시 주무관 OOO으로부터 그 훈령을 받아서 7회 이상 10억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당시 예비심사 때에도 그와 같은 훈령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으나 제가 회의록에서는 삭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임OO(2회 진술조서, 2017. 10. 27.)은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김OO 부위원장이 심사부위원장으로서는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고, 김세훈 위원장이 그 이후로도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 ‘예비심사위원들이 모두 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김OO이 모두 한 것이다’라고 김OO 부위원장에게 그 역할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충분히 김OO 부위원장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최종 결정 과정

- ① 영진위가 제출한 「2015년 제5차 정기회의 회의록」(2015. 4. 27.)을 보면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결정심사 심의·의결 건과 관련하여 “위원 6인 찬성, 1인 반대로 예심 심사위원단에서 부산영화제에 대한 일부 상향 조정을 전제로 의결”하였다.
- ② 이에 따라 2015. 4. 29. 서울미디어센터에서 예비심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액을 당초 의결한 7.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2015년 제6차 영진위 정기회의(서면)에서는 이에 대해 위원 7인 찬성, 1인 반대로 원안을 의결하였다.
- ③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에서 영진위 정기회의 진행을 담당한 원OO(진술조서, 2017. 10. 11.)은 2015. 4. 27. 제5차 정기회의에서 예심결과를 반복하여 재심토록 한 것에 대하여 “당시 위원들이 삭감 폭이 너무 크고 본인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동의를 하여 가결하면 그것으로 결정되므로 그 결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위원들이 반대하고 논쟁이 길어지면 휴회를 하는데, 당시 휴회를 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부 의견을 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속개를 하고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고 회의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대다수 반대 분위기(김OO, 변O, 김OO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신OO, 박OO 위원도 대체로 반대하고 결정에 어려움을 표명)였는데 “주로 김세훈 위원장과 김OO 부위원장이 그 방향(지원금 삭감 방향)을 설득하려 했다면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김OO 부위원장은 결정 심사 날에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본인 자신이 예심 위원장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득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의 합일점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편을 나누어보자면 삭감안을 반대하는 다른 편에 김세훈 위원장과 김OO 위원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논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 ④ 원OO은 그리하여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는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안건이 당시 일부 상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액수를 갖고 토의한 결과 9인 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일부 상향하자는 조건에 대해서 예비심사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당시 9인 위원회 재심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전날, 그날 박OO 위원의 영화시사회가 있어서 그날 영화를 보고, 뒷자리에서 의사결과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회의 자체는 임시 회의인데 당일에 그냥 서명을 받고 오시지 않은 위원들은 추후에 서명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위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심사 당일(2015. 4. 27. 영진위 제5차 정기 회의) 업무시간 종료 후에 박OO 부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예심에서 7억 5천으로 갔는데 8억으로 수정,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9인 위원회에서 금액을 포함한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OO 부장이 예심을 다시 하라고 하여서 ‘수정의결하면 끝인데 왜 예심을 다시 하냐’고 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여 보면 본심(정기회의)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결정을 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예심으로 돌렸는데 박OO 부장이 8억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어디에 선가 들고 와서 저에게 그 액수를 정해주면서 예심을 다시 열라고 했던 것이 합리적인 과정(기억)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¹⁷⁾
- ⑥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임OO(진술조서, 2017. 9. 15.)는 “당시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하는데, 김OO 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부위원장의 주도 하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인 위원회에 올라갔을 때는 마치 김세훈 위원장이 ‘착한’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이 깎는다고 재심사를 해서 5천만 원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그와 같이 좋은 역할을 한 존재로 남아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정 이후

- ① 위와 같은 결정이 있는 직후인 2015. 5. 12.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올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압력을 받는 등 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여러 시도를 경험했다. 영진위의 이번 예산 감액 결정이

17) 이에 대해 박OO 부장은 ‘본인은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이 7억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상, 즉 8억 원 이상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를 간략하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지원금 결정은 예비심사위원회나 9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6.)

부산국제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영진위의 이번 결정이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한 것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 ② 이에 대해 영진위는 “예비심사와 위원회 결정심사 과정에서 <다이빙벨>과 관련한 언급이나 문제가 제기된 바는 전혀 없다. 이번 심사 총평에 이미 적시하였듯이 국제영화제로 도약하려는 영화제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여 내린 심사 결과였다.”(「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2015. 5. 13.)라고 답하였다.
- ③ 위 답변서에는 지원총액 대비 비중이 부산국제영화제에 43%로 집중되어 있어 합리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고려되었다고 적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박OO 부장이 이전에 간담회와 자료를 찾았는데 주요 논의사항 중 위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서) 영진위가 그렇게 활용한 것”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답변서는 당시 국제사업부장 박OO와 영진위원장의 승인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 ④ 제334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제1차 회의(2015. 7. 1.)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장관은 부산영화제 예산삭감과 관련 “부산영화제가 96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돼 거의 216억 원 정도가 그간에 지원됐는데 96년도에 공공기금이 들어간 게 13%였으나 계속 증가해 작년에 62%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반면에 유료관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20년이면 영화제가 충분한 자생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충분히 안 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 칸영화제가 전체 상근직원이 35명에 비해 부산영화제는 지금 45명이나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봐 가지고 아마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⑤ 이용관(진술청취 보고, 2017. 9. 8.)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중단이나 삭감 문제가 떠올랐을 때 답답한 마음에 세종시 문체부를 찾아갔었다. 2015. 3.경 사무국장 차를 타고 갔었다. 자세한 일정은 수첩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거기서 당시 영상 콘텐츠산업과 김OO 과장을 만났다. 그날 김OO 과장이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고 했고 나 또한 서울에 볼 일이 있기도 하여서 서울에서 저녁에 소주 한 잔하기로 해서 저녁에 다시 만났다... 당시 술자리에서 김OO 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위로부터 시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때 김OO은

내가 청와대의 지시냐, 김기춘의 지시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하고 ‘몸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 김기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당시 부산시장이든 담당국장이든 김OO 과장이든 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 행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김OO 과장은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일처리에 대해 두 번이나 시달서를 썼다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에 대하여 김세훈 영진위원장에게 항의를 했다. ‘앞장서지 마라’고 이야기했다. 김세훈 위원장으로부터 누구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다. 물어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당시 영진위 부위원장이었던 김OO이 문화미래포럼을 이끌었다. 김세훈은 뉴라이트를 내건 김OO을 통해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원금 삭감 등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이라고 본다 (...) 영진위의 지원금 결정 과정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알아보았다. 지원금 삭감이 결정되고 난 이후 김OO, 김OO 영진위 위원을 불러다가 ‘다 결정났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 지원금을 7억 5천으로 했다가 5천 더 준다고 번복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편법을 했으니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했겠느냐. 누구로부터 지시가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문체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왔다고 그들은 답하였다. 지원금을 삭감했다가 조금 더 준 것인데 그런 게 규정상 안 되는데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특별히 의결을 하면 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도와주는 생색을 내면서 결국 지원금 삭감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편법으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영진위원들을 동원한 것, 회유한 것 등의 자료는 영진위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2016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결정 관련

- ① 영진위가 제출한 「2016년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 결정심사(안)」을 보면 당시 예비심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예비심사위원 중 김OO는 2015.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재편과 관련한 대필 기고문의 당사자, 김OO는 2015.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정당성을 옹호하는 대필 기고문의 당사자이고, 김OO는 2015년도 심사에 이어 2016년 이 사업 심사에도 연속으로 참여한 이들이다.

4. 예비심사 개요

가. 심사일시 : 2016년 4월 26일(화) 오후2시~5시

나. 심사장소 : 서울시 총무로 KOFIC라운지 11층 강의실B

다. 심사위원 : 총 5인

분야	성명	약력
위원회 위원	김OO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제작	김OO	영화사비단길 대표
투자배급	박OO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
학계/평론	김OO	용인대 교수
	김OO	영화평론가협회 총무이사

- ② 한편, 위 같은 심사를 통하여 정해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부산국제영화제 지원 금액 9.5억)

영화제명	지원결정액(억 원)
제 17회 전주국제영화제	6.6
제 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4.0
제 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0
제 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4.0
제 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0.9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	9.5

- ③ 당시 영진위의 이 사업 담당자인 김OO(진술조서, 2018. 2. 6.)은 “이때 기조는 일이 터지지 말게 하자, 뉴스가 만들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여기에 한OO 팀장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었고 그래서 랜덤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상한 심사위원들이 올 수 있으므로 랜덤으로 추천하지 않았고 매우 세심하게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정하여서 저에게 ‘이미 (심사위원들이) 섭외가 되어 있다’고 통보를 하였고 제가 받은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심사위원단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심사위원단들에게도 전화를 하니 이미 섭외된 사실을 알고 ‘네, 알고 있어요.’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심사위원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부담감을 가졌던 터이므로 제 선에서 섭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위원장이나 한OO 팀장 선에서 섭외를 한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업에 심사를 진행해봐서 아는데 대체로 심사에 부담을 느껴서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섭외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심사위원이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

만 그래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면 심사위원 풀에 없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사(평가)위원 후보 추천 통보서(심사지원팀)

○ 분부 / 팀명 : 산업진흥본부 / 유흥지원팀
 ○ 심사(평가)명 : 국제영문과 특성 지원 심사
 ○ 심사(평가)일시 / 장소 : 2016.4.29(금) / 서울 영성리다아 센터 11층 대다아 홀
 ○ 심사(평가)위원 후보추천 내역

분야	심사위원 수	심사(평가)위원 후보 추천내역					비고
		추천번호	접두순서	성명	성별	연락처	
영희채적 (계학,PO)	1	62	1	김○○	여	010-	심사위원 후보 풀 참조
		125	2	한○○	남	010-	
		18	3	서○○	남	010-	
영희투자비금	1	32	1	백○○	남	010-	
		8	2	정○○	남	010-	
		31	3	노○○	남	010-	
영희이계/영본	2	26	1	정○○	남	010-	
		50	2	김○○	남	010-	
		70	3	김○○	남	010-	
		32	4	김○○	여	010-	
		75	5	김○○	남	010-	
		33	6	신○○	남	010-	
위원회 위원	1			김○○			

* 본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의 및 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외 목적 외에는
 이용 / 제공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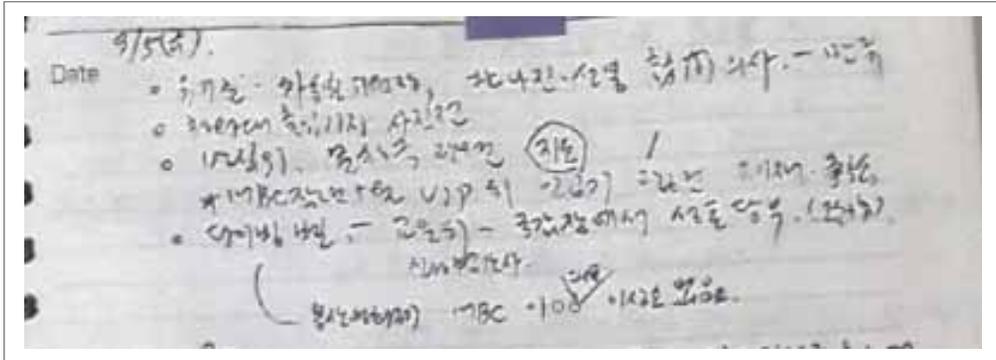
2016년 4월 29일
심사지원팀장 김○○

따라서 위 김○○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심사(평가)위원 후보 추천 통보서(심사지원팀)」 또한 “당시에 누구, 누구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꼭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팀장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연락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심사지원팀장 김○○이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알아서도 되냐고 하여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였습니다.”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지원팀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였다.

6. 우파단체 및 언론 공세와 외압

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관련 반대캠페인 등 공세

- ① 2014. 9. 5.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신OO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OO 대표 이상호 出品”이라 기재되어 있다.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2014. 10. 7.)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서OO(회의록 52쪽), 같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014. 10. 17. 회의록 86~88쪽)에서 박OO 의원(새누리당)은 <다이빙벨>, ‘불안한 외출’ 등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치편향적 영화에 대해 지적하였다.



- ② 문체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영5-4) 「‘다이빙벨’ 관련 경과 보고」(2015. 2. 16.)를 보면, ▲세월호 희생자 일반인유족대책위는 부산시장을 접견18), <다이빙벨> 상영 철회를 촉구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시민단체인 OOOOOOOO가 “영화제에서 세월호 문제를 일방적 시선으로만 보여줘선 안 된다”며 상영 자제를 촉구했다. ▲하OO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을 속인 한 업자의 ‘사기극’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면죄부 주는 격”이라며 상영 취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조직위원장)은 상영 중단을 주문하였다.
- ③ 이른바 <OOOOOOOO>는 2014. 9. 15. 차세대문화인연대는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자제를 요구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 “아직 완료되지 않은

18) 2014. 9. 24. 한성식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되었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의 편향적 주장만을 사실인양 세계에 알려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그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가 하지 않길 바란다”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2014. 9. 29.에는 「부산영화제 초청작 <다이빙벨>을 저격하다!」 제하의 유튜브 동영상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 전 과정은 위 단체의 주요한 구성원인 최OO와 당시 청와대 행정관 허OO과의 교감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p>제목: [FE] 최OO입니다. 보낸 사람: 허OO < @bmail.or.kr> 날짜: 2015-06-01 오전 7:03 받는 사람: 최OO < @naver.com></p> <p> 최 감독님!</p> <p>1. 차세대문화인연대는 운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두분은 인간적으로도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충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 속 어느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헛똑똑이의 이야기입니다. 차세대문화인연대와 두분은 부당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릴게든 함께 하고픈 동료입니다. 차세대문화인연대는 제게 의무감으로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있어서 힘이 되고, 미래가 더 큰 힘이 될 존재입니다.</p>	<p>2. 우리 수석계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논쟁 당시 차세대문화인연대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릴게든 도우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이빙벨 관련 활동(성명, 동영상)에 대한 보답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목입니다. 잠수를 얼마나 적아 할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차세대문화인연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수 단체 중 빅5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재력입니다. 온갖 구설수와 욕설을 들으면서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 기울어진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이 차세대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차세대에 거는 희망입니다.</p>
--	---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사건2017노2425/2424(병합) 판결문을 보면, “당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당심 증인 허OO은 ‘OOOOOOOO’의 운영자인 최OO가 일방적으로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 동영상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OO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허OO에게 그에 관한 조언을 구하여 그에 응하여 준 것일 뿐, 위 성명 발표나 동영상 유포가 소통비서관실의 지시나 사전 교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OO가 허OO에게 보낸 이메일(순번제 1443~1447호)의 내용(‘읽어보시고 수정사항 사항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위 이메일들의 내용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강OO이 작성한 수첩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2014. 9. 4.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다큐멘터리 실장님 지시”, “대응: 단계별 전략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2014. 9. 20.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보수문화인 ‘다이빙벨 사건의 전모’ 영화”, 2014. 9. 26.자: “다이빙벨 문제점 → 차세대연대 ‘다이빙벨’에 한하여 퍼포먼스), 2015. 6. 1. 허OO 행정관은

OOOOOOOO 대표 최OO에게 “우리 수석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논쟁 당시 OOOOOOOO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떻게든 도우라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순번제1449호)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OOOOOOOO’의 다이빙벨 관련 대응은 정무수석실의 지시 또는 정무수석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한편 이용관(진술청취 보고, 2017. 9. 8.)은 “영화제 개막 전날인 10. 1.경에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이 찾아왔다. 부산시장에게 들러서 서한을 전달하고 다시 진술인에게도 전달하러 온 것이다. 리허설 무대 위로 들고 찾아왔다. 항의서한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유족은 나에게 ‘다이빙벨 상영은 유족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슬픔을 덧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자리에서 나는 서한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상영계획을 갑자기 취소하기는 어렵다.’등을 답변하였다. 그 외에 유가족도 달리 반응은 없었고 한편으로는 겸연쩍어했다. 그렇지만 영화인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그 외 유족들은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 어느 언론에선가 대다수의 유가족은 상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세월호 일반인 유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정부비판 영화의 상영을 제어하기 위한 의도로 ‘단원고/일반인’ 유족들을 분리하여 ‘활용’한 국가권력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 ⑤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은 2014. 10. 14.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다이빙벨 상영 강행 - 부산영화제, 존재이유를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발제를 맡은 최OO 영화감독은 “이번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이나 ‘불안한 외출’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세월호 유가족마저 반대하는 영화를 강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영화제의 독립성’이라는 그들의 해명으로는 분명 부족하다”며, “부산 영화제가 이런 문제의 영화들을 이번에만 한 것은 아니었고, 기존에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구름비 - 바람이 분다’, ‘천안함 프로젝트’ 등 사회성을 가장한 편향적인 영화들을 상영했다. 하지만, 이번 부산영화제의 문제는 이런 정치편향적인 시선과 함께 <다이빙벨>을 통해 인간적으로 해선 안 되는 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영화제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강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19) 아주경제, 2014. 10. 14. 자유경제원은 매해 전경련 등으로부터 2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음.

나. 일반상영관에서 <다이빙벨> 상영 관련 언론공세

- ① 부산국제영화제가 종료되고 이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되자 문체부는 그 현황에 대해 2014. 12. 1.까지 일일보고를 하였다(문영1-2 「다큐현황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보고」 부터 문영1-20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등 일련의 문건). 관련 문건을 보면 이 영화가 10. 23. 개봉이 예정되자 문체부는 10. 21. “국민소통실을 통해 언론사(BBB 편집장) 접촉, 기사 노출 협조 요청”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영 반대단체 협조·활용방안을 모색(상영관 현황 및 문제점 등 자료제공)”하였다(문영1-7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그리고 10. 22.에는 언론사(BBB, CCC)과 접촉한 결과 기사 노출을 약속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문영1-9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그리고 같은 해 10. 23.에는 2014. 10. 24. 어버이연합의 상영반대 기자회견 예정 사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문영1-10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 ② 2014. 10. 24. 어버이연합은 서울극장 앞에서 다이빙벨 상영 반대 집회에 11명의 탈북자를 일당 2만원씩 지급하고 동원하였다. 이는 조운선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영화 다이빙벨 상영 반대 여론전 배후조종의 전말, 미디어오늘, 2017. 2. 2.).
- CCC는 2014. 10. 23. 「세월호 참사 <다이빙벨> 개봉...“사고 고통 이용한 상업작품”은 위에서 적시한 2014. 10. 14. 자유경제원의 토론회에서 최OO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 영화 개봉을 비판하였다. <BBB>는 2014. 10. 25. 위 어버이연합의 집회 소식을 다루면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세월호 가족 가슴 찢는 영화 다이빙벨」)
- ③ 2017. 5. 24.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 김기춘 외 3인 재판에서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정부가 영화<다이빙벨>의 상영을 막는 등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황이 공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은 보수 단체인 ‘OOOOOO연대’에 상영 반대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 또한 정부비서관실을 통해 영화제 460여 석의 전 좌석을 일괄 매입해 일부를 보수단체 회원들로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 전 행정관은 “입장권 매입은 정부비서관실에서 주도했던 걸로 안다. 당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매입했던 것 같다”, “당시 조운선 정무수석이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부산 국회의원을 통해 항의하고 저명한 문화인들의 기고를 통

해 비판여론을 조성하려 했냐”고 질문하자 오 전 비서관은 “그렇게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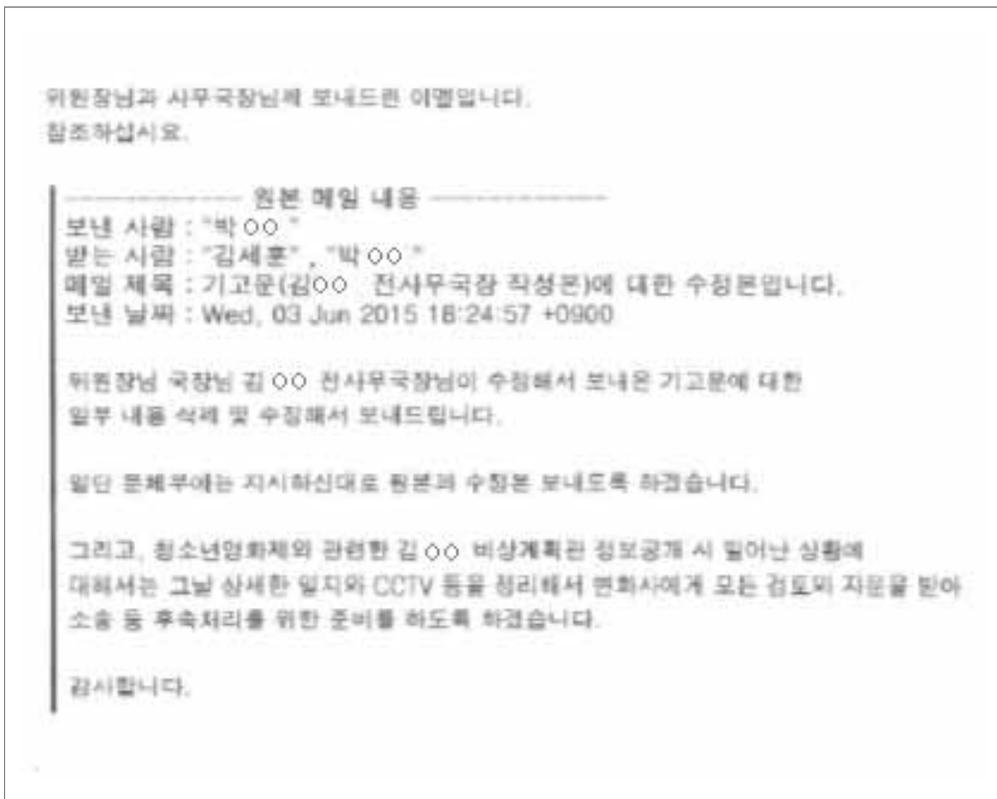
- ④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윤OO 사무관(진술조서, 2017. 9. 22.)은 “(2014. 10. 24. 오후3시, 서울극장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상영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 과 차원에서는 어버이연합이나 세월호 유족 등을 접촉하여 어떤 행위를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을 것”,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접촉하였을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과나 문체부 차원에서는 접촉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찾아서 실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당연히 찬성하는 쪽 여론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청와대에서 문제화 될 것이고, 당연히 상영을 반대하는 논리와 정당성을 찾고 있으니,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세밀히 살피고 정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관련 언론왜곡

1) 대필 기고 사건

- ①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이 결정된 후에도 영진위와 문체부는 이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하여 대필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토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제350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제1차 회의(2017. 3. 23.)에서 도종환 의원은 당시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상대로 2015년 6월, 부산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을 때 영진위에서 초고를 쓰고 외부인사가 언론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론 왜곡에 나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해 질의(언론보도 사실)하였으나 김세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인하였다. 당시 도 의원은 OOOO@korea.kr 이메일 계정으로 위 기고문 초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는 바, 계정의 당사자는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일 것이고 이는 당시 콘텐츠정책관 최OO, 정OO 과장 등에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수근 문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20) 중앙일보, 2017. 5. 24.자 등



- ② 2015. 6. 2. 영진위 국제사업부장 박○○는 전 영진위 사무국장 김○○에게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고문 초안 보내드립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며 관련 기고문 초안을 송부하였다.
- 그리고 6. 3. 위 박○○는 영진위원장, 사무국장에게 “위원장님 국장님 김○○ 전 사무국장님이 수정해서 보내온 기고문에 대한 일부 내용 삭제 및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일단 문체부에는 지시하신대로 원본과 수정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수정본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같은 해 6. 9. 문체부 손○○ 사무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위 박○○에게 송부, 박○○는 이를 다시 영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수신자로, 이○○ 등을 참조로 하여 송부하였다.
- ③ 이 기고문은 2015. 6. 16. <서울신문> (김○○, 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를 기고자로 하여)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먼저 실천할 것들」이라는 제하로 게재되었는데, “영진위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발전기금액을 8억원으로 줄였다. 매년 가만히 앉아서 받던 돈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니 영화제 측으로서는 불만이 일 수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보복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한 심사 절차와 내용까지 불신하는 것은 억지다”, “부산영화제는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축소에 불만을 터트리기 전에 냉철한 자기반성과 함께 변신을 해야 한다. 영화제의 성격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과 인사, 조직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④ 이와 관련하여 위 같은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위 대필 기고문과 관련하여 “당시 박OO 부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언론에 계속 나오는 등 영진위에 대해 안 좋은 여론이 많으니 반대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는 문체부의 전형적인 언론활동 방식이었습니다. 2014년경으로 기억하는데 <어벤저스> 한국 촬영 시 문체부가 언론과 필자를 제외하여서 대필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여서 기사화하는 언론활동 방식을 이OO 본부장이 그런 방식을 빌려와서 위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당시 영진위 기획홍보부장 이OO(진술조서, 2017. 10. 20.)은 이 대필 기고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당시에 “박OO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담당 손OO 사무관이 박OO 부장에게 언론기고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¹⁾.
- ⑥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손OO 사무관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송부한 진술서(2017. 9. 26. 작성)에는 “영진위의 영화제 지원금 결정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영진위 전 사무국장이 언론기고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영진위 박OO 부장 또는 당시 직속 상관인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며(누가 처음 알려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영진위 박OO 부장이 메일로 전달해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상의했던 상황은 기억이 나나,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내용을 수정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누구의 지시로 행하였나)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당시 김종덕 장관

21) 위 이OO은 이 건 외에 당시 김세훈 위원장으로부터 언론기고문 대필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 임OO은 2회 진술에서 “이OO 본부장은 당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에 속해 있는 부서장으로서 언론기고, 대관업무, 문체부와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총책임자였습니다. 대필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언론기고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방침이 있었다면 대관업무 담당 부서장인 미래전략본부장과 상의를 하지 담당 사업부서장과 상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기고가 많이 실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⑦ 그런데 임OO(진술조서, 2017. 9. 15.)은 “당시 정OO 문체부 과장에게 보고가 되고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한번은 손OO 사무관이 저에게 말하기를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는 저에게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왜 독자적으로 진행했느냐, 저도 과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저에게 꼭 알려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OO 과장은 김세훈(위원장)과 늘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OO 과장은 박OO 사무국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이어서 정OO 과장은 김세훈 위원장에게 직접 모든 일들을 지시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언론중재 등 대응

- ① 한편으로, 영진위는 이 사건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언론중재 요청, 고발 검토 등을 행하였다.

영진위는 <경향신문>, 2015. 3. 19. 「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손들’이라는 제하의 “영진위가 ‘등급제’ 개정 추진하고, 영화제 사전심의방식을 바꾸며 영화제 출품작을 사실상 ‘사전검열’하려고 시도하다 영화계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를 신청하여 “이에 대해 영진위는 ‘등급제’ 및 영화제 ‘사전심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진위가 운영개선을 위해 검토 중인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사전검열과 무관하다고 알려 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관철하였고, 2015. 3. 5. 에너지경제신문의 ‘기자수첩’ 「쇄신 대상은 누가 돼야 하는가」 “논란이 커지자 서 시장은 집행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쇄신을 합의하며 수습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집행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하는 한시적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이었다”, “10일 열린 ‘부산영화제 쇄신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박OO 감독은 ‘영화가 검열받는 영화제에 초청받는 것 자체가 모욕’ 등 부산국제영화제 논란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에너지경제신문이 기사를 완전 삭제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쇄신 대상은 누가 되어 하는가

[기자수첩]

박진우

윤리인뉴스부



21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삼지루대 앞은 어린이와 부모들, 성춘남녀로 허세등등 여럿다. 그들은 11cm x 13cm의 타일 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세발에 특수 물감을 묻혀 색을 입히고 있었다.

“앗지 않을께요” “수익이형 어떤 그만 끝내고 짚으로 돌아오렴”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에 맞춰 진도 행복항 170m 해변에 조성된 ‘기억의 벽’에 날여질 후로 타일을 만드는 지터였다. 이차일 4월 16일을 앞두고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세월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연출 안해용 이상훈)에서 촉발된 자년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수습은커녕 ‘감독의 자유’를 외치어하는 전담한 규명으로 꼬여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넘볼수 없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영화 ‘다이빙벨’은 자년 부산영화제 ‘외어드앵글-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

문에 공식 초청됐다. 이에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상영을 반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고고 지원 중단 우려를 낚다는 뉴스까지 보도되면서 영화인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부가 말을 빼고 서병수 시장도 공식 행동을 멈추면서 ‘다이빙벨’은 공식 상영됐다.

영화제가 끝난 후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영화제에 대한 감시를 받았다. 그 결과를 일부로 일기가 1년 넘게 남은 이윤근 집행위원장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이 사실은 한국 영화계를 넘어 배틀필영화제와 규탄선병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서 시장은 이 집행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영화제 쇄신을 합의하며 수습 계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실재되는 이 집행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하는 임시적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이었다.

영화인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0일 열린 ‘부산영화제 쇄신과 따른 공청회’에서 박관용 감독은 “영화계 권업하는 영화제에 초청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며 사실상 부산영화제 보이콧을 선언했다. 18일 JTDC에 출연한 배우 안성기 씨는 손석희 영커의 동방 질문에 “영화 상영에 제약을 받으면 안된다. 영화는 관객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20살이 되는 부산영화제를 위해 쇄신의 대상은 과연 누가 되어 하는가?

tonglong@ekn.kr

- ② 나아가 당시 심사지원팀(전 홍보협력팀장) 임OO은 2015. 3. 12. 이OO 기획홍보 부장에게 명예훼손과 관련 검토 문건(「명예훼손 소송 검토」)을 웹메일로 송부하는데, 관련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매체	기자(필자)	제목	내용
미디어오늘(2/10)	강성률 (광운대 교수)	영화, 진흥은 기대 안 하니 망치지나 맙시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김세훈 교수가 지명되는 순간, 어쩌면 논란은 예고되었는지도 모른다...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장관과 위원장의 출신 학교가 같이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영화 관련 인사도 아니고, 더구나 현장을 잘 아는 인사도 아닌 사람이 영진위에 오자마자 하는 사업을 보면, '코드에 맞는 인사'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국제신문(2/23)	김이석 (동의대 교수)	되살아나는 검열의 어두운 그림자	그닥 건질 내용이...
미디어스(2/5)	박장준 기자	과거행 금행 열차 오른 영진위, '사전검열' 몸통 되다	영진위는 '검열'의 몸통이 되고 있다. '친박'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흔든 데 이어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김세훈 영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칼을 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어진 '독립영화 체결'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제신문(1/29)	박인호 (영화평론가)	한국 영화계에 드리운 억압의 그림자	여러 단체의 성명에서 표명한 것처럼 BIFF로 상징되는 한국영화에 대한 명령(국가기관이 허용하지 않는 영화를 상영하지 마라)-불복(상영 여부는 전적으로 영화제의 자율적인 권한이다)-보복(단체에 대한 제재와 응징)의 과정은 머지않아...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되는 ...의 상영을 반려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결정은 이 같은 의도를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보이지 않는 검열'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감이다.
오마이뉴스	성하훈 (기자)	일련의 기사들	

- ③ 위 임OO은 검토 보고에서 매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서는 대부분 영화계 관계자 등의 인용으로 의혹 제기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고 명예훼손을 시도한 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 ④ 2015. 9. 1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손OO 사무관은 영진위의 위 임OO에게 ‘(영상과) 예상질의 답변자료’를 송부하고 위원장과 위 임OO만 공유하도록 지시하는데, 여기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삭감 사유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자생성을 가질 만큼 충분히 성장했으며, 그간 영화제 지원이 부산영화제에 집중되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⑤ 이와 관련하여 위 임OO(2회 진술조서, 2017. 10. 27.)은 2014. 10.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 이후에도 영진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언론대응을 해왔다며 “2015년도에 예산이 깎이었고 그 이후 국회의원이나 영화인들의 항의 등이 이어졌고 국감 등에서 주요 질의 대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김세훈 위원장이 보기에 부당하다, 명예훼손이다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의 지휘와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수행하지만 결국 문체부 담당사무관에게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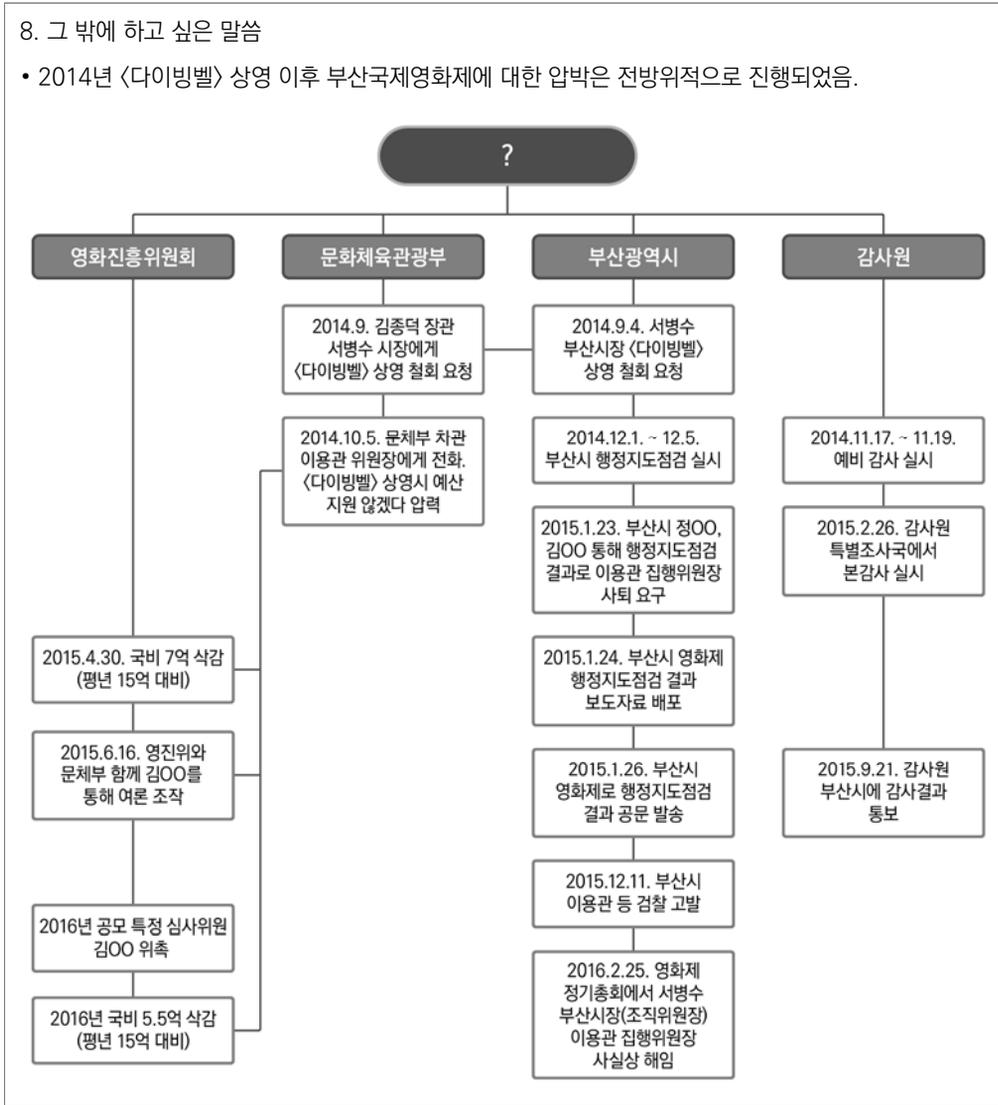
7. 영화제 조직위 집행위 관련자 고발 등 추가외압

가. 부산시의 행정지도와 외압

- ①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서병수 부산시장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블랙리스트 피해사항 진술서」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하고 있다.

8.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음.



② 부산시는 2014. 12. 1. 부산영화제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부산시 영상문화산업과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인사분야에서는 공개채용 절차 생략 등 관련 규정 미이행, 복무 분야에서는 직원 대부분 복무규정 위반, 감독 소홀, 초청작 선정 관련 보고 의무 등 관련 규정 미이행, 회계 분야에서는 제반규정 무시, 임의대로 예산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 결과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4건을 제시하였다.

직 성명	징계 의결 사유
사무국장 양OO	직원채용시 조직위원장 승인 절차 무시, 전문위원 위촉 부적정 인사관리 소홀 등 집행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할 책임자로 관련 규정 미이행
BIFF연구소장 전OO	대학교 출강을 위한 개인 사무로 관외출장 보고 후 여비수령, 집행위원장 승인 없이 '14년 2학기 대학교 출강 등 복무규정 위반
수석프로그래머 김OO	선정위원회 대표로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 관련 규정 위반
서비스개발팀장 강OO	입장권 현금 판매수입금에 대한 당일 미정산 등 관리 부적정

- ③ 2015. 1. 24. 부산시는 「부산영화제의 운영 개선과 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부산시 입장」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2014. 12. 초 5일 동안 BIFF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는데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사전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재정운영이 방만”한 점, “영화제 작품 선정 시 영화제 정관 규정상 프로그래머가 작품을 섭외하고 상임집행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상임집행위를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같은 해 1. 26.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사무국에게 “1. 20주년 성년 영화제 시대를 맞아 BIFF가 지역영상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BIFF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 지난해 우리 시에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제기된 폐쇄적 조직·인사운영, 규정을 위반한 회계·예산 운영 등을 개선할 내부혁신 방안 제시 3. 영화제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적쇄신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였다.
- ④ 이에 대하여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의 요구사항, 공식 접수하면 숙고하여 정중하게 응대할 터」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해마다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아왔다. 통상 점검반에서 지적사항을 제시하면 사무국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된 지도점검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고, 사무국에서 조치 결과를 회신해왔다. 이번에는 많이 다르다.”, “점검 당시 확인서에 덧붙여 쓴 담당자의 약식 의견 이외 사무국의 소명 절차도 없었고, 아직까지 확정된 지도점검 결과를 공식 공문으로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 점검 당시 지적사항으로 언급된 사안에 대한 소명자료와 개선방안을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산시는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이라며 세 가지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라고 하였다.
- ⑤ 2015. 2.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의 「2014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 소명 및 개선방안」에서 지도검사 결과 중 상영작 선정 보고 미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영화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²²⁾.

- 영화제 초청작은 해외 영화제 스크리닝, 국내외 프라이빗 스크리닝과 국내외 시사회, 출품된 작품 스크리닝 등을 통해 선정하는 등 연중 상시 다양한 창구로 선정을 진행함. 출품작 이외 선정작도 다수이며, 출품이 선정의 전제 조건이 아님. 이는 전 세계 영화제가 대동소이함
- 영화제 초청은 절대평가나 상대적 우열을 가능하는 게 아니라 영화제와 해당 섹션의 성격에 맞는 작품을 프로그래머의 주관적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초청작에 대한 선정 사유를 밝히는 것은 타당하나, 비초청작('낙선'이 아님)에 대해 사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상임집행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 미준수는 적극 시정

⑥ 당시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영화제 담당 고OO(진술청취보고, 2018. 5. 18.)은 “2012년 영상콘텐츠과로 부임하였을 때 영상 분야의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사업들에 대하여 거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는 부산 영상 위원회를 담당하였는데 그래서 영상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때부터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 1.경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담당하면서도 운영의 방만함이나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엿보여서 ‘지도점검의 필요성’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당시 <다이빙벨> 사태와 맞물리면서 영화제에 대한 쇄신 요구 등 강도가 세진 것인데, 이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그러나 이용관(진술청취 보고, 2017. 9. 8.)은 “영화제 폐막 이후 ‘다이빙벨’이 독립 영화전용관 등에서 상영이 확대되었다. 이후 10월말에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이 있었다. 예년에 비해 시기가 좀 당겨져서 진행되었다. 또 예년에는 하루 이틀 걸렸던 점검이 이 때는 유난히 길었고 살살이 뒤졌다. 평소에는 말 그대로 ‘행정지도’인데 이걸 아예 감사가 되었다. 일부러 이용관(진술인)을 겨냥해서 비위를 찾아내려한 것이다. 집중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었다. 회계와 활동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점검이 이루어졌다. …(부산영화제는 시만이 아니라 다른 곳의 보조금이나 지원도 있는데 지도점검은 상식적으로 시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 것

22)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청작 선정기준도 프로그래머의 영화관(觀)과 안목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 먼저이며, 이는 존중해야 할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기본적인 권한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머의 초청작 선정 경향은 영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이는 세계적인 유명 영화제들도 마찬가지이다.”, “프로그래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존중해 온 전통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의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게 된 핵심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는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해 외압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극히 이례적이었던 최근 사례 이외에는 지난 19년 동안 독보적인 호평을 받아왔다.”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월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항의는 하지 못했다. 이 점검을 통해 스물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부산시는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로 흘렸다. 언론을 통해 영화제 조직위가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이었다고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의했다. 온라인 기자회견도 했다.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보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⑧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 김OO(진술청취보고, 2017. 11. 9.)는 “행정지도점검을 관례로 보면 이러저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여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는데 당시에는 꽤 많은 항목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상 부산시의 실무자들이 며칠 동안 영화제에 상주를 하면서 회계서류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서도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해명을 듣는다든지 ‘순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1주일 여 동안 지도점검을 한 다음에 부산시장에게 내부보고를 거쳐서 영화제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적 미숙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정을 해왔지만, 이 때 당시에는 강도가 쏠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 인적쇄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의 의도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겨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쇄신과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거취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 사퇴를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 공문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조직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은 공문을 통해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부산시에도 공문을 보냈고 정기총회를 하면서도 이사들에게도 모두 공표를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목표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연임 반대였기 때문에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감사원의 감사와 고발

- ① 감사원의 「시정요구·통보 및 조치결과」(2015. 4.)를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특정감사(2015. 1. 29.~2015. 4. 17.) 관련하여, 부산영화제조직위는 한국문화예술위로부터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549,618,400원을 교부한 후 같은 해 2. 3. 정산하였고, 2014. 10. 23.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위한 보조금 566,294,400원을 교부하고 2015. 2. 24. 이를 정산심사하였다. 그런데 부산영화제는 2013년도 3,100만원, 2014년도 3,750만원을 부산영화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협찬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허위로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2013년도 국고보조금 3,100만원 및 3,750만원 등 6,85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문화예술후원센터로부터 5억 2,000만원을 반납, 기부처에 반환하고, 2015. 9. 25.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1년간 지원중단을 알렸다.

- ②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전 영화제는 “본격적인 준비에 정신없을 시기인데 이런 식이면 부산이 올해 영화제를 제대로 치러낼 수나 있을지 걱정이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지난 (2014년) 11월 감사원의 예비조사, 부산시의 지도점검(감사), 1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 압박, 2월 감사원의 감사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기간은 3주가 기본이나 2~3일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행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²³⁾
- ③ 2015. 10. 부산시는 행정지도점검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입장이라고 밝히고, 같은 해 12. 11.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2016. 2. 25.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서병수 시장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임되었다.
- ④ 당시 김OO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2017. 5. 16. 사망)는 부산영화제 관계자들에 대한 부산시의 고발 직전 인터뷰를 통해 “감사원이 수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대개 며칠하고 끝내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오래 했다. 부산시의 감사도 5일

23) 오마이뉴스, 2015. 3. 4.

에 불과했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감사였다.”고 하였다.²⁴⁾

- ⑤ 감사 결과에 대해 이용관 집행위원장 및 영화제 측은 부산시는 2015. 9월말 감사 결과를 받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표적 감사’ 결과에 따른 사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또한 비슷한 지적을 받은 다른 문화기관 들은 주의나 환수 조치 정도의 행정 처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감사원에서 부산영화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요구하고, 부산시 또한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 하였다.²⁵⁾
- ⑥ 이용관(진술취취보고, 2017. 9. 8.)은 “감사기간은 이례적일 정도가 아니라 ‘죄인 취급’하는 조사와 같았다. 이 감사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만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국고지원을 받는 곳들에 대해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부산시장, 문체부의 공모 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감사원의 ‘표적감사’ 사실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정황을 보면 감사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개(진술인)는 죽인다.’라는 차원이었다. 다른 피감기관 들은 더 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주의, 경고,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이 부분이 추가로 꼭 밝혀졌으면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위원회가 과연 개입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개입을 했다. 당시 문화융성위원장이 김OO인데 감사방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했으리라는 추측이 있다. 2014. 10.경에 부산국제영화제 행정지도 자료를 들고 부산 정무특보라는 사람이 문화융성위원장을 찾아와서 ‘영화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용관도 문제가 많으니 물러나야 될 것 같다.’라고 하자 김OO 위원장이 ‘이걸 검찰에 가져가야지 왜 나한테 가져 왔냐’고 답했다고 김OO 위원장이 내게 직접 말해주었다…부산시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하는 60여 억 예산이 있는데 이는 특정 용도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출을 하게 되다 보면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상 이걸 회계담당이 구두로 해왔다. 그래서 그 전용을 (부산시) 자기들이 허락해놓고 자기들 손으로 벌을 준 꼴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리는 데가 없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영화제, 페스티벌에서 등장하는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잘

24) 「부산국제영화제 고발 직전 작심 인터뷰」, 2015. 12. 16.

25) 위 2016. 3. 22.자 노컷뉴스

해봐야 책임자 경고 정도로 그쳤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2,5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결코 넘어진 것이다. 그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실은 문체부에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공문이 오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공문조차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되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주는 후원금이 문예진흥기금으로 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용도가 한정되었다. 그런데 그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데 전용해서 쓸 때는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받은 관련 서류가 있었다. 이 서류를 들이밀었는데도 무시를 당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등 2심 재판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 “부산국제영화제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상영 철회를 요청했다. 후일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했으나 후폭풍은 너무도 가혹했다.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1심 재판에 비해 경감된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주장한다.²⁶⁾

라.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 및 관철

- ① 이용관(진술청취보고, 2017. 9. 8.)은 “영화제가 진행 중에 정OO 부시장과 전임 국장들이 하루에 2번씩 나를 찾아와서 ‘사퇴해라’ 아니면 ‘홍OO, 사무국장(양OO) 잘라라’고 요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청와대 라인과 김희범 문체부 차관 등이 부산시장과 부시장 등에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부산시 박OO 계장 등으로부터 들었는데, 나중에 영화제 폐막식 전날 쫓기자들과 술을 많이 마시

26)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강OO「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입장」, 2017. 7. 21.

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냐는 질문에 술기운에 ‘그렇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체부로부터의 압력’이 기사화되어 몇몇 언론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언론사가 이 사실을 확인할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시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 사무국장 김OO(진술청취보고, 2017. 11. 9.)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시점으로 사퇴권유 또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영화제 집행위원장 위촉 절차나 관례를 보더라도 1회 임기가 3년이기는 하나 대부분 연임해왔고 초창기 김OO 위원장이 1대 집행위원장을 하고 이후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단독 집행위원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강OO 집행위원장이 공동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다이빙벨 상영 건이 발생하면서 바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인데다 이전에 사퇴권고 또는 회유 사실이 있어서 2016. 2. 정해진 임기를 자연스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감사원 결과를 빌미로 삼아서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 상으로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고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서병수 시장이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고발하지 않겠다는 회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면서 ‘위로부터’ 검찰 고발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여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기타 외압

- ① 이용관(진술청취 보고, 2017. 9. 8.)은 “또한 국정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영화에 대하여 ‘안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었다. 이런 일들은 19회 영화제 이전에도 비일비재했다. MB 정부 때부터 ‘이용관 위원장(진술인)은 좌파’라고 국정원은 판단하였다. 부산시 문화 담당 국정원 직원으로는 김OO, 이OO가 있었는데, 이중에 이OO가 가장 많은 일을 했다.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라 하여 서울서 시위대열이 내려왔다. 이 때 진술인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페스티벌 구역이 집회장소로 안 쓰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진술인은 희망버스

관련자들에게 ‘1인 시위 등은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런데 영화의 전당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국정원 직원은 관련 작품 <갈갈갈 희망버스>에 대해서도 영화제에서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영화 특별상영전>이 있었을 때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안 틀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일종의 ‘타협’을 했다. 일반시사는 안하고 2작품인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꽃 파는 처녀> 등 두 작품에 대해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제한시사’를 했다. 이러한 외압은 부산시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였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직접 가해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했다.

- ② 2016. 2. 17. 위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을 승인, 요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문OO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승인하였다.

조직위원장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승인 보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의 승인요청임
*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임

□ 승인개요

- 근 기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 제31조
-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승인 후 집행위원장 위촉
- 사 유 : 집행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대 상 자
- 부집행위원장 * 3명중 2명 승인(이행의 부집행위원장 임기 미종료)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사유	임기
1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	문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2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	전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 집행위원 * 20명중 19명 승인(유정동 위원 사임)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사유	임기
1	부산국제영화제	영화감독	김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2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전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3	영화감독		박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4	부산콘텐츠마켓	집행위원장	구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권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6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용관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7	㈜씨블랙스	대표	김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8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김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9	경성대학교	교수	김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상임위원장	나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1	영화배우		문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2	영화배우		박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3	영화평론가·Frip	대표	양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4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오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5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국장	이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6	영화감독		원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7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장	조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8	영화의전당	프로그램팀장	허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19	경성대학교	교수	허OO	(임기만료 재위촉) 2016.2.27 ~ 2019.2.26

- ③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타임테이블을 보면 2014. 9. 25. 문체부에서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장 디터 코슬릭 은관문화훈

장 수여 불가 통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위 같은 김OO(진술청취 보고, 2017. 11. 9.)는 “이 영화제에서 문화훈장 수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검토를 했었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수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하나의 압박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화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웠습니다. 당시 문체부에서 명확하게 훈장 수여가 늦어지거나 불가한 사유가 제시되었다면 달리 오해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던 것이 참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8. 사건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 ① 2017. 1. 25. 부산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부산국제영화제 등은 부산시장 서병수, 전 부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OO, 이OO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부산지검에 고발하였다. 고발내용은 서병수, 김OO는 2014. 10.경 직권을 남용,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종용,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서병수, 이OO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이OO은 이용관에 대한 고발 실무를 담당하였다.).
- ② 위 같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 김OO(진술청취보고, 2017. 11. 9.)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의 압박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예산지원이 축소된 점이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진위의 영화발전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영화제 평가와 관련하여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상위 등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부산영화제의 경우 사단법인이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단지 티켓 판매수입과 협찬금이 가장 큰 수익부분을 차지하는데, 국고지원이 줄어든 것과 더불어 정부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감사하면서 협찬 기업에까지 세무조사를 병행하여 그것들로 인해 기업 협찬이 위축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영화사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영화 쪽 기업들은 NEW, CJ, 쇼박스 등이 영화제 기간 동안 제작발표회 등을 했었는데 아예 행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화제 입장으로는 그러한 행사들이 마켓 분야

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후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 ① 이 사건 관련 특검의 수사 결과 및 관련 재판 결과에 의하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문체부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이빙벨> 상영 금지를 직접 지시하였음이 명확히 규명되었다. 나아가 부산시장(서병수) 또한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로 하여금 이 영화 상영을 철회하도록 압박한 것, 우파단체와 언론을 동원한 ‘상영금지’ 압박과 공세를 광범위하게 펼친 것 또한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부산시의 지도점검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집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 등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광범위한 외압이 이루어졌다.
- ② 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정관주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보고(당시 박근혜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김상률, 김소영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김종덕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한 다음 문체부를 통해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이 때 문체부 영상콘텐츠 산업과장→영화진흥위원장 직접 하달)하여, 영진위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는 부산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철하였다는 것이다.

- ③ 위원회 조사결과, 먼저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영화제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지원은 영진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에 의한 것인데, 2015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영진위는 위원장의 지시 아래 심사위원 후보자군(pool)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등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나아가 문체부가 지정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그리고 문체부가 지정한 위 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50%로 최초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비심사 시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018년이 되면 10억 이상, 7년 이상 보조를 받은 단체에 포함되어 기재부 지침에 따른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생성 강화 논리를 유도하고 사전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지원금 축소를 주문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당시 예비심사결과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결정액은 7억 5천이었는데, 영진위 정기회의에서는, 다시 재심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예비심사의 결정은 정기회의를 통해 충분히 고치거나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심’을 결정한 것은 i. 정기회의에서 지원금 삭감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무마하기 위함, ii. 지원금 삭감을 주도한 김세훈 위원장이 지원액을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명분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청와대→문체부→영진위로 하달된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위해, 그리고 이의 실행과 관련한 ‘명분’을 위해 공정·투명해야 할 심사의 과정과 절차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듬해인 2016.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당시에도 당시 영진위원장 등 영진위는 전년도 지원금 축소로 인한 파장을 축소하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를 마찬가지로 “추첨” 등에 의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이는 “심사위원 추첨 통보”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④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관람표 사재기’를 통한 문화향유권 침해 의혹 또한 이 사건 조사결과 사실로 보인다. 이 영화는 2014. 10. 6.과 같은 해 10. 10. 2회에 걸쳐 상영 예정이었는데, 2015. 9. 25. 첫 회 상영분에 대하여 부산은행 창구와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 분의 거의 모든 표가(117석 중 116석에 대하여) 매우 짧은 순간에 팔렸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아울러 보면, 이 표들은 부산시청(부산시청 지점 및 부산 소재 은행) 직원들을 동원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⑤ 이 영화의 상영금지 압박 및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축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이른바 ‘건전우파’ 단체 <OOOO OOOO> 최OO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최OO의 동생으로, 2010년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지정위탁 수행 중이던 독립영화전용관이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한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허OO 등의 주도 아래 ‘보수단체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자신들이 전경련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 ‘육성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2015년 영진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에서 의견을 “조희한 이들로 적시되어 있기도 하다. 최OO는 2014. 9. 4.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자제를 요구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보내 확인을 거쳐 유포하고, 9. 29. 허OO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다이빙벨 관련 동영상 유포 자료 “부산영화제 초청작 <다이빙벨>을 저격하다!”를 보고, 확인을 거쳐 이를 유포하였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 위 최OO는 또한 2014. 10. 1. 청와대 허OO 행정관에게 ‘<다이빙벨> 향후 대처계획’을 이메일로 보고, 10. 6. 하OO 의원실 보좌관 및 부산지역 대학생들과 합류하여 이 영화를 단체관람 후 보수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작업’, ‘온라인감상평작업’, ‘부산시민의 반대시위’, ‘일반인 유가족의 맞대응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 최OO가 보고한 상당수의 내용들은 실행이 되었고, ‘세월호 일반인 유족’이나 어버이연합을 통한 <다이빙벨> 상영 반대 기자회견 또는 시위 등이 이어졌다. 한편으로, 위 최OO는 마찬가지로 전경련의 지원을 받는 ‘자유경제연구원’의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데, 보수 언론들은 이를 재차 활용하였다. 결국 이는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등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주도하고, 전경련의 물적 지원 아래 ‘우파단체’들이 적극 동원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⑥ 위와 같은 ‘언론작업’은 문체부와 영진위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 이후 독립영화전용관에서 같은 영화 상영이 확대되자 문체부는 국민소통실을 통해 언론사를 접촉, 기사 노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2014. 10. 22. BBB, CCC와 접촉한 결과 기사 노출을 약속받아 2014. 10. 23.자 CCC의 「세월호 참사 ‘다이빙벨’ 개봉...“사고 고통 이용한 상업 작품”」, 같은 해 10. 26. BBB의 「세월호 가족 가슴 찢는 영화 다이빙벨」(이는 어버이연합 및 한겨레청년단 등의 시위 관련 기사)로 기사화되어 여론을 동원하여 영화 상영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원의 증거기록들에 의하면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 ⑦ 이 사건 관련한 영진위 행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일련의 ‘대필’ 기고 활동 또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OO 전 사무국장과 김세훈 위원장은 사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언론기고를 협의하고, 2015. 6. 2. 영진위 직원은 관련하여 기고문 초안을 김OO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다음날에는 수정초고를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문체부에 보내고, 2015. 6. 9. 문체부는 이 기고문의 수정본을 영진위로 전달하고, 2015. 6. 16. 서울경제신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먼저 실천할 것들」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2015. 10. 16.에도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개편과 관련하여 영진위 직원은 서울경제 발언대 수정원고를 위원장에게 보내면서 10. 21. 원고마감으로 이때까지 문체부와 의 조율 및 필자 섭외 등을 마쳐야 한다고 보고하고, 2015. 10. 17. 내부 검토라인을 거쳐 10. 19. 경 문체부로 송부한 후 10. 21. 발언대 원고를 서울경제 기자에게 보내고, 그리하여 2015. 10. 22. 서울경제 발언대 당시 영진위원 김OO의 “한국예술영화 상영 늘려야” 제하의 기사가 실렸는데, 위 김OO, 김OO는 2016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필 기고 작업을 영진위원장과 사무국장(박OO), 미래전략본부장(이OO)이 사전에 기획, 주도하고 문체부의 최종 확인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영진위원장 등 영진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요청을 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하기조차 하였는데,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신문>의 기사는 자진하여 완전히 삭제하는 데에 이르기도 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①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된 부산국제영화제 외압이 청와대와 문체부, 부산시, 영진위의 관여 아래 우파단체와 언론 등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은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권한과 기한의 부족으로 이를 규명해낼 수 없었다.
- ② 한편, <다이빙벨> 상영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주도 아래 관람 표에 대한 일제 ‘사재기’ 사실은 분명해 보이나 이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명해낼 수 없었다. 이 ‘표 사재기’와 관련하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했다는 진술이나 의혹, 부산시를 통해서 하였다는 진술, 국가정보원이나 문체부 등이 표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다는 진술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③ 당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진술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당시 문체부 1차관 김희범의 진술조서 기재 사실에 의하면, 청와대의 관여 아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시 김OO 문화융성위원장 또한 <다이빙벨> 상영금지(차단) 및 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제재 행위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권한 및 기한의 부족으로 이에 대해 충분히 규명해낼 수 없었다.
- ④ 나아가 이 사건에는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부산시장 서병수를 비롯하여 부시장, 부산시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관여되었다는 의혹 및 관련 진술이 다수 있으나 부산시 지도점검에 참여한 공무원 1인의 유선 진술청취 외에 이들을 상대로 출석 및 진술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5년도 영진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관련 심사에 참여한 예비 심사위원, 김세훈 전 영진위원장 등 위원들에 대해서도 진술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하여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이 사건의 성격

- ①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하여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

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보급하고 견해가 다른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결국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한다.

- ②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사건 당시 19회에 이르는 동안 국제영화제로서의 대표성,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전 세계적인 다양한 영화예술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단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또한 ‘반정부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문체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공모,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성향에 따른 예술창작자를 배제·차별하는 등 헌법을 위배하고, 세계적 영화제에 대한 지원 삭감 나아가 여론전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이는 당시 영화 <다이빙벨>의 영화제작자와 상영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화인과 국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전가하고 또한 ‘정상화’의 과제를 남겨놓은 전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4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74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영1[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조직 운영 및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회는 자료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자료원의 검열·배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 10.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 학술 심포지엄이 문체부의 지시로 인하여 행사 직전 취소되었고, 2010. 11.경 4대강 영화 상영을 계획한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이 철회되고 대관행사로 영화가 상영된 배경에 청와대·국정원의 압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14. 10. 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 이사 추천 과정에서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추천하였다는 사유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토되고 자료원에 대한 주의 조치가 실행되고, 이사 임명이 10개월 가량 지연되었으며,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료원 정관 개정을 추진하여 이사 추천 부분을 삭제하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포럼테지마주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 <매혹의 서울>에서 총 4편의 영화가 배제되었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과 영화제 관계자 등이 초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편, 프랑스 측 예산으로 우회 지원하여 배제 대상 감독을 초청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6. 1.경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 한국영화>에 선정된 <위로공단>에 대한 문체부의 상영 배제 지시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영화 검열 및 특정 영화인 배제 지시를 거부한 자료원 프로그래머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붙임 :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8직영1,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 이사 추천 과정에서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직원 등에 대한 서면경고 조치 계획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자료원이 참여한 포럼테지마주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매혹의 서울 Séoul hypnotique)에서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거부한 당시 자료원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자료원의 조직 운영 및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회는 자료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검열·배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가. 직권조사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9일 제23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자료원에서 진행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정 영화 또는 사업에 대한 검열, 특정 인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 조치가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자료원 내 검열·배제 사례와 조직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①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그리고 자료원에 이르는 블랙리스트 지시체계를 규명하고, ② 특정 사업 또는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 및 특정 인물의 배제 지시의 구체적 실행과정을 밝히며, ③ 자료원 내부 규정 및 직제 개편과 블랙리스트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원은 지원기관이 아니라 필름·시나리오·포스터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존, 복원 및 전시, 상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자료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이 지원 배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검열 및 차별, 통제 등 블랙리스트 실행의 다층적 측면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지하고 자료원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문서, 이메일, 기사 등 모두 46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서 등 자료 목록

연번	서명	작성(제출자) 등	입수일
1	조OO 진술조서 (국정원 문체부IO) (2017.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2	윤OO 진술조서 (前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3	정OO 진술조서 (前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4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관련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 보고 (201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	- 2015. 2. 6.자 운영지원과 명의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	- 2015. 1. 21.자 영상콘텐츠산업과 명의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선임 계획」 (최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5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2017. 11.
6	윤OO 녹취서(요지) (前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201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공판기록	2017. 11.
7	김종덕 녹취서(요지) (前 문체부 장관) (201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공판기록	2017. 11.
8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27.)	청와대	2017. 8. 30.
9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국정원 작성, 2013. 3. 15. VIP보고)	대통령 기록관	2017. 9. 29.
10	보도자료-'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발표	국가정보원	2017. 9. 11.
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2017. 10. 30.
12	정보보고 :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업선 필요 (2015. 9. 16.)	국가정보원	2018. 1. 19.

연번	서명	작성(제출자) 등	입수일
13	국회회의록_18대_278회_국정감사_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8.10.17.)	국회	2018. 5. 24.
14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리스트-'16.2.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2017. 8. 17.
15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인수인계서 (2014. 10. 15.)	문화체육관광부	2017. 9. 5.
16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2015. 3. 3.)	문화체육관광부	2017. 9. 5.
17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임명 (2015. 7. 13.)	문화체육관광부	2018. 5. 24.
18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개정 승인 통보 (2016. 3. 2.)	문화체육관광부	2018. 5. 24.
-	- 붙임문서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018. 5. 24.
19	영상자료원장 비위혐의 조사결과 보고 (2018. 4.)	문화체육관광부	2018. 5. 24.
20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2016. 3. 2. 개정)	한국영상자료원	2017. 12. 13.
21	한국영상자료원 직제규정 (2016.10.31.개정)	한국영상자료원	2017. 12. 13.
22	한국영상자료원 임원 현황	한국영상자료원	2017. 12. 13.
23	한국영상자료원 조직 기구표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4.
24	직제에 따른 개별 업무 분장 현황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4.
25	제80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2016. 2. 24.)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5.
26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임명 절차 개선(안)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5.
27	정관 및 규정(직제, 문서처리) 개정 추진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5.
28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 추천 결과 보고 (2014. 9. 3.)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4.
29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 결과 보고 (2015. 5. 8.)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0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추천 요청 결과 보고 (2015. 6. 26.)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1	한불사업 상영작 목록(최초) (2015. 1.)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2	포럼데이마주 기획안(2015. 3)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2015. 8. 20.)		
3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포럼데이마주 한국영화 특별전 계획(2015. 9. 10.)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	-[붙임] 한불 사업 상영작 목록-최종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2016. 12. 8.)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연번	서명	작성(제출자) 등	입수일
36	한불사업 관련 이메일(수발신)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7	사회/정치 이슈 관련 상영 영화 리스트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8	마키노 마사히로 감독전(홈페이지 2015.9.)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39	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 (홈페이지 2016.1.)	한국영상자료원	2018. 1. 26.
4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 회신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2018. 5. 24.
41	한국영상자료원 장소 후원 요청 공문	서울독립영화제	2018. 5. 23.
42	한국영상자료원 장소 후원 철회 공문	서울독립영화제	2018. 5. 23.
43	2008. 10. 22.자 오마이뉴스 「영상자료원 박정희 학술대회 취소 논란」	오마이뉴스	2018. 5. 17.
44	2010. 11. 19.자 연합뉴스 「서울독립영화제 2010' 내달 9일 개막」	연합뉴스	2018. 5. 17.
45	2018. 03. 08.자 오마이뉴스 「류재림 영상자료원장 성희롱 발언 논란되자 사과」	오마이뉴스	2018. 5. 17.
46	클래식 중독 (조선희 저, 2009)	마음산책	2018. 5. 1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1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윤OO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2011.2.~2015.1.)	진술조서(2017. 9. 22.)
2	조OO	자료원 연구전시팀 전문위원(現) 자료원 경영기획부장(2012~2015)	진술조서(2018. 1. 8.)
3	김OO	자료원 정책기획팀장(現) 경영기획부장(2015.3~)	진술녹취록(2018. 1. 9.)
4	정OO	프랑스한국문화원 '한불 상호교류의 해' 코디네이터(2014.9.~2015.10.)	진술조서(2018. 1. 10.)
5	V	예술경영지원센터 차장(現)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팀장	진술서(2018. 1. 22.)
6	최OO	前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 예술감독	진술조서(2018. 1. 25.)
7	정OO	자료원 감사 담당(現) 경영기획부 (2009-2014)	진술조서(2018. 1. 26.)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8	OOO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現)	진술조서(2018. 1. 29.)
9	박OO	자료원 시네마테크팀 팀장(現)	진술조서(2018. 1. 30.)
10	OOO	자료원 시네마테크팀 대리(現)	진술조서(2018. 1. 31.)
11	노OO	자료원 사무국장(現)	진술조서(2018. 2. 2.)
12	오OO	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現) 시네마테크부(2009~2016.3.)	진술조서(2018. 2. 5.)
13	모은영	자료원 프로그래머(2008~2016.3) 영화관운영팀 팀장(2016.3.~2017.1.)	진술조서(2018. 2. 12.)
14	김OO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2014.9.~2015.12.)	사실확인서(2018. 3. 9.)
15	박OO	문체부 콘텐츠정책관(2014.10~2015.3.), 해외문화홍보원장(2015.3~2016.4.)	진술조서(2018. 4. 19.)
16	류재림	자료원 원장(2015.10~2018.10.)	면담보고(2018. 5. 11.)
17	조선희	자료원 원장(2006.9~2009.9.)	면담보고(2018. 5. 18.)
18	김OO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면담보고(2018. 5. 23.)
19	정OO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2014.10.~2016.6.)	진술녹취록(2018. 5. 23.)
20	박OO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2008. 당시)	사실확인서(2018. 5. 24.)
21	변OO	순천향대 교수, 자료원 이사추천 후보	면담보고(2018. 5. 2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영문으로는 KOREAN FILM ARCHIVE (KOFA)로 표기한다.

[표-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 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974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91. 9. 1.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부터 영화필름 등의 의무제출제도가 시행되었고, 2002. 6. 10. 영화진흥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출범하였다. 2007년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를 건립하여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영화박물관 및 시네마테크KOFA를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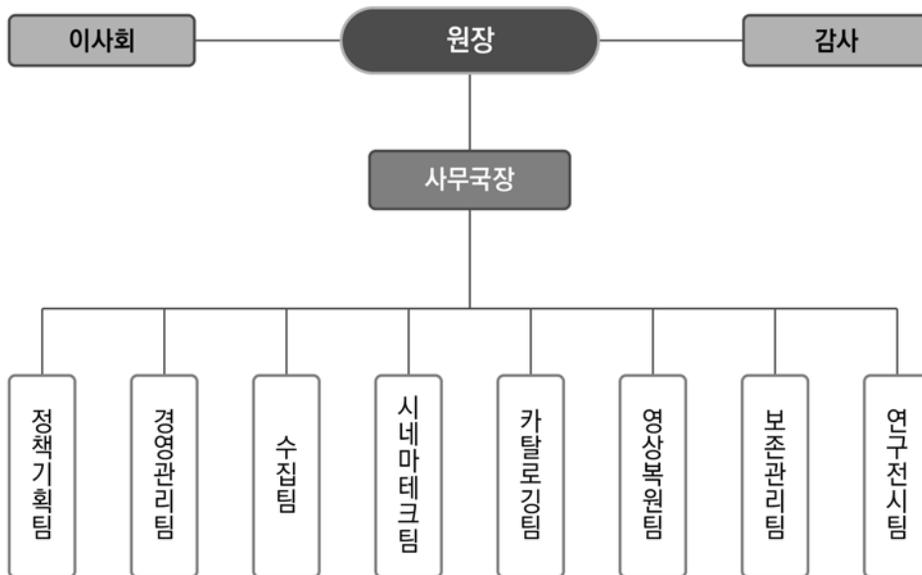
나. 한국영상자료원 임원 및 조직구성

자료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장 1인, 이사 8인 이내, 감사 1인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정관 제5조). 원장, 감사 및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되,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정관 제6조).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정관 제7조). 자료원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서, 그동안 문체부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어 왔다.

자료원은 2018. 1.경 지속성장 가능한 조직, 책임 및 역할 명확화를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관리자 의사결정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팀 체계¹⁾를 전체 팀제로 개편하였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다. 현재 자료원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 한국영상자료원 조직도(2018. 1. 현재)



지난 10년 간 역대 자료원 원장은 <표 4>²⁾와 같다. 노무현 정부 당시 씨네21 편집장 출신의 조선희 원장('06.9.~'09.9.)이 임명되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이병훈 원장('09.9.~'15.10.)은 한 차례 연임되어 6년을 재직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에 임명된 류재림 원장('15.10.~'18.4.)은 임기가 2018년 10월 까지였으나, 지난 4월 말, 조기 사직하였다. 이병훈 원장과 류재림 원장은 각각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사진부장 출신이다.

1) 자료원이 제출한 시기별 조직도에 따르면, 개편 이전의 조직편제(2016. 3.)는 부·팀제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인 부서(팀) 편제는 다음과 같다. 경영기획부(경영지원팀), 수집부(카탈로깅팀), 시네마테크부(영화관운영팀), 보존기술센터(보조운영팀), 한국영화사연구소

2) 위원회 입수자료 '한국영상자료원 임원 현황', 류재림 원장 임기 일부분 수정

[표-4] 한국영상자료원 역대 원장(2006~2018)

성명	임기	주요경력	추천인 및 추천단체
조선희	'06.9.25 ~'09.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신문 씨네21 편집장 • 환경영화제 집행위원 •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공개 모집
이병훈	'09.9.25 ~'15.10.7(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사진부장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겸임교수 • 한국보도사진가협회 부회장 	“
류재림	'15.10.8 ~'18.4.30(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헤럴드 사진부 기자 • 서울신문 사진부 부장 • 한국사진기자협회 편집위원 	“

2. 이명박 정부 시기 특정 사업 취소 및 상영 검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위하여 위원장 등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교체를 통해 좌파 문화권력 청산을 도모하였고,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를 막기 위하여, “영화제 등 각종 기관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이념 편향의 인력”에 대한 청산과 활동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다³⁾. 이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며, 자료원과 같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조선희 자료원 원장은 퇴임 후 출간한 저서 『클래식 중독』⁴⁾을 통해 당시 원장 사퇴 압력 등이 실제로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2009. 2.경 문체부의 간부로부터 “결심만 서면 즉시” 정리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유인촌 장관과의 면담 등 여러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2009. 9.까지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등 기관장 대부분이 임기를 채울 수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자료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 동안 앞서 언급한 ‘문화균형화 전략’ 기조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 관련 학술행사 취소 및 4대강 사업 관련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의 후원을 취소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기 이루어진 소위 검열·통제로서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3)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 8.

4) 『클래식 중독』(2009), 조선희 저, 마음산책

가. 자료원 학술 심포지엄 취소

(1)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 심포지엄 개요

자료원은 2008. 10. 18. 학술 심포지엄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던 박정희 정권 시절 미디어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로서, ‘1970년대 국책영화, 계몽과 기만의 변증법’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당시 이 심포지엄은 자료원의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2008.10.17.~10.26.)기획전의 부대행사의 일환이었는데, 이 기획전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당시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 〈팔도강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개발주의 시대의 산업근대화 선전영화들을 돌아보는 상영행사였다⁵⁾.

[그림-2] 한국영상자료원 기획전,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 홍보이미지



5)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https://www.koreafilm.or.kr>, 시네마테크KOFI, 지난 프로그램 소개 참조

(2) 심포지엄 취소 과정 : 문체부의 지시 및 행사 취소 결정

(가) 前 자료원장 조선희 진술⁶⁾과 관련 자료

당시 자료원 원장이었던 조선희(2006.9~2009.9 재임)는 심포지엄 개최 며칠 전, 문체부 영상과 박OO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직접 와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자료원에서 할 생각을 했냐’고 하면서 심포지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청와대 등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자료원 지도·감독 기관인 문체부 과장이 직접 전화까지 한 상황에서 강행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였다. 당시 이미 언론에 보도⁷⁾가 되었고, 행사 포스터도 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개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조선희 전 원장의 책 『클래식 중독』에필로그에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5】 책 『클래식 중독』 중, 2008년 심포지엄 취소 관련 내용

내가 임기의 3년의 반환점을 돌았을 때 정권이 바뀌었지만 영상자료원 일이 대단히 권력적이지도, 특별히 정치적이지도 않아서 새 정부하고 크게 부딪칠 일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10월, 박정희 정권기의 국책홍보영화 기획전과 심포지엄을 일주일 앞두고 인터넷에 기사가 뜨기 시작하자 문화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하에서 건국60주년 사업에 대해 지시하고 박정희 정권이 너무 평가절하돼 있어서 재평가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쇄소에서 기획전 팸플릿을 찍기 시작한 마당이었다. 오래 고민할 틈도 없었다⁸⁾.

(나) 前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OO의 사실확인⁹⁾

위원회는 조선희 전 원장의 진술과 자료를 확인한 후,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었던 박OO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OO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6) 조사보고 ‘한국영상자료원 前 원장(조선희)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입수 보고’ (2018. 5. 18.)

7) 연합뉴스, 「학술소식, 박정희 시대 미디어정치 학술대회」 (2008. 10. 7.)

8) 『클래식 중독』(2009), 조선희 저, 마음산책

9) 참고인 박OO 사실확인서 (2018. 5. 24.)

- “동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행사 취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동 심포지엄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질의가 있었고, 당시 영상자료원장이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체부의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은 어느 정도이며, 문체부-자료원 간 보고 체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위 학술 행사에 대한 취소 지시는 통상적인 관리 감독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문체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관계는 예산 관련 사업 관련 행정절차에 관한 업무관계이며, 업무관련 보고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문서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심포지엄의 취소는 당시 영상자료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2008. 10. 17. 국정감사, 나경원 의원 심포지엄 관련 질의

위 조선희 전 원장의 진술과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심포지엄 취소 지시는 행사 예정일(2008. 10. 18.) 약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고, 행사 취소 후에 국회 국정감사(2008. 10. 17.)에서 관련하여 질의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박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의 취소 지시는 부정하고 있으나, 역시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다고 한 바 있다.

당시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2008. 10. 1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¹⁰⁾ 확인 결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자료원 심포지엄이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심포지엄 추진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표-6] 국정감사(2008.10.17.) 중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질의 내용

- 나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월 18일날 원래 영화사연구소에서 ‘박정희 정권기 산업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라는 그런 심포지엄을 하려고 그러셨지요?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예.
-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취소됐지요?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예.
- 나경원 위원 왜 취소했습니까?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그게 사실 저희가 준비 일정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 이사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0) 2008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08년 10월 17일(금)

- **나경원 위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주제가 국가기관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은 주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 **나경원 위원** 문제 제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왜 그걸 이렇게 추진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라는 주제로 열릴 이 심포지엄은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되던 박정희 정권 시기 영화와 텔레비전, 홍보 영상물 등 당대의 미디어가 어떻게 박정희식 산업화 프로젝트를 대중 관객들에게 선전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했어요. 이것이 안에서 문제가 되어서 취소될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전에 소장이신 조선희 소장께서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예, 저희가 사실 그걸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저희 10월 기획전의 부대 행사로 기획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 **나경원 위원** 아니, 부대 행사든 독자적 행사든 간에 이것 다 원장님 책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제서야 그나마 받아들여서…이 ‘박정희 정권기’ 이런 것만 봐도 이 심포지엄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연구해야 되고, 순수하게 영화사를 제대로 영화의 발전이 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
- **나경원 위원** 답변이 없으시네요. 앞으로 그 영화사 소장을 굳이 검임을 하시겠다면 제대로 영상자료원의 본연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선희**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심포지엄 취소 배경을 묻는 질문에 조선희 원장은 “주제가 국가기관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은 주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정권기’ 이런 것만 봐도 이 심포지엄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연구해야 되고, 순수하게 영화사를 제대로 영화의 발전이 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하였다.

(4) 심포지엄 취소에 대한 의혹 제기 및 항의

(가) 심포지엄 발표예정자 변OO의 진술¹¹⁾

심포지엄 취소가 결정된 후,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던 연구자들은 심포지엄의 일반적 취소에 대하여 자료원에 항의하였다. 발표자 중 하나였던 변OO 순천향대 교수는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제가 발제자여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 포스터도 나왔고 발제 자료도 인쇄가 전부 되었는데, 갑자기 자료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다. 당시에 자료원 측에서는 원고료는 보내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희 원장한테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결국은 조선희 원장이 그 당시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두 모아서 경위 설명을 짧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기사

〈영상자료원 박정희 학술대회 취소 논란〉 오마이뉴스 2008. 10. 22.자 기사¹²⁾는 자료원이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던 박정희 정권 관련 학술대회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료원은 “내부 일정이 겹쳐 취소했다”고 해명하였고, 학술대회 상황을 알고 있는 외부 인사들은 외부 압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자료까지 배포된 학술대회가 ‘연기’되는 것도 아닌 ‘취소’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하였다.

나. 4대강 관련 영화 상영 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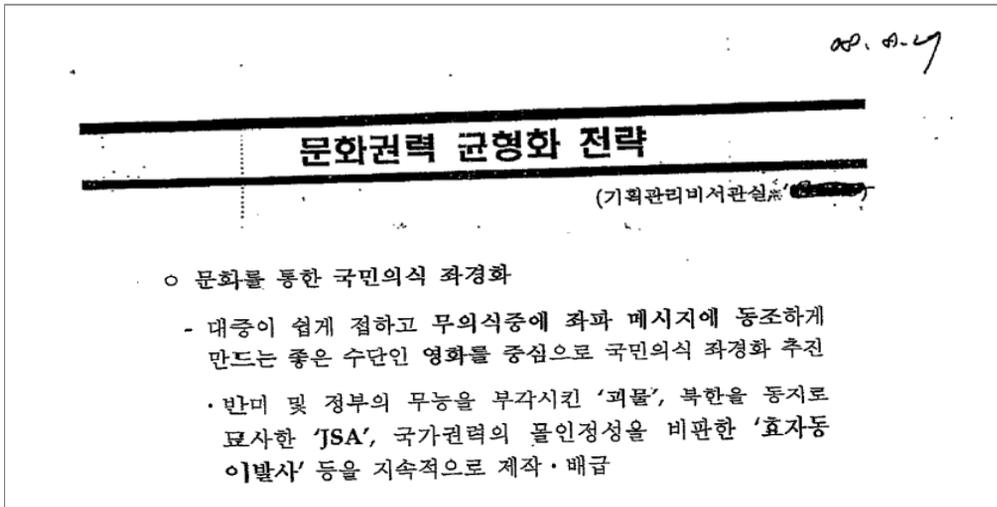
(1) 이명박 정부의 ‘좌파영화’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가) 소위 ‘좌파영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문건에서도 확인되는데,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비판적 영화를 통제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11) 조사보고 ‘2014. 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관련 변OO 진술청취 보고’ (2018. 5. 25.)

12) 오마이뉴스, 「영상자료원 박정희 학술대회 취소 논란」 (2008. 10. 22.)

[그림-3]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부분 (2008. 8.)

(나)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 보도자료¹³⁾

국정원 개혁위의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파악을 수시 지시하였으며,
- 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하였다.

(다) 2013. 3. 국정원 작성,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¹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 3.경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축적해온 정보 보고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

13) 국정원 보도자료,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2017. 9. 11.)

14) 박근혜 정부 국정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0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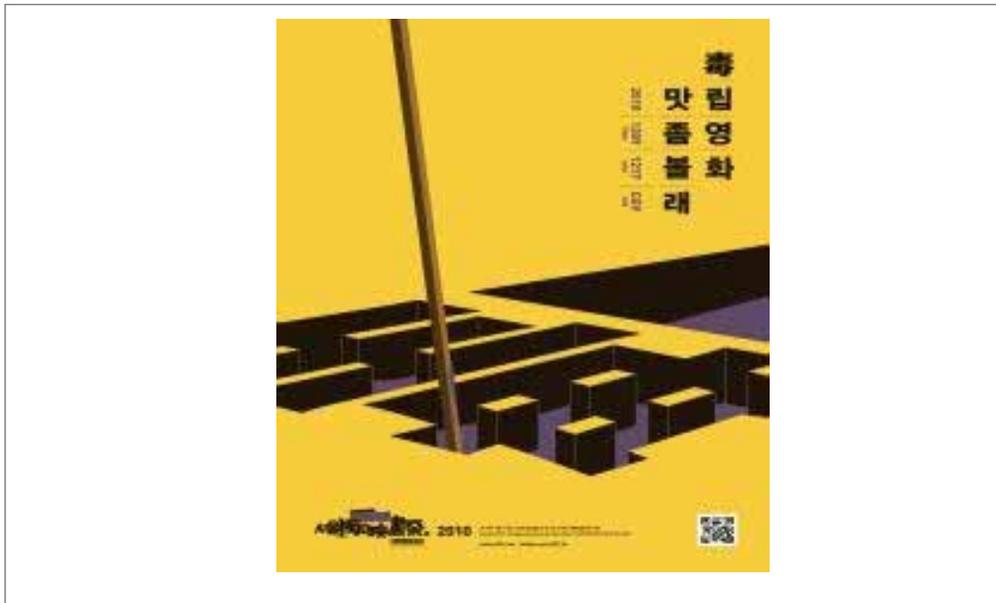
에 보고하였다. 이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을 살펴 보면, 영화분야 중 ‘강원래 프로젝트’(4대강)·‘야만의 언론’(보수언론)·‘두개의 문’(용산 사고) 등 이명박 정부 시기 제작된 시대가발성 독립영화의 제작 및 상영을 지원하는 것을 반(反)정부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4]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2013.3)

영화	영화제작가협회 대표 : 이 은 명필름 이사	○ 문성근·명계남 등 주도 아래 작년 총선·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연대 활동 강화 ○ <u>‘강원래 프로젝트’(4대강)·‘야만의 언론’(보수언론)·‘두개의 문’(용산사고) 등 시대가발성 독립영화 제작·상영을 지원하며 반정부 활동 전개</u> ○ 최근 ‘영화정책 5년 평가’ 포럼(1.22)을 개최하는 등 소동 부재·제재 강화 등 정부의 영화정책 비판 활동을 강화하며 조직 단합 모색
	영화감독조합 대표 : 이준익 감독	
	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 최은화 프로듀서	
	독립영화협회 회장 : 임창재 감독	

(2) 서울독립영화제2010, 4대강 사업 관련 작품 6편 상영

[그림-5] 서울독립영화제2010 포스터



(가) 서울독립영화제 개요

‘서울독립영화제’는 한 해 동안의 한국독립영화를 결산하는 국내 유일의 독립영화 경쟁영화제로서, 주제, 형식, 길이에 구분 없이 공모하여 우수작을 시상한다. 1975년 한국 청소년영화제의 전통을 계승한 영화제는 금관단편영화제와 한국독립단편영화제 등을 거쳐 1999년부터 현재와 같은 경쟁영화제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고 있다¹⁵⁾.

(나) 서울독립영화제2010, 4대강 관련작 상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문제를 비롯하여,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외압 등의 문제로 당시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낙마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독립영화 관련 이슈들이 계속되던 한 해였다.

사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독립영화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기록하는 영화를 제작하였고, 서울독립영화제2010에서는 ‘특별초청 : 4대강 프로젝트’ 라는 기획으로 4대강 관련 독립영화 6편을 초청 상영하였다.

[표-7] 서울독립영화제2010 특별초청 : 4대강 프로젝트 영화 목록

〈누군가의 직선에 대해 묻다〉 이갑철, 노순택, 이상엽 외 2010 Color 2010 6min59sec
〈강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 2010 Documentary Color DV 21min18sec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맹공이〉 박지선 2010 Documentary Color 11min
〈하늘정원에서의 일주일〉 권용협 2010 Documentary Color 10min14sec
〈강의 진실〉 문정현 2010 Documentary Color 23min
〈저수지의 개들〉 최진성 2010 기타 Color DV 11min

(3) 자료원, 서울독립영화제2010 개막식 장소 후원 승인과 철회

(가) 2010.11.10.자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 장소 후원 대관 요청 공문

김OO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당시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¹⁶⁾에서, 당시 영화

15)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 <http://siff.or.kr> ‘영화제역사’ 참조

제는 예년과 달리 영진위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여서 자체 예산과 민간의 후원만으로 영화제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개막식 장소 후원 대관을 자료원 측에 공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림-6] 서울독립영화제2010 집행위원회가 한국영상자료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일부



위 공문에서 확인되듯이, 서울독립영화제2010 집행위원회는 2010. 11. 10.자로 한국영상자료원장 수신으로 하여 장소 후원 대관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자료원은 후원 요청을 승인하였다. 2010.11.19.자 연합뉴스 보도(17)에도 개막식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다는 사실과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작품 6편이 상영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 한해 나온 한국 독립영화를 아우르는 경쟁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2010'이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마포구 상암CGV에서 열린다. ... **개막식은 9일 오후 7시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배우 권해효와 방송인 류시현의 사회로 열린다. ... 특히 특별초청 부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작품 6편을 모았다.**

16) 조사보고 '서울독립영화제 김OO 진술청취 및 자료입수 보고' (2018. 5. 23.)

17) 연합뉴스, 「서울독립영화제 2010' 내달 9일 개막」 (2010. 11. 19.)

(나) 자료원의 후원철회와 대관행사로 변경 요청

그러나 후원대관을 승인한 자료원은 갑자기 상영작 줄거리까지 포함한 작품리스트를 요청하였고, 결국 후원 철회를 결정하였다. 당시 해당 사업 담당자였던 자료원 전 직원 모은영은 “서울독립영화제가 4대강 영화를 상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후에, 뒷선에서 원장한테 직접 전화 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결국, 이 문제로 자료원은 장소 대관 후원을 취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독립영화제 김OO은 “자료원은 서울독립영화제 측에 홈페이지와 홍보인쇄물에 한국영상자료원 후원 명기를 빼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독립영화제 측은 결국 2010. 11. 29.자로 ‘서울독립영화제2010 후원 철회의 건’의 공문¹⁸⁾을 자료원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서울독립영화제 측이 자료원에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귀 원의 후원을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영화제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후 자료원은 후원철회 대신에 서울독립영화제를 본떠 시설사용승인을 받아 행사장소를 대관토록하여 개막작을 상영하였다.

특정 영화 상영을 이유로 한 자료원의 후원철회에 대하여 위 김OO은 “자료원의 후원 철회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 자료원 직원들은 이후 상영작을 선정하는데 조심스러워지고, ‘4대강 관련 영화는 틀면 안되겠구나’ 하는 자기 검열로도 작동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예술인의 입장에서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서울독립영화제는 당시 외부적 지원도 끊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후원 철회는 개별작품에 대한 ‘검열’은 아니었으나, 광의의 의미에서는 ‘검열’로 받아들여졌다¹⁹⁾”고 밝혔다.

3.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이사 선임 부당 개입

2013. 2.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좌파 중심의 문화예술계를 건전한 우파세력으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하고, 좌파 문화세력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뿌리 뽑기’를 통해 ‘문화융성’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였다²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영진위 등 산하기관의 ‘좌성향’ 인물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우

18) 서울독립영화제가 한국영상자료원에 보낸 공문, ‘서울독립영화제2010 후원 대관 철회의 건’ (2010.11.29.)

19) 조사보고 ‘서울독립영화제 김OO 진술청취 및 자료입수 보고’ (2018. 5. 23.)

20) 박근혜 정부 국정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013. 3.)

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4. 10.경 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8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조가 하달되었으며,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영화계 인사들의 배제가 실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비판적 인사,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영화인을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토되었으며, 소속 공공기관인 자료원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문체부와 자료원 직원, 그리고 비상임이사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원 이사 선임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자료원 임원 선임에 대한 관련 근거 및 절차

자료원 임원 선임은 자료원의 정관에 근거한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난 2016. 3. 정관이 개정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2014. 비상임 이사 선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 3. 정관 개정 전, 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은 ‘문화예술계로부터 자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원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료원은 비상임 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영화 관련 공공기관 및 한국영화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민간단체에 비상임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을 받는다. 자료원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된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의 결격사유를 조 회²¹⁾한 후, 자료원장은 추천된 인사 중 비상임 이사 대상자 임명 제청을 올리면 문체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자료원 비상임 이사를 임명한다.

관련 근거 및 이사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표-8]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2016. 3. 정관 개정 전)

제5조(임원) ① 자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8인 이내 3.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 중에 부원장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③ 이사는 문화예술계로부터 자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원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임기) ①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표-9]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절차 (2016. 3. 정관 개정 전)

순서	추진 절차
1	한국영상자료원 이사(비상임) 추천 요청 - 추천 대상자 : 관련 기관/단체 - 추천 인원 : 기관 당 3인 이내 - 추천 기준 : 자료원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 기관/단체 추천 접수 결과 보고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임명 제청
4	신임 이사 신원조회(문화체육관광부)
5	장관 임명

나. 자료원 이사 선임 관련 정부의 개입 및 블랙리스트 실행**(1) 2009년부터 시작된 자료원 이사 선임에 대한 정부의 개입****(가) 자료원 직원 000 진술²²⁾**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원 경영기획부에서 예산/기획, 대정부 업무, 이사회, 규정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000은 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추천 과정에서 문체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4년 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부터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원래 자료원의 이사가 총 7인인데, 2009.경 문체부의 주도로 1인이 추가되어 총 8인으로 이사 인원이 증원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 중간에 증원된 1명의 이사는 임00(임기 10.1.6~13.1.5)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원의 정관을 개

22) 000 진술조서(2018. 1. 26.)

정하는 등의 규정 개편 작업이 있었다. 자료원이 규모가 작은 조직인데, 이사 중 한명을 부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문체부가 원하는 임 OO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의혹이 있다.”

(나) 자료원 전 원장 조선희 진술²³⁾

조선희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 자료원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당시 신재민 문체부 차관이 영상자료원에 원래 없었던 부원장 직제를 새로이 만들었고, 기존 이사진 외에 신입 이사 1인(임OO, 당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을 추천하여 부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신 차관은 명함 좀 만들어주라는 취지였고, 임OO 부원장은 신재민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자료원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2009. 12. 30. 내부결재 문서 「비상임 이사 대상자 각 단체 추천 결과 보고」의 붙임문서에 (사)비상업영화기구²⁴⁾에서 추천한 임 OO 포함 총 14명의 추천인의 대상자가 명기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에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로 보낸 자료원의 공문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임명 제청」(2009. 12. 30.) 문서에는 ‘비상임 이사 1인 증원에 따라 임OO을 자료원 비상임 이사로 임명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 OOO은 “2013.경 임OO 이사의 임기 만료로 인해 자료원에서는 ‘김OO²⁵⁾’의 임명 제청을 진행했지만, 문체부로부터 다른 분을 추천하라 해서, 이후 방OO, 정 OO, 김OO 등을 추천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 하였다.

23) 조사보고 ‘한국영상자료원 前 원장(조선희)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입수 보고’ (2018. 5. 18.)

24) 임OO을 추천한 (사)비상업영화기구는 2009. 9. 24. 사단법인 등록을 한 당시로서는 신생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조사 결과, (사)비상업영화기구가 영상미디어센터 공모과정에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5) 추천 당시, 김OO의 주요경력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APM 전문위원, (사)여성영화인모임 이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이었다.

(2) 2014.8~2015.1 자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과정 (1차)

(가) 자료원의 1차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 추천 (2014. 9. 3.)

자료원은 비상임 이사 임기 만료('11.10.14.~'14.10.13, 3년)에 따라 신임 비상임 이사 선임을 위하여 영진위 등 14개 기관 및 단체에서 총 27명(남 19명, 여 8명)을 추천받았다. 다음의 자료는 당시 한국영상자료원이 이사 후보 대상자 추천 결과 보고이며, 이는 가장 초기의 추천 결과이다. 이후 이 추천 명단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의 조율 등을 통해 추천 대상자 일부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림-기]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 추천 결과 보고(2014. 9. 3.)

영화와 함께 한 40년, 기록에서 역사로 그리고 미래로

한국영상자료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 추천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요청(경영기획부-9108, 2014.8.13)
-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요청(경영기획부-9594, 2014.8.26)

2. 위와 관련, 비상임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비상임 이사 선임을 위한 각 기관 및 단체 후보 대상자 추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추천대상자 접수 기간 : 2014. 8. 13(수) ~ 9. 1(월)

나. 추천 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개 기관 및 단체(※ 총 19개 기관 및 단체에 추천 요청)

다. 후보대상자 추천 현황 : 총 27명(남 19명, 여 8명)

- 추천 세부 내용 '붙임' 참조

라. 향후 추진 사항

-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의 경력사유 조회 실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경력사유))
- 비상임 이사 대상자 임명 제형
- 신임 이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붙임 :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후보자 추천 현황 1부. 끝.

[표-9]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후보자 추천 현황(2014. 9. 3.)

순번	추천 요청 기관 및 단체명	추천인원	추천 대상자	비고
1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OO(여)(명필름 대표) • 권OO((주)시네라픽쳐스 대표) 	
2	(사)여성영화인모임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OO(여)(영화감독) • 권OO(여)(중부대 연극영화(방송연예)학과 교수) 	
3	한국영화학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OO(건국대 영화학과 교수) • 김OO(영화평론가) 	
4	(사)한국영화감독협회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OO(영화감독,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교수) • 고OO(답십리 영화문화 보존회 집행위원장) • 엄OO(영화감독) 	
5	한국영화감독조합	-		
6	(사)한국영화배우협회	-		
7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OO(영화촬영감독, 한국영상대 교수) 	
8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OO((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 	
9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인협회)	-		
10	(사)영화인회의	-		
11	한국영화평론가협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OO((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총무이사) 	
12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OO(경성대 영화학과 교수) 	
13	한국영화기자협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OO(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 전OO(머니투데이 영화팀장) 	
14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OO(여)(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5	한국기록관리학회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OO(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 O(전북대 기록관리학대학원 조교수) • 이OO(한성대 지식정보학부 조교수) 	
16	한국문헌정보학회	-		
17	영화진흥위원회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OO(대진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 김OO(한예중 영상원 영화촬영전공 교수) • 김OO(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영상대학원장)) 	
18	영상물등급위원회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OO(여)(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 실장) • 변OO(여)(순천향대 영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전OO((주)스폰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대표) • 강OO(여)(예술 대안학교 “브릿지스쿨” 이사) 	
19	한국극예술학회	1명	1. 박OO(여)(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학부 부교수)	
계		27명	남 19명 / 여 8명	

당시 자료원에서 이사 선임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 경영기획부장 조OO은 “2014년 10월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임원 추천 요청을 하였으며, 9월 경 취합된 추천 명단을 가지고 문체부와 임명 제청 명단에 대해 협의하였다. 몇 차례에 걸쳐 임명 제청 명단 후보를 전달하였으나 임기 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⁶⁾.

(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인수인계서 (2014. 10. 15)

2014. 10. 15.자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정OO 과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작성된 업무인수인계서²⁷⁾의 내용 중, ‘Ⅱ. 주요업무(현안포함)’에 ‘5.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영화관련 단체 등 추천 후보 27명’, ‘상기 단체 추천인사 이외에 적임자 발굴 추천 검토’하여 2014년 10월 말 이사 임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료원 이사의 임기는 2014. 10. 13. 자로 만료되었고, 이사 선임 절차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대해 정OO 과장은 “2014. 10. 15.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 발령 받은 후에 당시 영진위, 영등위 사안이 급해서²⁸⁾ 더 집중을 했었고, 자료원 이사선임 문제는 인수인계서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바로 추진은 안하고, 2015. 1.경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⁹⁾

(다) 2014. 9.경 자료원의 1차 추천 이후 2015. 1.경 문체부 주무부서인 영상콘텐츠산업과와의 인선 조율 과정에서는 아직 블랙리스트 관련 배제 지시 등이 본격적으로 하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료원 직원 OOO은 “문체부에서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의견 및 외부평가 부분까지 포함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외부 평가에는 건전 보수 등 정치성향 및 남편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명시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26) 조OO 진술조서(2018. 1. 8.)

2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인수인계서 (2014. 10. 15)

28)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는 2014. 10.경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29) 정OO 진술 녹취 (2018. 5. 23.)

(3) 이사 추천 후보자 중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

(가) 2015. 1. 21. 문체부,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 계획’ 보고

이 문건(그림 8)은 영상콘텐츠산업과 명의의 보고 문건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선임방안에 대한 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성시점이 2015. 1. 21.자로 되어 있는데, 윤OO 사무관이 만든 초안자료를 후임자인 손OO 사무관이 보고한 문건이다.

(나) 문체부 사무관 윤OO의 진술³⁰⁾

위 문건에 대하여 문체부 사무관 윤OO은 “2015. 1.경 제가 한국영상자료원의 추천대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 계획’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놓고 문화산업정책과로 자리를 옮겼는데(2015. 1. 19.경), 후임자인 손OO 사무관이 그 초안대로 보고를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정OO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부터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적격자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영문을 몰라서 ‘도대체 누가 문제인 것이냐 저는 영상자료원에서 올린 자료를 그대로 초안으로만 만들어놓고 나왔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특검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윤OO 진술조서 (2017. 2. 1.)

[그림-8]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작성,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 계획’(2015.1.21.)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 계획
'15. 1.21.(수) / 영상콘텐츠산업과

□ 선임 개요

- 대상 : 비상임 이사 총 8명 ('14.10.13. 임기 만료)
- 절차 : 대상자 추천(문화예술계) → 후보자 제청(자료원장) → 장관 임명
 - 문화예술계로부터 자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추천 받아 원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정관 제6조)
- 임기 : 3년 (연임 가능, 1년 단위 연임)
 - 별도 직무수행경비는 없으며, 이사회 참석 수당(25만 원) 지급

□ 현 임원현황 (임원 10명 : 원장, 감사, 비상임 이사 8인 이내)

직위	성명	주요경력	임기
원장	이○○	○전 조선일보 사진부 부장	'12. 9.25~'15. 9.24 (3년)
이사	안○○	○영화배우,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이사 : 8명> '11.10.14~'14.10.13(3년) * (정관7조)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 임기 3년, 연임 1년
이사	이○○	○(주)영화사 벅두대간 대표	
이사	이○○	○애니메이션 감독(마리아 이야기, 여우비 등)	
이사	조○○	○영동위 위원, 중앙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사	김○○	○용인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사	박○○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수석논설위원	
이사	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사	-	· 1명 공석('13.1.5임기 만료 후 후임 미선임)	
감사	홍○○	○전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14. 9. 3~'16. 9. 2(2년)

□ 이사 선임 방안

- (방향) 영상자료 수집·복원·활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검토범위) 성별을 고려해 비상임 이사 8인 교체
 - 업무연속성 및 내외부 평가 등을 고려, 현 이사 중 2인(안○○, 박○○) 연임 검토
 - 여성은 3인 이상(30%) 추천 검토

□ 향후일정

○ 적격자 후보군 선정, 인사검증 등	2015. 1월 중
○ 이사 임명	2015. 1월 중

(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³¹⁾

정OO 과장은 이 문건 작성 및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관련하여 운영지원과에서는 “최OO 보좌관³²⁾과 협의를 먼저 하라” 는 얘기가 있었다. 보고를 올린 후 최OO 보좌관 쪽에서 “누가 올렸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가 들어왔다. 최OO 보좌관 이외에도 당시 박OO 콘텐츠정책관도 “이 사람들 누가 찾아서 했느냐?” 고 얘기를 했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최OO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추천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정리한 자료를 최OO 보좌관에게 보냈다.”

(라) 이사 추천 후보 중 블랙리스트 대상자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료원 이사 추천 후보 중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부적격자’, 소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 ① 정OO 과장은 변OO, 심재명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가 문제가 되었는지는 위로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듣지 못했다. 제가 ‘누구 때문에 뭐가 문제냐?’고 물었을 때, 박OO 국장과 최OO 보좌관 모두 ‘변OO’을 거론한 것으로 기억한다.³³⁾ ‘심재명’은 진보적인 성향을 내니까 해당이 되었고, 다른 분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저도 영화 쪽을 맡은 것이 당시 처음이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³⁴⁾
- ② 전체 추천 명단 27인 중, 위원회가 기 확보한 블랙리스트 문건 등에 기재된 인물은 5명(김시무, 김태용, 심재명, 이미연, 전영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2015. 5. 1.)에만 이름을 올린 이미연 감독은 이사 추천 시기(2014.9.)가 시국선언 시기(2015. 5. 1.)보다 앞선다.

31) 정OO 진술 녹취 (2018. 5. 23.)

32) 최OO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었으며, 이사 선임과 같은 인물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33) 최OO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실이 없다고 함(2018. 11. 6. 이의신청)

34) 이에 대해 박OO과 최OO은 ‘어떤 인물들이 부적절하다고 장관이 판단했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부적절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표-10] 이사 추천 후보자 중 블랙리스트 문건 등재 현황

이름	블랙리스트 문건 출처
김시무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2012.11.20.) -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강성성향)
김태용	- 박근혜 정부 국정원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2014. 6. 3.)
심재명	- 박근혜 정부 국정원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2015. 5. 1)
이미연	-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2015. 5. 1)
전영문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 ③ 자료원 직원 000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 변재란, 김태용, 심재명 등을 추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체부에서 김 00, 신00 2인을 추천 후보자에 넣어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김00, 신0035)는 모두 영진위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료원 이사 추천 후보자가 되었다.
- ④ 이사 추천 후보자였던 변00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철학과 맞지 않은 인물로 본인 이 지목된 배경에 대하여, “제가 당시에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후원을 하는 활동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제 이름이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진위 위원도 했었고, 2013년까지는 영진위 다양성소위 위원장이었다. 지속적으로 심사에도 참여해 왔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로 영진위 심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비상임 이사 선임 시 국정원 인사 검증 관련

(가) 이사 추천 후보자 변00의 진술³⁶⁾

1차(2014. 9.)에서 자료원 이사로 추천된 변00은 국정원으로부터 신원검증 관련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위원회 조사에서 밝혔다. “충남 쪽 국정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 별다른 내용을 묻지는 않았고,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했다. 순천향대 교수가 맞는지, 어디에서 추천을 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물어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다. 그 전에 자료원 이사 임명될 때에는 국정원 확인 전

35) 김00, 신00는 블랙리스트 실행이 확인된 영진위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에 각각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때 심사에서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산다>, <불온한 당신>이 탈락하였다.

36) 조사보고 '2014. 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관련 변재란 진술청취 보고' (2018. 5. 25.)

화를 받은 적 없었다. 자료원에서 요청해서 이사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 선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국정원 IO 조OO 진술³⁷⁾

2011.경부터 문체부를 담당하였던 국정원 IO 조OO은 문체부가 의뢰하는 신원조회 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체부는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기도 하고, 문체부 산하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의뢰한다.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 요청을 간헐적으로 요구받기는 했는데, 2014. 하반기경부터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 요청의 빈도가 증가되었다. 문체부와 관련된 사업의 심의위원이나 각종 위원들에 대한 신원검증을 요구할 때도 있었고, 국정원에서 검증하는 것들이 다양하다. 심지어는 비상임이사 이런 것들까지 내려온다.” 조OO은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의뢰하는 신원 검증자들에 대해서 단체이적성, 반국가단체 여부, 대공용의점, 국가보안법 위반전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회신한다고 진술하였다.

(5) 자료원 이사 추천 문제로 인한 문체부 공무원 2인에 대한 징계 조치 등

(가)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³⁸⁾

이 문건(그림 9)은 2015. 2. 6. 작성된 운영지원과 명의를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OO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윤OO 사무관에 대하여 ‘영상자료원 등 소관 산하단체 지도·감독 미흡 및 산하단체 관련 업무추진(보고) 과정에서 내용의 객관성, 체계성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서면경고와 인사조치를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영상자료원 지도감독 미흡’이라는 것은 비상임 이사 추천 시 ‘부적격자’를 추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조OO 진술조서 (2017.1. 22.)

38) 특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OO 내부망 PC에서 발견된 「단체징계 0206.hwp」 파일. 작성일자 :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관련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 보고 (2017. 1. 30.)

(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³⁹⁾

위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정OO 과장은 “자료원 비상임 이사는 1년에 이사회에 2~3회 참여해서 의결하는 역할인데, 이런 비상임 이사까지 문제를 삼는다는 것에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문체부 사무관 윤OO의 진술

- ① 윤OO 사무관은 2014. 10.경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과 상영을 막지 못한 점, 영화 <불안한 외출> 상영을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징계(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⁴⁰⁾.
- ② 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징계조치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임한 이후에 본격화된 것으로 기억한다. 자료원 비상임 이사 임명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압력이 있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영화계에 대한 압력이 청와대 등에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⁴¹⁾.

39) 정OO 진술 녹취 (2018. 5. 23.)

40)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윤OO 진술조서 (2017. 2. 1.)

41) 윤OO 진술조서 (2017. 9. 22)

[그림-9] 문체부 운영지원과 작성,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2015. 2. 6.)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2015. 2. 6(금) / 운영지원과(인사, 교육)

영상분야, 예술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여 정책품질의 저하 및 불필요한 혼선(불신)을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 (장관님 지시사항, 1월 말)

□ 개요(대상부서 및 사유)

해당부서	주요 사유	비고
영상콘텐츠산업과	○ 영상자료원 등 소관 산하단체 지도감독 미흡 ○ 산하단체 관련 업무추진(보고) 과정에서 내용의 객관성, 체계성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 초래	정○○ (4) 윤○○ (5)
예술정책과	○ 예술인복지재단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책(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	강○○ (5)
공연전통예술과	○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료 오기 등 행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	이○○ (5)

□ 조치 계획(검토)

-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 조치 시기: 2015. 2월 둘째주
- 조치 내용
 - ① 정 ○○ (영상콘텐츠산업과장)¹⁾: 서면 경고 *인사조치는 별도 검토
 - ② 윤○○ (5급, 문화산업정책과): 서면 경고, 인사 조치(3월)
 - ③ 강○○ (5급, 예술정책과): 서면 경고
 - ④ 이○○ (5급, 공연전통예술과): 서면 경고

※ 소홀한 업무수행으로 혼선을 초래한 기관(영상자료원)에 대해서는 콘텐츠실장 주재로 ▲특별 기관업무보고 조치 ▲해당 기관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즉시)

1)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전문관으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3년간 전보 제한(보직일: 2014.10.15.)

(라)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김OO의 사실확인⁴²⁾

당시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OO은 ‘정OO, 윤OO 등의 징계 지시’와 관련하여,

- ① “상기 인사들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당시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위 인사들이 문제가 있으니 징계 내지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명백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를 밝기가 곤란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거명한 일부 인사에 대해 현재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 ② “정OO 과장의 경우에는 전문관 직위로서 전보제한 기간⁴³⁾으로 인하여 전보인사에 제약이 있는 점, 그리고 윤OO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논란이 되었던)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타 부서(문화산업정책과)로 전보가 되었으므로 또 다시 전보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말씀드려, 별도의 추가 인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자료원에 대한 후속 조치

위 ‘조치계획’ 문건 하단에 ‘소홀한 업무 수행으로 혼선을 초래한 기관(영상자료원)에 대해서는 콘텐츠실장 주재로 특별 기관업무보고 조치, 해당 기관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이 실제 이행되었는지는 여부에 대해서,

- ① 정OO 과장은 “징계조치 논란 이후에 이쪽에서도 뭔가 하는 모양새를 내야했다. 당시 분위기가 국정 철학을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분위기였다. 산하기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윤OO 콘텐츠산업실장과 박OO 국장(콘텐츠정책관)이 참석하여 자료원 원장,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사 선인 문제로 과장하고 사무관들이 징계 대상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사 추천 할 때 신경 써서 해라’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42) 김OO 사실확인서 (2018. 3. 9.)

43) 정OO 과장 전보제한 기간 관련하여,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전문관으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3년간 전보 제한(보직일 2014.10.15.)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보고(문체부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문건 관련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 ② 당시 자료원 경영기획부장 조OO⁴⁴⁾은 “2015. 3. 6.경 문체부 콘텐츠실장이 자료원 원장과 국장을 면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면담 시 후보 추천 경위 및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3.경 경영기획부 부장에서 보존기술센터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 이사 추천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사업부서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그 발령이 꼭 비상임 이사 제청 건만이 반영된 발령은 아니라고 본다. 부장에서 센터장으로 이동은 수평이동이기에, 인사상 불이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 이사 선임 절차는 후임 부장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③ 2015. 3.경 자료원 보존기술센터장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김OO은 “당시 이사 추천 관련하여 문체부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고, 원장(이병훈)이나 국장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산하기관에 구두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장인 자신에게까지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없었고, 자료원에까지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었다. 자료원이 추천을 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당시 블랙리스트를 인지했으면 그 문제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추천이 안 됐다고 하면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자료원에서는 생각하게 된다. 그게 블랙리스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6) 2015.5~7. 자료원 비상임 이사 재추천 및 임명

(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⁴⁵⁾

정OO 과장은 1차 추천이 문제가 된 이후, ‘차라리 색깔이 없는 사람, 무색무취 이런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콘진원 등 기관 추천을 받아 이사 추천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44) 조OO 진술조서 (2018. 1. 8)

45) 정OO 진술녹취 (2018. 5. 23.)

(나) 자료원 경영기획부장 김OO의 진술⁴⁶⁾

위 김OO은 비상임 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2차, 3차에 걸쳐서 추가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비상임 이사 후보자를) 3차까지 추천을 했다. 자료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추론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재추천을 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에서 경영기획 부장인 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당시에 전 원장(이병훈)이 누구를 추천할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

(다)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임명 결과 (2015. 7. 13. 최종 임명)

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1차 추천이 완료된 2014. 9.경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5. 7. 13. 문체부는 비상임 이사 8명(연임 1명, 초임 7명)을 최종 임명⁴⁷⁾하고, 2015. 7. 14. 한국영상자료원장에게 비상임 이사 임명을 통지⁴⁸⁾하였다. 최종 임명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

[표-11]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현황

성명	성별	주요 경력	비고	추천시기	임기
안OO	남	영화배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연임	1차	
신OO	남	대진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초임	1차	
김OO	남	〈연평해전〉 감독,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	〃	1차	
한OO	남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3차	2015.7.15.
김OO	남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1차	~
김OO	남	영상물등급위 비디오소위원회 위원	〃	2차	2018.7.14
박OO	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2차	
김OO	여	연합뉴스 논설위원	〃	1차	

신OO, 김OO, 김OO은 모두 1차(2014. 9. 3.) 비상임 이사 후보 대상자로서 영진위의 추천을 받았으며⁴⁹⁾, 김OO 역시 1차 후보 대상자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이었다. 김OO과 박OO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추천으로 2차(2015. 5. 8.) 추천 대상자였으며, 한

46) 김OO 진술녹취 (2018. 1. 9.)

4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임명’ 내부결재 문서 (2015. 7. 13.)

4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임명 통지’ 공문(수신:한국영상자료원장) (2015. 7. 14.)

49) ‘표 9’ 자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현황’에 따르면, 1차 이사 추천을 한 단체는 모두 19개였으나, 최종적으로 영진위가 추천한 3인이 이사로 임명되었다.

OO은 3차(2015. 6. 26)에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2015. 7. 15.자로 자료원 이사로 임명되었다.

다. 이사 선임 관련 자료원 정관 개정의 문제

(1) 자료원 정관 개정 과정

(가) 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 개최

[그림-10] 한국영상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16. 2. 24)

제80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2016. 2. 24(수) 11:00 ~ 12:00

2. 장 소: 한국영상자료원 4층 회의실

○ **안건번호 제183호: 정관 개정(안)**

- 의 장: 두번째 상정안건으로 안건번호 제183호 “정관 개정(안)” 건을 상정함. 상정 내용에 대해 경영기획부장이 제안 설명해주 시기 바람.
- 경영기획부장: 비상임이사 임명절차의 효율화 및 기본재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항 개선을 위해 안건을 제안하였음.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는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원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해당 절차 진행으로 지난해 이사 선임이 약 10개월간 지연된 바가 있어, 타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두 번째로 파주보존센터

자료원은 2016. 2. 24.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임 이사 임명절차 효율화’를 위한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개정 사유로는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는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원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해당 절차 진행으로 지난해 이사 선임이 약 10개월간 지연된 바가 있어, 타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⁵⁰⁾으로 되어 있다. 회의록 확인 결과, 이 안건에 대한 이견 없이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비상임이사 추천 조항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문체부, 정관 개정 승인 통보 (2016. 3. 2.)

2016. 3. 2.자로 문체부는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개정 승인⁵¹⁾을 통보하였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자료원이 승인 요청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문체부는 2016. 3. 2.자로 ‘원안대로 승인하니 관련 법령에 따라 원활한 자료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승인 통보하였다.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 변경 관련하여 정관 신규 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표-12]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신규 조문 대비표 (2016. 3. 2.)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의 임면) 원장, 감사 및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되, <u>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u>	제6조(임원의 임면) ----- -----, 원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① 원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① < 삭제 >
② 감사는 자료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 삭제 >
③ 이사는 문화예술계로부터 자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원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 삭제 >

(2) 관련자 진술

(가) ‘비상임 이사 임명절차 효율화에 따른 조치’라는 의견

- ① 자료원 경영기획부장 김OO은 제80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관 개정의 배경을 ‘임명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재단법인 시절의 정관이 그

50) 한국영상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16. 2. 24.)

5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정관 개정 승인 통보’ 공문 (수신:한국영상자료원장) (2016. 3. 2.)

대로 현재의 정관으로 이어졌다. ‘이사는 문화예술계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원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조항만 보면 자료원이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자료원에서 이사를 추천을 하고 싶어도 다른 문화예술계 협회나 단체로부터 무조건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문화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되니 추천조항을 빼자는 논의가 있었다.” 라고 하며 정관 개정과 블랙리스트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⁵²⁾.

- ② 자료원 사무국장 노OO⁵³⁾은 ‘절차가 복잡하여, 이사 선임절차가 지연되었다’라는 개정 사유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추천 과정을 통하면 현실적으로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⁵⁴⁾.

(나)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

- ① 자료원 직원 조OO⁵⁵⁾은 “(임원 임명 시) 영화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자료원이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문체부 장관에 의해 임명하게 되도록 규정이 변경된 이슈가 이와(블랙리스트)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② 자료원 직원 OOO⁵⁶⁾은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이 외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과 같은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자료원의 정관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자료원이 원하고 희망하는 인사의 경우, 관계가 좋은 단체에게 추천을 미리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문체부에서 원하는 인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문체부 추천 인사를 다시 외부 단체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이를 거부하는 단체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가 원하는 인사 임명이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 ③ 정관개정 배경에 대해 자료원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문체

52) 김OO 진술녹취 (2018. 1. 9.)

53) 노OO은 문체부에서 뉴욕, 파리 한국문화원장을 역임하였고, 퇴직 후 2016. 1.부터 현재까지 자료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54) 노OO 진술조서 (2018. 2. 2.)

55) 조OO 진술조서 (2018. 1. 8.)

56) OOO 진술조서 (2018. 1. 26.)

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⁵⁷⁾에게 2016. 3. 정관개정이 이사 선임 시, 블랙리스트 배제를 위한 조치였는지 질문하였고, 정OO 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문화예술계의 추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정관을 고친 것으로 기억을 한다. 문체부와 자료원이 협의하면서 임명권자는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으로 가자, 여러 사전 단계를 밟다 보니까 인선이 늦어지는 점도 있었고... 임명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관 변경으로 간 것이다. 그 당시 이렇게 사단이 나고 최OO 보좌관과 김종덕 장관이 담당자들 징계 지시 내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관은 그대로 두었을 것이다.”

4.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상영 검열

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영화 프로그램 검열 및 영화인 배제

(1) 프랑스 포럼데지마주(Forum des Images)⁵⁸⁾ 한국영화 특별전

(가) 포럼데지마주 <매혹의 서울, SEOUL HYPNOTIQUE> 사업 개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파리 ‘포럼 데지마주’ 기획으로 한국과 서울의 다양한 풍광을 담은 대표적인 한국영화 76편을 프랑스 관객에게 상영하는 행사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하는 시립영상문화센터인 ‘포럼 데지마주’와 한국의 공공아카이브인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업 및 예산 분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상영일정은 2015. 9. 15~11. 1.이며, 프랑스 파리 포럼데지마주에서 상영되었다.

처음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참여하여 <서울과 부산의 초상>(가제)으로 기획되었으나, 2014.10.경 <다이빙벨> 상영 문제로 인하여 부산국제영화제가 기획단계에서 빠지면서, 자료원이 위 행사의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행사명은 총 3차례 변경되는데, 1차는 <서울 묘사: 한국의 도시, 한국의 얼굴>, 2차 <최면에 빠진 서울>, 최종적으로 <매혹의 서울, SEOUL HYPNOTIQUE>로 확정되었다.

57) 정OO 진술녹취 (2018. 5. 23.)

58) 파리지에서 운영하는 시립영상문화센터. 파리의 중심부에서 영화 및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5개 상영관이 있으며 매해, ‘도시의 초상들’이라는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된다. www.forumdesimages.fr

(나) 자료원의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참여

- ① 자료원 시네마테크부장 박OO은 자료원과 포럼데지마주의 공동기획 행사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매혹의 서울>행사 관련하여 초기에 해외문화홍보원(세종시)에 모은영 프로그래머와 함께 1회 방문하여 (문체부와외) 업무협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자료원에서는 모은영, 정OO 2명의 프로그래머를 투입해서 포럼 측과 행사를 진행하고, 실무는 외주사를 통해 이OO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⁵⁹⁾.
- ② 해외문화홍보원,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과 협력하여 프랑스 포럼데지마주에서 해당 기획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자료원 프로그래머 모은영⁶⁰⁾은 당시 자료원이 행사 주관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래 이 사업은 포럼데지마주와 부산의 공동기획이었지만, <다이빙벨> 이슈로 부산이 빠지게 되면서 2014. 말경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자료원에 해당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이OO 프로그래머⁶¹⁾도 초기에 참여를 했었지만 후에 빠지게 되었다.”
- ③ 모은영과 함께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OO⁶²⁾는 “자료원은 한불수교 130주년 사업 관련 <임권택 회고전>, <매혹의 서울> 두 사업이 있었다. 초기에는 모은영 과장이 진행을 담당했는데,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된 규모가 큰 사업이라 내가 도움의 형태로 참여하였고, 이후 <매혹의 서울>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5. 1.경 프랑스 포럼데지마주 측에서 방문하여 상영작을 선정했기에 한국에서는 수급작의 해외 상영권 확보, 상영료 지급, 프린트 수급 및 전달 등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포럼데지마주 사업에서 문제영화 및 영화인 배제 지시

(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2015. 6. 10.)

2015. 6.경,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소영 비서관이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현황을 보고할 것을 문체부에 지시하였고, 당시 박OO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담당 직원에게 공모

59) 박OO 진술조서 (2018. 1. 30.)

60) 모은영 진술조서 (2018. 2. 12.)

6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영화분야 전문위원

62) 정OO 진술조서 (2018. 1. 31.)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2015년 6월 10일 청와대 김소영 비서관에게 위의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문건을 대면 보고하였다⁶³⁾.

위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미 결과 발표가 완료된 ‘제1차 공모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배제) 조치계획 및 지원 철회 내용을 담은 조치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세 번째 항목의 ‘서울과 부산의 초상(영화)-주관 : 프랑스 포럼데이마주’에는 조치계획으로 ‘영화 제외, 감독 및 게스트 초청 항공료를 기타항목으로 지원’, 조치결과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토록 프랑스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11] 문체부 작성,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일부 (2015. 6. 10.)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15. 6. 10(수) / 해외문화홍보사업과

□ 조치계획

[제1차 공모 사업(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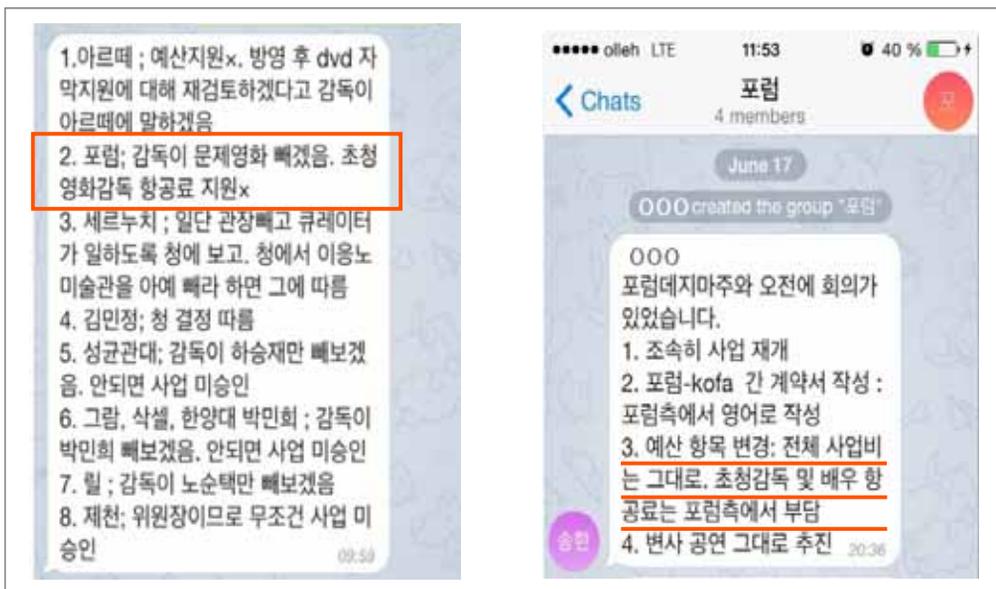
사업명	조치계획	조치결과	
3. "이용노, 이우환 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 주관 : 프랑스 세르누치 박물관	관장 1인에 대한 출장비 지원 철회, 큐레이터 1인 출장비 및 작품 운송비 그대로 교부	○ 관장에 대한 출장비 지원 철회 ○ 동 사업관련 모든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는 "이용노미술관"이 아닌 조직위의 이름으로 배포되어야 함	
4. "아르떼 TV 다큐멘터리" 주관 : 프랑스 아르떼 TV	방영 이후 문제가 없을시 예산 교부	해당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15.9월 혹은 '16.3월)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서울과 부산의 초상(영화)" 주관 : 프랑스 포럼데이마주	영화 제외, 감독 및 게스트 초청 항공료를 기타항목으로 지원	해당 내용을 제외토록 프랑스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음	
5. "프랑스에서 본 한국 영화" 주관 : 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당초 결정에 따라 진행	사업 참가자	
"G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 주관 : 한양대 전자음악연구소			
6. "현대음악극 공동 창작" 주관 : 프랑스 국립창작음악연구소			
7. "넥스트 축제 외 프랑스 투어" 주관 : 한국 무브먼트 담당			주목도가 낮은 사업인데 반해 철회시 주관기관의 반발이 우려됨
"콘크리트 오페라" 주관 : 한국 킹퀸갤러리			예산 교부가 완료됨('15.5.6)

63) 박OO 진술조서 (2018. 4. 19.)

(나)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를 담은 문자메시지(해외문화홍보원-예술경영지원센터)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담당하였던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000⁶⁴)와 예술경영지원센터 V⁶⁵)의 진술 및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배제 지시 등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실무자들 간 공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아래 그림은 해외문화홍보원 000가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문자이다.

[그림-12]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수신일 : ①좌 2015. 6. 4. / ②우 2015. 6. 17.)



① 2015. 6. 4. 문자 : 당시 한-불 상호교류의 해 2차 공모 발표와 프랑스 측과 선정사업리스트를 공유하는 3차 공동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제사업 재검토 및 배제 조치 지시가 내려온 것을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에 관련 지시를 공유한 것이다. 2015. 6. 4. 문자 내용 중 ‘포럼데지마주’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포럼; 감독이 문제영화 빼겠음.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x’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감독은 당시 한불 사업 프로그램 총괄 및 프

64) 000 진술조서 (2018. 1. 29.)

65) V 진술서 (2018. 1. 22.)

랑스 측과 실무 협의를 맡았던 최OO 예술감독이다. 청와대로부터 배제지시가 내려온 문제영화에 대하여 최OO 예술감독이 프랑스 측과 협의하여 빼겠다는 의미이며, 초청 영화감독 중 블랙리스트 대상에게는 항공료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 ② 2015. 6. 17. 문자 : 2015. 6. 12~22, 최OO 예술감독과 해외문화홍보원 담당자들이 3차 한-불 공동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출장 중, OOO 주무관이 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서 포럼데지마주와의 회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조속히 사업 재개 2. 포럼-kofa 간 계약서 작성 3. 예산 항목 변경 :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초청감독 및 배우 항공료는 포럼 측에서 부담 4. 변사 공연 그대로 추진'. 당시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앞서 '현황보고' 문건(그림 11)과 위 '문자'(그림 12)에서 확인되듯, 블랙리스트에 오른 초청감독 또는 배우의 항공료를 한국 측이 아닌 포럼 측에서 부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3) 문제영화 검열 및 블랙리스트 영화인 배제 실행

(가) '포럼데지마주' 문제영화 및 블랙리스트 영화인

- 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최OO⁶⁶⁾는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문제영화 목록에 대하여 "그때 그 사람들, 변호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상계동 올림픽 등이 있었다"라고 하고,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 X'에 해당하는 한국 영화감독들에 대하여 "감독 뿐 아니라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도 포함되었다. 항공료는 프랑스 부담으로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최OO는 프랑스 측에는 <그때 그 사람들>의 경우, 부친에 대한 암살 트라우마가 있는 박대통령의 상황과 <변호인>의 경우 영화산업 투자자 CJ가 최근 한국에서 정치적인 작품을 내놓아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영화들은 필름 상태가 좋지 않아 상영이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②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OOO⁶⁷⁾ 또한 "그때 그 사람들, 변호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상계동 올림픽,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다섯 작품이 최종적으로 빠졌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 X'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서 직접 감독에

66) 최OO 진술조서 (2018. 1. 25.)

67) OOO 진술조서 (2018. 1. 29.)

게 지원하지 않고 대신 프랑스 측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된 것이다. 대신 프랑스 측이 부담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예산은 우리 쪽이 그에 상응하게 부담했을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감독 분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자료원 프로그래머 모은영⁶⁸)은 2015. 3. ~ 4.경 한불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박OO 시네마테크부장과 함께 세종시 해외문화홍보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회의 자리에서 특정 영화 배제 및 감독의 초청 배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국장과 사무관 그리고 OOO 주무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 특정 영화 배제 지시와 함께 이OOO, 봉OO 감독의 초청 배제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배제 사유로는 “봉OO 감독의 경우, 당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정부 관련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당시 이OOO 감독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비판 글을 썼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제 지시로 인하여 해외문화홍보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당시 해외문화홍보원은 프랑스 포럼테지마주 측이 결정한 상영 리스트에 대해서 특정 영화 배제와 영화감독 초청 배제 지시를 하였지만, 저는 자료원 입장에서 그 요구(프랑스 측이 결정한 프로그램 리스트 변경)에 응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68) 모은영 진술조서 (2018. 2. 12.)

(나) 2015. 1. 28. 포럼데지마주 측이 확정된 상영 프로그램 목록 (배제 실행 前)

[그림-13] 포럼데지마주 한국영화 특별전 초기 상영 리스트 중 일부 (2015. 1. 28.)

A	B	C	D	E	F	G	H
Titre avec article/제목	Titre original/제목	Réalisateurs et interprètes/감독, 배우	Cédant/유통권 소유자	date/날짜	durée/시간	support/매체	Notes rapides/비고
1							
2	Tears	눈물 de Im Sang-woo	Bom Film Productions (Seoul)	2000	105		KOFA 35mm vo
3	White Night	백야 de LeeSong Hee-Il	Cinemada1	2012	75		Berlinale 2013 vosta
4	Barking Dogs Never Bite	프릴다스피 개 de BONG Joon-ho	CJ Entertainment (Seoul)	2000	106		KOFA 35mm vo
5	Castaway on the moon	달서 표류기 de Lee Hae-young	CJ Entertainment (Seoul)	2008	116		KOFA 35mm vo
6	Night Flight	야간비행 de LeeSong Hee-Il	FINECUT (Corée du sud)	2013	134		
7	Sorum (Gooseflesh)	소름 de Yun Jong-shan	FINECUT (Corée du sud)	2001	109		KOFA 35mm vo
8	The Attorney	변호인 de Yang Woo-seok	FINECUT (Corée du sud)	2013	127		Berlinale vosta
9	The Journals of Musan	무산일기 de Park Jung-bum	FINECUT (Corée du sud)	2011	127		Deauville 2011
10	Mattis calmes à Séoul	무슨날까 de Hong Sang-woo	France - Acacias	2011	79	35mm	
11	Le jour où le cochon est tombé dans le puits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de Hong Sang-woo	France - ASC	1996	115	35mm	
12	La vierge mise à nu par ses pré tendants	오! 수줍 de Hong Sang-woo	France - ASC	2000	126		
13	Hard day	하드 데이 de Kim Seong-hun	France - BODEGA FILMS	2014	111		
14	Les corrompus	오열된 귀족들 de Im Kwon-taek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1982	112		CCC copie 52 vostf
15	Les Gens d'un bidonville	그림판나 사람들 de Bae Chang-ho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1982	110		CCC copie 55 vostf
16	Libera me	Libera me de Yang Yun-ho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2000	118		CCC copie 61 vostf
17	La petite balle lancée par un nain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de Lee Won-see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1981	100		CCC copie 20 vostf
18	La Femme est l'avenir de l'homme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de Hong Sang-woo	France - DIAPHANA	2004	88	35mm	
19	The Mother ????	마더 de Bong Joon-ho	France - DIAPHANA	2009	128	35mm	
20	Le dernier repas	마지막 반식 de Roh Gyeong-tae	France - ED DISTRIBUTION	2006	93	35mm	
21	The Chaser	추격자 de Na Hong-jin	France - HAUT ET COURT	2008	123	35mm	
22	Old Boy	올드 보이 de Park Chan-wook	France - LE PACTE	2003	120	35mm	
23	The Murderer	살인자 de Na Hong-jin	France - LE PACTE	2010	140	cinéma	
24	Sumi	수미, 순희 de Hong Sang-woo	France - Les Films du Camélia	2013	88		
25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명불시대 de Yoon Jong-bin	France - METROPOLITAN Filmexport	2012	133		
26	The Host	괴물 de Bong Joon-ho	France - OCEAN FILMS	2006	119		
27	The President's Last Bang	그대, 그사실들 de Im Sang-woo	France - Potamkine	2005	102		
28	Une femme coréenne	비행남 가족 de Im Sang-woo	France - Potamkine	2003	107		
29	La victime	희생일기 de Chang Yoon-Hyun	France - SND Groupe M6	1999	118		
30	The Foul King	반칙왕 de Kim Jee-woon	France - STUDIOCANAL	2000	112		
31	Breathless	올리브 de YANG Ik June	France - TADRART FILMS	2009			
32	Oasis	오아시스 de Lee Chang-dong	France - THEATRE DU TEMPLE	2002	132	35mm	
33	Green Fish	초록물고기 de Lee Chang-dong	France - WARNER BROS	1997	142		
34	The Last Day	마지막 de Yun Je-gyun	France - WILD SIDE FILMS	2009	116		
35	Conte de cinéma	영화 이야기 de Hong Sang-woo	France - DIAPHANA	2005	90	35mm	
36	A Single Spark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de Park Kwang-su avec Hong Kyeong-in, Moon Seong-Keun	KOFA	1995	96		KOFA 35mm vo
37	A Girl Who Looks Like the Sun	태양 같은 소녀 de Lee Man-hee	KOFA	1974			35mm vo + vhs
38	Beat	비트 de Kim Sung-woo	KOFA	1997	113		35mm vo + DVD
39	Black Hair	검은 머리 de Lee Man-hee	KOFA	1964	115		CP 2010 vostf + DCP KOFA VOSTA
40	Carrefour de la jeunesse (Crossroads of Youth-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Crossroads of youth de An Jong-hwa	KOFA	1934	73		Berlinale 2013, vosta
41	Barefooted young	발없는 아이들 de KIM Kee-Duk	KOFA	1964			KOFA 35mm vo
42	Chileu et Mansu	칠레와 만수 de Park Kwang-su	KOFA	1988	108		Festival de Vesoul 2011 - vostf
43	City of the Rising Sun	태양을 쫓아 de Kim Sung-su	KOFA	1998	100		35mm vo + DVD + VHS
44	Crocodile	악어 de Kim Ki-duk	KOFA	1996	102		35mm vo + vhs
45	La déclaration des imbéciles	바보선언 de Lee Jang-ho	KOFA	1983	97		KOFA - 35mm vo
46	Les enfants de l'obscurité	어둠의 자식들 de Lee Jang-ho	KOFA	1981	100	35mm	KOFA 35mm vo
47	Les fleurs de l'enfer	지옥꽃 de Shin Sang-ok	KOFA	1958	100		KOFA 35mm vo
48	I Will Be a King for the Day	오늘은 왕 de Kim Kee-duk	KOFA	1966	100	35mm	KOFA 35mm vo
49	Les jeux olympiques de Saanggye-dong	세계를 움직여 de Kim Dong-won	KOFA	1988	27		KOFA betanum vo
50	Le jour où le vent est bien venu	바람이 불어 오는 날 바람 불어 좋은 날 de Lee Jang-ho	KOFA	1980	113		KOFA DCP vo

포럼데지마주 측 유리엘 드레이퍼스(Muriel Dreyfus)가 자료원 프로그래머 모은영에게 보낸 이메일(2015. 1. 29.)에 첨부된 엑셀 문서(파일명 : 'Programme pour Mlle MO - Kofa, Portrait of Seoul at forum des images in Paris', 그림 13)는 파일 생성일이 2015. 1. 28.인 것으로 확인되며, 포럼데지마주 측이 확정된 초기 상영작 리스트이다. 이 엑셀 문서에는 총 77편의 영화 목록이 있으며, 위의 진술들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배제가 실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영화로 배제 대상에 오른 5편의 영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영화목록 8번에 <변호인>, 17번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7번에 <그때 그 사람들>, 36번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9번에 <상계동 올림픽> 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5. 9. 10. 자료원 내부결재 문서 중 '한불 사업 상영작 목록-최종' (배제 실행 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포럼데지마주 한국영화 특별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자료원 직원 모은영이 상신한 내부결재 문서 확인 결과, 행사의 명칭이 <매혹의 서울, SEOUL HYPNOTIQUE>로 확정되었고, 2015. 9. 15.~11. 1. 기간에 포럼데지마주(프랑스 파리, 500석)에서 상영되며, 상영작은 <오발탄> 등 76편 (세부내역 '붙임' 참조)임을 알 수 있다. '붙임'에 '상영작 목록' 문건에는 배제 지시가 있었던 영화 5편 중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40번에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4편(변호인, 그때 그 사람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상계동 올림픽)은 상영 목록에서 배제됨을 확인하였다.

[그림-14] 포럼데지마주 상영작 목록(최종) 중 일부 (2015. 9. 10.)

No.	제목	영어/프랑스어 제목	감독	제작년도	프랑스 기존 상영 여부
1	10분	10 minutes	이용승	2013	
2	개같은 날의 오후	A Hot Roof	이민용	1995	
3	경마장 가는 길	The Road to Race Track (Le chemin de l'hippodrome)	장선우	1991	
4	경희	Villa Triste	김희진	2012	
5	고양이를 부탁해	Take Care Of My Cat	정재은	2001	
35	생활의 발견	Turning Gate	홍상수	2002	
36	세이프	Safe	문병곤	2013	O
37	소름	Sorum (Gooseflesh)	윤종찬	2001	
38	쉬리	Nom de code : Shiri	강제규	1998	O
39	신의 한 수	The Divine move	조범구	2014	
40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A Single Spark	박광수	2005	
41	야간비행	Night Flight	이송희일	2014	
42	어둠의 자식들	Les enfants de l'obscurité	이장호	1981	

상영작 목록 선정과 관련하여 자료원 프로그래머 모은영⁶⁹⁾은 “자료원은 프랑스 포럼 데지마주 측하고 교부금 이슈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업무메일을 주고받았고, 해외문화홍보원이 프랑스 측과 프로그램 및 초청자에 대한 협의 후, 당시 결과 통보만 제게 전달했다. 2015. 6.경 해문원 측에서 직접 프랑스를 방문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초청자 배제 및 초청비 우회 지원

2015. 3.경 포럼데지마주 <서울과 부산의 초상>(초기 행사명) 기획 당시에는 초청 게스트로 ‘봉OO, 박OO, 임OO, 문OO, 이OOO’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초청 명

69) 모은영 진술조서 (2018. 2. 12.)

단에 이000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배제된 경위가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 ① 자료원 담당자 모은영은 “봉00 감독의 경우, 당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정부 관련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000 감독은 결국 초청이 되었는데, 이는 상영 영화에 대한 교부금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초청감독 비용은 프랑스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와 담당 부장이 세종시 해외문화홍보원 회의 방문 시, 해문원 측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와 영화감독에게 정부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발언과도 연결이 된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다. 한불 조직위 사무국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자료원이 제출한 해당사업의 예산 기획 및 교부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초청인 항공료 지급은 원래 한국 측 부담이었으나, 청와대 배제 지시 하달 후 프랑스 측 부담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정산보고서에도 영화감독에 대한 항공비 지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② 전 프랑스한국문화원장 직무대리, 현재 자료원 사무국장인 노0070)은 “특정영화 및 초청 감독 배제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며, 본인이 프랑스한국문화원장 직무대리로 부임했을 때에는 “한불수교 130주년 행사 관련해서 사업이 거의 홍보물 인쇄 직전의 준비 마감 단계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전임 원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당시 해외문화홍보원장 박0071)은 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며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 X’에 대하여 “예산항목을 바꾸도록 했을 텐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지원금 교부 지연 등의 문제

① 포럼테지마주 대표 ‘000 00000’의 이메일

2015. 8. 19.경 000 00000는 ‘Pb politique(정치적 문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최00 예술감독과 Institutfrançais(프랑스 측 한불 행사 사무국)의 000 베네이어 등에게 보냈다. 이에 대하여 000 베네이어는 당일 최00에게 000에게 보고 할 수 있

70) 노00 진술조서 (2018. 2. 2.)

71) 박00 진술조서 (2018. 4. 19.)

게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메일을 전송하였고, 해외문화홍보원 000 주무관은 ‘오해라는 취지’의 메일을 000에 보냈다. 000는 다시 000에게 ‘합의 이행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13] 포럼데지마주 대표 ‘000 00000’의 이메일 (2015. 8. 19.) 일부 번역

포럼데지마주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사 개최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예산 지원)도, 상영 프로그램의 기술적 스펙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영권 동의, 상영본 필름 지원, 보내는 날짜 확인) 등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략)

우리는 우리의 행사 개최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② 한국영상자료원 담당 직원 정0072)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지원금 교부가 늦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실제 사업의 시작 시기는 5월경인데, 사업신청은 8월에 되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고용된 외부 연구원의 임금 지급 및 상영료 지급에도 문제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프랑스한국문화원 ‘한불 상호교류의 해’ 코디네이터(2014.9.~2015.10.)로 있었던 정0073)은 “프랑스 포럼데지마주 프로그래머 2인과 예술감독 1인이 직접 9월 초, 주프랑스한국문화원으로 찾아와 저와 이00 원장과의 면담에서 상영 2주 전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지원금 지급과 상영 프린트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프랑스 프로그래머가 한국에 가서 직접 선정한 상영 기획 프로그램 30편 중 한국 측으로부터 정치 이슈가 있는 <변호인> 및 서울을 배경으로 한 <남영동> 등 약 10편 정도 상영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받은 사실을 밝혔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00074)는 “한국영상자료원은 작은 조직이라 인력난이 있었다. 영화마다 저작권 받아내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어 일의 진척이 늦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프랑스 측과 마찰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포럼데지마주 측이 상위 기관처럼 한국영상자료원에게 지시하는 듯한 태도도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72) 정00 진술조서 (2018. 1. 31.)

73) 정00 진술조서 (2018. 1. 10.)

74) 000 진술조서 (2018. 1. 29.)

알고 있다. 문제가 된 다섯편은 이미 프랑스 측과 협의가 된 부분이었고 이후는 행정적 문제였고, 그것으로 예산집행을 막거나 한 바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영화 <위로공단> 등 문제영화 상영 배제 시도

(1) 국정원 BH 정보보고와 문제영화 상영 배제 조치

(가) 국정원 IO 조OO의 진술⁷⁵⁾

문체부 담당 국정원 IO 조OO의 재판 증거기록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관의 주요 업무로서 ‘연락업무(정보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국정원의 ‘연락업무’란 문체부에서 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문체부 간부 등 관련인들로부터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국정원의 고유 업무인 대공위해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IO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국정원 내부 데스크에서 취합하여 페이퍼로 문서화한 후 BH에 보고가 된다.”

(나)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재판 증언⁷⁶⁾

문체부 장관 김종덕은 “문체부가 지원사업에 대한 좌편향 모니터링을 게을리 할 경우, 국정원 및 경찰 정보기관에서 청와대에 끊임없이 정보보고를 하였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재판(사건2017고합102)에서 “(정보보고로 인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행정관들이 문체부의 담당 국장, 과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왜 문체부만 이렇게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냐는 비난이 있었으며, 그것도 특히나 정무수석실로부터 비난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다들 주눅이 들어있었고, ‘거기서 내려오는 명단들을 지난 번에도 알려주었는데 왜 이번에 또 넣었느냐’라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내려보냈던 명단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했다.

7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조OO 진술조서(국정원 문체부IO) (2017.1. 22.)

7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공판기록, 김종덕 녹취서(요지) (2017. 6. 19.)

(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

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정원의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자가당착〉처럼 대통령을 비하하는 영화들, 불편한 영화들에 대해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쓰면, 그 내용이 문체부로 내려오곤 했다. 국정원 정보보고는 담당 과에서 문건 자체를 받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책보좌관이나 국장, 청와대 신OO 행정관을 통해 알게 된다. 명단 같은 것은 없었고 청와대 행정관 신OO과 통화하면서, 예를 들면 〈자가당착〉, 〈위로공단〉 이렇게 정보를 들어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⁷⁷⁾.

또한 정OO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영화제 등에서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이념성, VIP를 비하한 영화, 세월호 관련된 영화’ 등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청와대로 보고할 문건을 작성한 바 있는데, ‘문제영화’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영화제나 기관으로부터) 상영작 목록을 제출받을 때, 줄거리나 개요(시놉시스)를 쓰게 하여 세월호 관련이나 박근혜 관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청와대로 보고하는 자료를 국정원 IO 조 OO이 요구하는 경우, 사무관들이 메일로 송부해 준 적이 있다. 독립영화 같은 경우, 영진위 국정원 IO 배OO가 김OO(영진위 본부장)으로부터 영화리스트를 받아서 특정 영화에 대해 배제하라고 하면, 배제를 시켜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⁷⁸⁾.

(2) 문체부, 〈위로공단〉 자료원 상영 배제 지시

(가)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위로공단〉 문제영화 언급

2015. 9. 16.자 국정원 정보보고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 문건(그림 15)에 따르면, ‘OOOOOOOO 등 건전 영화단체들은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위로공단〉 영화 등이 영진위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음을 거론하며, 독립다큐 영화계에 만연해 온 ‘비판영화 제작→영화제 수상→정부지원 획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문체부가 비판성향 작품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큐 영화계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7) 정OO 진술녹취 (2018. 5. 23.)

7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정OO 진술조서 (2017. 1. 6.)

[그림-15] 국정원 정보보고,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 (2015. 9. 16.)

2015. 9. 16.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

○ 건전영화계에서는 영화진흥위의 독립·다큐영화 개봉지원을 위한 '하반기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대상작 발표(10월초)를 앞두고
 홍보물 제작비·광고비 등 마케팅비용(3,000만원, 1편 지원)

- 응모작(총 43편) 가운데 사실 왜곡·정부비판 내용의 영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여론 제기

▷ 산다 : KT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투쟁 부각
 ▷그림자들의 섬 :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파업 주동자 미화 내용
 ▷ 소년, 달리다 : 국보법 위반사범 주도 공동체 '마포 성미산마을' 홍보

대표 강○○

○ 이와 관련 '차세대문화인연대' 등 건전 영화단체들은

- 상반기 지원대상 작품(10편)에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위로공단', 재일 「조선학교」를 부각시킨 '올보 권투부' 등이 선정된 바 있고
 조총련 계열 송두울 미화 '경계도시2' 제작

- 이번 예비심사 위원(5명)에 좌파 성향 감독 김명화가 포함, 영화제 수상경력을 내세운 문제작 '끼워넣기' 행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며
 ★ 그림자들의 섬(2004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산다(DMZ다큐영화제 최우수상)

- 독립·다큐 영화계에 만연해 온 「비판영화 제작→영화제 수상→정부지원 획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

➡ 문체부는 영진위에 지원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큐 영화계 건전화 도모

(나) 영화 <위로공단>, 임흥순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

- ①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건(79)에는 <위로공단>의 감독 임흥순이 212번째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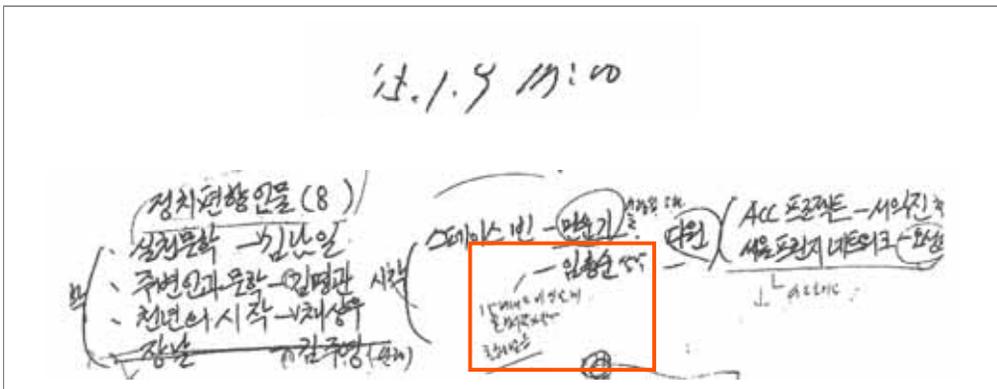
79)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보고서

[그림-16] 박근혜 정부 국정원 작성,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212	영화	임흥순	단편영화 '꿈이 아니다' 등 감독	C

② 위원회가 입수한 블랙리스트 문건 중 하나인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80’ (2015. 1. 9.)에는 시각분야 ‘임흥순’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흥순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15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작가참여 초청받음’, 그리고 지원사업 배제를 의미하는 ‘탈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17]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2015. 1. 9.)



③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당시 오OO 사무관 작성)에는 ‘임흥순’이 3차례 기재되어 있다. ‘시각예술분야(2015공모사업)-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에서는 정기공모에서는 제외하고, 비엔날레 예산에서 지원 방안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사업 중 2016국제교류공모사업(2차)(4.21)에서 청와대(B)와 국정원(K)에서 모두 배제 리스트로 올라 있음이 확인되었다.

80) ‘수기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국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월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배제 리스트이며, 이를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OO 사무관은 이 문서는 김OO 예술국장이 청와대 혹은 국정원으로부터 (유선으로) 받아 적은 것을 자신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림-18]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5 시각예술분야(2015 공모사업) - 3명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임홍순	2015 국제 비엔날레 참가 <환생/위로공단>	2015비즈니스엔탈레 본진시 작가로 초청받는 등 국제적 지명도 높음 - 정기공모에서는 제외하고, 비즈니스엔탈레 예산에서 지원 방안검토	제외

(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⁸¹⁾

앞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정OO은 국정원 정보보고와 청와대 신OO 행정관을 통해 영화 <위로공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자료원에서 기획한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2016.01.09.~01.17.) 상영프로그램에 <위로공단>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후, 자료원 류재립 원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로공단> 상영에 대해 자료원에 압력을 가한 경위에 대하여, 정OO은 “류재립 자료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자료원장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분이다. 그 당시 (정부) 분위기가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 분이였다. 당시 자료원 류재립 원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상영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영상자료원이 공공기관인데, 나중에 이거 문제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영화들이 상영되면 국정원에서 ‘공공기관인 영상자료원에서 이런 영화를 이렇게 상영한다’는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기관장이나 자료원을 지도·감독 하는 문체부에 대한 정보보고가 또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다. 우리 직원에게 “나중에 그런 데서 이상한 영화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 정부에서 불필요한 영화 들어서 정보보고 올라가면 또 문체부, 자료원 다 힘드니까 그런 것 쪽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국정원 정보보고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다.”고 진술하였다.

81) 정OO 진술녹취 (2018. 5. 23.)

(3) <위로공단> 상영 배제 지시 하달 후 자료원의 조치

(가)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 기획전 개요

자료원은 전년도 상영작 중 10편을 뽑아 상영하는 기획전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16. 1. 9.~1. 17. 진행된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영화 평론가, 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학과 교수, 영화 관련지 기자 등 외부 선정위원⁸²⁾이 총 10편의 한국영화를 선정⁸³⁾하였다. 선정작 <위로공단>은 2016. 1. 14. 임흥순 감독과의 관객과의 대화도 예정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 담당은 자료원 시네마테크부 전 직원 모은영이다.

(나) 자료원 원장 류재림의 진술⁸⁴⁾

류재림은 원장 재임 시(2015. 11~2018.4), <위로공단> 상영 관련하여 문체부 정OO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료원 실무진으로부터 행사의 보도자료가 이미 배포되어 취소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정OO에게 알려준 적이 있으며, 영화 <위로공단>을 정상적으로 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자료원 시네마테크부장 박OO의 진술⁸⁵⁾

2010년부터 자료원 시네마테크부에서 재직하였고 현재 자료원 시네마테크팀장인 박OO은 2016. 1. 당시 시네마테크부장으로 재직 시, '2015 한국영화 <위로공단>에 대해 문체부로부터 본인이 직접적인 상영 제약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나, 2016. 1.경 류재림 원장이 해당 기획전의 결재 전에, '이 중에 문제되는 영화가 있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고,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82)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 선정위원은 김봉석, 김영진, 김혜리, 남동철, 맹수진, 이용철, 이상용, 정성일, 조영각, 주성철 총 10인이다.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https://www.koreafilm.or.kr>

83) 선정된 2015 한국영화는 극비수사(곽경택), 꿈보다 해몽(이광국), 무뢰한(오승욱), 베테랑(류승완), 산다(박정범), 소설포비아(홍석재), 암살(최동훈), 위로공단(임흥순),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홍상수), 한여름의 판타지아(장건재), 화장(임권택) 10편이다.

84) 조사보고, '자료원 전 원장 류재림 면담 보고' (2018. 5. 11.)

85) 박OO 진술조서 (2018. 1. 30.)

(라) 자료원 전 프로그래머 모은영의 진술⁸⁶⁾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 기획전을 담당하였던 모은영은 2016. 1.경 이 기획전 관련하여 <위로공단> 상영 이슈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모은영은 당시 윗선에서의 지시와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해당 영화에 대한 문의가 와서 당시 담당 부장에게 이를 전해 들었다. 당시, 해당 영화 상영 철회가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료원) 내부와 문체부에 보고를 했다. 이 기획전은 자료원의 자체 기획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영화이고 이미 외부에 상영 리스트의 홍보가 완료된 영화라고 설득하였다. 상영 철회 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나중에 부서장과 함께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원장이 문체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150석 정도 되는 작은 상영관에서 상영은 하되, 최대한 홍보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로부터 상영 영화에 대한 사전 문의가 외압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는 프로그래머로서 외압으로 인식된다. 특히, 시놉시스를 더 정확하게 기입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는 프로그램 기획자로서는 외압으로 인식된다. <위로공단>은 사전 문의 정도가 아니라 상영 금지 요구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자료원 프로그래머 000의 진술⁸⁷⁾

모은영과 같은 부서에 있었고 현재 시네마테크팀 대리인 000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로공단> 상영은 모은영 과장이 기획했었다. 이 기획은 전년도 상영작 중 TOP10을 외부 선정위원들이 뽑아 상영하는 기획전인데 자료원에서 나름 관심도가 높고 역사가 깊은 기획전이다. 2015. 까지는 000 차장이 맡았는데, 국내 쪽과 네트워킹이 좋은 모은영 과장이 종종 섭외를 도와주곤 했다. 그리고 2016.경부터는 이 기획전을 모은영 과장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문체부로부터 이 기획전 중 <위로공단>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미 인터넷에 상영 공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로공단>을 상영하게 되었다”

86) 모은영 진술조서 (2018. 2. 12.)

87) 000 진술조서 (2018. 1. 31.)

(바) 자료원 프로그래머 오OO의 진술⁸⁸⁾

당시 자료원 프로그래머였으며, 현재 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인 오OO는 문체부 후보에 상영작의 시놉시스를 적어 보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체부 등 상위 기관은 해외영화제 수상작에 관대한 편이라, 이들 영화의 상영 배경을 수상작 등의 이슈로 설명해왔다고 진술하였다. “2016.경 <위로공단>⁸⁹⁾, <지슬>⁹⁰⁾의 경우 문체부로부터 사전 문의가 있었지만, 외부 전문가들에게 추천 받은 상영작이고, 해외 수상작이라는 이유로, 더불어 감독님들도 행사에 초청된 작품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작품의 상영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위로공단> 등의 문의는 검열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또 다른 영화 상영 검열 의혹

<위로공단> 이외에도 자료원 내에서 상영 검열 및 배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자료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료원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문화부 후보용 보고를 작성하였는데 프로그램의 경우 2013.경까지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OOO감독의 OO영화 등 O편’ 정도로만 프로그램 상영 리스트를 보고했는데, 2015.초, 시놉시스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금 더 상세한 영화 정보를 보고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다이빙벨> 문제 후, 문체부의 사전 스크리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자료원 류재림 원장, 노OO 사무국장, 박OO 부장 등은 위원회 조사에서 자료원 내부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은 없으며, 자료원의 경우 이미 밖에서 상영이 된 작품을 상영하는 이른바 ‘앵콜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자료원 상영 기획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한 시네마테크부 프로그래머들은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지시의 사례를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그 의혹 사례는 다음과 같다.

88) 오OO 진술조서 (2018. 2. 5.)

89) 2015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

90) 2013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 심사위원 대상 수상

(가) 2015. 마키노 마사히로 감독전

- ① 자료원 프로그래머였고 당시 위 기획전을 담당하였던 오OO는 “2015. <마키노 마사히로 감독전>을 제가 담당했는데, 문체부 보고용 주보에 시놉시스를 써서 보고했던 문구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일본 측과 상영 협의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를 제가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전 군악대>를 빼고 상영이 되었다. 당시 문체부의 요구를 제가 직접 받지 않고, 아마도 박OO 부장을 통해 전해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② 자료원 프로그래머 OOO는 “상영작의 문체부 피드백이 있었던 케이스는, 일본국제 교류기금과 연계한 일본영화 상영의 경우가 있었다. 2015. 4. 경 예정되었던 마키노 마사히로 전의 <야전 군악대>란 작품이 일제침략을 미화한다는 의혹을 담고 있어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3.1절 시기가 있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2015. 9.) 상영 스케줄을 변경하여 상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③ 자료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 확인 결과, <마키노 마사히로 감독전>은 2015. 9. 15~9. 19. 시네마테크 KOFA 1관에서 총 7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야전 군악대>는 상영되지 않았다.

(나) 서울독립영화제2014 앵콜전

2015. 3. 3.~3. 11. 시네마테크 KOFA 2관에서 개최된 <품문으로 들었소, 독립영화의 전설: 서울독립영화제2014 앵콜전> 상영과 관련하여, 자료원 프로그래머였던 전 직원 모은영⁹¹⁾은 “2015.경 서울독립영화제와 공동 기획 관련해서, 문체부로부터 상영작의 시놉시스를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른바 문제영화 <그림자들의 섬>의 상영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 직원들이 자료원 실무 직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체부의 요구사항은 부장급 이상에서 전달받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다. 9년 동안 자료원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모은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감한 프로그램 상영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는 민감한 소재의 영화에 대한 문체부의 비정기적인 문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영화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 이런 분위기가 자체 검열로 느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1) 모은영 진술조서 (2018. 2. 12.)

자료원 박OO⁹²⁾ 팀장(당시 부장)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자료원은 영진위에 비해 지원 사업이 주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의 관리 감독에서 사각지대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외부에서 이슈가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한 부분은 있었지만, 자료원에서는 홍보를 덜 하는 방식을 택함으로 외부 노출이 크지 않아 문체부 등 별도의 지시를 피해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⁹³⁾은 위 영화들에 대한 배제 지시 관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자료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손OO 사무관에 대한 조사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5. 블랙리스트 등재 자료원 직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

가. 2016. 3. 자료원 직제 개편 및 인사조치

(1) 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

2016. 2. 24. 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에서 직제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상정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표-14] 한국영상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중 ‘직제규정 개정(안)’ 상정 부분

의장 : 세 번째 상정안건으로 안건번호 제184호 “직제규정 개정(안)” 건을 상정함. 상정 내용에 대해 경영 기획부장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람.

경영기획부장 : **관리기능이 필요한 업무군에 대해 팀제를 도입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보완**하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였음. 기존 경영기획부와 보조기술센터에 각 2개의 팀이 존재해왔으나, 1개팀을 제외하고는 팀장 보직자가 없어, 실질적인 팀제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임. 우리 원 인력규모가 80여 명으로,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부서에 팀을 보충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한국영화사연구소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수가 많지 않아, 우선 팀을 따로 두지 않았음.

92) 박OO 진술조서 (2018. 1. 30.)

93) 정OO 진술녹취 (2018. 5. 23.)

안전 심의 과정에서 의장인 류재림 원장은 “중간관리자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업무 처리가 더욱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⁹⁴⁾”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직제규정 개정(안)은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 내용에 동의하여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및 보조기술센터 복원기술팀이 삭제되고, 수집부 및 시네마테크부 내 카탈로그팀 및 영화관운영팀이 신설⁹⁵⁾되었다. 2016. 3. 8. 자료원 직제규정개정 후, 자료원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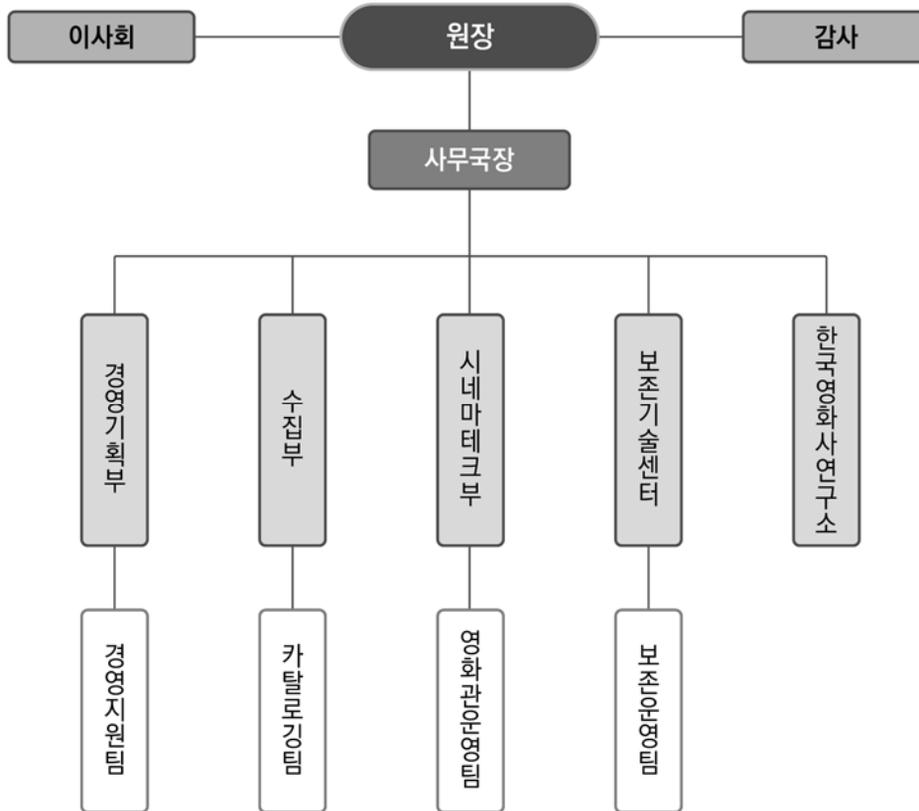
[그림-19] 직제규정 개정 전, 한국영상자료원 조직도(2015. 1.)



94) 한국영상자료원 제80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16. 2. 24)

95) 한국영상자료원 직제규정 <개정 2016.3.8.>

[그림-20] 제80차 이사회에서 직제규정 개정 후, 한국영상자료원 조직도(2016. 3.)



(2) 직제규정 개정과 자료원 프로그래머에 대한 인사 조치

(가) 직제 개편 후 인사 발령

2016. 3. 직제 개편의 내용 중 다른 부서와 달리 시네마테크부 영화관운영팀 신설에 대해서는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는 직제규정 개정 후 인사 발령과 연결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제규정 개정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의 특이점은 시네마테크부에서 오랫동안 프로그래머로 재직한 3인(모은영, 오OO, OOO) 중 2인(모은영, 오OO)이 프로그램 기획과 무관한 부서 또는 팀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점이다.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시네마테크부 밑에 신설된 영화관운영팀의 팀장으로, 오OO 프로그래머는 한국영화사연구소로 전보되었다. 특히 모은영 프로그래머의 경우, 직원에서 팀장으로의 승진이었으나, 그동안 ‘순환

보직'에 해당하지 않았던 프로그래머의 업무에서 고객서비스, 영화관 운영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21] 자료원 '조직별 직위 및 직무' 문서 중 직원 모은영의 업무분장 변경 현황

■ 2015.1월 직제에 따른 개별 업무분장 현황						
소속	성명	직종	직급	직위	담당직무	
시네마테크부	시네마테크부	모은영	사무직	5급	프로그래머	

■ 2016.3월 직제에 따른 개별 업무분장 현황						
소속	성명	직종	직급	직위	담당직무	
시네마테크부	영화관운영팀	모은영	사무직	5급	팀장	팀장

(나) 2016. 3. 인사 대상자 모은영의 진술⁹⁶⁾

모은영은 자료원에서 9년간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였고, 2016. 3.경 영화관운영팀 팀장으로 인사 발령 후 2017. 1. 2. 퇴사하였다.

2016. 3.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모은영은 “2016. 1.경 <위로공단>의 상영 이후, 2016. 3.경 실무진이 없고, 민원 업무를 주로 처리해야 하는 영화관운영팀장으로 발령이 되었다. 인사이동 전에 이와 관련해서 류재립 원장과 면담을 통해 (인사발령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지만,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3.경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원한다면, 영화관운영팀이 아닌 프로그램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영화관운영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영화관운영팀에 묶어 놓은 것도 안정성과 효율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하였고, 순환보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복원, 박물관 큐레이터 업무가 순환보직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류재립 원장이 내세우는 ‘1.5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1:1로 인사 발령을 내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외부 네트워킹이 중요한 직무를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인사발령을 냈는데, 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퇴사의 배경으로는 “당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 발령이었고, 스스로 엄청나게 자괴감

96) 모은영 진술조서 (2018. 2. 12.)

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거의 9년 동안 자료원의 프로그래머로서 일 해왔는데, 민원성 CS(고객서비스), 카페 음료, 문 수리 등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의 이동은 일종의 압박이라고 생각되었다. 인사발령 결과에 대한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 번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모욕감과 자괴감을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6. 3. 인사 대상자 오OO의 진술⁹⁷⁾

오OO는 2007년 프로그램팀장으로 발령 받은 후, 2016. 3. 인사 발령 전까지 시네마테크 프로그램 기획 및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였다.

류재림 원장 부임 이후,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류재림 원장 시기, 지속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자기 계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너는 이 부서로 보내줄게, 어느 부서로 가고 싶어, 내가 보내줄게’ 하는 식의 발언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여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6. 3.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말 안 듣는 직원’(소위 자료원 내에서 경력이 오래되고, 영화계와도 인적 네트워크가 넓은 직원)을 내보내고 30대 젊은 직원의 재배치로 생각된다. (시네마테크부에서 한국영화사연구소로의 인사발령은) 아마도 윗분들이 핸들링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부서에서 저와 모은영 이렇게 2명 동시에 행해진 인사이동은 당시에 이례적인 인사조치로 보이고, 내외부에서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놀라워했다. 모은영은 당시 인사이동 전에 사전 언지를 받았던 것 같지만, 저는 어떠한 사전 언지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료원에서 순환보직에 어울리지 않는 직무에 대한 질문에 “필름복원과 같은 전문 기술직과, 저나 모은영과 같은 프로그래머의 직무는 순환보직, ‘1.5배 인력 양성’에 어울리는 직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원칙도 없이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사조치”라고 진술하였다.

97) 오OO 진술조서 (2018. 2. 5.)

나. 관련자 진술

(1) 조직운영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제 개편이라는 의견

(가) 자료원 류재림 원장은 2016. 3. 전문성을 넘어 타업무, 즉 순환·대체보직이 가능한 인력 양성(1.5인의 양성)과 중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부·팀제를 도입하였고, 모은영 등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보복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⁹⁸⁾.

(나) 자료원 사무국장 노OO의 진술⁹⁹⁾

2016. 1.경 임명된 노OO 사무국장은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다. (직제 개편 관련하여) 당시 이사회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 자료원의 아카이브 업무가 시스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옆의 일’까지 알아야 큰 틀에서 선순환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한 인사이동이라고 본다”고 진술하였으며, “‘순환보직’을 무한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성격이 비슷한 직무군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원이 전문성과 전혀 다른 부서 배치 순환보직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지만, 만약 자료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본인이 원했거나, 원장과의 면담 과정을 통한 결과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관운영팀 신설과 관련하여 노OO은 “영화관운영팀은 영화관 운영, CS 티켓박스 관리, 카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을 담당하는데, 시네마테크부 프로그램 기획과 별도로 자료원의 고객 니즈에 조금 더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직이 개편되었다. 고객 맞춤형 극장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다. 영화관운영팀장으로 발령 받았던 모은영의 퇴사에 대하여 “극장업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퇴사가 안타까웠다. 모은영 팀장 퇴사 후,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의 발령이 있었지만, 팀장급으로 적절한 인사가 없어서 영화관운영팀장을 공식으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98) 조사보고, ‘자료원 전 원장 류재림 면담 보고’ (2018. 5. 11.)

99) 노OO 진술조서 (2018. 2. 2.)

(다) 자료원 경영기획부장 김OO의 진술¹⁰⁰⁾

제80차 이사회에서 직제규정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한 김OO 경영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각 부서별로 팀장들이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예술의전당, 문화정보원 등 다른 기관 사례를 살펴보니, 팀장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부서장이 기획업무를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료원도 부서 내에 팀장을 두는 방법을 생각했다. 영화관운영팀 같은 경우에도 티켓박스, 영사실 업무 등이 있는데, 굳이 부서장이 신경써야 될 업무는 아니지 않나. 팀장 1명을 두어서 관리하면 부서장의 업무 관할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자료원 시네마테크부장 박OO의 진술¹⁰¹⁾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자료원 시네마테크부장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3.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당시, 부장으로서 조직 개편에 대하여, 시네마테크부에 프로그램팀과 영화관운영팀 등 2팀제 구성 의견을 상부에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영화관운영팀만 도입되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모은영의 영화관운영팀 발령에 대해서 “원장은 영화를 전공한 신입 프로그래머의 등용 및 후배 양성을 위해 모은영 전 프로그래머를 영화관운영팀으로 발령한 취지를 표명하였다. 저는 애초에 프로그램팀을 원했고, 원장에게도 필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영화관운영팀으로 조직 개편이 실행되었다”라고 하여, 모은영의 인사 조치가 조직개편의 결과였음을 진술한 바 있다.

(2) 프로그래머 등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조치라는 의견**(가) 국정원,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¹⁰²⁾**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가 지난 2017. 10. 30.자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2014. 3. 19. 국정원은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BH보고서를 통해

100) 김OO 진술녹취 (2018. 1. 9.)

101) 박OO 진술조서 (2018. 1. 30.)

102) 국정원 개혁위,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언·야권 인사 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였다. 249명의 인물 중, 모은영(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등급C)와 이효인¹⁰³⁾(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등급B)가 기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주요보직에 좌성향 인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며, 특히 예술위·영진위 등 자금지원 기관에 잔존하는 좌성향 실무진 청산 병행’할 것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2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국정원) 중, 한국영상자료원 관련자 기재 부분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170	영화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C
209	영화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B

(나) 자료원 직원 조OO의 진술¹⁰⁴⁾

전 경영기획부장이자 현재 연구전시팀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조OO은 “모은영은 자료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프로그래머로 계속 활동하다가, 영화관운영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국장으로부터 영화관 운영과 관련한 질책을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모은영 프로그래머의 경우 이후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알았으며, 인사 발령 등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자료원 직원 OOO의 진술¹⁰⁵⁾

감사담당인 OOO은 2016. 3.경 조직개편 관련하여, “표면적으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환보직’을 위한 개편이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이 이러한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직원만 순환보직이 시행되고 있다. 오히려 자료원 직원들은 스스

103) 2003.07~2006.09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104) 조OO 진술조서 (2018. 1. 8.)

105) OOO 진술조서 (2018. 1. 26.)

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당시의 조직개편은 부체계에서 중요도가 덜한 업무를 묶어 부 하위에 팀을 만들었다. 특히 시네마테크부의 영화관운영팀의 경우, 마땅한 팀원도 없이 10년 정도 자료원에서 프로그래밍을 주로 담당 한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했다. 이 직원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알려진 전 직원 모은영이다. 모은영은 한불 130주년 관련 프로그램 기획과도 연관도 있다. 결론적으로 틀지 말라는 영화를 틀었고, 이로 인해 보직 변경 후, 영화관 티켓팅 관리 등 단순업무 배정으로 그 직원은 자료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 조치는, 예를 들자면 MBC PD가 아이스링크 시설 담당으로 이동한 것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자료원 직원 000의 진술¹⁰⁶⁾

시네마테크부에서 프로그래머를 담당해왔으며, 현재 시네마테크팀 대리인 000는 “자료원에서는 ‘순환 보직’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전문성을 보장받는 직무로 프로그래머나 보존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순환 보직 형태의 이동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직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경 프로그램팀의 000 차장은 연구팀으로, 모은영 과장은 같은 부서의 영화관운영팀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인사발령 결과가 화가 났던 것 같다. 모은영의 경우, 프로그래머 업무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외견상 부서원에서 팀장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운영팀 인사발령 결과에 대해 원장에게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류 원장은 팀장으로 승진을 시켰고, 또한 모은영 팀장이 영화관운영팀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후배 프로그래머를 위해 도움을 주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다. 왜냐하면, 자료원 내부 문서 시스템상, 부팀제 간에 기안 문서를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⁰⁷⁾. 프로그램과 영화관 운영은 하나의 맥으로 이어진 업무이다. 부팀제의 경우, 팀 소속 직원이 부에서 작성한 기안을 확인할 수가 없는 등의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06) 000 진술조서 (2018. 1. 31.)

107) 이와 관련하여, 2016. 3. 8. 개정된 자료원 ‘직제규정’ 제2장 업무분장 제13조(시네마테크부)에 따르면, 영화관운영팀은 ‘고객서비스 및 만족도 조사 업무’, ‘영화관 운영 및 대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 시네마테크부의 주요 업무인 프로그래밍 기획 등에 규정상 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자료원 전 원장 조선희의 진술¹⁰⁸⁾

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의 역할과 관련하여 조선희는 “자료원에는 전문성이 중요한 업무로 보존, 프로그래밍, 연구 등이 있다.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상암으로 옮기면서 극장이 3개로 늘어나 뽑은 직원이었다. 처음부터 그 역할로 들어왔고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연구 또는 박물관도 아닌 극장 관리 일을 맡겼다는 것은 자료원에서 프로그래밍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원장이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다. 모은영 프로그래머의 인사조치는 명백히 부당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사업 취소 및 상영 검열

위원회는 자료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검열과 배제 지시가 관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검열은 표현의 직접적 억제도 있으나, ‘냉각효과’를 통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블

제13조(시네마테크부) ① 시네마테크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5.1.14.> <개정 2016.3.8.>

1.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밍 및 부대행사 기획운영
2. 국제교류 및 FIAF 관련 업무
3. 온라인서비스 프로그래밍
4. 국내외 영화제 등 행사지원(공동주최 및 후원)
5. 기타 시네마테크에 관한 사항
6. 고객서비스 및 만족도 조사 업무
7. 영화관 운영 및 대관
8.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② 영화관운영팀은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8.>

108) 조사보고 ‘한국영상자료원 前 원장(조선희)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입수 보고’ (2018. 5. 18.)

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국가범죄’는 ‘모방범죄’를 낳아 사회적 위계관계에 따라 연쇄적 배제·차별 효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자료원 블랙리스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명박 정부 시기, 자료원 심포지엄 취소 및 4대강 영화 상영 검열

(가) 2008. 10. 18. 개최 예정이던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 심포지엄 취소와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OO은 행사 취소를 지시한 바가 없으며 자료원장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자료원 전 원장 조선희의 진술(2018. 5. 18) 및 저서(‘클래식중독’)를 통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분위기와 문체부의 지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행사 자료집이 인쇄에 들어가는 등 행사 개최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점,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심포지엄을 준비한 연구자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OO의 주장처럼 조선희 전 원장이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행사를 취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위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으나, 이는 행사 취소가 결정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직접적으로 행사 취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행사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박정희 관련 학술 심포지엄의 취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문체부의 행사 취소 지시로 인한 것이며, 당시 자료원장은 상부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행사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학술 연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 자료원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한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위 심포지엄 무산 이후, 자료원의 비평 심포지엄이 약화되고, 관련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등 자체검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나) 국민 의식을 좌경화시키는 ‘좌파영화’에 대한 통제, ‘좌파성향 감독들에 대한 영화 제작 실태 파악’ 등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국정원에서 주도하였고,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시대고발성 독립영화 제작, 상영을 지원하는 것을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한 것이 국정원 보고 문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원

이 4대강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고 대관으로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배경에 뒷선에서 원장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자료와 직원의 진술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자료원 원장이었던 이병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 후원 철회가 서울독립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된 점, '4대강 영화' 상영 때문에 후원 철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료원 측이 서울독립영화제에 구두로 알린 점, 사회적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독립영화제 측에 후원 철회 공문을 재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4대강 영화에 대한 검열 및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 철회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2)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사업에서 문제영화 검열 및 블랙리스트 영화인 배제

(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포럼데지마주 <매혹의 서울>에서 특정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배제 지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교문수석실)로부터 하달되었음이 박OO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의 진술과 관련 보고 문건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총괄한 해외문화홍보원과 최OO 예술감독 등이 프랑스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제 조치에 대한 상황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수시로 공유되었음이 진술과 이메일, 문자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2014.말 경 자료원은 포럼데지마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사업담당자 모은영은 위 배제지시 이행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자료원은 상영권 확보, 교부금 집행 등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였고, 실제 상영 프로그램 확정과 초청자 등에 대한 결정은 해외문화홍보원이 프랑스 측과 진행하고, 그 결과만 자료원에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포럼데지마주 한국영화 특별전 <매혹의 서울, SEOUL HYPNOTIQUE>에서 배제된 영화는 <변호인>, <그때 그 사람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상계동 올림픽> 총 4편임을 확인하였으며, 최OO 예술감독과 OOO 주무관의 진술에서 언급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최종 상영작 목록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영화 상영 배제 외에도 특정 감독 및 영화인에 대한 초청 배제도 확인되었는데, 봉OO 감독과 이OOO 감독,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배제 명단에 포함되었다. 단, 이OOO 감독은 초청 항공료를 프랑스 측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식

으로 초청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블랙리스트 실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¹⁰⁹⁾, 조직위 사무국 V의 “대부분 지원 예정돼 있던 예산을 안주는 형식으로 문제사업들을 걸러냈다”라는 진술¹¹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화 또는 초청자 배제뿐만 아니라 항공료를 프랑스 측에서 부담하게 하는 우회 지원 방식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의 한 방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료원의 상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열,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공통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제 명단 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정 영화 등에 대한 배제 조치는 문체부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제영화에 대한 검증은 청와대와 국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정원 IO의 진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 증언,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의 주요 업무인 ‘정보보고’를 통해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국정원 정보보고는 소위 ‘건전영화계’의 의견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자료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영화 검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네마테크 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 기획전에 선정된 <위로공단>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다. 영화 <위로공단>과 이를 제작한 임홍순은 국정원 블랙리스트,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문체부 관리리스트 등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은 국정원 정보보고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위로공단>이 문제영화임을 사전에 인지, 이의 배제를 위하여 류재림 자료원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료원 류재림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료, <위로공단>에 대한 상영 배제 지시를 검토하나 해당 프로그램 기획자인 모은영은 ‘상영 철회 시,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영을 그대로 추진하였고, 이에 원장이 작은 규모의 극장에서 홍보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영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로공단>은 상영되었으나, 자료원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지시 행위가 ‘검열’, ‘외압’으로 인식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109) 이에 대해서는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110) V 진술서 (2018. 1. 22.)

나. 자료원 임원 선임과 블랙리스트 관련성

2014~2015년 자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및 임명 과정에서 자료원의 1차 이사 추천 후보자 중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적격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자료원 이사 추천이 약 10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자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공무원 정OO, 윤OO 2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원 이사 추천 과정 및 인사조치에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OO이 개입되어 있음을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1차 이사 추천 후보 중 ‘부적격자’ 소위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으로는 심재명, 변재란이 포함되었음을 문체부 담당 과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김시무, 김태용, 심재명, 이미연, 전영문은 위원회가 입수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1회 이상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자료원 이사 추천에서 배제 대상으로 추정된다. 자료원 이사 추천 후보자들에 대하여 국정원의 인사 검증이 있었다는 사실은 1차 추천 대상자 변OO의 진술과 국정원 IO 조OO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1차 이사 추천이 문제가 된 후,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자료원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가 이행되었고, 이에 따라 2, 3차 비상임 이사 후보 추천 시, 문제가 되지 않은 인물들을 추천하여 2015. 7. 13. 최종적으로 8인의 이사가 임명되었다. 그 다음해인 2016년 이사 추천 조항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이 자료원 이사회에서 통과되는데, 자료원 경영기획부장 김OO과 사무국장 노OO은 ‘이사 임명 절차의 효율화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은 관련 개정이 2015년 이사 추천 논란과 연관되어 있으며, 추천 과정에 문제가 되는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장관이 임명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자료원 특정 직원 인사 조치의 부당성

2016. 3. 직제개편 후 자료원 직원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영화관 프로그래머 2인에 대한 인사조치, 특히 모은영 프로그래머의 영화관운영팀으로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체부 및 자료원 직원들의 진술과 입수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 바, 문제 영화와 특정 영화인을 배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문체부를 통해 자료원으로 하달된 점,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서 문제영화 배제 및 봉준호·이송희일 감독 초청 배제 등의 지시를 모은 영이 거부했던 점, 인사발령 직전 <위로공단> 상영 관련하여 문체부의 상영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간관리자 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모은영을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승진시켜 다른 팀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류재림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으로, 영화 분야 전문가가 아님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자료원장으로 임명되었던 점,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다고 외부적으로 공표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면,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유일하게 자료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모은영에 대한 인사조치는 원장의 인사권을 활용한 특정 직무에서의 배제,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차별적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자료원의 프로그래머는 ‘순환보직’에 어울리지 않는 직무라는 자료원 직원 다수의 진술과 ‘프로그래머’로서 모은영의 역량에 대해 고전 영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기획력과 기관 및 영화인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다양성영화·독립영화 관련 기획에서 강점이 있다는 직원들의 공통된 평가가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역으로 뒷받침한다.

류재림 원장은 재임 시, 직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등을 한 것과 관련 문체부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문체부 ‘영상자료원장 비위혐의 조사결과 보고(2018. 4.)’에 따르면, 류재림 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인 등 특정업체와의 계약 지시’ 및 ‘지시를 불이행한 담당자를 사전 인사예고도 없이 부당인사 조치’, ‘사업과 관련 없는 업적 평가를 거론하여 사업담당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데 지장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관장으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 수행을 부적절하게 하여 직원과의 신뢰를 잃었음’이 감사결과에 적시되어 있다.¹¹¹⁾ 이러한 문체부 감사 결과는 블랙리스트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류재림 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이와 연계한 부적절한 인사조치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조사개시를 위한 사전조사 보고서에서 규명 과제 중 하나였던, 자료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국정원과 경찰 정보 담당의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보고와 신원 검증 과정에 문체부 담당 국정원IO 개입에

111) 이에 대해 류재림 원장은 ‘특정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관련된 소개만 했을 뿐 계약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담당자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지도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2.)

대해 일부 확인하였으나, 자료원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2015. 4. 29.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는 <다이빙벨>, <자가당착> 상영을 이유로 지원 배제¹¹²⁾되었으나, ‘제2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된 자료원은 위탁이 계속 유지되었다. 문체부 ‘대외주의’ 문건 등에 따르면,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 “프로그램은 직접 선정하여 위탁 시 발생 가능한 논란 원천 봉쇄(*공공기관인 영상자료원 위탁은 문제없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자료원의 독립영화 상영 관련하여 프로그램 선정 등에 문체부가 관리·개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2015. 3. 3.)

대외주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으로 전용관 1곳 이전 (서울→지역) 프로그램 직접 운영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지원 중단 아리랑시네센터 위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추진계획 이행하되, 적정 시기 고려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 프로그램은 직접 선정하여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자용성 논란 원천 배제 공공기관인 영상자료원 위탁은 문제없음 국회에서 수차례 서울 지역 독립영화관을 관한 지적하는 문제를 지적했으므로 지역 이전 타당하며, 명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개선 명분 타당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지역 균형성 확보 및 지역독립영화 상영 활성과 목적으로 개선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극장(공공극) 중심에서 관객(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모든 일본 지역에서 좋은 예술영화를 인정하므로 관련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개선 각종성 있는 영화 선정 사업 위탁(공민 회·단체) 핵심 매입사에 영화 마케팅 및 상영권 확보 지원 상영권은 지역 멀티플렉스 포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연도</td> <td>개편시</td> </tr> <tr> <td>지원 연회</td> <td>-</td> <td>2019년</td> </tr> <tr> <td>지원 상영권</td> <td>15~20%</td> <td>30~35%</td> </tr> </table>	구분	연도	개편시	지원 연회	-	2019년	지원 상영권	15~20%	3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추진계획 이행하되, 적정 시기 고려 정부 지원을 원순에도 불구하고,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한 직접 지원 배제 1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는 명분 있음 사업 위탁 연회, 예술영화 프제 활용 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추진시기는 조망 필요 영화계 거둬들인 논리, 현행의 주장에 밀려 정책 타당성이 있는 개편을 소극적·방어적으로 자제한 필요 있으나 영화계·연예·이달의 권익이 걸린 되어 있는 현 분위기 회복 필요 따라서, 시기조절, 분리추진을 통해 개별 사업과 문제점 부각 및 개선 필요성을 제대로 환기
구분	연도	개편시										
지원 연회	-	2019년										
지원 상영권	15~20%	30~35%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료원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및 독립영화 관련 상영회 등에서 사회비판적인 독립영화, 소위 ‘문제영화’에 대한 상영 검열의 여부, 독립영화 관련 사업 등의 축소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112) 이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다. 조사과정에서 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특정 필자 배제 및 내용에 대한 검열, 특히 독립영화 관련 검열이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3. 제도 개선 의견

가. 자료원 임원 선임 : 자료원장 전문성 강화, 이사 추천 제도 재도입 필요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원장 임명은 영화 분야의 전문성이 크게 고려되지 못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자료원은 국내 유일의 영화를 위한 공공 아카이브로서, 보존, 복원, 수집, 상영 기획, 영화사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비전을 지닌 자료원장의 선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원회 조사를 통해 자료원 비상임 이사 선임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고, 이사 추천 제도를 삭제한 정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 후보자 추천 제도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 중에 하나인 만큼, 이사 후보자 추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문체부 퇴직 공무원 사무국장 임명 관행 개선

자료원의 사무국장은 그동안 문체부 퇴직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별정직으로 임명되었다. 국고로 운영되는 자료원의 특성 상, 행정 및 문화정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문체부 출신의 사무국장이 원장을 행정적으로 보좌하고 지도·감독기관인 문체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자료원의 문체부로의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앞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넘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 자료원 사무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종속성 탈피,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강화

문체부와 산하기관 간의 종속적 관계는 블랙리스트 실행이 큰 저항 없이 지시 및 보고 체계에 의해 작동할 수 있게 한 구조적 원인이다.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원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국가범죄에 동원되지 않고, 상부 기관의 불합리한 지시나 검열, 그리고 내부 검열에 순응하지 않고, 100년의 한국영화를 사회적, 미학적, 영화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다양한 영화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내부 구성원들의 자성과 쇄신을 권고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5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75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영3[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경정)'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 요지

가. 이 보고서 경정의 취지

2018. 4. 30.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타 사건 보완 및 조사 과정에서 국고 지원사업인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사업에서의 지원 배제 사실, 예술영화 유통·배급 사업 등에서 '문제영화' 배제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기 채택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경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나. 보고서 경정의 주요 내용

- 1) 기존 조사결과 보고서 본문에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지원배제의 건이 추가되었다.
- 2) 기존 조사결과 중 '지원배제 일람'에 예술영화전용관 배제 관련하여 3건, 예술영화 유통·배급사업에서 배제작품 <22> 등 2건 및 위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사업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배제작품은 <구름비-바람이 분다> 등 37편, 배제 단체로는 인천 영상위원회를 포함하여 16개 단체, 6개의 독립·예술영화전용

관, 19편의 영화에 대한 상영차단 및 거부가 있었다.

3) 기존 보고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장 및 표현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붙임 :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경정)

[사 건] 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특검 등의 수사 및 재판 결과 청와대와 문체부는 영진위로 하여금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축소, 예술영화제작지원에서 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7. 12. 1. 제17차 위원회는 영진위에서 행해진 일련의 위법한 행위사실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여 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 개시 결정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이 사건의 조사개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 제②항 제3호(직권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조사 목적(규명 과제)

위원회는 ①특정(‘건전’ 또는 ‘문제’)영화·영화인·영화단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②영진위에서 공모사업 심사의 불공정 운용 및 특정 영화·영화인에 대한 배제(특혜) 의혹 규

명 등을 규명과제로 하였다. 한편, 2017. 11. 29.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 영진위 임원 추천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적격자 없음”으로 두 번 더 재공모를 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황조사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사전조사결과 영진위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부 인사 및 조직재편,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등의 진술이 확보된 바, 이와 같은 쟁점들을 추가 규명과제로 정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공통자료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다음의 공통자료들을 이 사건 증거자료로 채택하였다.

[표-1] 기관입수(공통) 자료목록

연번	서명(문서 공통번호)	생산기관	생산일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청1)	청와대	2008. 8. 27.
2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2013~2015, 문예6-2)	문체부 예술정책과	
3	민간단체 15년 예산 지원결정 경위 보고(문예6-3)	위 같음	
4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문예6-12)	위 같음	
5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문예2-1)	위 같음	2016. 9. 9.
6	선언 관련 기사 사이트 주소(문예6-13)	위 같음	
7	블랙리스트 관련 기간 경과 및 현황 분석(문예6-15)	위 같음	
8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문창1)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2014. 10. 22.
9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문창2-1)	위 같음	2015. 2. 25.
10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문창2-2)	위 같음	2015. 3. 16.
11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재부	2008. 12.
12	보도자료(국정1)	국가정보원	2017. 9. 11.

연번	서명(문서 공통번호)	생산기관	생산일
1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국정2-1)	국가정보원	2017. 10. 30.
14	보도자료(국정2-2)	국가정보원	2017. 10. 30.
15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특검7)	박영수특별검사	
16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특검6-8)	박영수특별검사	
17	예술영화 제작지원 접수 결과 및 향후 일정(특검8)	박영수특별검사	
18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김OO→정OO, 문영5-10)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4. 10. 15.
19	위 같음(정OO→이OO, 문영5-2)	위 같음	2016. 7. 4.
20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문영5-3)	위 같음	2015. 3. 3.
21	<다이빙벨> 경과보고(문체부, 문영5-4)	위 같음	2015. 2. 16.
22	<다이빙벨> 관련 부산국제영화제 쟁점보고(문영5-5)	위 같음	
23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현황(문영5-6)	위 같음	2013. 9. 12.
24	대구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문영5-7)	위 같음	2014. 3. 13.
25	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문영5-8)	위 같음	2015. 1. 7.
26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계획(문영5-9)	위 같음	
27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다큐> 상영 보도 관련 보고(문영1-1)	위 같음	2014. 9. 17.
28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문영1-2)	위 같음	
29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문영1-3)	위 같음	
30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문영1-4)	위 같음	
31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문영1-5)	위 같음	
32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문영1-7)	위 같음	
33	<다이빙벨> 영화개요(문영1-8)	위 같음	
34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9)	위 같음	2014. 10. 22.
35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0)	위 같음	2014. 10. 23.
36	<다이빙벨(10.23일목 개봉) 상영관 현황(문영1-11)	위 같음	2014. 10. 23.
37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2)	위 같음	2014. 10. 27.
38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3)	위 같음	2014. 10. 28.
39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4)	위 같음	2014. 10. 29.
40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5)	위 같음	2014. 11. 4.
41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6)	위 같음	2014. 11. 5.
42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7)	위 같음	2014. 11. 9.
43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8)	위 같음	2014. 11. 12.
44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19)	위 같음	2014. 11. 24.
45	다큐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문영1-20)	위 같음	2014. 12. 1.

연번	서명(문서 공통번호)	생산기관	생산일
46	영화 <다이빙벨,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등급분류 보고 (문영1-21)	위 같음	2015. 4. 3.
47	<다이빙벨> 상영반대 입장 보도요지(문영1-22)	위 같음	
48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문영2-1)	위 같음	
49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문영2-2)	위 같음	
50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 보고(문영2-3)	위 같음	2014. 9. 19.
51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안(문영2-4)	위 같음	
52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 요청 건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2014. 11. 6.
53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다이빙벨> 상영요청 건에 대한 회신(문영2-6)	영화진흥위원회	
54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문영2-7)	영상콘텐츠산업과	
55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소송 결과 보고 (문영3-1)	위 같음	2014. 7. 17.
56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관련 보고 (문영3-2)	위 같음	2014. 7. 29.
57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개봉현황(문영3-3)	위 같음	2015. 9. 8.
58	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 관련 검토(문영3-4)	위 같음	
59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개요(문영4-1)	위 같음	
60	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목록(문영4-2)	위 같음	
61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검토 보고(문영4-3)	위 같음	
62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개요(문영4-4)	위 같음	
63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개요(문영4-6)	위 같음	2015. 8. 25.
64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검토(문영4-7)	위 같음	2016. 7. 4.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아래와 같이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이 사건 관련 자료로 채택, 검토하였다.

[표-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이 사건 관련 참고목록

연번	서명	작성(진술)자	작성(진술)일
1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메모내용 정리문서	김영한	
2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2014. 11. 25.

연번	서명	작성(진술)자	작성(진술)일
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2015. 8. 13.
4	진술조서	신OO	2016. 12. 17.
5	진술조서	유진룡	2016. 12. 18.
6	진술조서	박민권	2016. 12. 18.
7	진술조서	조현재	2016. 12. 18.
8	영화진흥위 연혁, 구성 및 주요사업 검토	검찰수사관 김OO	2016. 12. 18.
9	피의자 신문조서	김소영	2016. 12. 26.
10	진술조서	김종덕	2016. 12. 30.
11	진술조서	김희범	2017. 12. 31.
12	김소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김소영	2017. 1. 1.
13	김OO 진술조서	김OO	2017. 1. 1.
14	블랙리스트 이슈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체부 관련자료 첨부	검찰주사보 000	2017. 1. 1.
15	이OO 진술조서	이OO	2017. 1. 3.
16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박OO의 업무용 PC압수물 발취보고	특별수사관 김OO	2017. 1. 3.
17	문OO 진술서	문OO	2017. 1. 4.
18	김OO 진술서	김OO	2017. 1. 5.
19	이OO 진술조서(2회)	이OO	2017. 1. 5.
20	정OO 진술조서	정OO	2017. 1. 6.
21	영상콘텐츠산업과 압수 영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본첨부 보고	특별수사관 김OO	2017. 1. 6.
22	신OO 진술조서	신OO	2017. 1. 7.
23	영화진흥위원회 지원배제 및 상영저지 현황 등 내역정리	특별수사관 김OO	2017. 1. 10.
24	박OO 진술서	박OO	2017. 1. 12.
25	박OO 진술조서	박OO	2017. 1. 13.
26	김OO, 강OO 기록, <다이빙벨> 관련 김기춘 지시 실행사실 보고	검찰주사보 000	2017. 1. 16.
27	진술조서	오OO	2017. 1. 24.
28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관련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 보고	특별수사관 김OO	2017. 1. 30.
29	진술조서	김OO	2017. 2. 1.
30	진술서	김OO	2017. 2. 1.
31	진술서	윤OO	2017. 2. 1.
32	김OO, 박민권, 박OO 증인신문 조서	김OO 등	2017. 4. 25.
33	김OO 증인신문 녹취서	김OO	2017. 5. 19.
34	참고자료 제출	변OO(김기춘 변호인)	2017. 5. 22.
35	손OO 진술조서(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안중범 관련)	손OO	2017. 11. 13.

다. 이 사건 관련 개별자료

그 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자료들을 입수, 검토하였다.

[표-3] 이 사건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09년 영진위 노조투쟁 자료	영진위 노동조합	2017. 12. 15.	
2	2017년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수시 등록 시스템] 운영안내	영진위	2017. 8.	
3	대통령님 비하 독립영화 '철의 여인' 개봉차단 추진(2013. 4. 2.)	국가정보원	2018. 1. 19.	
4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	국가정보원	2018. 1. 19.	
5	영진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보조금 50% 삭감조치(2015. 4. 20.)	국가정보원	2018. 1. 19.	
6	영화진흥위, 비판 영화단체 예산지원 배제계획(2015. 7. 13.)	국가정보원	2018. 1. 19.	
7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삭감 엄선 필요(2015. 9. 16.)	국가정보원	2018. 1. 19.	
8	영진위, '다양성영화 지원' 대상에서 비판영화 배제조치(2015. 9. 24.)	국가정보원	2018. 1. 19.	
9	문체부, 위안부 영화 '귀향' 개봉관 최소화 조치(2016. 2. 16.)	국가정보원	2018. 1. 19.	
10	청와대, 문체부에 국내영화제 지원방안 개선지시(2016. 5. 24.)	국가정보원	2018. 1. 19.	
11	2014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 구성관련 웹메일(나OO→이OO, 2014. 8. 1.)	나OO	2018. 1. 24.	
12	2015 3D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18. 2. 21.	
13	영진위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후보 추천" 문서	영화진흥위원회	2018. 2. 27.	
14	영화발전기금 보조사업 관리규정 개정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18. 3. 3.	
15	영진위 '대국민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4.	
16	<모래가 흐르는 강> 등 다양성영화개봉지원 특정작품 제작계획서 등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5.	
17	대국민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5.	
18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특정영화 제작계획서 등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5.	

2.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62회에 걸친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4]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2014. 영진위 사무국장	진술조서(2017. 9. 20.)
2	윤OO	2014.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진술조서(2017. 9. 22.)
3	OOO	2013. 7.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	진술조서(2017. 9. 25.)
4	OOO	위 같음	진술조서(2회, 2017. 9. 26.)
5	김OO	2014.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진술청취보고(2017. 10. 26.)
6	OOO	2015. 당시 영진위 국제사업부	진술조서(2017. 10. 11.)
7	OOO	위 같음	진술조서(2회, 2017. 10. 26.)
8	임OO	2015.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진술조서(2회, 2017. 10. 27.)
9	임OO	위와 같음	진술조서(3회, 2017. 11. 3.)
10	구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장	진술조서(2017. 11. 8.)
11	O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2017. 11. 8.)
12	박OO	2015. 7. 영진위 경영지원팀장	진술조서(2017. 11. 11.)
13	O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청취보고(2017. 11. 23.)
14	김OO	2015. 영진위 심사지원팀장	진술조서(2017. 11. 24.)
15	OOO	2014. 영진위 국제사업부	진술조서(2017. 12. 5.)
16	김OO	2015.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	진술조서·진술서(2017. 12. 7.)
17	O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2회, 2017. 12. 8.)
18	OOO	2015. 영진위 경영지원부	진술조서(2017. 12. 13.)
19	OOO	2015. 7.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	진술조서(2017. 12. 14.)
20	O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녹취록(2017. 12. 15.)
21	OOO	2015. 영진위 기획팀	녹취록(2017. 12. 18.)
22	김OO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017. 12. 18.)
23	O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018. 1. 17.)
24	OOO	2016. 영진위 심사지원팀	진술조서(2회, 2018. 1. 18.)
25	OOO	2013. 영진위 한국영화정보시스템 담당	진술조서(2018. 1. 22.)
26	O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3회, 2018. 1. 22.)
27	OOO	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018. 1. 23.)
28	김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장	진술조서(2018. 1. 25.)
29	김OO	2015. 영진위 감사팀장	진술조서(2018. 1. 26.)
30	O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2018. 1. 29.)
31	문OO	2011~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조서(2018. 1. 29.)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32	000	2016. 영진위 독립영화 후반기원 담당	진술조서(2018. 1. 30.)
33	000	2011~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018. 1. 31.)
34	윤0	2009. 영진위 노조사무국장	진술조서(2018. 2. 1.)
35	문00	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조서(2회, 2018. 2. 2.)
36	000	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회, 2018. 2. 2.)
37	000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회, 2018. 2. 2.)
38	000	2015. 영진위 감사팀	진술조서(2018. 2. 5.)
39	이00	2015. 11. 영진위 산업진흥본부장	진술조서(2회, 2018. 2. 7.)
40	박00	영화감독(사건제보)	'밤섬해적단의 습격' 배제 관련 보고 (2018. 2. 8.)
41	정00	영화 '밤섬해적단의 습격' 감독	위와 같음
42	000	영화 '빛' 참여	<빛> 지원배제 관련 조사보고(2018. 2. 8.)
43	000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영화제작가협회' 배제 관련 검토보고(2018. 2. 8.)
44	000	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3회, 2018. 2. 13.)
45	000	2015. 영진위 기술지원본부	진술조서(2018. 2. 22.)
46	000	2016. 영진위 독립영화 후반기원 담당	진술조서(2회, 2018. 2. 23.)
47	김00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회, 2018. 2. 27.)
48	김00	<그림자들의 섬> 감독	진술조서(2018. 2. 27.)
49	문00	<할매꽃2> 감독	진술조서(2018. 3. 2.)
50	김00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3회, 2018. 3. 6.)
51	김00	2015. 영진위 감사팀장	진술조서(2회, 2018. 3. 7.)
52	김00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장	진술조서(2회, 2018. 3. 8.)
53	이00	2016. 영진위 종합촬영소장	독립영화 후반기원 배제정황 보고 (2018. 3. 9.)
54	000	2017. 영진위 유통지원팀	진술조서(2018. 3. 12.)
55	김00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4회, 2018. 3. 12.)
56	이00	2015.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사무관)	진술조서(2018. 4. 4.)
57	구00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장	진술조서(2회, 2018. 4. 12.)
58	박00	2015. 영진위 국제사업부장	진술조서(2018. 4. 13.)
59	박00	2015. 영진위 국제사업부장	이메일 진술서(2018. 4. 16.)
60	이00	2017. 영진위 유통지원팀	진술조서(2018. 4. 24.)
61	이00	2016. 영진위 종합촬영소장	진술조서(2018. 4. 24.)
62	이00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떼끄 팀장	진술청취보고(2018. 4. 2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 4조에 따라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이전 조직은 영화진흥공사로, 1999년부터 법률에 따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1999. 2. 8. 영화진흥법 개정안, 시행 1999. 5. 9.).

1995. 12. 30. 제정된 영화진흥법(법률 제5129호, 시행 1996.7.1.)에서는 종전에는 모든 영화제작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던 것을 문화영화 등 비극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소형·단편영화제작업은 완전 자유화함으로써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영화제작신고 제도를 없애 등록한 영화업자가 영화를 제작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편영화, 소형영화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사전심의를 면제하는 등 영화제작(창작), 상영(표현) 등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2006. 4. 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3호, 시행 2006.10.29.)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영화비디오법에 의하면(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문체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부위원장은 호선) 이와 같은 위원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위의 영화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진위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폐지, 영상 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지역영상문화 진흥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편, 이 법에 의해(법 제32조)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독립된 회계로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에 의해 구성되는데 용도로는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영진위원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영진위의 「2015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주요한 사업으로는 제작지원으로 독립영화제작지원,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 다양성가축영화 제작지원(신규 추가 사업), 기획개발지원으로 시나리오마켓 운영 및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한국영화 해외 수출지원, 현장영화 기술발굴 지원 등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영화단체사업 지원, 한국영화 해외상영 행사지원 등이 있다.

영진위원장으로는 1기 1차 신세길(1999. 5. 28. ~ 1999. 9. 5.), 1기 2차 박종국(1999. 9. 6.~2000. 1. 20.), 1기 3차 유길춘(2000. 1. 21.~2002. 5. 27.), 2기 이충직(2002. 5. 28.~2005. 5. 27.), 3기 안정숙(2005. 5. 8.~2008. 3. 7.), 4기 1차 강한섭(2008. 5. 28.~2009. 7. 2.), 4기 2차 조희문(2009. 9. 7.~2010. 11. 8.), 5기 김의석(2011. 3. 30.~2014. 12. 30.), 6기 김세훈(2014. 12. 31.~2017. 6. 19.) 및 현 오석근 위원장 등이다.

나. 문화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관계 법령)¹⁾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

1)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사건2017노2425 등 사건의 판결문(‘다시 쓰는 판결문’) 중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의 위헌·위법성” 항, 기타 판례 등을 인용, 참조하였다.

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각종 정신적 자유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학문과 예술을 비롯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함으로써 문화적 토양을 형성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성·고유성·다양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하는 문화의 특성상 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있어서도 관용과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역시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제21조 2항)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보호대상이 되는 매개체는 담화·연설·방송·음악·영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포함하고, 이와 같은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만일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²⁾.

더불어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제2조),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2) 헌법재판소,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제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진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고 그 사항은 9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데 영진위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진위는 별도의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 규정을 통해 영화진흥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로 하여금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별도의 영진위로 하여금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한 관련 영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국가로 하여금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하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 또는 창작물을 창작, 전시, 상연,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 예술작품 또는 창작물 등을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영진위 위원들의 심의·의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위 문화예술진흥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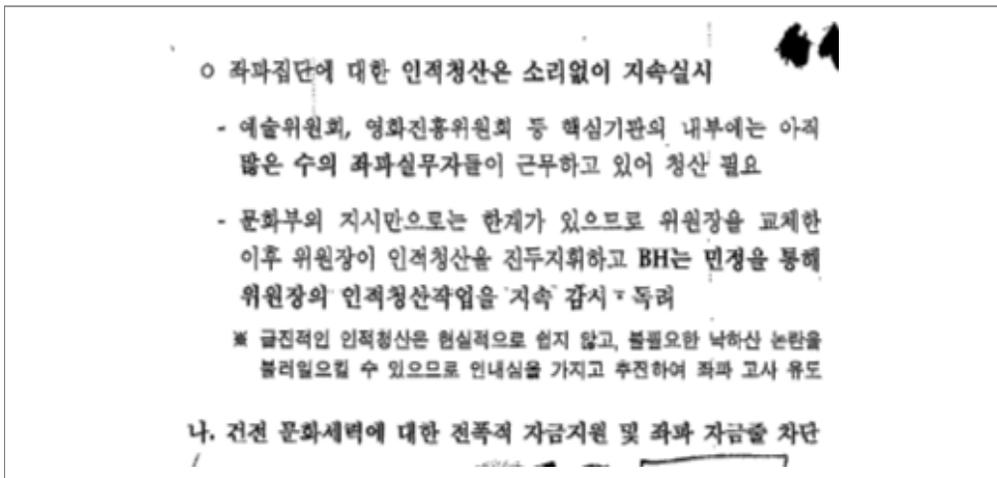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영화계 블랙리스트 기조

가. 이명박 정부

1) 관련 문건의 해제

(1) 2008. 8.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문서번호 청1)

[그림-1] 2008. 8.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문화권력”이 “좌파”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를 “우파”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과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 8.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보면, “문화권력이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하는데 주로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분야”의 내용들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그간 이루어진 좌파의 문화권력화 실태”에 대해서는 기관 “문화부→위원회·국립문화기관→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조직구조를 정립시켜 예산, 사업 등 제도권의 수단을 통해 세력확대”, “예산지원을 민간, 좌파인사들이 주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 좌파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②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 항에는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 “대부분의 영화투자자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③ 이에 따라 “균형화 추진 전략”으로는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 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고,
- ④ “주요대책”으로는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소리 없이 지속 실시” 등 “건전문화 세력을 육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대기업의 수요와 반정부·좌파문화활동 방지라는 정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정부도 상징적 투자(※우선 영진위를 통해 영화분야에 천억원(15편 규모) 펀드조성 추진)”, “문화부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평가를 통해 ’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 ⑤ 또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 추진”, “영화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바,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 “우선 SKT와 협의, SKT는 현재 6. 25 전쟁영웅에 관해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수백억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문화미래포럼 2008. 7.)³⁾

이에 앞서 문화미래포럼은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를 통해 위와 동일한 주장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10. 4. 8. 문화계 뉴라이트 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이 2008년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홍길 위원장에게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였는데, 문건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등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영화제를 비롯하여 서울영상위원회, 경기 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등 각종 단체

3) 이하는 [2017영1 독립영화전용관 영화 검열 및 배제 사건], [2017영3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의 상당수는 좌파영화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영화제 등 각종 기관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이념 편향의 인력에 대한 청산과 활동 정상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정원 개혁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보도자료(2017. 9. 11.)

위 보도자료에는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각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하였음.’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2) 기초의 실행

- ① 2008. 10. 4.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당시 영진위원장 강한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영화정책을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독점했다”, “얼치기 진보주의자, 하루 진보가 한국영화를 망쳤다”라고 하였다(시사IN, 2008. 10. 27.).
- ② 뒤이어 같은 해 10. 17.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진위 지원금 배분이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에 편중되었고 이들은 대체로 “촛불 시위 참가 단체”들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당시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가 그동안 영화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평균 40여 개 단체에 약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했는데 지원단체별로 지원금 내역을 고려하면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등 소수단체에 집중되어 지원금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의 대부분도 이른바 독립영화계열 단체 또는 미디어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들에게 전부 몰려 있는 상태”라고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진위원장과 위원을 특정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예산을 지원한 단체 대부분이 FTA협상 반대 시위, 광우병 대책 촛불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한국영화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원 사업이 실제로는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조직들의 후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③ 2009. 1. 국회 문광위의 「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영진위 관련 “위원장 부산영화제 참석 시 특정이념 관련 부적절한 발언문제 지적”, “공모사업 등을 통해 특정단체에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단체지원사업이 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제작가협회, 영화인협회의 등 소수단체에 지원금의 40%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체지원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등이 기재되었다.
- ④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제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에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2009년 전북독립영화제, 인디포럼 2009,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등 사업들은 촛불 집회 참여에 따라 지원 배제되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진위는 2018. 4. 4. 기자회견⁴⁾을 통해 2009~2010년 위 단체들이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목록에 있음을 밝혔다(이하, 단체지원 사업 배제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다).

3) 영진위에서 “전략”의 관철

- ① 2011~2015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문OO(2회 진술조서, 2018. 2. 2.)은 “영진위는 2008~2009년 사이 4, 5차례 출자사업 감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과정들은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영진위 사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강정이나 용산 관련에 대한 시국 관련 부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인디플러스 관에서 상영 시 개봉일보다 좀 더 미뤄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MB의 추억> 같은 경우 대선에 직면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상영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독립영화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사업인 다양성개봉 지원사업이 강한섭 위원장 시기에 한 해 동안 예산편성에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라 진술하였다.

4) 영화진흥위원회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2018. 4. 4.

- ② 2015.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3회 진술조서, 2018. 3. 6.) 또한 “강한 섭 시절인데 문화부의 간섭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문화부의 입김이 세졌습니다. 사업의 경우도 국회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되곤 했는데 이때부터 문화부에 사전에 사업 계획을 협의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부를 거쳐서 시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2010. 당시 영진위 기획팀에서 대국회업무를 담당한 김OO(녹취록, 2017. 12. 8.)은 “조희문 위원장 부임 후에 2010년에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미디어센터, 현재 미디어트. 민간위탁을 통해서 10년 동안 운영했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트와 독립영화전용관 등등의 공모사업 전환 시도가 2010년 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박근혜정부

1)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문화융성’ 기조

청와대 민정수석실 발간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⁵⁾」(2013. 3.)에는 “문화예술계 좌파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 “문학·미술·영화 등 분야별 조직을 바탕으로 문화계 신주류로 행세하고 있고, 순수 창작활동보다는 맹목적 정책비판 등 정치투쟁에 치중”하고 있고, “문화를 수단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하고 있는데, “쇼박스·CJ E&M 등 대형 영화사들은 단순히 ‘홍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전화 투자를 외면하고, 좌파가 주류인 영화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따라서,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 지원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문제단체 조치 및 관리방안 수립⁶⁾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좌편향 문화예술계 시정 관련 발언 및 지시’를 이어갔다.

- ① 2013. 8. 21.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문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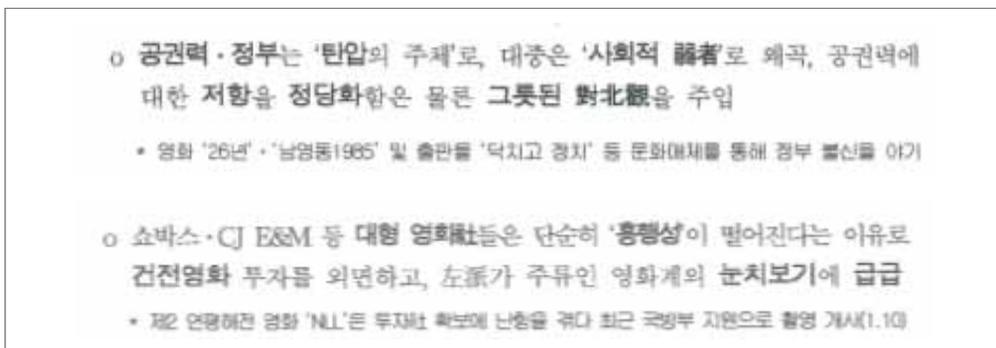
5) 국가정보원은 2018. 1. 2.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문건은 국가정보원에서 각종 정보를 취합·정리하여 작성한 후 2013. 3.15경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동시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추가 배포된 자료로 확인”된다고 회시하였다.

6)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사건2017노2425 등 판결문 등 참조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중복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② 이어 같은 해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중복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된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③ 박근혜는 같은 해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④ 김기춘은 특히 2013년 하반기,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이나 연극 <개구리>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 또는 희화화한 작품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정보보고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초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그림-2] 2013. 3.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의 부분



- ⑤ 2013. 12. 18.경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의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변호인>과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렇

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12. 20.경 실수비에서는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중복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⑥ 김기춘은 2014. 1. 3.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다음날인 1. 4.에도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간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 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 ⑦ 김기춘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김기춘은 그 무렵 소통비서관인 신동철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 ⑧ 위 김기춘의 지시 등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예산 차단]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 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여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 시위참여 등)와 8,000여 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 지지, 舊민노당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을 파악하여 오성운 감독(노무현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광고촬영) 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조사하여 조성재 대구대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 좌편향인사 70명을 향후 임기만료시 해촉하도록 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 친노(親盧)계열과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조치가 필요한 부처]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 ⑨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상황을 김기춘에게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박준우 정무수석은 2014. 6.경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인 조윤선을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설명하면서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무렵 신동철도 새로 부임한 정무수석인 조윤선에게 '보조금 문제와 우파지원 문제가 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다. 좌파단체는 자생력이 강한데 비하여, 우파단체는 정부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를 못한다. 사업공모를 하면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 지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공모사업 심의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좌파인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조윤선은 위와 같은 좌파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정무수석

으로서 정무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였고, 정관주는 2014. 10. 2. 경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받으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를 관장하는 교문수석실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상률 교문수석은 2014. 11. 18. 취임 후,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배제 업무를 보고받고, 교문수석으로서 교문수석실 산하 문체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였다.

- ⑩ 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는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등에 옛나인 필름 등 특정 영화인 및 영화사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수립

- ① 2014. 10.경 김기춘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은 김종덕 장관은, 문체부 송OO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 ② 송OO 실장은 그 무렵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장·과장들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③ 송OO 실장은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 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과 이를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 ④ 김종덕 장관은 2014. 10. 21.경 김기춘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김기춘은 보고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송OO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장관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 ⑤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문건에는 “2013년 반정부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지원 및 영화제 상영→(문제점) 지원 작품 심사 시 정치편향 작품 검증 실패→(개선방향) 심사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 방침을 심사에 적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 필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기초의 적용과 실행

- ① 2017. 8. 17.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는 다음 <그림 4> 등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고합102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5. 문체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사무관의 진술조서(2017. 1. 3.)는 이 실행방안의 심사인력풀 개편에 대해서 “청와대 신OO 행정관은 심사위원 풀을 400명으로 줄이면서 보수적인 사람,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친정부적인 사람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재편하라고 지시”하였다 기재되었고, 같은 증거기록 중 정OO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의 진술조서(2017. 1. 6.)에는 “정치편향 및 반정부 소재 배제”는 “<다이빙벨> 등 좌편향 등의 작품은 사전에 걸러낸다는 뜻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영진위 지원사업 공모자료들에 의하면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년 2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현물 지원 사업에서 지원작(DCP 분야)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4. 3. 13. 문체부의 「대구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특이사항”으로 상영 영화로 이 영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초에 문화부에서 영진위 정책연구팀에 제안해 와서 영화가 전체관람가, 각각 12세·15세·18세 관람가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전체관람가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해서 문화부 영상과에 제출했습니다. 애국건전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명분도 안서고 보수의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영화라는 이름으로 순화시켰습니다. 이 제안이 가족영화제작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했고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 처음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며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의 영화 부분은 영진위와 문화부 영상과가 기획한 것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진술하였다.

- ⑤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윤OO은 (이 문서에 정치편향 작품 상영 여부를 관리하여 문제작품[이 들어 있는] 영화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바, 이는 일종의 검열 및 배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엄밀히 보면 그렇게 보아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영진위가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배제 등으로 보아야 하고, 변명같지만 담당 소관 부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⑥ 위 같은 김OO 작성의 진술서에는 2015. 2.부터 “‘한국영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하고 2016. 1. 최종본을 완료하고 김세훈 위원장, 이OO 미래전략본부장, 문체부 최OO 국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 과장, 이OO 사무관이 참석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음, 이 자리에서 김종덕 장관은 ‘독립영화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장관 입으로 말해야 알겠느냐. 예술위는 지원방식을 잘 바꾸었는데 영진위도 좀 문제일으키지 말아라’는 얘기를 했음. 그 뒤 ‘한국영화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독립영화’라는 단어를 찾아 다른 용어로 변경하였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⑦ 전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김OO(2017. 10. 26. 진술청취. 2017. 12. 6. 작고)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및 기조에 대해 “‘문화융성’ 가치를 내걸면서 평가르기를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지원에서 배제, 괴롭히기까지 하는 작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깊고 집요한지 몰랐습니다. 보수정권이니까 제 입맛에 맞는 문화예술계를 지원, 옹호하거나 반대편 세력에 지원을 덜하는 정도로 가벼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 하고, 또한 “문체부의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지시가) 처음에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서 보다 적극적 가담자로 갔던 것 같다…그들의 요구나 수준이 한 차례 폭풍같았으면 모르겠는데 서서히 집요하게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바람을 수용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기간에 있었던 문체부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이지만, 실행자이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

가. 이명박 정부 시기 영진위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

1) 영진위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저항

- ① 위 임OO이 제출한 노동조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 3. 19. 2차 인사위원회 관련 노동조합은 인사위원장(김OO 사무국장)이 계약직 직원규정, 채용공고문 등에 의거하여 전원해고를 고지하였는데 모두 성적 및 성과가 우수했음에도 근거 없이 방침을 정하였다며, 이는 위원회(기획총괄팀)의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저지하고 동시에 위원장 및 사무국장 퇴진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강한섭 위원장의 경우 “부산영화제 및 국정감사 발언, 독립영화 마케팅 지원, 씨네마테크 지원 공모제 등과 관련 독단적 진행으로 인해 문화부, 영화계, 위원회 위원, 노동조합 등과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위원장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으로 인한 위원회 위상 저하 및 영화계 분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②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2009. 3. 24. “계약직 직원에 대한 사측의 독단적인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비상 임시총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총력결의대회, 중식집회 등의 집회 및 농성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다. 노동조합 투쟁 농성장은 같은 해 4. 16. 임시 철거하였다.
- ③ 2009. 3. 30.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지금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다.’ 제하의 단체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는 “강한섭 위원장 및 김OO 사무국장의 일방적 해고조치를 비판하는 내용, 영진위와 영화계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로 기능했던 여러 소위원회들을 폐지하고 4기 영진위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진위가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으나 이제 4기 영진위와 강한섭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④ 2009. 4. 22.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의 입장 발표문을 보면 “2009. 4. 20. 해고대상 5명 중 2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나 3명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⑤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소속의 주OO(녹취록, 2017. 12. 15.)는 “이명박 정권이었을 때 영진위가 사실은 타깃 기관”이었다, “공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느 하나든 잡아서 죽이면 다른 기관들이 ‘앗 뜨거워’ 해서 ‘개기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영진위가 딱 100명 정도에 그들이 생각할 때 영화계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관 하나 씩… 게다가 영진위가 영화계에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 성향이 약간 진보 쪽이다 보니까 영진위를 타깃으로 이걸 짤짤 흔들어놓으면 다른 기관들이 ‘함부로 덤비면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번 정권은.’라고 인식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거세게 좀 많이 그걸 했었죠. 저희 그때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정원 10명 줄여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2)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

- ① 위 같은 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2009. 3. 24. 사측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력, 손괴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3인(한OO 지부장, 윤O 사무국장, 황OO 정책연구부장)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4. 6.~4. 8.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 ② 2009. 4. 10. 「노동조합 투쟁 주요 현안 중간 경과 보고」에는 “인사위원회 진행내용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인사위원장인 김OO 사무국장은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끝까지 폭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를 상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음”, “또한 사측에서 시행한 이번 고소는 금번 인사위원회의 건 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에 시행했던 노사 실무협의 진행 중에 3층 회의실 문을 파손한 것까지 업무방해 협의 등으로 고소하였음”, “그러나 3층 회의실 문이 파손된 부분은 지난 노사 협의를 도출한 후 한OO 지부장이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만나서 유감을 표명하였고 사측에서도 양해하여 해결된 사항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금번에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였다는 것은 노조를 상시적 폭력집단으로 묘사하여 노조 간부를 구속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됨”, “현재 동 건과 관련 노사 간의 경찰 조사 진술에 차이가 있어, 향후 노사 관계자의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은 자료 중 「조합원 징계 등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2009. 6. 17.)」 제하의 문서를 보면, “2009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 중단 건과 관련 조합원 20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고지, 해당 조합원의 집으로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발송, 사측은 인트라넷 최신 게시물에 게시되어 있던 노조게시판의 글이 모두 보이지 않게 링크를 해제”라고 기대되어 있다.

- ③ 김OO 작성의 진술서에는 “2009. 9. “조희문 위원장이 취임 직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영진위 정원은 110명에서 99명으로 축소되고 정부시책은 2012년까지 자연감원/희망퇴직 방식으로 정원에 맞추라는 것이었으나 당시 영진위는 형식적으로는 ‘희망퇴직’이었으나 사실상 정리하고하였음”, “이처럼 정원축소와 사실상 정리하고, ‘고객지원TF’ 등을 통해 위원회 직원들은 언급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당시 노조 사무국장 윤O(진술조서, 2018. 2. 1.)는 당시 사측의 고소사유에 대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력, 손괴 등이 있는데 폭력은 당시 한OO 노조위원장에게 해당하는데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해임 의결하려 할 때 의사봉을 집어서 그걸로 책상을 내리친 것을 사유로 합니다. 저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해당되었는데 위원회 인사를 개최 중에 중간에 들어간 것을 두고 업무방해라고 하였고 당시 강한섭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김OO 사무국장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김OO 사무국장에게 ‘당신이 뿌꾸기냐’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그런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었습니다.”라 하고, “당시에 강한섭 위원장은 (계약직들을 해고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이들로 직원들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해고 의결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2009. 당시 기획총괄팀장 김OO(진술조서, 2017. 12. 18.)은 “당시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사측 실무대표인 사무국장에게 집어던져서 그래서 형사고발이 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인사규정 상 기소가 되면, 징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문체부나 사무국장도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무국장과도 먹살잡이를 한 적도 있는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 ① 「영화진흥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선언문(2009. 6. 25.)」에는 “위원회가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와 기관평가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 “2009. 7. 2.” 강한섭 위원장의 사표(6. 26.제출)를 문화부가 수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② 2009. 12. 16. 7기 노조 한OO, 윤O 등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주노총 탈퇴의 건이 총회에 상정되었다는 것과 지금까지 벌어졌던 조직력 약화의 상황과 관련되어 모든 책임을 지고 내려가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 ③ 2010. 1. 19 지부장 보궐선거를 시작, 같은 해 1. 26 장OO 지부장의 보궐임기가 시작되었다. 위 장OO 지부장은 「민주노총 탈퇴 재발의를 시작하며(2010. 1. 27.)」에서 “O 고객지원TF 소속 인력의 신속한 일선복귀와 고객지원TF 해체, 지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전임 집행부 3명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괴 등의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 등을 위해 민주노총 탈퇴 재발의”라고 밝혔다.
- ④ 2010. 2. 4. 노조는 투표인원 65명 중 찬성 50명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탈퇴 및 기업단위 노조로 변경을 가결하였다.
- ⑤ 위와 같은 윤O(진술조서, 2018. 2. 1.)는 당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배경에 대해 “사실은 아픈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OO 지부장과 황OO 선배가 노조에 상근하면서 조합원들이 저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위해 행동한 것이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태를 나름 마무리하기 위해 ‘일단 집행부에서 탈퇴 투표를 올리겠다’고 하여 민주노총 탈퇴를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결된 이후 우리가 안건을 올리고 부결되었는데 현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하고 차라리 사퇴를 결의하자고 하여 저희가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퇴를 한 이후 장OO가 노조지부장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총회를 열어 다시 민주노총 탈퇴 안건을 올리고 투표에 부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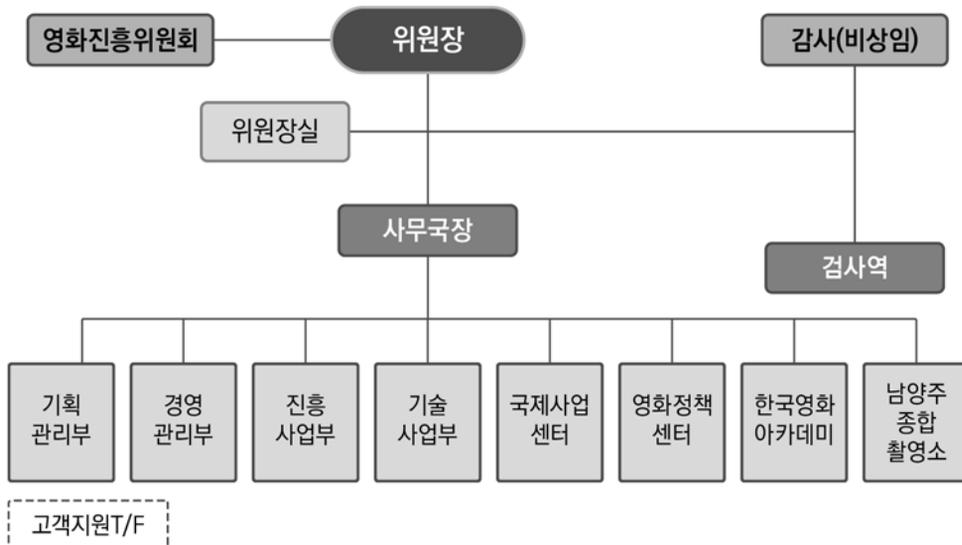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때 당시 상황은 직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원해서라기보다 또한 장OO 지부장도 그것을 원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생을 막아보자, 배려하자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⑥ 위 주OO(녹취록, 2017. 12. 15.)도 “그때 그나마 김OO 본부장이 ‘그래도 같이 일했던 직원들인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막아서…그때 정말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한OO 선배 같은 경우에는 ‘회사 더 이상 못 다닐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거기까지는 막아주신 거죠…[노조탈퇴의 과정은] 압력이었죠. 그게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탈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위에서 내려왔겠죠. 사측에서 얘기했을 때 안 하면 되게 크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라 하며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직원(노조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진술하였다.

4) 고객지원TF 설치 등 인사조치

- ① 영진위가 제출한 인사명령을 보면 2009. 10. 30. 직제개편을 통해 고객지원TF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2009. 11. 4. 인사명령을 통해 이OO, 문OO, 황OO, 한OO, 윤O, 도OO을 이 TF로 발령하였다.

[표-5] 2009.10.30. 개정 영진위 직제표



② 위 김OO의 진술서에는 “영비법에 따르면, 상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문체부는 위원회의 사업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해 승인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문체부는 상근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영화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체로서의 역량을 근본부터 없애버린 뒤,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의 대부분을 사전에 보고받고, 자신들의 구두지시를 따르도록 하였음. 이는 위원회 내부 인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위원회 실무직원이 문체부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과 의견이 달라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행 직원의 상급자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하고 다음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여서, 위원회 직원들은 가능한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길들여져 있는 상태임. 2009년 ‘고객지원TF’ 건이 극명한 사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OO(진술조서, 2017. 12. 7.) (위 고객지원TF 설치에 대하여) “한OO, 윤O는 노조활동에 참여하였고 황OO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또한 전임 김OO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럼으로써 참여정부의 적극 동조자로 일면 낙인찍힌 점이 있어 보인다, 이는 ‘공포감의 조성’(차원)”이라고 추가 진술하였다.

③ 위 김OO은 위원회 조사(2017. 12. 18.) 시 이 직제개편에 대해 “이것은 조희문 위원장이 와서 바로 만든 직제입니다. 당시 저희 기획팀에서 오랜 숙고를 거쳐서 만든 직제개편안이 있었는데 이 안은 우리가 제안한 안도 아니어서 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직내부에 명확히 ‘안테나’가 있어 조희문 위원장에게 제보를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노사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강성이어서 이를 제압하고자 한 것이 강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문OO(2회 진술조서, 2018. 2. 2.)은 당시 일부 직원들에 대해 고객지원TF로 발령한 것에 대해 “고티(고객지원TF)로 발령받은 인사들을 분류해 보면 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황OO, 김OO, 류OO과 같이 전 정권 업무를 충실히 했던 사람들, 당시 영진위 담당 문화부 직원이고, 조희문 위원장과 각별했던 별정직 직원인 OOO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OO, 도OO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OO, 윤O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시국선언 참가자 등 직원들에 대한 징계

- ① 2008. 3. 31. 영화인 165명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나 민노당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심재명, 이은, 조영각, 강석필, 김태용, 권철인, 김부선, 오지혜 등 영화감독 및 배우와 김OO, 도OO, 류OO, 임OO, 황OO, 박OO 등 영진위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현 영진위 노조위원장 OOO이 제출한 노동조합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9. 6. 15. 영화인 시국선언에 동참하자는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이 ‘영화인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조광수, 박광수, 박찬욱, 방은진, 변영주, 봉만대 등 영화인이 참여하였는데 김OO, 김OO, 김OO, 김OO, 류OO, 박OO, 서OO, 양OO, 윤OO, 임OO, 황OO 등 영진위 직원도 11명이 참여하였는데, 위 김OO는 이에 대해 김조광수의 제안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 위 임OO이 제출한 같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7. 17 위 선언 참여 직원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인사위원회 김OO, 원OO, 박OO, 김OO, 이OO, 김OO, 노조 2명).
- ③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문체부에서 당시 민주노총 소속 노조였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이 내려와서 징계하라는 지시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④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2007년까지 정책연구팀장으로 있다가 2008년까지 외국에 객원 연구원으로 연수를 다녀온 뒤 복직을 하고 나서 발령이 나지 않았다. 이는 기간 안티조선 서명운동이나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이 이유로 보이고, 2009년경 이명박 정부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서면 등의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 임OO(2회 진술조서, 2017. 10. 27.)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지지선언을 했던 직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되어 주의경고를 받았는데 징계결과를 각 가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 위 김OO의 진술(진술조서, 2017. 12. 7.)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 “2009년도에

도 영화인 시국선언이 있었고, 여기에 영진위 10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회사에서 주의 경고 등의 경미한 징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사위를 통해서 ‘출석하여 소명하라’, ‘본인 여부를 밝혀라’는 압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진술인 자신의 경우에는 조희문 위원장이 들어오고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하여서 진술인은 ‘자신이 맞다. 이로 인해 회사원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면 주의했어야 했다’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더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 효율적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

1) 영진위원장 및 위원회의 보수 성향 재구성⁸⁾

(1) 위원장 등 임원선발 과정

2014. 3. 29. 당시 영진위원장 김의석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영진위 제출,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문체부의 추천 인사에 대한 회신문 등을 통해 새로운 임원장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2014. 1. 27. 제1차 임원추천회의를 열어 1. 29.~2. 14. 공모를 하고 2. 18. 서류심사, 2. 20. 면접 일정을 결정하였다. 임원추천위원으로는 홍OO, 박OO, 김OO, 이OO, 김OO, 임OO이었다(참고로 당연직 위원으로는 제3차까지 박OO, 제4차부터 제9차까지 김OO, 제10차에는 정OO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하였다).
- ② 2014. 2. 18. 제2차 임원추천회의를 열어 최OO, 김OO, 최OO, 김OO, 황OO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③ 2014. 2. 20. 제3차 임원추천회의를 통해 이들에 면접심사를 거쳐 모두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다.
- ④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진위원장 후보 추천에 대한 회신」(2014. 4. 22.)을 통해 “귀 위원회에서 우리 부로 추천한 영화진흥위원장 후보에 대한 검토 결과 적격자 없음을 통보하오니, 재공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⑤ 영진위는 2014. 4. 23. 제4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같은 해 5. 9.까지 재공모 신청을 받고, 5. 12. 서류심사, 5. 15. 면접심사를 결정하고, 5. 12. 서류심사를 통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면접심사 대상자의 적격자가 없음’을 결정하고, 공모를 잠정 중단하였다.

8) 영진위의 우리 위원회에 ‘상황조사 요청’ 건과 관련이 있다.

- ⑥ 2014. 5. 15. 제6차(서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 공모 및 접수를 같은 해 5. 16.~5. 30.까지, 6. 3. 서류심사, 6. 11. 면접심사 및 후보자 추천을 결정하였다.
- ⑦ 2014. 6. 3. 제7차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8명의 지원자 중 적격자 1인으로 3배수 내지 5배수 후보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천위원들이 “인재발굴(추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⑧ 2014. 6. 5. 제8차 임원추천회의에서는 김OO 임원추천위원이 오OO, 한OO(지난 7차 임원추천위 심사결과 적격자)을 후보자로 하고 7. 7. 면접심사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 ⑨ 2014. 7. 7. 제9차 임원추천위는 위 오OO, 한OO에 대해 면접심사를 거쳐 위원장 후보로 추천 결정하였다.
- ⑩ 2014. 12. 18.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재차 “귀 위원회에서 우리 부로 추천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검토 결과 적격자 없음을 통보하오니, 재추천 등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⑪ 이에 따라 2014. 12. 19. 후보자를 재차 “발굴 추천”할 것을 결정하고, 이OO 추천위원이 김세훈을, 김OO 위원이 김OO을 각각 추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 ⑫ 당시 김종덕 장관은 2014. 12. 31. 김세훈(위원장), 김OO(부위원장), 신OO, 박OO 위원을 2015. 3. 2. 조OO, 김OO 위원⁹⁾을, 2015. 8. 26. 이OO, 김OO, 양OO 위원을 임명하였다.

(2) 위 임원 선발의 배경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김OO의 2017. 1. 5.자 진술서에는 “이전 영진위원장 김의석의 임기는 2014. 1.경까지였는데, 공모가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되는 등 후임자가 부임하지 못한 관계로 2014. 12.경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위원장직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

9) 위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채택한 증거기록을 보면 OOOOOOOO 최OO는 2015. 3. 2. “김OO(동국대 영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타임스튜디오 대표)”에 대해 영진위원으로 긴급추천하는 이메일을 당시 허OO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냈다. 최OO는 이 이메일에서 “저희 라인으로 인물을 구해 긴급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없으나 저희가 컨트롤 가능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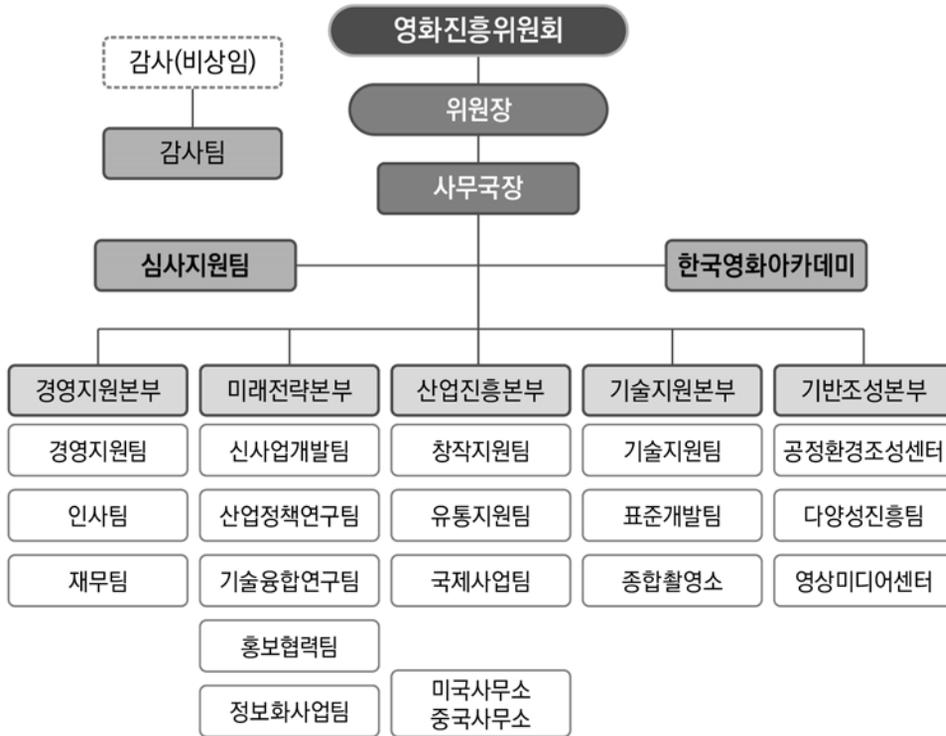
유로 계속 선정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영진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후에 결국 부임한 김세훈 위원장이 문체부 김종덕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첫 번째는 청와대까지 올라갔는데 ‘적격자’ 없었어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추천인사들에 대해서도 다 안 되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체 추천하였는데 첫 번째 추천의 경우에도 적격자 없었으므로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자체 추천으로 김OO과 김세훈의 추천이 되면서 김세훈이 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 “김OO는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사람이고요, 조OO은 우리 부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OO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김OO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영진위원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냐’고 하여서 저는 ‘영진위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추천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영진위원 후보로 내린 것을 알았습니다. 김OO 위원도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한참 후에 되었던 것입니다.”, “김종덕 장관이 오고 나서 김세훈을 믿고 따를 사람으로 낙점하고 청와대에서 이미 검증기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이미 김세훈으로 준비된 상황이고 공모절차 상 두 사람 이상은 추천해야 하니까 당시 <연평해전>이 2015. 6.에 개봉했으므로 김OO과 함께 추천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 하고, 그렇다면 영진위 임원추천위원들이 위 김세훈, 김OO을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김종덕 장관과 직접 교감하기보다 당시 당연직 임원추천위원으로 정OO 과장이 참여했잖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구성은 “영진위원들을 나름대로 친정부 인사로 해놓으면 청와대나 문체부 등의 입장에서 의사를 관철하기 편한 사람들로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조직재편과 관련

- ① 2015. 6. 18. 영진위는 아래와 같이 1국 5본부 19팀제(1원)로 조직을 재편하였고, 같은 해 7. 1. 새로운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박OO, 경영지원본부장은 김OO, 산업진흥본부장 이OO, 기술지원본부장 최OO, 기반조성본부장 김OO 등 체제가 마련되었다.

[표-6] 2015. 6. 영진위 직제 개정



- ② 김OO(진술조서, 2017. 12. 7.)는 2015. 6. 위와 같은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 “우선 심사지원팀을 신설하여서 심사위원들의 의지에 맞게 구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제작과 유통과 다른 상영회 활동이 서로 연계된 것이 독립영화창작 생태계인데, 이것을 다 분리시키고 예전에는 제작지원을 중심으로 배급 등을 연계하였는데 이것을 공모를 통한 재정지원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분절시켜 놓았기 때문에 비판적 영화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③ 이OO(진술조서, 2017. 11. 8.0)는 “문OO 부장은 징계를 받아 다른 부서로 가고, ‘막내’인 자신을 제외하고 산업진흥본부 구성은 모두 바뀌고 다른 동기와 1년차인 신입직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끌어놓고 마음대로 일 시키려고 구성한 것 아니냐는 자괴감이 있다. 우리는 심사공장이고 정책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문제의식도 가질 수 없게 어린 직원들에 일을 엄청 떠안기려고 그런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2회 진술에서도(2회 진술조서, 2017. 12. 8.) “국내진흥

부가 영진위에서 가장 센 부서인데 10년 넘게 일선에서 물러난 이OO 부장과 사업 부서에 처음 온 구OO 팀장과 3년차 직원인 둘, 1년차 고졸 신입 이렇게 팀원 4명을 두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사람들 앉혀 놓고 시키는 일만 수행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과 창작지원팀이 돈을 지원하는 사업부서다 보니 구린 구석이 있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를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과 사업을 잘 모르고 판단력이 떨어진 직원을 배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심사제도의 개편 및 심사위원 후보자군(pool) 운용

1) 심사위원 풀의 구성과 운용

① 영진위의 ‘KOFIC 뉴스’ 2011. 4. 13. 「영화지원 심사를 더 공정하게」를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가 영화진흥 사업의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화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풀’은 영화계 등 외부에서 추천한 122명과 영진위에서 추천한 80명 등 총 202명으로 구성한다. 영진위는 지난 1월 5일에 외부 심사위원 추천을 위한 공고를 냈고, 그 결과 영화단체와 영화인 등으로부터 479명의 후보를 추천을 받았다.

영진위는 곧바로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고, 연출 69명, 제작/PD 47명, 시나리오 20명, 투자 5명, 배급/상영 13명, 학계/평론 30명, 영화기술 10명, 언론 5명, 문학 3명 등 총 202명으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했다.

이후 영진위 사무국과 ‘KOFIC 청렴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심사위원 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KOFIC 청렴옴부즈만’은 외부인사가 영진위 사업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신OO CJ창투 대표, 박OO 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라OO 한국일보 기자 등 3인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논의 결과, 영진위의 모든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풀’에서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것이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영진위의 상임, 비상임을 포함한 9인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

은 영진위의 책임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하는 일은 감사실에서 투명하게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영진위가 제출한 심사위원 풀 의결 관련 자료를 보면, 2013. 1. 28.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12년 기존 심사위원풀 412명, 2013년 신규 추천 심사위원풀 278명 등 총 690명의 심사위원 풀을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 ③ 2014. 2. 25. 영진위 제4차 정기회의의 「2014년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 추천시행 결과보고」를 보면, ‘2014년도 심사위원 풀 구성 및 운영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2014년도 심사위원 풀 구성 및 운영방안’

□ 2014년 심사위원풀 구성 및 운영(안)

• 심사위원풀 구성

- ①감독, ②제작 ③투자/배급, ④작가, ⑤학계/평론, ⑥애니메이션 등 총 6개 직군으로 분류 운영 (변경사항 : 투자/배급군 별도 분리)
- 일반사업군과 예술독립영화 사업군으로 심사위원 별도 운영
- 독립영화관련 사업의 경우 필요시 예술독립 분야 $\frac{3}{5}$ 이상 배정

• 심사위원 선정방식(안)

- 각 사업별 심사위원은 분야별(감독, 제작/투자/배급, 작가, 학계/평론, 애니메이션 등) 고려를 하여 3~5배수 추천하고, 결격심사위원 배제 후, 섭외순서 등을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장이 최종심사위원을 확정함
- 심사위원 추천은 검사역실 입회하에 투명하게 실시함
- 심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 여성비율 30% 이상으로 구성

□ 심사위원 선정방법

- : ① 사업분야별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3~5배수로 추천) → ② 심사위원 섭외 (섭외순서로 섭외하여 위원장이 최종확정)

- ④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각 2013~2016 연도별 ‘국내진흥사업 심사위원 풀’에 의하면 2015년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 풀은 모두 856명으로 2014년 기준 신규로 추가된 사람은 161명이다. 이 중 애니메이션 부분은 24명, 학계 및 평론계는 8명 등인

데 이중 영화진흥위 부위원장 김OO, 연평해전 감독 김OO, OOOOOOOO 최 OO,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김OO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2015년도 ‘첨단영화기술 육성사업 풀’에는 ‘영상기술학회’ 풀(36명)이 별도로 관리되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위와 같은 심사위원 풀 구성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영진위 회의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관련하여 안건으로 다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3~2016 심사위원별 심사참여 현황’을 통해 위 2015년 심사위원 풀에 추가된 이들 중 실제 심사에 참여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다.

[표-8] 2015년 심사위원 풀 추가자 중 심사참여 사례

김OO	2015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학계
	2015	.	가족영화제작지원	학계/평론
	2015	하반기 1단계 1차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	학계
	2016	.	국제영화제육성	평론
	2016	.	시각화개체 라이브러리 구축	학계
김OO	2015	연간	영화단체지원사업	위원
	2015	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제작
	2015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제작
	2015	.	가족영화제작지원	제작
	2015	연말대상전	시나리오마켓	제작
	2016	.	국제영화제육성	제작
김OO	2015	.	글로벌국제영화제육성	학계
김OO	2015	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감독
	2016	.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감독
박OO	2015	1차~3차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위원
	2015	3차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지원	제작
	2015	4차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지원	제작
	2015	.	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II)	애니
	2015	.	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I)	애니
	2015	.	극장용애니메이션기획개발지원	애니
	2016	1차~3차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위원
	2016	.	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I)	애니
	2016	.	프리비즈 제작지원(1차)	위원회 내부
	2016	.	프리비즈 제작지원(2차)	위원회 내부
	최OO	2015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2015		가족영화제작지원	제작
2015	하반기 1단계 2차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	제작
2015	하반기 2단계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	제작
2015	연말대상전	시나리오마켓	제작
2016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제작
2016		가족영화제작지원	제작

- ⑥ 문OO 작성의 진술서(2018. 1. 29.)에는 “2012년경 심사위원 구성은 영화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무국과 9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400~500여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영화계는 영진위 사업에 보이코트를 한 상황이었으나, 독립영화계의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래머 추천 등을 영진위가 받아들이고 2012년경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독립영화관련 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독립영화분야의 심사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여 영진위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영진위 내부의 심사위원 확장의 필요성과 독립영화단체 요구 등을 종합하여 2012년도 다시 제 단체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700여명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150여명의 독립영화분야 심사인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⑦ 2015. 당시 국제사업팀장 김OO(2회 진술조서, 2017. 10. 26.)은 “원래 각 사업부서에서 심사위원 풀을 각자 관리하면서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는데, 김세훈 위원장이 오고 2015. 7. 1.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기존 부서별로 중복된 풀을 통합하면서 축소된 사실이 있고, 새로이 생긴 심사지원팀에서 심사위원 인력풀을 관리하고 온라인 후보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배제의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전보다 심사위원 후보자 수가 대폭 줄었고 영화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고 과거 중견급 사람들이 심사를 해오던 것에서 생소한 이들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심사지원팀의 신설-공정성의 외양

- ① 영진위는 2015. 6. 직제규정을 개정, 심사지원팀을 신설하였는데, 위 김OO(진술조서, 2017. 11. 24.)에 의하면 이 심사지원팀으로 하여금 2016. 4.경부터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전에는 감사팀 추천→위원장 섭외 순위 지정 방식이었다). 당시 심사관리 규정에는 추천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개정 내용은 없었다.

- ② 이OO(3회 진술조서, 2018. 1. 22.)는 “김세훈 위원장은 심사관리규정에 심사위원 섭외순서를 위원장이 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심사위원이나 섭외순서를 ‘비공식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책임질 일이 있을 경우를 우려했기 때문”인데, “당시 김OO 전문위원이 심사관리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저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개정하여서 심사지원팀이 후보추첨이나 섭외순서를 모두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나중에 김OO 전문위원이 책임질 일이 많아질 것으로 의견을 주었으나 김OO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극구 반대한다고 하여서 심사지원팀이 모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주OO(녹취록, 2017. 12. 15.)도 “심사지원팀의 신설은 ‘외부에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잉(showing)’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내부 위원 및 직원의 참여 규정 신설

- ① 2015. 10. 29.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보면 1차 예비심사 위원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도 심사의 성격상 1차 예비심사와의 계속성과 연관성 등 특수한 경우에는 2차 본 심사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위원회 위원, 직원 중에서 심사위 일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원대상이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이 상임 임원 또는 대표로 있는 업체는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을 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삭제토록 개정하였다.
- 영화진흥위,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의 2012. 6. 27.자 및 2015. 10. 29.자를 제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2015. 10. 29.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 규정 부분

심사관리규정, 2012. 6. 27.자	심사관리규정, 2015. 10. 29.자
<p>제6조(심사위원 후보자군)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유능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모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후보자군 내부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후보자군 확보·유지·인원조정은 년/1회로 개선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6조(심사위원 후보자군)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유능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모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후보자 안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위원회 위원 및 내부직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후보자군 확보·유지·인원조정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 ② 이OO(진술조서, 2017. 11. 8.)는 “2015년도 초에 심사위원 풀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OO 본부장이 추가하라고 하여 넣은 사람이 최OO였고, 위원장은 애니메이션 전문분야의 몇 사람을 넣으라고 하여 넣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진술조서, 2017. 12. 18.)도 “김세훈 위원장으로부터 애니메이션 쪽 인원을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임OO(2회 진술조서, 2017. 10. 27.)은 “심사지원팀 이전에는 심사인력 풀을 매해 1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기도 하고,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들을 추천해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국내진흥부에서 취합, 관리해왔다. 그리고 심사위원 추천은 검사역→감사팀장이 담당하였다. 용역이나 평가와 관련한 입찰 평가에는 내부 직원이 참가할 수 있지만, 내부 직원이 특정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런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사업 심사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하였을 때 어느 시점부터인가 5명의 심사위원명단을 3명으로 축소하여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그렇게 빠진 2명의 명단에는 내부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명단에 포함된 직원이 국회 서무담당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온라인 풀 도입과 풀의 재편

- ① 영진위 및 위 임OO이 제출한 2016. 1. 15.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계획(안) 수립 및 시행」에 의하면 “영화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사업 심사전문분야 확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대”를 목적으로 심사위원 후보를 온라인 등록토록 하였다.
- ② 김OO(1회 진술)은 2016. 4.부터 심사위원 후보 추천을 심사지원팀에서 담당해왔는데, “이전에는 심사위원 풀을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것을 김세훈 위원장이 2016. 1. 주간회의에서 온라인 심사위원 후보 등록 시스템으로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파악해서 정보화사업팀 최OO 시스템을 검토 요청을 하고, 2016. 1. 15. 등록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운영하면서 2월말까지 심사위원 지원신청을 받았다. 2016. 3. 30. 확정된 온라인 등록 후보명단을 김세훈 위원장의 전결로 끝났고 위원회 심의 의결까지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③ 임OO(2회 진술)도 (김세훈 위원장이 온라인 심사위원 풀 관련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심사 풀을 제로베이스로 시작한다고 한 것이, 심사위원 풀 전면 재편 또는 ‘물갈이’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인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확보된 심사위원 풀을 활용하고 그 풀들에 기반하여 온라인 풀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폐기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면 재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하자 위원장은 그것을 왜 하는지 내가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심사위원 풀에는 독립영화계 등 오래부터 활동해온 이들이 있었는데 온라인 심사위원 풀에는 이들이 등록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 ④ 이OO(2회)도 “이미 갖고 있던 풀은 독립영화 중심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보다 이를 명분삼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구성했을 것이다. 접수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고, 등록인원은 부족하고 그러면 계속 중복해서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2015. 영진위 경영지원부의 송OO(진술조서, 2017. 12. 13.)는 “(온라인 풀 등록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아 했던 것은 접수를 받을 때 통상은 심사위원 추천은 항상 24시간 365일 하는데 2016년 2월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의아했습니다. 심사위원 풀 등록은 타 기관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영진위에서는 온라인 등록을 마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⑥ 한편, 위 송OO의 진술 및 송OO이 제출한 「2017년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수시등록 시스템 운영 안내」에 의하면, 2017. 8. 1.부터 온라인 심사위원 후보 관련 신규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상시등록 시스템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지원배제 관철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

- ① 김OO(1회 진술)은 “2015년까지는 위원장이 섭외순서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는 이 권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후로는 위원장 참여 권한이 없어졌고, 자신이 심사위원 후보 추천 풀과 섭외순서를 정한 것에 기준해서 작성된 문서에 결재를 해서 각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했다.”라고 하였다.
- ② 그런데 임OO(2회 진술)은 “당시 심사지원팀장(김OO)이 ‘위원장이 연락이 안되네.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확정해주어야 할텐데'라며 위원장이 연락이 안 되어서 전전공공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리고 보고한 심사위원 후보와 달리 심사위원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 이OO 등 사업담당에게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③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김OO(진술청취, 2017. 11. 23.)은 “(당시 김OO 본부장은)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사업 관련하여 48편의 영화를 선정하는데 그 영화에 체제비판적 내용이 담겨 있을까봐 전전공공하였다. 당시 독립영화계는 공모사업 지원을 대부분 보이콧한 상황에서 접수 편수와 시놉시스가 팀장, 본부장에게 보고가 되면 작품선정위원회가 ‘친정부적’ 성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추천 방식의 예비심사위원 후보자 선정은 없었다. 사업팀에서 기존 풀에서 3~5배수 정도의 후보자를 추של러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후보자를 빼거나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섭외순서까지 정해주었다. 그것을 심사지원팀에 제출하면 심사지원팀은 후보자와 섭외순서까지 문서를 작성하여서 사업팀에게 다시 제출하여 주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심사위원 선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거의 대체로 반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는 위원장이 후보자와 섭외 순위,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나 형식상, 문서상으로는 심사지원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같은 이OO(2회 진술조서)는 “2016. 당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계속 중복이 되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기계적이지만 공정성이라도 가져가자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진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온라인 풀을 없애던지 심사위원 풀을 증원하자라고 위원장에게 제기했지만 의견수렴된 적이 없다. 그 뒤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중복이 되니까 반드시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누군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 하고, 또한 (3회 진술조서, 2018. 1. 22.) “항상 이OO 본부장에게 심사위원 추천 결과 및 섭외순위를 받았기 때문에 섭외순위 1~2 순위가 반복된다면 사전 연락 및 섭외를 해놓고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고 하였을 수도 있다” “이OO 본부장은 사업부서를 오랫동안 떠나 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심사위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이OO 부장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협조적인지, 어떤 이들이 심사에 많이 참여한 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OO 본부장이 ‘알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추

진할 경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을 하고 팀장님이 나 본부장이 위원장 심사계획을 보고할 때 위원장이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것을 보류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추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심사계획을 보고 하면 심사위원을 섭외하거나 확정하지 말라고 하여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섭외를 추진하고는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2015년 이후 심사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사례들에 대해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김OO와 박OO는 위원이고 김OO는 강한섭 위원장 시기에 사무국장이고 최OO는 제작자 중에 보기 드문 우파로 알려진 사람인데 박근혜 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김세훈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로 심사위원에 선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OO나 김OO 경우 섭외근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대상자로 제가 추천했습니다.”라 하고, “MB 정부 시절 조희문 위원장 재임 시 추천을 했는데 위원장이 칸느에 있으면서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특정 작품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해당 심사위원들이 이를 폭로하는 바람에 조희문 위원장이 해임되는 단초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천은 반드시 했으나 14~15년 들어서면서 추천을 하는 진행횟수가 많아지고, 필요한 심사위원 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공모사업 중 사업팀에서 일부 심사위원을 미리 선정하고 이를 검사역실이나 이후 심사지원팀에 보내서 날인만 득하고 다시 이를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심사위원을 선정한 사업들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영화단체사업지원사업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기타 규정의 개정(보조금 관리규정)

- ① 연합뉴스, 2016. 10. 14.자 기사에 의하면 국회 전재수 의원실은 “불법시위를 주축,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영진위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제의 규정은 2015. 10. 29. 개정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중 제4조”이다. “개정 전에는 ‘보조금은 법 제25조 및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었다”고 하였다.
- ② 영진위가 제출한 ‘위원회 규정 제개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 7. 영진위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직제규정,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

- 규정,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규정 등 상당 수 규정들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 ③ 이 가운데 당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보면, 위 전재수 의원실이 제기한 바와 같이 2015. 10. 29. 개정안에는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0] 2015. 10.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개정 전(2014. 4. 24.)	개정 후(2015. 10. 29.)
<p>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은 법 제25조 및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한) ① 보조금은 법 제25조 및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p>

- ④ 위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 것인데, 2015년도 이 지침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2015. 1. 2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①항에 의하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련 별표 3. 기준은 위와 같은 기재부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별표 3의 위반행위 처리기준).

[표-1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부분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p>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p> <p>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p> <p>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p>	<p>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p>

- 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침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2017. 12. 6.)하였다.
- ⑥ 2018. 1. 기재부의 위 지침에는 같은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정부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된 단체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⑦ 이와 같은 규정은 2017. 2. 23. 및 2018. 1. 5. 개정 시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12] 2018. 1.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2017. 2. 23. 개정	2018. 1. 5. 개정
<p>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한) ① 보조금은 법 제25조 및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보조사업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p> <p>-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이하 생략)</p>	<p>제4조(보조사업의 대상) 보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에 규정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p>

4. 문제영화·영화인(단체) 블랙리스트 관리

가. 영화 관련 블랙리스트

1) 리스트 해제

- ① 2017. 9. 11.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비판 세력 퇴출 건’ 조사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 82명 중 영화인이 52명(강성) 포함되어 있다.
-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감독들은 다음과 같다.

[표-13] 2017. 9. 11. 국정원 개혁위 발표,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인 52명

영화감독(52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여균동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양윤모 김경형 정윤철 오지혜 변영주 윤인호 박진표 김대승 김지운 권철인 권병길 황철민 공미연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 이윤빈 조성봉 최진성 최태규 김조광수 김동현 김선화 김태완 김화범 남태우 맹수진 민병훈 박광수 손영득 송덕호 안현주 유창서 원승환 이지연 이지형 이승희일 이찬현 장현희 장형윤 조영각 최송길 최유진 최은정 함주리

한편, 이 가운데는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권해효, 문소리,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등 8명의 배우도 포함되어 있다.

- ② 2013. 3.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의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현황”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4개 단체가 문제단체로 포함되어 있다.

[그림-4]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중 ‘좌파 문화예술계’ 부분

영화	영화제작가협회 대표 : 이훈(영화평론 이사)	○ 문성근·명계남 등 주도 아래 작년 총선·대선에서 ‘경연교체’를 주장하며 연대 활동 강화
	영화감독조합 대표 : 이훈익 감독	○ ‘江陵래 프로젝트’(4대강)·‘아란의 언론’(보수언론)·‘두개의 문’(용선사고) 등 시대교발성 독립영화 제작·상영을 지원하며 反정부 활동 전개
	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 최은홍 프로듀서	○ 최근 ‘영화정책 5년 평가’ 포럼(1.22)을 개최하는 등 소론 부재·재재 강화 등 정부의 영화정책 비판 활동을 강화하여 조직 단합 모색
	독립영화협회 회장 : 임창재 감독	

- ③ 2014. 5.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는 옛나인필름, 강릉시네마테크, 미디액트 등의 영화단체·배급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재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지원액의 단위는 백만원).

[표-14]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포함 영화단체

번호	사업자단체	지원내용	지원액		특이사항	조치결과
			2013	2014		
30	(주)옛나인필름	우수 한국영화 외국어자막 추석상영 기획전	34	-	·〈남영동 1985〉 배급사	지원배제
34	강릉시네마테크 (권정삼)	문화예술기부활성 화(조건부기부금)	11	-	·단체를 이끄는 박광수 사무국장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번호	사업자단체	지원내용	지원액		특이사항	조치결과
			2013	2014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35	미디어엑트	2013토요미디어 문화학교 <출발! 청소년 마을여행>	10	-	·새정치추진위원장 김혜준이 광화문에 만든 대표적 미디어센터. 학생대상으로	지원배제
36	미디어엑트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지원	-	15	맑시즘 교육을 하는 영상교육기관 역할	지원배제
38	(사)대안영상문화 발전소 아이공	비영리전시공간·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지원	30	30		지원배제
39	(사)대안영상문화 발전소 아이공	시각예술행사지원	30	-	·'아이공'이라는 단체명에 '주체'라는 뜻 포함.	지원배제
40	(사)대안영상문화 발전소 아이공	시각예술행사지원	-	40	평등사회주창, 대안영상을 통한 사회운동 전개	지원배제
41	(사)대안영상문화 발전소 아이공	문화예술기부활성화(조건부기부금)	4	-		지원배제
42	비투이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	4	·<MB의 추억>이라는 전직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지원배제

④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2017. 8. 입수한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는 '부산국제영화제-구름비(바람이 분다)' 등 영화와 강릉시네마떼끄, 시네쿠프, 미디어엑트, 비투이, 아이공 등 영화단체, 옛나인 필름 등 영화사, 최용배 등 영화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5]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종류	단체명	사업내용 및 사업내용	지원금종류
영화·공연	간이예총, 간이극단	개방형 문화공간인 '간이예총' 운영 (2014. 10. 1. 개관)	일반지원금
	예술·교육문화재단	· 400여명의 예술인 지원사업, 간이극단까지 지원사업	
공연·전시	문화재단(문화재단)	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2014. 10. 1. 개관)	일반지원금
	문화재단(문화재단)	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2014. 10. 1. 개관)	일반지원금
영화·공연	간이예총, 간이극단	개방형 문화공간인 '간이예총' 운영 (2014. 10. 1. 개관)	일반지원금
	예술·교육문화재단	· 400여명의 예술인 지원사업, 간이극단까지 지원사업	

- ⑤ 위와 같은 예술정책과 제출의 「리스트 - '16.9.27현재」(2016)에는 국제교류공모 사업에 임흥순 감독이 국정원 지적인물로, 문화예술명예교사 사업 관련 류승완 감독이 청와대 지적인물로, 세계 책의 날 기념 책드림콘서트 초청작가로 이준익 감독이 국정원 지적인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수의 영화인·영화단체·영화사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다.
- ⑥ 국가정보원은 2017. 10. 30.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공개된 2014. 3. 19. 국정원이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문제인물 249명의 리스트('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을 제출하는 데 이 중 영화인이 104명 포함되어 있다¹⁰⁾.

[표-15]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현황(249명)' 중 영화 분야(104명)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129	영화	강석필	성미산마을 사람들을 소재로 한 다큐 '춤추는 숲' 제작	B
130	영화	고미희	코리아픽처스 사원	C
131	영화	공부성	18대 총선시 진보신당 지지	C
132	영화	공수창	진보의 합창 공동제안	C
133	영화	곽용수	인디스토리 대표이사	C
134	영화	권철인	영화 '원더플 라디오' 등 감독	C
135	영화	권해효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인모임 가입	C
136	영화	김경형	폭력버스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C
137	영화	김광수	청년필름 대표	C
138	영화	김규리	탁현민 연출 북콘서트 사회	C
139	영화	김기덕	영화 '빈집' 등 감독	C
140	영화	김대승	민노당 당원	C
141	영화	김동욱	우노필름 조감독	C
142	영화	김동원	다큐영화 '명성' 등 감독	B
143	영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C
144	영화	김명준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학교' 감독	C
145	영화	김민오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등 미술감독	C

10) 2017. 10. 31. 국정원은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를 위원회로 제출하는데 이에는 위 249명이 등급별 표기되어 있고, 2014. 2.~2016. 9.간 문체부로부터 8,500여 명의 인물검증 요청을 받아 '문제인물'로 선별 통보한 348명 중 실명 확인된 181명의 리스트에 대해 확인하였다.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146	영화	김보연	영화진흥위 영화제작센터장	C
147	영화	김부선	18대 총선시 진보신당 지지선언 및 노회찬 후보 지원	C
148	영화	김부현	메쉬필름 대표	C
149	영화	김삼력	영화 '아스라이' 감독	C
150	영화	김성제	18대 총선시 진보신당 지지	C
151	영화	김수덕	영화진흥위 영상기술팀	C
152	영화	김여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C
153	영화	김우형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감독	C
154	영화	김유진	영화 '노랑머리' 등 감독	C
155	영화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대표	B
156	영화	김일란	뉴스타파 앵커	C
157	영화	김재록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선언 참여	C
158	영화	김지영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다큐 '백년전쟁' 감독	B
159	영화	김진영	올댓시네마 이사	C
160	영화	김태용	민노당 당원	B
161	영화	김태은	영화 '애인' 등 감독	C
162	영화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	C
163	영화	남선호	영화 '모두들 괜찮아요' 감독	C
164	영화	남인영	폭력버스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C
165	영화	노흥진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연출	C
166	영화	도동준	영화진흥위 정책연구팀 연구원	C
167	영화	류승완	영화 '부당거래' 감독	C
168	영화	맹수진	폭력버스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C
169	영화	명계남	노사모 회장	B
170	영화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C
171	영화	문성근	백만민란 프로젝트 제안	A
172	영화	문소리	민노당 당원	C
173	영화	박영훈	영화 '댄서의 순정' 감독	C
174	영화	박중훈	18대 총선 시 진보신당 지지	C
175	영화	박찬욱	진보신당 당원	B
176	영화	박현진	영화 '아카시아' 조감독	C
177	영화	박흥식	영화 '인어공주' 등 감독	C
178	영화	방은진	단편영화 '트레일러' 등 연출	C
179	영화	배형준	영화 '짬' 등 감독	C
180	영화	백승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감독	C
181	영화	변영주	민노당 당원	B
182	영화	봉만대	영화 '동상이몽' 등 감독	C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183	영화	봉준호	민노당 당원	B
184	영화	부지영	영화 '지금, 이대리가 좋아요' 감독	C
185	영화	서수민	서울영상위 기획홍보팀장	C
186	영화	손영득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	C
187	영화	손재곤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 등 감독	C
188	영화	송명섭	전국영화산업노조 촬영지부 부지부장	C
189	영화	신동일	영화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등 감독	C
190	영화	심광현	한예종 영상원 교수	A
191	영화	심재명	명필름 대표이사	C
192	영화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촬영지부 지부장	C
193	영화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B
194	영화	양윤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인모임 가입	B
195	영화	여균동	영화 '세상밖으로' 등 감독	C
196	영화	오멸	제주독립영화협회 공동대표	C
197	영화	오지혜	민노당 당원	B
198	영화	윤성호	영화 '은하해방전선' 감독	C
199	영화	이성중	전국영화산업노조 촬영조합원	C
200	영화	이용관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	C
201	영화	이은	MK픽처스 대표	B
202	영화	이준익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B
203	영화	이진구	영화 '청연' 감독	C
204	영화	이창동	영화 '초록물고기' 등 감독	C
205	영화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B
206	영화	이해영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감독	C
207	영화	이현승	중앙대 영화과 부교수	C
208	영화	이혜원	크로스필름 대표	C
209	영화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B
210	영화	임순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감독	C
211	영화	임창재	영화 '하얀 밤' 등 감독	B
212	영화	임흥순	단편영화 '꿈이 아니다' 등 감독	C
213	영화	장진	영화 '웰컴투동막골' 등 연출	C
214	영화	장철수	영화 '신부수업' 등 감독	C
215	영화	장항준	영화 '라이터를 켜라' 등 감독	C
216	영화	정병각	영화 '코르셋' 등 감독	C
217	영화	정윤철	영화 '말아톤' 등 감독	C
218	영화	정종준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인모임 가입	C
219	영화	정지영	6.15선언실천 남측위 공동대표	C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220	영화	정진영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C
221	영화	정찬	민노당 지지 영화인선언 참여	C
222	영화	조영각	민노당 당원	B
223	영화	조종국	조우필름 대표	C
224	영화	차승재	6.15선언실천 남측위 공동대표	B
225	영화	최금학	단편영화 '불똥' 등 감독	C
226	영화	최종원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 촉구	B
227	영화	최진성	다큐 '남한강' 등 감독	C
228	영화	최진욱	영화산업실무교육센터 센터장	B
229	영화	최현규	독립영화 '오빠, 들려' 등 감독	C
230	영화	최현용	영화전략기획센터 소장	B
231	영화	홍지유	다큐 '3xFTM' 등 공동제작	C
232	영화	황철민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B

위 104명 중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관련하여 사건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기재)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하여 영화진흥위 직원은 김보연, 김수덕, 도동준, 김인수('시네마서비스 대표'로 기재됨, 후에 영진위 사무국장) 등인데, 이 가운데 김수덕, 도동준의 경우는 2008. 3. 제18대 총선 시 진보신당지지 선언에 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김보연의 경우 '영화진흥위 영화제작센터장'으로 기재된 부분은 '영화정책센터장'의 오류로 2009~2010년 사이 담당 직무였다. 위 김수덕, 도동준의 경우 2010. 9. 고객지원TF로 인사발령 조치된 이들로 일치한다.

- ⑦ 2015. 5.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는 영화인 2,665명의 리스트를 작업(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데, 파일의 제목은 '작업증(중요).xls'이고 문서정보에 의하면, 만든 날짜는 2015. 5. 19.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2015. 7. 6.이다.

11) ※ 위 104명의 명단 중 2008. 3. 진보신당지지 선언 참가자는 53명으로 강석필, 고미희, 공부성, 김경형, 김광수(김조광수), 김대승, 김동욱, 김민오, 김부선, 김부현, 김삼력, 김성제, 김수덕, 김우형, 김유진, 김재록, 김진영, 김태용, 김태은, 남선호, 남인영, 노홍진, 도동준, 류승완, 맹수진, 모은영, 박영훈, 박찬욱, 박현진, 박홍식, 배형준, 변영주, 봉만대, 부지영, 서수민, 손영득, 손재곤, 송명섭, 신동일, 심재명, 안병호, 오지혜, 윤성호, 이은, 이진구, 이해영, 임순례, 임창재, 장철수, 조영각, 최금학, 최진성, 최현규, 황철민임.

[그림-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PC 저장, 2,665명의 영화인 명단 부분

	A	B	C
2582	전수밀(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83	전승일(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84	전희련(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85	정광호(영화작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86	정기훈	문재인지지선언	
2587	정상민(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88	정성우(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89	정성호(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0	정세훈(시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1	정수진(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2	정용택(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3	정우영(시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4	정운(사진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5	정원옥(문화연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6	정윤섭(영화작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7	정윤철(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8	정윤희(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599	정은교(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0	정지영(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1	정지우	문재인지지선언	
2602	제병득	부산영상계문재인지지선언	
2603	조두리(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4	조석준(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5	조성희(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6	조수철(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7	조연수(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8	조영각(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09	조유희(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0	조용선(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1	조재명(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2	조정근(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3	조정준(영화프로듀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4	조창호(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5	조혜영(연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6	조혜진(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7	조혜진(배우)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2618	주경숙	문재인지지선언	

그런데 2018. 1. 31.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이른바 ‘9,473명의 블랙리스트’에 의하면 이 명단 중 가장 최종 ‘선언참가’ 내용은 2015. 5. 1.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이고, 각 리스트의 출력일은 2015. 5. 7.자이다. 그런데 위 영

상콘텐츠산업과 2,665명의 명단은 이 9,473명의 명단과 일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의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기록 중 2016.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장 이OO의 녹취서(2017. 5. 2.)에는 “(이 2,665명 명단의 작성자에 대해) 청와대에서 다이빙벨 이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리스트가 발표되면 그 리스트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정부비판적인 영화는 별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당시 사무관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영진위 내 블랙리스트 관리

- ① 김의석 위원장 시기 영진위 사무국장 김OO(진술조서, 2017. 9. 20.)는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 “당시 국정원 직원 이OO[이OO를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3기 조희문 위원장 시절에 김OO 등을 중심으로 하여서 좌편향 등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김OO(3회 진술조서, 2018. 3. 6.)은 2013년 국정원 이OO이 지시하여 좌편향 등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솔직히 문화나 예술 쪽이 대부분 진보라고 봅니다. 보수의 지향을 가지고는 예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친화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만 따져서 구두로 얘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김OO(진술조서)는, (국정원 발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영진위 직원들에 대하여) “몇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적으로 참여한 정치활동의 참가를 이유로 했다 면 외부에서도 가능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김OO 본부장을 통해서 국정원, 경찰 등에 수시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하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④ 김OO(2회 진술조서, 2017. 10. 26.)은 “2014년도 중반경, <다이빙벨>이 문제시 되기 전에 문체부에서 자신에게 영화계 인사들에 대한 성향분석을 엑셀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 메일이 온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 박OO 부장에게 ‘황당하다’고 하니 박OO 부장은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와서 ‘잘못 전달되었다. 문체부에서 알아서 한다더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박OO(이메일 진술서, 2018. 4. 16.)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 요청 메일의) 발신

인으로 기억하는 문체부 손OO 사무관과 통화를 했는데 “당시 손OO 사무관은 위원회 국제업무 관리함에 따라 우리 부서와 업무연락을 주로 해서 그런지 우리 부서로 잘못 보냈다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 사항을 김OO 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손OO 사무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2015. 1.~2016. 5.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위 김OO은 2016. 4. 17. 재차(통화진술), “자신이 진술한 시기 또한 정확한 시기는 아니며, 박OO가 기억을 보다 정확히 하는 편이어서 박OO의 진술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하였다.

- ⑤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의 나OO(진술조서, 2018. 1. 23.)은 “예전에 문OO 부장이 있을 때는 리스트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OO 부장은 김OO장을 거쳐야만 지원여부 등의 명단이 나왔기 때문이고 이OO 부장은 우리끼리 소문에 명단을 갖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명단이 바로 바로 전달되었다 등의 이야기들을 직원들끼리 나눈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문제영화(건전영화)’에 대한 정보보고 및 관리

1) 문제영화 대한 정보보고와 관리

(1) 문체부의 보고와 관리

- 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가 2017. 9. 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문영4-1 내지 문영4-7 문건을 보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이후,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 부천판타스틱 국제영화제 등 각 국제영화제의 상영영화를 검토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 위를 보면 “국가정체성 훼손”, “국가수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의 상영 여부 그리고 특별히 “세월호”를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보고를 담당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OOO(진술조서, 2017. 9. 25.)은 “<다이빙벨>로 인하여 왜 그것이 상영작에 올랐는지 먼저 파악하지 못했는가 문책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영화제 측에서 행사개요와 출품작에 대한 줄거리 등이 오면, 사회여론화될 소지가 있는 작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추슬러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BH 등 윗선의 관심사이다 보니 작성하여 보고하였을 것입니다”라 진술하고,

당시 영상콘텐츠사무관 윤OO(진술조서, 2017. 9. 22.)은 “국가수반 명예훼손이나 반체제 등 준거기준을 윗선에서 주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 영화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하였을 것으로, 손OO 사무관이나 이OO 사무관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이 문서는 윤OO 사무관의 후임인 손OO 사무관이 담당이었을 것인데, 손OO 사무관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과장과 상의하여서 많이 했을 것이고 필요하면 제가 도와주고 그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2014 부산국제영화에서 <다이빙벨>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에 서 영화제 상영 영화에 대해 스크린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되 ‘문제없음’으로 보고하고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기록 중 정OO의 진술조서(2017. 1. 16.)에는 “당시 신OO 청와대 행정관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처럼 VIP를 비하한 영화, 세월호 관련된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는지 물어보았고, 자신이 그런 영화에 대해 보고하면 신OO 행정관은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교문수석까지 보고를 하였을 것이다”, 이 보고의 결재라인에 대해서는 “주로 최OO 국장, 윤OO 실장을 거쳐 박민권 1차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가 “청와대로 보낼 문건으로 공유를 하는 차원이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표-1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의 전주영화제, DMZ국제영화제 등의 상영정보 보고

<p><4-1></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개요 </div> <p>□ 영화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2000년부터 개최된 독립·예술영화 중심 영화제 ○ 기간 : 2015. 4. 30(목)~5. 9(토), 10일간 *개막식: 4:30(목) 시상식 5:6(수) ○ 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일대 * CGV 전주효제전주, 메가박스 전주(객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전주종합경기장 등 ○ 상영작품 : 47개국 200편 ○ 주최/주관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회(위원장 고석만) * 후원 : 문체부(예정), 영화진흥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 행사내용 : 개막식·시상식, 전주프로젝트마켓, 학술세미나, 감독과의 대화 및 배우와의 만남, 야외행사 이벤트 등 <p>※ 총예산 4억 (지방비 27억, 후원·협찬 4억, 영화기금 10억 신청) - '15년 영진위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에 10억 신청, 4월 중순 심사 예정' '14년 6억 지원</p> <p>□ 상영영화 검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독립·예술 영화 작품들로 주로 일상의 소재를 다루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수반을 부적절하게 다루는 작품은 없음(한국작품 53편)</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영화가 성장물 등 일상적 소재 드라마와 실험적 영화임 - 감정노동자, 허원근 일병 의문사 등 사회문제 소재 영화 일부 있음 ※ 감정의 시대(서비스노동자/23분), 독학재(허원근 일병 의문사/11분) ○ 국보법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열린사회와 그 적들/33분/권학준 감독)가 있으나 동법을 부정하거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 * 국기보안법 위반한 주인공이 보안관찰처분을 받던 중, 형사로부터 친구를 감시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일어나는 인간적 고뇌/심리적 갈등을 다룸 	<p><4-6></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개요 </div>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015. 8. 25(화) / 영상콘텐츠산업과</p> <p>□ 영화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평화, 소통, 생명 ○ 기간 : 2015. 9. 17(목)~9. 24(목), 8일간 ○ 장소 : 일산 메가박스 백석 6개관, 파주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3개관 ○ 상영작품 : 40개국 101편 ○ 주최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DMZ Docs조직위원회(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 주관 :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조계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문체부 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기금 1억 원 * 총예산 17억 (지방비: 15억, 영화기금1억, 기타 1억) - 징관축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예정) </div> <p>□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영화제로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수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은 없음 ○ 다만, 세월호 소재 다큐 영화 2편 포함 - 업사이드 다운(감독 김동빈) : 다큐, 70분 ※ 한국전쟁 부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font-size: x-small;"> <p>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그 날의 소용돌이와 19명의 전문가들이 밝히는 숨겨진 이면을 통해 한국사회의 병폐를 들여다본다. 인터뷰로만 구성된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오랜 모순을 일체적으로 되짚고, 우리가 왜 지금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형식으로 지식에 대한 그리움, 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등 일방적 내용을 다루며 부정적 시각, 왜곡되거나 일방적인 비판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9.4km(감독 김묘인) : 다큐, 6분 ※ 청소년경쟁 부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font-size: x-small;"> <p>고등학교인 감독이 세월호 사건 이후 1년 간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p> </div>
--	--

(2) 영진위의 보고와 관리

① 위 같은 김OO(진술조서, 2017. 10. 11.)은 “문체부에서 박OO가 그때 그때 연락을 받아 영진위가 지원하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작은 지역영화제에도 독립영

화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탈북’이나 ‘인권’ 소재 관련하여 문체부가 정보를 요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OO가 한국영화정보업무(코비즈)를 담당했던 김OO에게 정보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¹²⁾

- ② 위 같은 김OO(위 같은 진술조서)는 “위원장실에 근무할 때(2009. 11.~2011. 8.까지) 김OO 위원장 실장으로부터 노무현 또는 김대중 관련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아 인터넷 검색을 하여 나온 것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2015. 당시 다양성진흥팀 이OO(진술조서, 2018. 1. 17.)는 “예술영화인정이나 등급분류면제추천과 관련해서 신청 접수된 내역들은 주기별로 또는 정치비판 영화가 있을 때 문체부에 계속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같은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문제영화’ 동향 보고 체계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필요시, 예를 들어, <OOO>, 다양성영화개봉지원작, 인디플러스 개봉 시,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동향 보고를 올리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건전영화’에 대한 정보보고와 관리

- ① 김OO(위 같은 진술청취)는 “김OO 본부장이 업무부서의 부장 등을 경유하지 않고 신입사원인 OOO이나 OOO 등에게 ‘친정부적’, ‘우파적’인, 이른바 ‘건전영화’에 대한 제작 현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황OO이 진술인에게 김OO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할 문건이라며 잘 작성된 것인지 보여준 바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황OO(진술조서, 2018. 1. 22.)은 이와 관련하여 2013. 6. 4. 당시 김OO 본부장에게 보낸 ‘최초 제작현황조사(8편)과 추가조사(3편) 보내드립니다.’ 제하의 웹메일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영화(8편) 제작현황 보고”에서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에 대해 “고 육영수 여사 일대기 영화화, 제작 중단 확인”, <OOOO>¹³⁾에 대

12) 이에 대해 박OO은 ‘문체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김OO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 한편, 코비즈는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 영문사이트로서 코비즈는 영문사이트는 영문정보만을 다루고 있으며 ‘탈북’이나 ‘인권’ 영화정보는 존재하지 않음(18.11.6.).

13) 이 영화는 <OOOO>라는 다른 제목으로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에서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해 “2년째 북한에서 억류돼 있는 신OO씨 모녀 ‘OOOO’ 이야기가 영화화. 제작확 인불가” 등이 기재되고 이어 “한국영화(3편) 제작현황”으로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제작중단 확인), <아덴만의 여명(가제)>은 “영진위 DB 조사 중 제작지연으로 제작중단 판단하였으나 대규모 작품으로 예상하여 일류급 감독 내년 3월 계약 예정 과 더불어 홍OO 작가 및 추가로 일류 작가 섭외 예정 중에 있다 함”, <아, 흥남(가제)>에 대해 “1950년 흥남부두 철수 작전 영화화 글로벌 영화로 진행 중” 등이 기재 되어 있다. 또한 2013. 11. 25. 같은 김OO에게 보낸 웹메일 ‘영화 수요일 제작현황 보고입니다’에는 이 영화 <수요일>이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시대극”으로 “중국 합작 제의 있었으나 거절”, “서OO 국회의원 제작간담회 참석”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2013. 12. 3.에는 한국전쟁 당시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소재 영화 <청야> 제작현황, 2013. 12. 30.에는 “북한 지하교회 실화바탕 크라우드 펀딩 제작”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제작현황, 2014. 12. 19. ‘<두 인터뷰> 중간현황 보고입니다’에는 김정은 암살 사건을 다룬 이 영화의 제작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황OO은 “제작상황판 영화를 보면 무수히 많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특색이 한국전쟁과 애국을 강조하는 영화들 일색이어서 의도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특이한 점을 알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귀 위원회 중간조사결과 언론발표나 동료들과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김OO 본부장이 국정원과 연계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이와 같은 작품들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위와 관련하여 김OO(3회 진술, 2018. 3. 6.)은 “국정원에서 영화 목록을 전화로 불러 주며 상황 파악 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정책팀에 국정원에서 불러준 리스트를 주고 알아보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대략 제작사가 선정됐는지, 시나리오가 완성됐는지 배우가 섭외됐는지 등을 기록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김기춘 실장이 호국보훈영화를 장려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보파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시 제작판을 담당하고 있는 황OO에게 직접 정리하여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가. 키워드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김OO의 2017. 1. 5.자 진술서에는 “원래 국정원 IO 배OO 전무는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2014년경부터 저에게 ‘대북’,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편취’ 등의 용어를 쓰면서 영진위 지원대상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영화에는 크게 보면 정부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작품이 포함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불온한 당신’, ‘자백’ 등의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들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OO 전무는 이러한 문제영화 명단을 듣고 ‘그 영화들은 지원에서 배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에게 국정원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으니 이 영화를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전했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영진위 위원장에게도 보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이와 같은 영화를 검색하는 방법은 “출품작 상영작 목록의 시놉시스(줄거리나 개요)를 보고 찾는 것입니다. 출품 상영작 목록을 제출할 때 거기에 줄거리나 개요를 간단하게 쓰게 되어 있는데, 줄거리 부분에 세월호 관련이나 박근혜 관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는 시놉시스에 ‘세월호 관련’이라고 적혀 있어, 출품 상영작 목록을 보고 파악해서 신OO에게 특이 사항을 보고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김OO(2회 진술조서, 2018. 2. 27.)은 “문체부는 시국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경우에는 제가 특정 영화에 대해 지적이 되면 ‘이 영화는 어차피 소수영화이고 상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은 영진위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하면 국정원은 수긍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국가원수나 국가에 대한 편취’, ‘대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문제영화’를 걸러내는 키워드에 대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거나 반북, 간첩, 공권력에 저항하는 등의 해당 시기 시국 사건과 연관된 키워드가 발견되면 배제 일순위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당시 영진위 창작지원팀장 구OO(2회 진술조서, 2018. 4. 12.)은 “당시 접수내역을 김OO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나서, 사후에 김OO 본부장이 위와 같이 ‘세월호’나 ‘국정원 비판’을 다룬 영화들의 특정 작품에 대한 접수 서류를 요구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

업담당자인 000를 통해 그와 같은 작품들의 접수 서류를 전해주었습니다.”, “접수서류로는 신청서, 시나리오, 사업자등록증, 연출자 경력, 제작계획서 등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열

1) 국가정보원의 검열

- ① 2014. 독립영화제작지원 담당의 나00(3회 진술)은 “통상 김00 본부장이 지원사업 신청 접수 리스트를 다 받아 왔는데 13년까지는 특별히 배제 또는 지시 관련해서 언급을 한바가 없고, 14년 이후 리스트 목록이 넘어 가면 김00 본부장이 사업담당자보다 영화 소재 뿐 아니라 영화 제작자 또는 감독의 성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리스트 검증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해당 리스트 목록인에 대한 시위 참여 경력, 소속단체, 정치적 성향 등 영화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파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영화진흥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양성영화개봉지원 등을 담당하는 다양성진흥팀장 김00(2회 진술조서, 2018. 3. 8.) 또한 “(2015년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김00) 기반조성 본부장이 저에게 시놉시스를 국정원에게 보내주라고 하여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국정원은 그 시놉시스와 접수현황 등을 보고 배제 작품에 대해 압박한 사실에 대해 저에게 연락을 해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위 나00의 후임으로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등을 담당한 이00(2회 진술조서, 2017. 12. 8.)는 “사업 신청접수가 끝나면 문자로 몇 편 접수되었다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2016년부터 매번 보고때마다 ‘김00 본부장과 상의해서 진행하세요’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 때부터 김00 본부장에게 목록을 제출했다. 사실 다른 부서와 본부장과 상의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업목록을 가져갈 이유도 없다. 이00 부장이 퇴사한 후 위원장이 김00 본부장과 상황공유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③ 위 같은 김00(진술조서, 2017. 12. 18.)은 “2013년 하반기(김기춘 비서실장 (2013. 8.~2015. 2.)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함)부터 국가정보원 배00 정보관으로부터 위에서 언급된 영화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지원사업 접수한 것들 중

에 제목과 시놉시스를 함께 보고 선별하였다.”, “해당부서에 위에 말한 기준을 주고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을 걸러내라고 지시하였다”, “선별된 문제작품들은 국정원에 유선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문체부의 검열

- ①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문제영화를 ‘스크린’하는 과정에 대해 “(지원신청) 접수를 받으면 접수 리스트가 정리되고 이를 김OO에게 신청서 원본 그대로 전달합니다. 때에 따라 제가 일부 발췌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부에는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서 유선으로 불러 주고 김OO 본부장과 공유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수시로 일상적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적게는 하루에 5회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라 하고, 이에 대해서 문체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전달 관련해서는 김OO의 역할이므로 김OO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화되어 있었고, 이를 이OO 사무관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이OO(3회 진술조서, 2018. 1. 22.)는 “일단 사업팀에서 심사계획이 나오면 우리 내부는 문체부 담당 주무관에게도 보고를 합니다. 신청접수 편수, 신청 현황 및 내역, 심사계획, 심사위원 구성 등을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 작품 현황 요청까지는 하지 않지만 목록이 전달되면 작품 관련해서 참여자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미리 스캔하고 배제 지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와대의 검열

- 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국정원 정보관이 영진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미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문체부가) 체킹하기 전에 국정원과 영진위 간에 이미 스크린이 끝났습니다. 문OO이 사전에 국정원에서 스크린해서 김OO 본부장과 잘 정리했다라고 보고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한편 <지술>은 배제지시가 있었으나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 청와대에 지원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오명 감독이 예술영화제작지원과정에서 배제를 받았는데 <지술>때문인 것으로 짐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이와 같은 ‘스크린’에 청와대의 관여에 대해서 “저는 주무부처인 담당사무관에게 모두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H의 신OO이라는 이름을 들은바 있습니다. 당시는 신행정관이라고 들었는데 후에 신OO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사업의 진행 과정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문화부 차원이나’고 묻는 과정에서 이OO 사무관이 ‘BH의 지시다’라는 답변을 했고 ‘BH 누군데’ 하고 재차 묻자 ‘응. 뭐, 신행정관이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OO 사무관의 지시사항은 BH 구도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라 진술하였다.

다. 배제

1) 국정원의 배제 지시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이OO의 진술조서(2017. 1. 5.)에는 “매해 공모하는 영진위 지원사업(독립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 배급사업 등)에 작품 리스트와 영화 개요를 신OO 행정관에게 보내주면 신OO 행정관이 정부 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을 띠는 작품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이를 영진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영진위는 친소관계가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지원에서 배제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② 이OO(3회 진술조서, 2018. 1. 22.)는 김OO 본부장이 (배제해야 할 작품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정황상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이전 진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OO 본부장이 때로 특정 작품에 대해서 시놉시스나 제작계획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적들이 있어서 무엇을 떨어뜨려야 하는 작품이구나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특정작품들은)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작품이 하나이면 딱 기억이 날 텐데 워낙 사업들마다 물어오는 작품이서, 너 개 정도로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먼저 영진위 내부에서 신청 접수 목록이 김OO에게 보고가 되고 이를 짐작상 국정원에 보고를 하면 배제 여부에 대한 지시가 저에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문화부에서 관련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지원

배제 또는 배급 및 상영 방해 등의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프로젝트, 자가당착, 다이빙벨 등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와대·문체부를 통한 배제 지시

- ① 위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영진위를 통해서 위와 같은 배제를 하는 경우 그 체계나 과정의 실행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지시받고 영진위 담당자에게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대부분 수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 파트너이기 때문에 문체부 방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뒤이어 “영진위 개별 공모사업에서 지원 신청 및 내용을 국정원 및 문체부에 전달하면 이를 다시 청와대로도 전달→국정원 및 청와대는 이를 분석, 지원배제 대상작품(단체나 개인) 선별→문체부로 지원배제 지시→문체부는 영진위로 이를 하달하면, 영진위는 공모사업 심사과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온 것”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② 한편 김OO(4회 진술)은 (이와 같은 검열 및 배제 과정에서 영진위원장의 관여에 대해서) “최종협의 내용이나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내용이 모두 공유되었습니다. 지원배제 관련된 작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위원장이 했습니다. 모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위원장이므로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심사과정에서의 배제 주문

- ①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선정하면 ‘영진위 예산이 삭감된다’라는 의사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했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위원장이 선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 영화를 거론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배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김OO(3회 진술조서, 2018. 3. 6.)은 또한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주로 국가보안법 또는 간첩 관련된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접수현황을) 최우선적으로 보았습니다. 사업담당자와 같이 검토를 했는데 부담스러운 소재가 발견이 되면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외대상으로 체크를 하고, 이후 사업팀에서 심사위원에게 당시 분위기나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 받은 심사위원은 눈치를 채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입니다. 사실 심사위원 선정에 일부 개입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방식은 제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외 대상이 되는 주제나 문화부쪽에서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를 흘렸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자기검열과 순응

- ① 김OO(4회 진술조서, 2018. 3. 12.)은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사건은 청와대, 국정원, 경찰, 문체부 등 핵심권력 및 정보기관의 관여와 개입 및 영진위원장을 포함한 영진위원, 간부 및 직원들의 관여 아래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여와 관련하여 영진위 간부 및 직원들은 모두 한결 부담감을 갖고 강요에 의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던 상황입니다”라 하고, 특정 작품들의 배제 실행과 관련해서(3회 진술) “문체부의 지시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로서는 제가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할 정도였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위 OOO은 “당시 담당자로서 의사 결정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직급체계나 조직 분위기가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본부장의 의견이 절대적 힘을 발휘했고 저의 위로 팀장 등 또한 본부장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상황이어서 제일 막내 주임인 제가 그것을 거부하기에는 두려운 점 또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주OO(녹취록)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동료들끼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이야기들은 있었다. 그렇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 그런 거에 사실은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2017. 영진위 유통지원팀 소속 이OO(진술조서, 2017. 4. 24.)는 “부적절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바로 윗 팀장 등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료나 감사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데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데, 특히 저 이후 입사한 이들은 매우 어려운 경쟁 구도를 뚫고 입사한 처지여서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순응’하거나 그냥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첫째, 영진위 소속 직원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여도 문체부에 새로 부임한 관료들에게 늘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역학관계의 불균형이 부당한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체부와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입사 때부터 직무교육 외에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체부의 지시는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지시가 전달되는 체계가 극히 폐쇄적입니다. 사업담당부서와 문체부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업무지시가 이뤄짐으로써 담당자 개인이 아닌 부서단위에서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④ 위 같은 김OO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대강’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나 다큐, 세월호 이후에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독립영화나 다큐에 대해서 여차피 상부권력, 정보기관에 알려지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그러한 작품들이 신청,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보고하는 분위기들이었다…영진위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검열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했다.

6.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

가.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1) 2013년 상반기

(1) 이 사업의 개요

영진위의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안) 보고」(2013. 3. 12.),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요강 공지」,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선정심사 결과」,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예비심사 집계표」 등 당시 공모 및 심사자료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방식(포맷)으로 제작 완성된 다양성영화의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P&A)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필름 및 디지털매체로 제작 완성된 작품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영화로서 극장개봉을 계획 중인 작품이다. 신청은 1개 신청사(인) 당 1개 작품으로 제한한다. 지원예산은 4억 5천만원으로 작품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다.

(2) 신청 및 지원작 선정

- ① 2013년 상반기의 경우 접수기간은 3. 4.~3. 8.까지인데 모두 39편이 접수되었다. 영진위가 제출자료 중 당시 신청작 <모래가 흐르는 강>의 제작계획을 보면 이 영화는 감독: OO스님, 제작사는 초록의 공명, 공동제작 및 배급으로는 (주)시네마달로 기재되어 있다.
- ② 같은 해 3. 14.부터 3. 22.까지 심사를 진행, 재택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첫째날과 마지막은 출석심사를 하였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17] 2013.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위원

구분	성명	분야	경력	비고
심사위원 (5인)	안OO	감독	<나의 마음은지지 않았다> 등 연출	심사위원장
	이OO	감독	<집으로>, <오늘> 등 연출	
	강OO	제작	CGV 무비플라주 (전)팀장	
	육OO	학계/평론	영남외대 교수, 영화평론가	
	맹OO	학계/평론	전주국제영화제 (전)프로그램머	

심사결과 <지슬> 등이 평점 70점 이상을 얻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평가한 작품 중 고득점 순으로 모두 9편이 지원작으로 선정(3천만원 5편, 2,600만원 1편, 2,100만원 2편, 2,000만원 1편)되었는데,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평점 70점 이하를 얻어 탈락하였다.

(3) 특정작품 배제 관련

- ①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처음 시작은 2012년인지 13년인지 헷갈리는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의 경우 완성작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스크린을 하고 배제지시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OO 본 부장을 통해서 처음 배제 지시를 받았습시다. 문화부에서의 배제지시는 사후에 국

정원의 스크린에 걸리는 것 중심으로 연락이 왔고 영진위 국정원 담당에게서 주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중간 역할을 김OO 본부장이 했습니다. 심적으로 받은 부담감이 다소 적어서 김OO 본부장에게 좀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심사위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영화는 배제해달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같은 문OO(전화면담 보고, 2018. 4. 6.)은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 지원사업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이 탈락한 경위에 대하여 “이 영화는 ‘시네마달이 배급했다는 점¹⁴⁾, 이전 정부의 4대강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라는 점, 단식 등을 통해 활발하게 사회적 고발을 해왔던 OO스님의 활동 내용이 문제시 됐던 점 등이 심사에서 걸려내야 하는 사유”였고, “제출한 지원 신청서 검토 과정 중 첫 번째 서류인 영화 제작계획서에 시네마달이 배급사로 명시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배제 작품으로 구분했고, 다음에 내용을 검토하며 배제 여부를 검토”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반면, 2015년 오멸 감독의 <지슬>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문OO은 “2013년경에는 김기춘이 아직 비서실장으로 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천안함 프로젝트가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상영되기도 하는 등 외압 작동기제가 아주 엄격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놉시스의 내용을 제주 4.3사건이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제출하면 걸리지 않았습시다.”라 하고,

당시 문체부 이OO 사무관(진술조서, 2018. 4. 4.)도 “청와대에서 오멸 감독의 <지슬>을 굉장히 싫어했고 이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가 왔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선댄스영화제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서 <지슬>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슬>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는) 청와대 신OO 과장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영상콘텐츠산업과가 반대하여서 배제가 관철이 되지 않았습시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당시 <모래가 흐르는 강>에 대한 심사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14) [2017영14 (☞)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시네마달은 2012년 <짬다 큐 강정>의 배급으로부터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고 영화 <다이빙벨> 배급 이후 더욱 이 적용이 강화되어 다수의 작품들이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다.

[표-18] 2013.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모래가 흐르는 강' 심사집계표

접수번호	작품명	안OO	욱OO	맹OO	이OO	강OO	계	평균
35	모래가 흐르는 강	77	44	60	46	76	182	60.7

2) 2014년 상반기

(1) 신청 및 지원작 선정

① 사업의 내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이 사업 관련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안) 보고」(2014. 4. 18.), 「선정 심사결과」 등 영진위 제출자료를 보면, 당시 접수기간은 2014. 4. 7.~4. 11.까지 모두 49편이 접수되었다. 영진위가 제출한 <구름비, 바람이 분다>의 마케팅계획서를 보면, 이 영화는 감독 조OO, 배급은 ㈜시네마달, 2013년 제18회 수상 내역으로 부산국제영화제-비프메세나상 특별언급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림자들의 섬>은 신청인은 김OO, 제작사 미디토리, 배급 및 홍보마케팅은 ㈜시네마달, 2014년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4. 24.~5. 16.까지 제출서류와 DVD를 자료로 하여 재택심사를 하고, 5. 16.에 출석심사를 가졌다.

② 당시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표-19] 2014.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위원

구분	성명	분야	경력사항	비고
심사위원 (5인)	노OO	감독	<검은 갈매기><허수아비들의 땅><마지막 밥상>	
	강OO	제작(여)	전)CGV무비콜라주 팀장	
	한O	제작	<웨딩드레스>, <연애>프로듀서, 전 PGK사무국장	
	명OO	홍보(여)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영화홍보마케팅양성 모그커뮤니케이션즈 홍보팀장, 한국영화및 외화 다수 마케팅	
	김OO	학계	영화평론가, 한국영화학회 부회장	심사위원장

③ 예비심사결과 영화 '뭇' 등 9편(극영화 5편, 다큐멘터리 4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는데, <구름비, 바람이 분다>는 아래와 같이 평균 57.7로 지원에서 탈락하였다.

[표-20] 2014.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집계표

접수번호	구분	작품명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합계	평균
10	극	못	96	96	94	93	93	472	94.3
38	다큐	슬기로운 해법	90	94	91	93	92	460	92.0
26	극	춘하추동 로맨스	86	90	85	84	80	425	85.0
50	다큐	51+	86	84	84	88	80	422	84.7
44	다큐	논픽션 다이어리	86	82	81	85	82	416	83.0
18	극	족구왕	77	78	74	74	70	373	75.0
39	다큐	60만 번의 트라이	76	75	77	72	72	372	74.3
46	극	야간비행	76	82	72	72	74	376	74.0
21	극	마녀	76	75	71	72	70	364	72.7
29	극	순천	65	65	62	68	68	328	66.0
25	극	마이보이	66	65	41	68	63	303	64.7
2	다큐	자유의 언덕	66	65	30	68	62	291	64.3
47	다큐	미라클여행기	60	65	22	68	65	280	63.3
9	극	속희	65	57	16	65	68	271	62.3
43	다큐	거미의 땅	66	53	46	68	68	301	62.3
40	다큐	망원동 인공위성	60	65	63	60	60	308	61.0
48	극	디렉터스 컷	66	53	44	65	65	293	61.0
8	극	안녕, 투이	63	53	30	65	68	279	60.3
23	극	용문	56	57	22	68	68	271	60.3
17	다큐	우리가족	65	53	52	65	62	297	60.0
20	극	셔틀콕	66	57	56	65	58	302	60.0
19	다큐	촌, 금가이	56	65	36	68	58	283	59.7
16	극	북쪽에서 온 여행자	60	65	32	68	53	278	59.3
6	다큐	철의 꿈	55	57	30	65	68	275	59.0
13	다큐	프랑스인 김명실	60	65	50	60	55	290	58.3
4	극	부곡하와이	65	65	45	64	33	272	58.0
28	극	그댄 나의 뱀파이어	66	53	56	65	35	275	58.0
32	다큐	아이들	50	57	40	68	66	281	57.7
49	다큐	구름비-바람이분다	60	63	0	64	50	237	57.7

(2) 특정작품 배제

문OO(1회 진술)은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하여 “14년도 상반기에 제주 강정마을 관련 다큐〈구럼비 바람이 분다〉, 14년 하반기에는 한진중공업 해직 노동자 관련된 〈그림자들의 섬〉 등이 배제되었습니다.”라 하고, “이러한 다양성영화 개봉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영진위 담당 정보관의 스크린을 거쳐 김OO을 통하여 내려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문OO은 이를 위해 “사전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문제될 수 있는 작품은 선정하지 말라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정작품을 특정하기 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이거나 이전 정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이 들어가면 독립영화 예산 파이가 줄 수 있으니 잘 판단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심사위원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나머지 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14년 하반기

- ① 「2014년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계획(안) 보고」(2014. 8. 28.), 사업내용은 전과 다르지 않고, 지원예산은 224백만원(작품당 최소 20,000,000원, 최대 30,000,000원 이내 차등지원)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2014.08.04(월) ~ 08.08(금)이었는데 온라인 접수한 50작품 중 결격사유 3편 제외를 제외하고 47편(극영화 27편, 다큐 20편)이 심사대상이었다.
- ② 당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21] 2014.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심사위원

구분	성명	분야	경력사항	비고
심사위원 (5인)	문OO	감독	이방인, 나비, 로망스	
	김OO	제작	프로듀서〈죽어도해피엔딩〉,시나리오마켓 전문영위원	여
	고OO	제작	〈개들의 전쟁〉, 〈검은 갈매기〉 프로듀서	
	유OO	홍보마케팅	역도산, 연애의목적, 가문의 영광	여
	김O	학계/평론	전북대 교수, 전주국제영화제 전부위원장, 건시네마 대표	심사위원장

- ③ 2014.8.28 ~ 9.18까지 재택심사와 출석심사를 거쳐, 〈반짝이는 박수소리〉 등 모두 9편(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 3편)을 지원작으로 선정(기준은 100점 만점 절대평

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을 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평가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 사업자 수 이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결정)되었는데 영화 <그림자들의 섬>은 아래와 같은 점수를 얻어 탈락하였다.

[표-22] 2014.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집계 중 <그림자들의 섬> 부분

접수번호	구분	작품명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합계	평균	순위
28	다큐	그림자들의 섬	50	50	58	52	47	257	50.7	39

- ④ 문OO(1회 진술)은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하여 “14년도 상반기에 제주 강정 마을 관련 다큐 <구름비 바람이 분다>, 14년 하반기에는 한진중공업 해직 노동자 관련된 <그림자들의 섬> 등이 배제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2015년 상반기

(1) 사업내용

「2015년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등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방식(포맷)으로 제작·완성된 다양성영화의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P&A)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전국 5개관 이상의 극장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개인으로 하며, 개인은 지원약정 체결 전까지 ‘영화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15년 상반기 지원예산은 225백만원(작품당 최소 20백만원~3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이다.

(2)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①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심사계획(안) 보고」 및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예비 심사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업은 2015. 5. 11(월)~5. 15.(금)까지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작품은 총 44편이고, 예비심사는 2015. 7. 10.(금)~7. 21.(월) 동안 재택심사, 7. 21.(월)에는 충무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심사평가를 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은 장OO, 최OO,

전OO, 김OO, 김OO였다.

- ② 이 결과 아래의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중 극영화는 6편, 다큐멘터리 4편으로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70점 이상 작품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액은 3,000만원 1편, 2,500만원 1편, 2,000만원 7편이었다.

[표-23]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선정작품

접수번호	작품명	신청사(인)	대표	상영시간	지원금 (단위:만 원)
2015-05-13-00004	울보	이진우	이진우	98분	3,000
2015-05-15-00038	소꿉놀이	김수빈	김수빈	106분	3,000
2015-05-15-00023	들꽃	(주)인디플러그	고영재, 김정석	114분	2,500
2015-05-13-00008	울보 권투부	엠앤씨에프	조은성	90분	2,000
2015-05-12-00002	기프트드	전재홍	전재홍	103분	2,000
2015-05-15-00041	위로공단	주식회사 옛나인필름	정상진	94분	2,000
2015-05-15-00036	거미의 땅	김동령	김동령	150분	2,000
2015-05-14-00016	눈이라도 내렸으면	야간비행	박준범	99분	2,000
2015-05-14-00020	오백년의 약속	안재민	안재민	68분	2,000
2015-05-13-00010	별이 빛나는 밤	공귀현	공귀현	82분	2,000

- ③ 한편, 영화 <그림자들의 섬>은 평점 66.7점으로 22위, <밀양 아리랑>은 평점 62.3으로 38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는 평점 57.3으로 42위, <불안한 외출>은 평점 54.7로 44위를 차지하여 각 지원작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 ④ 심사위원 선정에 대하여 당시 이 사업 담당자 OOO(2018. 1. 17. 진술조서)은 “당시 추첨을 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김OO 팀장이 추설했고 감사팀의 사인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팀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팀이OO 과장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못해 준다고 상당히 화를 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김OO(3회 진술)은 “당시 종전 심사위원 참여 풀을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심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실무진에서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첨을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소통이 잘되는 사람들

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 하면 이 경우, 결국 지원배제 의사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특정영화에 대한 지원배제

- ① 위 000이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 7. 20. 「심사 결과 최종자료 (웹메일)」은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하여 심사평가표(순위)를 정리하여 당시 기반조성본부장 김00에게 보낸 것인데 “본부장님, 심사결과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로공단 지원작에 포함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위 이메일과 함께 보낸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접수현황」에는 아래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58년 개띠 몽상가 달쿠샤>, <불안한 외출>, <위로공단>에 특별히 표기되어 있다.
- ③ 위 같은 000은 (당시 신청작품 중 지원배제된 작품들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기반조성)본부장이 접수표를 받아서 X표시를 해주었는데, <그림자들의 섬>, <불안한 외출>, <밀양아리랑>, <위로공단>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 <위로공단>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높게 주어서(‘<위로공단>은 다른 작품들보다는 미술성이 뛰어났고,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은 작품이어서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확실히 기억하는 것들이고 더 있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X표시된 작품들의 목록을 확실히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중간, 중간 본부장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특정 작품들을 거론하면서 ‘본부장님, 이런저런 작품들의 합계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한 게 있어서 한 번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림-기] 영진위 000 제출의 '2015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접수표'

- ④ 위 000은 이 같은 지원배제 과정에 대해 “X표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알고만 있으라고 하였는데, 2015. 7. 11. 개최 일에 향후 심사일정을 이야기하면서 평가일 당일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 가집계표 작성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채택 심사가 열흘 동안 있었고 2015. 7. 21.에 최종평가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 3, 4일 전에 가집계표를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받아서 그 정리한 결과를 팀장 및 본부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가일에 최종집계 시에는 ‘위로공단’을 제외하고는 낮은 점수들로 채점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의사전달은) “팀장 및 본부장 등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⑤ 위 000은 위 배제작품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고, <그림자들의 섬>은 “한진 중공업 노조투쟁을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감옥에 나오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출소하여 외출을 나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는 내용”, <밀양아리랑>은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다룬 다큐”, <위로공단>은 “여성들 고용에 대해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 비판하는 영화”라 하고 이러한 영화들이 배제된 사유는 “정부 및 정책을

비판하는 영화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였고 이외에도 신청사에 대해서도 검토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⑥ 김OO(3회 진술)에서 <불안한 외출>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특별한 보고 및 조치 등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네. 맞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연락한 이OO 사무관이 다소 경직된 억양으로 불안한 외출, 산다, 그림자들의 섬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이 되면 곤란하다면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라 답하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으로부터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국정원으로부터도 배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 결과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보고

2018. 1. 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열람 및 재정리한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2015. 9. 16.)」를 보면 “‘차세대문화연대’ 등 건전 영화단체들은”, “상반기 지원대상 작품(10편)에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위로공단’,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열)를 부각시킨 ‘올보 권투부’ 등이 선정된 바 있고” 등 당시 선정작품들에 대하여 문제제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2015년 하반기

(1) 심사 및 선정과정

- ① 영진위가 제출한 이 사업 공모 및 심사자료들을 보면, 이 사업 신청 접수기간은 같은 8. 17.~8. 21.까지 5일간, 접수편수는 모두 43편인데 심사편수는 42편, 같은 해 9.11.~9. 21.까지 재택심사, 9. 21. 심사평가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
- ② 위 OOO은 당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이 때는 지난 번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추출을 하였는데 팀장이나 본부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팀장이나 본부장이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OO 및 어OO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라 하고, 또한 심사위원 추천 문서와 관련하여 “원래 랜덤하게 추천하여서 연필로 기재된 문서는 따로 있고, 이 문서는 다시 교체를 하면서 작성된 문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2015. 당시 감사팀에서 심사위원 후보 추천을 담당한 이OO은 2018. 2. 5. 우리 위원

회에 출석하여 “제가 별도의 [추첨된 후보의] 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복사하여서 2개의 문서에 사업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서 하나는 제가 보관하였습니다.”, “그것은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니네들,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제대로 잘해’라는 묵시적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라 하고, 당시 사업팀과의 트러블에 대해서도 “아마 그 말(심사위원 후보 추첨이 없이 김OO 팀장이 후보자를 추슬러서 감사팀의 날인을 요구하여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트러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인을 거부하였고 당신은 공명심만 쫓는 사람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2018. 2. 22. 영진위 감사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제출받은 당시 심사위원 추첨 문서와 기존 다양성진흥팀 보관 같은 문서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018. 3. 7. 「영진위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후보 추첨” 관련 문서 입수 보고」).

[표-24] 2015.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 사업팀 및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추첨 문서의 비교

<p>다양성영화개봉지원 심사위원 추첨(최반기)</p> <p>심사위원 풀 : 3개 분야 총 50명</p> <p>일괄자 : 000</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후보군 수</th> <th>심사위원 수</th> <th>추첨 수</th> <th>추첨번호</th> </tr> </thead> <tbody> <tr> <td>감독(남자)</td> <td>289</td> <td>2</td> <td>10</td> <td>99, 82, 107, 93, 6, 20, 146, 97, 193</td> </tr> <tr> <td>제작(남자)</td> <td>334</td> <td>1</td> <td>5</td> <td>20, 95, 157, 100, 53</td> </tr> <tr> <td>제작(여자)</td> <td>86</td> <td>1</td> <td>5</td> <td>1, 9, 13, 20, 25</td> </tr> <tr> <td>기획(남자)</td> <td>19</td> <td>1</td> <td>5</td> <td>09, 29, 23, 24, 52</td> </tr> </tbody> </table> <p>2015년 9월 8일</p> <p>일괄자 : 다양성진흥팀장 000</p> <p>확인자 : 감사팀장 000</p>	구분	후보군 수	심사위원 수	추첨 수	추첨번호	감독(남자)	289	2	10	99, 82, 107, 93, 6, 20, 146, 97, 193	제작(남자)	334	1	5	20, 95, 157, 100, 53	제작(여자)	86	1	5	1, 9, 13, 20, 25	기획(남자)	19	1	5	09, 29, 23, 24, 52	<p>다양성영화개봉지원 심사위원 추첨(최반기)</p> <p>심사위원 풀 : 3개 분야 총 50명</p> <p>일괄자 : 000</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후보군 수</th> <th>심사위원 수</th> <th>추첨 수</th> <th>추첨번호</th> </tr> </thead> <tbody> <tr> <td>감독(남자)</td> <td>289</td> <td>2</td> <td>10</td> <td>99, 82, 107, 93, 6, 20, 146, 97, 193</td> </tr> <tr> <td>제작(남자)</td> <td>334</td> <td>1</td> <td>5</td> <td>20, 95, 157, 100, 53</td> </tr> <tr> <td>제작(여자)</td> <td>86</td> <td>1</td> <td>5</td> <td>1, 9, 13, 20, 25</td> </tr> <tr> <td>기획(남자)</td> <td>19</td> <td>1</td> <td>5</td> <td>09, 29, 23, 24, 52</td> </tr> </tbody> </table> <p>2015년 9월 8일</p> <p>일괄자 : 다양성진흥팀장 000</p> <p>확인자 : 감사팀장 000</p>	구분	후보군 수	심사위원 수	추첨 수	추첨번호	감독(남자)	289	2	10	99, 82, 107, 93, 6, 20, 146, 97, 193	제작(남자)	334	1	5	20, 95, 157, 100, 53	제작(여자)	86	1	5	1, 9, 13, 20, 25	기획(남자)	19	1	5	09, 29, 23, 24, 52
구분	후보군 수	심사위원 수	추첨 수	추첨번호																																															
감독(남자)	289	2	10	99, 82, 107, 93, 6, 20, 146, 97, 193																																															
제작(남자)	334	1	5	20, 95, 157, 100, 53																																															
제작(여자)	86	1	5	1, 9, 13, 20, 25																																															
기획(남자)	19	1	5	09, 29, 23, 24, 52																																															
구분	후보군 수	심사위원 수	추첨 수	추첨번호																																															
감독(남자)	289	2	10	99, 82, 107, 93, 6, 20, 146, 97, 193																																															
제작(남자)	334	1	5	20, 95, 157, 100, 53																																															
제작(여자)	86	1	5	1, 9, 13, 20, 25																																															
기획(남자)	19	1	5	09, 29, 23, 24, 52																																															
사업팀 보관 심사위원 추첨 문서(2015. 9. 8.)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추첨 문서(2015. 9. 8.)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추첨 문서에는 감독(남자), 제작(남자), 제작(여자)와 관련하여 “본부 수정 제출한 것(김OO 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영진위가 제출한 「2015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풀(최종)」을 보면 어OO은 ‘감남-97’, 김OO은 ‘감남-44’로 확인된다.

- ⑤ 위 김OO(2회 진술조서, 2018. 3. 8.)는 1회 진술과 달리 “당시에 추첨된 후보들의 섭외가 여의치 않아 재추첨을 의뢰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당시 이OO 과장과 트러블

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당초 추천된 후보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부장 등이 지시를 하여서 수정제출한 것인지 등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어OO, 김OO에 대해 본부장 및 팀장의 지시 아래 추가, 변경된 이들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업 담당자가 그리 말한다면 사실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 특정작품에 대한 배제

- ① 위 000이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웹메일 중 2015. 9. 21. 「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심사 평가표」는 이 당시 점수 집계표를 김OO 본부장에게 송부한 것인데, “지금까지 심사위원들께 제출받은 평가표를 정리하여 첨부드립니다. 아직 김OO 감독님 심사표는 받지 못해서 나머지 분들 것만 우선 입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평점으로 보았을 때 아래 작품은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림자들의 섬/소년, 달리다/산다(평균 점수 집계 시 최고점과 최소점을 제외하여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8] 2015.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000이 김OO에게 송부한 웹메일



- ② 위 000이 함께 제출한 「2015(하) 접수표」에는 아래와 같이 영화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산다>에 특별히 표기되어 있다.

[그림-9] 2015.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접수표

- ③ 위 000은 (이 때 지원배제 작품과 관련하여) “이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들의 섬>이 있었고, <소년, 달리다>의 경우 “신청사를 문제 삼아서 배제되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이때도 지원배제 작품을 특별히 표기해주었는데, 당시 김00 본부장이 “어디론가 연락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 하고, 특정작품을 배제하도록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김00 팀장이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000의 진술 후 2일이 지난 우리 위원회가 열람한 바, 위와 같은 국정원의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2015. 9. 16.)」 제하의 문서에는 “건전영화계에서는 영화진흥위의 독립·다큐영화 개봉지원을 위한 ‘하반기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광고비 등 마케팅비용(3,000만원, 1편지원) 대상작 발표(10

월초)를 앞두고”, “응모작 중(총 43편) 가운데 사실 왜곡·정부비판 내용의 영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여론 제기”, “(관련 작품들로) 산다 : KT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투쟁 부각, 그림자들의 섬 :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파업 주동자 미화 내용, 소년, 달리다 : 국보법 위반사범 주도 공동체 ‘마포 성미산마을’ 홍보(대표 강대원)”를 지적하고, “(건전영화단체들은) 이번 예비심사 위원(5명)에 좌파 성향 감독 김명화(송두울 미화 ‘경계도시2’ 제작)가 포함, 영화제 수상경력을 내세운 문제작 ‘끼워넣기’ 행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며”, “독립·다큐 영화계에 만연해 온 「비판영화 제작→영화제 수상→정부지원 획득」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 “문체부는 영진위에 지원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큐 영화계 건전화 도모”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⑤ 나아가 위 같은 국정원 문서 중 「영진위, ‘다양성영화 지원’ 대상에서 비판영화 배제 조치(2015. 9. 24.)」에는 “독립·다큐 영화 지원(1인당 3,000만원) 대상 작품(10편) 선정 예비심사위(9. 11.~22 예비심사, 10월초 9인위 최종 결정)를 통해 〈산다〉·〈그림자들의 섬〉·〈소년, 달리다〉 등 사실왜곡·이념 작품은 모두 배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⑥ 김OO(3회 진술)은 위의 국정원의 정보보고의 해당 작품들에 대하여 “문화부로부터 배제 요청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보다는 훨씬 더 시국관련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했고 민감했습니다.”, “문체부는 시국과 관련하여 국정원보다 더욱 민감하였다고 봅니다. 큰 줄기는 유사하겠지만 관점이 서로 달랐고 문체부는 영화 내용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므로 지시사항도 더욱 구체적이었다고 봅니다.”라 하고,
- ⑦ 또한 이 작품들의 배제 과정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들에게 문체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작품들이라고 접수목록을 보면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문체부의 지시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로서는 제가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할 정도였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2016년 상반기

(1) 사업 내용

(2)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① 영진위 제출, 지원사업 공모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은 같은 해 4. 4.~4. 8. 5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총53편이 접수되어 심사대상은 2편을 제외한 51편이고 같은 해 5. 4.~5. 18.간 재택심사를 거쳐 5. 18.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심사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당시 구성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표-25] 2016.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위원

성명	분야	경력사항	비고
신OO	학계/평론	대진대학교연극영화학부교수, 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어OO	감독	청주대 영화학과 교수, <사이에서> 감독	
윤OO	감독	<더게임> <아홉살인생> <바리케이드> <마요네즈> 감독	
이OO	투자배급	피데스투자파트너스 이사	
최OO	제작	영화사커리지대표, <해바라기> <올학교선생이티> 제작	

③ 당시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물숨>을 비롯, 11편이었는데 <그림자들의 섬>, <불온한 당신>, <소년 달리다>, <산다>는 아래와 같은 점수를 얻어 탈락하였다.

[표-26] 2016.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소년 달리> 등 심사 집계표

순위	접수 번호	작품명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계	평균	평균 70점 이상 여부
18	30	소년,달리다	68.0	40.0	65.0	70.0	60.0	193.0	64.3	미만
22	22	불온한 당신	74.0	40.0	70.0	60.0	60.0	190.0	63.3	미만
46	35	그림자들의 섬	68.0	40.0	46.0	52.0	62.0	160.0	53.3	미만
51	56	산다	69.0	40.0	46.0	52.0	60.0	158.0	52.7	미만

(3) 특정작품의 배제

- ①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위 “OOO은 당시 심사지원팀이 신설된 이후임에도 심사위원 풀 책자를 보고 팀장이 후보, 섭외 순위까지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정하여서 심사지원팀에 보내서 사인을 받았습시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위 OOO이 2018. 2. 7.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 4. 18.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접수 내역」과 관련하여 OOO이 같은 날 오전 문체부 박OO 사무관에게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접수 내역을 보고하는데, 이에 대해 박OO는 “제목만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간단한 시놉시스라도 포함해서 부탁” 요청을 했고, 이에 OOO은 신청 작품들의 시놉시스와 향후 심사일정에 대해 재차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 ③ 그런데 당시 심사지원팀 김OO(2회 진술조서, 2018. 1. 18.)은 위와 같은 OOO의 진술에 대해 자신이 추첨을 한 후 작성하여서 사업팀으로 보냈다 하고,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관이 판단하십시오.”, (‘둘의 진술이 명백하게 대립하면 둘 다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음”, (‘진술인은 진실하게 진술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음” 등 부인 진술하였다¹⁶⁾.
- ④ 위 OOO은 그리하여 이 때 지원 배제한 작품에 대해 “〈그림자들의 섬〉, 〈불온한 당신〉, 〈소년, 달리다〉가 배제되었고 〈산다〉라는 작품은 배제된 것으로 어렵게 기억하는데 작품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확실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혹, 〈산다〉라는 작품의 감독이 김미례인지 확인하여 볼 수 있나요.”라 하고, 〈산다〉라는 작품이 미루 픽처스, 김미례 감독의 작품임을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산다〉라는 작품은 KT의 희망퇴직 요구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 영화로 2016년 상반기 다양

15) 이에 대해 박OO 사무관은 ‘해당사업 심사결과 보고자료는 본인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출근하자마자 1장짜리 ‘심사결과’라는 메일만 갑자기 받아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놉시스’를 요청한 것이다.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전보된 지 얼마 안되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통상적으로 심사에 올리기 전에 담당자가 판단해서 작품내용상 문제가 있거나(작품성이 떨어지거나 외설적 내용 등) 요건 미달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후에 동 내용이 영진위에서 국정원에 지원 배제를 보고하는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명함 (18.11.15)

16) 위 김OO의 부인(진술)은 독립영화제작지원, 가족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개봉지원, 단체지원 사업 등에 걸쳐 모두 똑같이 이루어졌다.

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되었는데 2015년에 이 작품이 신청되었는데 앞서 배제 작품을 말할 때 기억이 분명치 않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을 해보니 2015년 하반기에도 이 작품이 지원 배제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또한 ○○○은 이때에도 지원배제 작품을 김○○ 본부장이 X표시하여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림-10] 2016.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 문체부 박○○ 사무관이 ○○○에게 보낸 메일



- ⑥ 한편 <불온한 당신>의 감독은 2018. 2. 9. 제출한 이메일에서 “<불온한 당신>은 박근혜정권의 적대와 공포를 활용한 증오의 정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중

북몰이가 어떻게 성소수자를 향하고, 세월호 유가족, 평범한 시민들에게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종북몰이는 독립영화에도 적용이 됐고 그것이 블랙리스트로 드러났습니다. <불온한 당신>은 2015년 9월에 완성됐고, 영화는 정권이 바뀌고, 제작된 지 햇수로 3년이 지난 2017년 7월에야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영화를 개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영진위 직원으로부터 세월호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관에서는 상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에 선정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원을 해야 기록이 남고, 그래야만 공공연히 떠도는 지원 배제 소문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2016년 개봉 지원에 신청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7) 2016년 하반기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영진위, 「2016년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심사계획(안) 보고」(2016. 9. 9.), 「예비심사결과」 등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당시 사업내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고, 지원예산은 225백만원으로 2천만원~3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 ② 신청 접수기간은 2016. 8. 1.~8. 5.이었던 모두 59편이 접수되었고, 심사일정으로는 9. 7.~9. 22. 재택 및 최종심사회의를 거쳤다.
- ③ 당시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표-27] 2016.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위원

성명	분야	경력사항	비고
어OO	연출	<사이에서> <사랑후애> 등 연출/각본, 청주대학교 교수	
신OO	연출	<장사의 꿈> <성야> <아찌 아빠> <할렐루야> <얼굴> 등 감독	
윤OO	제작	<블라인드> <두 얼굴의 여친> 등 기획/제작, <늑대의 유혹> <범죄의 재구성> 등 제작관리, 문와쳐 대표이사	
노OO	투자배급	전)사이더스 제작본부장, 웰메이드필름 대표이사	
심OO	학계/평론	전)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 현)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④ 그리하여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달쿠샤> 등 모두 10편이었는데, <TwentyTwo> 그리고 <자백>,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불온한 당신> 등은 아래와 같은 점수를 얻어 탈락하였다.

[표-28] 2016.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불온한 당신> 등 심사집계표

순위	접수 번호	작품명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계	평균	평균70점 이상여부
10	58	바람의 춤꾼	73.0	70.0	74.0	77.0	80.0	224.0	74.7	이상
13	55	TwentyTwo	72.0	66.0	68.0	75.0	56.0	206.0	68.7	미만
14	23	자백	60.0	70.0	76.0	75.0	60.0	205.0	68.3	미만
23	49	그림자들의 섬	56.0	52.0	50.0	65.0	61.0	169.0	56.3	미만
32	24	소년,달리다	59.0	50.0	50.0	50.0	56.0	156.0	52.0	미만
33	57	불온한 당신	53.0	42.0	53.0	50.0	53.0	156.0	52.0	미만

(2) 특정작품 지원배제

- ① 위 000은 2016년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시 배제 작품에 대해 “<바람의 춤꾼>은 본래 X표시된 작품이지만 지원작으로 선정이 되었고 <TwentyTwo> 그리고 <자백>,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불온한 당신>이 지원배제 작품으로 확실하고 <마담 B>라는 작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 하고, <TwentyTwo>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 수가 22명인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불온한 당신>에 대해서 “성소수자를 다루는 한편,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세월호 운동을 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입니다.”라고 영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였다.
- ②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같은 000은 “김00 본부장이 후보자들을 알려주어서 최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결정”하였는데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심사지원팀에 후보자명단을 작성하여 보내어 사인을 받고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하고, 지원배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김00 팀장이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팀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본부장이 김00 차장에게 작품 지원배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김00 차장이 거절을 하니까 결국 저에게 회의 직전이나 회의가 끝난 후 ‘니가 이런 배제 작품들이 있다. 본부장이 연락

을 따로이 할 것이다'라고 전달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개최일 제가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였는데 어OO 감독이 '여기 배제해야 하는 작품이 있죠'라고 물었고 저는 '신청자격 제한 작품이 없습니다. 심사제재 작품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어OO 감독이 '그거 말고 정치비판하는 영화 배제하는 작품 있잖아요'라고 [하여] 제가 당황해서 '네. 본부장님이 직접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답을 했고, 당시 노OO 대표가 '이런 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면 심사 보이콧 운동을 할 것이다, 본부장이 따로 연락을 하면 외부에 발설할 것이다'라고 하여 노OO, 윤OO 대표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 어OO, 신OO, 심OO에게는 본부장이 유선전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배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더불어 위 OOO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심사위원 선정은 사업팀에 처음 들어와서 이게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여 처음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못했으나 심지어는 위안부를 다룬 영화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김OO(진술조서, 2017. 12. 18.) 또한 "제가 볼 때는 <자백>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놉시스에 국정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온한 당신>은 이성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간첩 사건을 다루고 국가정보원을 언급하면서 정부기관을 폄훼하는 영화로 포함된다고 알고 당시 국정원 보고에 포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1) 2013년 하반기

(1) 이 사업의 개요 및 지원작 심사과정

「2013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2013. 7. 5.), 「2013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2013. 8. 22.) 등 영진위의 이 사업 공모 자료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사업목적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상 제작 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이고 신청대상은 "필름 및 DV 등으로 제작예정인 모든 장르의 단편/장편 실사영화"이며 지원부문은 다음과 같다.

[표-29] 2013.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규모

구분	극영화		다큐멘터리	
	단편	장편	단편	장편
지원대상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단편영화(60분이내)	순제작비 5천만원~4억원 미만의 장편영화(60분이상)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단편영화(60분이내)	순제작비 5천만원~4억원 미만의 장편영화(60분이상)
지원범위	순제작비 70% 이내 차등지원 - 단편(60분 미만)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순제작비 7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장편(60분 이상) :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순제작비 70% 이내 차등지원 - 단편(60분 미만)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순제작비 7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장편(60분 이상) :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지원규모	240,000,000원	570,000,000원	330,000,000원	
상반기지원	120,000,000원	285,000,000원	165,000,000원	

- ② 당시 접수기간은 2013. 6. 7.~6. 21. 5일간이었는데 모두 384편이 접수되었고, 같은 해 7. 1.~8. 12. 재택 및 숙박심사를 거치는 조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작품 중 전체 심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작품을 면접심사에 회부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어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 ③ 당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는데 선정방식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으로 예술독립분야 심사위원 풀 중 $\frac{3}{5}$ 이상(6명) 배정 적용, 연출 및 제작 직군 예술독립분야에서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0] 2013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위원

분야	성명	작품경력	비고
감독	김OO	〈여름 속삭임〉 연출, 한예중 미디어센터 팀장	
	주OO	다큐멘터리 〈계속된다〉, 〈멋진그녀들〉 연출, 前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	
	이OO	〈힘내세요, 병헌씨〉 연출, 〈씨니〉, 〈과속스캔들〉 각색, 〈네버엔딩스토리〉 원작	
제작	최OO	〈방독피〉, 〈극락도 살인사건〉, 〈화이트〉 제작	심사위원장
	김O	피디/〈이공〉, 〈파수꾼〉	
	김OO	인디플러그 공동대표	
학계평론	권OO	중부대연극영화학과 교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영화평론가	
	이OO	홍익대학교 영상영화과 교수,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	
작가	김OO	〈타워〉, 〈태극기 휘날리며〉, 〈소년은 울지 않는다〉 각본	

- ④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방〉 등 모두 9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는데, 박종필 감독의 〈빛〉은 아래와 같은 점수를 얻어 예비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표-31] 2013.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영화 〈빛〉 심사집계표

순서	접수번호	작품명	심사위원별 평가									총점	평균
			1	2	3	4	5	6	7	8	9		
36	2013-06-21-00269	빛	55	60	65	50	65	34	66	67	60	522	58.0

(2) 특정 작품 배제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2013년도에는 신청자가 배급사인 시네마 달이였기 때문에 영화 〈빛〉이 배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2014년 상반기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

「2014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 「심사결과 및 안건상정(안) 보고」(2014. 6. 23.) 등 이 사업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4. 4. 7.~4. 11. 접수결과 모두 332편이 지원 신청이 되었고, 4. 22.~6. 3. 재택 및 숙박심사를 거쳐 〈강냉이〉 등 모두 29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는데, 〈빛〉은 아래와 같은 점수를 얻어 탈락하였다.

[표-32] 2014.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영화 〈빛〉 심사집계표

순서	접수번호	작품명	부문	심사위원별 평가			총점	평균	비고
				윤인호	김일권	허 경			
27	2014-04-11-00252	빛	다큐장편	61	60	66	187	62.3	

(2) 지원배제 작품과 과정에 대하여

- ① 당시 사업담당자 OOO(진술조서, 2018. 1. 23.)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 때 사업에서는 극영화 단편과 장편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먼저 구성이 되었고 먼저

심사자료를 배부하였고, 다큐멘터리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명단을 받아서 한번에 몰아서 심사조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심사위원 추천’ 및 섭외순서 자료는 이전에 다큐멘터리 조의 사람들은 이전 명단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명단입니다.”라고 진술하고,

- ② 위 OO은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다큐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방침이 있었으니 심사위원 선정을 나중에 추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극영화에 대해서는 재택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다큐멘터리 부분은 재택심사를 거치지 않고 숙박심사에 들어와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위와 같이 다큐멘터리 조를 별도로 구성한 것에 대하여 “다큐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대조해서 스크린을 해서 국정원에 주기도 했고, 특별히 ’14년부터 좀 더 외압의 강도가 세지면서 다큐는 별도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구성도 별도로 하고 숙박심사만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다큐는 다큐대로 별도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이 문화부나 별도의 다른 기관에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영진위 자체적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또 OOO은 이와 같이 다큐멘터리 부분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사유에 대해 당시 [문OO 부장으로부터] 시네마 달 작품을 뽑아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H에 찍혔다.’, ‘이거 뽑히면 영진위 끝장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 ⑤ 이와 같이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주문과 관련하여 “저는 심사위원 섭외를 못 하겠다, 제외하는 거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였고 문OO 부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섭외하는 한편 그와 같은 의사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소극적으로 밖에 거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시네마 달 작품을 떨어뜨린다면 시네마 달 대표를 해당 분야 심사위원으로 넣는 것은 당연히 제척사유가 발생하는 것”, “당시 상황은 문OO 부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보였고 저는 할 수 없다, 관여할 수가 없으면서 외면하는 정도 저항 밖에는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배제 작품과 사유에 대해

- ① 같은 000은 이와 같이 하여 “〈빛〉이라는 작품이 배제되고 감독은 박종필로 알고 있는데, 배제 사유에 대해서 “최근에 이영 감독의 다양성영화개발지원에서 지원배제되었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당시 2014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에서는 〈폐허의 골격〉은 제작지원에서 지원작으로 선정된 것처럼 보듯이 작품의 정치적 내용을 갖고 배제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단지 시네마달을 타깃으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그런데 문00(진술조서, 2018. 1. 29.)은 “당시 급하게 섭외가 들어가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김00 대표의 심사위원 선정 경우 독립영화계와의 관계 개선이나 명분쌓기에도 사실 좋아서 추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 감독 이름으로 작품 제출 시 시네마 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독립영화계에서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급사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청자가 배급사인 시네마 달이었기 때문에 영화 〈빛〉이 배제되었고, 14년도 상반기에는 박종필 감독 개인 이름으로 신청되면서 실제 심사에서 작품의 평가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00 대표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그런데 2018. 3. 16.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이 영화의 「2014.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제작계획서」의 작품개요에는 당시 프로듀서에 ㈜시네마달 대표인 “김일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3. 하반기 ‘제작계획서’는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에서 열리지 않아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제출받은 접수목록 페이지를 보면 2013. 하반기 및 2014. 상반기 모두 “신청구분” 항목에 “일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3] 2014.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영화 〈빛〉 제작계획서의 부분

작 품 명	빛	장 르 구 분	다큐멘터리
감 독	박종필	프 로 듀 서	김일권
각 본	남00, 송00	촬 영	박종필, 문00, 송00
편 집	박종필, 송00, 송00	음 악	이00
규 격	HD / DV / 필름(mm)등	출 연 자	주 연 송00(리포터, 성우)
색 채	흑백□ / 칼라 ■ / 혼합□	조 연	
상 영 시 간	80 min	단 역	(명)

촬영개시 예정일	2013년 11월	촬영예정회차	40 회차
후반작업 기간	2014년 9 월 ~ 2015년 1 월	제작완료일	2014년 1 월
제작기간	2013년 5월 ~ 2015년 1월	장면 수	

- ④ 이 영화의 촬영 및 편집으로 참여한 송OO(진술청취, 2018. 2. 8.)은 “〈빛〉이 지원 사업에 탈락하였을 때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심사위원으로 이 작품 프로듀서인 김일권이 참여하여 탈락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진술하였다.

3) 2014년 하반기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① 「2014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결과 및 안건상정(안) 보고」(2014. 9. 22.) 등 영진위의 이 사업 관련 기록에 의하면, 2014. 7. 14.~7. 18.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301편이 지원 신청하였다.
- ② 당시 구성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고, 같은 해 8. 7.~9. 3. 재택 및 숙박심사를 거쳐 3인 4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작품 중 전체심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작품을 면접 심사에 회부하여 최종결정하였다.
- ③ 이와 같이 하여 〈한 끼〉 등 모두 29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는데, 〈명령불복종 교사〉와 〈투 위크스〉는 아래와 같은 점수를 얻어 모두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표-34] 2014.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명령불복종 교사〉 등 심사집계표

순서	접수 번호	작품명	부문	심사위원별 평가			총점	평균	비고
				1	2	3			
82	2014-07-17-00110	명령 불복종 교사	다큐 장편	55	50	50	155	51.7	
88	2014-07-18-00174	투 위크스(Two Weeks)	다큐 장편	56	55	50	161	53.7	

이 작품들은 모두 B조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2) 배제의 방식과 과정

- ① 위 000은 당시 B조의 심사위원들은 제가 섭외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섭외를 하였습니다.”라 하며, 이 B조를 통해서 배제 의사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② 영진위 제출의 이 사업 공모 및 심사자료 중 「B조 서류 심사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B조 심사위원으로 정00, 송00, 김00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 000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2014. 8. 1. 문체부 당시 이00 사무관에게 보낸 웹메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위원 구성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위원회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위원 구성내용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본문과 함께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 구성을 붙임 자료로 송부한 것이다. 그리고 위 000은 “특이사항: 첨부된 파일의 B조 별표 표기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B조” 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1] 2014.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B조 심사집계표의 부분

81	2014-07-27 영진위	영동현 거주자	다중 평면	55	43	50	148	49.3	
82	2014-07-27 영진위	영원 불복종 교사	다중 평면	55	50	50	155	51.7	
83	2014-07-28 영진위	농아	다중 평면	56	46	50	152	50.7	
84	2014-07-28 영진위	청문차음	다중 평면	58	58	50	164	54.7	
85	2014-07-28 영진위	태솔이들의 사채치어	다중 평면	73	73	73	219	73.0	✓
86	2014-07-28 영진위	서양촌(가제)	다중 평면	55	47	56	152	50.7	
87	2014-07-28 영진위	술대취연	다중 평면	56	44	56	150	50.0	
88	2014-07-28 영진위	투 투스(Two Weeks)	다중 평면	56	55	56	161	53.7	
89	2014-07-28 영진위	선덕	다중 평면	55	48	50	148	49.3	

90	2014-07-28 영진위	간 씨가 찌고	다중 평면	72	72	72	216	72.0	✓
91	2014-07-28 영진위	영동 (수...)	다중 평면	70	70	70	210	70.0	✓
92	2014-07-28 영진위	과	다중 평면	55	47	50	152	50.7	
93	2014-07-28 영진위	말간 찌들	다중 평면	75	75	75	225	75.0	✓
94	2014-07-28 영진위	비행차들	다중 평면	70	70	70	210	70.0	✓
95	2014-07-28 영진위	선가	다중 평면	55	57	50	162	54.0	
96	2014-07-28 영진위	말라보 로프	다중 평면	55	48	50	153	51.0	

2014.09.03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 ④ 위 000(2회 진술조서, 2018. 2. 2.)은 이와 같이 표기하여 이00 사무관에게 송부한 사유에 대하여 “이 B조의 심사작품들 중 걸러졌을 것으로 정황상 보이는 작품들이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아마 문00 부장이 그와 같이 표기를 하라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이00(진술조서, 2018. 4. 4.)은 “독립영화제작지원에 대해서는 영진위가 국정원과의 스크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00 부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특정 작품 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특정작품의 지원배제

- ① 위 000은 “전교조 이야기를 다룬 <명령불복종 교사>와 <투 워스>는 박원순을 다룬 것인데 이 두 작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두 작품을 문제작으로 지정하여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실제로 이 두 작품은 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같은 조에서 심사를 하였을 것이고 그 조의 심사위원들에게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시 채점서류를 살펴보니 두 작품은 B조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이에 대해 문00(1회 진술조서, 2018. 1. 29.)은 위 <명령불복종교사>, <투워스> 작품에 대해 “김00 본부장에게 요청을 받고 작품 스크린을 해서 보내라고 (000에게) 지시”했는데, “국정원에서 스크린하는 과정 중 사업팀에서 시놉시스를 보고 정부 비판적인 키워드를 추려서 보낼 때도 있고 접수 목록 전체를 보낼 때도 있는데 이 경우 내용을 추려서 보낸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2015년 상반기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

- ① 영진위, 「2015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2015. 6. 3.), 「2015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및 안건상정(안) 보고」(2015. 7.

21.), 각 예비심사위 조별 심사표 등을 아울러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사업 지원총액은 5억 7천만원인데, 지원범위는 단편 3천 5백만원 이내, 장편 1억 5천만원 이내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이 사업의 심사대상 편수는 극영화 단편 195편, 극영화 장편 77편, 다큐 장편 50편 등 모두 334편이다. 심사일 정으로는 같은 해 6. 3.~7. 2.(재택 서류심사), 7. 3.~7. 7. 숙박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 해 7. 16.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작을 선정하였다.

- ② 당시 서류심사는 3인 1개조로 나누어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작품 중 전체 심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작품 단편16편, 장편4편, 다큐멘터리 7편을 면접심사에 회부하였는데 영화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는 A조 서류심사에서 평점 47. 7로 탈락하였다
- ③ 영화 <할매꽃2>의 경우 C조 서류심사 결과 평점 84. 7로 면접심사에 회부되었다. 이 영화는 C조의 다큐멘터리 장편 부문 중 <소포리에서>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 ④ 그런데 <할매꽃2>는 면접심사에서 아래와 같이 8인의 심사위원 중 5명의 반대로 다수를 얻지 못하여 지원에서 탈락하였다. 아래의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면접심사위원으로는 김OO, 김OO, 윤OO, 나OO, 정OO, 안OO, 정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2] 2015.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면접심사 집계표

신청 작품명				2015. 09. 30		2015. 07. 16											
번호	신청번호	작품명	신청액	지원액	잔액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1	2015-05-1A-0010	극영화단편	278,157,000	146,500,000	131,657,000	○	○	○	○	○	○	○	○	○	○	○	
2	2015-05-1A-0010	총합	308,000,000	190,000,000	118,000,000	×	×	○	○	○	○	○	○	○	○	○	
3	2015-05-1A-0009	다큐멘터리 단편	218,748,000	167,800,000	-	○	×	○	×	○	×	○	×	○	×	○	
4	2015-05-1A-0017	다큐멘터리 장편	318,000,000	150,000,000	168,000,000	○	○	○	○	○	○	○	○	○	○	○	
다수결의대리						198,000,000											
1	2015-05-1A-0008	소로기역사	363,900,000	72,000,000	291,900,000	○	○	○	○	○	○	○	○	○	○	○	
2	2015-05-1A-0009	무희는 살아	258,800,000	36,000,000	222,800,000	×	×	○	○	○	○	○	○	○	○	○	
3	2015-05-1A-0009	귀순당고	61,544,000	40,000,000	21,544,000	○	○	○	○	○	○	○	○	○	○	○	
4	2015-05-1A-0013	올림픽의 기억	208,000,000	30,000,000	178,000,000	○	○	○	○	○	○	○	○	○	○	○	
5	2015-05-1A-0009	기억의 한방	212,200,000	50,000,000	162,200,000	○	×	○	○	○	×	○	×	○	×	○	
6	2015-05-1A-0010	일대일 2	140,400,000	40,100,000	100,300,000	×	×	○	×	○	×	○	×	○	×	○	
7	2015-05-1A-0010	올리브의 향연	97,540,000	51,500,000	46,040,000	×	○	×	○	×	○	×	○	×	○	×	
						578,000,000											
2015. 07. 16																	
심사위원명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⑤ 당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표-35] 2015.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위원

구분	분야	성명	경력	비고
감독	감독	박OO	〈질투는나의힘〉,〈파주〉 연출	독립예술, 여성
	감독	정OO	말하는 건축가,그 남자의 사정,태풍태양,고양이를 부탁해 연출	독립예술, 여성
	감독	이OO	닥터 봉, 자귀모, 패자부활전, 천년호	
	감독	윤OO	더게임,아홉살인생,바리케이드,마요네즈	독립예술
제작투자	제작	강OO	전)CGV무비콜라주 팀장, 영화비즈니스전문아카데미 <로카> 대표	독립예술, 여성
	제작	안OO	미인픽처스 대표, 살인의뢰, 몽타주 제작, 오싹한연애 PD	
	제작	나OO	인벤트스톤 대표(기획개발에이전시), <그대를사랑합니다> 제작	독립예술
학계작가	제작	김OO	산수벤처스대표,마돈나, 워킹걸,목숨,거인 투자진행	독립예술
	학계/평론	주OO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여성
	학계/평론	김OO	용인대 교수, 영화평론가	
	작가	정OO	조폭마누라3, 조용한 세상	
	학계	이OO	더 웹툰(예고살인)	

이 중 A조의 심사위원은 윤OO, 김OO, 김OO, C조의 심사위원은 박OO, 안OO, 정OO이었다.

⑥ 위 000은 심사위원 후보 구성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이OO 부장이 직접 그와 같이 [심사위원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리스트가 전달되어서 위원장과 이OO 부장이 뜻이 잘 맞아 돌아간다는 느낌, 그 이전에는 문체부 등에도 보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때에는 바로 이OO 부장이 결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 하고, 심사위원 조별 편성 및 심사작품 배당에 대해서도 “당시 이OO 부장이 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부터 이OO 부장이 섭외순서 명단을 주고 섭외를 하고 나면 전체를 다 구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심사작품 대상들의) 조별 리스트를 이OO 부장이 작성하여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2) 특정 작품의 배제

- ① 위 000은 배제 작품과 관련하여 “‘자가당착’ 이후로는 키워드가 ‘박근혜 관련’, ‘세월호’ 등을 갖고 배제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라는 작품이 세월호를 다룬 것이고 이 문제영화가 된 영화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관련 정보를 이00 사무관이나 이00 부장에게 주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이00(3회 진술)는 당시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000으로부터 인수를 받고 숙박심사에 참가하였는데 “당시에 김00가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매우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여서...과반수표를 얻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다수표이니까 결정을 밀어붙이는 등 결정에 대해서 토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넘어갔습니다. 토론이 배제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한 결정으로만 넘어갔던 것입니다.”, “떨어지거나 선정된 작품들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심사위원들이 제기하면 김00는 듣고 묵살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한편 영화 <할매꽃2>의 감독 문정현(진술조서, 2018. 3. 2.)은 이 영화는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재일조선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하며, “2015년 상반기 면접 심사 시에 제가 심사장에 앉자마자 한 심사위원이 문기를 구성안 중 첫번째 #에 대해 ‘이 영화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그 내용은 <할매꽃2>의 주인공 2인이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만나 추모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심사위원이 이 #을 보고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냐 아주 단선적이고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피면접자로서 ‘이 영화는 세월호를 직접 다루지 않지만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 대단히 가볍고 툭툭 던지는 질문들을 몇 차례 하였는데, 이 심사위원장의 질문이 앞선 심사위원의 질문 도중에 있었던 것인지, 그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있었던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심사위원장이 앞서 심사위원에게 ‘그래서 세월호(촛불)라는 거야, 아니야?’라고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획안을 지금 보면 ‘촛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심사위원들이 언급한 것은 ‘세월호’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마지막에 심사위원장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여서 저는 ‘제 영화에 재일조선인들이 나오

는데 그 중에 저의 삼촌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 이야기인만큼 진심으로 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협조와 응원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장이 기획안을 훑어보더니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예요?’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세월호 관련 장면이 들어 있지만 전면에 세월호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면접심사에는 참여 심사위원은 “4인 또는 5인으로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정OO의 경우는 얼굴을 아는 감독인데 당시 면접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7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위 7인이 면접에 참가하지 않고 지원여부에 대해 가부표시를 했던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2015년 하반기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① 「2015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2015. 10. 22.), 「2015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및 안건상정(안) 보고」(2015. 11. 20.) 등을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고, 2015. 8. 10.~8. 14. 신청 접수결과 모두 293편이 접수되었는데 결격사유 제외 심사대상은 275편이었다. 심사일정으로는 2015. 10. 21.~11. 10. 재택 및 숙박심사를 거치는데, 3인 1개조로 나누어 조별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작품 중 전체 심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작품을 면접심사에 회부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작을 결정토록 하였다.
- ② 이와 같이 하여 <폭발하는 황혼> 등 모두 26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는데, <두 개의 문2>, <할매꽃2>, <언더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점수를 얻어 탈락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A조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표-36] 2015.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언더그라운드> 등 심사집계표

순서	접수번호	작품명	부문	심사위원별 평가			총점	평균	비고
				1	2	3			
63	2015-08-14-	언더그라운드	다큐장편	59	56	57	172	57.3	

순서	접수번호	작품명	부문	심사위원별 평가			총점	평균	비고
				1	2	3			
	00177								
65	2015-08-14-00187	할매꽃2	다큐장편	59	59	57	175	58.3	
69	2015-08-14-00201	두 개의 문2(가제)	다큐장편	59	51	52	162	54.0	

③ 한편 당시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표-37] 2015.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

구분	분야	성명	경력	비고
감독	감독	장OO	〈은마는 오지 않는다〉, 〈수잔브링크의 아리랑〉, 〈아버지〉, 〈초승달과 밤배〉	
	감독	윤OO	〈소년, 천국에 가다〉, 〈서울〉, 〈베니싱트윈〉	
	감독	김OO	〈여름 속삭임〉 연출, 한예종 미디어센터 팀장	
	감독	유OO	〈페이스〉, 〈사자성어〉, 〈슈퍼맨〉 등 연출, 부산대예술문화영상과 외래교수	
제작/투자	제작	김OO	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주)크리스마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영화 〈여선생VS여제자〉, 〈소년, 천국에 가다〉, 〈괴물〉 등 제작투자	
	제작	한 O	〈웨딩드레스〉, 〈연애〉 프로듀서, 전 PGK사무국장	
	제작	김OO	프로듀서 〈죽어도해피엔딩〉, 시나리오마켓 전 운영위원	
	제작	임OO	〈마돈나〉, 〈명왕성〉, 〈폭풍전야〉, 〈세븐데이즈〉, 〈파란자전거〉, 〈피터팬의 공식〉 등 프로듀서	
	제작	엄OO	〈레드카펫〉, 〈마마〉 기획, 제작, 〈핸드폰〉, 〈파랑주의보〉 기획, PD, 〈아이들〉 PD	
학계/작가	학계/평론	육OO	영남외대 교수, 영화평론가	
	학계/평론	박OO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작가	홍OO	천년호, 자귀모(자살한 귀신들의 모임)	

(2) 배제 및 배제의 과정

① 2018. 2. 27. 영진위 감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심사위원 추천 문서는 아래와 같다.

이를 보면 “※15년 교체 심사위원 pool로 재추첨”한 사실과 “섭외 불가로 연출 남·여, 제작 남, 학계 남 직군에 대해 2배수로 재추첨”한 사실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추첨문서를 보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2015년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 풀(최종)」에 의하면 김OO는 감여-6번, 윤OO은 감남-113, 임OO은 제남-134, 장OO는 감남-156, 한OO은 제남-171, 김OO는 제여-9, 엄OO은 제여-46, 옥OO은 학남-38, 홍OO는 작여-37인데 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13] 2015.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영진위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추첨’ 문서

2015년 독립영화제작지원 선정 심사 주일
 심사위원 풀: 총 507명 - 감여 204명, 제여 202명, 학여 121명, 제작지원 80명
 윤OO, 김OO, 임OO, 장OO, 한OO, 김OO, 엄OO, 옥OO, 홍OO
 리OOOO

구분	일련	후보순 수	선정위원 수	후출순 수	후출번호
연출	남	100	0	1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연출	여	20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작진	남	100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제작진	여	40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제작진	남	24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제작진	여	27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제작지원	남	20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작지원	여	20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풀 별도 심사위원 풀 별 제출에 따라, 당일 중 (12:00) 까지 심사위원으로 수일 예정
 윤OO, 김OO, 임OO, 장OO, 한OO, 김OO, 엄OO, 옥OO, 홍OO
 리OOOO

반면 위 언급한 이들은 위원장의 섭외 순서 지정 문서인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당시 사업담당자 OOO(3회 진술조서)는 당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위 심사 계획안을 보면 접수결과 보고가 8월에 있었음에도 채택 심사가 10월 26일에 실시 되어서 심사위원 선정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것, 팀장님이 위원장 보고를 하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만 섭외하래’라고 하여 섭외를 하고 나면 좀 더 대기를 하고 재차 섭외대상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면 섭외를 하곤 하였다, 그래서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는 섭외결과에 따라 그 때, 그 때 위원장이 섭외순서를 재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섭외 순위에 빈 칸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라 하고, 더불어 “김OO

의 경우 독립영화제작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직군에는 위원장의 의도를 관철할 사람이 없으니 이 김OO를 포함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당시 심사진행을 연기한 또 다른 이유로는 조 구성 관련인데, 이OO 본부장이 위원장 보고 후 조 편성 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여 심사계획 보고를 하였으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여성이 4명이므로 적절히 배분하였다면 A조는 남성이 3명, D조는 여성이 2명인데 자신이 조를 편성했다면 여성 인원을 적절히 배분했을 것인데, 이로 미루어 자신이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또한 OOO(3회 진술조서)는 배제작품과 관련하여 “김OO 본부장이 특정작품에 대해서 자료와 정보를 달라고 했던 작품들이 그 때마다 몇 작품들이 있어, 당시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작품들에 대해서 시놉시스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심사결과를 보니 모두 탈락한 작품들이었다, 당시 이른바 좌파적인 성향의 작품들이고 그와 같은 작품들은 다큐에 많이 있는데, 김OO 본부장이 정보를 요구한 작품들은 모두 탈락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김OO 본부장이 찍어서 정보를 요구한 작품은 <두 개의 문2>는 정확한데, 당시에는 제가 초창기여서 작품이나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재는 다큐멘터리 사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할매꽃2>, <시 읽는 시간>, <언더그라운드> 이 3 작품 중 <시 읽는 시간>과 <언더그라운드>가 작품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두 작품은 나중에 2016년에 배제 등의 경향이 완화되어서 지원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할매꽃2>의 경우에는 심지어 <할매꽃1>이 이전에 영진위 지원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아 그 후속작품으로 <할매꽃2>이 이 때 탈락된 것으로 보아 분명히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A조 심사위원들에게 배당된 작품들이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는 당시 부산지하철 및 버스 등 공공운수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다룬 다큐”, “<할매꽃2>는 제작사 푸른영상은 알겠지만 작품 자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문OO(1회 진술, 2018. 1. 29.)은 “14년 하반기부터 15년 까지 가장 영화 배제 관련해서 외압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2015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14년도에는 당시 문화부 김OO 과장이 병가를 내어 공백 상태였고, 이OO 사무관이 직대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던 중 정OO 과장이 부임했는데 정부 시책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이라 기억하기에 위원회가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 하고, <두 개의 문2>

의 지원배제 여부에 대해 “네, 맞습니다. 제작사가 연분홍 치마거나 김일란 PD거나 홍지유 감독의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최저점을 받을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배제하기 위해 최저점을 주지 않았나 의심이 되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2016년 상반기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① 「2016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2016. 5. 9.), 「2016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및 안전상정(안) 보고」(2016. 6. 20.)을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은 전과 다르지 않다.
- ② 당시 접수기간은 2016. 4. 4.~4. 8.인데 모두 344편이 접수(심사제외 대상 총315편 심사)되었고, 3인 4개로 나뉘어 4. 29.~5. 31. 재택 및 숙박심사(서류심사)를 거쳐 조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작품 중 전체 심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작품을 면접 심사에 회부,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작을 선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숨비소리> 등 모두 27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 ③ 심사대상 중 <할매꽃2>, <옵티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점수를 얻어 탈락하였다.

<A조 심사평가>

[표-38] 2016.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옵티그래프> 심사집계표

순서	접수번호	작품명	부문	심사위원별평가			총점	평균	비고
				1	2	3			
77	00149	옵티그래프(optigraph)	다큐장편	67	67	60	194	64.7	.

<C조 심사평가>

[표-39] 2016.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할매꽃2> 심사집계표

순서	접수번호	작품명	부문	심사위원별 평가			총점	평균	비고
				1	2	3			
80	00318	할매꽃2	다큐장편	60	65	66	191	63.7	.

(2) 특정작품 지원배제 관련

- ① 000(3회 진술조서)는 “2016년도에는 김00 본부장이 특정작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제가 좌절감에서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임했던 때라 잘 기억하기는 어렵고 당시 목록을 보면 그럴만한 작품들이 보이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할매꽃2>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외에 제가 아는 한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언더그라운드>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라고 진술하였다.
- ② <할매꽃2>의 감독 문정현(진술조서, 2018. 3. 2.)은 “이원우 감독의 <오편그래프>가 있는데 이 작품은 용산참사, 세월호, 강정 해군기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촛불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 작품이 지원에서 탈락하였다면 배제의 의혹이 상당하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5. 예술영화제작 지원사업

(1) 기존 조사결과(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2017노2425 등 사건 판결문)

- ① 해당범죄 일람(위 판결문 범죄일람표 3. 6~8항)

[표-40]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2017노2425 등 사건 판결문 중 범죄일람 3. 6~항

순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담당 (문체부/산하 기관)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	비고
6	2015-09 -25 경	연출자 박찬경 - 공모작품 산	2015년 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금 9억 5,000만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00/ 산업진흥본 부 이00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및 지원배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야권 지지자 박찬욱 감독의 동생. 진보성향
7	2015-09 -25 경	연출자 이송희일 - 제작사 시네마달 - 공모작품 연인들	2015년 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금 9억 5,000만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00/ 산업진흥본 부 이00	지원배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영화 다이빙벨 제작사, 연출자의 진보성향
8	2015-09	연출자 오멸	2015년	영상콘텐츠			제주

순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담당 (문체부/산하 기관)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	비고
-25	경	- 공모작품 비당감수광	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금 9억 5,000만원) 지원배제	산업과 이OO/ 산업진흥본 부 이OO			4.3.사건을 다른 영화 지출 연출, 연출자의 진보성향

② 판시사실

2015년 초순경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예술영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OO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접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OO 산업진흥본부장은 2015. 8.경 이OO 사무관에게 위 명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7, 8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이OO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영진위의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요강」,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2015. 9. 17.), 「2015년도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등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업의 목적은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문화 예술적 차원의 한국영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품의 제작 도모”, “세계적 수준의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영화제작프로젝트 지원 및 차세대 한국영화예술을 이끌어 갈 작가주의 감독 발굴”이고 신청대상은 “순제작비 30억원 이내의 예술성과 작품완성도를 지향하는 실사영화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연출자)에 의해 제작예정인 작품”이다. 영진위의 편당 지원금액 9. 5억원(총19억원)이다.
- ② 당시 신청 접수는 2015. 7. 20.~7. 24.에 있었는데 모두 13편이 접수되었고 결격

사유 제외 대상 작품은 없었다. 심사일정으로는 같은 해 9. 18.~9. 20. 숙박심사를 거쳤는데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표-41] 2015. 예술영화제작지원 심사위원

분야	성명	경력	비고
감독	신OO	〈할렐루야〉,〈엑스트라〉,〈아프리카〉 등 연출	
제작	권OO	시네라픽처스표 / 〈투캅스〉,〈가문의 영광〉 등 제작 기획 다수	
제작	노OO	노비스 대표, 〈살인의 추억〉, 〈말죽거리 잔혹사〉 등 제작 다수	
작가	여OO	캐피탈 원 대표, 투자작품 다수	
학계/평론	김OO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한국평론가협회 기획이사, 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여성

③ 당시 심사를 거쳐 〈마이 엔젤〉, 〈유리정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산〉, 〈연인들〉, 〈바당 감수광〉은 탈락하였다. 당시 심사결과 집계는 아래와 같다.

[표-42] 2015. 상반기 예술영화제작지원 심사집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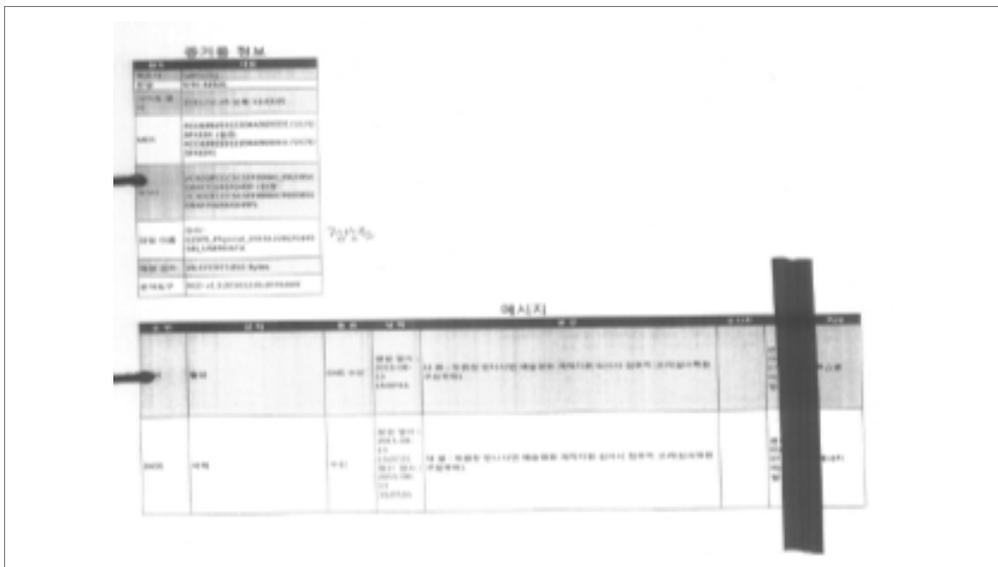
순서	접수번호	프로젝트명	연출자	신청사	A	B	C	D	E	평균	순위
1	2015-07-23-00001	네버 엔딩 서머	김OO		76	76	70	59	50	68.3	8
2	2015-07-23-00002	황사	박OO	농부영화사	84	79	70	60	50	69.7	6
3	2015-07-23-00003	갱들의 댄스-BACHATA	전OO	(주)트리필름	73	76.5	70	51	50	64.7	11
4	2015-07-23-00005	얼굴들	이OO		77	74	70	43	50	64.7	11
5	2015-07-23-00006	7호실	이OO		73	79	70	50	50	64.3	13
6	2015-07-24-00007	땡중	박OO	세컨드 윈드 필름	77	79	79	70	86	78.3	3
7	2015-07-24-00008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장OO	(주)스토리원	75	74	70	73	50	72.3	5
8	2015-07-24-00009	산	박OO		69	73	73	56	50	66.0	10
9	2015-07-24-00012	피크닉	황OO	씨네굿	71	74	78	54	50	66.3	9
10	2015-07-24	유리정원	신OO	준필름	85	86	82	85	100	85.3	2

순서	접수번호	프로젝트명	연출자	신청사	A	B	C	D	E	평균 순위
	-00013									
11	2015-07-24 -00014	연인들	이OO O	(주)시네마 달	72	71	75	66	50	69.7 6
12	2015-07-24 -00015	마이 엔젤	이OO	(주)인벤트 스톤	94	90	82	84	100	89.3 1
13	2015-07-24 -00017	바당 감수광	오O	자파리필름	77	76	78	74	80	77.0 4

(3) 특정작품 지원배제 관련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 중 2015. 8. 13.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 이OO 사무관에게 수신한 문자를 보면, “위원장 만나시면 예술영화제작지원 심사시 정무적 고려(심사위원 구성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14] 2015. 8. 13.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 이OO 사무관에게 수신한 문자



- ② 이에 대해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여기서 ‘정무적 고려’라 함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몇 건의 작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OOO(3회 진술조서)는 “(이OO 본부장이) 2015년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 누가, 누가 몇 호에 있는지 확인하였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심사과정을 통해서 배제를 진행했을 것이고 방법 또한 위원장이 선호하는 심사위원이나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미리 선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OO 부장이 심사위원에게 직접 지원 배제 작품을 전달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라 하고,

심사위원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제가 사업담당이기 때문에 사인은 했지만 숫자가 제 글씨가 아닙니다. 이미 다 작성이 돼서 이OO 부장이 제게 전달했고 저는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감사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 하고, 당시 “신OO 감독은 이OO 부장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OO 부장이 신OO 감독은 반드시 섭외를 하라면서 신OO 감독이 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가를 전달해 오면 가능한 신OO 감독 일정에 맞춰서 심사위를 개최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사실상 부장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저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OO 부장이 나서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심사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당시 “실제로 대다수가 그렇지만 배제 작품들은 반정부적인 내용보다는 순수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물, 참여자를 보고 결격 여부를 정하였다고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위 이송희일 감독의 <연인들>(제작사 시네마달)이 걸려진 이유와 관련하여 “(시네마달이 주 관리대상이 된 이유는) 다이빙벨을 배급했기 때문이고...(시네마달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 사업 때마다 신청이 되면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숨길 수 있으면 최대한 숨겼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요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은 15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청와대에서 요구를 해서 명단을 주면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지원 배제 작품을 지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네마달이 걸려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국내영화제(영화단체) 지원사업

1) 2009~2010년 단체지원 사업

- ① 2018. 4. 4. 영진위의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자료에 의하면 “영화진흥위원회

는 2009년 당시 각종 지원사업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실상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원작(자)을 결정하는 편법 심사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에 따라 실행된 조치라는 분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2011년 단체지원사업 관련 “부당 배제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독립영화전용관 및 미디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서도 포함되어 있다).

[표-43] 2018. 4. 4. 영진위의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자료 중 2009~2011. 영화단체 지원사업 배제 관련

번호	구분	사업 연도	지원사업명	배제 대상	배제 내역	배제 배경
1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인디포럼 지원 배제	
2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서울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3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지원 배제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09)
4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전북독립영화제 지원 배제	
5	단체 배제	2010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인디포럼 지원 배제	
6	단체 배제	2010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한국독립영화협회 및 미디어액트	지정위탁을 공모에 따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08)에 따른
7	단체 배제	2010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심사에서 70점 미만으로 탈락, 재공모 심	‘8천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실태’

번호	구분	사업 연도	지원사업명	배제 대상	배제 내역	배제 배경
				(*독협의 신청 자격 상실에 따라 신규 설립)	사에서 2위로 탈락	
8	단체 배제	2010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지정위탁을 공모에 따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	감사('09)
9	단체 배제	2010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독협의 신청 자격 상실에 따라 독립영화계 대표로 신청)	심사에서 70점 미만 (63점/순위는 1위)으로 탈락, 재공모 심사에서 4위로 탈락	
10	단체 배제	2011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서울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11	단체 배제	2011	단체지원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다큐페스티벌 지원 배제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09)

②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올림』(2009. 10. 28.)의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에는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신청한 ‘영화단체 지원 사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가 공적 기금을 이용해 비판적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2009 전북독립영화제, 인디포럼 2009,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등 일부 단체들의 신청사업은 실무평가에서 ‘지원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들은 예비심사에서 77~81점을 받아 결정심사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최종 결과에서는 탈락했다. 이에 반해 예비심사에서 58~64점을 받아 결정심사에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몇몇 사업들이 최종결과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최종심사를 하는 시기에 영진위의 ‘영화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문화조성팀장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전화를 걸어와 △ 촛불 집회 참석 여부 △ 광우병대책위원회 소속 여부 등을 질문하며 재차 확인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황을 통해 영진위가 ‘영화단체 지원사업’의 공적 기금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 행위 참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겠

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정치적 공격의 문제였던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위 같은 김OO는 2009. 1. 1.~ 11. 3.까지 영진위 영상문화조성팀장으로서 영화단체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8. 4. 19. 위원회로 제출한 이메일 진술서를 보면, 2009~2010 위 영화단체(영화제) 지원 사업의 공모 및 심사과정에 대해서 “영화단체지원사업은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 후 접수 받아 실무검토(최근 사업 실적 및 전년도 사업실적, 정산의 적합성 등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예비심사위원회에 심사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결정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접수시 정책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았으며 자유공모사업만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정책사업은 사업실적 등 자료를 검토하여 바로 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습니다(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진행).”라 하고, 위 언급 단체들의 탈락 및 지원배제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및 영진위원장의 관여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09년 당시 정부의 민간단체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보조금 지원의 제한 사항이 있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문화부 위원회 담당 주무과에서 민간단체보조사업 세부지침을 언급하면서 영화단체지원사업에 접수된 단체 중에서 불법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팀에서는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고 1차 거부하였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단체에 직접 전화해서 파악하는 것을 얘기하기에 왜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가 나중에라도 확인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계속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몇 개 단체에 전화를 했었는데 결과는 저희 팀에서 우려한 대로 왜 물어 보느냐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있어 결국 포기하고 문화부 주무과에 보고한 후 중단하였습니다. 영화단체지원사업은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심사위원회(9인 위원회)에서 지원금액과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하기 때문에 실무팀에서는 탈락의 배경이나 지원금의 증액, 감액에 대한 사전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실무팀은 과거 사업실적, 정산의 적합성, 예산한도 초과 여부를 알려드리는 수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라 하고, 당시 위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한 사실 등에 대해서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화통화 한 직원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기억하는 것은 인권영화제가 상영하는 영화중 일부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상영에 문제가 있어 야외상영으로 바꾸는 등 이슈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단체에 더 연락 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영상문화조성팀장으로 약 10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된 후 11월 초에 실무 팀원으로 근무를 하여 11월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같은 김OO(녹취록)은 “2010년에 기관장이 어떻게 부적절하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미래포럼의 인사들과의 교감 하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일종의 좌파 영화계 청산을 위해서 일부 전환 시도를 했던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미디어트 사업과 전용관 사업인데, 그렇게 시도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건 당연히 국회 업무다 보니 이 실행 과정들에 대한 세세한 사안들을 국회의 요구 자료들이 오고,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한 답변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답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회와 알려내지 못한 실무자로서의 죄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2015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1) 사업내용

영화단체사업지원 사업요강을 보면, “사업목적: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지원내용: 계속사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전년도 사업수행자체평가표에 의한 최종 조정평가점수와 계속사업 평가점수가 상위인 사업을 선별하여 전체 지원 사업 수의 90% 이내에서 최종 결정 심사에 회부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 심

사를 통과한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에서 7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하고, 위원회 최종 결정 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심사 및 지원 단체 선정 과정

2015. 5. 4.~5. 11. 이 사업 신청 접수결과 모두 76개 사업에 대해 67개 단체가 신청하였다. 같은 해 7. 9. ~ 7. 11. 서대문 바비엡2에서 숙박 예비심사를 진행, 심사위원으로는 김OO, 신OO, 문OO, 이OO, 김OO, 육OO, 심OO이 참여하였다. 예비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43개 사업에 대해 494,000 천원 지원결정(계속사업 33개 412,000 천원, 신규사업 10개 82,000 천원)하였다. 이 가운데 영화제작가협회는 ‘제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였으나 평점 55점으로 탈락하였는데, 심사평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금번 지원이 2회 행사에 해당해 향후 3차 정도까지 실적 확인함이 타당하다고 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당시 다양성진흥팀 주OO(2015. 12. 14. 녹취록)은 당시 당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김OO 본부장이 연락처와 명단을 주었고”, “[심사위원] 일부는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고 그냥 꼭 찍어서 지정을 해서 미리 연락을 해놓고”, “단체들 중에서 어디는 쫓으면 싫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율”했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은 연락돼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스케줄만 맞으면 참여를 하는 걸로 하자”고 하고 당시 심사위원 중 “김OO 위원은 저희 당연직으로 위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해서 김OO 위원과 신OO 감독하고 육OO 교수는 사전에 지정이 된 것이고, 신OO 교수님은 좀 분명치는 않은데, 그래서 서류적인 부분은 랜덤으로 한 것처럼 약간 조작을 했던 거죠”라고 1회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심사 풀을 돌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OO의 경우는 자동섭외 대상자이고 김OO PD는 시나리오마켓 전 운영위원으로 그냥 섭외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OO 부장은 다른 사업 심사에 참여한 바 있는데 평이 좋아서 또한 섭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특정단체의 배제 또는 특혜

- ① 2018. 1. 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열람 및 재정리)받은 「영화진흥위, 비판 영화단체 예산지원 배제계획(2015. 7. 13.)」에는 “7월말 영화단체 지원사업(5억여 원, 76개 단체 신청) 지원단체 최종 선정 시 ‘영화제작가협회’(회장 : 이은 명필름)

등 정치·이념 편향 단체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주OO(2015. 12. 14. 녹취록)은 “이야기가 나온 거는 영화제작가협회였는데 실제로 저희 공모나 심사규정상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략의 가이드라인 안에 3회 이상 행사를 진행했던 단체를 줘야되는 거라서 사실은 여기는 2회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심사위원 선정을] 무작위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 이게 대중영화제를 빼자는 의견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화인총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영진위에 와서 하실 행태들과 그런게 사전에 저희들은 예측이 되었던 거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컸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주OO은 재차(진술조서, 2018. 3. 2.)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 영진위 내에서 영화제작가협회 신청 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작가협회 사업은 작은 규모의 조직도 아니고 상징성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문체부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고민이 있었는데, 제작가협회의 신청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시행된 사업이 아니어서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김OO 본부장 말하는 성향 상 어디를 배제해야 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고 그가 ‘영화제작가협회, 여기 들어가면 힘든데?’라고 하길래 저는 그거와 상관 없이 우리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원하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 하고,

다만 “이런(배제) 계획이 있었건 없었건 저희로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어쩌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배제계획이 있거나 또는 없었다하더라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탈락 대상이 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OO은 위에서 언급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대해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8. 2. 6. 답변한바, “자료를 탐색하여 보았으나 문서로 기재된 내부 가이드라인은 없음이 확인되고, 다만 심사시 구두로 3회 미만의 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였다.

- ③ 영진위의 「2015년 영화단체사업지원(공모) 심사자료」(2015. 7.)의 “2015년 단체사업 심사 기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도 위 주OO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4] 「2015년 영화단체사업지원(공모) 심사자료」 중 심사가이드라인

- 계속사업은 종합평가점수 상위 90% 내외 선별(계속사업단체 10% 내외 탈락)
 - ※ 영화단체예비심사운영세칙 제7조 3항에 근거
 - 계속사업 38개 사업 중 4개 이상 탈락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총액지원규모(예산) : 504백만원
 - 8:2 비율 정도 유지(의무비율 아님)
 - 최근 3년간 비율 유지(계속사업 지원예산은 400백만원 수준으로, 신규사업 지원예산은 100백만원 수준으로 책정)
- 2014년 대비 총액규모 30% 예산 감액(약 224,000천원)
 - 계속사업은 전년 지원금 대비 30%(± 10%) 감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있는 사업은 확실한 근거 필요
 - 지역적인 부분(서울, 광주, 부산 등)과 여성, 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성영화인축제, 원로영화인, 장애인인권영화제) 고려
- 지원단체 자부담 의무비율 30% 유지(*2015년 사업공고)
- 지역문화향유권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배려 필요
 - 지역독립영화제 등 지역문화향유권 강화사업 지원 필요
 - 위원회 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학술지원사업에서 학회의 성격을 파악하여 개별 대학 중심의 학회보다는 전국 단위의 학회를 중심으로 지원

④ 위 김OO(2회 진술) 또한 “제 기억으로는 3회 미만 개최된 사업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와 위와 같은 3회 미만 개최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그와 같은 규정 등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배제 명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16년 국내영화제 지원사업

(1) 단체지원에서 국내영화제 지원으로의 변경

① 「국내영화제지원 사업요강(안)」에 의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인데 신청대상은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국영화 산업과 영상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분류하여 보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국제, 단편, 학생, 독립, 다큐멘터리 등)”,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해 한국영화를 빛낸 영화 및 영화인(배우, 스태프 등) 대상 시상식”이며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 진행을 위한 사업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데 연1회, 총 사업비는 522백만원이다.

- ② 주OO(녹취록)은, “기재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서 단체지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라는 시그널이 오다가 갑자기 즉시 폐지 방침이 오면서 반발이 예상돼서 단체지원사업에서 가장 ‘포션’이 많은 영화제 지원을 하는 기획안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하게 되어 2016년에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심사 및 지원 단체 선정과정

- ① 당시 심사대상은 모두 43개 사업(영화제 35개, 시상식 8개 지원)으로 2016. 6. 9.~6. 11. 숙박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지원 권장금액 기재부분이 선정단체임)

[표-45] 2015. 영화단체사업 지원 심사결과

사업명	신청 단체명	신청 구분	소요예산	신청금액	심사 점수	지원 권장금액
제3회 가톨릭영화제	(사)가톨릭영화인 협회	영화제	113,000,000	40,000,000	76	9,000,000
제4회 서울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사)서울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영화제	400,000,000	100,000,000	75	9,000,000
인디다큐페스티벌2016	인디다큐페스티벌	영화제	134,800,000	30,000,000	82	12,000,000
제16회 대한 민국청소년 영화제	(사)한국청소년 영상진흥원	영화제	248,000,000	30,000,000	77	10,000,000
제15회 미탁영상제	(사)한국영상제작 기술학회	영화제	5,000,000	3,500,000	74	3,000,000
제16회 전북 독립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	영화제	79,000,000	10,000,000	79	8,000,000

사업명	신청 단체명	신청 구분	소요예산	신청금액	심사 점수	지원 권장금액
제13회 서울국제실험 영화페스티벌 EXiS2016	(사)무빙이미지 포럼	영화제	215,000,000	50,000,000	78	15,000,000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	(재)무주산골문화 재단	영화제	880,000,000	200,000,000	77	45,000,000
2016년 제5회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	(사)한국영화배우 협회	시상식	200,000,000	50,000,000	73	17,000,000
제9회 서울세계단편 영화제	(사)한국영상예술 협회	영화제	35,000,000	15,000,000	74	7,000,000
제18회 정동진 독립영화제	강릉씨네마떼끄	영화제	50,000,000	15,000,000	83	9,000,000
제6회 안산 아싸영화제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영화제	30,490,000	10,000,000	60	
제6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	(사)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영화제	69,380,000	20,000,000	81	10,000,000
2016 3D 한국 국제영화제	3D 한국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	영화제	268,000,000	30,000,000	62	
제11회 2016 대한민국대학 영화제	한국영화교육학회	영화제	100,000,000	30,000,000	72	12,000,000
제2회 클라우드펀딩 영화제	ReKino(리키노)	영화제	27,000,000	18,900,000	57	
제33회 부산국제단편 영화제	(사)부산국제단편 영화제조직위원회	영화제	530,000,000	100,000,000	77	22,000,000
제8회 이탈리아영화 예술제	이탈치네마	영화제	212,000,000	60,000,000	59	
제1회 배리어프리 영화축제	배리어프리영상 포럼	영화제	45,000,000	27,000,000	72	5,000,000

사업명	신청 단체명	신청 구분	소요예산	신청금액	심사 점수	지원 권장금액
2016 서울프라이드 영화제	프라이드 리퍼블릭	영화제	72,000,000	20,000,000	74	5,000,000
제3회 어린이영화제 <날개>	한국가톨릭문화원	영화제	19,000,000	13,300,000	62	
제8회 서울 국제초단편 영화제	(사)서울국제 초단편영상제	영화제	331,000,000	50,000,000	79	18,000,000
제54회 영화의 날 기념행사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시상식	194,702,000	39,000,000	75	25,000,000
제53회 대중상영화제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시상식	1,090,450,000	192,600,000	83	75,000,000
제36회 영평상 시상식	한국영화평론가 협회	시상식	62,000,000	30,000,000	80	19,000,000
제21회 인디 포럼영화제	인디포럼작가회의	영화제	136,528,000	22,000,000	78	13,000,000
제10회 상록수 다문화국제 단편영화제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안산지부(회)	영화제	147,000,000	65,000,000	75	9,000,000
제4회 인천 독립영화제	인천독립영화협회	영화제	20,000,000	8,000,000	72	5,000,000
제17회 대구 단편영화제	대구경북독립영화 협회	영화제	100,000,000	10,000,000	75	8,000,000
제18회 부산 독립영화제	(사)부산독립영화 협회	영화제	50,000,000	12,000,000	76	8,000,000
제3회 한국 영화제작가 협회상	(사)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시상식	25,000,000	17,500,000	73	12,000,000
제36회 황금 촬영상 영화제	(사)한국영화촬영 감독협회	시상식	294,487,000	44,600,000	77	17,000,000
2016여성영화 인축제	(사)여성영화인 모임	시상식	44,890,000	25,500,000	81	15,000,000
제16회 퀴어영화제	한국퀴어영화제	영화제	60,000,000	20,000,000	65	
제3회 포항맑은단편 영화제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영화제	52,935,000	30,000,000	59	

사업명	신청 단체명	신청 구분	소요예산	신청금액	심사 점수	지원 권장금액
제6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사)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영화제	162,000,000	45,600,000	75	30,000,000
제1회 영화기술제	(사)한국영화조명 감독협회	시상식	60,000,000	42,000,000	73	10,000,000
제1회 독립운동국제영화제	(재)항일영상역사 재단	영화제	121,000,000	76,000,000	73	15,000,000
제9회 서울 노인영화제	서울노인영화제	영화제	144,200,000	28,000,000	76	12,000,000
제11회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사)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조직 위원회	영화제	515,000,000	100,000,000	75	9,000,000
제16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사)대안영상문화 발전소 아이공	영화제	199,000,000	50,000,000	62	
제1회 YIFF 단편영화제 IN 여수	(사)한국문화예술 산업진흥회	영화제	100,000,000	50,000,000	60	
제1회 구해줘 단편영화제	술(術)	영화제	30,000,000	19,700,000	53	
총 지원결정금액						498,000,000

(3) 특정 단체 선정 배제 또는 특혜

① 주OO(녹취록)은 당시 “이때도 심사위원 추첨을 전혀 하지 않았고 배OO의 경우는 위원장이 ‘꽃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첨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는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미스들은 하지는 않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작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재차 주OO은 “이 추첨 통보서(심사위원 후보 추첨 통보서)에 김OO, 장OO, 문OO(문OO의 경우는 재무 쪽이나 예산 편성 등에 밝아서 김OO 팀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배OO(김세훈 위원장과 친분이 꽤 두터워서 아마도 다른 사업 심사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김OO 등이 사전에 선정, 섭외된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지원팀에서 추첨 여부는 모르겠지만 전체 후보자들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이 문서의 틀과 양식을 보면 제가 선호하는 양식이라 제가 작성하여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한 것에 대하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체부 등에서 지시된 단체들 곧,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항일영상역사재단, 무주산골 영화제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김OO 본부장이 ‘애네들은 쥐야 한다’고 (하였는데) 무주산골영화제는 지원이 과도하긴 했으나 안 줄 이유는 없었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항일영상역사재단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도록 이와 같이 심사위원들을 구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주OO(녹취록)은, “1회 하는 이런 데들 ‘야, 이거는 처음 들어본다’ 어느 정도는 골라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이드라인을 사실 저희가 드리거든요”, “김OO 본부장으로부터 느닷없이 아무 연관성 없고 저희랑 그것도 없는 ‘북한인권영화제랑 독립운동영화제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들었다, 김OO 본부장은, 국정원이 됐건 문화부가 됐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온 것이지 않을까. 되게 부담느끼기는 하셨거든요”, “저희가 국내영화제 지원사업에 배제를 한다고 처음에 할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최소한 단체지원사업도 3회 이상 행사를 진행하고 지속성이 어느 정도 있고, 외부에 영향력도 있고 뭔가 평도 좋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심사를 하는데, 1회 처음 하는 행사를 지원을 하라고 하니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제 틀어지는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위 주OO은 재차(진술조서, 2018. 2. 2.) 제1회 독립운동영화제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저희 가이드라인으로서는 탈락인 것인데 이것은 확실히 쥐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가져왔던 가이드라인 중 하나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독립운동영화제 지원 때문에 저와 김OO 팀장이 안 된다고 의사를 많이 피력했지만 김OO 본부장이 위에서의 지시이므로 꼭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마. 독립영화 후반현물(기술)지원 사업

1) 2014년~2015년의 과정

- ① 영진위의 「2014년 장편독립영화 현물지원 사업요강(1/4분기)」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화제작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인데 “순제작비 5천만원~4억원 미만의 필름 및 디시네마로 촬영 후 편집 완료(후반작업 진행예정)된 장편 실사영화이며 러닝타임 60분 이상의 작품”을 대상으로 녹음 및 디지털영상 작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때 당시 지원규모는 녹음(5편), 디지털영상(DI, DCP, 8편)이었다.

[표-46] 2014. 1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현물지원의 규모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후반녹음	소스녹음 및 편집(ADR, 폴리), 각종 믹스 작업, 광학녹음 1회	1분기 5편 (차수별 1편)	* 개봉을 위한 제작물(예고편 등)과 해외수출용 M&E는 제외
디지털영상(DI)	DI(디지털), DI(필름), DCP	1분기 8편 (차수별 2편)	* 필름레코딩은 제외 * 필름촬영 작품에 한해 필름스캔과 텔레시네작업 지원 * DCP는 작품별 1회 지원

- ② 이 사업 2014년 2분기 심사결과, <구름비, 바람이 분다>는 “채무관계로 지원 불가”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14년 3분기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에서 탈락한 <산다>에 DI/DCP 지원, 사업담당자에 의하면 지원배제 작품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원작으로 선정된 <위로공단>에 대해서 후반녹음/DCP 지원이 이뤄졌고, 2014년 4분기에 국가정보원이 문제작품으로 지적한 <올보 권투부>는 DI/DCP 분야에 지원이 되었다.
- ③ 「2014년 3/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현물지원사업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안) 보고」(2014. 6. 23.), 「2014년도 3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 현물지원사업 선정결과보고 및 약정체결」(2014. 7. 7.) 등을 보면 <위로공단>, 김미례 감독의 <산다>, 이송희 일의<야간비행> 등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 ④ 2015년 1분기에는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그림자들의 섬>이 녹음 부분 지원을 받았고 2015년 3분기 같은 사업에서 탈락한 작품인 <밀양아리랑>은 DCP분야 지원이 이루어졌다.
- ⑤ 그런데 2015년 1분기에서 <불안한 외출>이 탈락하여 이 영화 감독 김철민은 이는 ‘의도적 지원배제’라 주장하였는데, 당시, 영진위의 이 사업 담당자인 000(2018. 1. 30.)은 “<불안한 외출>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른다 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우리 사업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물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작품도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 배제를 위해서 제가 심사위원에게 말한 적도 없고 누가 저에게 무엇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⑥ 김OO(4회 진술)은 “당시 <불안한 외출> 지원과 관련해서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압박이나 시그널을 준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사와 연결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사업운영 지침의 개정

(1) 개정의 내용

- ① 영진위가 제출한 공모사업 자료를 보면, 2015. 11. 독립영화 후반작업 현물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도 시행하는데 그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47] 독립영화 후반작업 현물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의 부분

현행(2011. 4.28)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내부지침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기술사업부의 제작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물기술지원을 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영상제작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기술력 제고 및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현물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원회 종합촬영소의 영상제작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지원, 활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촬영 스튜디오 현물지원(세트제작) 등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현물지원 적용대상 및 범위 규정
제2조(지원 방향) ①현물지원 대상은 한국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영리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단, 위원회가 기본사업계획 등으로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한다.	제3조(지원원칙) ① 현물지원은 위원회의 제작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고 영상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무상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기본사업계획 등으로 추진하는 제작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현물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개정안의 제3조(개정 전 제2조)의 ②항을 보면 단,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현물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개정됨. 이에 따라 「2016년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심사운영세칙」 제8조(심사기준 및 배점)에 1차 예비심사(적격심사)를 도입하여 예비심사위를 “위원회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며 서류 및 제출자료, 신청자격 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본 심사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 ② 2015. 11.경 현물지원 사업운영 지침(2016년 1분기 사업부터 적용)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영진위 종합촬영소장 이OO은, “당시 개정의 초점은 ‘현물지원’ 사업 명칭이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으로 변경한 것,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 ③ 다만, 위 이OO은 “2015. 7. 직제 개편 이전에는 남양주종합촬영소장으로서 기술지원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녹음 및 DCP 작업 등의 지원결과에 대하여 ‘협조’ 결재 선에서 기술지원본부 산하 남양주촬영소 팀장으로 편재되면서 이 후반 기술지원사업을 관할하였다”고 하고, “2016년 1분기 이 사업 시행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신청 작품들의 영진위 및 영진위 외 지원여부를 참고사항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가능한 기준에 지원이 된 작품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피하고 다른 작품들에 대해 지원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으로, 이 무렵 영진위원장(김세훈) 및 본부장 등으로부터 당시 정부에서 영진위 지원 작품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이념적 편향 작품들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유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④ 한편 당시 이 사업 담당자 OOO(2회 진술)은 당시 개정사유에 대해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골고루 지원을 해주자, 혜택을 광범위하게 주고자하여 한 것입니다.”라 하고, ‘중복지원’을 배제하기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고 이 지침을 개정할 당시에도 저의 입장은 지원을 다 해주자, 중복배제 하지 말자는 주장이었는데 이OO 소장이 그게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었다는 의견이 상반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지침 개정이 특정)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중복지원을 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의 제작비 지원으로 제작비를 다 감당하기 힘들고 완성을 위해 후반작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이상하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 ⑤ 그런데 김OO(4회 진술)은 “(이러한 지침 개정이 지원의 폭을 확대하자는 외양을 띄고 있는 있으나 기왕에 지원이 된 독립영화작품들이나 영화인들에 대한 배제로 결국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배제로 이어졌을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지침 개정으로 인한 지원제외 작품

- ① 2016년 1분기 심사는 개정된 현물지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2015. 12. 18. 예비 심사를 열었는데 참여자는 종합촬영소장과 사업담당(OOO. OOO)이고, 서류 및 자료 적격심사를 하였다. 이 결과 <불온한 당신> 등 아래의 3작품이 지원결격 대상 작품으로 정해졌다.

[표-48] 2016. 1분기 독립영화후반작업 기술지원 지원결격 대상작품

순서	접수번호	신청자명	작품명	신청구분	신청자		지원신청분야			규격	결격사유	
					제작사	연출	제작사 대표	후반 녹음	DI			DOP
1	2015-12-10-00002	임OO	우리집	일반인	임	0	0	0	0	극영화	디지털	영진위 독립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2	2015-12-10-00004	이O	불온한 당신	일반인	이	0	0	0	0	다큐	디지털	영진위 독립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3	2015-12-17-00017	이OO	다이아웃	일반인	이	0	0	0	0	극영화	디지털	영진위 독립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 ② 이에 대해 OOO(2회 진술)은 “소장이 중복이 된 것을 빼야 한다고 하여서 생긴 것입니다. 모든 작품의 신청서를 쌓아놓고 중복을 되었는지 제외를 시켰습니다. 나는 제외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신청서에 자체 제작비 조달내역 및 타 기관 지원 등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공정환경센터에 영화인의 채무 불이행 여부 등 제재사유에 대해서도 의뢰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영진위 종합촬영소장 이OO(진술청취, 2018. 3. 9.)은 “2016년 1분기 이 사업 시행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신청 작품들의 영진위 및 영진위 외 지원여부를 참고 사항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가능한 기존에 지원이 된 작품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피하고 다른 작품들에 대해 지원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 ③ 나아가 이OO은 “이 무렵 영진위원장(김세훈) 및 본부장 등으로부터 당시 정부에서 영진위 지원 작품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이념적 편향 작품들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유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16년도 2분기

(1) 신청 및 지원작 선정

「2016년도 2/4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안) 보고」(2016. 2. 18.), 「2016년도 2/4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최종심사 회의록(요약)」, 「2016년 2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2016. 4. 5.)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2016년 2/4분기 이 사업 지원규모는 후반녹음 3편, 디지털 색보정(DI) 8편, 디지털시네마팩키징(DCP) 8편이다. 당시 지원신청은 2. 29.~3. 11.간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32편이 신청되었다. 2016. 3. 15. 예비심사를 통해 다음의 작품들을 지원제한 대상으로 정하였다.

[표-49] 2016. 2/4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지원제한 대상

지원신청분야			접수 번호	작품명	신청자	장르	규격	런닝 타임	제작비	참고사항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DCP	-	-	1	당신의 계절	강OO	극영화	HD	80	54,000	연출자 중 복신청(결 격)-[말흔 청(결격) 브이]연출	김강민(연 출) 중복신 청(결격)
DI	DCP	녹음	12	피스 인 티베트 : 눈물의 춤	김OO	다큐	HD	84	43,400	16. 1분기 지원작<제 주:년의춤> 연출, 연출	사유진(연 출) 중복신 청(결격)

지원신청분야			접수 번호	작품명	신청자	장르	규격	런닝 타임	제작비	참고사항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DCP	녹음	-	16	우리집	임OO	극영화	HD	80	78,000	위원회제작 지원작	위원회제작 지원작(지 원신청 제 한대상작)
DCP	-	-	30	WEEKE NDS	이OO	다큐	HD	98	80,422	위원회 제 작지원작	위원회제작 지원작(지 원신청 제 한대상작)

② 2016. 3. 18.~3. 25. 재택심사 및 평가회의를 가졌는데,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표-50] 2016. 2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심사위원

분야	성명	소속 및 주요 경력
배급/마케팅	강OO(여)	영화비즈니스아카데미 LoCA 대표 등
촬영감독	성OO(남)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학술부 위원장. 촬영감독
"	이OO(남)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운영위원. 촬영감독

③ 심사 결과 <사월의 끝> 등 10편에 대하여 지원결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수 및 순위로 탈락하였다.

[표-51] 2016. 2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등 심사집계표

접수 번호	신청자	제목	강*	성*	이*	합계	평균	순위	지원확정 분야
23	정OO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72	74	64	210	70	15	.
14	권OO	강기훈의 선곡	74	72	60	206	68.667	16	.

4) 2016년 3분기

(1) 작품 선정 및 지원작 선정 과정

「2016년도 3/4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안) 보고」(2016. 5.

23.). 「2016년 3분기 독립영화 후반 기술지원 사업 접수결과 보고」(2016. 6. 14.). 「2016년 3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2016. 6. 30.)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① 이 사업 지원신청은 2016. 5. 30.~6. 10.까지 있었는데 모두 20편이 접수되었고 (지원제한대상 1편), 2016. 6. 20.~6. 24. 재택 및 위원회 출석 심사를 가졌다.
- ②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표-52] 2016. 3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심사위원

분야	성명	성별	경력사항 등
영화감독	윤OO	남	성균관대 교수
영화제작	김OO	남	〈속희〉외 / 필름라인 대표
영화제작기술	김OO	남	디지털아트 서울예대 교수
영화투자배급	조OO	여	CGV 무비콜라주
애니메이션	김OO	여	애니연출(청강대, 세종대등)

- ③ 심사를 거쳐 〈아빠는 예쁘다〉 등 8편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밤섬 해적단 습격의 시작〉, 〈강기훈 말고 강기타〉는 아래와 같은 점수와 순위를 얻어 탈락하였다.

[표-53] 2016. 3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등 심사집계표

접수 번호	작 품 명	심사위원별 총점 (100점 환산)					합계 (평균)	순위	지원신청 분야 확정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1순위	2순위	3순위
7	밤섬해적단습격의시작	65	65	65	68	68	66.0	11	.	.	.
15	강기훈 말고 강기타	60	65	65	60	71	63.3	15	.	.	.

(2) 특정작품 지원배제

- ① 〈강기훈의 선곡〉(2018.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가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으로 상영)의 감독 권OO은 2018. 2. 19. 이메일을 통하여 “2016년 말 완성을 목표로 2016년 2분기 및 3분기에 〈강기훈 말고 강기타〉라는 제목으로 영진위 현물 지원프로그램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이어 탈락을 하고

2016년 후반 사무실로 심사를 하셨다는 영화아카데미 PD전공 후배님(기억이 오래 되어 특정할 수 없음)께서 상암동에 있는 DMC첨단산업센터 A동 105호 영화 제작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따뜻히 지원했어야 하는 작품이었으나, 영진위로부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주제를 가진 다큐멘터리가 제작지원과정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과정을 많이 들어왔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2017년 3분기에 같은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을 했는데, 믹싱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양수리 영진위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후반지원프로그램 약정체결식에서 OOO 당시 지원프로그램 담당자님께서 ‘일찍 지원했어야 하는 작품인데, 이제라도 봐서 반갑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원 심사까지 권력이 개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라고 하였다.

- ② 당시 이 사업 담당 팀장(종합촬영소장, 진술조서, 2018. 4. 24.)은 이 사업과 관련한 지원배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중반부터 후반작업 지원업무를 하게 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지원배제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이후 위원장(김세훈), 본부장(최OO)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배제 지시를 들었습니다.”, “김세훈 위원장은 ‘정부가 영진위 지원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니 정치적인 작품들은 주의 깊게 봐달라’고 하였고, 2016. 3분기 이후 “(당시 사업담당자 OOO이) 신청작품들의 시놉시스라든지 서류를 검토하여 자료를 정리”, “(그와 같이 정리된 자료는) 김OO 본부장에게 보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사업담당자가 이와 같은 ‘리스트’(자료) 작업을 해서 보고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부터 피드백한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심사 전에 사업담당자인 OOO에게 특정 작품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라 하고, 심사 시에는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가 ‘심사평가장에서 정치적인 작품들이 있으면 곤욕스럽다, 감안해달라, 정부 분위기가 그런 작품들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 ③ 2016. 3분기 탈락한 작품과 관련하여 <밤섬해적단의 습격> 사건은 제가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명확히 기억하고 <강기훈 말고 강기타>의 경우에도 피드백 결과 문제작품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당시 사업담당자 입장에서는 ‘작품내용이 크

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과정에서 확인된 작품은 <밤섬해적단의 습격>, <강기훈 말고 강기타> 등(추가 작품에 대해 기억할 수 없음)으로 결과적으로 탈락, 배제되었음”이라고 진술했다.

5) 2016년도 4분기

(1) 이 사업 신청 및 심사과정

영진위, 「2016년 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2016. 10. 4.) 등 이 사업 심사 자료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업 신청접수는 2016. 8. 29. ~9. 9.에 있었는데 신청작품은 모두 17편이었다. 같은 해 9. 19. 종합촬영소장 및 사업담당자는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위원회 제작지원 작품으로 지원신청 제한대상인 2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9. 21.부터 9. 28. 재택심사, 9. 28. 최종결정심사 회의를 통해 <양뚜> 등 모두 8편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참여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표-54] 2016년 4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심사위원

분야	성명	성별	경력사항 등
영화연출(내부위원)	양OO	남	<박대박> <수상한이웃들> 등 연출
영화연출/PD	박OO	남	<혼자>, <물고기> 등 연출
제작/PD	정OO	남	<수목장> <레디액션 청춘> 등 PD
애니/PD	신OO	남	<그라미의 서커스쇼> <보로로> 등 제작
애니메이션	이OO	여	애니메이터

- ② 한편, 당시 정OO 감독의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은 평점 76. 7점으로 9위, <우리>라는 작품은 74. 3점으로 10위를 차지하여 지원에서 탈락하였다. 이 중 위원1은 개별 심사집계표에 의하면 ‘양OO’로 확인이 되는데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에 35점, <우리>에 대하여 최고점인 86점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특정작품 지원배제

[그림-15] 2016. 2분기 후반작업 기술지원 심사집계표

<별지서식 2호>

2016. (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심사집계표

순서 번호	작품명	심사위원부 총점(150점 중점)					합계 (최고, 최저 제외)	평균	순위	지원사업 분야		
		왕○○	신○○	정○○	김○○	김○○				1순위	2순위	3순위
1	영스핀이	80	78	89	85	76	201	87.0	15	특검	DCP	
2	삼이	85	86	81	80	80	246	88.0	2	특검	DI	
3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35	70	89	83	80	290	78.7	9	DCP		
4	영단독스(영단)	80	85	76	80	80	246	82.0	2	특검	DI	DCP
5	한타해적											
6	역광고동	85	77	78	80	88	220	79.8	12	DI	DCP	
7	태남 태노리	85	74	82	80	70	236	78.7	5	특검	DI	DCP
8	보성 공룡의 꿈	80	78	81	75	70	223	74.3	10	특검		
9	관람이, 발산이	70	80	78	70	50	218	72.7	14	DI	DCP	
10	태리부네리	88	78	81	75	65	222	77.0	8	특검	DI	DCP
11	경	75	79	85	85	75	299	78.7	4	DI	특검	DCP
12	부리	88	75	78	70	65	229	74.3	16	특검	DI	DCP
13	영우	80	85	83	85	80	211	83.7	1	특검	DI	DCP
14	지평의 산당	50	78	78	85	85	219	73.8	13	특검	DI	DCP
15	노영스핀트	75	80	81	75	85	220	77.7	7	DI	DCP	
16	홍스리 태이리											
17	영공	85	76	80	80	85	236	78.7	5	특검	DI	DCP

2016. 9. 28.

2016년 (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왕○○  심사위원 김○○

심사위원 신○○  심사위원 박○○

심사위원 정○○  심사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① 영화 '혼자'의 감독 박○○은 2018. 2. 8.에 우리 위원회에 제보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영화 '밤섬해적단의 습격' 지원배제 관련 제보 보고」).

“자신은 2016년 영진위 온라인 심사 풀에 등록하였고, 2016년 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현물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심사일 심사장으로 가서 아이패드 에 저장된 심사자료를 받았다. (당시) 남양주종합촬영소장 이○○이 심사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정치적 쇼를 하는 영화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영진위 지원사업 의도와 맞지 않는다. 영진위는 순수한 예술영화를 지원하는 곳’이다라며 영화 ‘밤섬해적단의 습격(이하 ‘밤섬해적단’)’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심사 시에도 이를 유도하였는데, 자신은 이 영화 감독 정○○의 전작 논픽션다이어리는 베를린영화제 초청작이고 차기작으로 오래동안 준비해서 만든 작품

으로 작품성이 좋다, 영화는 한 인디밴드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영화 장면 중 ‘김정일 만세’라든지 구호를 외치는 장면 등은 일종의 조롱행위, 비꼬는 장치에 불과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지 않으며, 젊은 세대들의 패배감이나 분노를 종합적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보고 점수를 높게 주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항의도 하였다…당시 영진위 000이 점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2명의 심사위원이) ‘그러면 점수를 수정해도 되죠?’, ‘점수를 내리면 되겠지요?’ 등의 요청에 점수 변경에 동의하여 주어 결국 ‘밤섬해적단’이 배제되었다. 더불어 반면에 선정하여 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는 자신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정되지 않았다.”

- ② 이와 관련하여 이 영화의 감독 정OO(진술청취, 2018. 2. 8.)은 “자신은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당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지하는 성명에 참가, 서병수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릴레이 기고에 동참하였고, 세월호시행령 폐기촉구 영화인 동조 단식에 참가하였으며 문제가 된 영화로 강정마을을 다룬 <잼다큐 강정>에 참여 감독이기도 하는데, <밤섬해적단>의 경우는 수차 영진위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다. 당시 분위기에 비추어 밤섬해적단은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공모롭게도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봉지원작 품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분위기를 돌이켜 보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건으로 떠들썩하였고 자신의 친구가 영진위 인턴으로 일한 바 있는데 영화 <남영동 1985>가 한불수교 행사와 관련한 행사 안내문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정OO 감독의 프로필이 삭제되어 나가기도 하여 ‘이게 말이 되느냐’ 분통을 터뜨렸으나 영화인들은 부산국제영화제나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등 워낙 사건들이 많아 여기에 대응하기에도 바빠 영진위 등 ‘행정 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응을 하지는 못한 채 지원사업에 포기하거나 기획안을 변경하는 등 일종의 ‘자기검열’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이후에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어 배제된 것이라면 그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신청을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그런데 위 정OO은 2015년 하반기 국제공동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지원작품이 거의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자신이 기획안을 일부 변경하여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영진위 지원사업 신청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5] 전문위원 작성의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영진위 지원사업 신청 현황

사업	시기	결과(점수)	참여심사위원	비고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2013년 하반기	서류심사 탈락 (57. 1점)	최OO, 권OO, 김O, 김OO, 이OO, 김OO, 김OO, 이OO, 주OO	영화 <빛> 탈락시점
	2015년 상반기	서류심사 탈락 (46점)	윤OO, 김OO, 김OO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탈락시점
독립영화 현물지원사업	2016년 2분기	심사탈락(70점)	강OO, 이OO, 성OO	<강기훈의 선곡> 탈락시점
	2016년 3분기	심사탈락(66점)	윤OO, 김OO, 조OO, 김OO, 김OO	<강기훈 말고 강기타> 탈락시점
	2016년 4분기	심사탈락 (76. 7점)	양OO, 박OO, 신OO, 이OO, 정OO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2015년 하반기	지원작 선정	노OO, 장OO, 허OO, 소OO, 김OO	

- ④ 이에 대하여 최OO(2회 진술)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에 의하면 당시 소장인 이OO이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영진위는 순수한 예술영화를 지원하는 곳인데 이 영화는 영진위 지원사업 의도와 맞지 않는다며 배제를 설득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 분이 누구인가요. 흥OO예요?”, “아닙니다. 이OO 소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심사위원들에게 대면해서 배제를 설득하였는지요.”라고 부인하였다.
- ⑤ 그래서 촬영소장에게 물어보았다. 당시 종합촬영소장 “이OO(진술청취, 2018. 3. 9.)은 “<밤섬해적단의 습격 사건>의 작품에 대해 심사 전에 심사위원들이 작품내용이 ‘특이했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면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지원해주기에 민감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⑥ 그런데 위 박OO은 자신은 휴대전화에 전화내용이 자동녹음 되는 어플이 있어서 당시 최OO과의 녹취파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위 박OO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속기법인 대한의 김OO 속기사 작성의 녹취록 기재 중 최OO의 발화 부분).

“그리고 「밤섬」이라는 영화, 국가보안법 다룬 영화 있잖아?”

“막 시끄럽고 굉장한 감정은 막 이러는 영화.”

“그런 게 좀 지원이 되면 우리가 지원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서 좀 해 줘요.”

“어, 힘은 좋아. 그런데 계속 흔드는데 그거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우리」라는 작품 있잖아? 장애인 영화. 개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바.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1) 사업 신설 과정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김OO의 2017. 1. 5.자 진술서에는 “‘가족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저희 기반조성본부의 사업은 아니지만, 당시 사업 개편을 주도한 문OO 부장 및 실무진들이 ‘정부가 싫어하는 <변호인> 등이 흥행하니 전국민이 볼수 있는 친정부성향의 건전영화들을 발굴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려고 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린다고 해서 예산안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1~2억 짜리도 아니고 50억짜리 사업이 계획안 하나로 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그런데도, ‘가족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영진위 전체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50억의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위 같은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가족영화제작지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상업영화 제작지원을 안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독립영화 뿐이고 상업영화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예산까지 만들어 준다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청와대발로 기재부에 50억 지원하라는 요청에 의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14년도에는 13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14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서 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직접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라 알고 있고 14년도에 지시가 있었을 때 바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이 사업의 신설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2014년 문체부 영상과에서 추경으로 추진하다가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예산안을 국회로 넘겨야 하는데, 기재부 문화예산과에서 완강히 버텼다고 들었습니다. 추측하건데 청와대에서 문화부를 질책하니 '기재부 때문에 추진이 안 됩니다'라고 보고했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최종 통첩을 하여서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50억 중에 25억은 건전, 애국영화에 준다고 해도 나머지는 예술영화제작지원을 부활시켜 하자고 계획을 짰는데,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짤 때는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투자배급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획안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투자배급사라는 의미는 완성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는 곳은 4대 메이저 배급사이지만 연 100만 이상으로 해보았는데 4개 메이저 외에 2개 회사 밖에 없어서 50만 이상 동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은 '변호인'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을 기획한 청와대 등의 입장이 변호인 같은 영화에는 투자를 하고, 건전·애국영화 등에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간에는 모태펀드를 등한시하다가 투자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모태펀드에 주목하면서 그와 연관되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구OO(진술조서, 2017. 11. 8.)은,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건전애국영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3, 4차 심의가 이루어질 즈음에 문체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하여서 관련 사업이 들어왔다고 문OO 부장에게 들었다, 당초에는 50억이 배정되었다가 당시 문OO 부장이 이것을 건전애국영화로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하여서 받은 가족영화, 받은 예술영화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⑤ OOO(2회 진술)도 "이 사업은 2014년 중순경 이해 추경예산으로 급작스럽게 시행하려 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해 "이미 지원 영화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가하고 개인적인 의심"을 하였다고 하는데, "9월쯤인가 14년도 중하순에 기재부 추경편성 기간이었는데 추경편성으로 자료를 먼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OO 사무관이 문OO 부장에게 유선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는 상황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은 영진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문OO 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실무 차원에서는 불가

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왜냐하면 추경 결과가 9월 또는 10월에 나올 건데 사업 공고를 최소 한 달 이상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원금을 12월 연내에 집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과 영화라는게 한 달 만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없고, 제작지원사업신청에 신청할 수준의 준비가 되어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미 지원 영화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가하고 개인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경업무는 재무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다 '11월 쯤 그냥 내년에 합시다'라면서 어떤 회의나 논의도 없이 쉽게 결정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OO 부장이 '내년에 사업계획에 넣자'라고 해서 갑자기 15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진술했다.

2) 2015년 사업

(1)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과정

영진위, 「2015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요강」, 「2015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심사총괄표」, 「2015년도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등의 각 기재를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대극, 역사물, 환타지 등의 영화 제작활성화 도모”, “가족용 영화시장의 한국영화 경쟁력 견인을 통한 한국영화 미래관객 확보”를 들고 있고, 신청대상은 “작품완성도를 지향하는 실사 극영화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작예정인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작품”이어야 한다. 사업비는 2,470백만원으로 2편 내외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 ② 접수기간은 2015. 7. 20.~7. 24.로 모두 26편이 접수되었는데 결격 사유 제외 심사대상은 18편이었다.
- ③ 당시 구성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고 같은 해 9. 4.~9. 6. 숙박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작품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작품 대상을 결정토록 하였는데, <막둥이>(10.7억), <그대 이름은 장미>(9억), <아이 캔 스피크>(5억) 등이 지원 결정되었다.

(2) 심사과정 관련

① 이 사업 담당자 000(2회 진술조서)는, “2015년 당시에는 심사위원 선정 시 사업 담당자는 제외되고 이00 부장이 위원장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선정해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이 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했다. 2015년보다는 2016년에 심사위원이 더 노골적으로 배치되었는데 항상 심사하던 사람으로만 채워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영진위 심사 거의 들어온 사람만 다 모였네’하는 생각을 했다.”라 하고,

감사팀의 ‘심사위원 추천’ 문서에 대해서는 (3회 진술에서) “이00 본부장이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글씨체만 보더라도 저의 글씨가 아닙니다.”, “당시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위 문서들에 기재한 것을 보면 연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나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그 때도 생각하였습니다.”, “연필로 기재되었다는 것 자체를 보거나 심사위원 선정이 임박하여서 바로 책상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정리하여서 저에게 줄 때가 있기도 하여서 당시부터 이거 추천을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심사위원 섭외와 관련해서도 이00(3회 진술)는 “가끔은 특정 사업에서 이를 테면 독립영화 분야와 관련하여 관련…심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담당자가 연락 전에 팀장과 부장이 미리 통화해서 섭외를 돕는 경우는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에 부정한 측면으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때의 경우에는 ‘부정’한 측면이 있어서인지 사전에 연락 여부조차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문00(진술조서, 2018. 1. 29.)은 당시 심사위원 중 “김00는 영진위 위원이고, 김00는 강한섭 위원장 시절 전 사무국장, 최00는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훈, 박00도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고00 작가와 윤00 감독의 경우 심사위원 제안을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거부 없이 수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특정작품의 지원 배제 또는 특혜

① 이00(3회 진술조서)는 당시 배제 여부 등과 관련하여 “개별 작품으로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있었으리라 생각도 들지만 작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 하고, 문00(진술조서, 2018. 1. 29.)은 “2015년도에는 애국 건전영화(가칭) 제작자들

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여서 일반 가족영화들이 대부분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 16년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김OO 본부장은 결재라인이 아니지만 기존과 똑같이 스크린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6년도의 경우에 내부에서 김세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있어서 비선으로 해야 사업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사업팀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원래 결재 라인이 아니지만 김OO 본부장의 스크린 라인도 기존과 똑같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16년 사업

(1)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① 「2016년도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결과」 등 이 사업 공모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70백만원으로 2편 내외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6. 5. 9.~5. 13.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47편이 접수되었고, 결격 대상 작품은 모두 5편이었다. 심사일정은 2016. 6. 23.~6, 26, 3박4일 숙박심사를 가졌는데 당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표-56]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계획(안) 보고」 중 심사위원 명단

분야	성명	경력	비고
감독	양OO	박대박, 수상한 이웃들, 타인의 멜로디 연출 등, 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감독	계OO	네발가락, 조폭마누라3, 꿈은 이루어진다 감독	
제작	최OO	영화사 커리지 대표, 해바라기, 미스터 소크라테스, 울학교선생 이티 제작	
제작	김OO	스파이 파파, 그림자, 개같은 날의 오후 프로듀서, 기적의 피아노, 여름속삭임 감독	여성
학계/평론	양OO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 위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등	여성

- ②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작품에 대해 지원토록 하였는데, <채비> 8.7억, <OOOO> 8억, <강화도> 8억을 지원작으로 선정하였다.

(2) 지원 배제 및 특혜 관련

- ① 이OO(2회 및 3회 진술조서)는 “2015년도에 비해 심사위원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배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6년에는 위원장이 접수결과들에 대해서 김OO

본부장에게 주라고 지시하여 그러한 접수결과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김OO 라인 등이 개입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배치되었을 것”, 위원장에게 섭외 결과를 보고하면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이 사이에 먼저 심사위원 선정이나 섭외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심사위원 선정기간이 오래 걸렸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재량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일 것이나 2016년도 추첨 순서까지 무작위 추첨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최OO가 연속 2회 참여하고, 김OO의 경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특혜를 주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했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② 구OO(1회 진술)은 “2016년 선정작 <OOOO>의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하려갔는데 이미 해외로케가 예정되어 있었고 배우진이나 배급사도 OO로 확정이 되어서 매우 일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현재 정황을 보건대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2015년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 1차 지원작 선정 및 철회

- ① 영진위의 「2015년도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공고」(2015. 11. 3.)를 보면 당초 2015년 이 사업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지원작이 선정(엠펙처스의 ‘김선달’, 배급사는 CJ E&M)되었으나 자진 철회하여 재차 공고하였다.
- ② 최초 지원대상작품으로 선정된 (주)엠펙처스의 ‘김선달’의 배급사는 CJ E&M인데 2015. 7. 21. 심사가 종료된 2개월 이내 해당 영화의 제작비 부족과 향후 6개월 이내 최소 100개 이상의 3D스크린 상영을 위한 입체 상영관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원 취하하였다(엠펙처스 대표이사 김OO의 2015. 9. 17. 「3D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 취하 결정 공문」).
- ③ 그런데 재차 공고 후 지원작품으로 선정된 (주)OO엔터테인먼트의 ‘OOOOOO’ 또한 배급사는 아래와 같이 (주)CJ E&M으로 동일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림-16] 2015년 3D 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신청사, 배급사 관련 표

번호	신청사	3D제작사	영화제작	배급사	투자사
1	위스튜디오스 엔터테인먼트	위리얼디스콥어	비콘티 엔터테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2	위케이드래곤 엔터테인먼트	(주)디빅스튜디오	올게저	월드엔 엔터테인먼트 대지시대문화관광유한공사	월드엔 엔터테인먼트 케이드래곤 등
3	위리얼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라온	인전상륙 작전	WCU 엔터테인먼트	위리얼리온, 18K기업 은행, WCU 엔터테인먼트

2) 2차 심사 및 지원작 선정

(1) 심사 및 선정 과정

- ① 영진위의 「2015년 3D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 심사 결과보고의 건」(2016. 2.) 등의 사업심사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3D변환기술을 활용한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상업적 제작이 어려운 국내3D 콘텐츠 보급 활성화 및 국제기술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20억원에 달한다.
- ② 2015. 11. 23.~11. 27. 재공모 접수 시 모두 3개 업체에 신청하였는데, 2016. 1. 28. 심사를 진행, 80점 이상 득점한 작품을 지원 대상작품으로 선정토록 하였는데 선정결과는 위와 같이 신청작 3편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심사 당시 3D 컨버팅 업체 (주)스튜디오 라온과 영화제작사 청어람과의 3D컨버팅 공동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를 실적(8억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심사위원들에게 간사가 안건으로 전달하고, 심사위원회는 현물투자건도 실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괴물》 3D 컨버팅 현물 투자 건) 현물 투자건을 인정하여 심사대상 업체인 (주)스튜디오 라온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2) 심사위원 구성 관련

- ① 당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시 이 사업 담당자 000(2018. 2. 22.)은 “당시에 심사위원 후보 추천 의뢰를 한 것은 맞는데 감사팀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여서 사업팀에서 각 직군별 3배수의 후보자를 추슬러서 추천 명단을 감사팀에

‘2015년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 풀(최종)’(엑셀파일)의 제작(남자) 직군의 “제남-4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감사팀 보관 추첨문서에 해당하는 이는 박OO를 제외하고는 없음이 확인이 된다.

[그림-17] 2015년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위원

구분	영역	직위/소속	장리확인
애니메이션	○○○	영진위 위원	장리
CG / VFX	○○○	씨네메이튼 이사	장리
기술학계 3D기술	○○○	경인대학교 교수	장리
	○○○	동국대학교 교수	장리
제작	○○○	인벤트스튜디오 <그대를사랑합니다> 제작	장리

(3) 심사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 ① 당시 사업담당자 ○○○(2회 진술조서, 2018. 2. 22.)은 “당시 심사위원 중 박OO 위원이 심사장에 오자 심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전에 시나리오 등을 유출할 수 없었고 당시 심사평가장에서 3D로 변환할 장면 일부를 시연하였는데, 당시 시나리오 및 투자계약서와 책자만을 보고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시간 가량 시간을 끌었습니다. 당시 심사지원팀장으로 김OO이 있었고 저 또한 심사평가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OO 위원과 최OO 본부장이 통화를 하도록 해주었고 또 김세훈 위원장과도 통화를 하게 해준 후 심사평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심사참여위원으로 참여한 장OO 위원도 박OO 위원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상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있다’,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감’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당시 감사팀장 김OO(2회 진술조서, 2018. 3. 7.)는 “당시 사업요강과 신청사들이 실적 제출했던 것을 보면, 이는 사업요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사업요강상 실적증명에 필요한 첨부 서류

등(세금계산서 등)이 일부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가 이를 신청 시에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심사에 상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계약서류만을 보고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나 송금내역서 등으로 확인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류’만을 갖고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문제였습니다. 사업요강에서 정해진 제출서류가 일부 미비함에도 이를 인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특정작품의 지원배제(특혜)

- ① 위 000은 앞서 진술한 바의 박00 심사위원의 행위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심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의아했고 그것에 비추어 무언가 마음에 거슬리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라 하고, (㉸)라운 스튜디오의 현물투자를 실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심사가 종료된 후에 저와 주00 팀장, 최00 본부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팀의 감사결과에 의한 것인데, 그 이유는 <000000>의 제작사인 라운의 경우 최근 5년간 10억의 컨버팅 작업 실적에 대해서 청어람의 ‘괴물’의 컨버팅 작업 현물작업 실적과 기타 2억 1천의 실적이 있는데 이를 위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에 회부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실적 증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한편 위 000은 심사평가 당시 <000000>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여부에 대해서 “당시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 중 한국영화가 3D로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오랜만이고, 전쟁을 다룬 영화로 3D제작에 적합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영화 “검열” 및 상영거부

- ① 2018. 1. 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열람 및 재정리한 「대통령님 비하 독립영화 <철의 여인> 개봉차단 추진」을 보면, “정부 비판성향 영화 제작사인 곡사의 김곡, 김선 감독은 최근 대통령님 펴헤 내용 독립영화 ‘철의 여인(상영시간:30분)’의 극장 개봉을 추진” 증인데, “폭력·선정성 등에 관한 사전심사(3. 28.)에서 ‘청소

년 관람불가' 판정(5단계 중 4등급)을 받았으며, 현재로서는 최종 심사 시 반복 가능성은 낮다는 여론"인데, "영등위 심사(4. 18.)를 앞두고 좌파의 노이즈마케팅 및 이슈화 빌미 만들어가기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①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문체부에 관련 사실 통보. 상영등급제한 방안 및 상영 시 법적 대응 등 조치 강구", "② 영화계 건전 인사 및 여성단체 등 통해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도록 적극 압박활동 전개토록 유도" 등의 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검색에 의하면 이 영화는 2013. 4. 10.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 ② 위 같은 국정원 문서 중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에는 "문체부는 1. 21. 독립영화협회 대통령님 펴뮌 영화 '자가당착' 등의 상영 계획을 취소토록 조치하고," "영진위에 '등급미분류' 영화 상영계획 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김세훈 위원장 경위서 제출·담당자 징계 등을 지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③ 위 같은 국정원 문서 중 「문체부, 위안부 영화 '귀향' 개봉관 최소화 조치」(2016. 2. 16.) 제하의 문서에는 "2. 15. 영진위에 영화 '귀향' 개봉(2.4.)과 관련 '인디플러스' 등 정부 산하 영화관에서 상영을 금지하고, 일반극장 개봉관 확보가 최소화되도록 지시" 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2015.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을 담당한 000은, "부산 '영화의 전당'이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를 개관, 개관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상영작으로 <송환>과 <레드헌터>가 상영예정이었었는데 김00 본부장이 상영이 부담스럽다고 뺄 것을 지시하여서 영화의전당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 영화를 빼는 대신 독립영화 컨셉을 대중적 영화로 변경하여 영화제를 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⑤ 위 000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떼끄 팀장 이00(2018. 4. 26. 진술청취 보고)은 "2016. 3.경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확정을 받고, '영화의전당'의 공간을 개·보수하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를 개관, 개관영화제를 준비하였다. 당시 부산지역 영화평론가협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독립영화 10BEST'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당시 영진위 다양성진흥팀장 및 000으로부터 영화 <레드헌터>, <송환> 등이 포함되어 '이와 같은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들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상영 리스트를 수정하여 위 영화제를 개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위 진술인은

당시 당초 상영프로그램 및 변경 프로그램을 본 전문위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송부하였다.

- ⑥ 위 송부자료에 의하면, 2016. 2. 20. 부산 ‘영화의전당(대표 서OO)’은 “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개관영화제” 상영작 〈송환〉 등에 대해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신청하였는데 그 작품들은 〈송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마이제네레이션〉, 〈검으나 땅에 희나 백성〉,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 살해 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 〈마녀의 관〉, 〈환호성〉, 〈자본당 선언: 만국의 노동자여, 축적하라〉, 〈이어도〉, 〈백야〉, 〈제외될 수 없는〉, 〈레드헌터〉, 〈레드헌터2:국가범죄〉, 〈가족초상화〉 〈내 안에 부는 바람〉, 〈작별들〉, 〈희망이 없으면 불안도 없다〉, 〈광대버섯〉, 〈슈퍼 따롱이〉 등 19편이다. 그런데 2016. 2. 24. 위 ‘영화의전당’은 재차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하는데 여기에는 위 19편의 작품 중 15편을 제외하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가족초상화〉, 〈작별들〉, 〈슈퍼 따롱이〉를 포함한 11편의 작품들로 교체되었다.

자.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다큐멘터리) 사업

1)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마켓 지원 사업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가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마켓 지원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다큐멘터리 산업기반 강화, 세계시장 진출 기여 및 아시아 영상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 강화”이고, “국내 외 투자·제작·방송사 등이 참가하는 피칭, 비즈매칭, 기획개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독립제작자와 후반제작업체, 방송사, 배급사, 상영관 등 네트워크 지원”이 특징이다. 사업기간으로는 2014년부터 계속 사업이고 매년 10월~11월 사이 열리며 소요재원은 국고(문체부/미래부), 시비(인천시)에서 충당된다. 2016년에는 이 사업이 영진위 영화기금지원(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2017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3억 원(2018년 2.8억원)이 반영되었다.
- ② 인천영상위 사무국장 강OO(영화 감독, 〈소년, 달리다〉 연출, 진술조서, 2018. 5. 11.)은 “한국 다큐멘터리는 국내외적으로 그 작품성이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만, 산업적으로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획과 투자, 제작, 배급 등의 산

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죠. 더욱이 영화와 방송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교류가 없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천다큐멘터리포트의 취지는 이렇게 취약한 한국다큐멘터리 산업의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영화와 방송이 한 자리에서 만나고 투자와 배급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도 목표로 갖고 있구요. 그런 취지에서 2013년도에 한국 프로젝트들만을 대상으로 일종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들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마켓’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시 예산만으로 국제행사를 치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구요, 그 이후 쪽 2.5~3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인천다큐멘터리포트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완성 한국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한 K-PITCH 섹션이 있구요, 약 10~12작품을 매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한 A-PITCH가 있습니다. 숫자는 한국 프로젝트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직전이나 완성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ROUGH CUT PRESENTATION이 있습니다. 8~10편 정도를 뽑습니다. 이렇게 총 30편 안팎의 프로젝트들을 뽑아, BBC, NHK, ARTE FRANCE, POV 등 해외의 우수 TV와 국내의 방송사, 배급사, 투자사 등을 한곳에 모아 피칭(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피칭을 한 이후에는 관심있는 바이어, 투자자들과 제작진들을 1:1로 만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관해 논의하는 비즈미팅을 주선합니다. 그밖에 다큐멘터리 산업과 관련된 토론회나 강연, 발표회 등도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지원사업의 변경

- ① 위 같은 문체부 제출 자료를 보면 2016년 일반회계→영화기금, 지자체(단체) 지원 →프로젝트 공모지원으로 변경되어 기 지원대상인 인천 영상위(인천시 소속 법인)를 통한 지원 대신 영진위 사업공모방식으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2억원)이 추진되었다. 아래는 위 문체부 제출 자료의 일부이다.

* '16년 예산관련, 기재부 심의시 '영화관련 사업의 재원 일원화 방침'에 따라 동 사업을 영화기금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민간보조)에 포함 편성하였으며,
 * 이후 특정 지자체(단체) 지원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으로 '지자체(단체)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공모 방식'으로 전환, 지원
 * 결과적으로 인천영상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결과로 나타남.

② 「2016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 중 “첨단영화 기술육성” 부분을 보면, 차세대 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 ‘차세대 영상콘텐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2억원)’ 사업으로 포함되어 위 국고보조 사업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첨단영화기술육성	3,742	5,555	1,813	
• 첨단영화 기술지원	1,610	1,610	-	
• 첨단영상 소프트웨어 이용지원	1,142	955	△187	·첨단영상 소프트웨어 이용지원 : 744백만원 ·해외 VFX 전문가 컨설팅 지원 : 150백만원 ·연구보고서/기술세미나/전문가 자문회의 : 61백만원
• 첨단영화 제작지원	990	1,110	120	
- 첨단기술VFX영화테스트 베드	390	510	120	·첨단기술 단편연구 : 450백만원 (3편) ·자문회의/연구보고서/기술세미나 : 60백만원
- 우수SFX 장면개발지원	600	600	-	·우수SFX장면지원 : 600백만원 (3편)
•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일반회계에서 이전)	-	1,880	순증	·차세대 영상콘텐츠 3D 제작지원(지정과제) : 1,000백만원(1식) ·차세대 영상콘텐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 200백만원(5편 내외) ·차세대 영상콘텐츠 프리비즈 제작지원 : 680백만원(5편 내외)

③ 위와 같은 지원 사업 변경에 대하여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 (녹취록, 2018. 5. 24.)은 “당시에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불러서 ‘이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에서 없애라’는 지시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미 우연의 일치로 기재부에서 이는 영화관련 사업이므로 영화발전기금 사업으로 돌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영화발전기금 사업으로 돌려놓았다.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영화기금 사업으로나마 돌려놓게 된다면 인천 영상위가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당시 강OO 감독과 영진위 김OO 본부장과도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녹취록, 2018. 5. 23.)은 “당시 청와대 문

체비서관 김소영, 청와대 행정관 신OO로부터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마켓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고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업을 없애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는데, 그 과정에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영진위가 제출한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다큐멘터리) 사업요강」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제작공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 등 차세대영상 다큐멘터리제작에 대한 선순환 구조 기틀 마련:이고 지원규모는 총2억원 이내, 일반 공모로서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분야에서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제작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4) 인천 영상위에 대한 지원 배제

- ①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위 이OO의 후임) 박OO(진술조서, 2018. 5. 2.)는 “권OO 감독이 운영위원장인 인천다큐포트라는 영화제가 있는데 이OO 사무관으로부터 계속 지원하던 영화제인데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잘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안타깝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후에 영진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무리수를 두기가 어려웠고, 나중에 또 워선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포기했습니다. 당시 듣기로는 워선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시 윤OO 의원실까지 불려가서 다시 살릴 수 없냐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미 예산이 잘렸다는 변명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워낙 좋은 사업이라 방법을 강구해 보기는 했지만 정OO 과장이 윤OO 의원에게 안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은 16년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하여 국고로 지원해서 훨씬 더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여기서 ‘워선’이라 함은 “청와대나 국정원”으로 보이고, 위 인천 영상위 사업의 배제 이유에 대해서 “인천다큐포트가 정원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이유는 운영위원장이 권OO 감독이었다는

것과 영화제가 다큐를 주되게 상영을 하다 보니 내용상으로 당시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영화 <그림자꽃>에 대하여 “그 외에 김OO에게 요구를 해서 시놉시스를 요청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림자꽃’이라는 작품입니다. 통일부 사무관이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정부 청사에서 만났는데 탈북자가 남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월북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방해를 한다는 주 내용으로 다큐를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통일부 요주의 인물 중 한명인데 다큐가 거의 완성단계고 인천다큐포트에서 상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지원 중지 사업 이다면서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인천다큐포트 지원이 더 어려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위 같은 강OO(진술조서, 2018. 5. 11.)은 “2015년도에 다음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문화부 담당팀과 논의를 계속해 오던 즈음, 8월 경 문화부(이OO 사무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의 방침이 소소한 사업들은 모두 기금으로 돌리라는 것”이라며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영화발전기금”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입장이야 예산의 출처가 어디든 필요한 금액만 확보되면 큰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경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확인한 결과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에 인천다큐포트 예산 항목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를 담당자(이OO 사무관)에게 물어 보니 예산 꼬리표는 없지만 “첨단영상육성사업”(사업명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에 살아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었고, 또 영진위 담당자에게도 해당 사업명으로 올라간 예산 중 2억 원은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지원 예산이라고 미리 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명을 분명히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묻자, 그렇게 하는 건 문화부도 영진위도 부담스러우니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후 12월말 인천다큐멘터리포트 명목이 빠진 “첨단영상육성”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후,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당시 이OO 본부장, 김OO 본부장, 김OO 본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2016년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영진위 직원들은 명목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쪽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에 영화발전기금으로 넘어온 예산이니 공모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영진위의 공모를 기다리면서 사업을 준비해 오던 중

아무리 기다려도 공모 소식이 없기에 확인해보니,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해당 예산을 인천다큐멘터리포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부산의 영진위에 두 차례 찾아갔고 세종시의 문화부에도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영진위의 첫 번째 방문에서는 김OO 본부장, 주OO 팀장 등이 참석했는데, 영진위 직원들은 어떠한 이유도 대지 않은 채 무조건 인천다큐포트 쪽으로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12월에 미팅을 가졌던 김OO 본부장(경영지원본부)은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두 번째 미팅에서는 영진위 사옥에서 김OO 본부장, 이OO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저는 해당 예산이 사업운영비로 투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제작지원 예산으로라도 쓰자고 제안했고, 두 본부장은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진위의 담당 팀장(주OO)과 통화한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예산이 인천다큐포트와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부와의 미팅(박OO 사무관) 때, 해당 직원은 부서의 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중에 불가능하다는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은 나중에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라는 것으로 급조되어 다큐멘터리 제작 공모지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당 사업의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위 담당팀장 주OO도 “원래 이 예산은 인천다큐멘터리포트에 써져야 했는데 사정이 있어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국고를 영발기금으로 돌리고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점,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사업비로는 쓸 수 없다고 강변한 점 등은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2016년도 예산은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201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부 영상콘텐츠과 과장(정OO)과의 통화에서 “올해 사업이야 어떻게 되든, 인천다큐멘터리포트가 성과도 좋고 평가도 괜찮으니 내년 예산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했으나, 정OO은 “나는 모른다. 국회하고 친한 것 같으니 국회에서 해결하든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같은 강OO(진술조서, 2018. 5. 11.)은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등의 관여에 대해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 예산이 날아가고 나서, 당시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오OO가 미래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담당 중이었는데, 이 오OO가 2016.초에 국장 승진을 하면서 하필이면 국정원 쪽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당시 BCWW 2016 행사에 제가 참석 중이었는데 마침 오OO 국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 때 잠깐 시간을 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는 ‘인천 다큐 포트’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후였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 문체부 등의 예산이 한꺼번에 없어지려면 각각 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는 힘들고 그 위에 청와대 내지 국가정보원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제가 국정원 파견 중인 위 오OO 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국정원에 블랙리스트가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오OO는 ‘당연히 있다. 그리고 개네들은 한번 찍힌 것은 절대로 안나. 불독 같은 놈들이야’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OO는 ‘국정원으로 파견되기 직전에, 2015년도 인천 다큐 포트에 선정되었던 〈그림자 꽃〉 관련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질책성 확인을 받아서 아주 곤혹스러웠다’면서, ‘왜 이런 영화에 지원을 해주었느냐’라고 국정원으로부터 질책성 연락이 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이OO(녹취록, 2018. 5. 24.)은 “정OO 과장이나 박OO 사무관이 언급한 배제 지시는 이 사업이 이미 영화발전기금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영화발전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더라도 지자체를 특정하여 지원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테면, 인천 영상위와 MOU를 맺고 인천 영상위가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선정된 작품들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영진위 관계자들과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영화 〈그림자 꽃〉이 2015년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에서 지원되었다면 이 사업은 매해 10월경에 열리므로 이미 차기 연도(2016년) 예산은 확정된 상황이어서 이 작품이 문제가 되었다면, 2016년 영진위 사업에서의 배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영화계의 피해와 영진위 반성·책임

가. 영화인들의 물질적 피해 및 자기검열 등 트라우마

- ① 영화 〈그림자들의 섬〉 감독 김OO(진술조서, 2018. 2. 27.)은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체검열’을 했다는 것에 대해 뒤늦은 회한을 하지만, 사실은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배제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지원작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따라서 이 ‘자체 검열’한 점에 대해 견디기 힘든 심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적으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막상 돈을 받고 나니 다른 곳에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한 면접 심사 시 심사위원들의 발언이 얼마나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인지, 영터리인지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저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자들의 섬’ 안에 이OO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OST로 들어가 있어 저작권료가 많이 비쌌고 또 대부분 저의 사비로 제작을 어렵게 마쳐 빛도 많이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 그나마 영진위에서 지원하는 개봉지원에 연달아 배제시켜서 작품이 관객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문OO은 “당시에는 독립영화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낀 바와 같이 당시를 돌이켜보니, 당시 시대나 정세 상황에 비추어 ‘당연히 떨어졌다’는 그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와 같은 좌절감, 자포감 등의 정신적 외상들이 있습니다. 제작지원에서 떨어져 떨어짐으로써 제작이 모두 멈추어버리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 점, 그리고 이 작품이 탈락한 데 대한 자존감 훼손,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뉴스엔, 2018. 2. 9. 「독립영화인들 “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제하의 기사에는 “정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꾸준히 배제 독립영화의 리스트를 작성, 심사제도와 사업형태를 변형하며 주도면밀하게 문제 독립영화를 필터링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납득되지 않는 탈락을 반복해야만 했다.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채,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박탈한 헌법 위반이다. 이 결과 독립영화인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해야 했고 지독한 자기검열과 대면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고 호소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영진위의 반성과 책임

- ① 구OO(1회 진술)은 “2016. 10.경 블랙리스트가 사건화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한 내역을 찾으라’고 위원장이 지시했는데 일부러 많이 찾지 않았다, 아직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어떤 식으로 부메랑이 될지 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등재되어 있는 리스트[블랙리스트]를 찾아 지원 내역과 일일이 대조해서 제출했는데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명분으로 삼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위 구OO이 언급한 것은 아래 <표 58>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예술인 명단관련 지원현황」(2016. 11. 작성으로 추정됨)인데, 여기에는 독립영화제작지원, 한국영화개봉작적립식지원, 해외배급선재물제작지원 등의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위의 9,473명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정리한 문서이다. 위 구OO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부인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를 보면 앞선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혀 상당수 작품들이 지원배제되었던 (주)시네마달에 대하여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김OO(진술조서)에 의하면 “2017. 6.경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영진위 본부장과 팀장들이 영화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간 영진위 불합리한 업무수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사전에 경영지원본부에서 담당을 했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 없어서 보완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현장에서도 몇 명의 직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려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당시 박OO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하는 순간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공식사과 성명을 발표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표-58〕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예술인 명단관련 지원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예술인 명단관련 지원현황					
<p>□ 지원내역</p> <p>○ 지원년도 : 2014~2016 (총 지원건 : 1,435건 / 총 지원금액 : 565억)</p> <p>○ 지원사업 : 총 19개 144건 (총 지원건수 1,435건 중 10.03%)</p> <p>○ 지원금액 : 4,031,118,925원 (총 지원금액 565억 중 7.13%) 원장지원 별도</p>					
<p>○ 독립영화제작지원</p>					
번호	연도	작품명	지원사	지원금(원)	비고
1	2018	비연초리	김요형	20,000,000	
2		나는 정보 세상에 대해	김이영	100,000,000	
3	2015	지 없는 시간	이수정	30,000,000	
4		영포	서이영	27,000,000	
5		홍순	이진희	100,000,000	
6		기억해 내질	이은하	25,000,000	
7		추위는 없어	공민철	25,000,000	
8		푸른 날	정일채	50,000,000	
9		예술이름의 브레지카	이가희오	15,000,000	
10	2014	마은 대한 브레지카	백소현	13,000,000	
11		아무일도 없는 모든 것	김요형	35,000,000	
12		귀리꽃이	최용수	100,000,000	
13		학이, 내기	장우재현	20,000,000	
14		푸리에 열리스	김숙현	5,000,000	
소계				381,200,000	
<p>○ 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p>					
번호	연도	작품명	지원사	지원금(원)	비고
1	2015	최악의행위	김디스노리	93,000,000	최용수 대표
2		열리스	이진희오	770,000	최용수 대표

○ 해외배급 선계급제작 지원사업 : 공모						
번호	연도	작품명	지원사	지원금(원)	비고(감독)	
1	2018	지적	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	6,400,000	최수호	
2		일부 이 나일	최 지재이영	김일민	8,400,000	김재민
3		최현희 제작	최연디스노리	최용수	8,650,000	김종관
4	2015	그와공초리 이상연	최연디스노리	최용수	9,812,225	김영준
5		일일 이태원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9,200,000	박재일
6		물리수학의 열리스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10,000,000	홍순
7		반짝이는 박수소리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8,100,000	이강호리
8		소말리아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9,100,000	김수민
9		안인환 나리 총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9,100,000	이소리
10		주지희 열리스와열리스	최연디스노리	최용수	6,000,000	장영준
11		지안지영	최연디스노리	최용수	10,000,000	이승희영
12		30년전의 브레지카	최연디스노리	최용수	6,400,000	백재우,백은하
13	2014	제일화, 홍수영은님, 그리고 류류	최연디스노리	최용수	2,930,000	박재훈,박재현
14		습기로운 해변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10,000,000	태은석
15		달속의 제주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4,000,000	홍리경
16		그림자들과 열	주지희사 지재이영	김일민	3,750,000	장영준
소계				126,334,727		

○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 공모						
번호	연도	작품명	지원사	지원금(원)	비고(감독)	
1	2015	연사에도 다룬	최 지재이영 대표	김일민	1,200,000	김종관
2		조말리아	최 지재이영 대표	김일민	800,000	김수민
3	2013	물리수학의 열리스	최 지재이영 대표	김일민	2,880,000	홍순
4		공적	최 지재이영 대표	김일민	1,200,000	문영민
5		지재이영	최 지재이영 대표	김일민	7,000,000	박재훈,박재현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2018. 4. 4.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영화계 사과문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두 정부에서 관계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아직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일도 적지 않고, 밝혀진 과오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후속조치도 턱없이 미흡합니다. 부단히 되돌아보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999년 영화진흥공사에서 민간자율기관으로 거듭난,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는 범국가부문의 전문 기구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 자율기관이자 준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십 년 가량 이런 중차대한 역할과는

상반된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노릇을 했고,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영화계를 옥죄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지난 정부의 파행에 맥없이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제4절 |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1) 이명박 정부 시기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등에 따르면, 그간 “문화권력”이 “좌파”에 쏠려 있는데, 그 사례로 예산을 좌파인사들이 주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위원회인 영진위를 구성하였다는 인식이 보인다. 그래서 2008. 10. 당시 영진위원장은 영진위 해체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하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손에 꼽힌다. 영진위 직원의 다수 진술대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으로서 영진위를 표적 삼음으로써 다른 기관들에게도 ‘본’을 보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영진위 노조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명예퇴직 강요와 비정규직 해고 등에 적극 저항하는데, 영진위 사용자는 당시 정부기조에 부응하여 노사분쟁 및 대결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을 빌미로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이들을 2009. 10. ‘고객지원TF’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로부터 배제시켜나갔다. 또한 노동조합은 저항과정에서 수반하게 될 노조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자들의 압박에 의해 민주노조를 탈퇴하게 되는데 이에 더하여 2009. 6. 영화인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와 위 고객지원TF로 일부 직원의 발령 및 배제를 겪으면서 직원들 사이에 일종의 ‘공포감’, 위축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영진위는 2009. 영화단체사업 지원에서 ‘촛불집회’ 주최·참가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등을 실행해나가는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에 대한 영진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 및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2) 박근혜 정부 시기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는 실상은 “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좌파 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지원대상 선정 시 철저히 배제”하는 등의 “배제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영진위에서 이러한 배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은 앞선 정부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는 전임 김의석 위원장의 임기종료(2014. 3. 29.)를 앞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또는 발굴 과정을 통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2번에 걸쳐, 상당한 시일을 두고 “부적격”으로 반려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당시 김종덕 장관→문체부 당연직 추천위원(영상콘텐츠산업과장)→특정 추천위원“을 통해 정부(장관)의 의사를 철저히 관철할 인사로 김세훈 위원장(박근혜 캠프 출신), 박OO 사무국장(박근혜 캠프 출신)을 세우고, 김OO 부위원장(미래문화포럼), 김OO(청와대에서 위원 지정) 등 이른바 ‘보수우파’가 다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 김세훈 위원장은 새로이 임명된지 6개월이 경과한 후 영진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데, 사무국장이 전체 조직을 통괄하는 한편, 5개의 본부와 팀제로 구성하는데, 특히 창작(제작) 지원 분야와 유통 및 배급 분야를 산업진흥본부 및 기반조성본부로 각 분할함으로써 “배제”의 기제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였다. 특히,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을 하나로 엮어 기반조성본부(본부장 김OO)의 ‘다양성진흥팀’에 두게 되는데 다수의 진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 예술영화전용관 등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 사태를 경과하면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재편하고, 문제영화들의 “개봉” 지원을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당시 국정원과 연계하여 “지원배제” 작업을 주도해온 기반조성본부장에게 수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영진위는 문체부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건전’의 의미는 ‘좌파’ 성향을 배제한 ‘우파’ 성향을 의미)를 위한 ‘실행계획’ 및 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기존 지원사업 심사제도와 관련, 심사위원 후보자군에 ‘우파’ 성향의 인사나 단체들을 의결 과정 없이 추가하여 심사에 참여시키도록 하거나 온라인 심사 풀을 도입하여 기존 독립영화계 중심의 심사 풀을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심사 풀을 축소하는가 하면¹⁷⁾

17) 예를 들어, 2016. 1. 설계 및 구축된 온라인 심사위원 등록제를 통해 2015년 800여명의 심사위원 풀이 400여명으로 대폭 개편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풀을 운용하면서 지원배제 행위는 2016년 하반기까지 지속되었다.

②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원장의 개입 아래 배제를 관철할 이들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을 진행하면서도 마치 위원장의 관여 없이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심사지원팀을 신설하고 ③ 기재부 지침 및 문체부 훈령을 그대로 수용하여 「영화발전기금 관리규정」¹⁸⁾의 개정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조항을 도입, 특정 단체들에 대한 배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④ 반면에, 청와대→문체부→영진위로 순차적으로 하달하여 문체부와 협의 아래 이른바 ‘건전영화’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다양성가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에 대하여

1) 권력·정보기관의 총체적 개입

- ① 다수의 진술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문제영화’들에 대하여 문체부에 “검색(검열)”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는 영진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청와대로 보고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영화들에 대한 보고는 2014. 10.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불안한 외출>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이 직접 지목하고 신OO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에 이 영화의 상영에 대해 ‘검색’하지 못한 경과를 보고토록 하고 그 책임을 묻는 상황에 이르면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청와대는 독립영화전용관의 지원체계 개편 방안(서울지역 독립영화전용관의 해체), 국제영화제 지원 개편 등을 주도하고, 부산국제영화제(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다이빙벨 상영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배제 등에 관여하여 문체부→영진위로 순차적으로 하달하여 관철시키고 나아가 예술영화 제작지원 등에는 문체부를 경유하여 신청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직접 지원배제 작품을 선정하여 다시 문체부를 경유하여 영진위에 하달하여 배제를 관철하는 등 직접 “지원배제”를

18) 위 2015. 10. 영진위 규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 것인데 이는 2015. 이전 시기부터 지침으로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0. 영진위에서 다른 산하 기관에서 달리 유독 이러한 규정을 자체 규정에 도입한 것은, 2014. 3.경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각 부처 산하 단체·기관의 정부 보조금 지원 시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에 가담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한 기재부 지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로,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지시와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도하였다.

- ③ 국가정보원은 영진위에 상시적인 “채널”을 마련하여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영화단체 지원사업 등 주요한 지원사업의 신청내역을 파악하여 ‘스크린(검열)’을 거쳐 특정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요구하고 다시 영진위의 이 “채널”은 이를 영진위원장에게도 보고하고 협의하는 한편, 각 사업담당자(팀)에 하달하여 이와 같은 배제를 관철시켜나갔다.
- ④ 한편, 문체부는 영진위가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스크린(검열)’ 기제가 작동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신청내역, 심사과정,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문체부 또한 이와 같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특정 작품들에 대해 검열하고 배제 지시를 하였는데, 위 국가정보원 “채널”이었던 기반 조성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문체부는 시국 관련 소재의 작품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 ⑤ 그리고 영진위의 각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먼저 신청자와 시놉시스 등 작품 내용들을 검토하는 사전 검열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나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배제 키워드”에 의한 것이었다. 다수의 진술이나 배제 작품들을 아울러 보면 이러한 키워드는 대략 “국가수반의 명예훼손”, “4대강 등 정부정책이나 시책비판”, “강정 해군기지 반대나 용산 철거민 투쟁”, “노동자 투쟁문제”, “세월호 문제”, “국정원 비판”, “국가보안법 비판”, “북한 관련(분단을 소재로 앞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라 할 수 있다. 위 “채널”의 진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경우 자신들을 비판하는 영화 <자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고 배제를 주문하였다.
- ⑥ 나아가 2015년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심사평가일 이전 ‘문제영화’들에 대하여 ‘OOOOOOOO’의 문제제기를 언급한다. 즉, 영진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이와 같은 “우파” 문화단체의 “의견조회”, “스크린”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이 단체가 2014. 9.경 정무수석실의 제시에 따라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 다이빙벨 상영 반대 유튜브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은 문체부가 “영진위에 지원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큐 영화계 건전화 도모”할 예정이라며 문체부의 개입과 관련 사실에 대해 언급한다. 결국 이는,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청와대, 국정원, 경찰,

문체부 등 핵심 권력 및 정보기관이 주도하면서 상호 교차 “검열”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이른바, ‘건전영화단체’로 불린 보수(우파) 단체까지 개입하였음을 보여준다.

2) 실행의 핵심 수단과 과정은 심사의 공정성 훼손

- ① 이와 같이 청와대와 문체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하달된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관련 심사위원들에게 “배제”를 주문하고 관철시켜 왔고, 이 과정에서 심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공정성·투명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 ② 2011. 당시 조희문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작품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실이 있었다. 이 당시까지 심사위원은 사업팀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을 가하거나 그대로 결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하여 심사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③ 이 추첨업무는 2016. 4. 이전에는 감사팀이, 이 중 섭외순서 지정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2015. 7. 심사지원팀이 신설되고 2016. 4. 이후 추첨 업무는 심사지원팀에서 담당토록 하였는데 섭외 순서 또한 추첨된 순서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위원장의 개입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특정 사업에서 특정 작품에 대한 배제가 실행될 당시에는 항상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거나 (공정성의) “외양”만을 갖추고 진행되었다. 이 같은 배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오직 심사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제 의도가 관철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진위의 심사위원(후보) 선정과 관련한 관련 서류들은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 후보 명단 전체를 “추첨”을 생략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사업담당자와 추첨 담당자의 서명(날인)도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제각각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심사위원 구성이 마치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외양을 갖추기 위해 ‘근거’ 서류를 조작해왔기 때문이다.
- ③ 곧, 2016. 4. 이후 절차상 위원장의 섭외 순서를 생략토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마치 위원장의 개입 여지가 해소되어서 더욱 공정성을 기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팀의 추첨의뢰→심사지원팀의 추첨통보”라는 절차는 실제 이행되지 않고 위원장 대면보고를 통한 심사위원 사전선정 후 이와 같은 ‘절차’를 문서상으로 ‘남기는’ 행위

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작품의 시나리오나 내용, 제작자나 배급사의 정치적 성향 등 정치적 이유로 특정 영화인·영화를 배제하기 위해 공적 문서들을 조작한 심각한 ‘범죄적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영진위원들과 일부 간부의 적극적 부역과 소속 직원들의 ‘순응’

당시 다양성영화개봉 지원이나 독립영화제작지원 등 담당 직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배제 의사를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을 때 일부 거부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 및 체념 아래 사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부의(혹은 소극적) 저항을 외 “내부고발”이나 “폭로” 등으로 이어지는 적극적 저항행위는 거의 없었는데, 이와 같은 실무담당자, 직원의 “순응행위”는 강요된 것이었다. 영진위 한 간부의 진술대로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서 강요에 따라 “의무없는 일”을 행해야 했다.

반면에 영진위원장을 비롯한 영진위원과 일부 간부의 행위는 “적극적 부역” 행위라 할 만하다(간부들의 경우에도 강요받는 처지에서 행한 행위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영진위원장은 간부들로부터 배제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고, 또한 문체부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그러한 배제행위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사실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조건으로서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조직을 재편하거나 특정인을 해당 사업부서에 배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진위원들 중 상당수는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장과 교감 아래(“공모하여”) 특정 영화·영화인·단체 등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심사결과”를 실현하는데 가담하였다. 더하여, 특정 영진위원은 영진위의 이 같은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언론 대필 기고문의 당사자로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적극적 부역·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수 차례 심사에 참여, 배제행위에 적극 가담한 심사위원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4)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과 축소

한마디로 문제 사업을 없애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지정위탁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

다. 한편으로 ‘특혜’는 이른바 ‘건전·애국영화’ 제작 지원을 위하여 급작스레 사업을 신규로 만들거나(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공공기관의 3D영상콘텐츠 지원에서 국고지원을 통한 극영화 제작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블랙리스트 실행은 영진위의 자율성 훼손의 과정

이 사건들의 시기, 영진위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은 심각히 훼손되었다.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사업은 국정원과 문체부의 지시 아래 수시로 공정성의 궤도를 벗어났다. 장기적인 영화진흥정책을 펼치기보다 ‘위로부터’ 예산이 책정된 사업을 급작스럽게 펼치기도 하였고, 정부의 정책·방침에 순응하기 위해 사업을 이리저리 변경해왔다. 독립영화인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을 실현하기보다는 불화와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상당수 영화인들은 영진위 지원 사업이나 심사위원 참여 등에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을 낳았다. 영진위는 영화인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영화인들은 영진위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결국 이는 영진위가 한국 영화예술·산업의 진흥의 구심으로 서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다.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진위에서의 지원배제 일람은 아래의 <표 59>의 표와 같다. 여기에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타 사건들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일람을 아우른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다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에서 영화 <빛> 배제와 관련하여 당시 국내진흥부장 문OO은 2013년 하반기에 이 작품 배제 사유가 (주)시네마달이 신청사인 이유이고 2014년 상반기에는 의도적 배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당시 사업담당자 OOO은 2013년 하반기에는 이를 담당하지 않았고, 2014. 상반기에 이 작품이 (주)시네마달을 이유로 배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4년 상반기의 이 작품의 제작계획서를 보면, 프로듀서에 (주)시네마달 대표인 “김일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2013년 하반기의 이 작품 제작계획서는 영진위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선 2014년 상반기 이 작품의 배제 이유는 (주)시네마달을 이

유로 한 것이라는 0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하여 2013년 하반기에도 (주)시네마달을 이유로 이 작품이 배제되었다는 문00의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 ② 2015년 영화단체 지원에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국정원 정보보고 및 위 000의 진술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5년 영화단체지원 사업 관련 '영화제작가협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려는 의도 또는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000이 언급한 3회 미만의 단체행사에 지원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으로 공식규정 또는 세칙은 없음은 위 000의 진술로도 확인이 되고 더욱이 2016년 영화제 지원 사업에서는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의 제1회 영화기술제, 베리어프리영상포럼의 제1회 베리어프리 영화축제, 항일역사재단의 제1회 독립운동국제영화제에 대해 지원 결정한 점에 비추어도(독립운동국제영화제의 경우 의도적 특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2개의 1회 행사에도 지원 결정한 점) 이 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000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영화제작가협회에 대한 지원배제의 '명분'으로 발굴되었거나 활용되었고, 위 예비심사에서 영화제작가협회에 대한 지원배제가 실시되고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 ③ <강기훈 말고 강기타>의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배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작품은 <국가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으로 2017.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2015. 7. 영진위 직제개편으로 종합촬영소는 기술지원본부(최00 본부장) 산하로 편제되고 기존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을 이 촬영소가 담당하게 되었던 바, 당시 촬영소장인 이00은 이 사업 관련 '협조자' 및 선정 작품들에 대한 지원 및 결과보고 주체에서 심사부터 사업 진행을 관할하는 "소장"으로 변경된 점, 이00은, 당시 사업담당자가 2016년 3분기부터 당시 김00 기반조성본부장에게 이 사업 신청내역 등을 리스트를 정리하여 문제작품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문제작품에 <강기훈 말고 강기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위원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정치편향 작품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유의하라는 지시 및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더불어 정부와 영진위원장 등의 압박 사실들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토로하여 심사와 관련하여 일종의 유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기훈 말고 강기타>는 작품의 성격(권위주의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내용)을 이유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2016년 2분기에도 지원에서 탈락하여 배제 의혹이 상당하지만, 이를 확정할만한 진술이나 자료

가 부족하다. 반면,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은 의혹이 제기된 2016. 4분기 외에도 2016. 3분기에 위 작품과 더불어 ‘문제작품’으로 지적되었다고 하므로 이 때 함께 지원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인천 영상위원회의 배제에 대하여. 먼저 2016년도 예산 항목이 변경(일반 회계→영화발전기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물론 당시 (우연의 일치로) 영화 관련 지원사업의 영화발전기금으로의 일원화 등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더라도 문체부 정책보좌관 박OO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없애라’는 지시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는 박OO 보좌관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예산의 변경이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마켓 지원 사업)’이 국고지원 또는 영화발전기금 지원에서 배제된 사실과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인천 영상위의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배제는 결정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러 자료와 진술에 비추어보면 비록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영진위가 직접 개별 제작자나 개인에 대한 공모지원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도 인천 영상위를 통해 다큐멘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나갈 수 있었다는 점, 영진위 관련자들은 이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천 영상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구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점, 영화 <그림자꽃>에 대한 지원은 2015. 10월경에 이루어져 이 영화 등을 이유로 한 청와대 등의 지시는 이미 2016년 예산이 확정된 시점으로 2016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사업에서의 배제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순서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천 영상위가 주관하는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에 대한 지원은 첫째, 이를 국고보조에서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배제의 단초가 마련되고 둘째, 결정적으로 영진위의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59] 영화진흥위원회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배제 일람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영화단체사업 지원	2009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권운동 사랑방, 노동자뉴스 제작단,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인디포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등 지원배제	기재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제한 지침, 문체부→영진위 지시
	2010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지원배제	위와 같음
	2011	인권운동사랑방,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인권영화제 및 인디다큐페스티벌	위와 같음
	2015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단체 행사지원	국정원의 스크린, 문제단체 이유, 심사위 지원배제 의도 구성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2010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정위탁→공모제로 전환
	2010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정위탁→공모제로 전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2010	인디포럼작가회의, 독립영화협의회, 한국예술전용관협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최공재) 선정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2015 2015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지원 및 인디플러스 위탁운영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체계 개편(청와대→문체부), 서울 직영 해소, 지역 이전
		아리랑시네센터	위탁사업 지원금 지원배제	다이빙벨 상영 이유, 지원배제 명분발굴(독립영화전용관 사업 개편)
다양성영화개봉지원	2013. 상반기	모래가 흐르는 강	다양성영화 개봉을 위한 P&A 지원금	배급사 (주)시네마달 및 4대강 반대 이유
	2014. 상반기	구름비-바람이 분다	위와 같음	제주 강정해군 기지 내용, 국정원 스크린→영진위
	2014. 하반기	그림자들의 섬	위와 같음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관련, 국정원 스크린→영진위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2015. 상반기	그림자들의 섬, 불안한 외출, 밀양아리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 스크린→영진위, 배제의도에 맞는 심사위 구성	
	2015. 하반기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산다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영진위, 배제의도에 맞는 심사위 구성	
	2016. 상반기	그림자들의 섬, 불온한 당신, 소년 달리다, 산다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영진위, 배제의도에 맞는 심사위 구성	
	2016. 하반기	TwentyTwo, 자백,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불온한 당신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 스크린→영진위, 심사위원 배제의도에 따라 구성	
독립영화제작지원	2013. 하반기	빛	독립영화 창작지원 (다큐멘터리)	(주)시네마달 관련	
	2014. 상반기	빛	위 같음	(주)시네마달 관련, 다큐멘터리 심사 조 별도 구성, 의도적 제척사유 발생	
	2014. 하반기	명령불복종 교사, 투 워스	위와 같음	국정원 스크린, 특정 심사조 편성	
	2015. 상반기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할매꽃2	위와 같음	할매꽃2는 서류심사 상위권→면접탈락, 엄마가…는 서류탈락 (‘세월호’ 키워드), 국정원 스크린, 심사위 의도적 구성	
	2015. 하반기	두 개의 문 2, 할매꽃2, 언더그라운드	위와 같음	용산참사, 노동문제 등 소재, 국정원 스크린	
	2016. 상반기	할매꽃2	위와 같음	국정원 스크린	
	2016. 하반기	할매꽃2	위와 같음	국정원 스크린	
	예술영화제작지원	2015	산(박찬경), 연인들(이송희일), 바당감수광(오명)	다양성가족영화제작 지원 중 예술영화제작지원금 지원배제	산은 연출자의 진보성향, 연인들은 제작사 (주)시네마달 및 연출자의 진보성향,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바당감수관은 연출자의 진보성향
국내영화제 육성	2016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항일역사재단	북한인권영화제, 항일독립운동영화제 등	특혜(화이트리스트), 의도에 부응한 심사위 구성
예술영화전용관	2014	동성아트홀, 부산 아트씨어터 시엔씨, 거제아트시네마, 대전아트시네마	정책지원금 지원배제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이유,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보류, 재심사 및 심사위원에게 주문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	2016	영화 <TwentyTwo>, <독도의 영웅들>	예술영화전용관 상영영화 배제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국정원 검열 →배제)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다큐멘터리) 사업요강(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마켓 지원사업)	2016	인천 영상위원회	다큐멘터리 활성화 지원 관련 지자체 보조금(전년 2억원)	일반회계→영화발전 기금, 지자체 지원→프로젝트 공모지원 변경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2016. 3분기	강기훈 말고 강기타,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후반작업 디지털시네마팩키지 작업 등 지원배제	내부검열(국정원), 심사위원에게 배제 주문
	2016. 4분기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위와 같음	내부검열(국정원), 심사위원에게 배제 주문
영화상영 검열 및 거부	2011	江, 원래 프로젝트	인디플러스 100일 기획전 상영 거부	
	2012. 7.	잼 다크 강정	인디플러스 개봉 프로그램 상영 거부(보류)	상영거부→사후 상영승인
	2012. 10.	MB의 추억	인디플러스 상영 거부	선거법 위반 검토 이유 상영보류 →배급사의 상영거부
	2015	다이빙벨	독립영화전용관확대 를위한시민모임의 인디플러스에서 상영요청 거부	문체부→영진위, 상영요청에 불가 통보
	2016	송환, 마이 제네레이션, 검은나 땅에 희나 백성,	부산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개관 영화제('영화의전당')	영진위 측이 상영 불가 입장 제시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 살해 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 마녀의 관, 환호성, 자본당 선언- 만국의 노동자여 축적하라, 이어도, 백야, 제외될 수 없는, 레드헌터, 레드헌터2:국가범죄, 내 안에 부는 바람, 희망이 없으면 불안도 없다, 광대버섯, 슈퍼 따롱이(15편)	에서 상영프로그램 변경, 취소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적어도 2016년 하반기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영진위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두루 걸쳐 있는 점 등 사건의 규모와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지원배제”, “상영거부 및 검열” 등의 작품과 영화단체(영화인)들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사기한 및 권한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2015·2016 가족영화 제작지원 및 2015. 3D영상콘텐츠제작지원은 다른 사업에서 지원배제와 유사한 심사위원 구성 등에 걸쳐 볼 때 지원배제 내지 특혜 의혹이 상당하다. 더욱이 이는 당시 정부가 정한 이른바 “건전” 영화 육성방침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밝히지 못하였다.

한편, ‘명단’으로서의 ‘블랙리스트’가 문체부 등을 통하여 하달되었다는 관련 진술들이 있고, 또한 그 개연성도 있으나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한 영화인들의 피해사실, 관여자들의 죄책을 인식하는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나 진상규명의 정도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특정 작품들을 지원 배제 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영진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지원배제 과정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3.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 조사결과 영진위는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의 관여 아래 영진위 내부 직원을 포함하여 특정 영화인과 영화들에 대한 분석과 정보보고, 이를 통한 배제 대상자의 관리 등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광범위하게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관련 리스트에 등재된 자는 최대 2,665여명에 이르고 있고 상당 수 역량이 있는 감독과 제작자들을 망라하고 있다. 영진위는 이러한 기관들의 개입과 지시 아래 블랙리스트 실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초월하여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였다. 또, 영진위는 내부 직원들이 일신상 불이익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 같은 국가기관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및 직원들의 독립성·자율성은 훼손되고 이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수 편의 영화와 영화인들은 창작 및 유통·배급 등에서 지원배제당하여 창작과 표현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결과 심대한 물질적 피해와 ‘자기검열’ 등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중국에는 이는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향유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은 감독기관인 문체부 그리고 청와대·국정원 등이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영진위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신념·정치적 견해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헌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시스템을 부활하여 국가정보원과 문체부 및 자체 검열을 거쳐 특정 제작사·영화인을 이유로,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지원 배제, 상영 거부 등을 행한 위헌적 사건이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영진위가 이 기금의 활용에 있어 특정 이념·정치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헌법과 문화산업진흥법, 영화비디오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화)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봉사하여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위헌·위법한 사건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6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76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영4(2017영2 병합)[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및 직권사건의 취지

1) 2017영2 사건의 신청취지

2014. 10. 영화 <불안한 외출>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발 등 압력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배제를 받았으므로 진상규명을 바란다.

2) 2017직영4 사건의 직권조사 취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가당착> 등 문제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통해 실질적 상영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소규모 상영회에서 '문제영화' 상영 등 동향을 파악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행 영화등급분류 기준 중 ‘제한상영가’ 등급을 이용하여 ‘문제영화’로서 <자가당착>에 대하여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으로 약 4년에 걸친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를 행하였다. 그 외에 영등위는 동성애나 이주노동자를 다룬 영화들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 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하여 상영에 제한을 가하였다.
-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영화 <불안한 외출>의 공동체상영에 대해 모니터링 및 사후 고발을 취함으로써 제재를 가하였다. 영화진흥위 또한 2015.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 이 영화를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제재”, “배제”는 청와대의 지시 및 국가정보원과 문체부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이 영화가 국가보안법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한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이다.

붙임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영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병합) 2017영2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부당 압력 및 개입 사건

[신청인] 2017영2사건에 대해 김철민(<불안한 외출> 감독)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 및 직권조사의 취지

가. 2017영2 사건의 신청취지

- 1) 2014. 10.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후 국내영화제에서의 상영 거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고발 등 부당압력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을 바란다.
- 2) 위와 같은 부당 압력과 신청인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주기 바란다.

- 3) 2015년 독립영화 후반작업 현물지원에서의 탈락 등 이 영화에 대한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배제”에 대해 밝혀주기 바란다.

나. 2017직영4 사건의 직권조사 취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가당착> 등 문제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통해 실질적 상영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소규모 상영회에서 ‘문제영화’ 상영 등 동향을 파악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 1) 2017. 10. 13. 제10차 전원위원회는 위 2017영2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제21조(조사개시 결정)에 의거,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2) 2017. 12. 25. 제19차 전원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영상물등급분류를 취득한 이후에도 문제영화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명목으로 소규모 친목 상영회는 물론 광고·선전 등을 포함해 전방위 상영 동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 실행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7직영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3) 또한 2017영2의 사건의 피해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한 고발조치로 특정되어 있어 2017직영5사건과 조사범위, 대상 등이 일치하여 병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건을 병합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위원회는 다음을 이 사건 진상규명의 과제로 정하였다. ① 영등위에서 ‘정계이슈를 다룬 영화 목록이 작성된 경위’ 및 블랙리스트 실행과의 연관성 ② <불안한 외출> 등 문제영

화에 대한 사후관리위원회의 문제영화에 대한 압박·제재 등 블랙리스트 실행 및 관리, 제도적 문제점 ③〈불안한 외출〉 영화 상영거부 등 국가기관의 외압 의혹 ④〈불안한 외출〉에 대한 영진위 독립영화 후반작업 현물지원 등 지원배제 여부.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서명	작성(제출)자 등	입수일	비고
1	통신자료 제공내역(LG유플러스)	김철민	2017. 10. 16.	
2	불기소 이유 통지(서울중앙지검, 2016. 8. 12.)	김철민	위 같음	
3	영등위, 영화자료 제출요청(2015. 12. 30.)	김철민	위 같음	
4	영등위, 등급분류 결정 종합의견서 등 등급분류 자료(2015. 11. 13.)	김철민	위 같음	
5	영등위, 2015년도 10월 영상물 모니터 취합보고(2015. 11. 11.)	김철민	위 같음	
6	안OO→OOO송부 메일(불안한 외출 진행사항관련 자료송부, 2015. 12. 2.)	김철민	위 같음	
7	영등위, 영화 〈불안한 외출〉 사후확인 진행사항 보고(2015. 12. 1.)	김철민	위 같음	
8	영등위, 제1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6. 2. 1.)	김철민	위 같음	
9	영등위, 2016년도 제1차 사후관리위 회의록 (2016. 1. 28.)	김철민	위 같음	
10	영화 〈불안한 외출〉 고발조치의 건(2016. 2. 5.)	김철민	위 같음	
11	영등위, 신동근 의원님 요구자료 (2017. 10. 16.)	김철민	위 같음	
12	2017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현황 (2017. 10.)	영상물등급위원회	2017. 11. 9.	

연번	서명	작성(제출)자 등	입수일	비고
13	영화 다이빙벨 등급분류 현황 (영등위→문체부 제출자료)	위 같음	위 같음	
14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관련 규정	위 같음	위 같음	
15	'자가당착' 행정소송보고(2013. 5. 1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등 소송관련 자료	위 같음	위 같음	
16	영등위, 도종환 의원님 요구자료(2013. 9.)	위 같음	위 같음	
17	국가정보원,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	국가정보원	2018. 1. 19.	
18	영화 <불안한 외출> 개봉현황 보고 (2016. 1. 25.)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 과)	생략	
19	2015년도 사후관리위원회결과보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생략	
20	민주당 노웅래의원실, <정책보고서> 독립영화점검과제 2012	한국독립영화협회	생략	
21	한불수교행사 관련 프랑스문화원장→한불상호교류의해 조직위 예술감독 발신메일(2015. 2. 23.)	황보유미	생략	
22	윤OO의 진술서(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 2 증거기록	생략	
23	부산영화제 출품작 <불안한 외출> 검색 경과 보고	위 같음	생략	
24	정OO의 진술조서(2017. 1. 16.)	위 같음	생략	
25	OOO의 진술서(2017. 2. 1.)	위 같음	생략	
26	김종덕의 2회 진술조서(2017. 2. 2.)	위 같음	생략	
27	서울행정법원, 사건2010구합5974 등 관련 판결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등	생략	
28	영화 심의제도 변천과정	안OO (영상물등급 위원회)	2018. 5. 1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진술조서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한다. 아래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일부[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진술인	관계	제목
1	김철민	신청인	진술조서(2017. 10. 12.)
2	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진술조서(2018. 2. 13.)
3	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진술조서(2018. 2. 19.)
4	안00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장	진술조서(2018. 2. 21.)
5	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부	진술조서(2018. 2. 23.)
6	000	2015.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진술조서(2018. 2. 26.)
7	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2회 진술조서(2018. 5. 2.)
8	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2회 진술조서(2018. 5. 4.)
9	신00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진술조서(2018. 5. 4.)
10	안00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장	2회 진술조서(2017. 5. 10.)

제3절 | 조사 내용

1. 영화심의제도의 변화

가. 사전심의제도

- ① 1962. 1. 20. 법률 제995호로 영화법이 제정될 당시의 영화심의제도는 공보부장관의 사전허가제¹⁾였다.

제10조(상영의 허가) 공연자가 영화를 상영(예고편의 상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상영정지등 처분)

(상영정지등 처분) 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의 상영을 정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
2. 공안 또는 풍속을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1) 1962. 12. 26. 제5차 개정헌법(헌법 제6호)의 제18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가할 수 있다.”은 단서조항이 있으나 검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3.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출처 : 映畫法 제정 1962. 1. 20. [법률 제995호, 시행 1962. 1. 20.] 공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② 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주체가 공연윤리위원회로 변경되고, 심의 방식도 사전심의제로 운영되었다.

제12조(심의)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개정 1984·12·31>

③ 삭제 <1984·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극영화를 텔레비전방송에 방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기준)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출처 : 映畫法 일부개정 1984. 12. 31. [법률 제3776호, 시행 1985. 7. 1.] 문화공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③ 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전 심의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12조(심의)

① 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편영화, 소형영화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할 수 없다.
- ③ 공연법 제14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심의기준)

① 공연윤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서 해당 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고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映畫振興法 제정 1995. 12. 30. [법률 제5129호, 시행 1996. 7. 1.] 문화체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나. '영화 검열 사건'과 영화법 개정

① 1996. 10. 4.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제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달린 교문을 열며> 제작자 등의 영화법위반 피고사건(92고단7586)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따라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1항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인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93. 9. 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이른바 '영화 검열 사건').

② 이 사건 심판대상 법 조항은 위 가. '검열'의 합법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²⁾.

2) 그런데 심판대상의 이 영화법은 1995. 12. 30. 법률 제5130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6. 7. 1.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영화진흥법은 제12조 및 제13조에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령 종전에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 ③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89노 6886)에 계류 중, 이 영화 관련자(청구인)들은 위 법원에 위 법 제12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1991. 5. 7.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④ 1996. 10. 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93헌가 13, 91헌바10(병합)사건)에 대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2. 가. 헌법(憲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

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3. 가. 영화법(映畵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나.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映畵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 ⑤ 이에 따라 1997. 4. 10. 법률 제5321호로 영진법이 개정되어 등급분류제가 도입되었고, 등급분류의 심의기관이 종전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뀌었으며, 등급구분은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로 나뉘었고, 이때부터 등급보류제도가 신설되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 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는 단편영화·소형영화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4.10>

② 삭제<1997.4.10>

③ 삭제<1997.4.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된 등급만이 부여될 수 있다. <신설 1997.4.10>

1.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2. 12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3. 15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4. 18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출처 : 映畫振興法 일부개정 1997. 4. 10. [법률 제5321호, 시행 1997. 10. 11.] 문화체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⑥ 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영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영화의 심의주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었고, 등급구분에 있어서는 ‘15세 관람가’ 등급이 삭제되고, 등급보류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변경되었다.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등 본편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8세관람가” : 18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④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영화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 검토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출처 : 영화진흥법 전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29호, 시행 1999. 5. 9.] 문화관광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같은 등급분류 보류기간의 축소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장 안OO(2회 진술조서, 2018. 5. 10.)은 “6개월 동안 상영이 안 되면 힘드니까 문제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3개월로 축소”, “이것조차도 검열이다라는 영화산업계의 요구가 많아지니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⑦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던 ‘15세 관람가’ 등급이 부활되었다.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등 본편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1>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관람가” : 12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2의 2. “15세 관람가” : 15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8세 관람가” : 18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출처 : 영화진흥법 일부개정 2000. 1. 21. [법률 제6186호, 시행 2000. 4. 22.] 문화관광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 ‘영화등급보류제도’ 위헌결정

- ①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보류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되었고, 2001. 8. 30.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영등위도 검열기관에 속한다고 보았다.
- ② 제청신청인은 이지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배급사인 OO의 대표로서 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위 영화의 음란성 등을 문제삼아 1999. 9. 27.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2개월의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하였고, 2개월의 보류기간이 경과한 다음 제청신청인이 다시 위 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1999. 12. 28.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3개월의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0. 2. 24. 서울행정법원에 위 위원회를 상대로 1999. 12. 28. 자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③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2000아509)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다며 2000. 8. 25.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2000헌가9).
- ④ 2001. 8. 30.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3.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4.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된다.

5.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6.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 ⑤ 이에 영진법은 2002. 1. 26. 법률 6632호 개정으로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규정을 삭제하고, 제21조 제3항 제5호에서 이 사건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였으며,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이에 관한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하도록 하였으며,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의 제작도 금지하였다.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출처 : 영화진흥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2호, 시행 2002. 5. 1.] 문화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⑥ 영등위 정책홍보부 000(진술조서, 2018. 5. 4.)는 “등급보류라는 것은 결국 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당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입맛에 맞게,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보류하여서 상영을 막는다는 점에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완전등급제라함은 어떤 영화내용이든 등급은 부여해 주어야 법률상 상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같은 안00(2회 진술조서, 2018. 5. 10.)은 “등급보류제도에 해당하는 영화 대부분이 선정성, 폭력성 등이 현저하게 지나친 영화들인데, 그러한 영화들이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에는 결국 보류 절차없이 그대로 상영이 되면 18세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정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을 하여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도입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제한상영관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래서 2002~2005년까지 4개관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상영관에서는 제한상영가 영화만 상영해야 하므로 제한상영가 영화가 연간 한, 두 편에 불과한데 그 영화만 상영할 수는 없잖습니까. 영화라는 게 다양하게 상영하면서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익성이 없으므로 일반 상영관으로 전환하거나 폐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는 “결국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영금지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영화 <천국의 전쟁>의 등급분류 전쟁(‘제한상영가등급’의 헌법불합치 결정)

① 주식회사 00시네마는 2005. 11. 18.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카르로스 레이가다스(Carlos Reygadas) 감독의 ‘천국의 전쟁’(Battle in Heaven)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다음(daum)의 영화 정보를 보면, 이 영화에 대해 “‘유괴’를 소재로 한 영화 <천국의 전쟁>에서 ‘마르코스’는 한 아이를 유괴한 가해자이다. 그러나 돈을 위한 유괴는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실패하게 되고, ‘마르코스’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전이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 어쩌면 ‘마르코스’도 유괴를 해야지만 살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피해자일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밀양〉과 〈천국의 전쟁〉 모두 ‘유괴’라는 소재로 공교롭게도 두 영화 모두 ‘칸느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도연’이 영화 〈밀양〉을 통해 ‘제60회 칸느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영화 〈천국의 전쟁〉은 ‘칸느영화제 경쟁부분’에 진출하는 기쁨을 얻었다. 〈천국의 전쟁〉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출품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호기심과 찬사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이다. 〈천국의 전쟁〉은 예술영화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 상고를 한 뒤 ‘영화법’까지 고친 적이 있으나 결국 또 통과를 못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었다.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천국의 전쟁〉은 최근 드디어 심의를 통과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2012. 4. 12.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 11. 24.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중 ‘발기된 남성 성기의 구강섹스, 속까지 보여주는 여성 성기 및 발기된 남성 성기의 노골적 노출, 발기된 남성 성기 확대장면, 예수 그림 속의 음모노출, 남녀가 나체로 누워 있는 장면 등 섹스 장면의 리얼함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고, 전례 없이 노골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처분을 하였다.
- ③ 주식회사 ○○시네마는 2006. 2. 2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2006구합9085), 2006. 5. 13.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2006아935),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④ 2008. 7. 31.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5호 등 위헌제청 사건(2007헌가4) 관련하여 위 같은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⑤ 이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제21조 제3항 제5호 및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⑥ 위와 같은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한편,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의 위임 규정은 영화상영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임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다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³⁾이다.
3.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과 똑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

3) 이와 관련 다수의견을 보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규정인 영진법 제21조 제3항은 제한상영가 등급 이외의 다른 등급의 영화에 대해 ‘몇 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서도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컨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각 등급의 영화들이 어떤 내용을 가진 영화인지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8세 관람가 등급과 제한상영가 등급이 갈라지는 기준은 결국 음란성, 폭력성 등의 척도가 될 것인데, 그 정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결국 등급분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영화의 등급을 판정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여야 하며, 영진법 규정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 관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영비법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 현행 제도

- ① 2006. 4. 28. 국회는 규율 대상 매체의 성격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를 하나로 묶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현재 영화비디오법, 14476호), 음반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을 각각 제정하고, 영진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여 현재는 매체별로 각기 다른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비디오법에 근거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하는데, ‘제한상영가’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9. 5. 영화비디오법 개정 시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제29조 제7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 제한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 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항 생략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5. 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③ 영화비디오법 시행령은 아래의 별표와 같이 상영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 3 ①항)을 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의 3 ②항).

[별표 2의2] <개정 2015.11.11.>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관련)**

1. 전체관람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7. 24. [대통령령 제28204호, 시행 2017. 7.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④ 그런데 이 영화비디오법 2006. 4. 28. 제정안 및 2009. 5. 21. 개정안 중 제한상영가의 정의 및 영화상영등급 분류 기준을 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영화비디오법(2006. 4. 28.제정)	영화비디오법(2009. 5. 21)
제한상영가 정의	제29조 제2항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제29조 제2항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영화상영등급 분류 고려사항	제30조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적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화의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음란성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하여 위 같은 안OO(2회 진술조서, 2018. 5. 10.)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 잣대가 모두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한상영가 등급은 결과적으로 ‘사전검열’적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엄격한 것이 맞습니다.”, “외국에도 제한상영가 등급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장면이라든지,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영화등급분류나 상영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통한 상영 제한

가.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관람불가결정

- ① 이 영화는 김조광수 감독(제작은 청년필름㈜과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의 두 번째 영화로 2009. 12. 7. ‘15세 이상 관람가’로 개봉하였다. Daum의 영화소개 페이지에는 “2008년 단편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극장에서 단독 개봉하면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샤펙샤펙퀴어로맨스 <소년, 소년을 만나다>(이하 <소소만>)의 김조광수 감독이 돌아왔다. <소소만> 개봉 당시 속편 제작을 열망하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김조광수표 게이영화를 만들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게이로맨스 영화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김조광수 감독은 진정성이 결여된 스토리와 과장된 게이 캐릭터들이 난무하는 보통의 퀴어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자신의 영화에서 만회해보고자 했다. 멜로영화의 ‘순이’가 단지 ‘석이’로 바뀐다고 리얼한 퀴어 멜로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는 게이들이 사랑하는 모습과 방식, 그리고 현실적 문제를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친구사이?>는 이 같은 감독의 바람을 전제로 시작된 영화다. 이번 영화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10대 시절부터 남달리 연애에 대한 축이 좋았던 게이 감독의 실제 경험담이 바탕이 되었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②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2010구합 5974) 사건의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영화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의 제작·상영은 헌법 제22조의 예술의 자유로도 보호되는데, 영화는 문학·연기·영상·음악·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그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되고 전달되는 것이므로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거나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영등급을 분류함으로써 상영과 관람의 방법을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를 통해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되고, 영화제작자 등이 상영등급분류를 의식하여 영화내용을 스스로 수정·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

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영등급분류 결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를 보아 동성애에 관한 정보제공이 청소년들에게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항소(2011. 4. 20. 기각), 상고(2013. 11. 14. 기각)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영화 <반두비> 청소년 관람불가

- 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실의 정책보고서 『독립영화 점검과제 201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 <반두비>는 한국의 여고생과 이주노동자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되었고,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으며 2개 부분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등위는 <반두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렸고 감독은 영등위의 심의처분에 불복하며 성명서와 함께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최종결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의 ‘연령별’ 등급체계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아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성 권위집단의 시선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표16] 등급심의처분 불복사례 및 사유 최종결과 중 영화 <반두비>

연도	재분류 일자	종류	작품명	신청 사유 (제작사 신청사유 요약)	소위원회 회결과	위원회 결과
2009	6.10	영화 (국내)	반두비	영화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가이드역할로 청소년들에게 해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람을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는 판단되어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분류 신청함	청소년 관람불 가	청소년 관람불 가

다. ‘제한상영가’ 등급과 표현의 자유 제한(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을 중심으로)

1) 영화 <자가당착> 등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보고

- ① 전 청와대 행정관 신OO(진술조서, 2018. 5. 4.)은 이 영화를 국정원 I/O 정보보고서에서 몇 차례 본적이 있다면서 “<자가당착>과 <불안한 외출>,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 벨> 등을 문체부 정OO 과장에게 국정원 동향보고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 영화들은 대부분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영화인데 국제영화제의 경우 국정원이 상영작의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올립니다. 국정원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문제영화가 상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영등위 정책홍보부 OOO(진술조서, 2018. 5. 4.)는 현재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실례로 “<간신>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자 성기가 다 나와도 청소년관람불가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점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성인들에 한해서는 관람 기회를 자유롭게 부여하고 선택에 맡기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결정⁴⁾

- ① 네이버의 이 영화정보 페이지를 보면 2015. 9. 10. 청소년관람불가로 개봉된 것이 확인이 된다.
- ② 위 같은 노웅래 의원실의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독립영화 <자가당착>는 2010년 제작된 독립영화로, 그해 인디포럼(7월)과 서울독립영화제(12월)에서 상영된 바 있으며, 2011년 베를린영화제(2월)과 전주국제영화제(5월)에 초청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기발한 상상력과 비판정신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독특한 미장센과 기법, 현실반영은 독립영화의 가치로 인정된다. 이미 작품의 내용과 기법에 있어 영화제와 관객으로부터 검증받은 이 영화에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이 영화의 배급사 (주)두원엔터테인먼트는 2011. 4. 29. 이 영화에 대해 영화상영 등

4) 이는 [2017영7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검열·배제 및 상영방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

급분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6. 1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다. 당시 ‘영화 등급분류 결정서’에는 결정사유로 “포돌이라는 정치적 상징물을 내세워 현 사회와 정치를 풍자한 내용으로 실험적인 영화 기법, 픽션과 다큐멘터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특정 정치인의 목을 자르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 등 경멸적, 모욕적 표현 수위가 다분히 의도적이며 극심해서 개인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상영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2012. 9. 14. 위 두원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에 대해 재차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 신청을 하였고, 2012. 9. 2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당시 결정 사유는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잔혹한 장면이 다수 등장해 폭력성의 요소가 매우 높고, 송곳이 머리에 꽂혀 죽은 경비원이 옥상에서 불태워지는 장면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실제 인물의 사진이 부착된 마네킹 목을 쳐 피가 솟구쳐 선혈이 낭자한 장면은 실제처럼 느껴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여자 경찰이 자신의 지퍼를 내리자 불이 붙은 남자의 성기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나오며, 욕설 등의 비속어도 자주 표현된다. 영상의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손상할 우려가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⑤ 이에 대하여 위 영화의 연출자(김병선)는 법원에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 소를 제기(2012구합36552)하였고, 2013. 5. 10.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선고하였다.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하였을 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려 한 것을 볼 수 없다”, 제한상영가 규제내용으로 볼 때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으므로 사실상 국내개봉이 불가능한 점”, “다수의 영상 표현기법과 여러 장르를 혼합한 실험적 작품인 점,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상영된 점,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로 인정한 점,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⑥ 이에 대하여 영등위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281, 2013. 5. 24. 선고), 상고(대법원, 2014두5033, 2014. 7. 10. 선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⑦ 위 연출자 김병선은 우리 위원회 사건2017영7 신청과 관련하여 2014. 7. 대법원의 선고 이후 재심의를 통해 2015. 7.경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이로 인해 약 5년 동안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는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 ⑧ 한편, 2015. 12. 17. 「제7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중 2015. 9월~11월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자가당착〉의 경우 15세이상관람가로 신청하였으나 소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된 영화로 모니터링요원 총14명 중 2명이 등급상향 조정(청불→제한)을 1명이 등급하향조정(청불→15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는데 “등급상향의 이유로는 영화의 정치색이 분명하고 원색적이며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등급 하향의 이유로는 주인공인 포돌이가 인형이며 마네킹에서 뿔어져 나오는 피가 가짜 피라는 걸 누구나 인지할 수 있고, 예술 영화 인정 기준으로 볼 때도 특색있는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볼 때 하향조정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⑨ 이 영화와 영화 〈연평해전〉과 〈암살〉을 대조하여 볼 수 있는데, 영등위의 2015. 8. 18. 「2015년도 제5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5. 6월 시민모니터링 결과 “영화 〈연평해전〉의 경우 전체관람가로 신청되었으나, 7가지 고려요소 중 폭력성, 대사, 공포가 ‘보통’의 수준이므로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2세이상관람가로 결정된 영화”인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등급분류체험을 실시한 결과 15세이상관람가 의견이 다수 나타남에 따라 시민모니터단 15명 전원이 모니터링”하였는데, “모니터 결과, 총 15명 중 8명은 소위원회의 결정 등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7명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등급상향의 이유로는, 해상 전투 장면에서 다리,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가 절단·분리되는 장면이 잔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폭력성과 공포가 짙으므로 15세이상 관람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⑩ 반면, 2015. 9. 22. 「제6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5년 8월 영상물 시민모니터링 결과 영화 〈암살〉에 대해 “12세이상관람가로 신청하였으나 15세이상 관람가로 결정된 영화로 조별 모니터링 영화로 지정하여 총 7명이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중 1명이 주제가 선악구분이 명확하고 독립운동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공포, 모방위험이 보통으로 보이며 연평해전과 비교해봤을 때 12세이상관람가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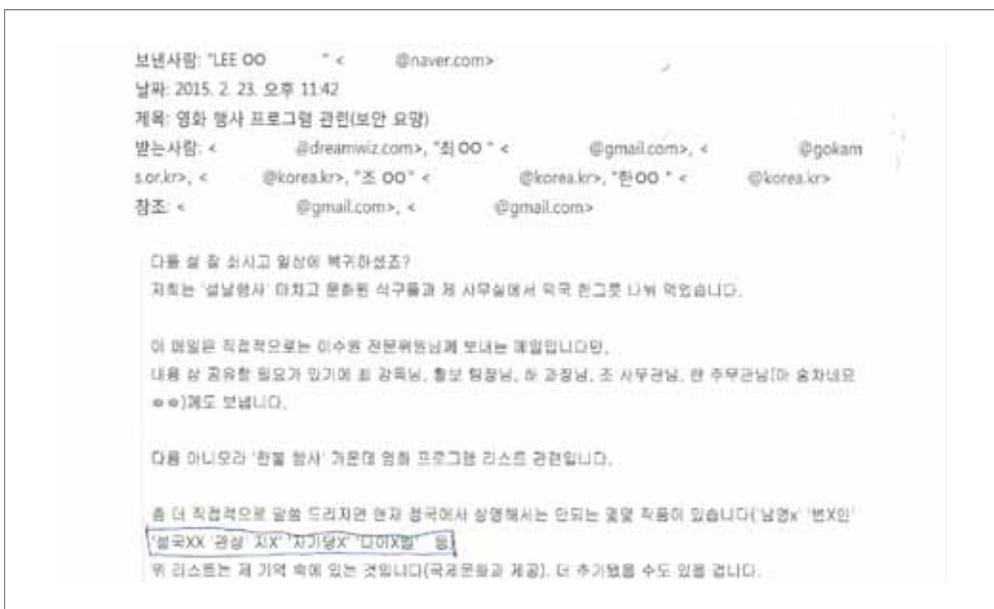
3) 제한상영가 등급과 표현의 자유 제한

- ① 위 같은 노웅래 의원실의 정책보고서에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2012년) 국내에는 단 한 곳의 제한상영관도 없다. 결국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관객과 만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으로 제작된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시 그 영화는 사장되거나, 수정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창작자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지 않도록 창작자 자신이, 자신의 영화를 검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고갈〉, 〈줄탁동시〉, 〈악마를 보았다〉 등의 영화는 수정 이후 재심의를 통해서야 개봉할 수 있었으며 〈숫버스〉, 〈천국의 전쟁〉 등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더불어 그 외 영화들은 자진철회하거나 재심을 받지 않아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찾지 못했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영등위는 ‘청소년관람불가’ 이상의 강력한 등급인 ‘제한상영가’를 통해 성인관객이 영화를 선택하고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객 스스로가 영화를 보고 판단을 내릴 자기결정권 또한 부정하고 있다.”, “영화의 예술성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등급거부(Refused Classificatio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는 달리 영등위의 현 등급분류 제도는 모든 영화가 상영가능한 완전등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힌 영등위 백서에서의 ‘완전등급제’는 현재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영등위 정책홍보부 000(2회 진술조서, 2018. 5. 2.)은 “그것 자체(제한상영가등급)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상영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맥락에서 보면 제한상영가를 틀 수 있는 영화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라 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은 정치적 이유로 특정 영화에 대한 제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당착〉이 대표적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같은 000(진술조서, 2018. 5. 4.) 또한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이 ‘문제영화’에 대한 실질적 상영금지로 이어진 사례로 “〈자가당착〉이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영등위 정책홍보부 안00(2회 진술조서, 2018. 5. 10.) 또한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영등급분류를 정함에 있어서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넘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가 영화 〈자가당착〉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위원들의 성향이나 면면을 보았을 때 청소년관람불가 등

급 결정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당시 다수 위원들이 보수 성향인데다가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자가당착> 관련 상영차단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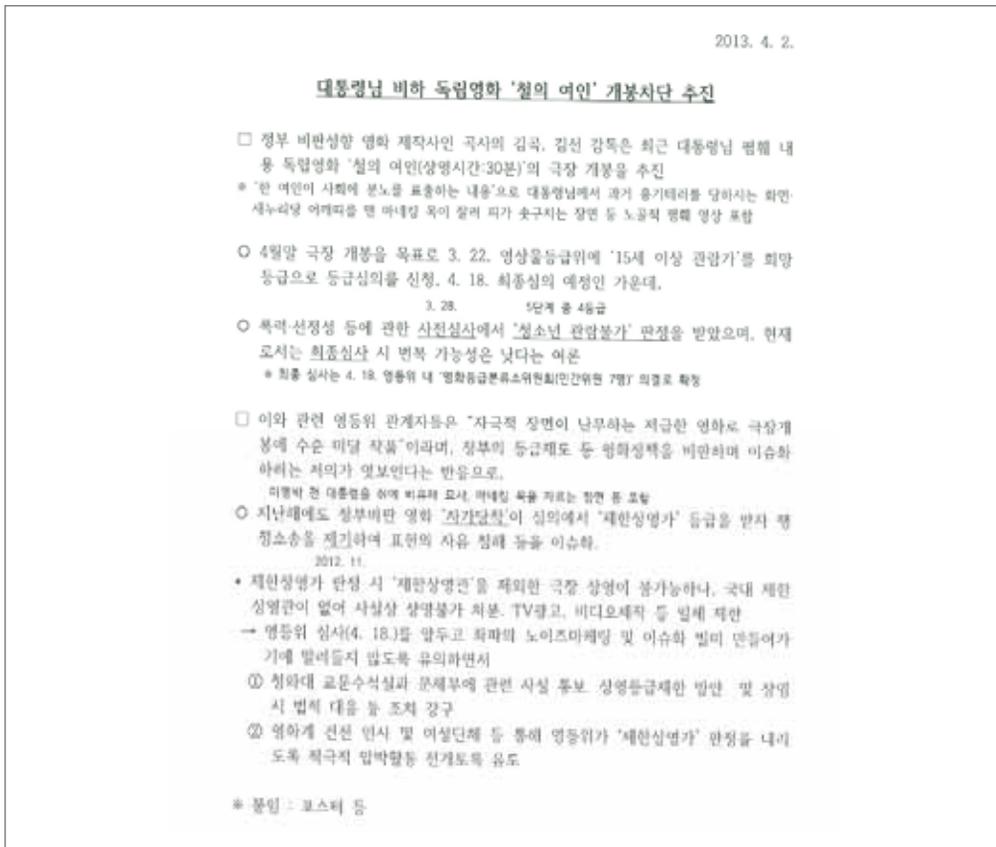
- ①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2. 당시 프랑스문화원장은 한불수교 행사 130주년 행사 관련하여, 이 행사 조직위 최OO, 부산국제영화제 전문위원 이OO 등에게 “현재 정국에서 상영해서는 안 되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국제문화과에서 제공된 것으로 <남영동>, <변호인>, <설국열차>, <관상>, <지슬>, <자가당착>, <다이빙벨>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영화 <자가당착>은 이 행사에서 상영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해외 영화제 등에서 단 한 번도 상영되지 아니하였다.



5) 국가정보원의 <철의 여인> 개봉차단 추진

- ① 2018. 1. 19. 국가정보원이 우리 위원회 제출한 「대통령님 비하 독립영화 ‘철의 여인’ 개봉차단 추진」(2013. 4. 2.)에는 영화 <철의 여인>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 시 ‘제한상영관’을 제외한 극장 상영이 불가능하나, 국내 제한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상

- 영불가 처분. TV광고, 비디오제작 등 일체 제한”이 된다면서 “영등위 심사(4. 18.)를 앞두고 좌파의 노이즈마케팅 및 이슈화 빌미 만들어가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①청와대 교문수석실과 문체부에 관련 사실 통보, 상영등급제한 방안 및 상영 시 법적 대응 등 조치 강구”, “영화계 건전인사 및 여성단체 등 통해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도록 적극적 압박활동 전개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② 그런데 이 영화는 2013. 4. 10.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 같은 김OO(2회 진술조서, 2018. 5. 2.)은 “그 해 4. 2. 시점에서 4. 18.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앞서 심사가 빨리 끝나서 이 영화 등급분류가 앞당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의 여인> 이전에 <자가당착> 2012년도에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철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영화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영화이더라도 6개월 이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새롭게 등급분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의 여인>은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한 이후 <자가당착>에 대한 행정소송은 계속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독립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와 표현의 자유 제한

- ① 위 같은 노웅래 의원실의 정책보고서에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독립영화’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위 세 영화(살기 위하여-어부로 살고 싶다, 할매꽃, 길)는 모두 다큐멘터리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담고 있으며(《살기 위하여-어부로 살고 싶다》),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남과 북의 이념갈등과 그로 인한 현대사의 비극을 그리고 있고(《할매꽃》), 미군기지 확장공사로 인해 터전을 잃은 대추리 주민들을 묵묵히 촬영한 영화(《길》)들이다.”, “이 영화들의 희망등급은 모두 ‘전체관람가’였으나 ‘12세 관람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본심 의견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다음과 같다)”, “세 영화 모두 당시 정치적 이슈를 담고 있거나 남북문제를 담고 있으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희망등급보다 제약적인 등급을 받았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보다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민감하며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는 현실참여적 성격이 강한 장르이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반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는 이슈들을 사회에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독립영화들에 강도 높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의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선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부적절한 등급을 내리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1. 정부정책에 반하는 독립영화

영화명	관람등급	희망등급	영화장르	본심의견
살기위하여 어부로 살고 싶다	12세이상관 람가	전체관 람가	다큐멘 터리	계화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라 주민들의 감정이 격한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고 주민간의 의견대립에서는 육설도 보여짐. 특별한 유해성은 없지만 정부와 주민 양쪽을 다 보여주는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기에 12세이상관람가
할매꽃	12세이상관 람가	전체관 람가	다큐멘 터리	다큐멘터리 감독의 외가집이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필박받았던 상황을 기록하면서 좌익, 우익의 이념에 관한 당시 시각을 들려줌.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 국가보안법 등의 현시점에서 미묘한 부분을 표현하기에 조금 지우면 시각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작은 외할아버지의 거세에 대한 얘기 등 화면상 무리는 없지만 주제와 내용의 이해도 측면을 고려하여 12세이상관람가
길	12세이상관 람가	전체관 람가	다큐멘 터리	주한미군 기지라는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시선으로 보여주다 보니 분노를 터뜨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와 중에서 육설이 등장함. 강제 철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반대 등 정치적인 이슈를 한쪽 측면에서 보여주었기에 주제의 이해도 측면 등을 고려하여 12세이상관람가

② 위 같은 안OO(2회 진술조서, 2018. 5. 10.)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반하는 독립영화’에 대해 상영등급을 상향, 강화하려는 측면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저도 느낀 게 뭐냐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때는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었고, 이후 영등위도 대통령이 위촉하다가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위촉하던 것을 문화부장관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으로 오다보니, 2002년도에는 <죽어도 좋아>가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사퇴하는 등 문제제기가 있다가 2009년도부터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보니,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등급분류 경향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영등위가 설치가 되고 <실미도>라든지 많은 영화들의 제한이 많이 풀려서 상영이 가능하였고 이른바 ‘조폭영화의 흥행시대’라고 할 정도로 영화의 표현의 영역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래로는 조사관이 언급한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사후관리제도의 활용과 검열(영화 <불안한 외출> 고발 건을 중심으로)

가. 사후관리소위원회

① 영등위는 사후관리소위원회 등을 통해 등급분류 사후 상영영화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해오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② 이에 따라 영등위의 “사후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후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공연추천소위원회 의장, 광고물소위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위 법 제83조 2항의 필요한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여론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 ③ 2015. 시민모니터제가 신설, 운용되었다. 영등위의 2015. 5. 26. 「2015년도 제3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부터 14인으로 구성된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함. 시민모니터링 대상은 희망등급과 결정등급이 상이한 영화, 언론 등에서 언급이 많았던 영화 등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모니터 요원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일부 영화에 편중 될 수가 있고, 결정된 등급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영화를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단, 논란이 되는 영화는 모니터요원 전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당시 정책홍보부장 안OO은 보고하였다.
- ④ 영등위 정책홍보부 OOO(진술조서, 2018. 2. 13.)은 “(사후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문제영화에 대한 검열 및 후속 압박의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열 및 압박의 성격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영화관의 소규모 상영회까지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영등위에선 오히려 등급심의 신청본과 실제 상영본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가벼운 처분과 후속 관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영화 <불안한 외출> 연출자 김철민)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 ① 신청인은 2018. 1. 31. 우리 위원회가 실제 문건을 입수한 ‘블랙리스트 9,473명’ 중,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은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박해일·김태우와 감독 박찬욱·김지운, 평론가 황현산과 작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 ② 이 리스트는 청와대 지시를 받아 김OO 행정관이 당시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에게 선언자 명단을 4개의 카테고리로 축약된 문서를 하달하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이 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9,473명의 명단을 완성하여서 김종덕 장관 및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각 본부 부서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실제 산하기관 지원 사업에서 배제 시에 활용되었던 문서이다.

다. 청와대·국정원 등의 ‘문제영화’로서 <불안한 외출> 관리

1) 이 영화의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 ① 이 영화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경쟁작으로 선정되어 상영되었다.
- ② 신청인(진술조서, 2017. 10. 12.)은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불안한 외출> 두 번째 상영되기 전날 밤 MBC뉴스에 이 영화 관련하여 ‘중복영화 논란’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고, 그날 밤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래머(홍OO)가 저에게 전화하기를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상영작 <불안한 외출>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 하고, 또한 “이 영화가 부산영화제에 상영이 되었다는 이유를 문체부 관계자가 질책을 받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나아가 한 기사에 의하면 김기춘이 블랙리스트가 왜 시행이 되지 않는지 다 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로 미루어 <불안한 외출>과 같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제작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질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불안한 외출>에 대한 정보보고 등

- ① 위 같은 신OO(진술조서, 2018. 5. 4.)에 의하면 이 영화에 국정원 정보보고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를 다시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② 前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2014. 10. 12.자에는
 “○ <불안한 외출>
 윤기진 한총련 의장 입북출산. 검토·보고 소홀, 누락-문체부 관계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윤 OO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부산영화제 출품작 <불안한 외출> 검색 경과 보고」를 보면, 2014. 10. 12. 위 비망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질책이 있던 직후인 이날 청와대 신OO 행정관을 통하여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하여 검색 및 보고를 소홀한 사유에 대하여 밝힐 것을 긴급히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에 대하여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기록 중 당시 문체부 사무관 윤OO의 진술서(2017. 2. 1.)에는 “당시 일요일이었는데, 신OO 행정관이 전화로 특이한 영화를 검색해서 보고하라고 전달했는데, 왜 <불안한 외출> 영화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경위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전달받았습니다. 그 뒤로 오후에 김OO 국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신OO 행정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경위를 적어서 작성하라고 하여 제가 신OO에게 초안을 먼저 보고했더니 ‘구체적으로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까지 다 적어서 다시 보고해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였고 이런 경위서를 적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국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왜 니가 이행을 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책을 심하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작품 검색도 해봤고, 관련기관에게도 전달했는데, 이상 작품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더 진노하여 징계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나중 에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산영화제 출품작 <불안한외출> 검색 경과 보고

<보고 배경>

- 2014년 10월 12일(일) 11시 경 BH 행정관(신OO)이 담당사무관(윤OO)에게, 동 영화에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 후 없다고 연락 하였고, 얼마 후 다시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연락이 옴
- 2014년 9월 4일 국장(김OO)에게 전달하여 특이한 영화작품을 검색하여 보고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고 하면서,
- 부산영화제 출품작 “불안한 외출”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즉시 구체적으로 보고 할 것을 요청함 (동 사항은 윤OO 사무관 및 김OO 국장에게 동시 연락)
- 동 자료를 전임 국장께 보고 후 제출 (1차보고 10월 12일 오후 8시경 초안 보고, 10월 13일 보완된 자료 재 보고(아래))
- * 김OO 국장(‘13.12.27.~’14.10.8), 박OO 국장(‘14.10.13~’15.3.30)

<당시 bh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팩트>

- 불임 동 보고서 내용 관련, 부산영화제 출품영화가 300여편이 넘어 ▲영화 <불안한외출>이 상영되는지 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 관련기관*에 특이작품을 검색 할 것을 연락하지고 않았음. 다만 bh지시가 긴급하고 엄중하게 전달되어서 bh에 임의로 작성하여 보고 함.
- 사전에 관련기관(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영화진흥위원회)에 작품검색을 하라는 연락도 하지 않 았으며, 다만 bh에 보고서 제출 후 14일 경에 관련기관에 연락해서, 혹시 bh에서 확인 연락이 오면, 미리 전달 받아서 특이작품을 검색해본 결과 사회적 이슈화 작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함
- 실제로 당시 영진위 박OO 국제부장과, 부산영화제 양OO 사무국장은 본인들은 영화 “카트”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불안한 외출” 작품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문제될 소지가 없는 영화였다는 의견이었음

⑤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노2425(김기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의 증거 기록 중 2015. 7. 15. 「비서실장5)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이 영화 상영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담긴 “불안한 외출”이라는 영화가 국립 중앙대와 수원시립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상영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심각함. 교육부와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교문수석)

- ⑥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2016. 1. 25. 「영화 <불안한 외출> 개봉현황 보고」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영화개요, 등급분류 심의결과, 개봉관 및 관객수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1. 25. 현재 누적관객 1,958명, 개봉 이전 영화세 상영 등 관객수 401명에 더하여 개봉 후 1,557명).
- ⑦ 위 같은 000(진술조서, 2018. 5. 4.)는 “민원이 많은 영화, 주목되는 영화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모니터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표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시다만 제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김OO 과장을 대리하여서 모니터링 결과를 결재한 것이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영화 연출자에 대한 통신사찰 등

- ① 신청인(진술조서, 2017. 10. 12.)은 “2014. 10.경부터 1년여 가량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여 보니 경찰청, 국정원 등이 13회 가량 조회사실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상시적으로 내사를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 사무실 컴퓨터에 내용을 캡처하여 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 ② 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를 보면, 2015. 5. 1. 국가정보원 등 이 때부터 2016. 3. 4.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 등 17회에 이르는 통신자료(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등)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5)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이다.

순번	상영구분	요청기관	신청번호	제출일자	제출내역
1	이동영상	경기문화재단	경기-0226	2015-05-01 11:18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2	이동영상	서울강남문화재단	2015-00676	2015-05-22 20:42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3	이동영상	경희대	2015-00639	2015-06-19 10:03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4	이동영상	경희대	2015-00920	2015-06-19 10:05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5	이동영상	서울서양문화재단	2015-04351	2015-05-23 15:31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6	이동영상	서울서양문화재단	2015-04407	2015-05-24 10:31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7	이동영상	국립중앙도서관	2015-20025	2015-07-06 15:25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8	이동영상	국립중앙도서관	2015-01113	2015-07-22 18:42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9	이동영상	국립중앙도서관	2015-01140	2015-07-27 16:38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0	이동영상	경기문화재단	2015-04858	2015-08-24 12:58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1	이동영상	서울서양문화재단	2015-07308	2015-10-05 11:02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2	이동영상	국립중앙도서관	2015-01882	2015-10-28 17:31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3	이동영상	국립중앙도서관	2015-01788	2015-12-07 17:00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4	이동영상	경기문화재단	경기-0232	2015-12-18 15:30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5	이동영상	국립중앙도서관	2015-00024	2015-01-09 15:48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6	이동영상	경기문화재단	2015-00955	2015-03-28 16:51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17	이동영상	서울서양문화재단	2015-01480	2015-03-04 10:42	고려문, 후원번호, 주소, 기입됨.

【주】LG유희스 (주)연영학

라. 영등위의 고발 등 사후조치

1)신청인의 주장

① 신청인(진술조서, 2017. 10. 12.)은 “〈불안한 외출〉은 극장 개봉계획이 서기 전 후 원인들과 영화 관계자들을 모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상영’이라 하여 동네 카페나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단체 등이 주최하여 상영회 및 국가보안법 관련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경 영등위에서 인디스페이스, 광주G시네마, 부산 국도, 부산 서면 메가박스 등 〈불안한 외출〉을 상영한 영화관과 저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와 관련하여 이 상영들은 제가 주최자가 아니고 따라서 제가 관객들을 모집하거나 상영료를 관객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사유를 해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다 잘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그 해 12월에 등급분류를 마치고 개봉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2016. 4.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서 갔더니 영등위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영등위 담당자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한 상태였는데 그(고발)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워서…영등위 측에서 영

등위 법무팀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법무팀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받으면 알 것이다’는 등 고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별로 상영한 주최자들이 사유서 등을 제출…검찰로부터 2016. 8. 12. 불기소 통지를 받았습시다”라 하고,

- ②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입건, 검찰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가 저를 조사를 할 때 등급분류 전 상영회를 가져서 영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반성문을 안 쓰면 기소될 수 있다’고 다소 위압적으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고발 등 사후조치의 경과

- ① 영화비디오법 제29조 1항은 영화 상영 전 등급분류 의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다만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등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도 상영할 수 있다.
- ② 『씨네21』, 2016. 8. 19.자 「상영등급 분류받은 <불안한 외출>의 고발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정상적 행정행위」 제하의 기사에는 “제작사는 이듬해(2015) 6월부터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거나 후원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진행했다. 영등위가 문제삼은 상영은 이렇게 진행된 시사회 중 영화관에서 진행한 상영이었다. 제작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영이 아니며, 영비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고도 상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형영화의 시사회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영등위는 올해(2016) 4월 제작사를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영까지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것 역시 타당할까. 개봉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영화나 개봉계획이 아예 없는 영화의 시사회나 상영회까지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가 강제된다면, 이는 법률에 의한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2015. 11. 1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 <불안한 외출>이 공동체 상영형식으로 배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상영관 중에는 멀티플렉스

극장과 일부 예술전용극장이 포함되어 있음”(「2015년도 10월 영상물 모니터 취합 보고」)이라고 보고하였다.

- ④ 2015. 11. 13. 영상물등위원회(2015년도 제223차)는 이 영화 “주제는 학생 운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윤기진, 황선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으나 수배와 피신, 수감 생활, 남북 문제와 이데올로기, 분단과 통일 등 주제 및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는 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관람 가능)”이라며 등급분류 결정(신청인 제출, 영등위의 「등급분류 결정 종합의견서」)을 하였다.
- ⑤ 2015. 12. 2.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장 안OO이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OOO 주무관에게 송부한 웹메일(신청인이 제출한 사본)을 보면 “불안한 외출 관련 해당업체(다큐창작소)와 영화관5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는데, 영화제작업체는 ‘대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영한 소형, 단편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화상영관은 모두 영화관이 주최가 되어 상영한 것이 아니라 장소만 대관해줬기 때문에 영화상영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관련자료를 사후관리위원회에 올려 향후 조치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년 10월 영상물 모니터 종합 보고서

1. 모니터 개요

□ 목적

- 영화,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실태 조사와 사후처리를 통한 영상물의 건전한 이용환경 확립
- 불법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영상업계의 자율 정화 및 건전한 문화산업기반 조성
-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 업무를 통하여 콘텐츠 등급분류 사후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보호함

□ 기 간 : 2015년 10월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31일)

□ 모니터 대상 :
영화, 영화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유즈비디오

□ 모니터 방법 :
영화관 방문, 신문·잡지 검색, 온라인 상영관·유지 사이트 접속 등

□ 모니터 요원 : 상근 8인
(경OO, 서OO, 서OO, 최OO, 안OO, 정OO, 조OO, 최OO)

2. 모니터 주요의견

- 영화 12건, 영화예고편 295건, 영화 광고·선전물 225건, 온라인 동영상 299건, 모바일 112건, 유즈비디오 184건 등 총 1,127건에 대한 모니터 수행
- 지난 9월 모니터일 결과 표시사항이 미비하였던 온라인 동영상 4건 모두 제도에 의해서 시정조치(등급분류 표시사항 준수 등)가 이루어졌으며, 재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없음 목록에 포함시킴.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 <불안한 외출>이 공동체 상영 형식으로 배급되고 있음. 상영관 중에는 발타를덱스 극장(서면 메가박스)과 예술인용극장(인디스페이스 영화공간 주안, 극도예술관) 등이 포함되어있어, 관련법 검토를 통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모니터 통계 (10월)

구분(종류)	분류명	분류명		기타 의견 (등급 상향, 하향, 확인필요 등)	계
		등급 이행	표시사항 이행		
영화	총 계	11	1		12
	예고편	295			295
	광고·선전물	225			225
	기타				
	온라인 동영상	299			299
비디오	유즈비디오	112			112
	유즈비디오	184			184
	총 계	1,126	1		1,127

- 1 -

- 2 -

- ⑥ 한편, 위 웹메일의 붙임 「영화 <불안한 외출> 사후확인 진행사항 보고」(2015. 12. 1.자 영등위 정책홍보부 작성)을 보면 2015. 11. 13. 위 등급분류 결정일에 이 영화 제작자와 상영관에 “등급분류 미필 영화 상영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같은 해 11. 27. 제작자와 상영관들의 소명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영화가 등급분류 예외 대상인지 추가 자료제출 요청”과 “영화티켓없이 영화관 대관행위에 따른 영화상영의 경우 대가를 받고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자문 및 추가대응” 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 ⑦ 2015. 12. 17. 「2015년 제7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영화 제작업체는 해당영화가 등급분류 예외 대상(소형, 단편영화 여부)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내용이 부족하여 등급분류 예외대상인지 판단불가(영비법상 1/2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또는 1920×1080픽셀 미만 해상도의 소형영화로 인정될 경우 등급분류 예외대상)”, “영화 티켓없이 영화관 대관행위(대관료)에 따른 영화상영의 경우 대가를 받고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필요” 등을 제시하고, 또한 관련 회의록을 보면, “극장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롯데나 CGV 등 큰 곳 말고 대한극장이나 작은 곳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대관이 가능함. 대관료는 다 똑 같을텐데, 사람 수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받는 것은 이상한 부분임(조OO)”, “편법으로 보임. 자기네들은 상영료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관객 수에 따라 돈이 늘어나고 있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함(최OO 위원)”,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함. 이번 건은 상영했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등급분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안OO 부장)”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추가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받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차기회의에서 상정토록 하였다.
- ⑧ 2015. 12. 30.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작사인 다큐창작소에게 재차 “귀사는 영화 <불안한 외출>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영화상영관 등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한 것과 관련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 단편영화’에 해당하므로 등급분류 예외대상에 해당된다고 소명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였다(신청인 제출 「영화 자료제출 요청」)

- ⑨ 2016. 1. 28.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를 열어 “영화 <불안한 외출> 사후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는데 관련 회의록에는 당시 위 같은 안OO 정책홍보부장은 “대관료를 받고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불분명한 상황”, “업체에서 주장하는 디지털소형영화 해당여부 역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요즘은 기술발전으로 휴대폰으로 찍어도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상영버전만 가지고 해당 영상이 어떤 촬영장비로 제작되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영화관에서 스포츠경기를 틀어주거나 세미나 등도 가능함. 그러나 동 건은 영화를 상영할 목적으로 대관을 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등급분류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의 사후관리위원들은 대가를 받고 상영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다수의 의견으로 제작업체를 고발기로 결정하였음이 확인이 된다(「제1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6. 2. 1.)
- ⑩ 이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서울마포경찰서(수사과)에 ‘다큐창작소’를 위 영화 비디오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⑪ 2016. 7.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4473호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8회에 걸쳐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 <불안한 외출>을 상영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의자가 제작한 <불안한 외출>이 상영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 인디스페이스, 광주영상복합문화관G시네마, 메가박스 서면점, 예술영화전용극장 국도예술관, 영화공간 주안에서 각 상영된 사실은 인정된다.(중략)
 - 먼저 본 건 영화가 소형영화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소형영화는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이거나 1920*1080 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로’로 규정되어 있고, <불안한 외출>의 DVD 해상도를 확인한 결과 해상도가 720*480 픽셀로 제작되어 있어 소형영화임이 확인된다.
 - 인디스페이스에서의 상영이 무료상영이었던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계좌이체내역 및 입금확인증을 보면 피의자가 인디스페이스 측에 직접 대관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정OO 및 최OO은 인디스페이스에서의 상영은 시사 회로서 모두 감독인 피의자의 초대를 받고 무료로 관람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 광주영상복합문화관G시네마, 메가박스 서면점, 예술영화전용극장 국도예술관, 영화공간 주안에서의 상영주체와 관련하여,
 - 김OO, 최OO, 김OO, 이OO, 김OO은 위 각 G시네마 등에서의 상영은 감독인 피의자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극장대관료 또한 각 사회단체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다.
- 결국 위 증거들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⑫ 그런데 영등위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후관리조치의 조치현황」을 보면 영화 매체는 <비지터큐>와 <불안한 외출> 2편에 불과한데, <비지터큐>의 경우에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영화를 VOD로 유통한 것으로 약식 벌금50만원에 처해졌고 <불안한 외출>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 최근 5년간 사후관리조치의 조치현황

(2017.10. 현재분류기준임)

조치연월	포서내용	매체	제작	행위사항	업체	결과
'13.11	행정처분 요청	광고선전용(인쇄)	동	'장소'인 '유복성' '인성' 확인한 결과 광고선전용물, 상업용용, 배포	비즈이엔터테인먼트	과태료 500만원
'14.03	행정처분 요청	광고선전용(포스터)	고도	영화 '광고선전용물' '장소'상영권, 확인 없이 상업용용, 게시	메가박스 강남점	과태료 150만원
'14.11	고발	영화	비지터큐 (Neter Co)	제한상영가로 '출판물' 등 '영화물' 온라인 VOD로 유통	유비온	형의자 : 무혐의 (벌금50만원)
'15.04	행정처분 요청	비디오물 (유튜브서)	세계문화영화 제작사 200원	영화 '유복성' '인성'을 '비디오판' '포스터'로 '시영' '제한상영가'로 '상영'을 '포스터'로 '시영' '영화' '책' 등	유비온	과태료 150만원
'15.07	고발	비디오물	로스앤젤레스영화제작사(온라인) (비영리법인)	정보통신망에서 '비디오물' '출판물' '이탈' '무기' '발행'을 '시영'함	5N영화사	형의자 : 벌금50만원 형의자 : 과소유죄
'15.07	고발	광고영화	유니테크(이)비즈니스	동영상물 '이탈' '광고영화' 등 '상영권'에서 '상영'	오케이메드릭	형의자 : 형의자(과거) 불응판
'15.07	고발	광고영화	동원제출(상영권)비즈니스	동영상물 '이탈' '광고영화' 등 '상영권'에서 '상영'	메리클러블(이)비즈니스	형의자 : 과소유죄
'15.07	고발	영화	불안한 외출	동영상물 '이탈' '영화물' '정보' '상영권'에서 '상영'	다목적비즈니스	형의자 : 형의자(과거) 불응판
'16.02	행정처분 요청	광고선전용	한양문화재단, 동원제출(이)비즈니스, 리얼(이)비즈니스(이)비즈니스 등기, 현대신문, 리얼(이)비즈니스(이)비즈니스, 오일, 48세의 예전, '독일의 라이더' 등 32건	3종 '장소'인 '유복성' '인성'으로 '확인' '온라인' '포스터'로 '시영' '정보통신망' '유통'하여 '상영권' '영화' '책' '노출' '7종' '장소'상영권 '확인' 없이 '게시'	비디	과태료 300만원
'16.02	행정처분 요청	광고선전용	현대신문, 아내의 예전, 불온사제, 독일의 라이더	정보통신망(이)비즈니스 '장소'인 '유복성' '확인' 없이 '게시'	비영리(이)비즈니스, 비영리(이)비즈니스, 비영리(이)비즈니스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50만원

⑬ 위 같은 안OO(2회 진술조서, 2018. 5. 10.)은 문체부 OO주무관은 “기술적으로 16mm이하의 소형영화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할 때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서 “그 때 약간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책홍보부

상근모니터링 중에 영화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당시에는 없었고, 영화부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노OO 영화부장에게 물어봤더니 노OO 부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자신이 공동제작영 사실을 발견해서 요청한 것이기는 한데, ‘그 이전에 OOO 주무관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공동제작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이것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몽개버릴 것인가’, 그렇지만 위원장이 이렇게 몽개버린 것을 알면 직무유기라 문제삼을 수도 있고 하여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판단하지 말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기관장으로서 위원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위에 판단을 구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마. 영화 <국제시장 제작기> 조치 관련

- ① 영등위의 2015. 6. 16. 「제4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의결사항으로 비디오물 <킹스맨> 및 <국제시장 및 제작기> 사후조치의 건을 의결사항으로 다루었다.
- ② 이 중 <킹스맨:시크릿에이전트>의 건은 모니터링 결과 이 작품은 본편128분과 부가영상 25분 등 총153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영상 25분은 인터뷰, 감사인사, 캐릭터 소개 영상, 무삭제 액션 영상 등으로 이루어졌고, 영화 본편은 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부가영상 25분은 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③ <국제시장 및 제작연대기>의 모니터링 결과 이 작품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영화 VOD서비스를 통해 “국제시장 본편 및 제작기”라는 이름으로 유료로 시청 제공하였는데 본편 126분과 부가영상 37분 등 총163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영상 37분은 감독 인터뷰, 배우 인터뷰, 제작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화 본편은 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부가영상 37분은 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업체인 CJ E&M은 당사가 제작한 <국제시장 제작기(3분)>과 국제시장 본편 및 제작기 영상(163분)> 2건은 2014. 4.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 자체심의를 거쳤다, 따라서 동 영상물은 영비법상 등급분류 예외대상으로 규정된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된 비디오

- 물”로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상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④ 당시 사후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비디오물 <킹스맨>의 사후조치와 관련 “내용상의 문제보다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함. 많은 업체에서 메이킹 필름을 비롯한 부가 영상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예외적으로 할 수 없음. 자칫 등급분류라는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음(최OO 위원)”, “영화의 경우, 몇 초만 추가되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고 있는데 25분이 추가된 영상물을 유료로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조OO 의장)”, “동 건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을 시청 제공한 것이므로 영비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후관리위원회 의결 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함(안OO 부장)” 등이 기재되는 등 제재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015. 7. 2. 해당 업체 관할경찰서인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
- ⑤ 반면, 비디오물 <국제시장 및 제작기> 사후조치의 건과 관련해서는, “CJ E&M측의 ‘방송사 심의 또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에 방영된 것을 말하므로 방송 방영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는 전달은 했음(안OO 부장)”, “킹스맨의 경우, 영비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제작업체인 미국 FOX와 유통 업체인 SK플래닛(주) 두 곳 다 고발이 가능함. 하지만 영비법이 국내법인 점을 감안한다면 유통업체인 SK플래닛(주)을 고발하는 게 맞는 것 같음. 하지만 국제시장은 법률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설득력에 문제가 있음. 이번 건은 경고차원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장OO위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 건은 “법 규정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의 적용 대상이 확실히 다름을 인지시키고,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업체에 알려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4.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배제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진술조서, 2017. 10. 12.)은 “부산영화제 이후 영진위에 영화 관련 지원, 배급 신청”에서 탈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영화현물지원사업(사운드믹싱, 색보정, DCP제작)에서는 선정되어야 할 작품 수보다 지원작품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탈락되

었고, 다양성영화배급지원에서 탈락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추가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배급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탈락되어도 통상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 지원을 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신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하여 신청을 추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영화의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 사실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5.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현물)지원 사업에서 이 영화의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영진위의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사건]에 따르면, 이 영화에 대해 2015.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의 “당시 불안한 외출 지원과 관련하여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압박이나 시그널을 준적은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 기반조성본부장은 이 영화와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 사무관이 경직된 억양으로 배제지시를 하였고,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국정원으로부터도 배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영등위의 문제영화에 대한 검열

- ① 헌법에서는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할뿐더러 표현의 자유에는 당연히 영화도 포함되어 있고, 영화의 경우에는 ‘상영(관람)’ 행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가 충족되고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사전검열 행위가 법률적으로 용인되어 오다가 1987. 민주화를 경험한 이래로 이와 같은 ‘검열’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는 검열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

고자 하는 영화인 및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영화와 관련하여서는 영화등급보류제도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사전검열'적 성격을 인정하여 폐지하는 데로 나아갔으며,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까지 이르렀다.

- ② 그런데 이 사건 조사결과에 의하면, 등급보류제도를 대신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두고 또한 이러한 등급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여 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이며 특히 제한상영관이 존립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제한상영가' 등급은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의 수단으로 기여해왔고 이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다.

이 영화는 2010년에 제작되어 같은 해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상영이 되었고, 2011년 '베를린영화제', '전주영화제' 등에서 상영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12세 관람가로 상영된 적이 있다. 관련 진술을 아울러 보면 이 영화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통하여 청와대로 보고되었다.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은 박근혜의 사진이 부착된 마네킹의 목을 자르고 가짜 피가 흐르는 장면 등이다. 이와 같은 장면은 영화 <연평해전>이나 <암살>에 견주어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것 이외에 '폭력성'이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영화의 배급사는 2011. 4. 영등위에 영상물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을 하고 2012. 9. 재심의 시에 이와 같은 결정이 유지되었다. 이후 이 영화 연출자는 법원에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2013. 5. 서울행정법원은 위 같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항소(기각), 상고(기각)를 행하였는데 결국 이 영화는 2014. 7. 대법원에서 영등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2015. 7. 영등위에서 재심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받을 때까지 즉, 2011. 4.~2015. 7. 4년여 동안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를 당하였는데, 이는 이 영화 등급분류 신청 및 소송이 진행될 당시 유력정치인(대선 후보→대통령)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질적으로 영등위의 "사전검열" 행위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단지 동성애를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받은 <친구사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받은 <반두비>, 나아가 정부에 반하는 독립영화들에 대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높게 결정하는 것

들도 “사전검열”적 행위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검열이라 함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물론 현재의 결정에서도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등급심의)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등급심의 자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에 대해 위헌성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진술과 자료를 아울러보면, 「영화비디오법」에 의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 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결국 이는 정부의 가치관·정책,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위원 다수가 정부에 반하는 영화들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이와 같은 등급분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제한하는 수단이 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영등위는 ‘행정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의기관이라 볼 수도 있고, <자가당착>과 같은 문제영화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특히 국정원의 정보보고, 청와대와 문체부의 제재방침 등의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사전검열”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은 이 영화의 감독이 연출한 또 다른 영화 <철의 여인>에 대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도록 “적극적 압박활동의 전개” 등을 정보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영등위가 ‘행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다면 이와 같은 정보보고 행위는 ‘무의’할 뿐이다). 한편, 이 영화 <자가당착>은 해외 행사에서 상영이 차단되기도 하였다.

나.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외압 및 지원배제

위 영화 <자가당착>이 영등위의 “사전검열” 행위의 적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면, 영화 <불안한 외출>은 ‘사후관리’기능 즉, 사전검열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영화비디오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등위의 사후 관리 규정은 게임물과 관련되어 있어왔던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립하였음에도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후관리기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시민모니터링 제도는 2015년에 시행되었다. 또한 이 영화처럼 특정 영화에 대해서 영등위 영화부가 정책홍보부의 모니터링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고 있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영화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위원회에 관련 안건으로 상정하기 과정은, 2014. 10.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이 영화를 ‘검색’하지 못한 데 대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질책이 이어지면서 ‘요주의’ 영화로 지목한 데서 비롯된다. 이후 2015. 7. 15.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영화의 ‘공동체’ 상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영진위는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에서 지원배제를 실행하고, 영등위는 이 영화의 등급분류 전 ‘공동체상영’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초로 제재 조치로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국가권력의 개입과 이에 부응한 영등위가 행한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사후검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영화의 연출자(신청인 김철민)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사찰” 피해도 확인이 되는데, 이 시기는 위와 같은 이 영화의 공동체 상영과 영진위의 지원배제, 영등위의 고발 등의 사후조치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해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등의 “사찰” 및 정보보고가 청와대의 검열 및 제재 지시의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조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체부의 관여 사실 그리고 이러한 관여, 개입 아래서 이뤄진 영등위를 통한 문체영화화에 대한 “검열” 행위들에 대해 더욱 상세히 규명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화 <자가당착>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보가 청와대로 보고된 사실,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영등위→문체부가 계속 보고한 사실, 영화 <철의

여인)에 대해서는 이 영화의 등급을 제한상영가로 끌어내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국정원의 보고하고 있는 사실, 영화 <불안한 외출>의 제작자(감독)와 관련하여 국정원과 경찰이 통신사찰을 한 사실, 영등위는 <불안한 외출>의 고발과 관련하여 계속 문체부로 보고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영등위의 사전·사후 검열에 국정원 및 청와대, 문체부가 광범위하게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는 조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규명된 사실이 매우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 의견

1. 권고사항

- 1) 문체부장관 및 영상물등급위원장에게 영화등급분류제도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활용한 특정영화 “검열”, “상영방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표명 및 검열행위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 2) 영화진흥위원장에게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지원배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제도개선 관련 의견

영등위는 ‘검열기관’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체, 자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할 별도의 ‘행정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7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77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1(영11, 영19 병합)[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의 취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진상규명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35쪽. <신청인의 정치성향에 대한 청와대예의 보고 등을 진상규명하지 못한 이유> 를 보면 ‘신청인 신은실과 허경의 주장 및 000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000 또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여 2012년 4월 경 000의 트위터 캡처 자료를 제출하며 증거 보강을 요청하였음.

나.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추가 내용

결과보고서 20쪽 각주에 “1) 신은실은 2018년 6월 12일, 000의 2014년 4월 12일 추정 트위터 캡처 사진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의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000의 당시 트

위터 내용은 “이 정권의 민첩성과 미리 생각하는 전략을 따라가질 못한다.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바로 어제였는데) 아침부터 소위 버려진자식들에 관련된 뭉시깡이를 위해 BH의 리포트 지시에 따라 준비를 하다 퇴근. 바로 다음 판을 준비하는 이 자식들의 꿈수 대단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제출 자료 내용을 명기하였음.

붙임 :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경정)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1(병합),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병 합] 2017영11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방해 및 지원배제 사건
 2017영19 독립영화전용관 ‘잼 다크 강정’ 상영방해 및 지원배제 사건

[신청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2017영1)

원승환(2017영11)

신은실(2017영19)

허 경(2017영19)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 (1) 2011. 12.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영화 <잼 다크 강정>을 인디플러스에서 상영 결정하였으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이를 불허하고, 2013. 4. 인디플러스 스태프 전원을 ‘계약만료’로 해고 통보하였으며, 운영위 참가 중인 신청인 신은실에 대한 정치성향 보고서를 BH에 보내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실제 규명을 바란다.
- (2) 2014. 10.경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다이빙벨> 상영을 계획하였으나 영진위의 상영금지 조치로 이를 상영할 수 없었고 2015. 3. 서울 지역의 민간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2015. 5. 인디플러스의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부문 위탁 사업

에서 배제된 바, 이에 대한 실체 규명을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 (1) 2017. 10. 13. 제10차 전원위원회는 2017영1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2) 2017. 12. 26. 제22차 전원위원회는 2017영11 및 2017영19 사건에 대해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3) 위 같은 제22차 전원위원회는 2017영11 및 2017영19 사건이 2017영1 사건과 조사범위 및 대상이 일치하므로 병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위원회는 영진위의 ①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의 특정 영화 검열 및 상영 방해 ② 관련자에 대한 정치성향 분석 보고 및 운영진에 대한 해고 조치 ③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 대한 인디플러스 위탁 운영 배제 등의 사실 경위의 규명을 과제로 정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36건의 자료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문영1-1)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보도 관련 보고(2014. 9. 17.) 등	문체부	2017. 9. 5.	
2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상영작 선정기준 및 운영업무 위탁협약에 대한 질의(2014. 10. 23.)	독립영화전용관 확대시민모임	2017. 9. 13.	
3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상영작 선정기준 및 운영업무 위탁협약 질의에 대한 회신 (2014. 10. 30.)	영화진흥위	2017. 9. 13.	
4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요청 건에 대한 회신(2014. 11. 10.)	영화진흥위	2017. 9. 13.	
5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 요청 건	독립영화전용관 확대시민모임	2017. 9. 13.	
6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	독립영화전용관 확대시민모임	2017. 9. 13.	
7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처리에 대한 질의(2011. 1. 12.)	인디플러스 운영위	2017. 11. 30.	
8	1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답변서에 대한 반박 및 요구(2011. 1. 17.)	인디플러스 운영위	2017. 11. 30.	
9	<Jam Docu 강정> 상영 관련 보고(2012. 1. 30.)	영화진흥위	2017. 11. 30.	
10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의 사퇴의 변(2013. 4. 24.)	신은실	2017. 12. 19.	
11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위 구성 보고(2011. 5. 13.) 및 운영위 회의록	영화진흥위	2018. 2. 27.	
12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개관(영진위, 3월 10일 오후 5시 30분 개관식 개최)	영화진흥위	2018. 3. 22.	
13	2014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영화진흥위	2018. 3. 22.	
14	2015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영화진흥위	2018. 3. 22.	
15	<잼 다크 강정> 영화정보	영화 공식 홈페이지	2018. 3. 22.	
16	'잼 다크 강정' 상영 불허 철회했지만...영진위 '상처투성이' 등 언론기사	한겨레신문 등	2018. 3. 22.	
17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증거서류 중 이OO 진술조서(2017.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생략	
18	위 같음 영진위 문OO의 진술서(2017. 1. 4.)	위 같음	생략	
19	위 같음 이OO 진술조서(2회, 2017. 1. 5.)	위 같음	생략	
20	위 같음 정OO 진술조서(2017. 1. 6.)	위 같음	생략	
21	위 같음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실에서 압수된 영화예술계 블랙리스트(2,665명) 등 사본 첨부보고(2017. 1. 6.)	위 같음	생략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22	위 같음 신OO 진술조서(2017. 1. 7.)	위 같음	생략	
23	위 같음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박OO의 업무용 PC 압수물(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 발췌보고(2017. 1. 8.)	위 같음	생략	
24	윤OO의 진술서(2017. 2. 1.)		생략	
25	독립영화전영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 방안 공청회(2011. 3. 8.)	영화진흥위	2018. 3. 23.	
26	전용상영관 승인 통보(인디스페이스)(2012. 6. 11.)	문체부	2018. 3. 23.	
27	2008년도 및 2011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록	국회	2018. 3. 23.	
28	제1독립영화전용관 직영계획(안)(2011. 2. 23.)	영진위	2018. 3. 26.	
29	2008~2011년도 영진위 사업계획		2018. 3. 26.	
30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올림 90호(2009. 10. 28.)	서울인권영화제	2018. 3. 26.	
31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국회 문광위	2018. 3. 26.	
32	2010년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 공모자료	영화진흥위	2018. 3. 26.	
33	제1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직영계획(안) 보고(2011. 3. 3.)	영화진흥위	2018. 3. 27.	
34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실무운영위원회 구성(안) 보고(2011. 3. 7.)	영화진흥위	2018. 3. 27.	
35	영화 <MB의 추억> 정보	Daum영화	2018. 3. 27.	
36	인디플러스 강정다큐 상영관련 뉴스	OOO	2018. 3. 3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10인 13회의 진술조서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한다. 신청인 신은실 외 참고인들은 [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등과 함께 진술조사가 이루어졌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진술인	관계	제목
1	OOO	2011.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017. 9. 15.)
2	윤OO	2015.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진술조서(2017. 9. 22.)
3	OOO	2011.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회, 2017. 10. 27.)
4	김OO	2015. 7.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	진술조서(2017. 12. 7.)
5	OOO	2010. 영진위 기획팀	녹취록(2017. 12. 8.)
6	김OO	2011.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진술조서(2017. 12. 18.)
7	신은실	신청인	진술조서(2017. 12. 19.)
8	김OO	2015.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회, 2018. 2. 27.)
9	OOO	2011.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회, 2018. 3. 13.)
10	OOO	2011.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4회, 2018. 3. 27.)
11	김OO	2010. 독립영화전용관운영자 심사위원	진술청취보고(2018. 4. 12.)
12	허 경	2011~2013 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래머	진술조서(2018. 4. 14.)
13	정OO	2009. 독립영화전용관운영자 심사위원	진술청취보고(2018. 4. 1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1) 개관에서 직영 전환까지

- ①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및 관객의 다양성영화 문화 접근성 증진을 통한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07. 11. 서울 1개관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 4개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② 2007~2009년 사이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한독협)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정위탁 받아 ‘인디스페이스’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2008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을 보면, 인디스페이스(중앙시네마3관)를 한독협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지원내용으로는 “작품홍보/마케팅”, “아시아독립영화 교류상영전”, “프로그래밍” 및 “극장 임대료” 등 39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③ 2010.에는 공모제로 전환,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에서 ‘시네마루’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였고, 이후 영진위 직영으로 전환하여 2011. 3.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브로드웨이시네마 1관을 대관하여 ‘인디플러스’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다. 좌석 수는 70석이였다.

(2) 직영 전환 이후

- ① 2014년에는 영진위 직영의 인디플러스, 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시네마테크 KOFA 2관,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리랑시네센터 그리고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운영하는 인디스페이스까지 총4개관에 지원되었다.

[표-3] 독립영화전용관 사업내용(「2014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상영관	제1독립영화전용관	제2독립영화전용관	제3독립영화전용관	제4독립영화전용관
명칭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KOFA)	인디스페이스
개관	2011. 3월	2010.1월	2010.7월	2012.5월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종로구 신문동
규모	70석	125석(총3관중 3관)	150석 (총3관중 2관사용)	110석
상영일수	매일(365일)	매일(365일)	기획전	매일(365일)
운영자	시설부분 직영 / 프로그램 부분 위탁	성북문화재단 위탁운영	한국영상자료원 위탁운영	(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임대료 지원

이 중 인디플러스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프로그램 위탁 관련하여 590백만원,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는 100백만원,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기획비 36백만원, 인디스페이스에 대해서는 5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② 2015년도에는 총3개관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지역 독립영화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 소재지 독립영화전용관 일부 지역으로의 전환 추진’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공개 질의서」 등).

[표-4] 독립영화전용관 사업내용(「2015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상영관	인디플러스	한국영상자료원(KOFA)	지역독립영화전용관
개관	2011. 3월	2010. 7월	2015년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마포구 상암동	2015년 선정(수도권 제외)
규모	70석	150석(총3관중 2관사용)	70석 이내 극장 선정
상영일수	매일(365일)	기획전	연간 219일 이상 독립영화상영
운영자	시설부분 직영 / 프로그램 부분 위탁	한국영상자료원 위탁운영	2015년 선정

(3) 시기별 지원현황

2010~2015까지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예산과 지원영화관은 다음과 같다.

[표-5] 영화진흥위원회 2010~2015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예산 및 지원영화관

년도	예산 총액	지원 영화관
2010	6억6천만 원	시네마루, 아리랑시네센터
2011	7억5천만 원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2012	7억5천만 원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2013	8억9천4백만 원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2014	8억9천4백만 원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인디스페이스
2015	8억9천4백만 원	인디플러스, 한국영상자료원, 지역독립영화전용관 1곳

2. 독립영화전용관에서의 <잼 다큐 강정> 등 특정영화 검열**가. 배경****1) 이 사건과 MB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 (1) 2008. 8. 27.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보면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전략과 “문화부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 등의 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 (2) 2008. 10. 4.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당시 영진위원장 강한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영화정책을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독점했다”, “얼치기 진보주의자, 하류 진보가 한국영화를 망쳤다”라고 하였다(『시사IN』, 2008. 10. 27.자 등)

뒤이어 같은 해 10. 17.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 당시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동안 영화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평균 40여 개 단체에 약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했는데 지원단체별로 지원금 내역을 고려하면 한독협,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등 소수단체에 집중되어 지원금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의 대부분도 이른바 독립영화계열 단체 또는 미디어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들에게 전부 몰려 있는 상태”라고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진위원장과 위원을 특정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예산을 지원한 단체 대부분이 FTA협상 반대 시위, 광우병 대책 촛불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한국 영화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원 사업이 실제로는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조직들의 후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09. 1. 국회 문광위의『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영진위 관련 “위원장의 부산영화제 참석 시 특정이념 관련 부적절한 발언문제 지적”, “공모사업 등을 통해 특정단체에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단체지원사업이 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제작가협회, 영화인협회의 등 소수단체에 지원금의 40%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체지원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 (3)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2009. 10. 23. 인권운동사랑방(『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올림 90호』, 「결국 들통난 영진위의 저열한 '길들이기'」)에 의하면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에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2009년 전북독립영화제, 인디포럼2009,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등 일부 단체들은 예비심사에서 77~81점을 받았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탈락했다. 이에 반해 결정심사에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몇몇 사업들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최종심사를 하는 시기에 영진위의 ‘영화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문화조성팀장은 인권사랑운동방으로 전화를 걸어와 촛불집회 참석 여부, 광우병대책위원회 소속 여부 등을 질문하며 재차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진위 또한 2018. 4. 4. 기자회견을 통해 2009~2010년 위 단체들이 지원배제 사실을 인정하였다.

- (4) 영진위 당시 기획팀 소속 000은 “조희문 위원장 부임 후에 2010년에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 민간위탁을 통해서 10년 동안 운영했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와 독립영화전용관 등등의 공모사업 전환 시도가 2010년 초에 있었고요. 2010년에 기관장이 어떻게 부적절하게 문화권력 균형화전략과 문화미래포럼의 인사들과의 교감 하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일종의 좌파 영화계 청산을 위해서 일부 전환 시도를 했던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미디어액트 사업과 전용관 사업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2017. 12. 8.)

2)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제로 전환과 특정단체 배제

(1) 공모제로의 전환

- ①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 방안 공청회』(2011. 3. 8.) 자료집 중 당시 이00 진흥사업부장의 「독립영화전용관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 제하의 발제문에는 “인디스페이스는 2007년 개관하여 독립영화전용 상영 공간으로서 연간 30여편 내외의 장편과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DVD 제작지원을 통해 부가관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교류 상영전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공모 사업 및 위탁사업이 특정 단체에 편중됨을 지적하고 ‘특정 단체에 편중하여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역시 문제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이리하여 기존 인디스페이스는 2009. 12. 31.부터 휴관하고 2012. 5. 29. 재개관, 6. 11. 전용상영관으로 승인되었다(문체부, 「전용상영관 승인 통보(인디스페이스)」). 위와 같은 공청회 자료집에는 “2010년 공모를 통해 위탁한 시네마루는 사업초기

배급사들의 배급거부에 따른 영화수급의 문제가 있어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음. 2010. 11.월 사업수행 평가 시에도 평가위원들이 전용관의 역할이 다양성임을 강조하였고, 한정된 배급구조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음”, “사업초기 불안정한 사업구조는 전용관 직원들의 잦은 변동으로 전문성 결여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어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③ 이와 관련하여 영진위 김OO 작성의 진술서를 보면(2015. 7.경부터 산업정책연구팀장)(김OO 진술서2017. 12. 7. 조사기록 쪽) “당시 지정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 시네마테크전용관(‘서울아트시네마’)의 운영을 공모를 통해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계획을 2009년 11월 확정하고, 1년 단위의 위탁운영기간 종료가 곧 다가온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에 대해 짧은 기간의 공고, 지원접수, 심사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두 가지 공모심사는 모두 ‘해당자 없음’으로 결론 나고, 이듬해 2010년 초 다시 위탁운영자 선정 공모에 들어가서 각각 수탁단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정된 수탁단체들은 각 해당사업을 위해 급속하게 만들어진 단체였고,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전문성과 역량,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1년 동안의 위탁운영 후,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일반 영화계와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방식 변경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 문화정책에 대해 명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영화계, 특히 독립영화 창작인들을 공적 자원으로 부터 배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조희문 위원장의 실무진두지휘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심증으로는 반정부영화인 말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지정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 ④ 당시 영진위 이 사업 담당자 OOO은 위원회 진술(2회, 2018. 3. 23.)에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특정단체에 위탁사업이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공모제로 전환하여 시네마루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의 공모 전환은 기존의 ‘지정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진위의 공식 입장이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희문 위원장이 정부 시책에 따라 반정부영화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키려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질문

에 대해 “당시 실무자로서는 큰 그림을 알 수 없었지만,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였다.

(2)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단체 배제

- ① 영진위는 2009.1.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 공모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신청단체로는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 인디포럼작가회의, 한국예술전용관협회, 독립영화협의회 등이었는데 인디포럼작가회의가 1위였으나 평점 63.7점으로 결과 모두 70점 미만으로 “선정단체 없음”을 결정했다.
- ② 2010. 1. 제2차 공모 시에는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 인디포럼작가회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독립영화협의회가 신청하였는데 심사결과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가 1위, 인디포럼작가회의는 4위 등을 차지하여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는 2010. 4. 인가를 받은 단체이다.
- ③ 이와 관련하여 당시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OO는 “당시 영진위의 압력이 있었다. 현재까지 해오던 ‘진보’ 단체를 배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계속 주도하려 했었고, 거절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들이 준비한 계획안이 너무 형편없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 심사 보기 전에 이름은 기억 안나지만 영진위 본부장이 찾아오려는 것을 거절한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④ 또한,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OO는 “당시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심사위원 참여의사를 물으며 ‘기존 곳들이 오래 해왔으니 보다 새로운 단체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 말은 한 바 있는데, 조희문이 학교선배이기도 하고, 심사는 공정하게 볼 것이다라고 하여 심사에 참여한 바 있”고, “당시 분위기가 보수단체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되었고, 암묵적인 흐름이 있었음. 심사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편향된 듯하였고, 심사 당시 소수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공모제에서 직영으로의 전환

(1) 직영 전환 과정

- ① 2010. 11. 17.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사업자 수행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2011. 1. 10.경 전용관 직영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위 같은 계획(안)의 4. 0.버전(2011. 2. 23.)를 보면 직영 전환으로의 이유에 대해 “공모 선정사업자의 위탁운영 기간에 지속적으로 일부 독립영화계의 작품 공급거부 등으로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방식(공모)에 따른 운영주체의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영상사업 효율화, 전문화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등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직영체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기금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일반 수용비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편성은 편성 예산을 민간에 교부할 수 없고 영진위가 직접 집행하게 하는 예산을 뜻한다).
- ② 2011. 3. 8. 영진위는 위와 같은 공청회를 열어 위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다. 2011. 5. 13.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위 구성 보고」을 보면 “직영사업 발전방향 공청회 및 간담회” 결과 독립영화인들은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독립영화전용관의 자율적 상영 권한 부여(이념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영화상영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 1. 13. 한국독립영화협회 성명서(「영화진흥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열기구로 전략하는가?」 2012. 1. 13.)에서도 “2011. 3. 8.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국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에서 과연 국가 정책에 반하는 영화를 제대로 상영할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의 자율성 보장과 독립영화전용관을 제대로 상영할 영진위의 책임성을 요구한 것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 기구가 제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③ 2011. 3. 10.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가 직영으로 개관하였다. 영진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의 개관은 기존 제1독립영화전용관인 서울 광화문의 ‘시네마루’와의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영진위가 강남지역에 새로 상영관을 임대하고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제1독립영화전용관을 ‘인디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영진위가 직접 운영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다(영진위 KOFIC뉴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개관」 2011. 3. 8.).
- ④ 한편, 위 같은 보고에 의하면 제1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011. 6. 10. 이 운영위원들은 당시 김의석 영진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제1차 운영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허경은 프로그램 매머로 참여하고 있다.

[표-6] 1기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2011. 5. 13.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위 구성 보고」, 이 중 이OO은 같은 해 7월 영진위원을 임기만으로 사퇴, 최OO는 같은 해 12.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을 사퇴하였다.)

성명	분야	경력	비고
이OO	독립영화다양성	위원회 위원	위원회 담당위원
변OO	프로그램, 배급, 정책	인디다큐집행위원, 서울 산업대 강사	한독협추천
OOO	제작기획, 교육	독립영화협회의회대표	독립영화협회의회 추천
최OO	프로그램	한다협 대표	한다협 추천
박OO	독립영화 정책, 배급	현 강릉씨네마떼꼬 사무국장 현 정동진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	
주OO	정책	2009 <계속된다-미등록이주노동자 기록되다> 연출 현 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	위원회 위촉
신OO	정책, 프로그램	2006~2008 한시협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2010 시네마디지털서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합계	7인		

또한 위 보고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지침(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1. 독립영화전용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독립영화 개봉 및 배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지위로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및 운영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관련 진술들의 요지

- ① 2011. 당시 국내진흥부장 문OO이 작성한 진술서(2018. 1. 16.)에는 “2009~2010년경 당시 조희문 위원장이 지정위탁 중인 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와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액트)를 공모 위탁으로 전환하고, 독립영화제작지원의 작품 선정에 관여한 사건으로 해임되는 등 독립영화계에서 영진위의 사업에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1년부터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과 영상미디어센터(서울영상미디어센터)를 직영 전환하여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는 한독협과 독립영화협회의 추천을 받았고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 프로그래머도 한독협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여 독립영화계의 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 2012년도부터 인디스페이스(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 임대료 지원도 시작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다.

- ② 위 같은 000(2회 진술조서, 2018. 3. 23.) 또한 “당시 직영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독립영화인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있으면 영화 배급 등에 대해 협력하고 함께 해나가겠다는 합의점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 ③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영진위 김OO(2015. 7.경부터 산업정책연구팀장)가 작성한 진술서(2017. 12. 7.)에는 “독립영화전용관 직영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상영작 선정에 영화진흥위원회가 관여하게 되면 반정부성격이라고 판단되는 작품을 상영하지 못하게 될 터인데, 이것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직영 시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에 영진위는 별도의 상영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다(2011년 공청회). 그러나 선정위원회가 주단위로 결정한 상영프로그램은 부서장-사무국장-위원장의 결재선을 타고 결재를 받는 구조로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상영작 중 일부 작품이 상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잼 다크 강정> 등 독립영화전용관에서 특정영화 검열 및 상영방해

1) <江, 원래 프로젝트> 상영 취소 관련

- (1) 「2012년 독립영화전용관 제9차 회의록」(2012. 1. 10.)을 보면 당시 <잼 다크 강정> 상영 불허 문제를 다루면서, 변OO 운영위원은 “소위 독립영화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친정부적인 영화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을 해보자하면서 지난한 시간을 거쳐 인디플러스를 만든 것은 소통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범한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4대강은(‘江, 원래 프로젝트’를 의미) 워낙 반대가 심해서 넘어갔지만 <잼다큐강정>은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 기지문제이기도 하지만 환경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종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어렵게, 어렵게 위의 동의를 얻어서 상영할 수 있고말고 해야 하는 것이라면 독립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영화전용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영화만 상영하세요.”라며 영화 <江, 원래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였다.

(2) 당시 허경 프로그래머의 2018. 4. 14. 위원회 조사 시 관련 진술을 전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잼 다큐 강정〉 이전에 2011. 5. 근무를 하면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인디플러스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벤트로 준비한 게 〈인디플러스 개관 100일 기념 기획전〉이었습니다. 이 때 당시 연속 〈江, 원래 프로젝트〉를 상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편 프로젝트로 완성한 것이었고 여러 독립영화 감독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주제는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작품들 중 일부는 ‘환경영화제’ 등에서 이미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위 기획전 시점에는 모든 작품들이 완성되어서 최종 완결된 상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도 완성된 형태로 상영하고 싶었고 이는 프로젝트 관련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인디플러스의 상영 프로그램은 영진위 내부 결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쩐지 저 또한 조심스러워서 마지막에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전에 000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江, 원래 프로젝트〉를 상영할 계획이냐고 묻길래 저는 ‘아직 결재도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을 하니 000 팀장은 ‘기획전을 준비 중인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이 영화에 대한 상영계획은 실무자들끼리는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000 팀장이 다른 실무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 작품을 틀면 큰 일 난다’고 계속 집요하게 연락하고 요구해왔습니다. 프로그래머인 저로서는 ‘왜 상영할 수 없냐, 인디플러스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자리 잡혀 나가려고 하는데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음에도 000 팀장은 ‘이제 잠잠해지려는데 이 영화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며 거듭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잘린다’며 정말이지 불쌍하게 애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련자들과 함께 완성체로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문제되는 단편들을 빼고 각 단편들을 다른 작품들과 섞어서 상영하는데 어떨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나누어서 상영은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결국 상영계획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운영위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운영위에 보고하고 논의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당시 독립영화인 등에게 좀 더 소리내서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3) 관련하여 위 허경이 위원회에 제출한, 2011. 6. 7. <江, 원래 프로젝트> 관련자 000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우선 저희 100일 기획전 관련,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찌면 이것은 현재 인디플러스가 처한 상황 그 자체인 것도 같습니다. 인디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입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정부정책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드는 작품을 트는 것이 모험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관 100일을 맞아 치러지는 이번 기획전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독립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인데요. 영진위 내부에서는 부담과 우려가 큰 듯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잼 다크 강정> 상영 거부 관련

(1) 영화 <잼 다크 강정>

이 영화는 “8인 독립영화 감독들의 100일간 즉흥연주”를 내건 다크멘터리이다. 감독은 경순, 김태일, 권효, 정윤석, 최하동하, 최진성, 홍형숙 등 8인이고 제작은 <Jam Docu 강정> 사회적 제작단, 배급은 시네마달, 공동체배급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맡았고, 개봉일은 2011. 12. 22. 관람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이다.

이 영화 공식 홈페이지(blog.naver.com/jamdocu)에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영화인들이 뭉쳤다...8명의 감독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개성 넘치는 에피소드를 생산”해냈다고 필모그래피를 제시하고 있다.

(2) 상영 불허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에서의 문제제기

① 「2011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 제8차 회의록」(2011. 12. 16. 조사기록)에 의하면, 2011. 11월 마지막 주(2011. 11. 25.) ‘독립영화발표회’에서 <잼 다크 강정> 상영이 불발되었다. 이 발표회는 당시 운영위원장인 000이 주도하는 ‘영화공동체’의 독자적인 행사로 매년 영진위 시사실에서 해왔다. 이에 대해 000은 위 같은 회의에서 “저희 독립영화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영하기로 해놓고 불발된 적은 처음”이라며 “외부에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 이어 당시 주요 안건 2012년도 사업계획을 다루면서 운영위원들은 <잼 다크 강정>이 개봉

- 프로그램에서 빠진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신은실을 비롯 운영위원들은 “이 영화가 등급심의를 받아 개봉예정”인 점, “이미 부산영화제나 DMZ 영화제에서도 상영”된 점, 더욱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로 인정도 받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불허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독립영화전용관은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래밍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인디플러스에서 <잼 다크 강정>을 개봉프로그램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인디플러스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문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운영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잼 다크 강정>은 추후 재개봉형식의 상영이라도 검토 필요”, “이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명확한 피드백 요구” 등의 논의, 결정되었다(영진위, 「제8차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1. 12. 29.)
- ② 이 운영위 제9차 회의(2012. 1. 10. 위 같은 회의록, 조사기록)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당시 영진위 사업담당자 000은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꽤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야 상영을 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상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규정과 근거도 불분명한 채로 특정 작품은 상영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 신은실 등 운영위원들의 거듭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위 같은 000은 “<잼 다크 강정>은 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허경 프로그래머가 상영을 준비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꽤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야 상영을 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상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소속기관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내부검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 하고, 위 같은 000은 “내부검열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결정이)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정책적 검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선의 결정이 아니라 영진위도 정부기관이기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는 <잼 다크 강정> 상영 거부에 관한 공식 질의와 답변을 요구토록 결정하였다.

(3)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와 영진위의 질의 및 답변

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와 영진위 사이의 <잼 다크 강정> 상영 프로그램 불허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이 오간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2012. 1. 12. 위 같은 운영위는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 처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11. 12. 16. “제8차 운영위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지침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에 의거해 <잼 다크 강정>의 인디플러스 개봉 상영을 심의 의결하고, 2012. 1. 10. 제9차 운영위에서 영진위 국내진흥부는 <잼 다크 강정>의 개봉 불가 결정을 보고하였는데 이 영화 개봉 상영을 불허하는 근거와 이유, 관련 규정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였다.
- ② 2012. 1. 16. 영진위는 “2012. 1월 <잼 다크 강정> 상영을 프로그램으로 검토하였으나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불허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영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답변하고자 한다.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은 영진위에 있는 것으로, 운영위의 심의결 사항 및 자문사항을 보고 받아 이를 위원회가 검토하여 관련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영진위는 운영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왔다”라고 공식 답변하였다.
- ③ 2012. 1. 17. 운영위는 다시 “답변서에는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 및 책임은 영진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디플러스’ 상영 프로그램에 대해서조차 자율적 판단과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는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예술영화인정 소위와 같이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에도 위임을 통해 자율적 프로그램 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영진위 답변서에 대한 반박 및 요구」)
- ④ 2012. 1. 26. 영진위는 이에 대해 “<잼 다크 강정>의 상영을 불허하였다는 오해가 발생하였다는 표현은 영진위 내부의 소통 과정 중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사안임을 밝힌 것이지 운영위원들의 내용 판단이 잘못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영진위는 2012. 1. 20.에 <잼 다크 강정>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결정하였고 현재 상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다.”고 재차 답변하였다.
- ⑤ 위 000(제4회 진술조서, 2018. 3. 27. 조사기록)은 “당시 상영 불허와 관련하여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은 실무자들이 아니라 ‘윗선’에서 있었다고 운영위 회의에서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이 때 자신이 ‘내부검열’이라는

표현을 하자 위 000이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당시 000이 수습을 위해 애쓰는 점이 역력하자 운영위원들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 애쓰지 마라. 우리 운영위원들 입장으로는 영진위에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란 당시 김의석 위원장이 “정부가 운영하는 직영관에서 왜 ‘프로파간다’ 같은 영화를 틀어야 하나는 입장”을 뜻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문체부, 국정원 등이 관여 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4) 관련 진술의 요지

위 같은 000(진술서, 2018. 1. 16.)은 “2012년경부터 <잼 다크 강정>, <MB의 추억> 등 정부비판적이거나 이전 정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것 같은 영화들에 대해 영진위가 직영하는 ‘인디플러스’에서의 상영을 보류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 왔고, 이는 다수의 독립영화인으로 추천·구성된 ‘독립영화전용관운영위’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사안이다…국정원 IO가 언론을 통해 스크린한 작품을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전하는 방식이었다. 당시만하여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린을 하여 상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예를 들면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당초 개봉 예정된 날짜를 보류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였다.

3) <잼 다크 강정>에 대한 제작현황 등 정보보고

- (1) 위 같은 000(진술서, 2017. 9. 15.)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와 관련 진술 시에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은) 당연히 영진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진술인도 <잼 다크 강정> 당시에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여서 그것을 정리하여 문체부에 보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위 000은 재차(제4회 진술서, 2018. 3. 27.) “당시 이 영화(<잼 다크 강정>)는 이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술영화 인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크의 경우는 서류 등의 검토를 거쳐 예술영화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가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가 어렵게 야구 관람권을 구해서 잠실야구장에 갈 예정이었는데, 문OO 부장이 출근하라고 하여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잼 다크 강정>이 제

작 중에 있었는데, 제작현황, 참여 감독,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문OO 부장에게 그 문건을 제출 하였습니다”라며 “이 문건을 작성한 날이 위에서 언급한 날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 이와 같은 문건 작성이 이러한 상영 불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영화 <MB의 추억> 상영 보류 관련

(1) 영화 <MB의 추억>

이 영화는 2012. 10. 18. 개봉하였다. 감독은 김재환이며, 관련 영화정보를 보면 “2007년 MB의 관점에서 바라본 2007년의 유권자 그리고 2012년 우리가 2007년의 MB를 되돌아보는 정산코미디”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MB의 추억> 상영 불허의 과정

- ① 영진위의 「2012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 제2기 6차 회의록」(2012. 11. 2.)을 보면 “<MB의 추억> 운영위에 공식사과문 차기회의까지 준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OOO 운영위원은 “이 문제는 외부에서 벌써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론화시킬지 문제가 남았습니다…김재환 감독하고 고OO 대표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운영위에서 인디플러스에 정식으로 상영을 다시 한 번 제안해야 한다.”며 하고 영진위에 공식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위 같은 문OO은 “국내진흥부에서의 사과, 재발방지 문제, 영진위의 유감 표명, 재발방지책”을 준비했다며 행정 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한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운영위의 지적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으로 독립영화전용관 상영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진위는 해당 작품이 실정법이 위배되었느냐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작품을 상영했을 때의 실정법 위반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 와중에 배급사 측에서 해당 영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배급사의 의견을 존중”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독립영화 배급사 측으로부터 인디플러스 상영을 철회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 ② 같은 회의록을 보면, 당시 허경 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래머도 “<MB의 추억>의 경우

도 작품 선정 보고 내부 기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구두로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미리 알리고 난 후에 실정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급사와 감독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해당 작품의 배급사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영진위가 미리 우려하고, 상영에 대해서 약속한 바를 지연하도록,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 전에 일차적으로 저의 자기검열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위 같은 허경의 위원회에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인디플러스에서는 상영작에 대해 영진위 실무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획을 잡고 결재를 올리면 통상 아무 문제없이 결재 및 상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전주영화제에서 공개된 상황이었고 저는 이 영화를 인디플러스와 개봉과 동시에 상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디플러스는 영진위 직영관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 영화[가] 선거법 위반이[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영진위 실무자에게 이를 문의했더니, 그 실무자는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하였으나 답이 없다가, 이 문제는 김OO [사무]국장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OO 국장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 때 당시에는 법률 검토만 마치면 아무 문제없이 상영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고OO <스튜디오 느낌보> 대표에게 ‘계속 답을 못 듣고 있다, 영진위는 선거법 위반 검토를 미룬다’라고 했더니 고OO 대표는 특정 시점까지 ‘데드라인’(답을 달라)고 했고 그러나 그렇게 요구한 날까지도 영진위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여서, 고OO 대표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인디플러스 상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서 결국 인디플러스에서 이 영화 상영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 원래>와도 마찬가지로 이는 명백하게 영화 제작자나 배급사들이 인디플러스에서의 상영을 거부하는 결과는 낳은 것인데 영진위 쪽에서는 이를 문제해결로 받아들이고 안도하면서 스스럼없이 이 제작자나 배급사들이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말하기조차 하는 비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언제가 박OO 이 이 영화 DVD를 저에게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B. H.에서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위 같은 문OO(진술조서 2회, 2018. 1. 29.)은 “‘강정’이나 ‘용산(참사)’ 관련해서 시국 관련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인디플러스에서 상영 시 개봉일 보다 좀 더 미뤄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MB의 추억> 같은 경우 대선에 직면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상영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다.

(3) 제작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한편, 위원회에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입수한 「(특검7)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1.의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에는 이 영화 제작사인 '비투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번호	부처	사업자단체	지원내용	지원액		특이사항	조치결과
				2013	2014		
38		(사대인영성문화발전소 아이공)	비영리재단·청자스튜디오 기획전시및프로그램지원	30	30		지원배제
39		(사대인영성문화발전소 아이공)	시각예술행사지원	30	-	* '아이공'이라는 단체명에 '주체'라는 뜻 포함. 평등사회주창, 대안영상을 통한 사회운동 전개	지원배제
40		(사대인영성문화발전소 아이공)	시각예술행사지원	-	40		지원배제
41		(사대인영성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조건부기부금)	4	-		지원배제
42		비투이 (영화진흥위원회공모사업)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	4		* <MB의 추억>이라는 전직대통령을 회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문서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4. 3. 14.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해 3. 27.경 정무수석실 주도로 관련 수석실 등과 협의하여 TF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에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같은 해 4. 4. 경부터 5. 23.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 그 회의 끝에 같은 해 5. 하순경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다. 신청인에 대한 정치성향 보고 등과 관련

1)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치성향 보고 관련

- (1) 신청인 신은실은 2012. 4. 30. 전주국제영화제 독립영화인 막걸리 파티에 참가할 당시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담당자 000이 인디플러스 <잼 다크 강정> 상영 파동 이후 '상부의 지시'로 신청인의 정치성향에 대해 BH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들었다고 하였다¹⁾(진술조서, 2017. 12. 19. 조사기록 쪽).
- (2) 위 같은 문00은 [영진위 차원, 문체부 및 기타 기관이 요구로 영화인 정치성향을 조사, 보고한 사실에 대해] "아마 국정원에서 요청을 하여 김00 본부장을 통해 당시 국내진흥부 000에게 작성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성향 조사라는 틀을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간단한 파악 정도의 요청이라 생각한다. 진술인 또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2018. 1. 29. 조사기록 쪽).
- (3) 그런데 000(위 같은 제4회 진술조서, 조사기록 쪽)은 신은실 운영위원을 당시 독립영화 막걸리파티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운영위원의 인물 성향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던 기억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발언을 신은실 운영위원에게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대부분 운영위를 담당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분들의 성향을 파악할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기억의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기억이 없네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인디플러스의 프로그래머 계약해지 관련

- (1) 신청인 신은실은 "2013. 4. 24.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직을 다른 3인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사퇴했다. 영진위는 2009년에 고용한 허경 프로그래머의 계약을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계약 만료된 다른 스텝들도 파견직으로 전환해 2~3

1) 신은실은 2018년 6월 12일, 000의 2012년 4월 12일 추정 트위터 캡처 사진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의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000의 당시 트위터 내용은 "이 정권의 민첩성과 미리 생각하는 전략을 따라가질 못한다.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바로 어제였는데) 아침부터 소위 버려진 자식들에 관련된 뒤흔개이를 위해 BH의 리포트 지시에 따라 준비를 하다 퇴근. 바로 다음 판을 준비하는 이 자식들의 폼수 대단하다"라고 되어 있다.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인디플러스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당초 영진위가 전용관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이유는 ‘독립영화의 안정적 상영 및 활성화 기여’였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디플러스 인력의 정규직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07년 기획재정부 경영지침을 들었다. 이는 <잼 다크 강정> 상영 건 등으로 직영 독립영화전용관의 프로그래밍 자율성 보장 등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자 직영관 사업을 정리하려 하고 프로그래밍 외주화 등을 모색하던 영진위의 꼼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진술조서, 2017. 12. 19. 조사기록 쪽).

- (2) 신청인 신은실 제출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의 사퇴의 변」(2013. 4. 24. 조사기록 쪽)에는 “영진위는 지난 4월 13일 전문적 역량으로 ‘인디플러스’ 상영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프로그래머에게 불법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른 스텝들도 2013년 초부터 파견직으로 전환하고 2~3개월씩 근로계약을 연장, 당장 다음날 계약여부도 불투명한 노동조건을 조성하며 안정적으로 업무에 몰두할 수 없게 하는 등 극장운업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역시 영진위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제2독립영화전용관을 평가할 때는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영진위가, 정작 직영 중인 ‘인디플러스’의 전문인력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내치며 극장을 공동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원인을 영진위 내 정규직 이기주의로 보며, ‘인디플러스’의 고용 및 운영 원리를 오로지 ‘경영평가’ 중시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3) 「2012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 제2기 6차 회의록」(2012. 11. 2.)을 보면 허경 프로그래머는 “제가 되었던, 저의 계약기간 만료로 후임으로 다른 분이 프로그래머가 되었던 때면 특별한 논의사항으로 운영위에 올려야 하느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을 거치지 않은, 논의 중인 작품에 대한 보고까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주신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을 찍어서 보고한다는, 그런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다.
- (4) 이에 대해 허경 프로그래머는 위원회에서 “왜 진술인은 왜 계속 고용을 유지하지 않았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일정 MB정부 시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일인당 생산성 배점을 높이면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자행하면서 영진위가 이에 순응하여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

로는 2012년도 <짬 다큐 강정>이나 <MB의 추억> 등 영화 상영거부 또는 검열 행위를 영진위가 자행하였는데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다른 인디플러스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는 계속 남아서 일을 해주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였으나, 저에게는 어떠한 영진위로부터 만남의 요청도 없었고,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래머의 지속적 고용방안을 마련해라고 요구해왔음에도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고, 급기야 계약만료 한 달 전 날짜에 주말에 김의석 위원장과 영진위 직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덕분에 인디플러스가 잘 자리 잡았고 독립영화인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었다’는 등의 치하를 한 뒤에 곧바로 계약만료 되었으니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전년도의 영화 검열 등에 대해서 운영위원들과 프로그래머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및 항의를 한 부분에 대해 영진위가 부담을 느꼈던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위 진술에 대해 문OO은 “<짬 다큐 강정>의 상영이 [인디플러스]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뒤이어서 ‘인디스페이스’와 위탁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다. [인디플러스 운영위원 신은실이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해고와 관련하여] 사퇴는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독립영화계와 스킨십을 유지하려 했다”라고 하였다(2018. 1. 29. 조사기록 쪽).

3. 영화 <다이빙벨> 상영 불허 및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 배제

가. 이 사건 기존 조사결과 요지

1) 관련 범죄일람

2018. 1. 23.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노2425, 노2424(병합)의 판결문 범죄일람표 3.의 2항 내지 3항은 이 신청사건과 관련이 있다.

[표-7] 2018. 1. 2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 3'의 부분

순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담당 (문체부/산하기관)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	비고
2	2014-11-06 경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요청 거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국내진흥부 문OO	인디플러스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 거부 지시	문체부의 지시를 받고 다이빙벨 상영 불가 통보	
3	2015-04-29 경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영화관 임차료 (전년도 5,000만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국내진흥부 문OO	인디스페이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 발굴	영화 다이빙벨, 자가당착 상영
4	2015-04-29 경	아리랑 시네센터	위탁사업 지원금 (전년도 1억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국내진흥부 문OO	아리랑 시네센터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 발굴	영화 다이빙벨 상영

2) '인디플러스'에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 요청 거부 관련 판결 요지 (위 범죄일람의 2.항 관련)

위 판결문의 “범죄사실” 항목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이 항과 관련하여 김기춘, 조운선, 김소영, 김종덕은 원심(201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무죄에서 모두 유죄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다이빙벨>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무렵 정무수석실 피고인 정관주 소통비서관 등에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 저지를 위하여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다이빙벨>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되었고,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김소영은 신OO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정OO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이OO 사무관²⁾에게 ‘<다이빙벨>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OO은 영진위 문OO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문OO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 중인 예술영화전용관 ‘씨네코드선재’ 관계자에게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었다.

영진위 문OO부장은 2014. 11. 6.경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는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OO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이 부분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원본 그대로이다. 그러나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보고 등 관련 업무는 당시 윤OO 사무관이 담당하였다.

3) 위 서울고등법원의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관련 판결(위 범죄일람의 3.항)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과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중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부분을 원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이와 관련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이 모두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정관주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중략…)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김종덕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인디스페이스’, ‘아리랑 시네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문OO 부장은 이OO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는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OO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인디플러스에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1) 인디플러스의 ‘위탁운영’ 도입

- (1) 「2015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에 의하면, 제1독립영화전용관은 시설은 직영, 프로그램은 위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인

디스페이스)에 위탁하였다. 그리고 제4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운영하는 인디스페이스에 임대료를 지원하였다.

- (2) 위 같은 000은 위원회 조사 시 “〈잼 다크 강정〉 상영 관련 사태를 겪으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도 보장하지 않고 위원회가 신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운영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독립영화 관객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디스페이스에 프로그래밍 위탁을 하게 되었다(임대료 50백만원 및 매월 프로그램 수급, 홍보 및 기획비용 800만원). 그래서 관계개선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프로그래밍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이빙벨〉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무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회 진술조서, 2018. 3. 23. 조사기록)

2) 〈다이빙벨〉 상영 금지

(1) 영화 〈다이빙벨〉 관련 문체부의 ‘상영 현황 보고 및 조치 관련 자료’

(문영1-1부터 1-20 각 기재사실)

- ① 2014. 10. 18. 기준 〈다이빙벨〉은 10. 23 모두 9개 상영관에서 개봉 예정이다. 이 중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7개이고 이에는 인디스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는 상영 전 조치로 10. 17. 예술영화전용관 5개 중 대화가 가능한 씨네코드선재에 영진위 선임 부장이 통화하였으나 “연락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예매사이트(맥스무비)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극장은 10. 18. 삭제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 나머지 상영관은 강성 운영자·프로그래머(아트나인, KU시네마, 아트하우스모모), 민주당 지역구(주안), 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 단원고 소재지(메가박스 안산)로 이와 같은 상영관에 요청 시에는 “민간에 대한 검열 및 논란 야기,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다이빙벨〉 측에 상영의 당위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상영 후 조치”로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을 대책으로 보고하였다.
- ② 같은 해 10. 20. 개봉예정 상영관은 총14개,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11개인데 10. 20. 문화부 조치사항으로 “사후 영화발전기금 지원 중단”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10. 22. 현황 보고에는 인디스페이스1관에 대해 상영일수 7일(10. 23.~10. 29.) 스크린 수 1개, 상영횟수 25회, 정부지원 관련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50백만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11. 24. 현황보고에 의하면 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상영 불허와 관련하여 11. 19.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4개 단체가 영진위 부당압력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상영 요구와 불허의 과정

이 사건 신청인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과 영진위가 이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서의 기재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위 시민모임은 협약에 따라 ‘인디플러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0. 1. 「인디플러스 9월 사업보고 및 10월 운영계획안」을 통해 <다이빙벨> 상영 계획을 영진위에 전달하고, 10월 14일 <다이빙벨> 개봉 일정(10. 23.)에 따른 상영 시간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영진위 업무 담당자는 “이 영화의 등급심의 일정이 늦어져 제출된 상영시간표에 따른 개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이후 개봉 여부에 대해 등급분류가 진행된 이후 결정하여 회신”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10월 21일 위 업무담당자는 전화로 영화 <다이빙벨>이 다루고 있는 사안이 진상규명 중에 있고,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 상 상영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상영은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영진위가 지닌 상영 가능한 영화와 불가능한 영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민모임이 위탁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및 기획, 홍보’ 등의 업무의 결정과 관련한 영진위의 권한 범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 ② 같은 해 10. 30.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 업무 위탁 협약서」 제1조 1항 1호에 따라 위 시민모임에 ‘인디플러스’의 개봉 상영 프로그래밍 및 기획/홍보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이 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는 상호 합의 아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영진위는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 ③ 위 시민모임은 같은 해 11. 6. <다이빙벨>을 영진위가 운영하는 인디플러스에서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이에 <다이빙벨>이 상영될 수 있도록 영진위의 동의를 재차 요청하였다.
- ④ 같은 해 11. 10. 영진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이 완료되지 않았고,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며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

적기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상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인디플러스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에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렸다.

(3) 관련 진술들의 요지

- ① 위 같은 윤OO(진술조서, 2017. 9. 22.)은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는 “신OO 행정관의 연락을 받은 정OO 과장의 지시를 따라 같은 자신이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의 서식까지 정해주었고 특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독립영화관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영화관에서는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직권남용권리행사등방해)의 “증거서류” 중 당시 신OO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조서(2017. 1. 7.)에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방침을 따른 김소영 문체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위 신OO은 이를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무원들은 2014. 11.경 영진위에 연락하여 영진위 직영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영진위에서는 ‘인디플러스’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③ 같은 “증거서류” 중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의 진술조서(2017. 1. 3.)를 보면, “영진위에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을 막아달라고 하는 마당에 직영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독립영화전용과 사업 변경과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1) 문체부의 지원배제 방안 및 명분 발굴

- ① 문체부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문영 2-1)는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이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총 4곳의 독립영화전용관은 모두 서울 소재지로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부재에 대한 국회, 교문위 등의 지적과 독립영화계의 지역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고 인디플러스의 프로그램·기획홍보 업무를 인디스페이스가 위탁하고 있으나 업무에 관한 상호

이견 발생 시 원만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봉 상영관으로서 프로그램·기획 홍보 등의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주체적으로 운영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다. 이어 2015. 3. 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중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에서는 지역으로 전용관 1곳을 이전하고,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지원 중단 및 아리랑시네센터 위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 하되 적정 시기를 고려,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 “프로그램은 직접 선정하여 위탁 시 발생 가능한 논란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 그리고 이 지원 사업 개편의 명분은 타당하나 “영화계·언론·야당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 분위기를 회피” 곧, 시기조절의 필요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외주의												
<p>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으로 전용관 1곳 이전 (서울→지역) 프로그램 직접 운영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지원 중단 아리랑시네센터 위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추진계획 이행하되, 적정 시기 고려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 프로그램은 직접 선정하여 위탁시 발생가능한 자율성 논란 원천 봉쇄 공공기관인 영상자료원 위탁의 문제점 국회에서 수차례 서울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위탁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했으므로 지역 이전 타당하며, 명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개편 명분 타당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지역 균형성 확보 및 지역독립영화상영 활성화 목적으로 개선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극장(공급자) 중심에서 관객(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보다 많은 지역에서 좋은 예술영화를 만듦차으로 관련 									
<p>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개편 각종성 있는 영화 선정 사업 위탁(관련 회·단체) 해당 해당사에 영화 마케팅 및 상영권 확보 지원 상영관련 지역 일치율에스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재</th> <th>개편시</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영화</td> <td>-</td> <td>20여편</td> </tr> <tr> <td>지원 상영관</td> <td>15~20개</td> <td>30~35개</td> </tr> </tbody> </table>	구분	현재	개편시	지원 영화	-	20여편	지원 상영관	15~20개	30~3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추진계획 이행하되, 적정 시기 고려 정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한 직접 지원 배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는 명분 있음 사업 목적 변경, 예술영화 관객 창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추진시기는 조절 필요 영화계 기타권 논다. 선명적 주장에 있어 정책 타당성이 있는 개편을 소극적, 방어적으로 저항할 필요 없으나 영화계·언론·야당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 분위기 회피 필요 따라서, 시기조절, 분리추진을 통해 개별 사업의 문제점 부각 및 개선 필요성을 제대로 환기
구분	현재	개편시										
지원 영화	-	20여편										
지원 상영관	15~20개	30~35개										

② 위와 같은 명분은 국회에서 예상되는 질의 및 문제제기 관련 대응(답변)자료로 제시 되기도 하는데, 위 같은 000이 2017. 9.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문제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손00이 위 000에게 보낸 「영상과 국감 예상질의 답변」(메일)을 보면, “보안에 주의해주시고 팀장님과 위원장님께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본문과 첨부파일 답변 자료에는 “민간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독립영화상영 지원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영진위에서 독립영화

전용관 지원을 해왔으나, 국회에서 서울 편중, 지역 균형성 확보 필요 지적이 계속 나왔음”, “서울 중심의 지원을 지역으로 개편하여 지역 균형을 확대하고 지역 관객에게도 독립영화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015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중 “독립영화전용관” 부분을 보면, 지역독립영화전용관을 신설하되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 “지역독립영화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 소재지 독립영화전용관 일부 지역으로의 전환 추진”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이OO 2회 진술조서(2017. 1. 5.)에는 “위 문건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서울 지역에 위치한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지방으로 돌려줬다는 명분으로 이 두 개 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 이러한 명분은 영진위 9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문건에서 “영화계 의견 수렴 및 계획 재검토 건의”라고 기재할 정도로 사실 ‘인디스페이스’에 대한 평가는 좋았고 실제로 독립영화계에서는 상징적이 영화관이라고 일컬을 정도였으며 실무자 입장에서 지원이 유지되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추진 시기는 조절’ 정도로 정리하여 결국 청와대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지원배제 관철 과정

- ① 위 같은 “증거서류” 중 신OO의 진술조서(2017. 1. 7.) 기재사실을 보면, 신OO은 “김소영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다이빙벨>을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문체부에 전달하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무원들은 영진위에 하달하여 2015년 ‘아리랑시네센터’ 위탁사업(전년도 1억원), 인디플러스 2015년 지원(임대료 5천만원)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이행되었고 이에 대해 김소영 비서관 및 김상률 교문수석에게도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위 같은 “증거서류” 중 이OO의 2회 진술조서를 보면, 이OO 또한 “신OO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로 영진위 문OO에게 요구하여 인디스페이스에 대한 지원(임대료)이 중단되었고, 더하여 당시 정OO 영상콘텐츠과장은 이 문제로 김세훈 영진위원장에게도 연락한 것으

로 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위 같은 문OO은 우리 위원회 조사 시(2회 진술조서, 2018. 1. 29.) “당시 청와대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배제 지시를 이OO 사무관을 통해 전달받고, 서울권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지방 상영관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모색[서울지역은 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 외 민간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하였는데 이는 <다이빙벨>의 이슈가 시동이었고 이후 <자가당착>이 결정타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③ 2014.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OOO(진술조서, 2018. 1. 31.)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중인 사건을 다른 영화를 인디플러스에서 상영하면 좋지 않다는 입장을 위원장이 정하여 사실상 <다이빙벨> 상영을 배제하였고 동성아트홀에 대해서도 지원 배제하였는데 당시에는 주무부처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이행할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에도 직면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영화 <자가당착> 상영과 이 사건 관련성

- (1) 앞서 문OO은 서울 지역의 경우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이빙벨> 이슈가 시동이었고, <자가당착>이 ‘결정타’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이는[2017영7 영화 ‘자가당착’ 검열 배제 및 상영 방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서류” 중 위 같은 이OO의 관련 진술조서(2017. 1. 3.)에는 “2015. 1.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서 영화 <자가당착>이 상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정보관 또는 경찰의 스크린을 거쳐 청와대 신OO 행정관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영진위 후원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에 대하여 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취소하는 방안과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상영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후 조치로 2015년 영진위 지원(임대료 50백만원)을 중단하는 방안(「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을 보고하였다. 이 중 전자의 방안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결국 <자가당착>이 상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다음 지원에서 배제를 해버렸다.”고 기재되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조서(2017. 1. 6.)에도 “영화 <자가당착> 또한 VIP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다이빙벨> 만큼이나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 작품이었다. 2015. 1.경 신OO이 정OO에게 인디스페이스의 상영작 중 <자가당착>이 면제 추천된 사실에 대해 질책하였고 이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OO은 또한 김세훈 영진위원장을 질책하고 위 같은 진술조서에 기재된 방안 문건을 마련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OO을 통해 ‘나루’ 메일로 보냈다. 그런데 당시 인디스페이스 기획전에서 독립영화 11편을 상영한다고 하였는데 이중 3편에 대해서만 면제 추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면제 추천을 취소하였으나 2달 후 상영 못한 3편에 대해 면제 추천이 이루어져 결국 이 영화는 상영되었다. 그래서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50백만원 지원중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사실

- (1) 2017영1사건 신청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4. 10. <다이빙벨> 상영 금지로 자율적 운영권,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2015. 5. 인디플러스 프로그램 위탁운영에서 배제(연 7,680만원), 인디스페이스 운영 지원 배제(연5,000만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2) 2017영19사건 신청인 신은실은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영화를 ‘정책적 고려’ 때문에 틀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이에 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신청인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영진위가 실행한 청와대에 개인 성향 보고 등 ‘민간인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 (3) OOO은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이 지정위탁→공모→직영→(일부) 위탁 등의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나 배제를 수반하고, 특정 영화에 대한 검열 또는 상영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본래 사업의 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인 프로그램 확보 운영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난 듯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회 진술조서, 2018. 3. 23.).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사실

가.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잼 다큐 강정> 등 검열 및 상영 불허

1) 독립영화전용관 운영방식의 변경 등 “검열”기반조성

(1) 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은 2007. 11. 독립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다양성영화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관, 이때부터 2009.말까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 운영하였다. 당시 인디스페이스는 영진위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연간 30여 편 내외의 장편과 기획전 등을 통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기반”과 “DVD 제작지원을 통한 부가 판권 활성화 기반” 등의 성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2008. 8.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문화권력’이 좌파에 쏠려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지원을 의도적으로 우파 쪽에 배정하거나 좌파 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한다는 인식과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08. 10. 국정감사에서 영진위 지원금 배분이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에 편중되었고 이들은 대체로 “촛불 시위 참가 단체”들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또한 2009. 기재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제한 방침을 정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하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 영진위는 위와 같이 국정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명분’으로 하여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해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공모제로 전환, ‘우파단체’인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최OO 대표)를 사업운영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시네마루’라는 명칭으로 1년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모제로의 전환 및 공모를 시행하는 과정의 불공정성 등에 항의하여 독립영화인들이 영화 배급 등을 거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시네마루 운영자들의 전문성 결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위탁 수행사업의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공모제로의 전환은 앞서 김OO의 진술처럼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독립영화 창작인들을 공적 자원으로 부터 배제하는 과정’으로 불 여지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공모제를 통한 운영자 선정의 문제점이 있고 나서 2011. 3.경부터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을 아예 ‘직영’ 체

제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직영체제’는 당시 영화인들이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영진위를 통해 특정 영화들에 대한 상영거부와 검열 등 “배제”를 작동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영진위는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 또 실제로 이를 추진하였지만 결국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권이 훼손된 상황에서 특정 영화에 대한 검열과 상영 거부를 현실화하게 되었다.

2)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 선정과정에서의 특정단체 배제

한편, 이와 같이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공모제로 전환,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디포럼작가회의의 경우 당초 1위에서 2차 심사 시 4위로 평가되는 등 심사과정, 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른바 ‘진보단체’를 배제하고 ‘보수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편향되게 진행하였음이 인정이 된다. 그리하여 1, 2차 공모에 신청을 한 인디포럼작가회의, 독립영화협회의, 한국예술전용관협회, 청소년직업체 협센터 등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3) <잼 다크 강정> 등 특정 영화 검열과 상영 불허

- (1)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江, 원래 프로젝트>, <잼 다크 강정> 및 <MB의 추억>은 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에서 “검열” 및 상영 불허 행위가 실행된 점이 명백하다. <江, 원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당시 프로그래머의 진술이나 <江, 원래 프로젝트> 관련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볼 때 분명히 입증된다. 이 영화는 이 명박 정부의 시책인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여러 개의 단편이 모여 ‘장편’을 구성하는 것으로, 당시 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래머는 영진위 사업담당자로부터 집요하게 상영불가 입장을 전해 듣고 <江, 원래 프로젝트> 관련자와 장편을 다시 단편으로 해체하여 상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영화 상영계획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 (2) <잼 다크 강정>의 경우 결국 상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012. 3. 9. 당시 영진위원장 김의석은 ‘인디플러스’개관 1주년을 맞아 “<잼 다크 강정> 상영 불허 논란에 대해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해 벌어진 문제였을 뿐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12.

3. 9. 「김의석 위원장 “〈쩨뎨 다클 강정〉 심각한 사안 아니었다”).

그런데 이 영화는 2011. 12. 22. 개봉되었는데 당초 인디플러스에서 상영도 이 개봉과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검열” 논란을 거친 후 2012. 1. 20.에서야 비로소 인디플러스 상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인디플러스’ 운영위 회의록이나 위문OO, OOO 등의 진술을 아울러 보면 정부의 “외압” 또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에 대한 “검열”, “상영불허(보류)”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개봉 이전에 “제작현황” 등에 대하여 특정 기관에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BH에 운영위원 개인의 성향을 보고했을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영진위를 넘어선 국정원 등의 ‘스크린’을 거쳐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를 통해 상영 불허 지시가 있었고, 영진위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순응하여 상영을 보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한편 〈MB의 추억〉은 위문OO의 진술에 의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영진위 직영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 실정법(선거법) 위반의 점을 검토하였다고 하고, 그런데 허경 프로그램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실정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배급사에서 인디플러스에서의 상영계획을 명확히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영거부에 대해서 영진위에서는 “자진철회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영거부’는 ‘실정법 검토’와 같은 상영 불허 내지는 유보 행위 작용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검열” 및 “상영방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나아가 2014. 5. 중순경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작성 경위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영화로 인해 제작사 ‘비투이’는 ‘블랙리스트’로 등재되고 사후 지원배제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서에 기재된 ‘지원배제’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나. 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래머 계약해지

과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 회의록에 의하면 2011~2012 당시 허경 프로그래머가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고용하지 않은 점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이를 이유로 신청인 신은실 등이 운영위원을 사퇴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계약해지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자동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허경 프로그래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실무자들의 경우는 계약을 연장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운영위원들의 프로그래머 고용의 연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에 대해서 영진위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다가 계약종료일에 맞춰 해고의사를 통보한 점, 위와 같은 영화들에 대한 영진위의 상영거부 또는 검열 행위에 맞서 위 허경 프로그래머와 운영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던 점을 아울러 보면, 이와 같은 계약해지는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용에서의 영화검열 등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 상영 거부

이 점 또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서술을 생략한다. 다만,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지시 아래 조운선 정무수석, 김소영 문체부비서관, 김종덕 장관을 거쳐 문체부 공무원→영진위원장 및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되어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하 문체부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이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의 상영 요구에 대해 이 영화의 등급 심의 일정이 늦어져 제출된 상영시간표에 따른 일정이 불가하다고 보류하고, 뒤이어 이 영화가 이 영화가 ‘진상규명’ 중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 상 상영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상영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미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순응하여 ‘상영거부’ 입장을 표명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는, 영진위가 정부의 특정 영화나 영화인에 대해서는 “배제”, “검열” 즉,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고발도 하지 않고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한 점이 명백하다.

라. 인디플러스 및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의 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범죄일람 3.의 3.항과 일련의 판결문을 통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지원배제”, “프로그램을 직접 선정하여 위탁 시 발생 가능한 자율성 논란 원천 배제” 방침을 뚜렷이 하여 청와대에 보고·승인을 얻어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성” 명분을 고안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 곧, 이러한 ‘명분’을 창안하고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의 재편을 통한 지원배제는 단지 <다이빙벨>이나 <자

가당착〉 등의 정부비판적 ‘문제영화’를 상영한 데 대한 ‘보복조치’일 뿐만 아니라 더욱 확고히 블랙리스트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직영관 ‘인디플러스’ 프로그램 위탁운영에서 배제된 점은 ‘범죄(일람)’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운영하는 인디스페이스에서 〈다이빙벨〉 및 〈자가당착〉 상영과 관련하여 지원배제(임대료 50백만원)가 이루어진 점, 한편으로 이 단체는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요구하였으나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이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동 단체가 강력히 항의하였던 점 등 ‘사건의 연속성’ 아래 ‘인디플러스’ 위탁운영 배제 건이 자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이 같은 ‘범죄’에 준하는 블랙리스트(지원배제)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마. 피해사실

- (1) 2009년말경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공모제로 전환,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진위는 특정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의 공정성에서 벗어나 편향되게 진행함으로써 인디포럼작가회의, 독립영화협의회, 한국예술전용관협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을 배제함으로써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
- (2) 영화 〈江, 원래 프로젝트〉, 〈짬 다큐 강정〉, 〈MB의 추억〉 등에 대한 “검열” 및 상영 불허(보류) 등으로 창작,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영진위 직영으로 운용할 당시 고용한 해당 프로그래머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실 또한 인정이 된다.
- (3) 또한 정부의 ‘문제영화’에 대한 상영불가 방침, 이를 상영한데 따른 페널티의 실행으로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인디스페이스 및 인디플러스 운영 지원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음이 인정이 된다.
- (4) 영진위는 청와대와 문체부 등 권력기관의 관여 아래 영진위는 단지 정부비판적 영화와 단체를 배제할 의도와 목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는 결국 독립영화 등 ‘다양성영화’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가. 신청인의 정치성향에 대한 청와대예의 보고 등

신청인 신은실과 허경의 주장 및 문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OOO 또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나. 국정원 및 청와대 등의 관여 사실

위 문OO은 국정원이 언론을 ‘스크린’하여 특정 영화에 대해 상영 불허 등의 조치에 이르렀다고 하고, 또한 OOO은 <잼 다큐 강정>의 제작 현황 등에 대해 특정기관에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및 청와대 관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 기한의 부족 등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관련

이 사건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 시기 특정 영화 상영 거부 및 검열,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특정단체 배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됨으로써 영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영화인들과 영진위의 협력적 유대 관계를 훼손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권력’ 개념의 도입과 ‘균형화전략’ 즉, 문화예술 분야가 ‘좌파’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파’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인식,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좌파를 고사’해야 한다는 방침과 이 사건에서 드러난 이러한 방침의 실제 실행에 비추어 보면, (특히 영화 분야에서) 이 시기 블랙리스트의 실행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3. 이 사건의 성격

- (1) 2009~2010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 선정에서 인디포럼, 독립영화협의회, 예술영화전용관협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특정단체를 선정 배제한 사실과 영화

〈江, 원래 프로젝트〉, 〈잼 다크 강정〉, 〈MB의 추억〉, 〈다이빙벨〉 등에 대한 상영불허 또는 보류 등의 조치는 “사전검열”적 성격을 지닌 위헌·위법한 사건이다. 이는 비록,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공관이 직영하는 상영관에서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등 전 정부의 최고 권력자들과 문체부 및 이의 지시에 순응한 영진위는 민간 상영관에서조차 〈다이빙벨〉 등 ‘문제영화’에 대해 상영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이와 같은 직영관에서는 이를 더욱 강력하게 관철시켜왔을 뿐 차이는 없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검열’을 행하였는데,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라면서 위 공연윤리위를 “검열기관”으로 보았다(1996. 10. 4.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정」).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그리고 산하 기관인 영진위의 전 체계를 “검열기관”으로 가동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상당히 과거퇴행적인 동시에 위헌적이라 할 수 있다.

- (2) 또한 이 사건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부터 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독립영화전용관의 파행적 운영과 특정 영화에 대한 검열 및 상영 방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아우르는 사건이다.
- (3) 한편,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기재사실에서와 같이 김기춘은 영화 ‘다이빙벨’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형식을 빌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는 등으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다이빙벨〉을 상영한 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할 당시 ‘다이빙벨’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위 영화가 상영됨으로 인하여 사회에 어떠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바, 그러한 이상 위 영화는 우선 예술작품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 “나아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정무수석 등에게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정무수석실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성향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

2014. 6. 1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일하였던 송광용 역시 ‘다이빙벨 등의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피고인이 반정부적인 단체에 정부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위 김기춘의 이 영화와 관련한 일련의 발언과 행위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이빙벨이 좌파적 성향의 영화 또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와 같은 위와 같은 지원배제 지시 및 승인 등은 위헌·위법·부당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8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78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3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신청인 맹수진은 2009년 전후 관여해 오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에서 배제되고, KTV(한국정책방송원) ‘날아라 독립영화’ 고정 영화평론가에서 퇴출당한바 그에 대한 경위와 블랙리스트 등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영진위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영진위는 독립영화 관련 공모사업 등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2011년 심사위원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온 점, 2011년부터는 추천제를 도입하였지만 사업팀에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임의적으로 선정해온 점,

2016년 심사위원 후보 등록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한 점, 참고인 김OO과 문OO의 진술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의도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이 없었다 해도 좌파 성향으로 구분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자발적 판단 및 자의적 재량 행사를 발휘하여 애초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신청인이 2008년 이후 심사위원으로 위촉, 선정되지 못한 사유 역시 이같은 영진위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배제지침의 여파라고 볼 수 있으나,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려는 구체적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2) 한국정책방송원 ‘날아라 독립영화’ 방송 하차 사유

신청인은 위의 영진위 심사위원에서 제외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방송원에서 방영해온 정보와이드 1부 프로그램 중 ‘날아라 독립영화’ 코너가 폐지되면서 하차했다. 당 시기 정부에서 독립영화 소재에 대해 문제 삼은 점, 방송원 원장이 과도하게 프로그램 개편에 간섭하고 개입한 점, 방송원 원장 독단으로 우호적인 인물로 출연진을 교체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에게도 방송내용 등을 문제 삼아 의도적인 하차가 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원에 대하여 청와대나 문체부 등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붙임 :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3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신청인] 맹수진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맹수진은 2010년 전후 관여해 오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에서 배제되고, KTV(한국정책방송원) ‘날아라 독립영화’ 고정 영화평론가에서 퇴출당한바 그에 대한 경위와 블랙리스트 등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은 2017년 10월 13일 「1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위 사건은 ①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등재 사유 ② 영진위 심사위원 선정 배제 및 KTV 방송출연 하차 경위 ③ 해당 사안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확인이 조사의 목적이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등 기관 제출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참조 : 같은 보도자료 7면"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2017.09.11.)	2018. 02. 07.	
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중 "참조 : 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6면 168번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2017. 10. 30.)	2018. 02. 07.	
3	'MB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	SBS 뉴스 (2017.09.12.)	2018. 02. 07.	
5	2009년 영진위 공고사업 안내	영진위	2018. 02. 09.	
6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심사계획	영진위	2018. 02. 09.	
7	2006년 하반기 독립영화/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선정 결과 안내	영진위	2018. 02. 09.	
8	2007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선정결과 안내	영진위	2018. 02. 09.	
9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 계획(안) 수립 및 시행	영진위	2018. 02. 09.	
10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진위	2018. 02. 09.	
11	한국방송정책원 기본 운영 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2018. 02. 20	
1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2018. 02. 20.	
13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	2018. 03. 22.	

나. 참고인 등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참고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칼럼	맹수진	2017. 11. 20.	
2	블랙 리스트도 화이트 리스트도 없는 세상을 꿈꾸며(무등일보 칼럼)	맹수진	2017. 11. 20.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0인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임OO	참고인(당시, 영진위 홍보협력팀장)	2회 진술조서(2017.10.27.)
2	맹수진	신청인(당시, 영화평론가)	녹음 조사(2017.11.03.)
3	김OO	참고인(당시, 심사지원팀장)	진술조서(2017.11.24.)
4	최OO	참고인(영진위 미래전략본부 정보화사업팀장)	진술조서(2017.12.06.)
5	OOO	참고인(당시, 국내진흥부 주임)	2회 진술조서(2017.12.08.)
6	김OO	참고인(당시, 사무국장 직무대리)	2회 진술조서(2018.02.27.)
7	OOO	참고인(당시, 국내진흥부 대리)	전화 면담(2018.03.07.)
8	안OO	참고인(당시, 문체부 국민소통실 사무관)	진술조서(2018.03.22.)
9	문OO	참고인(당시, 영진위 고객지원TF팀 팀원)	전화 면담(2018.04.06.)
10	이OO	참고인(당시, KTV '정보와이드' 메인 작가)	전화 면담(2018.04.13.)
11	박OO	참고인(영진위 영화문화교육팀 부장)	전화 면담(2018.04.19.)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해당사업은 단·중편, 장편,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물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화제작의 다변화,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¹⁾을 두고 있다. 신청기간을 두고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위원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한다. 운용사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결정심사위원회(9인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²⁾한다.

1) 2009년 영진위 공고사업 안내, 입수보고서

나. KTV(한국정책방송원, 이하 방송원) 소개 및 ‘날아라 독립영화’ 방영 현황.

방송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써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 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³⁾한다.

위 방송원은 책임운영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⁴⁾을 말한다.

‘날아라 독립영화’는 2008년 9월 1일 가을 개편부터 2010년 3월 초 봄 개편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보와이드 1부 프로그램의 코너물로 매주 수요일 1편의 독립영화를 소개했다. 같은 코너물은 2008년 9월 첫 방영 이후 2010년 3월 봄 개편까지 시간 축소, 편성 변경, 코너 변경 등의 개편이 있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방송⁵⁾했다.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사유

가.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017. 09. 11.),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참조 : 같은 보도자료 7면” 및 언론 보도 자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청산 T/F에서 2017. 9. 11.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화계, 영화감독, 배우, 방송인, 가수 군으로 구분되어 강성 성향 69명과 온건 성향 13명 등 총 82명이 MB정부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왔다.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여균동,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등의 영화감독과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윤모 등(총 52명)이 강한 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이 69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이 2006년 5월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⁶⁾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2) 위의 영진위 자료입수보고

3) 한국방송정책원 기본운영규정, 입수보고서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입수보고서

5) 방송원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2018.03.22.)

6) ‘MB 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 SBS 뉴스(2017.09.12.), 입수보고서

한편, 위 보도자료는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을 각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1] ‘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비판세력 퇴출 件」 조사 결과 중 일부

구분	강성 세력(69명)	온건 세력(13명)
문화계	이외수, 김영근, 조영래, 김종권, 박현민, 신학철	
배우	문성근, 영계남, 권해효,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준상, 김기연
영화감독	이창동, 어규동, 박장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김준환 및 2006년 5월 「만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도 등(총 52명)	
방송인	김미화, 노정필, 오종혁	김구라, 김재홍, 박미선, 배철수, 황현희
가수	윤도현, 신애철, 안지환, 윤민석	양희은, 김정훈, 이아늘, 이수

나.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017. 10. 30.),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6면 168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에서 2017. 10. 30. 발표한 보도자료 중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6면의 연번 168번에 따르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등재 내역을 살펴보면 ‘폭력버스 지지 영화인 선언’으로 기재되어 있고, 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위 ‘폭력버스 지지 영화인 선언’은 2011년 5월 4일 국내 영화인 1천543명이 희망버스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당시 국정원은 희망버스를 폭력버스로 표현하였다.

위 보도자료 중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BH 보고서(2014. 3. 19. 국정원 작성)는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 시국선언, 野圈 인사지지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했다.

위 문서는 문예계 좌성향 세력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교체 및 보조금 중단으로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좌성향 문예인 249명이 각종 문화예술단체 포진, 인사교체 및 좌성향 단체 보조금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뿌리까지 척결에 한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림-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중
‘문예계 주요 반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일부**

167	정호	류승훈	영화 '부당거래' 감독	C
168	정호	맹수진	특력팩스 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C

3.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한 사안별 배제 의혹

가. 영진위 독립영화사전제작지원 등 심사위원 선정 배제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위 사업 심사위원으로 다수 선정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나,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지원개봉사업 심사위원으로 한차례 선정된바 있다고 했다

2008년 이전 심사위원 선정 현황을 확인하고자, 영진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10년 이전 자료는 남양주 촬영소 문서고에 보관하도록 했고, 현재 문서고의 문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요청 자료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면서 제출할 수 없다’⁷⁾는 답변이었다. 다만, 영진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06년과 2007년 독립영화 관련 사업 안내 중 신청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⁸⁾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했다.

한편, 심사위원 선정 배제에 대해 신청인은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영진위의 밤’에서 당시 사업담당자 한OO 팀장을 만났고, 배제 이유에 대해 문자 한OO 팀장은 “내가 원흉이다”며, “내부적으로 배제 대상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녹음 조사, 2017.11.03.).

2) 참고인들의 진술

(가) 참고인 한OO는 위원회의 전화면담에서 ‘맹수진을 부국제에서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당시 영진위 내부의 심사위원 배제 대

7) 000 자료입수 보고서

8) 2006년 하반기 독립영화/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선정결과 안내, 2007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 지원 선정결과 안내, 입수보고서

상 관련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맹수진에게 심사위원 배제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전화면담, 2018.03.07.).

- (나) 당시 사업부서 부장인 참고인 문OO은 위원회의 전화면담에서 '맹수진 심사위원을 잘 안다. 학계 및 평론 대표 자격으로 다수 선정해 왔었다. 맹수진이 좌파 성향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영진위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리스트화 해서 일부러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며,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영진위 사업 관련, 문체부를 비롯한 국정원의 간섭과 개입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정부 비판적인 영화 또는 국가 폄훼 및 대북 관련 내용을 담은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하달되기 시작했다. 이같이 지원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인의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방향 보다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처음부터 사업팀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위 문OO은 '실제로 2011년도 심사위원 선정 제도가 추천제로 변경되면서 맹수진의 선정 배제는 제도적 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당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추천제였지만 일부 심사위원은 작품 선정 시 배제 및 지원하려는 의사 전달이 용이한 인물을 사업팀에서 미리 선정했고, 위원장이 최종 승인했다. 이런 이유로 독립영화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심사위원이 5인인 경우 2인은 독립영화계에서 추천한 명단 중 추천을 하고, 나머지 3인은 사업팀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맹수진은 양 조건에 해당이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청인이 2013년 다양성영화지원개봉사업에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위 문OO은 '당시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따라 2인에 대한 추천 과정에서 추천했고, 30%의 여성 할당분을 선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선정됐다'고 하면서 '당시로서는 거의 보기 드물게 선정됐던 케이스라 기억 한다'고 했다(전화 면담, 2018.04.06.).

3) 영진위의 심사위원 선정 절차 변경

- (가) 영진위는 2011년 심사위원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을 해왔다. 즉, 2008년~2010년 사이 영진위는 강한섭 위원장과 조희문 위원장이 재임했고, 두 위원장이 재량으로 선정했다.

참고인 김OO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는 위원장이 통상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절차에 의문을 갖은 것은 아니었으나 선정된 심사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 사

람들 뭐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었습니다” 했다(2회 진술 조서, 2018.02.27.).

위 김OO과 문OO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011년 심사위원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으며,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위원장의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위원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영진위는 2011년부터는 심사위원 제도를 추천제로 변경하였다. 당시 영진위의 심사관리규정⁹⁾을 살펴보면 같은 제도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심사위원 후보자군 중에서 대상사업 특성에 따라 직군별 비중을 고려하여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자에서 위원장이 정한 섭외순서에 따라 섭외하여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단, 심사위원은 최소 3인 이상, 외부 전문가 비율 50% 이상, 여성 비율 3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문OO의 진술과 위원장이 정한 섭외순서에 따라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실제로는 사업팀과 위원장이 도모하여 사업 진행에 용이한 심사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인다.

(다) 한편, 문체부에서 작성한 청와대 보고 문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2014.10.22.)’을 살펴보면 ‘영진위 영화지원 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지원제도 건전화 목적을 위해 심사위원 인력개편 및 선임절차 강화를 통한 심사강화와 지원기준 균형성 확보를 통해 이념편향 배제’한다는 방안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주요하게 ‘심사인력풀 개편과 함께 현행 7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의 정리와 건전 영화인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림-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일부

①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영화 지원사업	공모 → 심사(소위원회) → 의결(전체회의)	○ 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절차 강화 - 영진위 심사인력풀 개편(700명 → 400명) - 위원장 권한 강화 ○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배제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	---

9)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2012년 6월 17일 개정안), 입수보고서

이에 따라 영진위는 2016년 1월 15일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계획(안) 수립 및 시행’¹⁰⁾을 통해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당시 심사지원팀 전문위원인 김OO은 “김세훈 위원장이 2016년 1월 주간회의에서 온라인 심사위원 후보 등록 시스템으로 갖추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중략…) 2016년 1월 15일 전에 등록시스템을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보도 자료를 내서 운영하면서 2월말까지 심사위원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진위 홈페이지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등록 지원을 해달라고 30여개 협회 등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중략…) 과거에는 감사팀에서(…중략…) 업무를 심사지원팀이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그 후 심사위원 추천과 섭외순서까지 정해서 각 사업팀에 통보해 주었고, 해당 팀은 그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세워 선정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24.).

이에 대해 참고인 임OO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인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확보된 심사위원 풀을 활용하고 그 풀들에 기반 하여 온라인 풀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폐기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면 재편을 위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위원장(김세훈)은 그것을 왜 하는지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했다(2회 진술조서, 2017.10.27.).

또한, 참고인 이OO는 “이것이 정확하게 온라인 심사위원 풀로 개편한 이유로 보입니다. 이미 갖고 있던 풀은 독립영화 중심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활용하기 보다는 이것을 명분 삼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구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가등록 방식이었는데 말이 안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 일부러 그런 수고를 하면서 등록을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가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 중복해서 심사위원이 선정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중략…) 접수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고 접수현황을 들어 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면 저희가 도와주면서 까지 등록을 도와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풀 중에 사람들이 등록을 안하면 안할수록 좋았던 거죠. 사람 수도 적어야 심사위원이 중복되더라도 자연스러웠을 것이고요” 했다(2회 진술조서, 2017.12.08.). 한편 신청인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녹음조사, 2017.11.03.).

10) 2016년 영진위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계획(안) 수립 및 시행(2016.1.15.), 입수 보고서

위와 같이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등록 시스템은 영화산업, 기술, 학계 등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직접 영진위 시스템에 심사위원 후보로 자신의 경력 등을 등록¹¹⁾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영진위 영화문화교육팀 부장인 참고인 박OO은 위원회의 전화면담에서 ‘온라인등록 시스템은 2016년 1월 시행되어 1달 동안 신청을 받았고, 신청 당시 511명이 등록하였다. 2015년 까지 심사위원 풀에 구성되어 있던 인원은 856명이었으나 2016년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변경한 이후 기존 심사풀에서 209명만이 등록했고, 신규 등록 신청한 사람은 3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화면담, 2018.04.19.).

이로 인해 기존의 856여명 수준이었던 추천제 대상 심사위원 풀이 51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같은 심사위원 후보 등록시스템 도입은 추천제 대상이 되는 기존의 심사위원 후보 풀을 완전 배제하고 새롭게 심사위원 후보 풀을 구성함으로써 ‘심사인력풀을 7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의 정리하면서 건전 영화인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위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전략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 소결

(가) 이를 종합해 보면 영진위는 2011년 추천제 이전에는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추천제 도입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자의적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016년에는 좌파 성향으로 구분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후보 풀에서부터 최대한 제외되도록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나) 영진위의 이 같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온 인물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좌파 성향의 인물로 낙인이 찍힌 신청인 역시 의도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이 없었다 해도 위의 영진위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통해 제외 했을 것으로 보이나, 위 한OO가 부정하고 있는 내부 배제 대상과 MB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신청인을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려는 구체적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11) 2016년 영진위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계획(안), 입수보고서

나. KTV(한국정책방송원) ‘날아라 독립영화’ 하차 경위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1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KTV에서 방영한 정보와이드 1부 프로그램 중 ‘날아라 독립영화’ 코너에 매주 1회씩 출연¹²⁾했고, 이 코너에서 독립영화 소개 및 해설을 담당했다.

신청인은 이 코너를 진행하던 중 “한국정책방송원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 채널로써 당시 정부의 독립영화 정책을 감안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너가 유지됐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항상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올 만큼 분위기가 싸늘했다. 과정에서 독립영화 소재가 정부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소개했다. 내가 방송 초고를 직접 작성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초고의 내용이 커트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작가와 종방 특집을 준비했을 정도로 폐지 분위기가 역력했다. 방송 담당 작가에게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 전달과 방송 폐지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결국 종방일이 다가왔지만 공식 통보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마지막 방송이라는 멘트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내가 걱정하고 당시 정부의 독립영화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입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나의 돌출발언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방송 사고였다. 그 날 마지막 멘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맹수진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진행형 멘트였다”며, 방송 관계자들의 미안해하는 표정은 역력했고, 담당 작가는 ‘선생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했다.

신청인은 ‘정부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시사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런 작은 코너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폐지 조치를 단행한 것은 코미디다’는 설명이었다(녹음조사, 2017.11.03.).

2) 방송원의 답변

방송원은 위원회에 제출한 회신문에서 ‘날아라 독립영화는 2008년 9월 1일 가을 개편부터 2010년 3월 초 봄 개편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보와이드 1부 프로그램에서 매주 수

12) 한국방송정책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2018.03.22.)

요일 1편의 독립영화를 소개했다. 소외된 독립영화를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으나 1년 6개월 동안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진행되면서 독립영화의 성격상 파격적인 내용이 많고, 방송에 적합한 독립영화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2010년 3월 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정보와이드의 담당 메인 피디가 교체되고, 1년 이상 된 코너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맹수진 평론가의 출연 코너가 없어'졌다는 답변¹³⁾이었다.

3) 참고인들의 진술

(가) 당시 해당 코너의 메인 작가인 000는 위원회와 전화면담에서 “MB 정부 출범 후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폐지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간섭과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작가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페널리스트를 올리면 프로듀서, 책임프로듀서, 과장, 원장 순의 컨펌 진행 중 불분명한 이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과장 선에서 ‘이런 내용이 되겠냐. 원장이 통과 시키겠냐’ 면서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고, 원장 선에서 삭제되는 경우 책임 PD는 윗선에서 지시한 일이라고 얼버무린 적이 많았다” 며, “날아라 독립영화의 경우 당시 정부에서 독립영화의 소재에 대해 문제 삼았고,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독립영화상영관 폐지 및 독립영화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때로 이에 영향을 받아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시에 원장이 독단으로 기존 출연진을 하차 시키고, 자신의 측근으로 채기기 시작했는데 맹수진 선생님도 이와 맞물려 하차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맹수진 선생님이 앞서 정보와이드 메인 MC인 000도 돌연 하차 결정이 이뤄져서 말이 많았다. 심지어는 하차 여부를 담당 프로듀서가 전하지 않고 작가가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는 출연정지를 당한 사람이나 이를 알리는 작가에게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며, “방송원은 정부의 나팔수로서 정책홍보를 해야 하지만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방송원 프로그램 개입은 정부에 선을 대려는 원장의 노골적인 움직임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단언컨대 이전 정부 시절의 원장인 손형기와 김관상은 부역자다”라고 했다. 또한, 이들이 ‘방송원의 원흉이다’ 면서 ‘반드시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전화면담, 2018.04.13.).

13) 한국정책방송원 사실 조회 답변(2018.03.22.)

(나) 사업담당자인 문체부 국민소통실 사무관 안OO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에서 방송원의 방송 제작 및 편성 등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편성 방송됩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입니다” 했고, “특정인을 대상을 배제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 다만, 위 안OO은 “한국정책방송원은 케이블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 편성, 프로그램 기획 제작 등 의 운영을 합니다. 주로 방송 내용은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가 주 임무입니다” 했고, 당시 정부에서 특정 정책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며, “원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문체부 국민소통실에서도 전달합니다. 프로그램 기획 시 (문체부)실장님이 원장에게 요청하거나 과장이 기획편성과장에게 요청합니다” 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3.22.).

4) 소결

국정 과제 홍보가 주 임무인 방송원 특성상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방송 개편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시기 정부에서 독립영화 소재에 대해 문제 삼은 점, 방송원 원장이 과도하게 프로그램 개편에 간섭하고 개입한 점, 방송원 원장 독단으로 우호적인 인물로 출연진을 교체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방송원은 신청인 방송내용의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코너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방송원에 대한 청와대나 문체부 등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 맹수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사유

신청인 맹수진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참조 : 같은 보도자료 7면”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보도자료 중 “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6면의 연번 168번에 따르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민노당 지지 선언을 이유로 강한 성향으로 구분되어 MB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고, 희망버스 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를 이유로 박근혜 블랙리스트에도 등재되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영진위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 1) 영진위는 독립영화 관련 공모사업 등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2011년 심사위원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온 점, 2011년부터는 추천제를 도입하였지만 사업팀에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임의적으로 선정해 온 점, 2016년 심사위원 후보 등록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한 점, 참고인 김OO과 문OO의 진술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의도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이 없었다 해도 좌파 성향으로 구분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자발적 판단 및 자의적 재량 행사를 발휘하여 애초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2) 신청인이 2008년 이후 심사위원으로 위촉, 선정되지 못한 사유 역시 이같은 영진위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배제지침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한OO가 부정하고 있는 내부 배제 대상과 MB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신청인을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려는 구체적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나. ‘날아라 독립영화’ 방송 하차 사유

신청인이 위의 영진위 심사위원에서 제외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방송원에서 방영해온 정보와이드 1부 프로그램 중 ‘날아라 독립영화’ 코너가 폐지되면서 하차된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해당 시기 정부에서 독립영화 소재에 대해 문제 삼은 점, 방송원 원장이 과도하게 프로

그램 개편에 간섭하고 개입한 점, 방송원 원장 독단으로 우호적인 인물로 출연진을 교체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에게도 방송내용 등을 문제 삼아 의도적인 하차가 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원에 대하여 청와대나 문체부 등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 추가 조사사항

신청인 맹수진을 대상으로 영진위와 방송원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실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들 기관을 상대로 MB 블랙리스트 및 박근혜 블랙리스트 활용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확인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위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와 관련 국가기관의 지침 하달 및 지시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청인이 방송원의 ‘날아라 독립영화’에서 하차된 경위 관련해서 방송원 원장인 손형기를 비롯하여 위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당시 기획편성부 과장과 인사사무 담당관 및 문체부 국민소통실장과 강OO 과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청인에게 종방 당일까지 위 코너 폐지의 부당함을 알려온 류민혜 작가와 위 프로그램 담당 책임 프로듀서인 문OO 등도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및 한정된 조사 기한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9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액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79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41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이 참여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1, 2차 공모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심사로 인하여 독립영화 및 시민영상 제작 영역 등의 지원 사업에 파행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2016년 12월 26일 SBS 보도로 공개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미디어엑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작성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들의 다수는 심사 과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합법성을 갖고 있으나 배제리스트를 공유하여 연락·회유·압력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제가 실행되었다.

2009년,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심사는 '심사 과정이라

는 형식'을 가장하여 특정 단체를 배제 시킨 MB정부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으로 인정되며 당시 공모 심사는 공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미디어엑트는 총 6종의 블랙리스트 문서에 등재가 확인되었으며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총 2종의 블랙리스트 문서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붙임 :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4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신청인] 미디어엑트((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사업단)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이 참여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1, 2차 공모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심사로 인하여 독립영화 및 시민영상 제작 영역 등의 지원 사업에 파행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2016년 12월 26일 SBS 보도로 공개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미디어엑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작성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2017영4[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은 2017년 10월 20일 「11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에 따라, 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 1)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1, 2차 공모의 불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와
가 필요하다. 당시 동일한 심사위원이 심사했던 2010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
자 1, 2차 공모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필요하다.
- 2) ‘미디어액트’, ‘한국독립영화협회’ 블랙리스트 기재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90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1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1차 신청서 (문화미래포럼, 비상업영화기구 컨소시엄)	미디어액트	2017. 10. 20.	
2	영상미디어센터 인수인계내역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1차 신청서 (미디어액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별책1
4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1차 신청서 (한국 다양성영화발전협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2차 신청서 (시민영상문화기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6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2차 신청서 (미디어액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별책2
7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2차 신청서 (한국 다양성영화발전협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8	영진위 제1차 정기회의록 2010. 1. 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9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관련 자료 2010. 2.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0	영진위 내 감사청구 요청자료 2010. 3. 1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1	영진위 내부 감사 타당한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12	심사위원 통화 녹취록 - 최문순 의원실 2010. 2. 1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3	보도자료 최문순의원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무효 밝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4	2010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수행평가 결과보고 2010. 11. 2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5	2010 4/4 영상미디어센터 사업결과보고 2011. 2. 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6	2010영상미디어센터(2~12월)분기보고서 2011. 1. 2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7	2010-10-01_국회문방위국감_미디어액트의견 2010.10. 1.	위와 같음	2017. 11. 1.	
18	(참고)문광부_2011년도_기금운용계획안_사업설명자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9	돌아와 미디어액트 함께해주세요 (캠페인 선전물) 2010. 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0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선정 규탄 성명 및 각종 기고문 2010.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1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기자회견 2010. 1.2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2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선정결과에 대한 미디어액트 스태프들의 입장 2010. 1.2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3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기자회견에 대한 전 운영진 미디어액트의 입장2010. 2.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4	상암 미디어액트 개관- 미디어액트 2010. 5.1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5	영진위 기자회견문에 대한(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입장) 2010. 2. 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6	정보공개청구서2010. 2. 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7	부분 결정통지- 영화진흥위원회 2010. 2. 1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8	행정소송서면내용- 미디어액트 2011. 4.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9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세척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0	독립영화 전용관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세척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1	조희문,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2010. 8. 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2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방안 공청회2011. 3. 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3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방안 공청회 토론내용 2011. 3. 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4	1차 및 2차 공모 서류 검토2010.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5	1차 및 2차 공모 서류 검토 ver.5 2010.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6	시민영상문화기구 공모신청서 분석 자료 2010.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37	최종원의원 요청자료 2010. 9. 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8	시민영상문화기구 사업계획서 문제점. 미디어트 2010.10.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9	시민영상기구 및 한다협 기자회견 녹취록 및 보도자료 요약 2010. 2.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0	100328_KTV유인촌장관정책대담녹취 2010. 3.2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1	3월3일 문체부 유인촌 장관 발언에 대한 건-미디어트 보도자료 2010. 3. 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2	광화문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결과 분석 -미디어트 2011. 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3	영상미디어센터 분실 및 대체장비 최종 변상금액 통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4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촉구 등 2010. 3. 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5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위탁재산 인도의 건 2010. 3. 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6	3월 3일 유인촌 장관 발언에 대한 건 2010. 3. 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7	영상미디어센터 분실 및 대체장비 최종 변상금액 통보	미디어트	2018. 2. 27.	
48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촉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9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위탁재산 인도의 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0	3월 3일 유인촌 장관 발언에 대한 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1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0. 6. 영진위	문체부	2018. 3. 23.	
5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14 2010. 9. 30.	미디어트	2018. 3. 23.	
53	조영택 의원 요구 제출 자료 2010. 2. 16.	문체부	2018. 3. 28.	
54	영진위 대국민사과 발표문 2018. 4. 4.	영진위	2018. 4. 6.	
55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 8. 27.		2018. 4. 10.	
56	국정원 보도자료 2017. 9. 11. MB관련 건	국정원	위와 같음	
57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2014. 5.	법원	위와 같음	
58	미디어트 등재 문서 3종	문체부	위와 같음	
59	수기로된 블랙리스트 명단	법원	위와 같음	
60	리스트- '16.2. 1현재 문서	문체부	위와 같음	
6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2013. 3.	기록관	위와 같음	
62	국정원 적폐청산 T/F 보도자료 2017. 10. 30.	국정원	위와 같음	
63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선임 관련 보도 2006. 3. 27.	뉴스스	2018. 4. 11.	
64	정권과 야합 평가르기 앞장 영진위 해체해야 2008. 1. 26.	조선닷컴	위와 같음	
65	뉴라이트, 문화예술정책센터 발족 2008. 5. 19.	미디어 오늘	위와 같음	
66	평가르기에서 화합의 미덕으로 2008. 11. 20.	조선닷컴	위와 같음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67	MB의 좌파 색출대 문화미래포럼 년 누구야 2008. 7. 14.	프레시안	위와 같음	
68	뉴라이트문화예술연합 창립회원 명단 2008. 6. 20.	인터넷	위와 같음	
69	영진위 비상임위원 6명 선임 2009. 9.11.	뉴시스	위와 같음	
70	춧불 영화단체, 정부사업 '대거탈락' 2009. 10. 16.	미디어 오늘	위와 같음	
71	2008년 문광위 국정감사 회의록 2008. 10. 17.	국회	위와 같음	
72	2008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09. 1.	국회	위와 같음	
73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일부 2008. 12. 30.	기재부	위와 같음	
7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일부 2010. 5.	감사원	위와 같음	
75	2009년 제17차 정기회의 회의록	영진위	2018. 4. 11.	
76	지정위탁 사업 공모제 전환 검토 보고	위 같음	위와 같음	
77	2010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심사 과년자료 2009. 12.	위 같음	위와 같음	
78	2010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심사 채점표 및 의결서 2009. 12.	위 같음	위와 같음	
79	2010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심사 과년자료 2010. 1.	위 같음	위와 같음	
80	2010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심사 채점표 및 의결서 2010. 1.	위 같음	위와 같음	
81	문화미래포럼 창립대회 2006. 11. 21.	참고인	2018. 4. 12.	
82	문화연대포럼 설립 취지문 등 2012. 9. 29.	나라사랑 연합	위와 같음	
83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2008. 9.	참고인	위와 같음	
84	문화예술계, 뉴라이트 문화미래포럼 활약상 2010. 4. 15.	미디어스	위와 같음	
85	2017년 문광위 국정감사 회의록 2017.10.19	문체부	위와 같음	
86	조희문 영진위원장 독립영화 지원 외압논란 2010. 5. 21.	서울신문	2018. 4. 15	
87	영진위원장 조희문 해임 통보 보도자료 2010. 11. 8.	문체부	위와 같음	
88	교수채용비리 조희문 전 영진위원장 구속 2014. 3. 18.	텐아시아	위와 같음	
89	한예종 교수채용비리 실행선고 2014. 7. 25.	조선일보	위와 같음	
90	최문순 의원 보도자료 사실과 다르기에 ..보도자료 2010. 4. 9.	문체부	위와 같음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1인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명준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3.
2	최은정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3.
3	000	영화진흥위원회	진술조서 2017. 12. 7.
4	000	영화진흥위원회	진술조서 2017. 12. 8.
5	김00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진술조서 2018. 2. 27.
6	최은정	신청인	진술서 2018. 2. 27.
7	박00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과장	진술조서 2018. 3. 20.
8	000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실무자	진술조서 2018. 3. 23.
9	강00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3. 28.
10	김00	심사위원	진술청취 2018. 4. 12.
11	정00	심사위원	진술청취 2018. 4. 16.
12	전00	심사위원	진술청취 2018. 4. 1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운영자 선정 공모 사업

(1) 2009년 12월 1차 공모(이하 1차공모)

2009년 11월 20일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운영자 선정 공모 공지
 지원 신청 접수 기간 : 2009년 11월 27 ~ 12월 04일 (7일간)
 2009년 12월 16일 공모 심사
 2009년 12월 22일 심사 결과 발표 “적정단체 없음으로 재공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 김OO

김OO / 용인대 영화과 교수, 위원회 전위원, 영화전공 교수

전OO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피디조합 정책위원장

노OO / 노비스대표, 제작경험 다수

정OO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 미디어센터 평가업무 유경험

장OO / 서경대학교, 영화전공 교수

(2) 2010년 1월 2차 공모 (이하 2차 공모)

2010년 1월 12일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운영자 선정 재공모 공지

지원 신청 접수 기간 : 2010년 01월 15일 ~ 21일(5일간)

2010년 1월 22일 공모 심사

2010년 1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새로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선정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 OOO

OOO / 영화감독, 영진위 부위원장, '몽정기' 등 연출

OOO / 영남외대 교수, 방송영화제작 PD 역임. '매스미디어시대의 영화연구' 저술 등

OOO / 호남대 교수, 학생처장, 다매체영상학 강의

김OO / 영화평론가, 월간 비디오무비 편집장 역임. PAF비평상 수상(공연과예술)

이OO / 목원대 교수, 영화영상학부 교수

나. 영상미디어센터 MediAct(미디어액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목적은 시민, 일반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영상제작 활동장려 및 활성화 도모이다. 2000년 경 (사)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를 영진위가 수용하였다. 2000년 8월 영진위와 한독협은 독립영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2001년 11월 영진위와 한독협이 공식적인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2002년 '영상미디어센

터가 MediACT(이하 미디어액트¹⁾)'라는 이름으로 5월 19일 개관 하였다. 위치는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이었다.

미디어액트 운영위원회는 영진위 추천 3인, 위탁단체인 한독협 추천 3인으로 구성되었고, 미디어액트 소장은 한독협이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2010년 공모사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액트'로 불리었으나 이후에는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서울 영상미디어센터' 등으로 지칭되었다.

영진위의 지원 금액은 2010년도의 경우 소요예산은 935백만원, 관리비/전기료 : 115백만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540백만원,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 : 280백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다.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²⁾

2009. 10. 23. 사단법인 등록 단체가 되었다. 2009년까지 미디어액트(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한 실무진과 지역 네트워크, 독립영화인들이 주요 회원이다. 미디어액트는 2010. 5. 14.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3번지 우리기술빌딩 13층에서 재개관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5-5 동복2세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미디어액트로 부르기도 한다.

라. 제1독립영화전용관³⁾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및 관객의 다양성영화 문화 접근성 증진을 통한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07. 11. 서울 1개관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 4개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7~2009년 사이에는 (사)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지정위탁으로 제1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를 운영하였다.⁴⁾ 위치는 구 중앙시네마 3관이었다. 2010년 공모로 전환되면서 '인디스페이스'는 휴관하고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가든플레이스 2층에 위치한 제1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가 운영되었

1) <http://www.mediact.org>

2) 미디어액트 홈페이지와 같다.

3) 2017영1(병합)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에서 위 사업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4) 2017영1(병합)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인용

다. 현재, 인디스페이스는 (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시민모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4독립영화전용관으로도 지칭된다. 2011년 부터 제1독립영화전용관을 영진위가 직영하게 되었는데, 극장 명칭은 ‘인디플러스’였으며 2016년 12월 31일 폐관하였다.

마. (사)한국독립영화협회⁵⁾

1998. 9. 18. 한국독립영화협회(2010년 당시 대표 임OO) 창립식 이후 1999. 7. 23. 문체부 사단법인 등록 단체가 되었다. 연례 사업으로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독립영화제 등을 주최하고 있으며 독립영화 웹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6(공덕동 82-9) 이다.

바. (사)인디포럼작가회의⁶⁾

2005. 5. 7. 사단법인 등록 단체가 되었다. 매년 ‘인디포럼’ 비경쟁 독립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신청 당시 단체의 상임의장은 이OOO 감독이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길 11-3, 2층이 위치하고 있다.

사. (사)비상업영화기구⁷⁾

2009. 9. 24. 사단법인 등록 단체가 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오프앤프리 국제영화제’를 진행 했다. 사무국장은 김종국이였다. 연구팀장 남OO, 교육팀장에 황보OO, 기술팀장에 남OO(독립영화협의회 대표)등이 구성원이었다. 전문위원에 김OO가 참여하고 있었다.

아. (사)문화미래포럼⁸⁾

2008. 7. 14. 사단법인 등록 단체가 되었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공모 지원 신청서에는 대표자가 정OO, 실무담당으로 김OO이 기재되어 있다. 김OO은 또한 분과별

5) <http://www.kifv.org>

6) <http://www.indieforum.org>

7) 2018. 4. 9. 현재 홈페이지 없음.

8) 2018. 4. 9. 현재 홈페이지 없음.

운영위원이었다.

자. (사)시민영상문화기구⁹⁾

2010. 1. 6.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공보 지원 신청서에는 단체의 대표자로 장OO, 실무담당으로 김OO이 기재되어 있었다. 단체 정관의 성립자 10명 낱인부에 최OO가 기재되어 있다.

차.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회¹⁰⁾

2009. 11. 13 사단법인 등록단체가 되었다. 1차 공모 참여때는 대표자가 이OO 실무담당자가 김OO이었고, 2차 공모 참여때는 대표자가 최OO, 실무담당자는 김OO이었다. 자문위원으로 장OO, 변OO 등이 참여했다.

2. 조사내용

가. MB 블랙리스트 등 검토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실 2008. 8. 27.)

위 문서에는 소위 '좌파 문화권력 실태'를 언급하며, 대안 단체인 미래문화포럼¹¹⁾(대표:정OO 교수)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좌파 문화권력 실태'의 예로 '민예총, 문화연대,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을 언급'하고 '제도권 내에 좌파세력화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 좌파실무자들에 대한 청산과 좌파 자금줄을 차단('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 근절) 등이 기술되어 있다. 추진체계에서 청와대가 총괄기획하고 문화부(현 문체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역할,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

9) 2018. 4. 9. 현재 홈페이지 없음.

10) 2018. 4. 9. 현재 홈페이지 없음.

11) 문화미래포럼의 오기. 공동대표 명단에 정OO(한양대 전 교수)이 있다.

모 예산지원. 등이 기술되어 있다.

OOO(당시 영진위 비서실 직원)는 “2009년 9월 조희문 위원장 취임 직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영진위 정원도 기존 110명에서 99명으로 축소되고, 정부 정책은 2012년까지 자연감축·희망퇴직 방식으로 현원을 정원에 맞추라는 것이었으나, 당시 영진위는 10인을 형식적으로는 ‘희망퇴직’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였고, 조희문 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지원TF’¹²⁾를 만들어 7인의 직원을 여기로 발령내었는데, 이 TF는 공식적인 업무도 별도의 사무실도 배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의 대기발령이었고, 7인의 발령에 대해 공식적인 이유 설명도 없었다” 라고 하였다(진술서 2017. 12. 7.).

(2)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문화미래포럼 2008. 9.)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10. 4. 8. 문화계 뉴라이트 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이 2008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였는데, 문건에는 ‘좌파 세력’ 운운 하며 ‘영화제 등 각종 기관 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이념 편향 인력에 대한 청산과 활동 정상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좌파 세력의 청산과 영화계 정상화 문제

-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영화계는 좌파 문화운동의 근거지 및 주도적 행동대 역할
-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등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영화제를 비롯하여 서울영상위원회, 경기 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등 각종 단체의 상당수는 좌파영화인들이 주도하고 있음
- 그동안 이들 단체 및 소속 영화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체결 반대, 광주병 소고기수입반대 등 좌파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변혁시키기 위한 활동 계속

개선과제

-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독립계 진흥기구로 개편 가정 영화진흥원으로 개편
- 영화제 등 각종 기관 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이념 편향의 인력에 대한 청산과 활동 정상화(기능은 살리되 인력 청산은 분명하게)
- 대규모 기금 조성을 통한 투자지원 확보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문화미래포럼 2008. 7.

12) 2017 직영3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관련.

이 문건에 대하여 2017. 10. 19.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은 김종국(영진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질의 했으나 김종국은 보도되기 이전에는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전재수 위원** 문화미래포럼의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회원입니다.
- **전재수 위원** 회원이면서 감사는 아니고.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그럼요.
- **전재수 위원** 그러면 이 문건 못 봤습니까, 회원인데?
그때 회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아마도 문학부터 연극, 영화……
- **전재수 위원** 21명이구요. 21명 중에 부위원장이 회원이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위원장이 감사로 추천이 되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못 보셨다는 거지요?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예.
- **전재수 위원** 언론을 통해서 언제 봤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언론에서 좀 이슈가 돼 가지고요……
- **전재수 위원** 아니, 그 당시라 하면 2008년 9월경? 아니, 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문건을 봤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그게 아마 그 당시에……
- **전재수 위원** 이 문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영화제 등 각종 기관, 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이념 편향의 인력에 대한 청산, 인적 청산, 영화계는 좌파 소굴이다, 인적 청산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 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그 당시에 그게 좀 언론에 이슈가 됐었던 걸로 그렇게……

2017. 10. 19. 문광위 국정감사 회의록

(3)¹³ 2008. 10. 4.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당시 영진위원장 강한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영화정책을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독점했다”, “얼치기 진보주의자, 하류 진보가 한국영화를 망쳤다”라고 하였다 (시사IN, 2008. 10. 27.).

13) (3) 단락 2017영1(영11, 영19병합)_조사결과보고서(안)_독립영화전용관 지원배제사건 중 관련 서술 인용

뒤이어 같은 해 10. 17.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가 그동안 영화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평균 40여 개 단체에 약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했는데 지원단체 별로 지원금 내역을 고려하면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등 소수단체에 집중되어 지원금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의 대부분도 이른바 독립영화계열 단체 또는 미디어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들에게 전부 몰려 있는 상태”라고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진위원장과 위원을 특정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예산을 지원한 단체 대부분이 FTA협상 반대 시위, 광우병 대책 촛불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한국영화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원 사업이 실제로는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조직들의 후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09. 1. 국회 문광위의 ‘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영진위 관련 “위원장의 부산영화제 참석 시 특정이념 관련 부적절한 발언문제 지적”, “공모사업 등을 통해 특정단체에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단체지원사업이 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제작가협회, 영화인협회의 등 소수단체에 지원금의 40%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체지원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등이 기재되었다.

(4)¹⁴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통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결국 들통난 영진위의 저열한 ‘길들이기’¹⁵/ 2009. 10. 23.)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에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2009년 전북독립영화제, 인디포럼2009,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등 일부 단체들의 선정사업은 실무평가에서 ‘지원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들은 예비심사에서 77~81점을 받아 결정심사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최종 결과에서는 탈락했다. 이에 반해 결정심사에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몇몇 사업들이

14) (4) 단락 2017영1(영11, 영19병합)_조사결과보고서(안)_독립영화전용관 지원배제사건 중 관련 서술 인용

15) 인권운동사랑방 보도자료 제목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며 '최종심사를 하는 시기에 영진위의 '영화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문화조정팀장이 인권사랑운동방으로 전화를 걸어와 촛불집회 참석 여부, 광우병대책위원회 소속 여부 등을 질문하며 재차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진위는 2018. 4. 4. 기자회견¹⁶⁾을 통해 2009~2010년 위 단체들이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목록에 있음을 밝혔다.

(5) 국정원 개혁위 'MB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자료¹⁷⁾' (2017. 9. 11.)

위 보도자료에는 '원세훈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을 ▶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 左성향 양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名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 하였음.'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표-3] MB 블랙리스트 82명

구분	강성성향(69명)	온건성향(13명)
문화계	이외수, 김명근,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배우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영화감독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및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모 등(총 52명)	
방송인	김미화, 노정열, 오종록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철수, 황현희
가수	윤도현, 신해철,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위 문서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모 등'에 미디어액트 최은정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독립영화협회 관련하여 황철민 이사장, 배급팀장 김화범, 사무국장 원승환, 사무차장 이지연,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함주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6) 영화진흥위원회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2018. 4. 4.

17) 보도자료 제목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발표.

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검토

(1) 미디어액트

(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위 문서 6쪽에 ‘미디어액트’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다. 2013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사업과 2014년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기록하고 ‘조치결과’ 2015년도는 배제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미디어액트 등재 문서 문서 3종

예술정책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3종의 문서(①‘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 2013년~2015년’, 동일 문서 제목에 내용이 추가된 ②‘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 2013년~2015년’, ③‘민간단체 ’15년 예산 지원결정 경위 보고’)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청와대 2014. 5.)’에서 언급된 단체들의 지원 배제 목록을 추적, 모니터링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며 미디어액트는 위 문서 3종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

③‘민간단체 ’15년 예산 지원결정 경위 보고’에는 2015년의 경우는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 22개 센터가 선정되었는데, 그중 미디어액트가 포함되어 (선정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 1천 9백만원이 지원되었다고 경위보고를 하고 있다.

(다)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특검의 ‘수사보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실무자가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첨부 (2017. 1. 3.)’에서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은 전임자 오OO이 C에게 인수인계한 서류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데, 위 문서에도 ‘미디어액트’가 기록되어 있다.

(라)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16.2. 1현재¹⁸⁾ 문서

위 문서 14쪽 기존관리리스트에 ‘미디어엑트’가 등재되어 있다.

(2)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¹⁹⁾, 청와대 2013. 3.**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에 독립영화협회(회장 임창재)가 등재되어 있으며 관련 동향으로 ‘영화정책 5년 평가’ 포럼(1. 22.)을 개최하는 등 소통 부재·제재 강화 등 정부의 영화정책 비판활동을 강화라며 조직 단합을 모색’이라고 동향 보고가 기재되어 있다.

(나)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²⁰⁾ 2017. 10. 30.

2014년 3월 19일 국정원은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BH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한국독립영화협회(회장 임창재)가 블랙리스트 단체로 등재되어 있다.

다. 2009, 2010년 공모 심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1) 미디어엑트가 공모에 참여하게 된 이유 (신청인 김명준 진술조서 2017. 11. 3.)**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미디어엑트(영상미디어센터)를 흔들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2009년 4월에는 미디어엑트 개관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감사는 1주일 정도 진행되었고, (...중략...)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단 한건의 비리도 없었고, 어떤 지적사항도 없어서 경위서 한통도 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

18) 청와대 김OO행정관이 2014년 경 부터 김OO 국장에게 전해준 리스트로 오OO이 김국장으로부터 전달 받아 작성해왔던 블랙리스트(특검 오OO 진술조서 2016. 12. 26. 10면, 증거목록 4731면.)이다. 이 문서 목록 ‘기존리스트-149명’은 오OO이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은 리스트 라며 2014년 4,5월 경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관리하라고 김OO 사무관에게 전달한 바 있는 목록의 리스트이다 (김OO 진술조서 2018. 3. 8.).

19) 우리 위원회가 2017. 10. 10.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입수한 청와대 문서. 국정원은 2018.1. 2. 우리 위원회 회신문서를 통하여 위 문서는 2013. 3. 15. 경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동시에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교문수석비서관에 배포된 문서라고 확인하였다.

20) 2017. 10. 30. 국정원개혁위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등 다수의 문서 2013. 8.16 와 등재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들을 분석 발표하였다.

습니다. 그러나 모단체인 한독협은 예산처리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고, 이걸 근거로 한독협이 미디어엑트를 위탁받는 것은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엑트는 한독협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엑트 운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운영한 것으로서 영진위로 운영위 추천권을 갖고 운영위원으로 직원이 직접 들어와서 지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적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진위는 공모를 통한 위탁을 결정했고, 당시 다른 기관(독립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도 공모를 결정했었는데 많은 영화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위탁단체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엑트에서는 영진위가 그렇게 무리하게 할 명분이나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더불어 합리적인 공모과정이라면 기존 운영진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논의 끝에 공모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경에 기존 운영진들을 주축으로 독립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법인으로 출범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 공모 심사의 불공정성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조사 신청서 2017. 9. 21.)

‘영진위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선정을 공모로 전환했고, 2009년 12월 공모 심사(이하 12월 공모) 결과 “적정단체 없음으로 재공모”하여 2010년 1월 공모 심사 결과(이하 1월 공모) “(사)시민영상문화기구”가 선정되었다.’

‘12월 공모 심사 1위였던 미디어엑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사업단)는 1월 공모 심사에서 2위로 밀려났고 12월 신청 5개 단체 중 5위였던 (사)문화미래포럼과 (사)비상업영화기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유사한 계획을 제출한 (사)시민영상문화기구가 1월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사업계획서의 경우 일부 내용 순서가 바뀌거나 그림이 추가되는 수준이었으며, 주요한 인적 구성 역시 유사했고, 무엇보다 12월 공모 신청 단체인 (사)문화미래포럼 법인설립자 인명부에 당시 위원장이던 조희문 인하대 교수가 포함돼 있었으며, 영화 분과 회원 명단에 올라 있던 000 호남대 교수는 1월 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장이었다.’

‘미디어엑트는 8년 동안 센터 이용자들에게는 물론,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핵심 정책 파트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공모 심사로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로 사업 운영자를 선정함에 따

라, 독립영화 및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통한 사회 균형적 문화 발전을 저해 했다'고 주장했다.

라. 공모 심사위원 구성에 대하여

'문화균형화전략'에도 나타난 '문화미래포럼(상임대표 정OO, 공동대표 정OO)발기인 명단에 조희문 영진위원장을 비롯하여 OOO, 김세훈(영진위원장 2015. 1.~2017. 5.), 김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는 2010년 1월 2차 공모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김OO은 12월 1차 공모에 (사)문화미래포럼과 (사)비상업영화기구 컨소시엄 신청서에 실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1월 2차 공모에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실무자로 기재 되어 있다.

정OO은 영진위 부위원장으로 1월 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가 속한 한국영화감독협회는 뉴라이트문화예술연합의 회원 단체로, 그는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였으며 2008. 1. 26. '극소수 영화인이 영화진흥 과정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영화진흥위원회 해체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2008. 5. 19. 뉴라이트전국연합(의장 김OO)은 뉴라이트 문화예술정책센터(대표 정OO)를 발족 한다고 밝혔는데, 이 단체에는 12월 1차 공모 심사위원장이었던 김OO가 참여하고 있고 김OO도 참여하고 있다.

1월 2차 공모 심사위원이었던 OOO은 뉴라이트문화예술연합 대구지부 공동대표(2008. 11. 20.)였다.

마. 2009. 12. 1차 공모 심사 및 2010. 1. 2차 공모 심사 결과

(1) 2009. 12. 1차 공모 심사 결과

(가) 독립영화전용관 심사표

접수 번호	평가 업체	심사위원 점수					총점	평균	순위
		김OO	전OO	노OO	정OO	장OO			
1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	57	62	49	57	48	264	52.8	3
2	인디포럼작가회의	67	68	52	60	68	315	63	1
3	한국예술전용관협회	44	54	55	46	36	235	47	4
4	독립영화협회의	52	63	58	58	77	308	61.6	2

(나) 영상미디어센터 심사표

접수 번호	평가 업체	심사위원 점수					총점	평균	순위
		김OO	전OO	노OO	정OO	장OO			
1	한국영화감독협회	54	53	62	48	67	284	56.8	4
2	미디어영상교육진흥센터	54	68	63	58	64	307	61.4	1
3	문화미래포럼/ 비상업영화기구	56	59	47	36	44	242	48.4	5
4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46	73	68	55	65	307	61.4	1
5	건전미디어시민연대	57	59	63	50	56	285	57	3

70점 미달로 “선정단체 없음”

(2) 2010년 1월 2차 공모 심사

(가) 독립영화전용관 심사표

접수 번호	평가 업체	심사위원 점수					총점	평균	순위
		정OO	OOO	OOO	김OO	이OO			
1	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	79	75	80	70	71	375	75	1
2	인디포럼작가회의	76	55	66	78	64	339	67.8	4
3	청소년직업체험센터	74	59	77	68	64	342	68.4	3
4	독립영화협회의	70	71	71	82	75	369	73.8	2

(나) 최종단체 선정

선정단체	최종심사 평가내용	지원조건 및 권고사항	선정여부
(사)한국다양성 발전협의회	독립영화제작 및 상영의 활성화라는 본사업의 취지가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었다고 본다. 국내제작독립영화의 각 장르별 상영회가 본 사업의 전용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루트의 배급을 통해 활발하게 상영되도록 기획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제3세계 프랑스 등의 독립영화도 전용관을 통해 상영할 계획이 있으며, 특히 우리 독립영화의 해외상영에 관한 이벤트도 개최할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은 바람직한 사업기획이라 평가된다	다양한 독립영화의 소개와 우리 독립영화의 해외교류라는 좋은 컨셉에도 불구하고 신생업체로서의 추진사업 및 실적의 미흡으로 운영이 기획서대로 될지 염려된다. 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다	선정함

(다) 영상미디어센터 심사표

접수 번호	평가 업체	심사위원 점수					총점	평균	순위
		정00	000	000	김00	이00			
1	한국영화감독협회	81	67	68	74	64	354	70.8	3
2	건전미디어연대	78	51	76	75	51	331	66.2	4
3	영상기술학회	66	71	64	69	57	327	65.4	6
4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81	73	75	79	74	382	76.4	2
5	시민영상문화기구	84	74	77	76	73	384	76.8	1
6	서울교육미디어센터	67	51	73	68	70	329	65.8	5

(라) 최종단체 선정

선정단체	최종심사 평가내용	지원조건 및 권고사항	선정여부
시민영상 문화기구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구성원의 전공분야가 매우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장비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방안이 영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첨단영상인 HD와 3D 교육까지 검토되고 있어 높이 평가된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상교육을 위한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장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선정함

(3) 2차 공모 (사)시민문화영상기구와 미디어엑트 ((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사업계획서 비교

(가) (사)시민문화영상기구 사업계획서

(사)시민문화영상기구 사업계획서는(총 46쪽 분량의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문화미래포럼과 (사)비상업영화기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거의 같다. 일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요약하면 ① 사업목표 ② 현행 미디어엑트 단점 보완 ③ 창작지원: 기자재 대여 7쪽 그림 수정 10쪽(5줄 추가 기술:) ④ 미디어 교육 중, 수입 및 지출 예상치 3쪽 분량이 추가 기술되었고 ⑤ 정책연구 발간 홍보 부분 중 한줄 추가 ⑥ 중기계획안이 추가되었다. ⑦ 사무국 구성원에 비상업영화기구의 남OO, 황보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최종심사 평가에 언급된 HD와 3D 교육사항은 사업계획서 5쪽에 기술 되어 있는데, 기술된 내용은 “차세대 3D 미디어, 홀로그램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 등 뉴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라는 두 줄 분량이다.

영상미디어센터 2차 심사회의를(2010. 1. 22.)에서 김OO의 HD와 3D 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기록이 없고 심사위원과의 문답에서도 관련된 기록이 없다.

(나) 미디어엑트((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사업계획서

미디어엑트 사업계획서는 총 91쪽 분량이며 영진위가 제시한 작성 기준에 따라 ①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부 추진계획서 ② 영상 기자재 세부 운용 계획서 ③ 일반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계획서 ④ 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⑤ 사무국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최종심사 평가에 언급된 HD와 3D 교육사항은 ▷HD촬영 특강(목표와 내용 6줄 서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활용(HD 후반 작업 관련 5줄 서술) ▷에프터 이펙트(3D 레이어 이해등 1줄 서술) ▷알면 힘이 되는 DV(HD) 기초이론 (1줄 서술) ▷ HD 후반작업 전문 오퍼레이터 (7줄 서술) ▷독립영화인재교육 영역(HD 후반작업 3줄 서술) ▷포맷별 HD 후반작업 프로세싱 (HD 5줄 서술)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영상미디어센터 2차 심사회의를(2010. 1. 22.)에서 신청인이 프리젠테이션 내용 중한 ‘계승과 혁신의 세계 변화를 주도하면서 HD 기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제작환경을 조성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영상미디어센터 2차 심사회의록 (2010. 1. 22.)

심사위원 중 000와 정00은 미디어액트((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에 대하여 ‘한독협’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회의록에 나타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000) : 한독협 협회와의 관계는?

답(신청인) : 관계정리의 시기이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000) : 새로운 조직을 원하는데 모기업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답(신청인) : 현재의 법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정00: 지금 PT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인데, 새롭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답 : 센터는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 한독협과의 차이점이 있다. 새로운 법인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을 한 새로운 조직이지만 연속성을 가져가고 싶다.

위 000 등의 질문은 ‘서울독립영화제’ 관련 감사에 관한 것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특정감사²¹⁾에서 이후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감사원 2010. 5.)를 작성하였다. 감사원은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한 보조금 정산 부적정(2007~2008년 서울독립영화제)을 지적하며 34,620,000원의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수사의뢰하였다. 2심 재판(2010노1337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 4. 28.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원 형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한국독립영화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일한 점, 이 사건 보조금은 모두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2011. 8. 11.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라)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0. 6.

영화진흥위원회는 비상임위원 이00, 오00의 요청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였다.

21) 2009년 4월 경에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결과의 요지는 ‘▷ 1차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2차 신청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유사하지만, 문화미래포럼과 시민영상기구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시민영상문화기구는 2009. 9. 5. 에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2차 공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급조된 단체가 아니다. ▷ 심사위원 000, 김00가 각각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 회원인 것은 맞지만,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등으로 심사가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 제 12부 판결(2010구합11474 사업자선정취소 소송 2010. 9. 30.)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사업자선정취소 소송을 제기 했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 문화예술인은 실제로 소수의 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000, 김00 등의 심사위원 참여는 시민영상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보기 어렵다. ▷ 조희문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심사위원을 위촉 했다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2차 공모 심사결과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심사총평에 언급한 ‘HD와 3D’ 부분은 인력 구성원의 약력등에 HD 강사 활동 등이 기재 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심사기준 및 배점과 심사기준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면, 시민영상기구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아 계획서가 수준 미달의 급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라고 하였다.

바. 조희문(영진위 위원장)에 대하여

조희문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에 개입하여 문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이후 교수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 개입 사건

위 사건을 취재한 씨네21(2010. 5. 25.)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장이던 황규덕 감독은 구성주(감독), 이미연(감독·영진위 위원), 허욱(용인대 교수), 어지연(프로듀서) 등 심사위원 4인과 함께 5월20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문 위원장이 “불공정한 외압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일정상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조재홍(감독·서강대 교수), 문관규(부산대 교수), 김석범(수원대 교수), 장민용(서경대 교수) 등 4인의 심사위원도 기자회견에 나선 심사위원들과 함께 조 위원장의 외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내용증명에 서명했다.’라고 보도 하며 허욱교수의 발언을 소개 하는데 다음과 같다. “조 위원장이 거명한, 이미 떨어뜨린 작품을 결국 두려움 속에서 다시 꺼내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실소를 금치 못할 상황도 확인했다. 한 작품은 기획서가 불과 5, 6페이지에 불과했고, 또 한 작품은 본인이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였다”면서 “선후배, 동종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영화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11. 8. 2010년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조희문을 해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한예종 교수 채용 비리 사건

2013. 3. 1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희문 등을 구속하였다. 2014. 7. 25. 한예종 교수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희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제3자 뇌물취득(김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박모 한예종 총장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여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사. 유인촌(당시 문체부 장관)의 발언 (2010. 3. 3.)

2010년 3월 3일 서울아트시네마를 방문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영진위 시네마테크 사업 공모제 논란과 관련해 면담을 가진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서울 아트시네마가 그 동안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면서 평가도 좋았고 운영상의 잘못도 없었다. 자금문제 등 여러문제가 불거졌던 미디어엑트와는 달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²²⁾

이에 대하여 미디어엑트는 ‘단 한 번도 ‘자금 문제’가 불거진 바 없으며, 지난 8년 동안 회계 운영에 있어 영진위 및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없습니다. 미디어엑트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심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발언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진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부서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10년 3월 4일 발표한 바 있다.

아. 2011년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직영 전환

(1)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시민영상문화기구) 평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안) 2010. 11. 16. 을 작성하면서 운영방식(공모)에 따른 운영주체의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영상 미디어 사업 효율화 및 운영개선 요구 증대에 따른 직영체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010. 11. 18.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수행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평균 79점을 받아 사업은 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 했다.

그러나 2011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안)에 기재된 2009년과 2010년 사업내용 비교표를 보면 2010년의 경우 9월 기준이지만 사업 수입 중 ‘수강료 수입’과 ‘장비대여’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OO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은 2010년도 (사)시민영상문화기구,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가 운영한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사업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좋을 리가 없었죠, 현장에서 작품이 안 올라오니 사업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차진술조서 2018. 2. 27.). OOO 당시 영진위 실무자는 “수익도 부진하고 그래서 국회 등 외부적인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2회 진술조서 2018. 3. 23.), 강OO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또한 선정 된 단체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면 역량이 떨어지는 단체였던 것은 맞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22) [WE+ 이슈WHY] 영진위 공모 파행 비난 여론 들끓는 까닭은? 세계일보. 2010. 3. 6.

[2회 진술조서 2018. 3. 28.]

가. 2009년 사업추진 예산('09년 한독협 위탁시)

사업 수입		지출내역	
구분	예산(단위,천원)	구분	예산(단위,천원)
영진위 지원금	814,414	급여	412,938
수강료수입	178,402	강사료	217,154
장비대여	157,550	지급수수료	182,965
기타	27,278	감가상각비	158,176
		인쇄비	52,743
		회의비	52,112
		기타	154,230
소계	1,177,644		1,230,318

나. 2010년 사업추진 예산('10년 시민영상문화기구위탁, 9월말기준현재 진행중)

사업 수입		지출내역	
구분	예산(단위,천원)	구분	예산(단위,천원)
영진위 지원금	775,000	사업비(지원금)	550,000
수강료수입	52,000	급여 등	200,000
장비대여 등	73,400	기타 지출	150,000
기타(사회적기업)	36,000		
소계	936,400		900,000

* 지출내역(인건비 지출 등)은 연말에 일괄 보고함.

2011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안) 3쪽 2010. 11. 16

(2) 2010년 독립영화전용관(시네마루) 평가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 방안 공청회(2011. 3. 8.)에서 독립영화전용관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을 이OO 영진위 산업본부장이 발표하였는데, 발표 자료에 '2010년 공모를 통해 위탁한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는 사업초기 배급사들의 배급거부에 따른 영화수급의 문제가 있어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0. 11. 사업수행 평가 시에도 평가위원들이 전용관의 역할이 다양성임을 강조하였고, 한정된 배급구조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사업초기 불안정한 사업구조는 전용관 직원들의 잦은 변동으로 전문성 결여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었으나 배급지원 등을 통해 독립영화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는 등 사업운영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한정적인 배급구조로는 다양한 영화 상영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직영 추진 배경 이유로 ‘공모 선정사업자의 위탁운영기간에 지속적으로 일부 독립영화계의 작품배급 거부 등으로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운영의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영상사업 효율화, 전문화 및 대 국민 서비스 강화 등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직영체제로 개선 필요’라고 밝혔다.

자. 영화진흥위원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2018. 4. 4.)

영화진흥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09년 당시 각종 지원사업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실상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원작(자)을 결정하는 편법 심사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에 따라 실행된 조치라는 분석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영화진흥위원회는 ‘2009년 단체 지원사업’에서 촛불시위 참여단체 배제 건을 시작으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사업의 공모제 전환과 사업자 선정 과정 부당 개입,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다양성영화 배급지원사업’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등의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다이빙벨>을 상영한 여러 예술영화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나아가 작품 상영의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영화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절반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심사과정에 개입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심사위원 풀 구성과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및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 56건을 공개하였는데, 2009~2010년에 나타난 사례에 ‘미디어엑트’와 ‘인디포럼 작가회의’, ‘한국 독립영화협회’ 등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표-4] 2009~2016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및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 56건 중 9건 사례

번호	구분	사업 연도	지원사업명	배제 대상	배제 내역	배제 배경
1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인디포럼 지원 배제	
2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서울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들을 보조
3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지원 배제	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법 시위 주최·주도
4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전북독립영화제 지원 배제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09)
5	단체 배제	2010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인디포럼 지원 배제	
6	단체 배제	2010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지원	한국독립영화협회 및 미디어액트	지정위탁을 공모에 따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	
7	단체 배제	2010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지원	(사)한국영상미디어 교육협회 (*독협의 신청 자격 상실에 따라 신규 설립)	심사에서 70점 미만으로 탈락, 재공모 심사에서 2위로 탈락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08)에 따른 '8천만원
8	단체 배제	2010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지정위탁을 공모에 따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	이상 보조기간 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실태' 감사('09)
9	단체 배제	2010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독협의 신청 자격 상실에 따라 독립 영화계 대표로 신청)	심사에서 70점 미만(63점/순위는 1위)으로 탈락, 재공모 심사에서 4위로 탈락	

차. 관련자 진술 검토

(1) 정OO 진술청취 (2018. 4. 16.)

12월 1차 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팀장 정OO는 '당시, 영진위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오던 '진보' 단체를 배제 하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분 중 한명이 계속 주도 하려 했었고 거절이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단체들이 준비한 계획안이 너무 형편없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압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압력’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시 국회에서 연락도 많이 왔지만 심사 보안 서약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전OO(12월 1차 공모 심사위원/진술청취 2018. 4. 16.)은 당시 정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 김OO 진술청취 (2018. 4. 12.)

김OO는 12월 공모에 신청했던 (사)비상업영화기구 회원으로 1월 2차 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바 있는데, 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 조희문(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심사위원 참여 의사를 물으며 “기존 단체들이 오래 해왔으니 보다 새로운 단체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조희문이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심사는 공정하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며 심사에 참여한다고 의사를 전했고 이후 OOO(영진위 실무자)이 안내 전화를 해왔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보수단체쪽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흐름이 있었고, 심사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편향된 듯 하였는데, 심사 당시 소수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어서 문제제기를 크게 하지는 못했고, 기자들 사이에서 한양대 출신 5인방²³⁾이 들이 단체 선정을 주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3명(정OO, OOO, 김OO)이었으며 심사의 공공성 문제제기도 나왔지만 심사결과에 대해 자신도 승복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그냥 욕을 먹기로 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김OO (2회 진술조서 2018. 2. 27.)

김OO은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제가 결재 라인에 있었지만 심사폴도 없었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이었고, 실무 담당자들이 진행하는 것이었고, 당시 실무자들이 나와 협의를 안해서 제가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OO 국내진흥부장에게도 당시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이OO 부장이 사업담당자에게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정했던 것이라 보고한 바도 있어서 당시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등의 부분은 위원장이 저와 협의한 바가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1차 공모에서 독립영화전용관, 미디어센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미디어

23) 조희문(80)과 김OO(87) 또한 한양대 학부를 졸업하고 조희문은 중앙대에서 김OO은 동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OO, OOO, 김OO를 포함하여 기자들이 5인을 지목했던 것으로 추정됨.

트(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와 '인디포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사업 관여를 안 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심사위원 문제도 있고 정황상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1차 심사위원 선정과 2차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이 통상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절차에 의문을 갖은 것은 아니었는데, 선정된 심사위원들 면면을 보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2010년 2월 1일 오전 11시 30분 미디어센터 5층 대강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심사에 관하여 ‘이번 영진위의 선정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던 사실과 관해 조희문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위원장 생각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4) 000 (2회 진술조서 2018. 3. 23.)

000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특정단체에 위탁사업이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공모제로 전환하여 시네마루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의 공모 전환은 기존의 ‘지정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진위의 공식 입장인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희문 전 위원장이 정부 시책에 따라 반정부영화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키려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실무자로서는 큰 그림을 알 수 없었지만,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였다.

(5) 000 (녹취록 2017. 12. 8.)

당시 영진위 기획팀 소속 직원 000은 “조희문 위원장 부임 후에 2010년에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 민간위탁을 통해서 10년 동안 운영했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와 독립영화전용관 등등의 공모사업 전환 시도가 2010년 초에 있었고요. 2010년에 기관장이 어쨌든 부적절하게 문화권력 균형화전략과 문화미래포럼의 인사들과의 교감 하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일종의 좌파 영화계 청산을 위해서 일부 전환 시도를 했던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미디어액트 사업과 전용관 사업인데, 그렇게 시도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담당

하고 있던 건 당연히 국회 업무다 보니 이 실행 과정들에 대한 세세한 사안들을 국회의 요구 자료들이 오고,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한 답변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답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회와 알려내지 못한 실무자로서의 죄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000 (000 진술서 2017. 12. 7.)

000 (2009. 11.경부터 당시 영진위 위원장 비서실 근무)는 진술서에서 ‘▷ 당시 지정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 시네마테크전용관(‘서울아트시네마’)의 운영을 공모를 통해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계획을 2009년 11월 확정하고, 1년 단위의 위탁운영기간 종료가 곧 다가온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에 대해 짧은 기간의 공고, 지원접수, 심사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두 가지 공모심사는 모두 ‘해당자 없음’으로 결론나고, 이듬해 2010년 초 다시 위탁운영자 선정 공모에 들어가서 각각 수탁 단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정된 수탁단체들은 각 해당사업을 위해 급속하게 만들어진 단체였고,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전문성과 역량,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1년 동안의 위탁운영 후,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 당시 일반 영화계와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방식 변경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 문화정책에 대해 명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영화계, 특히 독립영화 창작인들을 공적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조희문 위원장의 실무진두지휘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심증으로는 반정부영화인 말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지정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7) 강00 (2회 진술조서 2018. 3. 28.)

당시 최문순, 조영택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하여 000과 협의하며 국회 답변 자료를 작성했던 강00는 “그때 당시 굉장히 시끄러워서 자연스럽게 않았다는 생각은 있었고, 당시는 큰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당시 공모제로의 전환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었고, 지

금에서 보면 특정 단체를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조희문 위원장의 의지로 그랬던 것인지 다른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한편 박OO(영상콘텐츠과 과장/ 진술조서 2018. 3. 20.)은 “심사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당시나 지금이나 자신은 뭐라 말 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

제4절 |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1)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들의 다수는 심사 과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합법성을 갖고 있으나 배제리스트를 공유하여 연락·회유·압력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제가 실행되었다.

2009년,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심사는 ‘심사 과정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특정 단체를 배제시킨 MB정부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으로 인정되며 당시 공모 심사는 공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 ① 당시 1차 심사위원 정OO는 심사 관련하여 ‘진보 단체 배제 요청이 있었고’, ‘압력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차 심사위원 김OO도 조희문으로부터 ‘특정 단체 배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여 ‘특정 단체’ 배제에 관한 정황과 실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
- ② 2008년 8월 경 작성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문화균형화전략’ 실행이 있었으며 2017년 9월 국정원 개혁위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조사 발표를 통하여 문화예술계 배제 계획과 실행 행위가 추가적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에 1차와 2차에 모두 지원 했었던 ‘(사)인디포럼 작가회의’의 비경쟁 독립영화제 ‘인디포럼’에 대한 지원 배제가 2009~2010년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는 점.
- ③ 영진위의 당시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관련 직원들의 진술에서 당시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점.

- ④ 2차 공모 심사위원이었던 정OO, OOO, OOO 등은 뉴라이트 단체 관련 인사로 각종 자료에서 확인되며 또한 공모 심사 접수에서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회와 (사)시민영상문화기구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미디어엑트((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사업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패턴이 확인되는 점.
- ⑤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작성된 MB 블랙리스트 명단 82명중에는 미디어엑트 최은정 연구원, 한국독립영화협회 관련하여 황철민 이사장, 배급팀장 김화범, 사무국장 원승환, 사무차장 이지연,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함주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이익이 예견되고 있었다는 점.
- ⑥ 2010년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회의회이 운영한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와 (사)시민영상문화기구가 운영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평가에 관하여 성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평가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다수의 당시 영진위 직원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당시 국회 대응 업무를 진행했던 강OO는 ‘사후적으로 보면 역량이 떨어지는 단체 였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운영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2011년 영진위가 직영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 ⑦ 영진위가 2018년 4월 4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09)으로 인디포럼 작가회의의 ‘인디포럼’을 지원 배제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08)에 따른 ‘8천만원 이상 보조민간 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실태’ 감사(‘09)로 인하여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심사에서 미디어엑트와 (사)인디포럼작가회의를 배제 했다고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미디어엑트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의 블랙리스트 등재

미디어엑트는 6종의 블랙리스트 문서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종의 블랙리스트 문서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① 미디어엑트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서 및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 2013년~2015년’, 동일 문서 제목에 내용이 추가된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 2013년~2015년’, ▷‘민간단체 ’15년 예산 지원결정 경위 보고’ 문서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문제부 관련 단체들의 지원 배제 목록을 추적, 모니터링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며 ▷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 예술

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 16.2. 1현재’ 문서 등 총 6종의 블랙리스트 문서 등재 사실이 확인되었다.

- ② 한국독립영화협회는 ▷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 국정원의 ▷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BH 보고서 등 총 2종의 블랙리스트 문서 등재 사실이 확인 되었다.

2. 피해사실

가. 2009년 2010년에 있었던 미디어엑트는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심사에서 (사)인디포럼 작가회의는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심사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미디어엑트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자 및 단체가 블랙리스트에 등재 되어 단체 및 구성원들의 문화 예술 활동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조희문, 김OO, 최OO, 정OO, OOO, OOO 등 당시 심사와 관련된 이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0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80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7(2017영12 병합)[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사건의 신청취지

1) 2017영7사건의 신청취지

이 사건 신청인 김선은 영화 <자가당착>이 2015. 1.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서 이 영화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면제추천이 취소되어 상영 검열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였다.

2) 2017영12사건의 신청취지

이 사건 신청인 원승환은 2015. 1. 영화진흥위원회는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개정시도가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로 인해 2015년도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제가 보류되는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 1.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기획한 ‘으랏차차 독립영화’의 상영작 중 상영등급 미분류 영화인 <자가당착>, <그림자들의 섬>, <밀양아리랑>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에 대해 취소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와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에 부응하여 <자가당착> 등 이른바 ‘문제영화’들의 상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임이 확인이 된다.
- 2)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영화’들이 상영등급 분류 이전에 각종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위임 권한을 벗어나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시도하였는데 이는 특정한 견해·이념 등을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축소하려 한 위헌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시도 과정에서 2015.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 등이 보류되는 등 실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이 된다.

붙임 :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제도 개정을 통한 문제영화 상영·방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 [사 건]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병합)2017영7 영화 <자가당착> 검열·배제 및 상영방해 사건
 2017영12 영진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개정 사건
 [신청인] 2017영7에 대해 김선(영화 <자가당착> 연출)
 2017영12에 대해 원승환(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사건의 취지

가. 2017영7 사건의 신청취지

이 사건 신청인 김선은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이라 함)>이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아 실질적 상영금지를 당하였고, 2015. 1.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서 이 영화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면제추천이 취소되어 상영 검열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였다.

나. 2017직영12 사건의 신청취지

이 사건 신청인 원승환은 2015. 1. 영화진흥위원회는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기 면제추천 규정 신청자들에게 일괄적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로 인해 2015년도 한국영화 아카데미 여화제가 지연개최 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요구하면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 ① 2017. 12. 1. 제17차 전원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호에 따라 2017영7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② 2018. 1. 5. 제21차 전원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호에 따라 2017영12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③ 위 같은 전원위원회는 2017영7 및 2017영12 사건은 조사범위, 대상 등이 일치하므로 병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병합 결정하였다(병합 사건명 : 영화상영등급분

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을 규명과제로 정하였다. ① 영화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통한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의 경위 ②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등 영화제 및 상영회에 대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승인 취소 관련 검열 배제 의혹, ③ 이와 같은 검열 및 배제 실행을 위한 영화등급분류 면제 추천 개정 시도의 경위, ④ 이와 관련한 문체부 등의 관여 등을 규명과제로 정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작성)자	입수일	비고
1	영진위 주요현안 경과 보고 (2015. 2. 13.)	영화진흥위원회 (OOO)	2017. 9. 18.	
2	(대외비)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관련 개정 경과보고	위 같음	2017. 9. 18.	
3	법률의견 송부	법무법인 광장	2017. 9. 18.	
4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서 (2015. 1. 12.)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 위한시민모임	생략	
5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15-5호 취소통보(2015. 1. 19.)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6	독립영화 쇼케이스100회 등 2015. 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취소 및 재발급 관련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7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2012. 10. 29.)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연번	서명	진술(작성)자	입수일	비고
8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 (문영2-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생략	
9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소송결과보고(문영3-1, 2014. 7. 17.)	위 같음	생략	
10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관련 보고(문영3-2, 2015. 7. 29.)	위 같음	생략	
11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문영3-3, 2015. 9. 8.)	위 같음	생략	
12	(대외주의)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 관련 검토(문영3-4)	위 같음	생략	
13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	국가정보원	2018. 1. 19.	
14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의 진술조서(2017. 1. 3.)	서울중앙지법사건 2017고합102 증거서류	생략	
15	문체부 이OO 사무관의 2회 진술조서 (2017. 1. 5.)	위 같음	생략	
1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조서(2017. 1. 6.)	위 같음	생략	
17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신OO의 진술조서(2017. 1. 7.)	위 같음	생략	
18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윤OO 사무관의 진술조서(2017. 2. 1.)	위 같음	생략	
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이OO PC에서 발견된 '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관련 검토' 문건 관련 보고(2017. 2. 6.)	위 같음	생략	
20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안(2009. 1. 20.) 등 관련규정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21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 관한 규정(2012. 10. 29.)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22	2015년 제6차 위원회 임시회의 안건	영화진흥위원회	2018. 5. 11.	
23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영진위 입장(2015. 3. 2.)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영진위 웹페이지 제공
24	(언론보도) 검열논란도 막을 수 없었던 '자가당착' 5년만에 상영(2015. 3. 6.)	오마이뉴스	생략	
25	표현의 자유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2015. 2. 13.)	부산독립영화협회	생략	
26	(언론보도)BIFF 상영작 검열하겠다는 영진위(2015. 1. 29.)	국제신문	생략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진술조서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한다. 아래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일부[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진술인	관계	제목
1	문OO	2015. 3.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서(2017. 11. 10.)
2	OOO	2015. 정책연구부장 대리	진술조서(2017. 12. 7.)
3	문OO	위 같음	진술조서(2018. 1. 29.)
4	OOO	2015. 7. 영진위 유통지원팀	진술조서(2018. 3. 2.)
5	원승환	신청인	진술조서(2018. 3. 26.)
6	김병선(김선)	신청인(영화 <자가당착> 연출)	진술조서(2018. 3. 27.)

제3절 | 조사 내용

1. 영화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 ① 현행 법률 1443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2016. 12. 20. 일부 개정, 2017. 6. 21. 일부 개정) 제29조(상영등급분류)의 ①항은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이 각 호에 대해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제29조 ②항은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 상영 영화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 ② 2017. 9. 18. 영화진흥위 현 노조위원장 000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영진위 주요현안 경과 보고」¹⁾ 중 참고자료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 도입 배경」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1997. 4. 10. 영화진흥법 제1차 개정에서 ‘상영등급제’가 도입되었는데, 영화학회, 평론가협회의 영화진흥법 세미나에서 ‘소형, 단편영화,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 심의 제외 방안이 제출되고 1998. 소형, 단편영화에 대한 심의면제가 실시되었다. 1996. 부산국제영화제, 1997.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97.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등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가 등장하면서 “영화제 상영 프로그램 확정 후 작품 등급 심의까지 행정처리 시간 부족 및 업무량 과다”, “부산, 부천 등 국제영화제 상영작품 심의에 다른 심의기관, 영화제 개최기관의 행정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문제” 등이 대두하면서 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6. 2. 6.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사전심사가 생략된 자동발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1999. 6. 14.에 제정이 되고 2012. 10. 29.에 개정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영진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제1조)으로, 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신청서, 영화제(단체) 설립근거 서류, 영화제(단체) 연혁 및 실적개요서, 상영작품 내역서와 목록 등을 작성하여 면제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3조)²⁾. 영진위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으로는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등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위원회의 주최·주관·지원·후원 및 위탁사업”,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 및 위탁한 영화제”,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제추천을

1) 이 문서들은 2015. 2. 13. 위 000이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00 사무관에게 영진위 웹메일을 통해 송부한 것인데, 이 메일에는 “본 건 진행은 국내진흥부와 전혀 관련이 없애오니, 반드시 이00 부장님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의 「(대외주의) 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관련 검토」를 보면, “면제절차”로는 “당사자 신청→면제추천 소위원회 심의(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부서장급에서 결재”로 기재되어 있다.

결정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자동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또한 영진위는 “면제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신청사실이 허위이거나 면제추천기간 및 조건을 위배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에는 면제추천을 취소(제8조)”할 수 있다.

2. 영화등급분류 면제추천 취소와 영화 상영 방해

가. 영화 <자가당착> 관련 청와대·문체부 등의 사전검열

- ①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가 제출한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소송 결과 보고」(문영3-1, 2014. 7. 17.)에는 2014. 7. 10. 대법원의 ‘등급분류결정 취소청구 소 결과를 보고(심리불속행 기각, 제작사 승소 확정임)하고 있다.
- ② 2018. 1. 19. 국가정보원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고 열람 및 재정리한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를 보면, “문체부는 1. 21. 독립영화협회 대통령님 편휘 영화 <자가당착> 등의 상영계획을 취소토록 조치”하고 “영상물 등급 심사를 받지 않거나 일반영화상영관 상영불가 반대한 책임을 물어 김세훈 위원장 경위서 제출·담당자 징계 등을 지시”하였다고 정보보고를 하였다.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김기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5.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조서(2017. 1. 6.)에는 “이것도(영화 <자가당착>도) VIP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다이빙벨> 만큼이나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2015. 1.경 인디스페이스의 상영작 중 <자가당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신OO이 저에게 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문체부가 제출한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관련 보고」(문영3-2, 2015. 7. 29.)에는 2015. 7. 10. 곡사의 대표 김병선이 재등급분류를 신청함에 따라 최종관람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될 것으로 향후 전망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013. 6. 일본에서 ‘12세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개봉된 사실 포함).
- ⑤ 위 같은 문체부 제출의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개봉현황」(문영3-3, 2015. 9. 8.)에는 2015. 9. 10. 인디스페이스 등에서의 이 영화 개봉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디스페이스 및 아리랑시네센터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내역, 영화공간 주안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 개봉관 현황

상영일	개봉관	상영시간	비고(단위:백만원)
9월 10일(목)	인디스페이스	20:00~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13년(50)→'14년(50)
	영화공간주안(인천)	16:40, 20:30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13년(29)→'14년(31)
	아리랑시네센터(서울)	16:45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12년(150)→'13년(100) →'14년(100)
	오오극장(대구)	12:40	
9월 11일(금)	아리랑시네센터(서울)	16:35	
	영화공간주안(인천)	16:40, 20:30	
	오오극장(대구)	14:30	
9월 12일(토)	영화공간주안(인천)	16:40, 20:30	
	국도엔가람예술관(부산)	19:50	
	오오극장(대구)	10:30	
9월 13일(일)	인디스페이스	12:40	
	영화공간주안(인천)	16:40, 20:30	
	오오극장(대구)	14:40	
9월 15일(화)	영화공간주안(인천)	16:40, 20:30	
9월 16일(수)	영화공간주안(인천)	16:40, 20:30	
9월 17일(목)	인디스페이스	18:00~	

나. 영화 <자기당착>의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

이 영화의 영화상영등급 제한가 등급 결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은 [2017직영4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의 특정 영화 검열·배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영화의 배급사는 2011. 4. 영등위에 영상물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을 하고 2012. 9. 재심의 시에 이와 같은 결정이 유지되었다. 이후 이 영화 연출자는 법원에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2013. 5. 서울행정법원은 위 같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항소(기각), 상고(기각)를 행하였는데 결국 이 영화는 2014. 7. 대법원에서 영등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2015. 7. 영등위에서 재심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받을 때까지 즉, 2011. 4.~2015. 7. 4년 여 동안 ‘실질적 상영금지’ 조치

를 당하였는데, 이는 이 영화 등급분류 신청 및 소송이 진행될 당시 유력정치인(대선 후보→대통령)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불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질적으로 영등위의 ‘사전검열’ 행위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단지 동성애를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받은 <친구사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받은 <반두비> 나아가 정부에 반하는 독립영화들에 대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높게 결정하는 것들도 ‘사전검열’적 행위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2015 독립영화 으랏차차> 관련 상영방해 및 면제추천 취소

- ① [‘서울독립영화제’에서의 상영금지와의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102 증거 기록 중 이OO의 진술조서(2017. 1. 3.)에는 “‘인디스페이스’라는 독립영화전문영화관이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여기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 2.경 인디스페이스에서 기획상영전같은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자가당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려면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급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영진위의 ‘면제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 영진위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듯이 그냥 문OO 국내사업부 부장이 그냥 전격로 ‘면제추천’을 해버렸습니다.”, “‘인디스페이스’에서 행사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홍보도 하자 국정원 IO 아니면 경찰에서 이것을 스크린하여 청와대로 정보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다이빙벨> 문제로 인디스페이스가 영진위의 임대료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진위의 지원을 받는 인디스페이스가 왜 <자가당착>을 상영토록 했는지 따지면서 문체부에서 조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진위 문OO부장과 상의하여, 영화제 측에서 영진위에 ‘면제추천’을 신청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 뿐만 아니라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서류 미비를 사유로 ‘면제추천’을 취소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³⁾
- ② 2015. 1. 12.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서」) 행사명으로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 행사목적으로 “2014년을 빛

3) 이 같은 이OO의 진술조서에는 “이전에는 ‘면제 추천’을 이 정도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취소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낸 독립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독려한다.”, 일시는 “2015년 1월 22일(목)~27일(화)”, 장소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상영작품편수는 “3편”(김선의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 김정근의 <그림자들의 섬>, 박배일의 <밀양아리랑>, 모두 전체관람가)으로 하여 등급분류면제 추천을 신청하였다.

- ③ 2015. 1. 19. 영진위(「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15-5호 취소통보」)는 위 신청에 대하여 “귀 단체 면제추천신청서 첨부 1에 의하면 귀 단체 상영회 <으랏차차 독립영화>는 상영작품편수를 3편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면제추천을 신청하였음.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 홍보지와 면제추천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 단체의 상영회는 첨부 2, 3과 같이 총11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홍보하는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제8조(취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 ④ <으랏차차 독립영화>는 2015. 1. 22.~1. 27. 기 등급분류작품 8편으로 상영회를 개최하였다가 2015. 1. 27.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은 같은 해 3. 6.~3. 8.에 있을 <으랏차차 독립영화> 행사를 위해 위 같은 <자가당착> 등 3편의 작품에 대해 재차 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을 하였다.
- 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가 제출한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문영 2-7)」을 보면, 위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는 상영작품은 <거인>, <그림자들의 섬>, <다이빙벨>, <밀양아리랑>, <야간비행>,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자가당착>, <족구왕>, <탐욕의 제국>, <한공주> 등 11편인데 “일부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영화제 영화로 상영(13년, 14년도 개최, 면제했음)”, 등급미분류영화는 위 ①에서 기재한 3편인데 “(1안) 면제추천 취소(1. 19일 시행)”, “(2안)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상영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후 조치 추진-2015년 영진위 지원(임대료 50백만원) 중단”과 “면제 심사 강화 검토(위원장 결재로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 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같은 사건 증거기록 중 2015.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 과장의 진술조서(2015. 1. 6.)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 신OO로부터 이 영화 <자가당착>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고⁴⁾, 위 같은 문건(문영2-7)에 대하여 “2015. 2.경 독립영화전

4) 이 같은 정OO의 진술조서에는 이와 같은 상영금지 지시에 대해서 “김소영 비서관은 확실하고, 최소

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으랏차차 독립영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자가당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일반대중에게 상영되려면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급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진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영진위의 ‘면제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 영진위가 후원하는 사업일 경우 부서장이 전결로 자동 발급하는 면제 추천 규정이 있는 바, 문OO 국내진흥부 부장이 <자가당착>을 이유로 전결로 ‘면제 추천’ 처리했습니다. 신OO 행정관은 저에게 ‘장관에게 이 문제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변인 김OO국장을 통해 김종덕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김종덕 장관에게 이 행사의 성격과 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이OO를 경유하여 신OO에게 ‘나루’ 메일로 보낸 문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⑦ 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기록 중 당시 청와대 신OO 행정관의 진술조서(2017. 1. 7.)에는 “(영화 <자가당착>) 청와대 내부적으로 챙기는 영화였습니다. 국정원 아니면 경찰청 정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김상률 교문수석님께서 그 정보보고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주셔서 제가 이것을 받아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라면서 자신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자가당착> 상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는데 “문체부 측에 그런 지시를 전달하면서 보고서를 주고받아 서로 내용을 고치고 조율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위 같은 문영2-7 문건에 기재된 방안 관련) 보고는 분명히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⑧ 2015. 3.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문OO 작성의 진술서(2017. 11. 10.)에는 “더욱이 인디스페이스는 ‘2015으랏차차 독립영화(2015. 1. 22.~1. 27.)’라는 이름의 독립영화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2015. 1. 26. 영화 <자가당착>을 상영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은 이 행사가 있기 전(2015. 1.월 중순경) 유선으로 본인에게 위 독립영화제의 행사내용 등을 요청하여 본인은 위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자가당착>에 대해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 제2호에 따라 영화상영등급분류 심사면제를 추천한 바 있음을 유선으로 알려주고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주관, 주최, 지원, 후원 및 위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화상영등급분류 심사를 면제할 것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소관 부서장 전결, 김상률 수석에게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인)이 자동발급하도록 되어 있음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이OO 사무관은 위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2015. 1. 19. 영화상영등급 분류심사 면제추천에 대해 철회 조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본인은 김세훈 위원장 보고 후 서류 하자를 사유로 위 면제추천을 철회한 후 철회내용을 인디스페이스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이후 2015년 2월경 본인은 인디스페이스의 재신청에 따라 동 기획전에 대한 등급분류면제를 추천하였고 동 기획전은 당초 계획보다 1개월이 지난 후 개최된 바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⑨ 위 같은 000 제출의 「(대외비)주요현안 경과 보고」의 붙임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 의견 송부」를 살펴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기존에 등급을 부여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이후에 재등급 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에 대해, 영비법 제29조 1항 제2호에 따른 면제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즉,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영화 <자가당착>을 말한다. 그런데 위 법무법인 광장은 이에 대해 “면제추천을 승인하더라도 영화제 자체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그 상영기간도 영화제 기간으로 한정되므로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영화상영을 불허하면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영화(또는 이 사건 영화가 포함된 영화제)에 대한 면제추천 거부는 재량권의 남용, 일탈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면제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작 완료된 영화를 언제 어디서 최초로 상영할지 여부는 영화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사항이고(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를 규제할 근거도 마땅히 없습니다”, “만약 등급분류심사를 보류했다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상영한다는 이유로 영화제 추천을 거부하게 되면 사전검열의 또 다른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⑩ 위 같은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자가당착> 등이 상영된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를 확인하고 영진위에 배제지시를 할 수 있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의 스크린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체부 담당 국정원의 스크린(검열)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① 이 부분은 [2017영1(병합)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서류” 중 위 같은 이OO의 관련 진술조서(2017. 1. 3. 조사기록 쪽 ~쪽)의 기재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5. 1.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서 영화 <자가당착>이 상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정보관 또는 경찰의 스크린을 거쳐 청와대 신OO 행정관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영진위 후원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에 대하여 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취소하는 방안과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상영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후 조치로 2015년 영진위 지원(임대료 50백만원)을 중단하는 방안(「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 조사기록 쪽)을 보고하였다. 이 중 전자의 방안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결국 <자가당착>이 상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다음 지원에서 배제를 해버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의 “증거서류” 중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진술조서(2017. 1. 6.)의 기재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OO에 따르면, 영화 <자가당착> 또한 VIP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다이빙벨> 만큼이나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 작품이었다. 2015. 1.경 신OO이 정OO에게 인디스페이스의 상영작 중 <자가당착>이 면제추천된 사실에 대해 질책하였고 이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OO은 또한 김세훈 영진위원장을 질책하고 위 같은 진술조서에 기재된 방안 문건을 마련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OO을 통해 ‘내부’ 메일로 보냈다. 그런데 당시 인디스페이스 기획전에서 독립영화 11편을 상영한다고 하였는데 이중 3편에 대해서만 면제 추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면제 추천을 취소하였으나 2개월 후 상영 못한 3편에 대해 면제 추천이 이루어져 결국 이 영화는 상영되었다. 그래서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50백만원 지원 중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② 위 같은 문OO의 진술서(2017. 11. 10.)에는 “본인은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아리랑시네센터와 인디스페이스를 향후 2015년도 ‘전용관 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라는 BH(교문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이OO 사무관과 함께 위 두 전용관이 지원배제될 수 있도록 국회 지적사항(독립영화전용관의 지역 확대) 및

인디플러스 운영방식(프로그램 위탁)의 문제 등을 명분으로 하여 위 사업을 서울지역 이외 지방 소재 영화전용관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개편(안)을 이 OO 사무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업개편의 취지(문체부 지시 포함) 등을 신임 김세훈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2014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수행평가(2015. 1. 14.~1. 15.)를 실시하고 2015. 2. 11. 제2차 위원회 임시회의에 아리랑시네센터와 인디스페이스의 지정위탁 해지 등이 포함된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의결보류되었습니다(지정위탁 해지에 대한 근거부족과 수행평가결과<인디스페이스:A등급, 아리랑시네센터:C등급>와 지정위탁 해지 간 논리불충분으로 의결보류됨)”, “본인은 2015. 1. 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로부터 영화 <자가당착>에 대해 영화상영등급 분류심사 면제를 추천한 과정 및 관련 규정 등을 담은 위원장 명의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아 해당 경위서를 영상콘텐츠산업과에 메일로 제출하였고, 신임 김세훈 위원장(2014. 12. 31.) 명의로 상급기관에 경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담감, 본인 등에 대한 문체부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다는 전언까지 고려하여 보직해임을 자청(2015년 1월경)하였고 이후 김세훈 위원장은 별다른 이견 없이 본인을 2016. 3. 16. 경영지원부 일반 직원 신분으로 강등하여 인사이동 조치한 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이하의 내용은[2017영1(병합)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2018. 5. 11. 「2015년 제6차 위원회 임시회의 안건」지를 보면, 2015. 4. 29. 영진위는 임시 서면회의를 열어 위 문OO이 진술한 바 있는, 2015. 2. 11.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안) 심의·의결’ 건 및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예비심사 재심의·의결’⁵⁾건을 다루었다.

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은 찬성 6, 반대3으로 의결되었는데, “서울시는 2018년까지 충무로에 아시아대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여 고전, 독립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어 다양성영화 전용관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13년 10월 부산 이전 이후, 부산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기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부산지역의 요청이 거세지고 있”으며, “하나의 극장을 서로 다른 단체가 각각 분리위탁(프로그램/시설) 운영하고 있어, 사업추진, 소통부재, 업무능력

5) 이는 [2017직영1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관련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축소를 확정된 안건이다.

저하 등의 문제 발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의 저해 요소"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아리랑시네센터 지원금 1억원과 인디스페이스 지원금 5천만원, 총 1.5억 원을 지역독립영화전용관으로 전환”하고 “정부지원 1호 지역독립영화전용관으로 부산 지역 추진”을 의결하였다.

3. 면제추천제도 개정 시도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 면제추천제도(규정) 개정 시도

- ① 신청인 원승환(진술조서, 2018. 3. 26.)은 “어딘가에서 영진위에 <자가당착> 등과 같은 소위 문제영화 상영 방해 지시가 내려와 비교적 쉽게 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제도가 면제추천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② 위 같은 000 제출의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현안 경과 보고」 중 「(대외비)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개정 경과 보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5. 1. 22.~1. 27. 개최 예정인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는 당초 신청과 달리 8편 많은 11편이 상영 계획임을 확인하고 1. 19. 면제추천을 취소 통보하였다.
 -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은 2015. 1. 27. 같은 해 3. 6.부터 개최 예정인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에 3편의 작품에 대해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재신청하였다.
 - 영화진흥위는 2015. 1. 20.~2. 2.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 검토를 위하여 등급분류면제추천 업무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였다.
 - 2015. 2. 6. 개최 예정인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는 위원회 내부 행사로 관련규정 검토에서 결정까지의 행정기간을 고려, 행사 개최까지 시간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졸업영화제를 2015. 3. 6.~3. 8.로 연기했다.
 - 영진위 국내진흥부에서는 관련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 해명 과정 중 확정되지 않은 ‘9인 위원회 결정으로 규정개정’, ‘자동발급 규정 삭제’ 등을 언급하고, 2015. 2. 26. 개최 예정인 제4회 마리끌레르필름페스티벌은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면제추천 지연상황을 우려하여 영화제 단체들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영화제 사전검열로 논쟁이 확장되었다.
 - 2015. 2. 10. 영진위원장은 국내영화제 집행위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동발급조항 삭제가 아닌 조항 일부 개정을 설명하였으나 50개 영화제 단체는 같은 해

2. 11. 「면제 추천 규정, 개정할 이유 없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③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가 제출한 (문영3-4) 「(대외주의)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 관련 검토」를 보면, 위 면제추천제도와 관련하여 “상반기 내 개정 예정”인데, “위원장 직접 결재(부서장 위임전결 폐지)”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발급 대상에 면제 추천 받은 적이 있는 연속 3회 이상 개최영화제와 관련해서는 “영화제 조직위 또는 집행위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영화제 등으로 조건을 신설하고, 위원회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영진위 주최 및 주관으로 한정”하여 조건을 강화하고, 정부, 공공기관 영화제 및 영화 관련 대학, 교육기관 개최 영화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배경으로는 미등급분류 영화3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배경으로, 영화 <자가당착>과 관련하여 “당시 의원이었던 VIP의 사진이 부착된 마네키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의 2017. 2. 6.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이OO PC에서 발견된 ‘영화제 상영등급분류 면제 관련 검토’ 문건 관련 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에는. 당시 수사관이 이 문건에 대해 “문체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대통령을 희화한 영화 <자가당착>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개정 배경**

□ 경과

- (면제 신청)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독립영화제(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등급분류 면제신청을 해 영진위에서 부서장 위임 전결로 승인('15.1.16)
- 미등급분류 영화 : <밀양아리랑>, <그림자들의 섬>, <자가당착>
 - * 영화제 개요
 - 주최 / 주관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 개최일정 / 상영작품 : 2015.1.22.(목)~1.27(화) / 상영작품 : 11편, 총 20회

※ 영화 '자가당착(2009/김선·김국 연출)' 개요

- (내용) 경찰 마스크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쫓불집회, 웅산참사,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한 영화, 당시 의원이었던 VIP의 사진이 부착된 마네킨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
- (특이사항) 영상물등급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으나, 감독이 소송을 하여 1심에서 등급분류결정취소(대법원에서 영등위 패소, '14.7.10)

- (면제 추천 취소) 신청 서류 하자를 사유로 면제 추천 취소(1.19)
 - (사유) 면제 추천 신청 시 상영 영화편수를 3편만 기재했으나 실제 상영영화는 11편
 - (결과) 영화제 측에서 3편을 제외하고 상영
 - * 1.27일 영화제 측에서 독립영화제 개최 재신청(<자가당착>, <그림자들의 섬>, <밀양 아리랑> 3편을 3.6~3.8일까지 상영)하였으며 면제 추천했음(2월말)

□ 당시 조치 검토 사항

- 면제 심사 강화 등 영화제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개선
 -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

⑤ 000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위 같은 「(대외비)주요현안 경과 보고」를 살펴보면, “제6기 위원장(김세훈) 취임(2014. 12. 31.) 이후 추진된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개정 검토와 제5기 위원장(김의석, 2011. 3. 30.~2014. 12. 30.) 시기부터 추진된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개선안에 대한 관련 단체 등 영화계 관계자의 견수렴 및 개선안 검토 추진 시점이 부산시의 국제영화제 감사에 따른 집행위원장 사퇴요구 사태와 겹치면서”, “위원장의 영화계에 대한 대화노력 등 적극적 대응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사업 추진 배경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주요 사

안의 본질이 왜곡되어 언론 및 영화계를 통해 정치적, 선정적, 악의적으로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인데,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바, 위원회가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예를 들어 매우 부정적 자문 검토 결과가 나옴”, “관련된 3개의 현안(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개정, 독립영화전용관 및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에 대해 위원회가 영화계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동 현안과 관련된 개정 및 사업개선을 바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영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⑥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 3. 2.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행정실수가 발생하는 등 전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장이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장은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내부 행정절차 파악을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행정실수 발생 건을 포함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동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정은 지난 1999년에 제정된 것으로, 99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번 검토 또한, 규정상 행사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나 행사 주최 측에서 불과 행사 시작 며칠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적 관행, 그리고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검토하여 부장 전결로 면제추천서를 자동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행정적 실수 등이 반복되어 온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습니다.”고 해명하였다.

⑦ 그런데, 신청인 원승환(진술조서, 2018. 3. 26.)은 “2015. 1.말 면제추천 개정 관련해서, 영진위가 당분간 면제추천을 신청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관련 영화단체에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개정이 확정된 것처럼 이메일을 보냈는데, 면제추천 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원승환의 진술 시에 제출한 관련 이메일을 보면, 2015. 1. 26. filmrating@kofic.or.kr⁶⁾은 인디플

6) 이 이메일 주소는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관련 신청 등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확인이 된다.

러스에 “현재 접수된 등급분류 면제추천 건”은 “2월 5일 제1차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면제추천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고, 2015. 1. 27. 영진위 국내진흥부 000는 인디스페이스 등에게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관련 자동 면제추천 기준이 전면 심의로 변경되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자동 면제추천 불가하오니 인디플러스 정기상영 및 대관행사 진행함에 있어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없는 작품의 포함된 행사의 경우 일괄 심의로 면제추천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라고 통보하였다.

<p>----- 전달된 메일 -----</p> <p>보낸사람: '등급분류면제추천신청' <filmrating@kofic.or.kr> 날짜: 2015. 1. 26. 오후 6:24 제목: [등급분류 면제추천] 심사변동사항 알림 받는사람: '이00' < @gmail.com> 참조:</p> <p>안녕하세요 등급분류 면제추천 담당자입니다 등급분류 면제추천 심사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p> <p>1. 현재 접수된 등급분류 면제추천 건 - 2월5일 제 1차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면제추천여부가 결정됩니다</p> <p>2. 향후, 등급분류 면제추천 심사계획 - 면제추천접수는 매월 말까지 신청된 서류에 대해 그 다음달 정기위원회 회의(매월 마지막 주 화 또는 목요일)에서 면제추천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기위원회 회의로 결정된 결과는 2주 이내로 발표됩니다.</p>	<p>----- 전달된 메시지 -----</p> <p>보낸사람: 이00 < @sofo.or.kr> 날짜: 2015년 1월 27일 오후 2:43 제목: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변경 관련 받는사람: @sofo.or.kr, @www.com</p> <p>안녕하세요. 정리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000입니다.</p> <p>다름에 아니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관련 자동 면제추천 기준이 전면 심의로 변경되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자동 면제추천 불가하오니</p> <p>인디플러스 정기상영 및 대관행사 진행함에 있어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등급없는 작품의 포함된 행사의 경우 일괄 심의로 면제추천 여부를 의결하게 합니다. 위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공지발표일까지 최대 45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및 대관행사 신청 단계 후에 이 점 공지하시어 진행사항에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	--

- ⑧ 2015. 당시 정책연구부장 대리 000가 작성한 진술서(2017. 12. 7.)에는 “한편 2015년 초에는 ‘으랏차차 독립영화’라는 독립영화상영행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았으나, 갑작스레 면제추천이 취소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가당착>이 그 중 한 작품으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문체부로부터 이 작품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면제추천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의문스러운 점은, 십 수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이 행사에 <자가당착>이 포함된 사실을 정부가 어떻게 발견했냐는 것인데, 이것은 영진위 내부 직원이 ‘블랙리스트’스러운 작품 또는 영화인의 동태를 감시하고 이를 국정원, 청와대, 문체부 등 정부기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자가

당착〉 포함 상영회에 대한 등급분류면제추천 사건 이후, 등급분류면제추천 규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영화계의 강한 반발이 있자 당시 김세훈 위원장은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발뺌. 그리고 〈자가당착〉 사건 당시 담당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다양성진흥팀 000 담당자와 000 팀장, 국내진흥부 문00 부장을 각각 홍보팀, 정책연구부, 경영지원부로 전보발령하고, 그 자리에 000, 000 팀장, 000을 각각 임명(2015년 2월경) 그리고 이들은 앞서 서술된 예술영화전용관운영지원 사업을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담당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⑨ 당시 영진위의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 담당자 000(진술조서, 2018. 3. 2.)은 “(2015. 1. 〈자가당착〉 상영 이후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내진흥부가 와해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제추천제도 개정 시도가) 문제영화로 인해 벌어진 일이란 것을 그 후에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면제 추천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불순한 의도를 담은 개정배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도의 개정까지 진행되지 못한 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 외 면제추천 취소 관련

- ① 2015. 2. 13.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영화인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의 수정을 피하고 있다. 지난 1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의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면제추천을 받은 이미 받은 상황에서 행정상 실수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영예정작 총11편 중 〈자가당착〉, 〈그림자들의 섬〉, 〈밀양아리랑〉의 상영이 취소됐다.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31기 졸업영화제’는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변경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기되었다. KAFA 31기 졸업생들은 졸업영화제를 제때 열리 못한 채 지난 12일 졸업식을 맞았다”라고 주장하였다.
- ② 2015.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 위 면제추천 취소 및 영화제 연기와 관련하여 위 같은 영화진흥위원회 2015. 3. 2.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데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일시적 발급 보류 조치를 한 바로 그 시점에, 위원회 소속 부서이자,

부설 영화학교를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그 어떤 영화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보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잘못된 관행대로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고 ‘2015 KAFA 졸업영화제(위원회 주최)’의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2015.01.21.)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동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 대하여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 중인 상황인 만큼, 관련 간부들과 회의를 통해 영화제 개최 기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했던 ‘2015 KAFA 졸업영화제’의 일정을 연기할 것을 소속 부서인 한국영화아카데미(원장 유영식)에 지시하였고,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약 한 달 뒤인 2015년 3월 6일~8일로 일정을 연기하여 졸업영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공지(2015. 2. 11.)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임 위원장이 동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 원칙을 바로 잡고자 한 부분이 마치 위원회가 규정 추천요건에 따른 자동면제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상영작마다 ‘심의’를 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내부 규정 검토 진행 과정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상태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영화계 전체가 오해하고 우려하는 견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위 같은 문OO(진술조서, 2018. 1. 29.)은 2015.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가 지연된 것 또한 “내부라고 원칙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김세훈 위원장이 모든 제도(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규정 개정 등)가 정비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졸업 영화제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해외 영화제 집행위 관계자의 항의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제도의 개정 시도 이후 일련의 영화제들에 대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취소 또는 재신청의 과정들이 이어졌다. 관련하여 영진위 제출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통보)일시	영화제(행사)	취소사유	관련사실
2015. 4. 27.	제3회 유럽단편 영화제	상영작 2편 추가됨에 따라 취소 후 재신청	2015. 3. 26.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송일곤 감독과 GV 기획 중 단편영화 2편 추가
2015. 5. 2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4편 추가됨에 따라 취소 후 재신청	2015. 5. 12.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트레일러 등 상영작 모두를 면제 추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급 후 알게 됨
2015. 6. 10.	한국독립영화협회, 100회 독립영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2015. 6. 8.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메르스 감염 및 확산 예방 등의 이유로

(통보)일시	영화제(행사)	취소사유	관련사실
	쇼케이스	행사취소	행사취소
2015. 6. 18.	전북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영화제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로 인하여 행사연기	2015. 6. 18.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메르스 감염 및 확산 예방 등의 이유로 행사연기
2015. 6. 23.	101회 독립영화 쇼케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로 인해 행사 취소	2015. 6. 18.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메르스 감염 및 확산 예방 등의 이유로 행사취소
2015. 9. 1.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상영작이 2편 추가됨에 따라 취소 후 재신청, 재발급	2015. 8. 28. 면제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행사진행과정에서 상영작 2편이 추가되어 총206편 상영
2015. 9. 8.	제7회 DMZ국제다큐 영화제	상영작이 2편 추가됨에 따라 취소 후 재신청, 재발급	2015. 9. 4. 면제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행사진행과정에서 상영작 1편이 추가되고, 신청 당시 영화제 광고영상을 누락하여 모두 2편을 추가 상영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영진위의 면제추천 취소와 영화 상영 방해 및 검열

- ① 국가정보원은 문체부가 2015. 1. 21. 독립영화협회에서 <자가당착>의 상영계획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세훈 영진위원장의 경위서 제출 및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특검에서 이 영화도 VIP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신경’을 썼던 작품으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은 위 영상콘텐츠산업과장에게 이 영화의 상영 차단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물론 이 때 당시 문체비서관도 <자가당착> 영화에 대해 국가정보원 IO보고서에 담겨져 있어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당시 김상률 문체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였는데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원배제가 실행되었음을 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다.

② 2015. 1. 12. 독립영화 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은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이 영화 <자가당착>, 김정근의 <그림자들의 섬>, 박배일의 <밀양아리랑>에 대해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은 ‘영화비디오법’에 의하여 영진위가 주관, 주최, 후원하는 영화제의 상영 영화에 대해서는 영진위 정기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담당 부서장의 전결로도 ‘전결’ 처리 가능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업부서장인 국내진흥부장이 이를 관례상 면제추천 처리하였으나 위에서 말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청와대→문체부를 거쳐 하달된 ‘이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면제추천 당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3편의 영화에 대해서만 상영작으로 제출하였다는 ‘서류미비’를 하자로 이 신청을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2015. 1. 당시에는 위 3편의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고 유보(추후 별도로 상영됨)되었는데, 이는 ‘문제영화’인 <자가당착>(물론 나머지 영화들도 포함된다) 등을 상영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으로나 절차 및 규정상으로 가능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그 외, 이로 인하여 위 시민모임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7영1 독립영화전용관 지원·배제 사건]등에서 다루고 있다.).

더불어 이 때 당시 영진위가 운영 중인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 또한 이와 같은 등급분류 결정이 함께 취소됨으로써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피해를 입었다.

나. 면제추천 제도 개정 시도와 영화 상영 방해

위의 가.항의 사태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문체부의 지시를 받고 영진위가 후원하거나 주최, 주관하는 각종 영화제에서 ‘문제영화’가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기회를 갖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는 영화등급분류 면제추천이 가능한 영화제의 조건을 신설(영화제 조직위 또는 집행위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영화제)하거나 조건을 강화(영진위 주최 및 주관 영화제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위 영화 <자가당착> 등이 상영된 인디스페이스는 영진위가 위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이와 같이 조건을 강화한다면 ‘자율적으로’ 계획한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 대해 면제추천의 자동발급 제외 대상이 되므로 ‘문제영화’들의 상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이른바 ‘문제영화’ 즉, 정부에 반한다는 내용, 견해 등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배제” 즉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위임된 권한을 뛰어넘어 행사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었다. 즉, 이 제도는 법률(‘영화비디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제도)으로서 다만, 그 절차와 방법들에 대하여 영진위로 위임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영화인 및 영화단체 나아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결국은 ‘법률자문’의 결과 및 영화인, 언론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여 중지되었다.

2. 이 사건의 성격 및 특징

이 사건은 청와대→문체부를 경유한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특정 ‘문제영화’를 상영하고자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 등급분류 면제와 상영이라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약할 방안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위헌적 사건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1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81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9[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신청인 유인택은 지난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다양성영화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에서 ‘캐피탈원(창업투자주식회사/대표 유인택, 여한구)’이 운용사로 선정됐으나, 2009년 9월 28일 제17차 영진위 정기회의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심의회가 보류되고, 2009년 10월 6일 제18차 영진위 임시회의에서 최종선정자로 탈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제17차 정기회의에서 최종심의회를 보류한 이유 및 제18차 임시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여 6인의 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 등과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 유인택은 1980년대부터 이른바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해온 이력을 시작으로 연

극 공연기획과 영화 제작을 통해서 사회적 의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다. 신청인의 그 간의 활동 과정이 위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생산 시기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국정원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인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에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문화부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에 등재된 점, 참고인 이○○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 정부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당하였다. 이는 해당사업 예비심사에 선정되었으나 추인의 절차만 남아있는 영진위원회의에서 조희문 위원장을 통해 문체부의 지원 배제 의견이 전달되었고, 표결에서 부결된 사실을 통해 확인했다.

**붙임 :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9,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신청인] 유인택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유인택은 지난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다양성영화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에서 ‘캐피탈원(창업투자주식회사/대표 유인택, 여한구)’이 운용사로 선정됐으나, 2009년 9월 28일 제17차 영진위 정기회의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심의를 보류되고, 2009년 10월 6일 제18차 영진위 임시회의에서 최종선정자로 탈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제17차 정기회의에서 최종심의를 보류한 이유 및 제18차 임시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여 6인의 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 등과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은 2017년 12월 15일 「19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위 사건은 ① 2009년 제17차~18차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해서 동 사업의 예비심사 결정이 부결된 경위 ② 위 동 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 관련 상급기관 개입 여부 ③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및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확인이 조사의 목적이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등 기관 제출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10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국정원	2017. 12. 19.	
2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문체부	2017. 12.. 19.	
3	사건2017고합102, 증거서류 중 4986쪽 오OO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4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08. 27.)	청와대	2017. 12. 19.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5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 12. 19.	
6	2009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보고 및 심사계획 수립·시행	영진위 산업지원팀	2017. 12. 27.	
7	2009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심사결과 보고 및 위원회 일정	상동	2017. 12. 27.	
8	2009년 영진위 9인위원회 제17차, 18차, 22차 회의	영진위 홍보협력팀	2017. 12. 27.	
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역대회장 소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홈페이지	2018. 02. 12.	
10	문화예술인 110명, 노무현지지 선언 (2002. 01. 31.)	오마이뉴스	2018.02. 12.	

나. 참고인 등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참고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영화진흥위원회 회의 일지	유인택	2017. 11. 20.	
2	영화진흥위원회 제18차 임시회의 회의록	유인택	2017. 11. 20.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8인에 대하여 9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OOO	참고인(당시, 영진위 고객지원TF팀 팀원)	2회 진술조서(2018.01.14.)
2	유인택	신청인(당시, ㈜캐피탈 원 대표)	녹취록(2018.02..05.)
3	OOO	참고인(당시, 영진위 산업지원팀 주임)	진술조서(2018.02.20.)
4	정OO	참고인(당시, 영진위 9인위원회 부위원장)	전화면담(2018.03.05.)
5	이OO	참고인(당시, 영진위 9인위원회 위원)	전화면담(2018.03.05.)
6	이OO	참고인(당시, 영진위 9인위원회 위원)	녹취록(2018.03.13.)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7	OOO	참고인(당시, 영진위 고객지원TF팀 팀원)	전화면담(2018.03.16.)
8	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영상과 과장)	진술조서(2018.03.20)
9	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영상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03.28.)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개요

2009년 영진위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다양성영화 전문 펀드 결성을 통해 다양성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고, 배급 및 상영의 생태계 조성 및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한 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한 개의 운용사를 선정한다. 2005년 신설될 당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투자 재원 조달과 상업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비 투자 재원을 마련¹⁾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위 사업을 실행하는 투자조합은 25억원의 영진위 출자금을 포함하여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일로부터 7년 이내 운용하며 결성 총액의 100%를 다양성영화에 투자하도록 의무화²⁾되어있다.

나. 동 사업 심사 개요

해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기간을 두고 지원 신청사를 접수 받은 뒤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위원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한다. 운용사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결정심사위원회(9인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³⁾한다.

1) 참고인 진술조서 OOO, 조사편철기록(이하 조사기록)

2) 영진위, 자료입수보고,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공고사업 안내, 조사기록

3) 위의 영진위 자료입수보고, 조사기록

다. 신청인 등 사업 지원 신청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투자 조합명	결성 규모	존속 기간	위원회 출자요청액	결정 금액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 결정사항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이하 2차 사업)	캐피탈원다양성 영화투자조합	50억	5년	25억	25억	선정	부결
상동 (이하 3차 사업)	캐피탈원다양성 영화전문투자조합	50억	5년	25억	25억	선정	선정 결정

해당사업은 2009년에 3차에 걸쳐 공모하였으며 1차와 2차 사업에서 지원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3차 사업에서 선정되었다. 신청인은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 지원하였고, 각각 신청인 회사를 비롯하여 모두 2개의 회사가 신청⁴⁾하였다.

2.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경과

가. 2차 사업 예비심사 경과

2009년 9월 22일에 개최된 2차 사업 예비심사에서 두 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고, 심사위원으로는 김OO, 김OO, 전OO, 최OO, 심OO 등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청인의 회사인 ‘캐피탈 원(주)’이 선정되었다. 신청인 회사는 경쟁 회사보다 평균점이 8.3점이 높은 73.8점을 받았고, 종합 평가의견에는 ‘구성원들의 영화산업 현장에서의 경력을 충분히 고려 (...중략...) 다양한 투자/배급 방안을 구상 (...중략...)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⁵⁾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심사 결과 관련, 참고인 OOO은 “심사위원 면면을 보았을 때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이고, 오히려 예비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양성영화 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의 경우 당시 신청사가 두 개에 불과했고, 이 중 한 곳은 신생 투자사고 문제가 많은 회사여서 캐피탈 원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⁶⁾ 했다.

한편 신청인은 “당연히 운용사인 ‘캐피탈 원’의 대표 여한구씨나 저나 영화계가 다 아

4) 위 조사기록

5) 위 조사기록

6) 참고인 OOO 진술조서, 조사기록

는 사람들이고, 또 영화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예비출자심사에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 체제라 형식적으로 9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중략...) 부결됐다는 소식을 (...중략...) 영화진흥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이 미안하다고 부결됐다고 (...중략...)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투자자, 펀드메니저와 한국영화를 떠나게 되죠”⁷⁾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 000은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경우 9인 위원회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끝납니다. 9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번복하려면 심사 관련 서류를 전면 검토하는 등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심사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정 취소 경우 상당한 사유의 하자가 발생하여야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기망하거나 규정에 위배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합니다.”며 “선정심사결과를 부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⁸⁾했다.

나. 영진위 위원회(9인 회의)⁹⁾의 심의 의결에서 부결된 경위

2차 사업 예비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09년 9월 28일 개최된 제17차 정기회의¹⁰⁾에 ‘2009-59) 2009년 다양성 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결과 심의 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중략...) 새로 선임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진흥사업의 취지에 대한 사전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중요성이 높은 본 사업을 심의의결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됨 (...중략...)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제안함”이라고 미상의 참석자가 발언을 하였고, 논의 결론은 ‘차기 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으로 마쳤다. 이때 같은 회의에 조희문 위원장 및 정00, 이00, 이00, 이00, 조00, 김00, 김00 등 모두 8인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후 2009년 10월 6일 재소집되어 개최된 제18차 임시회의¹¹⁾에서 ‘2009-62) 2009년 다양성 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결과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고,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무기명을 통해서 가부결정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반대 6표, 찬성 1표, 기권 1표로 2차 사업 예비심사 결과가 부결되었다’고 회의록은 적고 있다. 위 회의에는 조희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00, 김00, 김00, 이00, 이00, 정00, 오00

7) 신청인 유인택 녹취록, 조사기록

8) 참고인 000 진술조서, 조사기록

9) ‘영진위 위원회는 9인 위원회라 칭함’, 참고인 000 전화면담 보고서, 조사기록

10) 위의 영진위, 자료입수보고, 조사기록

11) 위의 영진위 자료입수보고, 조사기록

등 8인이 참석했다.

제17차 정기회의에서 보류된 경위에 관련하여 당시 9인 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참고인 이OO은 “문체부에서 이거를 좀 보류를 해달라고 의견을 주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중략…) 내용은 모른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안건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내용 좀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하자”¹²⁾면서 넘어갔다고 했다.

또한, 재소집된 제18차 임시회의에서 위의 이OO은 당시 조희문 위원장이 “이것을 좀 부결시켰으면 좋겠다 (…중략…) 재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중략…) 문체부에서 그렇게 원한다”라고 했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중략…) 좀 협조를 구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¹³⁾고 요청했음을 밝혔다.

위 이OO은 “우리 편만 도와주자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래서 (…중략…) 적어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나눠가지면서 영화계가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진위가 돼야 욕을 안 먹지. 영진위가 그냥 정권 바뀌자마자 어느 한쪽만 다 지원해 주고 하면 영진위의 존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영진위원들이 그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 한다면 영진위가 뭐하려고 하느냐? 허수아비냐, 우리가? 문체부에서 시키는 거 손들어 주는 거수기냐?”며 “제가 적극적으로 반발을 했죠”¹⁴⁾라고 했다.

이어 위 이OO은 “어차피 9인 다수결 상황에서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이게 일단 부결을 시키고 재공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라고 하며, 재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심사 전체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 되는 걸로 높여서 그러면 재공모를 하는 걸로 바꾸겠다 (…중략…) 최종 선정되는 조건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재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다. 같은 이OO은 위의 회의 종료 직후 신청인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재공모로 이게 결정이 났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다. 어차피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야 하는데 (…중략…) 재공모하면 다시 신청을 해라”¹⁵⁾고 알렸다.

위와 관련 당시 9인위원회 위원으로 위의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 정OO은 “(…중략…) 유인택의 진보적 성향이 지원배제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전체 위원 중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적인 위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예비심사 결과를 부결하는 것에 대해 자

12) 참고인 이OO 녹취록, 조사기록

13) 위의 조사기록

14) 위의 조사기록

15) 위의 조사기록

연스럽게 동의하였”¹⁶⁾다고 했다.

위 위원회 이OO 위원은 “모든 회의에 전투적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고 기억할 만큼 진보 진영의 지원배제는 노골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면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유인택 지원 배제 역시 유인택의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¹⁷⁾된다고 했다.

한편, ‘캐피탈 윈’ 의 예비심사 선정 관련해서 영진위에 ‘보류’에 이어 ‘부결’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진위 사업 담당부서인 영상콘텐츠산업과(이하 영상과) 박OO 과장은 이에 대해 “년도 말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지 건건히 뭘 했다라는 결과는 보고받지 않습니다”¹⁸⁾며, “저는 영진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누구하고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관련 내용도 전혀 모릅니다” 했다.

반면 당시 문체부 영상과 사무관 강OO는 위 박OO 과장이 “연 초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이 있을 때 영진위 부장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¹⁹⁾ 했다.

위 OOO은 “2008년 정권이 바뀐 후 담당 사무관인 이OO이 ‘혼자서도 일을 잘 하시네요’ 하면서 ‘왜 보고 안하냐’고 질책을 했었습니다 (…중략…) 공모사업 접수 현황, 위원회 의결 선정 현황 등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이 영진위 국내진흥부와 문체부 영상과가 공유하는 상황이 시작됐습니다.”²⁰⁾라고 했고, ‘2009년에는 영진위와 문체부간 사업 및 세부적인 사안 관련 협의를 위 박OO과 했다’²¹⁾고 밝혔다.

다. 3차 사업에서 선정된 경위

2009년 12월 3일 개최된 3차 사업 예비심사에서도 두 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고, 심사위원으로는 김OO, 고OO, 어OO, 이OO, 이OO 등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청인의 회사인 ‘캐피탈 윈(주)’이 선정되었다. 신청인 회사는 경쟁 회사보다 평균점이 8.5점이

16) 참고인 정OO 전화면담 보고서, 조사기록

17) 참고인 이OO 전화면담 보고서, 조사기록

18) 참고인 박OO 진술조서, 조사기록

19) 참고인 강OO 진술조서, 조사기록

20) 위의 진술조서, 조사기록

21) 위의 조사기록

높은 88.4점을 받았고, 종합 평가의견에는 ‘다양성영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음. 영화현장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로 그 운영력에 기대를 가져봄’²²⁾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위 이OO은 3차 사업 예비심사에 심사위원²³⁾으로 선정됐고, 재공모 신청 접수 상황을 확인하면서 “재공모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유인택 대표가 빠져 있더라 (…중략…) 유인택 대표한테 물어봤더니만 ‘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이 선정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자기는 공동신청자에서 자기는 이름을 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²⁴⁾는 답변을 들었다. 3차 사업 예비심사 중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캐피탈 원’의 대표인 여한구가 사업 제안 발표를 진행했는데 “(…중략…)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자격이 있고, 또 우리가 심사를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면서도 (…중략…) ‘가장 우수하다. 역시, 그리고 점수도 가장 좋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중략…) 다른 경쟁자와는 탁월한 차이를 보였거든요.”²⁵⁾ 했다.

2009년 12월 21일 3차 사업 예비심사 선정 관련 최종 결정을 위한 제22차 정기회의²⁶⁾가 개최되었고, ‘캐피탈 원(주)’은 가결됨으로써 선정되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조희문 위원장, 정OO, 김OO, 이OO, 조OO, 오OO, 이OO 등 7인이었다.

이에 대해 위 이OO은 “제가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진흥원 위원회의결에서 빠지는 대신 제가 그 심사 본 배경 설명을 (…중략…) 역설을 했죠. (…중략…) 영진위가 지원을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략…) 여한구 대표나 유인택 대표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영화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지원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면 선정된 이 회의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을 겁니다”²⁷⁾ 했다.

이어 위 이OO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노력으로 그나마 진보 진영에 10% 정도의 지원은 이뤄졌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0%였어요. 상식

22) 3차 예비심사 결과, 조사기록

23) 3차 예비심사 명단에서 확인, 조사기록

24) 위의 녹취록

25) 위의 녹취록

26) 2009년 제22차 정기회의, 조사기록

27) 위 조사기록

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공보협력관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 임기 중에 사임을 했습니다”²⁸⁾라고 했다.

3.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실행 여부

가. 신청인의 주장²⁹⁾

1984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한바 있고, 1988년 한국민족문화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설립 당시 창립 멤버로서 사업국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창립된 ‘연우무대극단’의 창립멤버이며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개최된 ‘제1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의 창설자이며 기획설계자이다.

또한, 1998년 영화사 ‘기획시대’의 대표였고, 1999년 2월~2003년 2월경까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3대~4대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이후 2015년 2월경 ‘동양예술극장’ 대표로 선임되었고,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그간에 연극 ‘아리랑(1986년)’, ‘금희의 오월(1988년)’ 등을 기획·공연하고,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년)’, ‘이재수의 난(1999년)’, ‘화려한 휴가(2007년)’ 등을 제작하였다.

MB 정부 시절, 영화계 좌파 척결 정책을 추진하고 보수우익 지식인, 문화예술인 조직인 뉴라이트연합 소속 영화인들이 주도하여 주류 영화계 영화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1990년대부터 한국영화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표적이 된 것 같다.

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1)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017. 10. 30.),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중 “참조 : 1.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1면 및 10면 3.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10면의 연번 243번에 따르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

28) 참고인 이○○ 녹취 보고서, 조사기록

29) 신청인 유인택 녹취 보고서, 조사기록

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등재 내역을 살펴보면 위의 보도자료 중 2014. 03. 19. 국정원이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BH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
 저술, 시국선언, 野圈 인사지시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
 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단체
 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은 활동전력·영향력에 따라 249
 명을 등급을 매겨 놓은 인물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³⁰⁾.

**[그림-1]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중 주
 요 左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15개) 중 일부**

주요 左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15개)		
연번	단체명	대표
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정지창
2	문화연대	공동대표 : 강내희

**[그림-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중
 ‘문예계 주요 반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일부**

242	기타	박영숙	노티나무 도서관장	B
243	기타	유인택	민예총 사무총장	C
244	기타	이동연	한예총 교수	B

또한,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간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명의 인물 검증 요청을 받아, 이 중 민주당·舊 통진당 黨員, 정부비판·시국선
 언 참여·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통보하였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348명 중 181명의 실명이 확인³¹⁾되었고, 신청인 유인택의 이름
 이 3면의 연번 101번에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30)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조사기록

31) 위의 보도자료문, 조사기록

[그림-3]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중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중 일부

100	유수훈	승연티타임먼트	문체부 자료
101	유인택	동양예술극장 대표	院 보고서
102	유준석	극단 허리	문체부 자료

(2)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262명” 29면³²⁾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이 작성한 위의 리스트에 따르면,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오OO은 진술에서 연중사업 리스트에 대해 “2015년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사업을 제외한 2015. 3~12. 문예기금 연중사업, 예술국 소관 사업, 문화기반국 등 타실국 사업 및 문화훈장 대상자 등에서 배제되어야 할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³³⁾라고 밝혔다. 같은 리스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2015년 6월자로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전원 제외 대상에 신청인 유인택의 이름을 아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8)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262명”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15.6월) - 11명	①백수골소극장(장창석), ②한강아트홀(정대균/고능석/전주), ③소극점공터_다(황윤동), ④Theater 연바람(오성원), ⑤꿈꾸는 씨앗(주), ⑥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⑦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⑧동양예술극장(유인택), ⑨학전블루소극장(김민기), ⑩한얼소극장(이건동), ⑪소극장 권(정진권)	극예청 -전원제외
-----------------------------	---	--------------

다.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한 동 사업의 지원배제 여부

해당사업의 지원배제는 2009년도 발생한 사건으로 나.의 블랙리스트 등재시기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32)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조사기록

3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서류 중 4986쪽, 조사기록

그러나 위의 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청인의 민예총 활동은 1988년~1989경이고, 사업국장으로 활동하였다. 2014. 03. 19.에 작성된 나.(2)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청인의 등재 특이사항에 ‘민예총 사무총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2014년 2월부터 2016년 9개월간 국정원이 문체부에 통보한 명단인 나.(3)에는 신청인이 현재 재직 중인 ‘동양예술극장’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오OO이 작성한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6) 기존 관리 리스트-149명” 20면(그림 5)을 보면 ‘㉓전국민족극한마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1988년에 개최된 ‘제1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의 창설자이자 기획설계자이다. 또한, 위의 리스트 21면(그림 6)의 ‘공연과 관리’ 항목에서 ‘㉔연우무대극단(유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같은 극단이 1988년도에 창립할 당시 창립 멤버이면서 사무국장을 역임한바 있다.

신청인의 1988년 활동 이력이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인물’로 등재된 사유가 되었다는 점, ‘같은 시기 신청인이 주요하게 활동했던 단체가 문화부 ‘기존 관리 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점,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에는 현재 활동 사항이 등재되었다는 점,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에 지원 배제 대상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활동 사항이 매번 사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5]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6) 기존 관리 리스트-149명”

		㉑장구문화재단 정윤성 음악계(인민해방가 등 작곡, 중국에서 영웅) ㉒부산국제영화제 구립비, ㉓시네루프(정지영, 문성근) ㉔민족극운동협의회, ㉕전국민족극한마당, ㉖노티나무도서관재단(박영숙관장) ㉗문화연대(간내희, 임정희, 황영우) ㉘차구호(대정대교수) ㉙아차우(홍사대교수) ㉚문화연대1비지 ㉛극단연계권 ㉜연계비 ㉝극단
연극-35명		

[그림-6]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6) 기존 관리 관리 리스트-149명”

		㉞서울과담 극단(유영봉), ㉟실천문화, ㊱아트스페이스 씨, ㊲아트클럽(이지혜), ㊳옛나인필름, ㊴연우무대극단(유인수), ㊵연희단거리패(김소희), ㊶오장원문화계추진위원회, ㊷윤이상평화재단(신계문), ㊸극단 이무(손기호),
--	--	--

한편, 신청인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제3대~4대(1999.02~2002.12) 회장³⁴⁾을 역임하였고, 2001년 경 각계 문화예술인 110명과 공개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

인 모임' 결성을 알리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선언서'를 발표³⁵⁾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된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³⁶⁾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라는 제하에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 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 88년 설립 후 (...중략...)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 확산 및 현실 문화정책대안을 지속 제시”하고 있다며 민예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02년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 700여 명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노문모)를 결성하면서 실제적 권력집단화’했다고 하며,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문화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평가를 통해 '09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이OO은 “유인택 대표가 가지는 본인의 성향과 양심과 그거와 상관없이 유인택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결국은 유인택 대표 스스로 재공모할 때 그걸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 걸로 봐서는 이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³⁷⁾라고 했다.

위 OOO은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니 알 수가 없었으나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작동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략...) 이로 인해 영진위에 크고 작은 문화부나 감사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영진위에 사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³⁸⁾ 했다.

한편, 위 박OO은 위 청와대 문서에 대해 “2008년도에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고 하며, “전혀 모른다”³⁹⁾고 했다.

34) 신청인 이력사항 확인 자료 입수보고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홈페이지, 조사기록

35) 위의 입수보고서, 2002. 01. 31. 자 오마이뉴스 기사, 조사기록

36)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08.27.), 조사기록

37) 위의 이OO 진술조서, 조사기록

38) 위의 OOO 진술조서, 조사기록

39) 위의 박OO 진술조서, 조사기록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위

참고인 이OO의 2018. 03. 13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09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2차) 예비심사에서 신청인의 회사인 '캐피탈 원'이 선정되었고,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2009년 9월 28일 개최된 제17차 임시회의에 '2009-59) 2009년 다양성 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결과 심의 의결의 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정이 보류됐다. 이후 2009년 10월 6일 재소집되어 개최된 제18차 임시회의에서 '2009-62) 2009년 다양성 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결과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회의자리에서 조희문 위원장을 통해 문체부의 지원 배제 의견이 전달되었고, 표결에서 부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관련 상급기관 개입 여부

참고인 이OO은 2018. 03. 13.자 진술조서에서 영진위 제18차 임시회의에서 조희문 위원장이 9인 위원들에게 '캐피탈 원에 대한 지원배제는 문체부의 뜻이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줄 것을 위원들에게 설득하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문체부 사업담당자인 영상콘텐츠산업과 박OO 과장은 해당사업에서 '캐피탈 원' 예비심사 선정 결과에 대한 사업 지원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영진위 9인 회의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형식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왔던 점,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영진위 9인 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 2차 사업 예비심사에서 신청인이 탈락한 이후 3개월 만에 재공모한 3차 사업에서는 캐피탈 원이 선정된 점, 3차 사업 예비심사에서는 신청인이 자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해 대표신청인으로 등재하지 않은 점, 2008년 이래 문체부가 영진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의 진술처럼 2차 사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의견이 심사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하여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된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

형화 전략”에 따라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및 “문화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평가를 통해 '09년부터 좌파 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다. 신청인 유인택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실행 여부

신청인 유인택은 문체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 - 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10면의 연번 243번과 3.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3면의 연번 101번에 따르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이른바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해온 이력을 시작으로 연극 공연 기획과 영화 제작을 통해서 사회적 의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다. 신청인의 그 간의 활동 과정이 위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생산 시기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위의 국정원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인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에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문화부 ‘리스트-2014 2015년도 분(654명) 확정’에 등재된 점, 참고인 이OO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문체부의 지원 배제 실행 경위

당시 영진위에 지시나 의견을 제시한 문체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와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과 김OO 사무국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영진위 위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진술만을 확보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특성상 관련 자료 및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영진위 일부 위원의 진술 외에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문체부 등 정부기관

의 영진위 사업 개입 및 실행 경위에 대한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문체부 개입 정황이 드러난바, 문체부 감사관실에 관련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

나. MB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⁴⁰⁾에서 MB 정부 시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MB 정부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건전인사 보임·좌편향 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관 협력하 좌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 나갈 것을 제언’하고 있는바 사실상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권 정치세력이 국가기관을 이용하고 국가권력을 오·남용하여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통제·검열·배제·차별하고, 관련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공조 또는 가담함으로써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침해 및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국가범죄⁴¹⁾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동 경과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MB 블랙리스트 작성의 구체적 시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2008. 08. 27에 작성된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08. 27)”은 블랙리스트 실행 방도를 일부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MB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작동 배경과 실행 경위 등 구체적 가해 및 피해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불어 청와대 및 국정원의 영화계에 대한 좌파 척결 계획, 그리고 국정원 작성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인물(249명)과 단체(15개)」, 문체부 「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40) 위 자료 입수 보고서, 조사기록

41) 블랙리스트 사건 인정의 판단 기준, 오동석, 조사기록

3.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2009. 09. 경 문체부가 관여하여 특정 영화인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배제를 실행한 것으로 이는 2008. 8. 27. 당시 이명박 정부가 생산한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밀접히 맞닿아 있다. 즉,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이어진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선례라 할 수 있다.

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정당한 심사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심사결과를 번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은 위법을 행사하였고, 이는 성공적으로 관철된 듯했다. 다행히 9인 위원회 중 1인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2차 사업의 부당함은 3차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영진위 2차 사업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신청인에게는 부결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 선정 취소 결정을 내리는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영진위 9인 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표결처리와 당초 시행된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재공모를 의결한 것은 위원회 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는 영진위 최고 의결기구인 9인 위원회의 독립성과 영진위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와 같은 지원 배제는 신청인에게 본인의 대표 명의를 삭제한 채 3차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 회사에 누가 될까봐 자진 사표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자기 검열”이 강요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까지 영화계와 벤처업계를 떠나야 했고, 9년간의 공백으로 개인 파산은 물론 재기불능상태가 되어 17년간 몸담아왔던 영화계를 떠났다.

이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그 모든 관련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 자체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⁴²⁾.

42)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2018.01.23. 69쪽 발췌 인용, 조사기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8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10[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정상민(이하 '신청인')은 2013. 9. 5.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객 안전을 이유로 전격적인 상영 중단 계획 발표 후, 2013. 9. 7.부터 메가박스에서 상영이 전면 중단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일부 영화인들로 구성된 영화인대책위원회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듬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던 동성아트홀은 2014. 8. 경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천안함 프로젝트>의 메가박스 상영 중단과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한 주체를 밝히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은 청와대의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중단 지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배급 단계부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는 이른바 ‘문제 영화’를 중심으로 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공적영역에서 ‘문제 영화’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등의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배제는 물론, 최종적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수행 방식 변경까지 단행한 본격적인 영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메가박스 상영 중단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 외압 여부, VOD 서비스 조기 종료 사유, 문체부가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다.

붙임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10,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신청인]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아우라픽처스’(이하 ‘아우라픽처스’) 대표 정상민(이하 ‘신청인’)이 제작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5.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이하 ‘메가박스’) 등에서 개봉하였으나 개봉일 다음날 관객 안전 우려를 이유로 메가박스의 전격적인 상영 중단 조치 발표 후, 2013. 9. 7. 부터 ‘아트나인’, ‘인디스페이스’ 등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이 지속되었다. 당시 일부 영화인들이 대책위원회(이하 ‘영화인대책위’)를 결성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듬해 다큐멘터리 특별전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던 동성아트홀은 2014. 8. 경 영진

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최종 배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17. 11.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천안함 프로젝트>의 메가박스 상영 중단과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한 주체 및 당시 영화인대책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2017. 12. 22. 「16차 전원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제2호(조사개시)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조사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방해와 중단이 블랙리스트의 작동으로 인한 조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메가박스 등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청와대, 문체부 담당 공무원 및 영진위 담당 직원 등의 진술, 관련 자료 수집·검토 등을 통하여 ① 메가박스 등에서 상영 중단 결정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실제적 외압을 행사한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 ② 당시 영화인대책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③ 이 영화의 상영을 근거로 동성아트홀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배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천안함 프로젝트>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의혹을 밝혀 신청인을 비롯하여 이 영화와 관련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 및 활동 위축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 주요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 조사

연번	제목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前정부, 특정문제인지원배제소위'블랙리스트' 조사결과	국정원적폐청산T/F	2017. 10. 30.
2	문제단체조치내역및관리방안 (2014. 5.)	청와대	2017. 10. 30.
3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2017. 10. 30.
4	리스트2014/2015년도분(2015)	문체부	2017. 10. 30.
5	150517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관리리스트 1(2015. 5. 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10. 30.
6	150519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관리리스트 2(2015. 5. 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10. 30.
7	진상조사위 경과보고	영화인대책위원회	2017. 11. 24.
8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방해일지	아우라픽처스	2017. 11. 24.
9	다큐멘터리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중단에 관한 면담요청의건 (문체부)	영화인대책위원회	2017. 11. 24.
10	다큐멘터리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중단에 관한 면담요청의건 (메가박스)	영화인대책위원회	2017. 11. 24.
11	메가박스 내용증명	메가박스	2017. 11. 24.
12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시간표	아우라픽처스	2017. 11. 24.
13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관련 현황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11. 29.
14	대구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11. 29.
15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017. 11. 29.
16	조현재 진술조서(2016. 12. 18.)	특검 ¹⁾	2017. 11. 29.
17	이OO 진술조서(2017. 1. 3.)	특검	2017. 11. 29.
18	박준우 진술조서(2017. 1. 14.)	특검	2017. 11. 29.
19	2017고합102 이OO 증인신문독취서 (2017. 4. 24) 공판제6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1.
20	2017고합102 모철민 증인신문독취서(2017.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1.

연번	제목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21	2017고합102신OO증인신문녹취서 (2017.5.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1.
22	이명박근혜 정권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추악한 진실	(인터넷)시사저널	2017. 12. 11.
23	KOFIC <천안함 프로젝트> 박스오피스	영화관입장권통합 전산망	2017. 12. 12.
24	10월 2일 상영 중지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판매한 KT 규탄	유튜브/장재균	2017. 12. 13.
25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6	2016년형제 등 허OO 관련 고소장	서울중앙지방검찰	2018. 2. 1.
27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14. 8. 22.)	대통령비서실	2018. 2. 2.
28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14. 8. 23.)	대통령비서실	2018. 2. 2.
29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14. 12. 1.)	대통령비서실	2018. 2. 2.
30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메가박스	2018. 2. 7.
31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KT	2018. 2. 19.
32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 개요 보고	영등위	2018. 2. 19.
33	2013카합339 영화상영금지처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3. 6.
34	천안함 사건 다룬 영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	(인터넷)한겨레	2018. 3. 6.
35	單 “영화 ‘천안함프로젝트’는 국민 혼란초래…상영 자제요청” (2013. 4. 30.)	(인터넷)조선	2018. 3. 6.
36	[오동진의생생인터뷰] 전주영화제 김OO 수석프로그램머 인터뷰	(인터넷)다음매거진	2018. 3. 6.
37	[국내뉴스] 명예실추 vs 자유침해	(인터넷)씨네21	2018. 3. 6.
38	[한국영화블랙박스] 영화에 최소한의 예우를	(인터넷)씨네21	2018. 3. 6.
39	[한국영화블랙박스] 그들의 진실과 우리의 진실들	(인터넷)씨네21	2018. 3. 6.
40	영화나눔협동조합 최종태 감독 인터뷰	(인터넷)아르테 365	2018. 3. 8.
41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은 관객 안전을 고려한 것	(인터넷)노컷뉴스	2018. 3. 8.
42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SK 브로드밴드	2018. 3. 23.
43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LG U+	2018. 3. 26.
44	영진위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영진위	2018. 4. 4.
45	보수 단체라더니 보수 받은 단체네	(인터넷)시사인	2018. 5. 3.

1)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상민(아우라픽처스 대표)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2017. 12. 12.)
2	정OO(옛나인필름 대표)	참고인	전화조사(2017. 12. 7.)
3	모철민(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참고인	녹취서(2017. 12. 27.)
4	문OO(영진위 국내진흥부 부장)	참고인	진술조서(2018. 1. 29.)
5	신OO(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진술조서(2018. 1. 30.)
6	김OO(영등위 영화부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2018. 2. 13.)
7	OOO(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	참고인	진술조서(2018. 2. 26.)
8	OOO(메가박스 마케팅팀 대리)	참고인	전화 및 이메일 조사 (2018. 3. 16.)
9	박OO(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참고인	전화조사(2018. 3. 2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개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 2013년 제작)는 2010. 3. 26.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PC-772천안’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에 대하여 약 75분간 프롤로그(Prologue)와 8개의 소부분, 에필로그(Epilogue) 형식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는 그동안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²⁾과 <남영동 1985>³⁾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정지영이 제작·기획을 담당하였고,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아우라픽처스에서 제작하였다.

2) 2007년 발생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실제 석궁테러사건을 영화화한 법정스릴러 영화. 2012년 1월 국내 개봉작, [네이버 영화 재구성]

3) 정치인 김근태가 민주화 운동 시절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19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 동안 받은 고문에 관해 다룬 영화. 2012년 11월 개봉작, [네이버 영화 재구성]

2013. 5. 경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부문에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⁴⁾ 상영 후, 2013. 8. 1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아 2013. 9. 5. 국내 개봉하였다.

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2013. 9. 5. 개봉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일지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방해일지 요약 발췌 (아우라픽처스 제공)

연번	날짜	관련인/단체	내용
1	2012. 4.	정지영	<천안함 프로젝트> 기획
2	2012. 7. ~ 10.	아우라픽처스	<천안함 프로젝트> 기획·개발
3	2012. 10. ~ 12.	아우라픽처스	<천안함 프로젝트> 촬영
4	2012. 12. ~ 2013. 4.	아우라픽처스	<천안함 프로젝트> 후반작업
5	2013. 4.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스케이프 월드프리미어 상영
6	2013. 4. 27.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시사, 최종 실행하지 않음
7	2013. 6. 14.	아우라픽처스	개봉일 확정 및 마케팅 시작
8	2013. 7. 23.	아우라픽처스	영등위 등급 심의 신청
9	2013. 8. 7.	천안함 유가족 대표 등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10	2013. 8. 12.	영상물등급위원회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결정
11	2013. 8. 27.	아우라픽처스	언론 배급 및 유가족 시사(유가족측 불참)
12	2013. 9. 4.	의정부지법 고양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13	2013. 9. 5.	메가박스 등 극장	전국 33개관 개봉
14	2013. 9. 6.	메가박스	9.7. 00 시 기준 상영 중지 안내
15	2013. 9. 7.	메가박스	서울 아트나인 등 전국 6개관 상영
16	2013. 9. 9.	영화인대책위	영화인대책위 발족
17	2013. 9. 10.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18	2013. 9. 11.	영화인대책위	메가박스 및 문체부 면담요청 공문발송
19	2013. 9. 12.	메가박스, 정윤철	메가박스 김OO 상무 비공식 면담
20	2013. 9. 12.	IPTV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실시
21	2013. 9. 16.	메가박스, 정윤철, 정상민, 정OO	메가박스 김OO상무 공식 면담
22	2013. 9. 17.	문체부, 정윤철, 한지승,	문체부 송OO 국장, 박OO 과장 면담

4) 미개봉 영화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행사 또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영화제 초청 상영에 사용되는 용어 [네이버 영화사전 재구성]

연번	날짜	관련인/단체	내용
		정상민 등	
23	2013. 9. 23.	메가박스	아우라픽처스에 내용 증명 발송
24	2013. 10. 2.	어버이 연합 등	KT 광화문 본사 앞 항의 시위
25	2013. 10. 2.	LG U+tv	VOD 서비스 종료(이유 확인 불가)
26	2013. 10. 7.	sk btv	판매량 저조로 VOD 서비스 종료
27	2013. 10. 15.	KT olleh tv	VOD 서비스 종료(이유 확인 불가)
28	2013. 10. 24.	영화인대책위, 정윤철	IPTV 중단 관련 씨네21 원고 작성
29	2013. 10. 28.	씨네21, 정윤철	[한국영화 블랙박스] 그들의 진실과 우리의 진실들 기사 배포

2. 이 사건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가. 아우라픽처스 관련 3인

(1) 정상민

〈천안함 프로젝트〉의 제작사 아우라픽처스 대표 정상민은 「1505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리스트 1」(문체부, 2015. 5. 17.)와 「1505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리스트 2」(문체부, 2015. 5. 19.)에 등재되어 있다.

[그림-1] BL9_문영6-2_1505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 리스트1 일부

정상민(영화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	---------------

[그림-2] BL9_문영6-3_1505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 리스트2 일부

소 프락시스 배우) 전희련(배우) 짐종배(사진가) 정광호(영화작가) 정보용(디지털레코드 대표) 정상민(영화인) 정성우(영화인) 정성호(배우) 정세훈(시인) 정세훈(인천민예총이사장) 정수진(영화인) 정양(시인) 정연홍(시인) 정용국(시인)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용택(영화인) 정우영(시인) 정운(사진가) 정원옥(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운섭(영화작가) 정윤철(영화감독) 정윤희(배우) 정은교(배우) 정은진(선언) 정은진(안산민예총 사무국장) 정지영(영화감독) 정지창(문학) 정택용(사진가) 정혜윤(꽃다지) 정혜정(음악인) 정희성(시인) 조두리
--

(2) 백승우

감독 백승우는 국정원 적폐청산T/F가 2017. 10. 30.에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등재 되어있다.

[그림-3]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 리스트 중 일부

180	영화	백승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감독	C
-----	----	-----	------------------	---

(3) 정지영

제작자 정지영은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 「1505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리스트 1」(문체부, 2015. 5. 17.), 「1505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리스트 2」(문체부, 2015. 5. 19.)에 등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지영은 그와 배우 문성근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CINECOOP(영화나눔협동조합)⁵⁾이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에 등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4] BL9_문영6-2_1505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 리스트1 일부

정지영(영화감독)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	---------------

[그림-5]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 리스트 중 일부

219	영화	정지영	6.15선언실천 남측위 공동대표	B
-----	----	-----	-------------------	---

5) 다양한 영화를 즐기기 위한 영화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2013. 고양시에서 발족한 영화나눔협동조합(CINECOOP)은 영화소비자가 힘을 모아 스스로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출처] 나이, 성별 불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_영화나눔협동조합 cincoop 최종태 감독 인터뷰, <아르떼 365>, 2013/09/11 17:00 <https://artezine.blog.me/90180894993>(2018/03/08)

[그림-6]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리스트 중 일부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	지난 정부이후 정부지원축소 및 스크린강화로 좌성향 세력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부분적으로 세 확산 기도가 감지됨
-	부산국제영화제에 '구럼비- 바람이 분다' 영화 상영예정(제주 미합 건설 반대)
-	좌파영화계인 CINECOOP(발기인 : 정지영, 문성근) 및 영화전략기획센터, 영화영상발전포럼 등을 설립하여 활동

나. 옛나인필름

아우라픽처스가 2012. 제작한 <남영동 1985>의 공동배급사로 참여했던 옛나인필름(대표 정OO)은 <천안함 프로젝트>의 배급실무를 담당하였다. 옛나인필름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청와대, 2014. 5.)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문서에 등재가 확인되었다.

[그림-7]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청와대, 2014. 5.) 리스트 중 일부

30	옛나인필름	무수 한국영화 외국이 지각 추적 상영 기획진	34	-	• <남영동 1985> 배급사 지원배제
----	-------	-----------------------------	----	---	--------------------------

3. 메가박스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가. 기초사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5. 메가박스를 포함한 전국 35개관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으나, 9. 6. 메가박스의 김OO 상무가 옛나인필름의 정OO 대표에게 전화를 하였고, 양 당사자의 전화통화 이후, 메가박스는 <천안함 프로젝트>를 9. 7. 00시 기준으로 전국의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상영 중단 조치를 내려, 결과적으로 개봉일과 그 이튿날까지 단 2일 동안만 메가박스에서 상영한 뒤 중단되었다.

상영 중단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상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 상영계약의 내용

(1) 아우라픽처스의 주장

신청인은 아우라픽처스가 배급사라고 주장한다. 아우라픽처스 대표 정상민은 2017. 12. 12.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행한 신청인 조사에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영화 배급에 나서는 배급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 또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대외적인 배급은 아우라픽처스가 진행했지만, 배급 계약과 같은 배급 실무는 옛나인필름에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대외적인 배급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배급사 명에 아우라픽처스의 이름을 명시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⁶⁾ 또한, 아우라픽처스와 옛나인필름 사이에 배급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절차상 추후 배급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사가 배급대행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라고 진술하며, 아우라픽처스와 옛나인필름 사이에 배급대행 계약이 있었음을 밝혔다.

(2) 메가박스의 주장

반면, 메가박스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계약을 배급사인 옛나인필름과 하였으며, 상영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아우라픽처스와 체결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상영과 관련한 모든 협의는 옛나인필름과 하였으므로, 상영 중단에 관한 협의 역시 옛나인필름의 정OO 대표와 진행하였으며, 상영 중단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아우라픽처스에게 한 바가 없다고 위원회에 답변을 보냈다.⁷⁾

(3) 옛나인필름의 주장

참고인 옛나인필름의 정OO 대표는 애초에는 본인이 배급사라고 답변하다가, 배급실무만 담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참고인 정OO은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옛나인필름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배급사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정지영 감독과 친분이므로 <천안함 프로젝트>의 극장 배급을 담당하였다.”라고 대답하면서, 동시에 영진위 KOBIS⁸⁾에는 아우라픽처스가 배급사로 되어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극장 측과 잘 알기

6) 정상민 진술조서, 2017. 12. 12. 4쪽

7) 메가박스(주), 내용증명, 2013. 9. 23.

8) Korea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영진위가 운영·관리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

때문에 배급을 도와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아우라픽처스와 배급 대행 계약서를 작성했는가라는 질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배급 후 아우라픽처스에게 “배급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⁹⁾

(4) 소결

이를 종합해보면, 배급사가 아우라픽처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영진위(KOBIS)를 비롯하여 영화포스터에서 ‘제작/배급 아우라픽처스’라고 되어 있는 점, 옛나인필름의 정 OO 대표가 “우리가 배급을 도와줬다.”고 발언 한 점 등에 비추어 일리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영화의 배급사가 옛나인필름이라는 메가박스의 주장은 메가박스와 상영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상영관 배정 및 마케팅, 시사회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은 아우라픽처스가 아니라 옛나인필름이라는 점에서도 일견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인하여 상영계약서, 배급대행계약서 내지는 정산내역서 등을 확보할 수 없었던바 이 사건 배급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배급사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메가박스가 개봉 2일만에 ‘상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옛나인필름에게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중단을 요구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므로 다음 쟁점인 상영중단 요구의 계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메가박스가 옛나인필름에게 상영중단을 요구하게 된 계기

(1) 청와대, 문체부, 영진위 등으로부터의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① 메가박스의 주장

메가박스는 일관되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경고와 협박으로 인하여, 관객의 안전을 위해’ 상영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업무 담당 직원들이 퇴사한데다 2015. 경 메가박스가 중앙일보 계열로 편입되어 현재 자료 보관 시스템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반적으로 상영관이 배급사와 체결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망이다. 전국영화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On-Line 실시간으로 처리 및 집계하는 시스템이다.(KOBIS 홈페이지),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comm/comm/openKobisIntro.do>

9) 조사보고, (주)옛나인필름 정OO 대표 통화 보고, 2017. 12. 7.

‘상영관 확정 이후에도 배급사와 상영자는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영관 확대 및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당시에도 위 내용에 의거하여 배급사 옛나인필름과 협의 하에 상영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¹⁰⁾

②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의 진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은 당시 천안함 사건의 유가족과 해군 등이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을 통하여 상영을 반대한 사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전 정부 차원에서 상영을 중지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¹¹⁾

③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모철민의 진술

청와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하, ‘교문수석’)은 김기춘 외4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한 형사 공판¹²⁾에 출석하여, 2013. 9. 9. 실수비에서 김기춘이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도 실수비에서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여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¹³⁾ 한편 김기춘은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관련하여 모철민을 질책하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철민은 상영 즈음하여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이 영화의 상황파악 지시를 받아 문체부에 관련 현황을 요구하여 2013. 9. 1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지만, 상황 파악만 했지 실질적인 상영 중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¹⁴⁾

④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우의 진술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은 2017. 1. 14. 특검에 출석하여 2013. 9. 9. 경 비서실장 주재

10) 조사보고, 메가박스 OOO 대리 통화 및 이메일 자료 확보 보고, 2018. 3. 16.

11) 이OO 진술조서, 특검 제13권(6772~6774쪽), 2017. 1. 3. 10~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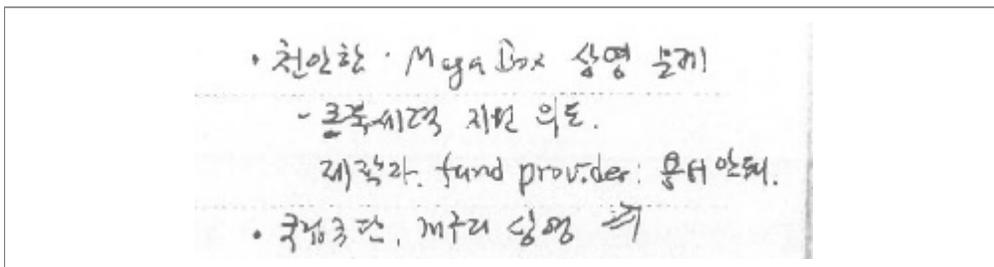
12) 모철민 증인신문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2018. 1. 23. 50쪽

14) 모철민 증인신문 녹취서, Ibid, 2017. 5. 24. 15쪽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작성된 업무수첩 중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메모 <그림 8>에 대하여,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천안함의 메가박스 상영문제는 명백히 중복세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전혀 용납이 안되는 것이다. 이석기 사건을 스타트로 해서 각 분야에 중복, 친북세력의 척결에 나서야 한다. 강한 적개심을 갖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라 했다고 진술했다.¹⁵⁾ 이는 모철민이 같은 날 실수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러한 지시를 들었다는 법원 진술과도 일치한다.¹⁶⁾

[그림-8] 박준우 정무수석 업무수첩 중 2013. 9. 9. 메모 중 일부



⑤ 청와대 교문수석실 신OO 행정관의 진술

한편 신OO 행정관은 2017. 4. 24.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통상적으로 국정원이나 경찰청의 정보보고서가 실수비가 끝나면 회람이 되는데, 2013. 9. 9. 당시 정보보고서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비서관으로부터 동향 파악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를 통해 현황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¹⁷⁾

⑥ 문체부 작성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문건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의 이OO 사무관은 2017. 4. 24. 진행된 2017고합102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청와대 신OO 행정관으로부터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3. 9. 12. <그림 9> 문서를 작성하여 신OO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¹⁸⁾ 2013. 9. 9. 당시 <천안함 프로젝트>의

15) 박준우 진술조서, 특검 제20권(11091쪽), 2017. 1. 14. 9~10쪽

16) 모철민 증인신문 녹취서, op. cit., 15쪽

17) 신OO 증인신문 녹취서, 법원 공판기록 제11권, 2017. 5. 29. 2~4쪽

18) 이OO 증인신문 녹취서, 법원 공판기록 제6권, 2017. 4. 24. 4쪽

상영중단에 대하여 영화인들의 거센 항의 및 반발이 있었고, 실수비에서도이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하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9] 문체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중 일부

3.2.2.2. 천안함 프로젝트 2014.11.14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 영화 개요

- 제작-배급사 / 감독 : 아우라픽처스(대표: 정상민) / 박승우
- 장르 / 상영시간 : 다큐멘터리 / 75분
- 상영등급 : 12세 관람가
- 개봉일 / 상영권 수 : '13. 9.26(목) / 33개 스크린(5개 극장)*
 - * 메가박스 22개, 극장(25개 스크린), 인디스페이스, 미포나인, 아르카무스모모, 삼촌 신영극장, 미포시어터 씨앤씨, 대구동성아트홀

날짜	차시	05	06	07	08	09	04	05	06	07	08	09
관객 수	1,054	1,258	1,280	879	708	848	826	818	1,034	8,302		

- 특이사항 : 인터넷을 통해 홍보비 800만원 보급(200여명 참여)

□ 관행 경과

< 상영 마련 >

- (4월) 민주국제영화제에서 2회 상영
- (8.7일) 제1회, 천안함유가족영화제 등에서 상영금지 카피본 선정
 - * 미물부지법 교정처형 전사 3부
- (9.4일) 상영금지 카피본 선정 허가

< 상영(05) 이후 >

- (9.6일) 메가박스에서 9.2일부터 영화 상영 중단 공지
 - * (사유)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원활한 소통이 예상되며, 일반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급사와의 협의 차에 상영 취소
- (9.7일) 언론, 인터넷에서 이슈화

⑦ 소결

이상의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문건 등을 종합해 보면, 메가박스 및 청와대,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일관되게 외압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고, 이 사건 영화 관련 현황파악 문건 역시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3. 9. 12. 작성된 것으로 보아, 메가박스가 청와대, 문체부 및 산하기관(영진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상영 중단 지시 등의 외압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일부 단체의 강력 항의 및 일반관객의 안전보장이 상영중단의 원인인지 여부

메가박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일반관객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상

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경고와 협박 전화가 있었고, 영화 상영 도중에 퇴장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관객도 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메가박스는 ‘만약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다른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처음부터 개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은 없었으며, 일반관객의 안전보장이 상영중단 결정에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했다.

메가박스는 기존에 <남영동 1985>, <MB의 추억>과 같이 보수정권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극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한 바 있으므로, 만약 정치적인 고려 내지 외압이 있었다면 이 사건 영화 역시 애초에 개봉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메가박스가 주장하는 원인 이외에 여타의 다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영화 상영 전부터 상영을 둘러싼 경고와 협박 전화가 많았고, 상영 도중에 퇴장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관객도 있었으므로, 관객의 안전 및 이미지를 최우선시 하는 상영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메가박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상영 전 경고 및 협박전화를 일삼았던 일부 단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에서 시행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단체(예: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라는 정황은 있으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경고 및 협박전화를 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4. IPTV사의 <천안함 프로젝트> VOD 서비스 조기 중단 경위

가. 기초 사실

IPTV사에서 제공하는 극장 개봉 영화의 일반적인 VOD 서비스는 최초 편성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 ‘극장동시상영작 카테고리’에서 편당 만원의 유료서비스를 시작한 뒤 점차 가격을 할인하고, ‘일반영화 카테고리’에서 향후 약 5~6개월까지 서비스가 지속된다.¹⁹⁾ 그러나 이 사건 영화의 VOD 평균 노출기간은 약 26일로 여타 영화에 비해 짧은 편성기간이었다.

19) VOD는 ‘Video On Demand’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주문형 비디오라고도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셋톱박스나 VOD 단말기를 통해 동영상 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kt 올레tv, sk btv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셋톱박스나 별도의 단말기 없이, ‘넷플릭스’와 같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VOD 시장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극장 개봉과 동시에 수익성 높은 부가 시장으로 부상하여 홀드백(ex. 극장 등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상영 서비스가 넘어가는 시기를 부르는 용어)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극장동시상영작 카테고리에서 약 1개월 간 편당 1만원으로 서비스 후, 점차 가격을 할인하여 평균 5~6개월간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 [네이버 두산백과 내용을 재구성함]

나. VOD 서비스 조기 종료가 외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KT의 주장

KT가 2018. 2. 19.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12. 극장동시상영작으로 34일간 서비스 후 최종 종료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올레tv VOD 서비스 운영은 (주)kt미디어허브가 운영하였으나, 2015. 4. (주)kt미디어허브는 (주)kt와 합병으로 폐업하여, 2013. 당시의 서비스와 관련된 편성표상의 리스트만 확인될 뿐, 서비스 종료에 대한 배경 및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²⁰⁾고 밝혔다.

(2) SK 브로드밴드의 주장

SK 브로드밴드는 2018. 3. 23. 이메일을 통해, 일반적으로 국내 개봉하는 극장동시상영작의 VOD는 평균 2~3주의 서비스 후, 판매실적 평가 등을 거쳐 가격인하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일정 기간 ‘편성 중지 기간’(이른바, 블랙아웃)을 가진다고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12. 부터 2013. 10. 7. 까지 26일간 극장동시상영작으로 서비스되다 블랙아웃 후, 고객 구매율 저조를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²¹⁾고 밝혔다.

(3) LG 유플러스의 답변

LG 유플러스는 2018. 3. 26. 위원회에 전달한 이메일을 통해,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12. 부터 2013. 10. 2. 까지 극장동시상영작으로 20일간 유료 서비스 후, 2015. 12. 9. 부터 2016. 12. 8. 까지 자사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오래 흘러 20일 간 유료 서비스 후, 2013. 10. 2. 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이유는 현재 알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²²⁾고 답변을 보냈다.

20) (주)kt,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2018. 2. 19.

21) SK 브로드밴드,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2018. 3. 23.

22) LG 유플러스,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2018. 3. 26.

(4) 그 외의 정황

그러나 2013. 10. 28. 씨네21에 게재된 정윤철 영화감독의 ‘〈천안함 프로젝트〉 IPTV 3사 방영 중단 사태에 대해’의 내용에 의하면, 2013. 10. 2. 어버이연합 등 일부 단체들이 광화문 KT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한 뒤, KT는 물론 IPTV 3사가 모두 방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실제로 2013. 10. 2. 유튜브에 「10월 2일 상영 중지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판매한 KT 규탄」의 제목으로 게시된 동영상<그림 10>에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시행된 보수국민연합, 대한어버이연합 등 일부 단체의 항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²⁴⁾

[그림-10]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판매한 KT 규탄



(5) 소결

IPTV 사들은 일관되게 VOD 서비스 조기 종영이 외압과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나, 어버이연합이 규탄시위를 했던 2013. 10. 2. 이후에 IPTV 3사가 일괄적으로 VOD 서비스를 중단했던 정황에 비추어, 위 회사들의 방영중단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의 이미지 내지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었을 수 있다.

23) 씨네21 [한국영화 블랙박스] 그들의 진실과 우리의 진실들, 〈천안함 프로젝트〉 IPTV 3사 방영 중단 사태에 대해, 2013/10/28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4882 (2018/3/6)

24) 10월2일 상영 중지된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판매한 KT 규탄 2013/10/2 <https://www.youtube.com/watch?v=4SBen7EOyss> (2017/12/13)

5. 영화인대책위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이유

영화인대책위는 2013. 9. 17. 당시 문체부 담당자인 콘텐츠정책관 송OO 국장, 영상 콘텐츠산업과 박OO 과장 등과 면담을 하여, 진상파악 및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박OO는, 2018. 3. 27. 위원회의 참고인 전화 면담에서, “2013. 9. 중순 경 영화인대책위의 정윤철, 한지승 감독 등으로부터 ‘영화 상영 중단 조치에 대한 메가박스 내부 조사’와 ‘영화 재개봉’의 요구를 받아 이를 가지고 메가 박스와 협의하였지만, 메가박스는 이미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영화의 재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영화인대책위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시 메가박스는 일부 상영관의 주인이 별개로 있는 다소 복잡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 내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2012. 경 CJ, 롯데 등 대기업과 많은 영화단체들이 참여하여 발족한 영진위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이전에도 문체부와 별도의 교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²⁵⁾

또한 참고인 박OO는 “당시 메가박스와의 협의 결과를 공식적인 문서로 영화인대책위의 관계자나 정지영 감독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영화인대책위 정윤철, 한지승 감독에게 문체부의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그 즈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부산을 방문한 영화인대책위의 감독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 이 결과를 직접 구두로 전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6. 이 사건 이외에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을 방해하려는 정황

가. 국방부 정례브리핑

2013. 4. 25. 부터 5. 3. 까지 개최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2013. 4. 27. 국방부는 김OO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외면하고 검증 없는

25) 조사보고, 박OO 前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전화 조사 보고, 2018. 3. 27.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이 사건의 고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²⁶⁾

나.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저지 시도

또한 청와대와 문체부 차원의 영화 상영 중단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모철민²⁷⁾과 조현재²⁸⁾의 진술에 의하면, 모철민 당시 교문수석은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중단 지시와 문체부의 고위 인사의 영화제에 참석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를 당시 비서실장 허태열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증용하였으나, 조현재는 이미 상영을 저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2013. 8. 7.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해군 병사 유가족 대표와 당시 해군 장교 등 5명(이하 '채권자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극장 개봉 예정일 하루 전인 2013. 9. 4.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영화가 상영되어 국민들 사이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혼란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²⁹⁾

26) 軍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국민 혼란 초래…상영 자제 요청”, 2013/04/30 14: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30/2013043001323.html(2018/03/08)

27) 모철민 증인신문 녹취서, op. cit., 2017. 5. 24. 12~14쪽

28) 조현재 진술조서, 특검 제2권(773쪽), 2016. 12. 18. 18쪽

29) 2013카합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2013. 9. 4. 2, 9쪽

라. 상영저지를 위한 관제데모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과 관련하여, 2013. 4. 27.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회 상영 후, GV(관객과의 대화)가 열릴 당시, 고엽제 회원인 것처럼 보이는 몇몇 관객들로부터 영화상영 자체에 대해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보수단체들의 저항이 있었다.

또한, 2013. 10. 2. 보수국민연합, 어버이연합 등 일부 친정부 보수단체가 KT 광화문 본사 방문하여, 이 사건 영화의 VOD 서비스를 중단하게 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명단(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구속된 허OO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로부터 관제데모 지시를 받았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음이 허OO에 대한 공소장에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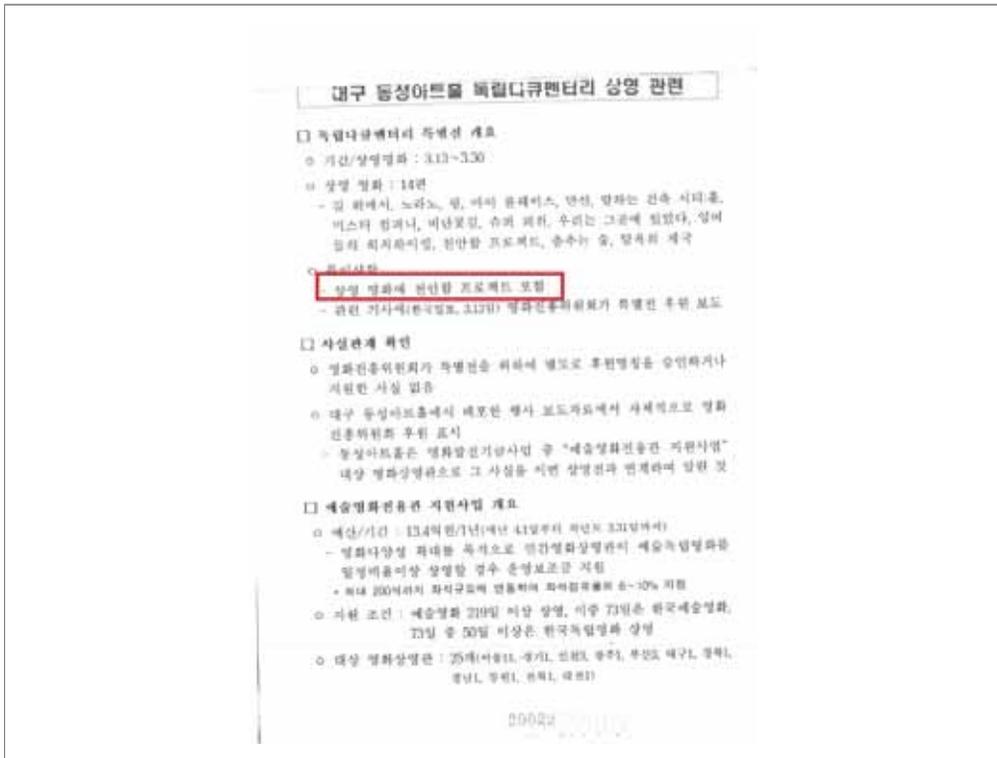
허OO에 대한 공소장³⁰⁾에 따르면, ‘2013. 8. 경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후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주도하는데 ‘어버이연합’과 같은 특정 정치 성향 단체들을 이용하려는 기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조에 따라 보수단체 자원 지금 방안이 강구되었고, 허OO 등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3개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 자금지원이 되도록 이행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7. 영진위의 동성아트홀에 대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배제의 원인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에 있는지 여부

2014. 3. 13. 경 한국일보에 ‘동성아트홀이 영진위의 후원을 받아 특별전을 개최하여 14개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중에 〈천안함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그 무렵 있었던 실수비 회의에서 김기춘은 교문수석 모철민에게 질책을 하면서 ‘패널티를 주라’고 지시하였고, 모철민은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에게, 김소영은 신OO에게 문체부를 통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신OO은 문체부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책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30) 허OO 공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11. 6. 3~10쪽

[그림-11] 문체부, 「대구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



2014. 4. 경 문체부는 영진위에 동성아트홀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배제를 지시하였고, 영진위 국내진흥부 부장 문OO은 동성아트홀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2014. 8. 25. 동성아트홀을 비롯한 당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5개 영화관을 최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2심 판결문에서 김기춘은 <천안함 프로젝트>가 좌파적 성향 내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³¹⁾

31)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op. cit., 114~117쪽

제4절 | 조사 결과

1. 이 사건의 성격

가. ‘문제 영화’ 관리 차원으로 실행된 공적영역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은 청와대의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중단 지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배급 단계부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는 이른바 ‘문제 영화’를 중심으로 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공적영역에서 ‘문제 영화’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등의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배제는 물론, 최종적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수행 방식 변경까지 단행한 본격적인 영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선례가 되었다.

‘문제 영화’의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문건은 2014. 4. 24. 경 문체부 이OO이 작성한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이다. 이 문서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이유로 동성아트홀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고, 문서 하단의 ‘※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은 청와대 신OO 행정관이 부기하여 이OO에게 다시 전달한 내용으로 향후 예술영화 지원 사업 개편의 큰 틀이 되었다.³²⁾

[그림-12] 문체부,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2014. 4. 24.) 중 일부

※ 향후 사업 개선 방향 :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영화계 지원 및 극장 중심이 아닌, 우수영화 상영지원 형태로 전환하되, 우수영화 선정과정에서 **문제 영화**를 여파시킬 수 있는 심사 시스템 구축 병행

이후 2014. 8. 22. 경 작성된 실수비 회의 자료³³⁾에도, ‘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 배제’를 명시하며 공적영역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지침은 문체부를 통해 영진위에 하달되어 배제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영진위는 2018. 4. 4.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을 지

32) 이OO 진술조서, op. cit., 2017. 1. 3. 43~44쪽

33)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대통령비서실, 2014. 8. 22. 10쪽

원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나아가 운영지원사업 수행 방식 변경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정하였다.³⁴⁾ 영진위는 <천안함 프로젝트> 외에도 <다이빙 벨>,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불안한 외출> 등 이른바 ‘문제 영화’로 거론되는 영화에 대한 피해 사례 목록을 발표하며, ‘문제 영화’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실행 및 지원 대상 부당 배제를 인정하였다.³⁵⁾

나. ‘화이트리스트 - 관제데모’로 이어지는 민간영역에서의 배제

박근혜 정부는 반정부 성격의 모든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것이 하나는 청와대-문체부-산하기관으로 하달되는 공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원배제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전경련 및 국정원 자금-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소위 ‘화이트리스트’) - 관제데모 등의 형태로 각 민간영역에서 정부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는 시도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하여 허OO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³⁶⁾에 따르면, 2013. 8. 경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후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 주도를 위하여, ‘시민단체 균형발전 방안’, ‘건전단체 육성방안’과 같은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계획의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순차 보고되었다. 이후 청와대는 특정 단체의 자금지원을 지시하였고, 허OO 등은 이들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경련에 독촉하거나 추가 자금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후임 소통비서관을 포함하여 업무 관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3. 10. 2.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규탄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전경련 등에서 받은 돈으로 일부 탈북자들을 보수단체의 집회·시위에 수차례 동원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³⁷⁾

이와 같은 보수단체의 관제데모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는 반정부 성격의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냉각효과를 유발하여 민간영역에서도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축감하며, 결과적으로 (공적시스템

34) 영진위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영진위, 2018. 4. 4. 4쪽

35) 영진위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영진위, 2018. 4. 4. 6~8쪽

36) 허OO 공소장, op. cit., 2017. 11. 6. 3~10쪽

37) 보수 단체라더니 보수 받는 단체네(시사인) 2016/05/03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5927>

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본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³⁸⁾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의 경우, 메가박스, IPTV 둘 모두 민간기업에 해당하며, 회사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기업의 성격 상, 그 회사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의 관제데모, 방해 전화 및 항의 등이 있을 경우,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내지 IPTV 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키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2. 진상규명 사실

가.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

이 사건 영화의 감독 백승우는 〈천안함 프로젝트〉의 연출로 인해 블랙리스트³⁹⁾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우라픽처스의 정지영과 정상민 그리고 옛나인필름은 〈남영동 1985〉 등 정치·사회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제작과 배급에 참여하여 이 사건 영화 이외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관리되었다. 특히, 정지영은 6. 15 선언실천 남측위 공동대표 및 영화나눔협동조합(CINECOOP)의 발기인의 이력으로 좌파 영화인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중단 지시 및 실행

(1)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중단 시도

모철민⁴⁰⁾과 조현재⁴¹⁾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교문수석 모철민은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중단 지시와 문체부의 고위 인사의 영화제 참석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를 당시 비서실장 허태열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문체부 제1차관 조현재에게 종용하였지만 최종 실행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청와대가 특정 영화의 내용을 문제로 인식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예술표현의 수단

38) 오동석 교수 작성, 블랙리스트 개념 및 인정의 판단기준 중 7. 블랙리스트 행위 유형과 판단에서 4번 유형

39)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국정원 적폐청산T/F, 2017.10.30.)

40) 모철민 증인신문 녹취서, op. cit., 2017. 5. 24. 12~14쪽

41) 조현재 진술조서, op. cit., 2016. 12. 18. 18쪽

인 영화의 상영을 중단하려는 위법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3. 4. 27. 영화제 상영 전 국방부는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외면하고 검증 없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이 사건의 고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영화 상영을 압박한 사실이 있다.

(2)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 관련

김기춘은 2014. 3. 13. 부터 3. 30. 까지 개최되는 영진위 후원의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에서 <천안함 프로젝트>가 포함된다는 기사 내용을 접하고 실수비에서 ‘패널티를 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 특별전은 영진위가 후원한 것은 아니며,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하나인 동성아트홀이 자체적으로 배포한 홍보 자료가 그대로 인용이 되어 기사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가 문체부와 영진위에 하달되어 2014. 8. 25. 동성아트홀을 비롯한 당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5개 영화관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되었다. 이에 대해 2심 판결에서는 김기춘 등의 포괄적, 개별적인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배제 지시가 순차로 문체부, 영진위로 하달됨으로써 지원 배제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의 선례가 되었다고 명시했다.⁴²⁾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메가박스 상영 중단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 외압 여부

메가박스의 상영 중단 결정에 청와대나 문체부 등 국가권력의 부당한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메가박스는 2013. 9. 5.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 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경고와 협박으로 관객 안전을 위하여 2013. 9. 7. 0시를 기점으로 상영을 전면 중단하였다

42)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op. cit., 354~-355쪽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업무 담당 직원들이 퇴사한데다 2015. 경 메가박스가 중앙일보 계열로 편입되어 현재 자료 보관 시스템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반적으로 상영관이 배급사와 체결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상영관 확정 이후에도 배급사와 상영자는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영관 확대 및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당시에 위 내용에 의거하여 배급사 옛나인필름과 협의의 하에 상영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⁴³⁾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우라픽처스가 이 영화의 배급사이며, 메가박스가 신청인과 협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메가박스와 옛나인필름 그리고 아우라픽처스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확보할 수 없었지만, 당시 옛나인필름이 아우라픽처스를 대신하여 메가박스를 대상으로 배급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신청인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메가박스가 이 영화의 상영 중단을 배급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나, 당시 메가박스가 상영중단을 결정하고 이후에도 이들 방해세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영화 상영에 대한 자기 검열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① 2013. 8. 8. 영등위 「천안함 프로젝트 개요 보고」(2013. 7. 24.)⁴⁴⁾ 문서 문체부 이메일 전달, ②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과 유가족 대표 등 5인이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메가박스에서 상영한 시점 이전의 상황과 상영 중단 이후인 ③ 2013. 9. 9. 김기춘 주재 실수비에서 이 영화의 메가박스 상영문제를 언급하면서 증복, 좌파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모철민을 질책, ④ 모철민은 김소영, 신OO 등을 통해 문체부에 현황파악을 지시하여 2013. 9. 12.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문서가 작성된 일련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메가박스의 상영중단 결정에는 메가박스가 표면상 이유로 주장하는 '불특정인의 경고나 협박' 외에 이 영화에 대한 청와대 등의 부정적 인식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메가박스와 상영 중단의 업무협의를 담당한 옛나인필름 또한 이러한 위력을 행사한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실제로 메가박스의 주장처럼 불특정인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조

43) 조사보고, 메가박스 000 대리 통화 및 이메일 자료 확보 보고, 2018. 3. 16.

44) 영등위 영화부 과장 김OO이 문체부 000 주무관에게 2013. 8. 8. 이메일 제출한 <천안함 프로젝트> 현황 보고

사권한의 한계 및 이들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기간 부족의 한계로 이 지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VOD 서비스 조기 종료 사유

〈천안함 프로젝트〉의 IPTV 3사 VOD 평균 서비스 기간 약 26일은 여타 극장 개봉 영화 대비 상당히 짧은 편으로 확인된다. IPTV 3사는 위원회에 VOD 서비스 조기 종료 사유와 관련하여 VOD 구매 실적 저조, 자회사의 통폐합, 당시 업무 담당자의 퇴사를 이유로 현재 관련 자료가 없다는 피상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이 영화의 VOD 서비스 조기 종료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와 유튜브 등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조기 종료된 배경에는 보수국민연합, 대한어버이연합 등 일부 단체의 강력한 항의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 단체는 이미 친정부·보수단체 지원명단(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허OO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로부터 관제데모를 지시받았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⁴⁵⁾

다. 문체부가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문체부는 메가박스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에 대한 영화인대책위의 진상조사 요청에 대하여, 피상적인 사실관계만 파악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사나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의 시간적 한계와 문체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이뤄지지 않았다.

45) 시사저널 이명박근혜 정권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추악한 진실 2017/10/30 16:12:40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1928> (2017/12/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3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83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13[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사건의 취지

- 1) 대구 소재 '동성아트홀'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배제 의혹이 있으므로 진실규명을 바란다.
- 2) 나아가 2015. 영진위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폐지,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여 이른바 '문제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통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이 사건 조사결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문체부를 경유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등 정부비판적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대구 동성아트홀 그리고 부산 아트씨어터 시앤씨, 거제아트시네마, 대전아트시네마에 대하여 2014.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 2)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진위가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위 같은 ‘문제 영화’ 상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 지원 사업을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으로 개편한 사실 또한 진상이 규명된다.
- 3)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 하반기부터 시행된 예술영화 유통·배급 사업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사전검열을 거쳐 위안부 소재 영화 <TwentyTwo>, 독도 소재 영화 <독도의 영웅들>을 배제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붙임 :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13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신청인] 원승환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사건의 취지

신청인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부관장으로서 2017. 11. 29.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영진위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2014. 3.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동성아트홀’ 극장에서 상영된 것을 문제 삼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의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재공모를 통해 2014. 8.경 동성아트홀 등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2015. 이후에는 아예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소위 ‘문제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통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2018. 1.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2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2014년도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동성아트홀이 배제된 과정 및 경위를 밝히고, 나아가 이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아예 폐지되고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과정 및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작성)자	입수일	비고
1	대구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 (2014. 3. 1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생략	
2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문영2-2)	위 같음	생략	
3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보고(문영2-3)	위 같음	생략	
4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안(문영2-4)	위 같음	생략	
5	(대외주의)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2015. 3. 3.)	위 같음	생략	
6	2012~2014년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요강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연번	서명	진술(작성)자	입수일	비고
7	2013~2014년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8	「2015년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위탁수행자 선정 심사 결과보고」 등 심사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9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영진위, 2014년 다양성소위원회 2~3차 개최결과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생략	
10	위 같음, 2015. 6. 30.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정OO 수·발신 문자메시지	위 같음	생략	
11	위 같음, 이OO의 진술조서(2017. 1. 3.)	위 같음	생략	
12	위 같음, 김OO의 진술서(2017. 1. 5.)	위 같음	생략	
13	위 같음, 정OO의 진술조서(2017. 1. 6.)	위 같음	생략	
14	위 같음, 모철민의 2회 진술조서(2017. 1. 6.)	위 같음	생략	
15	위 같음, 신OO의 진술조서(2017. 1. 7.)	위 같음	생략	
16	위 같음, 김소영의 3회 진술조서(2017. 1. 13.)	위 같음	생략	
17	위 같음, 이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4. 24.)	위 같음	생략	
18	위 같음, 문OO의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19.)	위 같음	생략	
19	위 같음, 김OO의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19.)	위 같음	생략	
20	위 같음, 모철민의 증인신문조서(2017. 5. 24.)	위 같음	생략	
21	위 같음, 신OO의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29.)	위 같음	생략	
22	위 같음, 정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6. 5.)	위 같음	생략	
23	위 같음, 김소영 증인신문 녹취서(2017. 6. 23.)	위 같음	생략	
24	위 같음, 김소영 3회 피의자신문조서(2017. 1. 13.)	위 같음	생략	
25	(언론보도)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 휴관하면서 집단해고?(2017. 6. 27.)	오마이뉴스	생략	
26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의 기습 폐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2017. 6. 26.)	동성아트홀 폐관을 반대하는 대구지역문화예술 단체 일동	생략	
27	동성아트홀 재개관합니다(2017. 7. 21.)	동성아트홀	생략	
28	다양성이 경쟁력이다...독립다큐 특별전 (2014. 3. 12.)	대구한국일보	생략	
29	김영대, 한국 예술영화 상영 늘려야(2015. 10. 21.)	서울경제(발언대)	생략	
30	한국영화배급협회, 작품접수내역 및 선정영화 리스트(2017. 1. 29.)	영화진흥위원회	2018. 5. 9.	
31	한국영화배급협회, 선정위원회 명단 및 심사운영세칙(2017. 1. 29.)	영화진흥위원회	2018. 5. 9.	
32	한국영화배급협회, 사업실적 보고서(2017. 1. 29.)	영화진흥위원회	2018. 5. 9.	
33	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영화관	영화진흥위원회	2018. 5. 9.	

연번	서명	진술(작성)자	입수일	비고
	선정지원(2004)			
34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영진위 입장(2015. 3. 2.)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35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재편 보도자료(2015. 7.)	영화진흥위원회	생략	
36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생략	
37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2013. 9. 12.)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생략	
38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시간표	정OO	생략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진술조서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한다. 아래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일부[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진술인	관계	제목
1	O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017. 11. 23.)
2	김OO	2015. 7.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	진술조서(2017. 12. 7.)
3	모철민	13. 3.~14. 6.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녹취록(2017. 12. 27.)
4	문OO	2014.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조서(2018. 1. 29.)
5	신OO	2015.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30.)
6	원승환	신청인	진술조서(2018. 3. 26.)
7	O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018. 5. 15.)

제3절 | 조사 내용

1.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영화관 선정지원’ 사업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4년 이 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영화관을 선정하

는데, 지원약정 기간 동안 한국예술영화를 62일 이상 상영하고, 한국예술영화와 외국에
 술영화 상영일수의 합이 127일 이상이 되도록 상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보조금은 상영관
 의 운영지역과 시설 및 입지수준을 기준으로 상영관 지원등급(가~라 등급)을 정하여, 좌
 석수별 가등급을 100으로 보고 10%씩 차감액을 지원토록 하였는데 가등급의 보조금액
 은 44,665,000원이었다.

여기서는 2013년 이후 지원사업을 주되게 살펴보면, 이 사업은 상영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예술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객에게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한국영화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예술영화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대안적 배급체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등의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로서 지원내용은 2013년 기준으로 단관극장의 경우 좌석 규모에 연동한
 정액보조금으로 좌석 점유율 10%를 지원하는데, 200석까지 인정하도록 하였다(200석
 의 경우 $200\text{석} \times 5\text{회}(1\text{일 상영회수}) \times 219\text{일} \times 3,000\text{원} \times 10\% = 65,700,000\text{원}^1$). 또한,
 멀티플렉스, 지자체, 기업체 운영 예술영화전용관은 좌석점유율 6%를 지원(200석 기본
 보조금 액수는 39,420,000원)

2010년 지원극장으로는 광주극장, 아트씨어터 씨앤씨, 동성아트홀 등 26개 극장 29
 개 스크린(추가 3개 스크린, 총지원금액 1,012,009,960원), 2011년도에는 30개 스크
 린(총 지원금액 979,641,543원), 2012년도에는 위 극장을 포함한 21개 극장 25개관에
 대하여 992,107,893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의 경우 사업예산은 총 11억원으로 총39개 스크린이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대
 구동성아트홀 등 19개 극장 25개의 스크린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표-3] 2013년도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결정내역

상영관명	지원현황	구분	좌석수	정액지원금	기본 보조금(85%)
광주극장	지원극장	단관극장	856	65,700,000	55,845,000
아트씨어터 씨앤씨	지원극장	단관극장	200	65,700,000	55,845,000
동성아트홀	지원극장	단관극장	201	65,700,000	55,845,000
중앙시네마	지원극장	단관극장	144	51,903,000	44,117,550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극장	단관극장	200	65,700,000	55,845,000

1) 지원조건으로 약정기간 내 예술영화인정심사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화
 로 인정한 작품의 상영인정일수는 219일 이상이어야 하며, 219일 중 73일은 한국영화가이어야 한다.

상영관명	지원현황	구분	좌석수	정액지원금	기본 보조금(85%)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지원극장	지자체	98	24,341,850	20,690,573
영화공간 주안 2관	지원극장	지자체	136	29,959,200	25,465,320
국도엔가람예술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43	51,640,200	43,894,000
거제아트시네마1관	신규극장	단관극장	219	65,700,000	55,845,000
대전아트시네마	지원극장	단관극장	196	64,714,500	55,007,325
KU씨네마테크	지원극장	단관극장	152	53,874,000	45,792,900
아트나인 0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2	23,454,900	19,936,665
허리우드클래식	지원극장	단관극장	300	65,700,000	55,845,000
KT&G상상마당시네마	지원극장	기업체	77	21,237,525	18,051,896
필름포럼 1관	신규극장	단관극장	90	38,598,750	32,808,938
씨네코드선재	지원극장	단관극장	232	65,700,000	55,845,000
CGV압구정 4관	지원극장	멀티플렉스	94	23,750,550	20,187,968
CGV오리 8관	지원극장		101	24,785,325	21,067,526
CGV 천안 10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9	24,489,675	20,816,224
CGV서면 5관	신규극장		84	22,715,775	19,308,409
아트하우스모모 1관			138	50,391,900	42,833,115
아트하우스모모 2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38	50,391,900	42,833,115
롯데시네마 주엽6관	지원극장		97	24,194,025	20,564,921
롯데시네마 청주4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7	24,194,025	20,564,921
롯데시네마 구미10관	신규극장		128	28,776,600	24,460,110
19개 극장 25개 스크린				1,093,313,700	929,316,475

2. 기존 조사(수사)결과

가. 서울고등법원 범죄일람표 3.의 기재

기존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김기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이 판결의 범죄일람표 3. 중 이 사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담당 (문체부/산 하기관)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	비고
1	2014- 08-25 경	예술영화 전용관 동성 아트홀	정액지원금(전년 도 정액지원금 65,700,000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국내진흥 부 문OO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보류,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배제 각 지시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 지원배제를 위해 기준 발굴, 사업 재공고, 심의위원 에게 의견 제시	영화 천안함 프로 젝트 상영

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시

한편, 관련 판결의 요지를 위 판결문 중 ‘다시 쓰는 판결문’에서 이 부분(김기춘, 김소영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을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은 2014. 3.경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천안함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천안함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신OO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동성아트홀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동성아트홀에 전년대와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문체비서관실 신OO 행정관은 이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소영은 즉시 문체부 조현재 제1차관에게 동성아트홀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것을 이유로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이OO은 영진위 문OO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영진위 문OO 부장은 위 이OO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유독 동성아트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

라, 동성아트홀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동성아트홀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OO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상영과 대구동성아트홀 등 지원배제

가. 상황 및 배경

- ①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의 2013. 9. 1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을 보면 2013. 9. 5. 33개 메가박스 등 5개 극장에서 상영 이후 메가박스는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 예고로 관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영화상영 중단을 공지하고, 이로 인해 영화계 단체 등이 항의성명 등을 발표하고 문체부 관계자 면담 등의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위와 같은 시점에 대구 동성아트홀, 아트씨어터 씨앤씨 등은 이 영화를 계속 상영하였는데 이 중 일부 상영시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시간표

역점	09월 19일 (목)	09월 19일 (목)	09월 19일 (목)	09월 19일 (목)	09월 19일 (목)	09월 19일 (목)	09월 19일 (목)
영진위영(극장)	09:00/11:00/13:00/15:00/17:00/19:00	11:40/13:20/15:00/16:40/18:20/20:00/21:40	09:00/11:00/13:00/15:00/17:00/19:00	09:00/11:00/13:00/15:00/17:00/19:00	09:20/11:40/14:00/16:20/18:40/21:00	09:20/11:40/14:00/16:20/18:40/21:00	09:20/11:40/14:00/16:20/18:40/21:00
메가박스(극장)	10:30/14:30	09:30/12:40/16:50	12:30/17:00/21:30	11:00/15:00/19:00	09:00/13:00	11:00/15:00/19:00	11:00/14:00
대우아트홀(극장)	17:00/20:30	17:30/20:45	18:30	18:45	18:45/20:30/22:15	18:45/20:30/22:15	18:30/20:45
롯데시네마(극장)	11:30				11:30	11:45	
메가시네마(극장)		09:30	10:30/14:30			17:30	18:30
영진위(극장)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영진위(극장) (영진위)	12:00/13:00	14:00/15:00/16:00	16:00	16:00/17:45	17:20/18:00	17:30	17:30/19:15
영진위(극장)	09:45	14:45	17:45	19:00	20:00	11:00	11:45
영진위(극장)	10:45/13:20	12:30/15:00	15:00/17:30	18:00/20:30	19:00/21:30	19:45/22:15	17:45
대구동성아트홀	12:30/17:30	09:40/13:30	14:30/17:30	17:30/19:30/21:30	19:45	14:30/16:45	18:30
부산 영진위(극장)	10:00/11:30/13:00/14:30	10:00		09:00	10:00/11:30/13:00/14:30	11:45/14:00/16:15/18:30	10:00/11:30/13:00/14:30
부산 영진위(극장)	11:30/13:00/14:30/16:00	10:00/11:30/13:00/14:30	10:00/11:30/13:00/14:30	10:00/11:30/13:00/14:30	10:45/12:00/13:15/14:30	11:00/12:15/13:30/14:45	10:00/11:30/13:00/14:30
고려대학교(극장)	13:00/15:00/17:00	09:00/11:00	09:00/11:00	09:00/11:00	11:30/13:00/14:30	11:00/12:45	14:00/15:45

영진위 2013-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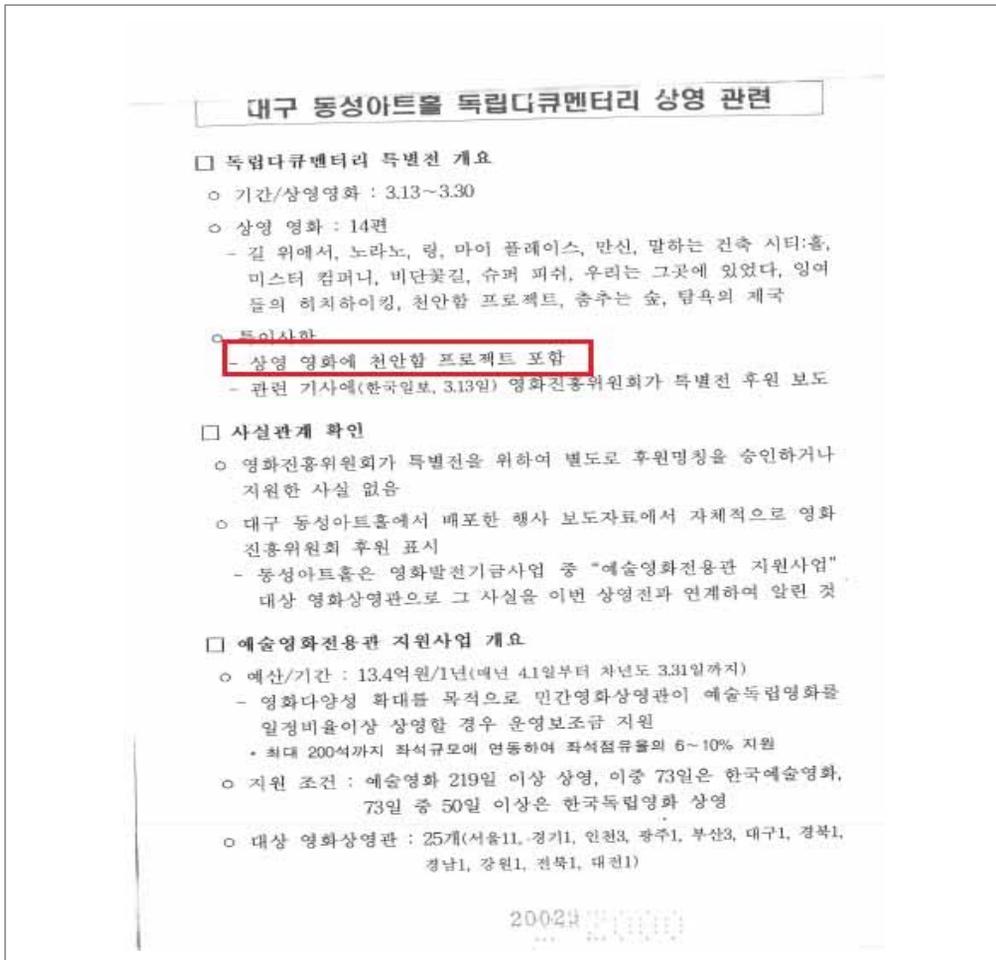
→ 영진위 영진위(영진위)

- ③ 2014. 3. 13.~3. 31. 동성아트홀은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 행사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등 14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동성아트홀은 위 특별전 개최에 앞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는 2014. 3. 12. 기사화되어 아래와 같이 인터넷판 대구한국일보에 「다양성이 경쟁력이다…독립다큐 특별전」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²⁾



- ④ 2014. 3.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 작성의 <대구 동성아트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을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3. 12.자 (대구)한국일보 기사(영진위가 특별전 후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보고인데,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 상영 영화로는 <천안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진위는 특별전 자체를 후원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동성아트홀 지원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2) [http://www.dg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2018/03/06\)](http://www.dg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2018/03/06))



-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고합102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4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철민의 녹취록(2017. 12. 27.)에는 “2014. 3.경 동성아트홀에서 열린 독립영화특별전에 대한 언론 보도 후, 김기춘 실장이 회의 때 자신을 질책하면서 ‘어떻게 영진위 공공기관에서 찬안함 같은 좌성향 영화에다 돈을 지원을 하느냐? 페널티를 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자신이 비서관 회의에서 비서관 김소영에게 김기춘 실장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래서 2014. 4.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심의가 열리는 당시 문체부 이OO사무관이 청와대 입장을 묻자 신OO 행정관은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문체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고, 김소영 비서관은 당시 조현재 문체부 차관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가 책임져라’는 이야기를 하였

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⑥ 2014. 8. 22.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

-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지원 심사위원 풀 개편(700여명 → 400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인사 비중 확대),
▲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 배제(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도입),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일반상영관까지 지원대상 확대),
▲건전애국영화 제작지원(영화발전기금 50억원, 연내)

나.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과 동성아트홀 등 배제

1)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심사과정

-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자료 중 사업목적 및 개요 등은 앞서 살펴본 2013년도와 다름이 없다(선정영화관 수: 전국 25개 영화상영관 내외). 그리고 심사세척에서의 심사기준 및 배점을 보면, 기 지원극장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 사업주체 부문 80점, 사업운영 부문(약정서 의무사항 준수) 10점, 상영관 시설 부문 10점, 신규 지원극장의 경우 사업주체 부문 90점, 상영관 시설 부문 10점 등으로 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재적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70점을 얻은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 사업자 수 이내에서 지원대상후보 사업자를 선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2차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요강」을 보면, 사업목적 및 개요 등은 위에서와 본 바와 같고, 다만 “선정영화관 수”에 대해서는 “심사세척의 선정기준 점수를 득한 상영관에 한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토록 정하였다. 그리고 심사세척 또한 개정하여 적용하였는데 심사기준 및 배점 항목을 보면 기 지원극장의 경우 사업주체 부문 80점은 동일하나 사업계획 20점, 사업수행 능력 40점에 예술영화 수급구조 안정에 대한 기여도 및 지원금 의존률 개선 및 자구책 마련 계획

등 “지원파생 효과” 관련 20점, 상영관 시설 부문은 20점으로 배점이 높아졌다. 1차와 2차의 기 지원극장 대상의 심사기준 및 배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심사세칙	2차 심사세칙
1. 사업주체 부문 : 80점 가. 사업계획 (30점) 나. 사업수행능력 (40점) : 구성인력의 전문성 등(20점), 전년도 사업실적(20점) 다. 지원 파생효과 (10점)	1. 사업주체 부문(80점) 가. 사업계획 (20점) - 프로그래밍 및 홍보 실적 및 계획 - 신규관객 발굴 실적 및 계획 나. 사업수행능력 (40점) - 구성인력의 전문성 및 재무상태 건실도 - 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전년 대비 운영 개선 실적 등 다. 지원 파생효과 (20점) - 예술영화 수급구조 안정에 대한 기여도 - 지원금 의존률 개선 및 자구책 마련 계획
2. 사업운영 부문 : 10점 가. 약정서 의무사항 준수(10점) : 의무상영일수,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이용 등(10점)	2. 상영관 시설 부문(20점) 가. 영사·음향시설의 성능(10점) - 영사음향 시설 관리 및 운영인력 전문성 등 나. 영사·환경의 적절성(10점) - 시설 편의성 및 관람환경 개선 실적 및 계획 등
3. 상영관 시설 부문(10점) 가. 영사·음향시설의 성능(5점) 나. 영사·환경의 적절성(5점)	

② 2014년 이 사업 관련하여 당초 신청은 2014. 3. 17.~3. 21. 동안 모두 31개 스크린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2014. 4. 16.~4. 21. 신규신청 6개관 대상으로 상영관 시설 등 기술평가와 예비심사를 열었는데, 심사결과 대구 동성아트홀 등 21개 극장 25개 스크린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다.

접수 번호	상영관명	지원현황	구분	좌석수	정액지원금	기본 보조금(85%)
1	광주극장	지원극장	단관극장	856	65,700,000	55,845,000
2	아트씨어터 씨앤씨	지원극장	단관극장	200	65,700,000	55,845,000
3	동성아트홀	지원극장	단관극장	201	65,700,000	55,845,000
4	중앙시네마	지원극장	단관극장	144	51,903,000	44,117,550
6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극장	단관극장	200	65,700,000	55,845,000
7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지원극장	지자체	98	24,341,850	20,690,573
9	영화공간 주안 2관	지원극장	지자체	136	29,959,200	25,465,320
10	국도엔가람예술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43	51,640,200	43,894,000
11	거제아트시네마1관	신규극장	단관극장	219	65,700,000	55,845,000
13	대전아트시네마	지원극장	단관극장	196	64,714,500	55,007,325
14	KU씨네마테크	지원극장	단관극장	152	53,874,000	45,792,900

접수 번호	상영관명	지원현황	구분	좌석수	정액지원금	기본 보조금(85%)
16	아트나인 0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2	23,454,900	19,936,665
18	허리우드클래식	지원극장	단관극장	300	65,700,000	55,845,000
20	KT&G상상마당시네마	지원극장	기업체	77	21,237,525	18,051,896
21	필름포럼 1관	신규극장	단관극장	90	38,598,750	32,808,938
23	씨네코드선재	지원극장	단관극장	232	65,700,000	55,845,000
24	CGV압구정 4관	지원극장	멀티플렉스	94	23,750,550	20,187,968
27	CGV오리 8관	지원극장		101	24,785,325	21,067,526
28	CGV 천안 10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9	24,489,675	20,816,224
29	CGV서면 5관	신규극장		84	22,715,775	19,308,409
30	아트하우스모모 1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38	50,391,900	42,833,115
31	아트하우스모모 2관			138	50,391,900	42,833,115
33	롯데시네마 주엽6관	지원극장		97	24,194,025	20,564,921
37	롯데시네마 청주4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7	24,194,025	20,564,921
39	롯데시네마 구미10관	신규극장		128	28,776,600	24,460,110
합계	19개 극장 25개 스크린				1,093,313,700	929,316,475

그런데 2014. 6. 24. 제8차 영진위 정기회의에서는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예비심사 결과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위원 4인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본연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원 4인의 반대로 부결하고, 이 사업 재공모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 “예술영화전용관 실질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개선책을 토대로 한 사업자 선정 필요”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5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③ 2014. 7. 7.~7. 18. 재공모를 통해 총 31개 스크린이 신청 접수를 하였다. 당시 심사일정으로는 2014. 8. 8.~8. 14. 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평가를 재택 및 평가회의를 거쳤고, 2014. 7. 22.~8. 10. 신청 접수한 31개 스크린 모두에 대하여 상영관 시설평가를 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는 김OO, 한O, 오OO, 오OO, 신OO, 장OO, 김OO였으며 예비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총18개 극장 20개 스크린에 대해 지원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트씨어터 시앤씨, 동성아트홀, 중앙시네마, 거제아트시네마1관, 대전아트시네마, CGV 압구정, 오리, 천안, 서면 등은 재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가운데 아트씨어터 시앤씨, 동성아트홀, 거제아트시네마1관, 대전아트시네마는 2013. 9.~10월 사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를 상영한 극장들이다. 또한 재차 선정된 광주극장, KU시네마테크, 영화공간 주안,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등도 이 때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극장들이다.

번호	상영관명	지원현황	구분	좌석수	정액지원금	기본 보조금(85%)
1	광주극장	지원극장	단관극장	856	65,700,000	55,845,000
2	롯데시네마 주업 6관	지원극장	멀티플렉스	97	24,194,025	20,564,921
3	롯데시네마 청주 4관	지원극장	멀티플렉스	97	24,194,025	20,564,921
4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지원극장	지자체	98	24,341,850	20,690,573
5	씨네코드 선재	지원극장	단관극장	232	65,700,000	55,845,000
6	허리우드클래식	지원극장	단관극장	300	65,700,000	55,845,000
7	영화공간주안 2관	지원극장	지자체	136	29,959,200	25,465,320
8	KU시네마테크	지원극장	단관극장	152	53,874,000	45,792,900
9	아트나인 0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92	39,091,500	33,227,775
10	아트하우스 모모 1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38	50,424,750	42,861,038
11	아트하우스 모모 2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38	50,424,750	42,861,038
12	필름포럼 1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92	39,091,500	33,227,775
13	KT&G 상상마당시네마	지원극장	기업체	77	21,237,525	18,051,896
14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극장	단관극장	200	65,700,000	55,845,000
15	국도예술관	지원극장	단관극장	143	51,656,625	43,908,131
16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아르떼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43	16,211,475	13,779,754
17	롯데시네마 대구 9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114	26,707,050	22,700,993
18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관	신규극장	멀티플렉스	93	23,602,725	20,062,316
19	미림극장	신규극장	단관극장	283	65,700,000	55,845,000
20	아트나인 9관	신규극장	단관극장	58	30,714,750	26,107,538
합계	총 18개 극장 20개 스크린 지원				834,225,750	709,091,889

- ④ 당시 다양성영화진흥팀 000(진술조서, 2018. 5. 15.)은 “아마도 배제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시설 부문’ 배점을 높이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아트홀 외에도 씨앤씨, 대전아트시네마, 거제아트시네마의 경우도 프로그래머들이 독립영화계랑 친분이 두텁고 정부비판적인 다큐멘터리 상영을 많이 해왔습니다.”라 하고, 위 3개 극장의 경우도 재공모에서 탈락하는데 이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의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대구 동성아트홀 등 배제의 경우

① 2014. 9. 19.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 작성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 보고」를 보면, 문체부는 동성아트홀 등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경과를 설명하며,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예술영화 상영 공간 확보라는 성과는 있으나 다년간 지역 상영관 연명책으로 변질되었다는 영진위 중심의 대응 기조 논리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위 같은 증거기록 중 이OO의 진술조서, 2017. 1. 3.) 이를 보면, 2014년 사업 추진 시 “특이 사항”으로 “1차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나(19개 상영관 25개 스크린), 영진위 전체회의에서 보류”하고 “전용관 지원사업 성과 검토 후 사업 재공고(6. 24.) 및 재선정(8. 25.)”한 사실이 기재되고, 이와 같은 “재공고 사유”로는 “기존 지원상영관이 모두 선정되는 반면, 성과를 내는 대기업 예술영화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사업 효과 및 방식 재검토 필요(*최소 73일간 한국예술·독립영화 상영조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 등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적인 예술독립영화 유통정책을 수립,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p>③-2)</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 보고</p> <p style="text-align: right;">2014. 9. 19. 영상콘텐츠산업과</p> <p>□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기간 : 13.4억원 / 1년 - 영화다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영화상영관이 예술독립영화를 상영비용이상 상영할 경우 운영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00일까지 투자규모에 반례하며 투자액유율의 6~10% 지원 ○ 지원 조건 : 예술영화 219일 이상 상영, 이용 73일은 한국예술영화, 73일 중 50일 이상은 한국독립영화 상영 ○ 2013년 대상 영화상영관 : 19개 상영관 25개 스크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1, 경기1, 인천2, 광주1, 부산2, 대구1, 경북1, 경남1, 강원1, 충북1, 대전1 · 대기업 예술영화관 7개관 포함(OOV 4개, 롯데시네마 2개, KT&G 1개) □ 14년 사업 추진시 특이사항 ○ 재공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나(19개 상영관 25개 스크린), 영진위 전체회의에서 보류(4.23일) - 전통관 지원사업 성과 검토 후 사업 재공고(6.24.) 및 선정(8.25.) ○ 재공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상영관이 지원금을 관객 서비스나 프로그램보다 운영비에 사용하고, 지원금이 일정료 예산보다 높은 등 지역 단편 출격도, 변경 - 기존 지원상영관이 모두 선정되는 반면, 성과를 내는 대기업 예술영화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사업효과 및 방식 재검토 필요 · 최소 73일간 한국예술·독립영화 상영 조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공고 경과 : 18개 상영관 20개 스크린(1491일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보다 5개 스크린 감소 - 서울 10, 경기 1, 인천 2, 광주 1, 충북 1, 전북 1, 강원 1, 부산 2, 경북 1 - 대기업 예술영화관 6개관 포함(롯데시네마 5개, KT&G 1개) - 1차에서 선정되었으나 떨어진 상영관 9개 - 대구 동성아트홀, 대전아트시네마, 부산 아트시네마(이앤씨, 연을 홀인시네마, 건대아트시네마) 영화공간 3개, 필름유원 1개, KJ&A(이앤씨, 롯데시네마) 부흥 - 재공고에서 새로 신청된 상영관 4개 · 미원아트홀, 롯데시네마 예술영화관 3개(연대대구, 대구, 선명시네마) □ 관련 상황 ○ 재공고에서 탈락한 일부사업자들이 언론, 국회 등에 대응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편 출격기, 대기업 멀티플렉스(롯데시네마) 파주기, 재공고 할 만큼 시급한 경제적 배경에 대한 피구상 표출 - 중앙일보 기사 준비 중(인사위), 오마이뉴스(9.16 보도), 세경서민주연합 출판사 지원실 관련 보도 요청(9.24 예정) ○ 향후 탈락 상영관들이 정보공개 청구, 설명 필요 가능 □ 대응 기조(영진위 중심) ○ 10년 이후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영화 상영 공간 확보라는 성과는 있으나 다년간 지역 상영관 연명책으로 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원 상영관들의 탈락률이 0%, 심사 변별력 미흡 - 지난 10여년간 운영자 중심에서 관객 중심으로 개선 필요 ○ 예술영화 관객 수가 감소상태, 한국예술·독립영화 경쟁력이 미흡한 현실 개선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예술영화진흥위원의 관람객 수 50% 이상을 수취한 멀티플렉스 5명(관객 차지, 10%를 차지하는 다량상영화시장에서 한국예술·독립영화 점유율이 30%에 못미침) ○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적인 예술독립영화 유통정책 수립, 15년 추진
--	---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기록 중 이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4. 24.)에는 “2014. 4. 23.경 영진위의 2014.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 당일 신 OO에게 전화하여 동성아트홀 하나만 지원 배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개편 검토 후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확실하게 김소영 비서관에게까지 답변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신OO 행정관으로부터 김소영 비서관이 ‘문체부가 별 일 없이 책임을 지고 잘 하라고 말했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약 2~3 시간 후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김OO이 ‘김소영 비서관이 조현재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동성아트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면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받아”, “영진위 문OO에게 전화를 걸어 ‘BH에서 동성아트홀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였고, 이후 문OO으로부터 영진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동성아트홀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영진위 문OO과 함께 ‘매출규모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적정하지 않은 극장에 대한 지원배제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대구 동성아트홀, 대전 아트시네마, 부산 아트시어터씨엔씨, 안동 중앙시네마, 거제 아트시네마 총 5개의 상영관을 예술전용관사업에 배제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③ 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 기록 중 김소영 증인신문 녹취서(2017. 6. 23.)에는 “2014. 3 경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영진위의 후원으로 상영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났던 것을 기억하며 동성아트홀의 지원 배제에 관해서는 모철민 수석의 지시를 받아 조현재 차관에게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④ 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기록 중 문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19.)에는 “2014. 4. 23.경 예술전용관사업의 예비심사 종료 후 영진위 9인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이OO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의결을 하였느냐?, 청와대에서 동성아트홀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니 보류해라.’는 지시를 전해 듣고 이를 영진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후 9인 영진위 위원에게 청와대의 지시라고 전달하면 외부에 공개될 것 같아 사무국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설명하며 동성아트홀이 포함된 예비심사 결과 안건의 상정을 보류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⑤ 위 문OO(진술조서, 2018. 1. 29.)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 2013. 3.경 대구한국일보 인터넷판 기사가 국정원의 검열로 문체부나 영진위 본부장 김

OO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예술전용관 1차 예심 결과를 무위로 돌리고 재공모를 하기 위해, 영진위는 지원금의 의존도가 80% 이상 되는 극장, 현장 실사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심사 세칙을 변경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 자료 및 절차를 준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업무 협의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⑥ 위 같은 OOO 작성의 진술서(2017. 12. 7.)에는 “많은 통로를 통해 알려진 대로 2014년에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예비심사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대구 동성아트홀을 <천안함프로젝트> 상영을 이유로 배제하기 위해, 위원회 사무국의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상의 미비를 외견상의 이유로 삼아 예비심사결과를 무위로 돌리고 지원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모하였고, 그 결과 동성아트홀은 탈락하였음. 이미 확정된 예비심사결과를 무위로 돌리면서, 당시 국내진흥부 부장은 예비심사위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예시심사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예술영화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의 재편과 문제영화 검열

가. 사업재편의 논리

- ① 2014. 4.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 작성의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문영2-2)를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체부는 당시 예술·독립영화 상영을 영화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영화관 운영자(25개관) 13. 4억 원을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좌석 점유율에 따른 제도 재검토” 후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영화제 또는 극장 중심이 아닌 우수영화 상영지원 형태로 전환하되, 우수영화 선정과정에서 문제 영화를 여과시킬 수 있는 심사 시스템 구축 병행”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지원 현황('14년 기준)

- (제작 지원)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단편, 장편, 12억원)
 - * 단편: 5천만원 미만, 60분 이내 / 장편: 5천만원 ~ 4억원 미만, 60분 이상
- (인프라 지원) 전용관 운영지원
 -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13.4억원) : 예술·독립영화 상영을 영화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영화관 운영자(25개관)
 - * (지원내용) 운영보조금(최대 좌석수 200석까지 좌석규모에 연동하여 좌석 점유율의 6~10%를 지원), 홍보비
 - ** (지원조건) 예술영화 219일 이상 상영, 73일은 한국예술영화, 73일 중 50일 이상은 한국독립영화 상영
 - 독립영화 전용관 지원(8.9억원) :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공간을 제공하여 다양성 활성화 및 관객접근성 증대
 - * (지원대상)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전용관
- (투자지원)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 펀드(150억원/'13.9월 결성/영화기금 100억원 출자, 2018년까지 운영)
 - 독립영화 40% 이상, 중저예산영화 60% 이상 투자(집행조합원: 산수벤처스)
 - * (독립영화) 메인투자의 경우 순제작비 4억원 이내, 부분투자의 경우 2억원 이내
 - ** (중저예산영화) 순제작비 30억원 이하
- (단체지원)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 공모사업 선정(7.2억원) : 영화 관련 학회(세미나)연구 발간, 국내 영화제(광주국제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15백만원),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등), 시상식(대중상, 청룡영화상 등) 등 지원
 - 지정위탁(1.1억원) : 서울독립영화제

□ 개선방안

-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 ⇒ 좌석점유율에 따른 지원 제도 재검토
- 독립영화 단체지원 공모사업 ⇒ 2013년부터 예산규모를 매년 20%씩 삭감하는 등 축소 중(향후 폐지 및 재검토 계획)

※ 향후 사업 개선 방향 :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영화제 지원 및 극장 중심이 아닌, 우수영화 상영지원 형태로 전환하되, 우수영화 선정과정에서 문제 영화를 여과시킬 수 있는 심사 시스템 구축 병행

- ② 한편, 이 무렵인 2014. 4. 11. 영화진흥위원회는 김OO를 소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를 다루는데, 「2014년도 제2차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2014. 4. 22.)를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동 사업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예술영화전용관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도 요구됨”, “지역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의 실상에 대한 담당자

의견 수렴의 기회가 필요하므로 올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약정 시 다양성 소위 위원과 전용관 담당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기로 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2014. 6. 20. 제3차 영상문화다양성 소위원회 회의에서는(「2014년 제3차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4. 6. 24.)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개선에 관한 이슈페이퍼 보고’에 대해) 동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한 예술영화전용관 문제 현황과 저조한 운영 실적 및 이에 다른 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함. 이는 이전에도 다양성소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 이슈페이퍼에서 제시한 개선(안)도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단기적인 개선(안)을 바로 적용했을 시 행정적, 법적 문제 발생과 더 나아가 동 사업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가 됨”, “단기적인 개선(안)을 사무국에서 당해 연도에 즉각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다양성소위에서는 사업 개선을 위한 일정 부문 지원조건 또는 제약을 두는 장치를 적용하되 올해까지는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표명을 의견서를 통해 9인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③ 이와 관련하여 2015. 9. 3. 「예술영화 유통 배급지원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회의록」을 보면, 당시 다양성진흥팀장 김OO는 당시 권OO 심사위원장의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그간 해오던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위탁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 영화계의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사업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예술영화 전용관지원사업의 개선점을 고민해왔으며, 2014년 연구용역까지 수행한 후, 영화인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또는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개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④ 2015. 3. 2. 영진위는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위원회가 미리 선정한 26편’에 대해서만 배급과 개봉을 지원, ‘자기검열’이 작동해 정부 비판 영화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파행’ 등 동 지원사업의 개선안 검토와 관련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제5기 위원회(위원장 김OO) 시기인 2014년부터 사업내용 재검토가 진행되어왔으며, 관련 이슈페이퍼 마련과 개선방

안 연구용역 실시와 더불어 위원회의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및 관련 극장, 단체 등 영화계 사업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업개선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4년 초 부터 동 사업의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원회는 영화문화다양성소 위원회를 통해 동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공유, 논의하였고(2014년 제5차~8차 회의, 총 4차), 지난 연말 연구용역 보고서 완료 후, 제안된 개선안들에 대한 기존 사업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1월 23일 부터 기존 사업관계자(극장, 배급사 등)들과 간담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는 동 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그 어떤 방안도 확정되어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위원회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폐지 내지는 다른 사업과 통폐합 결정을 이미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아직 의견수렴 과정 중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기정사실화하여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나. 사업재편의 과정

- ① 위와 같은 영진위의 해명이 있고 바로 다음날인 2015. 3. 3. 문체부는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에서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지원영화 20여편)”하고 관련 협·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해당 배급사에 영화 마케팅 및 상영관 확보 지원” 등 추진방안과 또한 이는 “정부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한 직접 지원 배제”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 사업 개편 의도에 대해 밝히고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는 명분”이 타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안주의												
<p>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이프로 전용관 1곳 이전 (서울→지역) • 프로그램 지원 운영 •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지원 중단 • 아리랑시네센터 위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추진계획 이행하지, 적정 시기 고려 • 국영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 엔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 • 프로그램은 국립 건설하여 위탁시 발생할 만한 가능성 논란 원천 배제 • 공공기관인 방송사로부터 위탁은 문제없음 • 국회에서 수차례 서울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했으므로 지역이론 사당하여, 명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개선 명분 타당 •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지역 균형성 확보 및 지역독립영화 상영 활성화 목적으로 개선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국영 (중앙지) 중심에서 관객(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보다 많은 지역에서 좋은 예술영화를 전성적으로 운영 									
<p>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화전용관 시설 개선 • 개관할 있는 영화 선정 • 사업 위탁관련 청·담화 • 해당 재급사에 영화 마케팅 및 상영권 확보 지원 • 상영권은 지역 멀티플렉스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현재</th> <th>개선시</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범위</td> <td>-</td> <td>20여년</td> </tr> <tr> <td>지원 규모액</td> <td>15~20억</td> <td>30~50억</td> </tr> </tbody> </table>	구분	현재	개선시	지원 범위	-	20여년	지원 규모액	15~20억	30~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추진계획 이행하지, 적정 시기 고려 • 정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한 지원 배제 •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는 명분 있음 • 사업 계획 변경, 예술영화 성격 상용 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추진시키는 조급 필요 • 영화에 기타관 논리, 선명히 구분이 없기 경제 타당성이 있는 개관을 소극적·양적으로 지원할 필요 없으나 영화계-연관-이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몇 분이기 화의 필요 • 따라서, 시기조절, 분담추진 등해 개선 사업의 문제점 부각 및 개선 필요성을 제대로 환기
구분	현재	개선시										
지원 범위	-	20여년										
지원 규모액	15~20억	30~50억										

② 이러한 개편안 마련 과정을 거쳐 영진위는 2015. 6. 30. 정기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 요강」을 살펴보면, “한국 예술영화 유통·배급 활성화를 통한 다양성영화 문화 향유 강화”, “관객의 다양성영화 문화 접근성 증진을 통한 관람기회 충족 및 관객 저변 확대”를 사업목적으로, 사업명은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사업시기는 2015. 8.~2016. 7(1년간), 사업내용은 “위탁수행자를 통해 배급자에게 예술관의 상영권 확보 비용과 일정 홍보 지용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한국예술영화 24편 내외(반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정작은 48편으로 확대)” 등이다.

③ 2015. 7. 영화진흥위원회와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박자료를 마련하였다. 2015. 7. 1.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은 영진위 OOO 심사지원팀에게 보도자료의 초안(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2015. 7. 2. 자정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은 위 OOO에게 “형식적인 마무리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송부하고, 위 OOO은 7. 2.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에게 수정안 및 ‘최종버전’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3).

3) 이 파일의 이름은 ‘150701_예술영화전용관_사업_개편_관련_입장(문체부 가이드라인).hwp’이다.

〈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개편 관련 영진위 입장 〉

1. 전체적으로 사업 개편 취지 설명

• (주장) 진흥사업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표현의 자유 억압

⇒ (반박) 누적된 문제 개선, 상영관 중심에서 관객 중심으로 개편

- (원칙) 공급자(상영관) 중심에서 관객(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개편, 우리나라 예술영화 진흥에 초점
- (사유) 기존 사업 문제점(10년간 적절한 평가와 개선없이 존속, 상영관 운영비로 과다 사용되는 등 연명책으로 변질, 관객 조사 결과 부정적 인식, 해외예술영화 중심 상영 등)
- (사업내용) 좋은 예술영화를 선정(연간 최대 48편), 마케팅 비용과 상영관 확보 비용 지원

2. 성명 내용 반박

• (주장 1) 예술영화전용관 프로그램 자율성 침해

⇒ (반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건 부여 필요

- 좋은 예술영화를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주기적으로 상영하여 관객의 접근성과 관람 안정성 향상 취지
-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건이며,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의 프로그램 자율성 침해는 왜곡된 주장
- * 분기별 최대 12편(연간 최대 48편)의 예술영화를 선정, 해당 영화를 일정기간 또는 일정회차 이상 상영하는 경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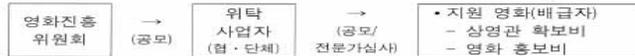
- ④ 2015. 8.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 작성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개편안」에는 한국예술영화 48편을 선정하여, 해당 영화 상영 시 지원토록 하는데 이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2고합102 증거기록 중 이OO의 진술조서(2017. 1. 3.)에는 “영진위가 위탁 사업자를 통해 지원 대상 영화를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 영화를 여과시킬 수 있는 심사 시스템 구축 병행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7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안

□ 사업 개요

- (개요) 우수 예술영화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예술영화 상영관 확보 비용과 홍보 비용 지원(상영관 중심에서 관객 중심으로 전환)
- (시기) 2015년 8월 ~ 2016년 8월(1년간)
- (대상) 한국 예술영화 최대 48편 선정, 해당 영화 상영시 지원
- (사업방식) 위탁 수행자 선정 후 지원 영화 및 조건, 금액 결정



□ 세부 사업안

- (대상) 공모를 통해 위탁 사업자, 지원 대상자(영화 기준) 선정
 - (위탁 사업자)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 (지원 대상) 전문 심사위원들이 연간 최대 48편의 예술영화를 선정, 이를 상영할 경우 지원(분기별 12편씩 일괄 선정)
 - 위탁 사업자가 전문가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영진위는 심사세척 마련)
- (지원 내역) 영화상영관 확보 비용, 영화 홍보 비용 지원
 - (상영관) 전국 예술영화전용관 15개, 지역 멀티플렉스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화전용관(15개) : 상영관별 47,424,000원씩 총 7.1억원 - 문화부 지정 예술영화전용관 대상 선정 • 멀티플렉스(10개) : 상영관별 26,676,000원씩 총 2.6억원, 지역별 배분
--
 - (홍보비) 1편당 4.2백만원 내외(4주 상영을 위한 광고·홍보 용도)
- (지원 조건) 대상 영화 중 2편을 4주간 매주 특정일(주말 중) 또는 일정 회수 이상 중 선택하여 상영, 관객에게 지속적·안정적 관람 기회 제공
 - 예술영화전용관 : 주말 2일 또는 주중 12회 중 택하여 편당 6회 상영(연간 624회)
 - (인센티브) 주말 온관 상영시 5백만원, 추가 30%(187회) 이상 상영시 5백만원
 - 멀티플렉스 : 주말 중 1일 택일하여 편당 3회 상영(연간 312회)
 - (인센티브) 추가 30%(93회) 이상 상영시 5백만원

⑤ 위 같은 김OO 작성의 진술서(2017. 12. 7.)에는 “2014년 가을 예술영화전용관중 몇 개의 극장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자, 2015년에는 아예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을 ‘예술영화유통배급’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40여편의 작품을 트는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만 재정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변경.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영화창작자, 영화배급자, 예술영화전용관운영사업자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받았고, 사업방향 당시 동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은 동 사안에 대한 간담회를 주관했는데, 당시 참석했던 자의 말에 따르면 사업변경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한 참석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대답만 영진위 실무자들이 되풀이하여 이에 분노하여 참을 수 없었던 일부 참석자들은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

- ① 「2015년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위탁수행자 선정 심사 결과보고」 등 관련 심사자료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2015. 9. 3. 이 사업 예비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사위원으로는 권OO, 이OO, 편OO, 이OO, 김OO이었고, 지원단체인 한국영화배급협회는 재무제표가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어 있고, 유동부채가 13억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위 한국영화배급협회의 대리인은 저작권업체인 회원사(권리자)들에게 저작권료 징수분배금액을 고지하고 지급을 유보한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심사위원장 등의 “영화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사업인데 역량이 크지 않은 업체가 맡는 것에 대한 부작용” 및 “재공모”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평점 결과 70점 이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 업체가 위탁수행자로 선정되었다.

- ② 당시 다양성진흥팀 OOO(진술조서, 2018. 5. 15.)은 “제가 귀국한 다음날인가 심사에 들어가서 이미 내정되어 있는 단체(한국영화배급협회),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을 갖고 심사 실무를 진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는 2015년 초에 문체부로부터 이 사업 위탁수행업체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1차 공모에서 다른 지원단체가 없어서 선정 진행을 하지 못하고 2차 공모에서 가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 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사업재편의 본질

- ① 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신OO의 진술조서(2017. 1. 7.)에는 “문체부와 함께 검토한 이 사업은 영화관 자체에 대한 지원금 교부에서 일정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지원방식으로 개편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 ② 같은 법원, 같은 기록 중 이OO 진술조서(2017. 1. 3.)에도 “예술영화전용관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 개편은 조건 충족을 위하여 일정기간 영화관이 상영하고 싶은 영화를 틀지 못하는 것이고, 영진위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 대상 영화를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이빙 벨>같은 영화가 정부 지원사업 차원으로 상영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③ 위 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5. 6. 30. 문체부 이OO 사무관→정OO 과장에게

발신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영진위 9인 위원회에서 예술영화전용관사업 심의결과 지원작품편수를 당초 24편에서 48편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사업구조는 변함 없으며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 영화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작품 수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쟁점영화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위 같은 사건기록의 정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6. 5.)에는 2015. 6. 30. 위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정부 비판적인 쟁점영화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져 영진위가 예술 영화 선정 과정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배제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고, “또한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 자금운용, 지원금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개편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성아트홀 등에서 반정부적인 영화 상영이 문제시되어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 자체를 개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358	지체	수신	발신 일시: 2014-11-23 12:19:28 수신 일시: 2014-11-23 12:19:28	내 용 : 정부에 공유합니다	번호 : [redacted] 이름 : [redacted]	메시지
4457	발신	MMS 수신	발신 일시: 2015-06-30 19:39:22	내용 : 영진위 9인위원회에서 예술영화전용관사업 심의 결과 지원작품편수를 당초 24편에서 48편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사업구조는 변함없으며,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 지원받는 영화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작품 수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쟁점영화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 [redacted] 이름 : [redacted]	메시지
6472	발신	SMS 수신	발신 일시: 2015-07-01 09:19:14	내 용 : 예술영화지원관련 어제 영진위결과 요청하드장관계 보내주실!	번호 : [redacted] 이름 : [redacted]	메시지
6474	발신	발신	발신 일시: 2015-07-01 09:25:47	제 목 : 전달 제목없음 내 용 : 어제 영진위 9인위원회에서 예술영화전용관사업 심의 결과 지원작품편수를 당초 24편에서 48편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일부 위원 문제 지속제기) 사업구조는 변함없으며,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 지원받는 영화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작품 수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쟁점영화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관리하 계획입니다.	번호 : [redacted] 이름 : [redacted]	메시지

- ⑤ 이에 대하여 OOO(진술조서, 2018. 5. 15.)은 “제가 귀국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예술영화유통배급 지원 사업은 어려운 개편안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24편으로 너무 좁고⁴⁾, 프라임 시간(관객이 잘 드는 황금시간대)에 선정된

작품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횟수가 너무 많았는데, 그러한 프라임 시간대에 무조건 상영을 해라하면 그 프라임 시간대에 상영하는 비용에 부합하는 관객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지원금을 아무리 받아도 정부에서 억지로 틀어라는 영화를 틀어 봐야 관객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보다 손실이 크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이 사업의 정책적인 방향,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말살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회 진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극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있는 극장을 잘 지켜내자’ 라면서 조건을 완화시켜주겠다, 최대한 영화도 동의할 수 있는 영화를 많이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득을 하였고 그래서 일부 극장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문제영화’ 검열 및 배제 사실

- ① 한국영화배급협회가 2017. 1. 29. 작성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2018. 5.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선정위원회 명단 및 심사운영세칙」을 보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작품선정위원들로는 장OO, 최OO, 편OO, 김OO, 진OO 등이 있다. 이 작품 선정 심사위원회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1차(2006. 1. 28.) 17편 신청작품 중 6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이 때 <독도의 영웅들>이 탈락하였고, 2차(2016. 3. 24.)는 11편의 신청작품 중 5편의 작품을, 3차(2016. 5. 19.)는 8편의 작품 중 3편의 작품을, 4차(2016. 7. 18.)는 12편의 작품 중 6편의 작품을, 5차(2016. 9. 9.)는 10편의 작품 중 2편의 작품을, 6차(2016. 11. 11.)는 21편의 작품 중 11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이 때 영화 <22(TwentyTwo)>이 탈락하였다.
- ② 위 같은 OOO(진술조서, 2018. 5. 15.)은 위와 관련하여 당시 “작품선정은 위탁수행자인 배급협회에서 하였고, 작품 선정위원회 구성은 영진위에서 하여서 연간 구성안을 배급협회에 주었습니다.”라하고 또한 위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진술청취보고, 2017. 11. 23.) “추첨 방식의 예비 심사위원 후보자 선정은 없었다. 사업팀에서 기존 풀에서 3~5배수 정도의 후보자를 추슬러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후보자를 빼거나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섭외 순서까지 정해서 주

4) 2017. 11. 23. 진술에 의하면 따라서 연간 선정 작품편수를 48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위 OOO은 제시하여 의결되도록 하였다.

었다. 따라서 심사위원 선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거의 대체로 반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는 위원장이 후보자와 협의 순위,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나 형식상, 문서상으로는 심사지원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③ 위 같은 000(진술청취 보고, 2017. 11. 23.)은 작품선정과 관련하여 “김00은 심사위원 선정을 한다거나 작품선정위원회 48편의 영화를 선정하는데 그 영화에 체제비판적 내용이 담겨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였다. 그에게는 작품 목록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분기별로 공모, 접수 편수가 당연히 보고되었다. 당시 독립영화계는 공모사업 지원을 대부분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접수 편수와 시놉시스가 팀장, 본부장에게 보고되면 작품선정위원회가 ‘친정부적’ 성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또한(진술조서, 2018. 5. 15.) “위와 같은 선정위원회 구성은 영진위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정부방침에 잘 따르고 친정부적인 영화들을 선정하여 줄 만한 사람들로 구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④ 위 같은 000(진술조서, 2018. 5. 15.)은 “당시 독립영화인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품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보이콧을 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될 만한 작품들이 많이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김00 본부장은 국정원으로 추측이 되는 곳에 신청작품 리스트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00 본부장은 지금 기억하기로 독도문제와 위안부를 다룬 작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라면서, 이와 같이 하여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TwentyTwo>, 독도문제를 다룬 <독도의 영웅>들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2015. 6. 직제개편과 이 사업 관련성

- ① 2015. 6. 영화진흥위원회는 직제를 개편하였는데, 1국 5본부 19팀 체제로 기반조성본부에는 공정한경센터와 다양성진흥팀, 영상미디어센터 등이 있고 예술영화전용관 등의 사업은 위 다양성진흥팀의 소관이었다.
- ② 2015. 7. 이후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으로 있던 김00(진술조서, 2017. 12. 7.)는 “2015. 7. 조직개편 시 인사이동 때 기반조성본부장으로 김00이 임명되면서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이 문제시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김세훈 위원장이 김00에게

폭탄으로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세훈도 김OO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 힘든 거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은 잘 해낼꺼니까’라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일을 던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수행체계 강화”의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심사지원팀을 신설하여서 심사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지에 맞게 구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양성지원팀, 창작지원팀을 분리하여서 독립영화 창작과 활성화업무에서 이것을 제작과 배급을 분리함으로써 뭔가 종합적인 업무의 계획과 수행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위상이 바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이 사업 관련 여론왜곡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실 및 현 영진위 노조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이 사업 재편이 완료된 이후 2015. 10. 16. 다양성진흥팀 사업담당자 위 같은 OOO은 “서울경제 발언대”의 초안을 작성하여 기반조성본부장 김OO, 김OO(다양성진흥팀장), OOO(직전 홍보협력팀장, 심사지원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직후인 같은 날 위 OOO은 김세훈 위원장에게 2차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주요 수정 부분은

1. 한국예술독립영화→한국 예술영화(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사업이기에 ‘독립’은 뺐습니다).
2. 영화발전기금 면제 혜택 받고 정작 한국예술영화 상영안하는 부분 추가” 등이며, 원고 마감은 10. 21.인데 “그 전에 문화부와 조율 및 필자 섭외 등을 마쳐야합니다. 위원장님 검토해주시면 재수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2015. 10. 17. 위 OOO은 미래전략본부장 이OO에게 “위원장님 확인하신 원고입니다(3차 수정). 아직 이OO 사무관에게는 안 보냈고요, 확인하시고 월요일 쯤에 문화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의논하시고…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구요. 이OO 사무관과 본부장님께 보내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본부장님께만 보냅니다”라며 3차 수정 초고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웹메일

제목 서울경제 발언대 원고
 보낸사람 " 000 " < @kofic.or.kr > 대리|심사지원팀/사무국/영화진흥위원회/kofic.or.kr
 보낸날짜 Sat, 17 Oct 2015 00:04:10 +0900
 받는사람 "이 00 " < @kofic.or.kr >
 파일첨부 파일명 [총 파일수 1개]
 [일반] 서울경제_발언대(3차_수정).hwp

본부장님,

위원장님 확인하신 원고입니다. (3차 수정)
 아직 이00 사무관에게는 안보냈고요.
 확인하시고 월요일쯤에 문화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의논하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이 00 사무관과 본부장님께 보내놓겠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우선 본부장님께만 보냅니다.
 월요일에 보내라~ 하심 보낼게요...

뒤이어 영진위원 김00는 2015. 10. 21. 영진위 홍보협력팀 직원에게 수정안을 송부하고, 뒤이어 같은 날 위 000은 서울경제 기자에게 “발언대 원고 보내드립니다. 1300자에 못 미치니... 되도록 원문이 유지되는 정도로 편집 부탁드립니다...영화진흥위원회 위원/영화제작자 정도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원고와 기고자의 프로필을 송부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0. 22. 『서울경제』 발언대에는 (김00/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및 영화제작자를 기고자로 하여) 「한국 예술영화 상영 늘려야」라는 제하의 기고글이 게재되었는데, “새로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은 우수한 한국 예술영화를 상영기회를 확보하고 작품당 수익성을 높여 좋은 작품을 지속 생산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특정영화의 상영을 강제하거나 배제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과 배제 조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는 2010. 3.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북한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는 2013. 4.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시네마스케이프 한국영화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 상영(2013. 4. 27. 5. 1. 2회 상영)되었다.

이후 2013. 9. 5. 이 영화는 메가박스 등에서 개봉하였으나 직후 특정단체들의 항의 시위 등이 있으면서 상영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말경까지 대구동성아트홀, 대전아트시네마 등에서는 이 영화를 계속 상영하였다.

2014. 3. 대구동성아트홀은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을 열어 이 영화를 비롯하여 14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이는 대구 지역의 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한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좌파 성향’의 영화를 상영하는 곳에 영진위가 지원하는데 대하여 질책하고 ‘페널티’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2014. 4.경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진흥사업 중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초 위 대구동성아트홀 등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극장이 다수 포함되었다. 관련 심사자료와 진술을 아울러 보면, 당초 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영진위 담당자는 문체부 소관부서인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지원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알아서 하라’고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의 김소영 비서관은 대구동성아트홀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가 책임져라’는 식의 확실한 조치를 당시 문체부 조현재 차관에게 하달하고, 이는 다시 김OO 콘텐츠정책관→영상콘텐츠산업과를 경유하여 영진위에 순차적으로 하달되었다. 관련 진술과 영진위 정기회의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당시는 이 사업 예비심사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영진위는 2014. 6. 24.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 재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진위는 ‘재공모’를 실시하면서, ‘시설부문’ 배점을 높

5) 이와 같은 언론보도를 김기춘 등 청와대가 접하는 계기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이 있고, 이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명확한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방식으로 세칙을 개정하고, 기존 지원극장들에 대해서는 시설부문 실사 및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평가를 모든 신청 극장들에 대하여 확대하였다. 당시 대구동성아트홀은 대체로 시설이 열악한 편으로 이러한 세칙의 변경은 배제를 실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보이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공모를 통하여 2014. 9. 대구동성아트홀은 지원 극장에서 탈락하였는데, 이는 정부비판적 문제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등을 상영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이다. 더불어, 아트씨어터 시앤씨, 거제아트시네마, 대전아트시네마 또한 당초 지원극장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재공모에서는 탈락하였는데, 이들 극장 또한 이 영화를 비롯하여 정부비판적 독립영화를 상영해왔던 곳으로, 위 동성아트홀과 동일하게 이러한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영진위 사업담당자와 문체부 공무원의 진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범죄일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성아트홀과 더불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된 지원배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으로의 재편 및 문제영화 검열

2014. 3. 위 김기춘 비서실장이 ‘좌파 성향’ 영화 상영관에 대한 제재 등을 지시한 이후, 문체부와 영진위는 독립영화 지원 및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등의 재편에 착수하였다. 2014. 4.경 문체부의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과 관련하여 ‘좌석 점유율에 따른 지원’을 변경하고 “문제영화를 여과시킬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진위는 ‘영상문화다양성 소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재편방안을 심의하는데, 이 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김OOO 감독을 비롯 독립영화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 사업 재편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의견 수렴 과정’의 외양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독립영화계 및 언론에서는 “위원회가 미리 선정한 영화’에 대해서만 배급과 개봉을 지원, ‘자기검열’이 작동해 정부 비판 영화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2015. 3. 이 사업 추진이 임박한 시점에 문체부는 사업을 위탁하여 영화를 선정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영화계와 언론, 야당의 관심이 고조된 집중된 시점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 그리고 이 방안에는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한 직

접 지원 배제”라는 추진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2015. 6.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예술영화 유통·배급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업은 위탁수행자를 통해 상영관 확보와 홍보비용을 일정 지원하고, 이 위탁사업자를 통해 선정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아울러 보면, 영진위에서 지원하는 극장에 대해 ‘문제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문체부 및 영진위가 극장 중심의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콘텐츠 중심의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이와 같은 문제영화를 여과시켜내기 위한 장치로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직접 연관을 갖는 영진위 사업 재편의 하나이다.

이에 더하여 문체부와 영진위는 사전에 확보된 한국영화배급협회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상영영화 선정에 직접 개입하였는데, 먼저 선정위원회를 심사관리 규정을 어기고 당시 영진위원장이 영화 선정위원들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당시 영진위 이 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청 접수한 영화 내역 및 시놉시스 등을 확인하여 문제영화를 걸러냈는데, 이 부서장이 국가정보원과 상시 채널을 유지해왔던 사실은[2017직영2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등에서 밝혀진 사실인 점, 이 채널을 통하여 독립영화제작·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다양성영화 개봉지원·영화단체 지원 사업 등에 국가정보원의 사전검열을 통해 특정 영화들에 대해 지원배제를 실행해온 점, 이 사업 담당자는 위 사업부서장이 신청 영화 내역과 시놉시스를 국가정보원으로 추정되는 기관에 보내고 문제영화를 걸러냈다고 진술하는 점을 아울러 보면, 이 ‘예술영화 유통·배급사업’ 관련 영화선정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검열 및 배제 지시가 작동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검열 과정을 통하여 위안부를 다룬 영화 <TwentyTwo>⁶⁾, 독도문제를 다룬 <독도의 영웅들>이 배제되었다.

이를 표로 단순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명	배제 영화관 또는 영화 사유	과정 및 방법
2014.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대구 동성아트홀, 부산 아트씨어터 시앤씨, 거제아트시네마, 대전아트시네마	·청와대→문체부→영진위 배제 지시 ·1차 선정 취소→심사세칙 변경→재공모를 통한 탈락
2015. 예술영화 유통·배급사업	<TwentyTwo>, <독도의 영웅들>	당시 정부가 금기시한 위안부 및 독도문제 영화 ·선정위원회 친정부 성향 구성 ·국가정보원의 검열

6) 이 영화는 영진위, 2016.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에서도 배제되었다.

더불어, 영진위원장은 2014. 4. 예술전용관사업의 예비심사(1차)가 종료된 후인 청와대(김소영 문체비서관)→문체부(조현재 1차관→이OO 사무관) 등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영진위에 하달된 ‘대구동성아트홀 지원배제 지시’는 같은 해 6. 정기회의 시에 영진위원장에게 보고되고 안건 상정이 보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영진위원장과 미래전략본부장 등은 이 사업 재편이 진행 중인 2015. 7. 영화계 등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감성적 접근”을 주문하고, 재편이 완료된 이후인 2015. 10. 관련하여 이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필 기고문 작성과 관련하여 확인 및 검토를 하는데 관여하였다. 결국 이로써, 당시 영진위원장 김세훈 및 미래전략본부장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적극 순응하여 특정 영화관 배제, 문제영화 검열을 위한 장치로서 사업 재편 등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독립·다양성 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통하여 지원 하는 상영관에 대하여 청와대→문체부→영진위 등 일련의 지시와 하달을 거쳐 정부비판 ‘문제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이와 같은 ‘문제영화’ 상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을 재편하고, 또한 ‘문제영화’를 ‘여과’하기 위하여 영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영화선정에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과 준정부기관인 영진위 직원은 심사세칙을 임의로 수정하고, 사업 재편 방안을 협의 아래 고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인 및 언론 등을 상대로 사업재편 등의 본질을 은폐하고 허위의 명분을 제시한 중대한 범죄적 사건이다.

이리하여 ‘다양성 영화의 저변 확대’ 등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정부와 의견,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화관과 작품들을 차별·배제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위헌·위법한 사건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4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84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14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시네마달은 다큐영화 <잼 다큐 강정>, <다이빙 벨> 등의 제작 및 배급사로서 영화 <다이빙 벨>이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4차례 언급되는 등 블랙리스트로 관리된 의혹이 있으므로 이의 실체와 경위 등에 대한 규명과 영화진흥위원회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또한 배급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은 2012년 개봉된 <잼 다큐 강정>이 영진위 직영 극장에서 상영보류가 된 점, 같은 해 배급한 영진위의 지원 선정작인 <두 개의 문>이 국정원에 검열당한 점, 2014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한 점, 같은 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점, 2014년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4차례 언급된 점, 2015년 문체부의 9,473명에 등재되었다는 점, 같은 해 문체부 영상과에서 작성한 2,565명의 영화인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점, ‘건전영화단체’로 불린 보수(우파) 단체까지 망라되어 국정원 및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2년부터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 독립영화 제작지원에서의 ‘빛’, 예술영화제작지원에서의 ‘연인들’, 다양성영화개봉지원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 ‘구름비-바람이 분다’, ‘그림자들의 섬’은 제작 및 배급 등이 신청인 및 시네마달이라는 이유로 지원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은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붙임 :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14,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신청인] 김일권(주)시네마달 대표)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 취지

- (1) (주)시네마달은 다큐영화 <잼 다큐 강정>, <다이빙 벨> 등의 제작 및 배급사로서 위 영화 <다이빙 벨>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4차례 언급되는 등 블랙리스트로 관리된 의혹이 있으므로 이의 실체와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을 바란다.
- (2) 블랙리스트 대상자로 관리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또한 배급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원회는 2017. 12. 26.(제22차 전원위원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

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호에 따라 이 사건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위원회는 ① (주)시네마달(김일권)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② 각종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지원 배제 여부 등을 규명과제로 정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20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2015. 9. 16.)	국가정보원	2018. 1. 19.	
2	영진위, '다양성영화 지원' 대상에서 비판영화 배제조치(2015. 9. 24.)	국가정보원	2018. 1. 19.	
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2016. 4. 10.)	정책조정수석	2018. 1. 29.	
4	2015년 상·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관련 접수표 등	OOO	2018. 2. 6.	
5	영진위 감사팀 보관 심사위원 후보 추천 서류	영진위	2018. 2. 27.	
6	영화 '빛' 관련 제작계획서 등	박OO	2018. 3. 16.	
7	(주)시네마달 회사개요 및 관련작품 등	(주)시네마달	2018. 3. 19.	
8	'구름비-바람이 분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정보	네이버	2018. 3. 19.	
9	영화진흥위 공모사업(심사) 자료	영진위	생략	
10	사건2017고합102 증거서류 중 이OO의 진술조서 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 9인의 14회의 진술조서를 이 사건 증거 및 자료로 채택한다. 아래의 진술청취 사실은[사건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사건]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2014. 영진위 사무국장	진술조서(2017. 9. 20.)
2	구OO	영진위 창작지원팀장	진술조서(2017. 11. 8)
3	김OO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	진술조서(2017. 12. 7.)
4	김OO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017. 12. 18.)
5	김일권	신청인	녹취록(2018. 1. 5.)
6	OOO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018. 1. 17.)
7	OOO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제3회, 2018. 1. 22.)
8	OOO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2018. 1. 23.)
9	문OO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조서(2018. 1. 29.)
10	문OO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조서(제2회, 2018. 2. 2.)
11	OOO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제2회, 2018. 2. 2.)
12	김OO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제2회, 2018. 2. 27.)
13	김OO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제3회, 2018. 3. 6.)
14	김OO	영진위 다양성진흥팀장	진술조서(제2회, 2018. 3. 8.)
15	김OO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제4회, 2018. 3. 12.)
16	김일권	신청인	전화면담(2018. 3. 22.)
17	OOO	영진위 인사총무팀(노조전임)	진술조서(2018. 3. 27.)
18	이OO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4. 4)
19	문OO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전화면담(2018. 4. 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주)시네마달(이하 시네마달)은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 배급사로, 2008년 여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90여 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했다. 또한, 극장 상영, 영화제 뿐 아니라 공중파와 케이블TV, 온라인, DVD, IPTV 등의 다양한 배급루트를 모색하고 특히 창의적인 방식의 공동체상영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2008년 11월 ‘동백아가씨’를 시작으로, ‘살기 위하여’, ‘경계도시2’, ‘오월愛’ 등 굵직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극장 개봉과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

2012. 6. 개봉한 ‘두 개의 문’의 경우, 독립영화 흥행기준인 1만 관객수를 훌쩍 뛰어넘어 7만 명을 돌파하며, 독립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독립다큐멘터리 관객층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¹⁾했다.

2. (주)시네마달(김일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경위

가.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1) 문화체육관광부 9,473명 명단²⁾

신청인은 이른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9,473명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중 “김일권(영화제작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박해일·김태우와 감독 박찬욱·김지운, 평론가 황현산과 작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과 함께 2015. 5.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1) (주)시네마 달 웹사이트(<http://cinemadal.tistory.com/43>) 등의 회사소개(「(주)시네마달 관련 회사 개요 등 자료편철 보고」,

2) 문화저널 21 보도자료

(2)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작성(관리) 리스트³⁾

2017. 9. 26. 우리 위원회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이하 영상과)로부터 입수한 2015. 5. 17. 작성, 2,565명의 영화인 명단에도 “김일권(영화제작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 및 활용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으나, 상당수는 위 9,473명 중 영화인들에 대해 별도로 정리 및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썸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및 관리 여부

시네마달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은 위의 2. 가. 에서 언급된 등재 시기보다 앞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2012년 1월 10일 개최된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 제9차 회의로서, ‘썸 다크 강정’ 상영 불가에 관한 해명 요청을 위한 비공개회의였다. 회의의 주 내용은 ‘영진위 직영관인 인디플러스에서 특정 작품 상영 불가 결정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최종 결정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운영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해 ‘내부 검열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사업담당자의 답변이었다.

당시 사업 담당자로 위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 000은 ‘영진위가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썸 다크 강정’이 상영불허된 것을 인정’했고, “당시 이 회의록을 보면, 제가 사무국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였고, 따라서 최종 결정은 실무자들이 아니라 뒷선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이 회의에서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한 것입니다” 했다.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위 000은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데, 이미 상영프로그램을 올리기 전에 허O 프로그래머가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 영화를 빠진 채로 올렸을 것인데,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 (...중략...) 잘 모릅니다 (...중략...) 김OO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며, “영진위 차원의 독자적인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했다.

한편, 인디플러스에서의 ‘썸 다크 강정’ 상영 문제는 위 000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2월 프로그램으로 상영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면서, “비록 뒤늦게 상영되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검열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000 4회 진술조서, 2018.03.27.).

이에 대해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인 문OO은 “2012년 경부터 ‘썸 다크 강정’, ‘MB

3)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작성 리스트

의 추억' 등 정부비판적이거나 이전 정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것 같은 영화들에 대해 영진위가 직영하는 '인디플러스'에서의 상영을 보류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고 (...중략...) '독립영화전용관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으로 (...중략...) 국정원의 정보 스크린 차원에서 정부비판영화의 영진위 직영상영관에서의 상영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었습니다" 했다.

위 문OO은 국정원의 정보 스크린 실행에 대해서 "국정원 IO가 언론을 통해 스크린한 작품을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산업콘텐츠과(이하 영상과)에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은 제가 아는 한 10여 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위 문OO은 "영화 '두 개의 문'은 2012년도에 영진위 개봉 지원작에 선정되어 지원한 작품으로 사후에 국정원 스크린에 체크되었고, 이때부터 시네마달을 배제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영진위에서도 시네마달의 배급영화는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될 때 문체부 이OO 사무관과 했던 얘기가 '우리는 리스트라면 시네마달 밖에 없는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했다. 같은 문OO은 "시네마달에 대한 외압은 사실상 '두 개의 문', '짬 다큐 강정'이 시작이라 볼 수 있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도전, MB정권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주다 보니 외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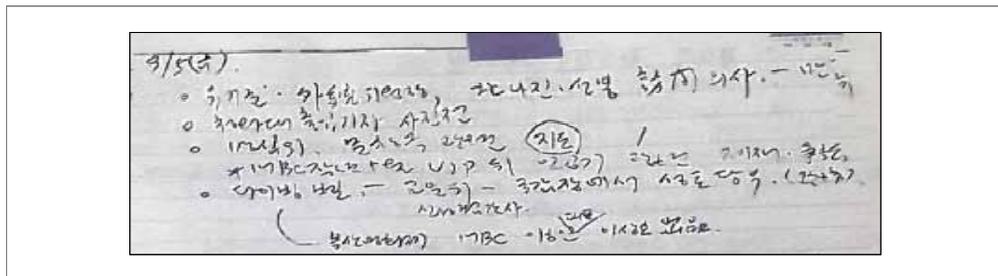
또한, 위 문OO은 "2013년 경부터 (...중략...)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의 사전 스크린이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업에 지원한 작품에 대해 시놉시스를 보고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을 체크해서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과에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이후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과 논의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했다. 다만, 같은 문OO은 "김OO 본부장 선에서 국정원과 배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김OO으로부터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면 배제 지시가 있었고, 문체부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시네마달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문OO 1회/2회 진술조서, 2018.01.29./2018.02.02.).

국정원 보고 관련, 참고인 김OO은 "국정원에서 먼저 지원 사업 공고 사항을 보고는 연락을 취해 오면 문제 작품들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며, "가끔 문체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전화 연락을 받은 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문체부는 시국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략...) '국가원수나 국가에 대한 폄훼', '대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였습니다.'" 며, 국정원의 요구에 소신을 갖고 대처했다면서 "국정원에게 저는 다이빙 벨 상영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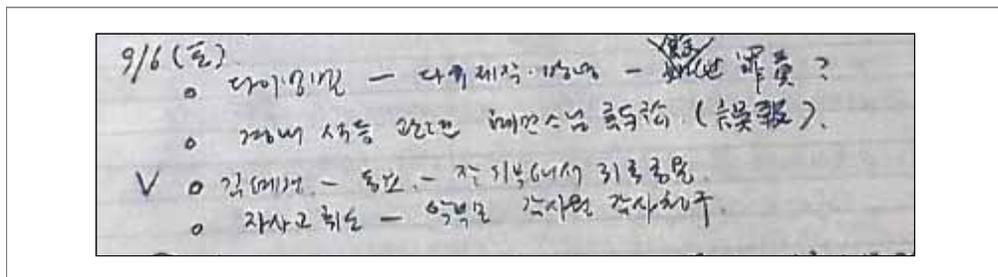
시에도 ‘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심의 받았으면 당연히 틀어야 하고 영비법 상 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는데 문체부는 당시 상영 관련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뒷선에서 강한 압박이 있다는 추측을 했고 이를 청와대라고 보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꼴통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다(김OO 2회/3회 진술조서, 2018.02.27./03.06.).

한편,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⁴⁾을 살펴보면 2014. 09. 05.의 “다이빙 벨-교문위-국감장에서 성토 당부(신성범 간사) (...생략...)”를 시작으로, 같은 해 09. 06.에는 “다이빙벨-다규제작·방영-여타 죄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10. 22.자 비망록에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長”이라는 표기 아래 “다이빙벨 상영-대관표 등 자금원 추적-실체 폭로”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0. 23.자에는 위 같은 비서실장의 지시로 “시네마달 내사-다이빙벨 관련”이라고 연달아 기재되어 시네마달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그림-1] 2014년 9월 5일자 “다이빙벨-교문위-국감장에서 성토 당부(신성범 간사)”



[그림-2] 비망록 9월 6일자 “다이빙벨-다규 제작 방영-여타 죄책(罪責)”



4) 고(故) 김영한 수석 비망록

를 통해 영화 ‘산다’,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등 사실 왜곡·이념 작품은 모두 제외” 하라며, 재차 언급하고 있다.

위의 영화는 모두 시네마달이 배급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2011년 제작된 ‘잼 다크 강정’이 영진위 직영 극장에서 상영 보류 시도가 있었다는 점, 2012년 영진위의 지원 선정작인 ‘두개의 문’이 국정원에 검열되었다는 점, 2013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에서 정부 기관의 사전 스크린이 강화되었다는 점, 2014년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4차례 언급된 점, 2015년 문체부의 9,473명에 등재되었다는 점, 같은 해 문체부 영상과에서 작성한 2,565명의 영화인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점, 건전영화단체’로 불린 보수(우파) 단체까지 망라되어 국정원 및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에서 그간 제작·배급한 영상물이 사회 및 정부 비판적 내용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 등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적어도 2012년부터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주)시네마달에 대한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배제

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해당사업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하고, 제작 예정인 모든 장르(극영화, 다큐멘터리)의 장편/단편 실사영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장르별 공통사항으로 단편은 편당 최대 3천 5백만원, 장편은 편당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⁶⁾

(1) 2013년 하반기 - 다크 ‘빛’ 탈락

- 1) 2013년 하반기에서는 심사대상 작품으로 모두 384편이 신청했고, 2013. 7. 1.~8. 5.사이 재택 서류심사, 같은 해 8. 6. 조별회의(종합심사대상 조별 선별), 같은 해 8. 8.~8. 12. 숙박서류 심사 및 8. 20.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는 김OO, 주OO, 이OO, 최OO, 김O, 김OO, 권OO, 이OO, 김OO 등 9인이고, 영화 ‘빛’은 평점 58.0점으로 탈락하였다. 당시 영화 ‘빛’은 장편 다크

6) 영진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계획

멘터리로 시네마달이 배급사로 기재하여 지원 신청⁷⁾하였다.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사유에 대해 위 문OO은 다큐 ‘빛’은 처음부터 배제 작품이었다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시놉시스를 보내 준 목록⁸⁾ 중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작품”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배제 경위에 대해 위 문OO은 “13년부터 사업 초반에 김OO 본부장이 접수 목록 또는 반정부 비판 영화들을 추려서 달라고 요청이 시작되었는데 (…생략…) ‘국정원 가는 자료다’라는 대답을 들었던 것 같고, 당시 김OO 본부장이 국정원 담당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으로 보고되는 것이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스크린 하는 과정 중 사업팀에서 시놉을 보고 정부 비판적인 키워드를 추려서 보낼 때도 있고 접수 목록 전체를 보낼 때도 있는데 이 경우 내용을 추려서 보낸 것으로 기억됩니다”며, “이메일로 추려낸 영화 목록을 이메일 또는 직접 갖다 주면 이후 김OO 본부장이 대면하여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로 접수 (…중략…) 수위가 높은 경우 피해 가기를 어려워 할 것 같아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다.

위 문OO은 심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위원장에게 찍어준 심사위원 중 심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순위로 뽑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다. 같은 문OO은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요청할 때는 “가능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며, “특정 작품을 특정하기 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이거나 이전 정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이 들어가면 독립영화 예산 파이가 줄 수 있으니, 잘 판단해 달라’고 부탁한바 있습니다” 했다. 같은 문OO은 “당시 조희문 위원장의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 관여로 해임된 이후여서 특정 작품을 언급하며 심사위원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고 (…중략…) BH의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명령 상황에 비해 상기 지시한 작품이 선정되어도 본인이 직접 국정원 IO를 상대하지 않아 변명할 이유(심사위원 직접 설득의 어려움 등)을 만들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지원 작품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최대 10:1) 지원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선정되지 않으면 제가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했다(문OO 1회/2회 진술조서, 2018.01.29./2018.02.02.).

7) 2013년 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심사계획 및 심사결과보고서

8) ‘2013년부터 지원한 작품에 대해 시놉시스를 보고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을 체크, 영진위 내 국정원 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과에 제출해 옴’. 위 문OO 진술조서, 당 보고서 8쪽 참조

(2) 2014년 상·하반기 - 다큐 '빛' 지원 탈락 및 선정 경과

영화 '빛'은 2014년 상반기에 재차 지원 신청하는데 신청 서류 중 '영화제작계획개요'에는 작품명은 '빛', 감독은 박종필, 프로듀서는 김일권, 장르구분은 다큐멘터리, 편집은 박종필, 송운혁, 송상희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 김일권이 프로듀서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⁹⁾할 수 있다.

해당사업의 접수 작품은 모두 332편이고 2014. 4. 22.~6. 3.까지 재택 및 숙박심사, 2014. 6. 16. 충무로 KOFIC라운지 회의실에서 면접 심사를 거쳤다. 서류 심사위원으로는 12명 4개조로 편성되었고, A조는 권OO, 변OO, 김OO, B조의 심사위원으로는 홍OO, 김OO, 김OO이, C조의 심사위원으로는 김OO, 오OO, 김OO, D조(다큐멘터리 부분)는 윤OO, 김일권, 허O이다. D조 다큐멘터리 평가 집계표에 의하면 영화 '빛'은 평점 62.3점으로 탈락¹⁰⁾했다.

이때 '다큐' 만이 별도로 심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위 문OO은 "다큐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대조해서 스크린을 해서 국정원에 주기도 했고, 특별히 '14년부터 좀 더 외압의 강도가 세지면서 다큐는 별도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구성도 별도로 하고 숙박심사만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다큐는 다큐대로 별도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이 문체부나 별도의 다른 기관에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영진위 자체적으로 내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했다(문OO 진술조서, 2018.01.29.).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사업에 지원 신청한 영화 '빛'의 영화 제작계획 개요에 신청인 김일권이 프로듀서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업담당자 OOO은 "극영화 단편과 장편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먼저 구성이 되었고 먼저 심사 자료를 배부하였고, 다큐멘터리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명단을 받아서 한 번에 몰아서 심사 조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심사위원 추천' 및 섭외순서 자료는 이전에 다큐멘터리 조의 사람들은 이전 명단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명단입니다"했다.

다큐멘터리 심사조를 별도로 구성한 사유에 대해서 위의 OOO은 "다큐에 대해서는 워선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방침이 있었으니 심사위원 선정을 나중에 추가로 하였던

9) 2014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신청서

10) 2014년 상·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것입니다”라고 하며, 문OO 부장에게 “시네마달 작품을 뽑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BH에 찍혔다’, ‘이거 뽑히면 영진위 끝장 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부분 추가 심사위원 명단은 문OO 부장이 주었고, 명단에 “윤OO 감독, 김일권, 허O 등 3명”인 것을 보고, “저는 심사위원 섭외를 못하겠다, 제외하는 거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였고, 문OO 부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섭외하는 한편 그와 같은 의사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소극적으로 밖에 거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시네마달 작품을 떨어뜨린다면 시네마달 대표를 해당 분야 심사위원으로 넣는 것은 당연히 제척사유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접수작이 있는 사람인데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하면서, “단지 시네마달을 타깃으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했다(OOO 진술 조서, 2018.01.23.).

이에 대해 신청인 김일권은 “당시 영진위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도 높게 피력하던 때로, 국내진흥부장인 문OO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2014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을 제안”해서 “박OO 감독이 본인의 명의로 영화 ‘빛’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심사위원을 수락했다”고 하며, “박OO 감독 또한 신청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위 김일권은 “영화 ‘빛’은 시네마달이 제작 및 배급한 작품으로 신청인은 영화제작계획 개요에 스텝인 프로듀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사 현장에서 영화 ‘빛’의 지원 신청 사실을 알았고, 당시 문OO 부장에게서는 신청 서류 확인과정에서 스텝까지 확인하지 않아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는 파악을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위 김일권은 심사 현장에서 “영화 ‘빛’을 제작 배급한 대표자가 심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제기했고, 전체 심사위원들의 동의하에 영화 ‘빛’에 점수를 낮게 주어 탈락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 탈락 사유로 영화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은 작품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박OO 감독에게 미안했”다고 하며, “다행히 14년도 하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높은 점수와 좋은 평가를 받고, 영화 ‘빛’이 선정되었다”고 했다(김일권 녹취보고서, 2018.01.05.).

반면, 위 문OO은 “2013년도에는 신청자가 배급사인 시네마달이었기 때문에 영화 ‘빛’이 배제되었고, 14년도 상반기에는 박OO 감독 개인 이름으로 신청되면서 실제 심사 에서 작품의 평가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일권 대

표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고 보고, '14년도 하반기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상반기 심사위원들과 다른데 심사 평가가 다르게 나와서 선정됐으리라고 봅니다. 14년도에는 시네마달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배제 의도가 작동하지는 않았습시다”라고 하며, “김일권 대표의 심사위원 선정은 독립영화계의 관계 개선이나 명분 쌓기에도 사실 좋아서 추천하였습니다” 했다(문OO 진술조서, 2018.01.29.).

위 문OO의 진술은 영화 ‘빛’이 시네마 작품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영화 ‘빛’ 신청 서류 중 프로듀서로 김일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사업에 지원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점, 청와대에서 좋지 않게 보니 선정이 되는 것에 우려했던 점, 신청 작품 접수 후 심사위원을 구성한 점, 심사위원에게 배제 의사를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점 등과 정면 배치된다.

오히려 14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영화 ‘빛’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위 김일권과 위 문OO의 진술이 상이하고, 위 OOO이 심사위원 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시를 거부했다는 점과 위 문OO이 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선정이 되더라도 국정원 IO를 대상으로 김OO이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신청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독립영화계의 관계 개선이나 명분 쌓기용 이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다분히 의도성이 드러난 것으로 영화 ‘빛’의 탈락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피용으로 활용했다고 보인다. 또한, 같은 해 하반기에 ‘빛’이 선정된 것은 신청인의 영진위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부담이 있던 바, 박OO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자 굳이 심사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양성 영화 개봉지원사업

① 사업 개요

해당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완성된 한국 다양성 영화에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작 완성된 영화로 극장개봉을 계획 중인 작품이 지원 대상이며 1개 신청사(인) 당 1개 작품으로 제안한다. 상하반기 2회 시행하며 작품 당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¹¹⁾

11)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요강

② 지원 배제 경과

다양성 개봉지원사업 지원 배제 방식도 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동일하다며 위 문OO은 처음 시작을 “2012년인지 13년인지 헷갈리는데 다양성 영화 개봉지원사업의 경우 완성작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스크린을 하고 배제지시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OO 본부장을 통해서 처음 배제 지시를 받았습니 다. 문화부에서의 배제지시는 사후에 국정원의 스크린에 걸리는 것 중심으로 연락이 왔 고, 영진위 국정원 담당에게서 주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중간 역할을 김OO 본부장이 했 습니다” 했다.

보고 경위에 대해서 위 문OO은 “접수를 받으면 접수 리스트가 정리되고 이를 김OO 에게 신청서 원본 그대로 전달합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일부 발췌해서 전달하기도 했습 니다. 문화부는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서 유선으로 불러 주고 김OO 본부장과 공유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수시로 일상적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적게는 하루에 5회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고 했고, 김OO에게 공유한 사실을 이OO 사무관에게 보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스런 수순이었습니다. 이OO 사무관은 제게 공유할 사항이 구 분이 되었지만 저는 주무부처인 담당사무관에게 모두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략...) 사업 진행 과정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문화부 차원이냐’고 묻는 과정에 서 ‘BH의 지시다’ 라는 답변을 했고 그에 ‘BH 누군데’ 하고 재차 묻자 ‘응, 뭐 신 행정관 이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며, 이후 “이OO 사무관의 지시 사항은 BH의 구도라는 것 으로 인지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했다.

배제 과정에 대해서 위 문OO은 “먼저 영진위 내부에서 신청 접수 목록이 김OO에게 보고가 되고, 이를 짐작 상 국정원에 보고를 하면 배제 여부에 대한 지시가 저에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문화부에서 관련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지원 배제 또는 배 급 및 상영 방해 등의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했다.

또한, 위의 문OO은 별도의 리스트가 존재하지는 않고 “MB 때부터 강정, 부산의 한진 중공업 등 해당 시기 시국사건과 관련된 영화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영진위에도 오고 문 화부에도 동시에 상황에 따라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시네마달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 습니다. 정부에서 찍은 것은 유일하고 이것은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하며, “사전 에 지원 접수 상태를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문OO 진술조서, 2018.01.29.).

위 김OO은 “당시에 ‘정부가 참 꼴통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시네마 달의 경우 배급 유통하는 곳인데 사실 무슨 죄가 있으며 관객이 상당히 저조했던 탓으로 수입이 되지 않은 영화를 많이 배급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도 되는데 과도한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초매니아들만이 보는 영화로 상영기회도 쉽지 않은 영화를 배급했던 곳입니다”(김OO 4회 진술조서, 2018.03.12.) 했다.

이러한 지원 배제는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위 문OO은 “(…생략…) 14~15년 들어서면서 추천을 하는 진행횟수가 많아지고, 필요한 심사위원 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공모사업 중 사업팀에서 일부 심사위원을 미리 선정하고 이를 검사역실이나 이후 심사지원팀에 보내서 날인만 득하고 다시 이를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며, 미리 심사위원을 선정한 사업 중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같은 문OO은 사전에 일부 심사원들에게 “문제될 수 있는 작품은 선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정작품을 특정하기 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거나 이전 정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이 들어오면 (…중략…) 예산 파이가 줄 수 있으니 잘 판단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고 진술했다(문OO 진술조서, 2018.01.29.).

1) 2013년 상반기 -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 탈락

해당사업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안), 선정 심사결과 등을 아울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의 접수기간은 2013. 3. 4.~3. 8. 까지 이고, 접수편수는 모두 39편이다. 예비심사위원으로는 안OO, 이OO, 강OO, 육OO, 맹OO 등이 선정되었고, 같은 해 3. 14. ~ 3. 22. 3. 28. 10일간 재택심사를 한 후 3. 28. 위원회에서 최종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심사회의의 결과 ‘모래가 흐르는 강’이 평점 60.7로 탈락하였다.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MB 정부의 4대강 건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감독은 OO스님이고, 배급사는 시네마달이다. 위 지원사업의 신청서 배급사 란에 시네마달이 명시¹²⁾되어 있다.

위 문OO은 위 영화는 ‘시네마달이 배급했다는 점, 이전 정부의 4대강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라는 점, 단식 등을 통해 활발하게 사회적 고발을 해왔던 OO스님의 활동 내용이 문제시 됐던 점 등이 심사에서 걸러내야 하는 사유였다’고 하며, 제출한 지원 신청서 검토 과정 중 첫 번째 서류인 ‘영화 제작계획서에 시네마달이 배급사로 명시된 경우

12)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심사계획 및 심사결과 보고서

는 우선적으로 배제 작품으로 구분했고, 다음에 내용을 검토하며 배제 여부를 검토했다'고 했다(문OO 전화면담 보고, 2018.04.06.).

위 영화는 신청서 배급란에 '시네마달'이 명시됨으로써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주요 이유라 보인다.

위 영화에 대한 지원 배제 과정은 위 문OO과 김OO이 진술한 3. 나. 의 지원배제경과와 동일하다.

2) 2014년 상반기 - 영화 '구름비-바람이 분다' 탈락

해당사업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안) 보고(2014. 4. 18.), 선정 심사결과 등을 아울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의 접수기간은 2013. 4. 7.~4. 11. 까지이고, 접수편수는 모두 49편이다. 예비심사위원으로는 김OO 강OO, 한O, 명OO, 김OO가 선정되었고, 같은 해 4. 24.부터 5. 15.까지 재택심사를 가진 후 5. 16.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최종회의를 가졌으며, 예비심사회의 결과 '구름비-바람이 분다'는 평점 57. 7으로 탈락하였다.

영화 '구름비-바람이 분다'는 조성봉 감독 작품으로 양천우가 제작하고, 시네마달이 배급했고, 위 지원사업 신청서의 배급사란에 시네마달이 명시되어 있다.

위 영화는 3.가(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놉시스를 보내 준 목록 중 영진위내 국정원담당 또는 문체부 영상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3편 중 1편이고, 위 문OO은 탈락 이유가 '제주 강정마을 등 배급을 맡았던 시네마달이 사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위 영화는 문체부 예술정책과(오OO 사무관) 작성의 「리스트-'16.2.1 현재」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중 '공통-15명'에는 "⑩부산국제영화제-구름비"라고 기재되어 있다.¹³⁾

한편, 위 영화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상영작이고, '비프메세나상-특별언급'을 수상하였다.¹⁴⁾

위 문OO은 "2014.상반기에 제주 강정 마을 관련 다큐 '구름비 바람이 분다', 2014년 하반기에는 한진중공업 해직노동자 관련된 '그림자들의 섬' 등이 배제되었습니다"했고, "사전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문제될 수 있는 작품은 선정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었

13) (오OO 사무관) 작성의 「리스트-'16.2.1 현재」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중 '공통-15명'

14) 「영화 '구름비-바람이 분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정보 보고」

다”며, “예비 심사위원 중 두 명은 모르는 사람이어서 나머지 세 사람에게 (지원배제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거나 그런데 이들이 현재 활동 중이어서 거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했다. 국정원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영진위 담당 정보관의 스크린을 거쳐 김OO을 통하여 내려왔습니다” 했다(문OO 진술조서, 2018.01.29.).

위 김OO은 위 배제 작품 관련 “주로 문화부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했다(김OO 4회 진술조서, 2018.01.29.).

위 영화에 대한 지원 배제 과정은 위 문OO과 김OO이 진술한 3. 나. 의 지원배제경과와 동일하다.

3) 2016년 상반기 - ‘그림자들의 섬’, ‘산다’ 탈락

해당 사업은 2016. 4. 4.부터 4. 8. 5일 동안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을 통해 모두 543편을 접수받았다. 예비 심사위원으로는 신OO, 어OO, 윤OO, 이OO, 최OO 등이 선정되었고, 2016. 5. 4.부터 5. 18. 재택심사를 거쳐 5. 18.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심사평가를 하였다. 결과 재차 지원한 ‘그림자들의 섬’(평점 53. 3) 탈락 하였다.

영화 ‘그림자들의 섬’은 제작 김정근 개인, 배급사를 시네마달로 신청¹⁵⁾하였다.

위 사업 심사가 개최되기 전인 2016. 4. 18. 위 같은 OOO은 문체부 박OO 사무관에게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 접수 내역’을 보고하자 이에 대해 박OO는 “제목만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간단한 시놉시스라도 포함해서 부탁” 요청을 하고, 이에 OOO은 신청작품들의 시놉시스와 향후 심사일정을 첨부하여 송부¹⁶⁾하였다. 관련 영진위에서 문체부로 보고한 웹메일¹⁷⁾은 아래와 같다.

15)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16)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신청서

17)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 관련 자료입수 보고」, 2018. 2. 7.

[그림-4] 2016. 4. 18. 000이 박OO 사무관에게 보낸 웹메일



위 000은 “당시 심사지원팀이 신설된 이후[심사지원팀은 2015. 7. 신설되고 2016. 4.경부터 심사위원 후보 추천 업무를 담당하였다]임에도 팀장이 심사위원 풀 책자를 보고 후보와 섭외 순위까지 후보자군을 정하여서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그것을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서’ 심사지원팀에 보내서 사인을 받았습시다”며, 이때도 ‘김OO 본부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배제 명단을 x표시하여 알려 주었다’고 했다(000조서, 2018.01.17.).

4) 2016년 하반기 - ‘그림자들의 섬’ 탈락

해당 사업은 2016. 8. 1.~8. 5. 5일 동안 모두 59편을 접수받아(심사대상 59편), 같은 해 9. 7.~9. 22. 재택심사 및 9. 22. 서울미디어센터에서 심사평가를 가졌는데, 예비 심사위원으로는 어OO, 신OO, 윤OO, 노OO, 심OO이었다. 예비 심사결과 ‘그림자들의 섬’은 평점 56.3으로 탈락하였다.

영화 ‘그림자들의 섬’은 제작사 OOOO와 김OO, 배급사는 시네마달로 하여 신청¹⁸⁾하였다.

18) 2016년 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심사 계획 및 심사결과 보고서

위 000은 “지원 배제 작품에 대해 (…중략…) 본부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중략…) ‘니가 이런 배제작품들이 있다. 본부장이 따로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전달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개최일에 (…중략…) 어00 감독이 ‘여기 배제해야 하는 작품이 있죠’라고 물었고, 저는 ‘신청자격 제한 작품이 없습니다. 심사 제재 작품 없습니다’라며 답변을 하였는데 어00 감독이 ‘그거 말고 정치비판하는 영화 배제하는 작품 있잖아요’라고 해서 제가 당황해서 ‘네, 본부장님이 직접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하고 답을” 했다.

이어 위 000은 “당시 노00 대표가 ‘이런 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면 심사 보이콧 운동을 할 것이다. 본부장이 따로 연락을 하면 외부에 발설할 것이다.’라고 하여 노00, 윤00 대표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 어00, 신00, 심00에게는 본부장이 유선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배제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배제된 작품은 위 000은 “(…생략…) 그림자들의 섬 (…생략…) 이 확실하고”라고 했다(000 진술조서, 2018.01.17.).

위 김00은 “원래 국정원 IO 배00 전무는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2014년경부터 저에게 ‘대북’,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편취’ 등의 용어를 쓰면서 영진위 지원대상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중략…)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들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00 전무는 이러한 문제 영화 명단을 듣고 ‘그 영화들은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에게 국정원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으니 이 영화를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전했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영진위 위원장에게도 보고하였습니다”했다.

그러나, 위 김00은 우리 위원회 조사 중 심사위원에게 영화 ‘그림자들의 섬’의 지원 배제 의사 전달 방식에 대해 답하지 아니하였다(김00 진술조서, 2018.03.12.).

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영화 ‘연인들’ 탈락

해당 사업은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영화프로젝트지원 지원 및 차세대 한국영화예술을 이끌어 갈 작가주의 감독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순 제작비 30억원 이내의 실사영화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작 예정인 작품이고, 연출자는 세계 영화제 출품 경력이 필요하다. 위

사업은 연 1회 시행하고, 지원 편수는 2편이며 편당 9.5억원의 순 제작비를 지원한다.¹⁹⁾

위 사업 접수결과 보고는 2015. 8. 17.에 있었고, 접수 편수는 모두 13편이었다. 심사 일정으로는 같은 해 9. 18.~9. 20.까지 파주 지지항에서 있었는데 심사위원으로는 신 OO, 권OO, 노OO, 여OO, 김OO 등 5인이었고, 이송희일 감독의 작품인 영화 ‘연인들’은 평점 69.7로 탈락하였다. ‘연인들’은 시네마달이 제작하였고, 위 사업에 신청사로 지원²⁰⁾하였다.

당시 영진위 사업담당자 000는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선정 심사 추천은 제가 서명은 했지만 숫자를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작성이 돼서 이OO 부장이 전달했고 저는 서명만 했을 뿐입니다.”면서, “당시 이OO 부장이 신OO 감독은 반드시 섭외를 하라면서 신OO 감독이 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가를 전달해 오면 가능한 신OO 감독 일정에 맞춰서 심사위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했다.

위의 000는 “사업팀에서 심사계획이 나오면 문체부 담당 주무관에게도 신청접수 편수, 신청 현황 및 내역, 심사계획, 심사위원 구성 등을 보고했습니다. 신청 작품 목록이 전달되면 작품 관련해서 참여자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미리 스캔하고 배제 지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했다.

또한, 위의 000는 “당시 사업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사실상 부장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OO 부장이 나서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장이 전면에서 나서서 심사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 진술했다(000 3회 진술조서, 2018.01.22.).

위 사업에서 ‘연인들’ 지원 탈락 경위는 특검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다.

아래 표는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판결문(선고 2018. 1. 23.) 중 “범죄일람표 3.”의 6~8항²¹⁾ 부분으로 영화 ‘연인들’에 대해 문체부가 영진위에 지원 배제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배제 대상으로 연출자 이송희일은 진보성향이고, 시네마달은 영화 다이빙 벨의 제작사라고 명기되어 있다.

19)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심사계획 및 심사 결과 보고

20)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신청 지원서

21)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판결문(선고 2018. 1. 23.) 중 “범죄일람표 3.”의 6~8항

순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담당 (문체부/ 산하기관)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	비고
6	2015-09 -25 경	연출자 박찬경 - 공모작품 산	2015년 예술영화지원 사업 (지원금 9억 5,000만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산업진흥 본부 이OO			야권 지지자 박찬욱 감독의 동생, 진보성향
7	2015-09 -25 경	연출자 이승희일 - 제작사 시네마달 - 공모작품 연인들	2015년 예술영화지원 사업 (지원금 9억 5,000만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산업진흥 본부 이OO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및 지원배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영화 다이빙벨 제작사, 연출자의 진보성향
8	2015-09 -25 경	연출자 오벌 - 공모작품 바당감수광	2015년 예술영화지원 사업 (지원금 9억 5,000만원) 지원배제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OO/ 산업진흥 본부 이OO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연출, 연출자의 진보성향

또한, 위 같은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2015년 초순경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과 ‘8’의 기재와 같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예술영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OO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접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OO 산업진흥본부장은 2015. 8.경 이OO 사무관에게 위 명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8’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이OO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이OO 사무관은²²⁾ “이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총13편이 공모에 응하였는데 신OO 행정관이 접수 리스트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메일로 현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중 지원을 배제하라는

22)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형사부) 2017고합102 증거서류, 7019~7043쪽

지시를 받은 작품은 (…중략…) 시네마달의 경우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배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 연출자 이송희일 감독도 동성에 문제를 다루는 등 진보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영진위 이OO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구두로 알려주었고, 이OO 본부장이 다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밑에 있는 팀장에게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했다.

이어 영화 ‘연인들’ 배제 사유는 “이송희일이 사유가 아니라 시네마달 때문에 배제되었습니다” 했고, “청와대에서 직접 요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며, 위 사업은 “15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청와대에서 요구를 해서 명단을 주면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지원 배제 작품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네마달이 걸러졌습니다” 했다(이OO 진술조서, 2018.04.04.).

문체부 영상과장 정OO²³⁾은 “(…생략…) 시네마달은 다이빙벨 제작사 (…중략…) 라는 이유로 (신OO 행정관이 지원배제 명단을 진술인에게) 명단을 불러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4. 피해사실

(1) 시네마달의 손해배상 청구소장(2017. 7. 31.)²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신청인의 피해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피고(박근혜, 김기춘 및 대한민국 정부) 등은 원고가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다룬 다이빙벨을 배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영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영진위와 공모하여 2015년 예술영화제작 지원에서 배제하였다.
- ② 원고(시네마달)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배급활로를 찾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피고 등은 원고 배급 영화의 영화관 상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피고 영진위와 공모하여 전용관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변경하였다.
- ③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인격과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배급로가 막혀 개봉을 약속했던 작품들의 개봉 시기도 잡지 못하여 폐업 위기에까지 몰렸다.

23)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형사부) 2017고합102 증거서류, 9212~9288쪽

24) 시네마달의 손해배상 청구소장(2017. 7. 31.)

(2) 위 문OO의 진술(2018.01.29.)

“MB 정부 때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영화라면 다큐형식이고 전문적으로 배급한 곳이 시네마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BH인지 국정원인지 모르겠지만 시네마달에 대해서 요주의로 지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외압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네마 달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주목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가 정부의 지원을 안 받으면 영화 개봉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해라. 공공자금 지원없이 어려우니 찍히지 않은 영화를 하라’는 의미로 권유하기도” 했다.

또한, “옛나인은 ‘천안함 (프로젝트)’ 배급사이고, <다이빙 벨>은 시네마달이 배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 대표에게 다이빙 벨 배급 경위에 대해 묻고 ‘세월호 피해 부모님들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다’라는 배급 경위에 대해 듣고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영진위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고, 폐업 위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다이빙 벨> 배급 이후 회사 상태가 악화되어 폐업 결정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했다.

이어, “당시 김일권 대표와 시네마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큐 경우 수익구조가 지원이 안되면 자생적인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 시네마달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몸 좀 사리고 살아라’고 걱정이 되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교하지 않고 허술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니 ‘이름을 바꿔서 지원해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했다.

(3) 위 이OO의 진술(2018.04.04.)

“시네마달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어려운 독립다큐를 배급하는 회사고 내용을 떠나서 의미 있는 장르이고, 오랜 기간 동아 배급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려고 노력해 왔는데 납득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에서 배제한 거죠. 아니었으면 당연히 지원을 받았을 건데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런 면에서는 미안합니다. <다이빙 벨> 이후 시네마달은 배제 대상으로 찍혔는데 영진위 경우 분위기가 국정원도 있고 하니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문체부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다.

(4) 위 김일권의 녹취록((2018.01.05.)

“영진위 지원 작품들에 대해 전부를 다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시네마달과 관련성을 증빙하기는 어려운데, 2015~2016년도에는 시네마달 이름을 다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5) 언론보도 등

- ① 『한겨레신문』 2017. 2. 16. 일자 연재기사 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네마달과 나」에서 신청인 김일권이 “다이빙벨’, ‘나쁜 나라’, ‘업사이드 다운’ 등 세월호 영화들의 연이은 배급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거리로 찍힌 것도 환장하겠는데, 악의적인 지원 배제로 폐업하는 거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다”²⁵⁾등의 인터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② 『한국경제신문』 2017. 5. 18.자 등은 “폐업 위기 겪고 일어난 ‘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어워드 수상”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핵심 권력 및 정보기관의 관여와 개입 아래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이른바, ‘건전영화단체’로 불린 보수(우파) 단체까지 망라된 사건이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에 대한 시네마달 제작의 ‘연인들’에 대한 지원배제는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였다. 2015년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관련 국정원의 정보 보고 문건²⁶⁾을 보면, ‘심사평가일 이전 “문제영화”들에 대하여 ‘OOOOOOOO’의 문제제기”를 언급한다. 나아가 국정원은 문체부가 “영진위에 지원 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큐 영화계 건전화 도모”할 예정이

25) 『한겨레신문』 2017. 2. 16.자(인터넷, 「이송희일의 자니?」 연재기사 중)

26) 국정원 정보 보고 문건-필사-정리본

라며 문체부의 개입 관련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권력기관의 총체적 개입 아래, 정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회사 관련 작품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정교하게 실행하였고 이는 관철되었다.

영진위는 이른바 ‘문제영화’ 들을 체크·보고하는 등의 “검열”을 행사했고, 심사위원 구성이 공정하게 구성이 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영진위 지원 사업에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전방위로 조여 오는 압박은 본인의 대표명 및 회사명을 삭제한 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자기검열’이 강요되었고, 그조차도 여의치 않아 지원 배제를 당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배급에 상당 기여해온 이 회사가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동시에 영화인(단체)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창작·표현의 자유 나아가 사업자로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사건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가 상당수 사회 및 정부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고, 제작 및 배급사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국민의 향수권을 파괴한 사건이다.

한편, 정부비판 선언에 참가하는 등 특정 정치행위나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인 등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 온 점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의 정보를 다루어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법한 사건이다.

2. 진상규명 사실

가. (주)시네마달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관리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김OO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카테고리에 따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리한 후 같은 김OO에게 보고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9,472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2015. 5. 17.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작성한 2,565명의 영화인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파일명은 ‘작업 중(중요).XLS’로 완성된 문서는 아니지만 신청인이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은 2008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적 사안을 다룬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을 묵묵히 지켜 왔고, 2015. 5. 1.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가하는 등 사회적 활동에 굽힘없이 참여하여 왔다.

그간 2012년 개봉된 ‘잼 다큐 강정’이 영진위 직영 극장에서 상영보류가 된 점, 같은 해 배급한 영진위의 지원 선정작인 ‘두 개의 문’이 국정원에 검열당한 점, 2014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한 점, 같은 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점, 2014년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4차례 언급된 점, 2015년 문체부의 9,473명에 등재되었다는 점, 같은 해 문체부 영상과에서 작성한 2,565명의 영화인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점, ‘건전영화단체’로 불린 보수(우파) 단체까지 망라되어 국정원 및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에서 그간 제작·배급한 영상물이 사회 및 정부 비판적 내용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 등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적어도 2012년부터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나.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1) 지원배제 현황

- ①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관련, 고 박종필 감독의 ‘빛’이 프로듀서가 단지 신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이와 같은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으로 신청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이 작품의 심사와 관련 제척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 사업 관련 부서장은 사업담당자에게 “시네마달이 BH에 찍혔다”, 이 작품이 선정되면 영진위가 “끝장 난다”라며, 배제를 지시했다.
- ② 2013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관련,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MB 정부의 4대강 건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감독은 지울스님이고, 배급사는 시네마달이다. 이 때 신청서의 배급사 란에 시네마달이 명시되어 있고, 지원 배제되었다.
- ③ 2014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관련, 사전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지원이 되면 독립영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배제를 부탁하여 관철됐다. 그리하여 ‘구름비-바람이 분다’는 시네마달이 신청사라는 이유로 지원 배제 됐다.

- ④ 2016년 상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사업 관련, 이때는(2016. 4.부터) 심사위원 후보 추천 등의 업무를 ‘심사지원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심사지원팀은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당시에는 사업팀장이 후보명단을 제시하여 주고, 이를 담당자가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심사지원팀에 보내어 확인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위의 ‘그림자들의 섬’을 재차 배제토록 했다.
- ⑤ 2016년 하반기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관련, 이 때 사업팀장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발령되고 공식으로 심사위원 후보 선정을 못하던 중 발령이 난 전 사업팀장이 제시하여 주었다. 본부장이 사업담당자에게,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작품에 대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심사 개최일에 위 심사위원 어OO이 “정치 비판하는 영화, 배제할 작품이 있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1인이 반발하면서 본부장은 나머지 어OO 등 3인에게 배제 작품에 대해 주문을 하였고, 이 과정을 거쳐 ‘그림자들의 섬’이 지원 배제됐다.
- ⑥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관련, 당시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의 지시 아래 영진위에 요구하여 이 사업 신청목록 및 심사일정 등을 신OO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신OO은 이송희일 감독의 ‘연인들’ 등 3개의 작품에 대하여 배제 지시를 하고, 이OO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 부서장 및 팀장에게 배제 지시를 하달하여 관철되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후보 추천 과정 없이 부서장이 임의로 심사위원(후보)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담당자는 이러한 지원배제 과정 전반에 걸쳐 국가정보원 및 문체부는 특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정부비판적인 ‘문제영화’들을 걸러내고 배제토록 지시하는 등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특히, 부서장은 심사위원으로 신OO를 반드시 섭외하라는 지시와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확인해서 심사일을 맞추도록 했다.

2) 그 결과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이 제작·배급하고,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배제된 작품들을 일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주)시네마 달 관련 영진위 지원배제 일람

사업	시기	배제 작품	(주)시네마달	비고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2013년 상반기	모래가 흐르는 강	배급사	
	2014년 상반기	구름비 - 바람이 분다	배급사	
	2016년 상반기	그림자들의 섬	배급사	제작 김정근, 배급 시네마달
독립영화 제작지원	2016년 하반기	그림자들의 섬	배급사	제작 미디토리, 배급사 시네마달
	2013년 하반기	빛		프로듀서 김일권
예술영화 제작지원	2014년 상반기	빛		프로듀서 김일권
	2015년	연인들		제작사 시네마달

이와 같이 독립영화제작지원에서의 ‘빛’, 예술영화제작지원에서의 ‘연인들’, 다양성영화개봉지원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 ‘구름비-바람이 분다’, ‘그림자들의 섬’은 제작 및 배급 등이 신청인 및 시네마달이라는 이유로 지원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신청인 김일권과 시네마달은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피해사실

신청인의 주장 및 관련 진술, 언론보도 등을 아울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네마달이 수익구조가 기왕에 악화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는 더욱 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네마 달이 ‘잼 다크 강정’과 ‘두 개의 문’에 이어 세월호를 다룬 ‘다이빙 벨’ 및 여타 정부비판적인 영화를 제작 또는 배급하였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지원배제가 본격화되면서 이와 같은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폐업 위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배제작품 중 ‘빛’은 PD가 신청인이라는 이유로, ‘구름비 - 바람이 분다’는 신청사가 시네마달이라는 이유로, ‘연인들’은 제작사가 시네마달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명확하다. 또한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사업을 통해 ‘모래가 흐르는 강’, ‘그림자들의 섬’ 또한 배급사를 시네마달로 명시함에 따라 지원배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영진위 독립영화제작지원과 관련하여 ‘빛’(2회),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과 관련하여 ‘연인들’,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모래가 흐르는 강’, ‘구름비-바람이 분다’ 및 ‘그림자들의 섬’(2회)에 대한 지원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지원배제는 이 회사 및 신청인이 관여한 작품들에 대하여 회사명 및 신청인의 이름을 지우고 지원신청을 하기에 이르는 등 “자기검열”이 강요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 및 이 회사로 하여금 폐업을 고민하는 사태에 달하게 하면서 영화인으로서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켰다.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1) 시네마달의 제작 및 배급 현황을 볼 때 영진위 지원 사업에서 배제사실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 시네마달이 제작·배급하였으나 지원 배제를 우려하여 신청인 및 회사의 이름을 삭제한 채 지원한 작품이 다수였고, 실제 지원 배제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된 작품²⁷⁾ 또한 상당수이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심사위원들과 영진위 9인 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조사관의 역량의 부족, 위원회의 제한적인 활동 기한으로 인하여 연관성 증명 및 배제 경위 등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이 외에도 2014. 10. 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를 언급하고, 2015. 9 경 DMZ 영화제에 참여한 시네마달 배급 영화인 업사이드 다운에 대해 문체부 정OO이 청와대에 보고²⁸⁾하였고, 2016. 4.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업사이드 다운’ 상영과 관련하여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²⁹⁾하는 등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내사 여부 및 사실 경위, 추가 외압 여부 등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더 체계적인 조사역량, 시간의 배분이 부족하였다. 나아가 현재 위원회가 지닌 권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광범위한 외압 여부에 대한 조사는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27) 신청인 및 시네마달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지원 배제된 경위 및 작품에 대해서는 ‘2017직영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서 기록함

28)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형사부) 2017고합102 증거서류, 7019~7043쪽

29)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결과(16.04.10)

제5절 | 의견

- (1) 문체부 장관에게 이 사건 관련 피해자인 신청인 및 시네마달 그리고 국민에게 이와 같은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권고한다.
- (2) 문체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모지원 사업 심사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5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85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16[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08년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당사의 제작영화 '괴물, 효자동이발사' 등이 거론된다며 문건의 작성 경위와 피해사실, 문체부 기존 관리 리스트 등재 경위와 피해사실, 최용배 대표이사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리스트 등재 경위와 피해사실,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에 서명한 최용배 대표 피해사실, 대표이사 개인의 세무조사 등의 배경과 목적 확인 및 조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신청인은 국정원 보고 문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3. 15.)에 <영화 26년>이 지목된 한바 있고, 2014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014. 5.)에 신청인 '26년' 제작자라는 사유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의 관리를 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정황이 확인된다.

- (2)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16.2. 1현재문서, 기존리스트-149명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배제 명단을 청와대가 문체부에 다시 내려 보낸 것이 확인된다.
- (3)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에 신청인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오OO이 2015년 5월 경 위 명단이 포함된 9,473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공연전통예술과, 해외문화홍보원 등 다수 부서에 전달되었다.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2015. 5. 19. 경 그 기록 중 영화인만 추려서 2,665명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신청인도 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 (4) 신청인 세무 조사 관련은 우리 위원회 기능상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다.

붙임 :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영16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신청인] 영화사 청어람(주)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은 2008년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당사의 제작영화 '괴물, 효자동이발사' 등이 거론된다며 문건의 작성 경위와 피해사실, 문체부 기존 관리 리스트 등재 경위와 피해사실, 최용배 대표이사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리스트 등재 경위와 피해사실,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에 서명한 최용배 대표 피해사실, 대표이사 개인의 세무조사 등의 배경과 목적 확인 및 조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2017영16[2017영18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은 2018년 1월 5일 「21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 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에 따라, 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에 언급된 ‘괴물’, ‘효자동 이발사’ 피해 사실
- (2) ‘문체부 기존 관리 리스트’ 등재 경위 및 피해사실
- (3) 최용배 대표 심사위원 배제 관련 경위 및 피해사실
- (4)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리스트 관련 피해사실
- (5) 부당한 세무조사 의 불법성 확인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5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1	해외한국영화제 특정영화 배제사건 중간보고 2017. 12. 11.	조사3팀	2018. 1. 3.	
2	리스트-16.2. 1현재 신청인 관련부분	문체부	2018. 1. 3.	
3	투자일지		위 같음	
4	KT글로벌 뉴미디어 투자조합 뉴스 자료	청어람	위 같음	
5	영화 26년 관련 00000 관련 이메일	위 같음	위 같음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2008. 6. 19.			
6	비밀유지약정서 2008. 6. 27.	위 같음	위 같음	
7	영화 <26년> 투자현황 2008. 5. 2.	위 같음	위 같음	
8	영화 <26년> 다음 아고라 청원 2008. 10. 9.	위 같음	위 같음	
9	서울지방국세청 자료 2008. 4. 18.	위 같음	위 같음	
10	분석 보고서 2008. 4.	위 같음	위 같음	
11	증여세과세 청구서 2010. 5. 8.	위 같음	위 같음	
12	각하 결정서 2010. 6. 24.	위 같음	위 같음	
13	2013년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보도자료 2013. 12. 12.	문체부	2018. 2. 19.	
14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014. 5.	청와대	2018. 2. 19.	
15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리스트 (2011~2017)	콘텐츠진흥원	2018. 3. 7.	
16	이야기 전문가 POOL	위 같음	위 같음	
17	2011~2017년도별 본선 심사 실행계획	위 같음	위 같음	
1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2013. 3.	청와대	2018. 4. 10.	
19	전 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7. 10. 30.	국정원	위 같음	
20	문화균형화전략 2008. 27.	청와대	위 같음	
21	국정원 보도자료 2017. 9. 11.	국정원	위 같음	
22	이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7. 5. 2.	법원	2018. 4. 21.	
23	영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본 최용배 기재 면	법원	위 같음	
24	오OO 특검 진술조서 2016. 12. 26.	위 같음	위 같음	
25	오OO 특검 진술조서 2회 2016. 12. 27.	위 같음	위 같음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8인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최용배	신청인	녹취록 (2018. 1. 3.)
2	오OO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2. 7.)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3	OOO	콘텐츠진흥원 팀원	진술청취(2018. 2. 27)
4	김OO	문체부 공연전통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3. 8.)
5	김OO	콘텐츠진흥원 감사실 차장	진술조서(2018. 3. 8.)
6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진술청취(2018. 4. 20.)
7	김OO	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지원 본부장	진술청취(2018. 4. 20.)
8	이OO	콘텐츠진흥원 팀장	진술청취(2018. 4. 2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영화사청어람(주)

2001년 11월 28일에 설립된 영화사청어람(주)는 효자동 이발사(2004), 작업의 정석(2005), 흡혈형사 나도열(2006.), 괴물(2006), 26년(2012) 등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이다. 영화사의 전 대표는 최용배이며,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216호에 위치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등으로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순수 창작 콘텐츠 공모 사업이다. 2013년의 경우 시상규모 총 6억원, 2014년의 경우 시상 규모가 4.4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도 4.4억원 이었다.

2013년의 경우 1,423편의 작품이 접수 되었다고 하며 문체부 보도자료(2013. 12. 12.)에 따르면 ‘본선 심사는 안OO OOO클럽 대표를 비롯해 안OO OO네트웍스 대표, 최용배 영화사청어람대표, 이OO 감독, 천OO 작가, 이OO 소설가 등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 18명이 맡았다’라고 했다.

예) 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시상규모

구분	상명	자유공모(18편)		지정공모(6편)	
		상금	비고	상금	비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억원	1편		
최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5천만원	2편	5천만원	1편
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2천만원	15편	1천만원	5편
	계	5억원		1억원	

2. 조사내용

가. 신청인 주장

언론 보도를 통하여 블랙리스트를 알게 된 신청인은 2008년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당사의 제작영화 ‘괴물, 효자동이발사’ 등이 거론된다며 문건의 작성 경위와 피해사실, 문체부 기존 관리 리스트 등재 경위와 피해사실, 최용배 대표 이사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리스트 등재 경위와 피해사실,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에 서명한 문화예술인 피해사실, 대표이사 개인의 세무조사 등의 배경과 목적 확인 및 조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화 <26년> KT 투자 철회 등 난항을 겪은 원인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실행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조사 신청서 2017. 11. 30.)(신청인 녹취록 2018. 1. 3.).

“그러니까 문<(OOOOOOOO) 대표한테 들은 얘기와 문> 대표 외에 다른 KT와 BH에서 벌어졌던 일들, 청와대에 벌어진 일들을 듣게 되는데, 아마 OOOOOOOO¹⁾가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KT도 아마 되게 난감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그것 때문에 불러 들어갔는지 다른 일 때문에 간 상황에서 들은 얘기인지 남중수(KT)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당신들이 <26년>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영화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청와대에 돌아와서 임원들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투심에 가서 OOOOOOOO 측에다가 “이거 투

1) KT-Global 뉴미디어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OOOOOOOO와 청어람 주식회사는 2008년 6월 27일 영화 26년 투자 관련하여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자하면 하면 큰일 난다.”라고, “절대 투자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노라라고 하는 증언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신청인 녹취록 2018. 1. 3.).

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실 2008. 8. 27.)

(1) 위 문서에는 소위 '좌파 문화권력 실태'를 언급하며, 그 예로 '민예총, 문화연대,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을 언급'하고 '제도권 내에 좌파세력화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 좌파실무자들에 대한 청산과 좌파 자금줄을 차단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추진체계에서 청와대가 총괄 기획하고 문화부(현 문체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향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역할,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지원. 등이 기술되어 있다.

○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

-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
-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
- 대부분의 영화 투자자본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지원

위 문서 2쪽에 영화사청어람(주)이 제작한 괴물(2006)과 효자동이발사(2004)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는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이하 집행 결과 분석)(2012. 9. 21.)²⁾」 다수가 실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17영4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결과 보고서」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하여 실행된 부분이 추가 확인된 바 있다.

2)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작성 문서.

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점사업 실시

○ 영화시장 분위기 전환을 위한 우파 영화제작

-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 추진
- 영화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바,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
- 우선 SKT와 협의, SKT는 현재 6.25 전쟁영웅에 관해 시나리오작업 중이며 수백억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

위 문서에서 대기업 중 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정인철 재임 시기(2008. 6. ~2010. 7.)에 작성되었다. 정인철은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 9.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2010. 4. 기획관리비서관)'³⁾ 파악등을 국정원에 수시로 지시 한바 있다.

2010년 10월에는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 요청으로 '문화예술단체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를 하며 국정원은 촛불 집회 적극 가감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조치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MB 82명 블랙리스트를 발표 한 바 있다. 이 명단에, 신청인(최용배)은 등재되지 않았다.

3)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MB정부 시기의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2017. 9. 11.

(2) 영화 ‘괴물’, ‘효자동 이발사’ 재외 한국영화제 상영(2013~2016.) 현황

< 해외 문화원 >

- 1) 문제성 단체 참여 및 이념갈등 유발 소재 행사 주최·후원 지양, 문화원 주최 및 후원영화 선정시 문제성 영화 배제 조치
- 2) 영화 선정시 개별문화원에서 영진위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해외 문화홍보원에서 일괄 점검토록 모니터링 체제 정비. 끝.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국정원 2017. 10. 30.) 중 ‘문체부, BH에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2014.3.21.)’ 내용 일부

국정원 문서 ‘문체부, BH에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2014.3.21.)’에 따르면 (해외)문화원에서의 ‘문제성 영화’ 배제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2013년 영화 ‘괴물’은 주터키,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2곳에서 상영, 영화 ‘효자동 이발사’는 주영한국대사관 1곳 상영, 2014년 영화 ‘괴물’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이탈리아, 주잠보이다 대사관 3곳 상영, 2015~2016년도는 상영 사례가 없다.

문제성 영화배제 관련하여 입수한 각종 문서 및 진술에서 추가적으로 영화 ‘괴물’과 ‘효자동이발사’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OO 해외문화홍보원장(2015. 3. 31~2016. 4.)은 “2014년 경 저작권정책관 무렵(2014. 1.~10.),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라고 하며 “2015년 해외 영화제 할 때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 문화원장들에게 공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2016년 경 언론 보도를 보고 저것 때문에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원장으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 4. 19.).

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국정원 2013. 3. 15.)

(1) 위 문서는 우리 위원회가 2017. 10. 10.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입수한 청와대 문서이다. 국정원은 2018. 1. 2. 회신문서를 통하여 위 문서가 국정원이 작성하여 2013. 3. 15. 경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동시에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교문수석비서관에 배포된 문서라고 밝혔다.

위 문서는 ‘문화예술계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며 ① 문화예술계 좌파들은 편중지원과 내부결속을 토대로 헤게모니 장악, ②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기득권 유지 및 뒤틀린 이념확산을 위해 ‘문화’를 수단으로 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 ③ 최근 좌파들이 정부초기 국민대통합 분위기에 편승, 영향력 확대를 모색중인 가운데 문화계 ‘좌파쏠림’ 지속시 ‘문화융성’ 구현에 차질 소지 라는 3가지 주제에 대응 방안이 나타나 있으며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이라는 붙임 문서에 블랙리스트 단체와 주요인물, 주요 동향을 기재하고 있다.

□ 左派 문화예술인들은 기득권 유지 및 뒤틀린 이념 확산을 위해 ‘文化’를 수단 삼아 國論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

○ 공권력·정부는 ‘탄압의 주체’로, 대중은 ‘사회적 弱者’로 왜곡,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은 물론 그릇된 對北觀을 주입

* 영화 ‘26년’·‘남영동1985’ 및 출판물 ‘닥치고 정치’ 등 문화매체를 통해 정부 불신을 야기

두 번째 사례에서 신청인 영화사의 영화 <26년>이 기재 되어 있다. 한편, 붙임 문서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에는 신청인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영화 <26년>, 재외 한국영화제 상영(2013~2016.) 현황

위 영화는 재외 한국문화원 및 공관이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한국영화제에서 2013~2016 경우 상영된 사례는 없다.

(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청와대 2014. 5.)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2심 판결문(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피고인의 ‘위법 부당한 지원배제 지시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요 증거로 삼으며 작성 배경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14.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증거기록 11366쪽 박준우 수첩 기재 및 제2 원심 증인 박준우 진술), 2014. 3. 27.경 정무수석실 주도로 관련 수석실 등과 협의하여 TF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제1, 2 원심 증인 박준태, 제2 원심 증인 신동철, 당심 증인 박준우, 모철민, 신동철 각 진술, 순번 제1357호 2014. 3. 27.자 실수비 회의결과).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3. 28. 열린 실수비에서도 “국정철학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376쪽 박준우 수첩 기재). 이에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 끝에 2014. 5. 하순경 그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증거기록 10833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2심 판결문 52~53면)” 라고 밝혔다.

15	이진희 (은행나무 출판사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이야기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16	오성윤 (미당을나온임담 감독)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이야기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 노무현 지지선언 • 문재인 후보 대선 광고 촬영 • 영화 '26년'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17	최용배 (영화사 청어람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이야기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 영화 '26년' 제작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서, 첨부2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 자료 일부.

위 문서의 첨부3 문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 : 66개 위원회 70명(중복 9건 포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나 신청인(최용배)이 등재된 첨부2 문서는 ‘조치 완료’라고 기재되어있다.

2. 좌파인사 확인·조치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첨부#2)

* (점검대상) 국무총리실, 안행부,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

<심사위원 조치 현황(2013~2014.4)>

구분	계	고용노동	문화체육	보건복지
심사위원(명)	26	6	12	8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중임을 확인

* 대통령(16개), 국무총리(64개) 소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부처 위원회 전체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2014.5)>

구분	계	기재	미래	교육	통일	법무	안행	문화	농림	산통
위원(명)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 70명)	79	3	1	3	1	1	7	5	8	3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 70명)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	해양	법제처	보훈처	수려
	7	9	12	2	11	1	1	2	2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서' 2쪽.

(가) 이야기산업 활성화· 대한민국스토리 공모대전 배제에 대하여

2013년 신청인(최용배)과 오성윤은 '대한민국스토리 공모대전' 본선 심사(본심)위원에 참여한 바 있으나 2014~2016까지 심사위원 명단에 없었다. 2014년 본심 심사위원 후보 풀 명단에 신청인(최용배)과 오성윤은 있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이와 다르게 이 OO는 예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스토리 공모대전 본선 심사위원 명단에 신청인, 오성윤, 이 OO가 기재되어 있다.

1)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실행계획 자료 ‘본심’심사위원 선정방법 기재 내용 비교

년도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실행계획 자료 심사위원 선정방법 기재 내용
2011	설명없음.
2012	예심,본심 3배수 pool을 마련하여, 내부자문, 검토 통해 확정.
2013	심사위원 Pool마련, 내부검토(검사역) 통해 확정.
2014	자체 전문 심사위원pool 구성 및 선정, 전문 심사위원pool내에서 별도 구성, 매체, 장르, 직군, 전문분야 안배·경력, 최근활동, 진흥원 사업에 대한 이해 고려, 분야, 직군 등 구분한 후 직분별 섭외 - 본심 심사위원 pool구성(감사실을 통한 Pool구성)
2015	본심 심사위원 풀 중에서 내부 협의를 통해 선정
2016	본심 심사위원은 본심심사위원 후보 중 내부협의를 거쳐 선정
2017	본심의 경우, 시상의 권위를 고려하여 전문가 pool 중 인지도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별도 원장 보고 결재)

2) 대한민국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 선정 배제

가) 000(2014년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야기산업 활성화팀 과장으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담당자)는 신청인 등 심사위원 배제에 관하여 ‘심사위원 선정은 감사실과 심사평가지원단 소관’이라 주장하였다(진술청취보고 2018. 2. 27.). 출석협조요청서(기획행정담당관-1225/2018. 2. 28.)를 통해 3월 9일을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7일경 000 및 000 실장이 연락을 해오며 000가 출석 못하게 되었다고 구두로 연락하였다. 콘진은 3월 12일 공문을 통하여 000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이유’라고 기재하고 있다.⁴⁾

나) 000(콘진 2014 감사실 차장) 진술조서(2018. 3. 8.)

대한민국스토리 공모대전 심사 세칙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의 특정 사업만을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은 격에 안맞는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라고 하고 2011년 본심 심사위원은 구00, 금0, 김00, 김00, 박00, 박00, 신00, 이00, 이00, 차00, 신00, 이00, 권0 등 13명이었습니다. 2012년 본심 심사위원은 구00, 김00, 김00, 민00, 박00, 신00, 안00, 윤00, 이00, 이00(콘진 팀장), 이00 등 11명입니다. 5명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 심사에 참여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봐도 이상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딱히,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

4) 이에 대해 000은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즉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융합전략팀에 자료를 요청하면 답변드린다는 취지였다’고 소명함(18.11.6.)

고 2013년 본심 심사위원에 강OO, 문OO, 박OO, 안OO, 안OO, 오OO, 윤OO, 이OO, 이OO, 천OO, 최용배, 한OO, 김OO, 민OO, 이OO(콘진 팀장), 이OO, 채OO, 최OO 등 18명입니다. 2명은 3년 연속(2009, 2010년을 포함하면 5년 연속) 참여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추측인데요, 처음에는 심사위원 풀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심 관련하여 후보 안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실이 추출을 했는지, 우선 순위만 랜덤하게 조정했는지, 아니면 해당 팀이 직접 수행했는지, 당시 사업담당자와 감사실 직원에게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013년 심사위원중 이OO, 최용배, 오OO에 대한 배제 조치 완료라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4년 배제 되었는데, 위 3인을 심사위원에서 배제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난감한 표정으로)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하며 2014년도 심사위원 구성은 구OO, 김OO(2011~12), 문OO, 김OO, 이OO, 이OO, 이OO, 정OO, 채OO, 최OO, 황OO, 한OO 등 12명입니다. 5명이 재선정되고 과거 경험이 있던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재차 묻자 “아마도 해당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라고 하였고 2017년 심사위원 구성에서 이OO, 최용배, 오OO이 4년만에 동시에 심사위원회에 선정되는데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볼 때 의심스럽기는 한데, 담당자로 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진술 하였다.

다) 김OO(2014 콘진 심사평가지원단장)

2014년 최용배 심사위원 배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는 심사평가지원단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심사평가지원단은 타 사업의 경우 규칙에 맞게 심사위원등을 선정하는 머리가 없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 할 당시에는 문체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하고 사업 부서의 경우는 문체부와 자주 연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라고 묻자, ‘보통 문체부 주무관은 해당팀의 담당자, 사무관은 팀장과 연락을 합니다.’라고 하였다.

라) 이OO (2014 만화 스토리 산업팀장)

2014년 최용배 심사위원 배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며 ‘규정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마) 김OO (2014 대중문화산업과⁵⁾ 담당 사무관)

2014년 최용배 심사위원 배제와 관련하여 그 건에 대하여 ‘정말 몰라요’라고 하며 ‘최용배, 오OO, 이OO 모두 낯선 이름이에요’라고 하면서 당시에 ‘배제 관련하여 콘진 직원에게 연락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라. 문체부 기존 관리 리스트 등재에 대하여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16.2. 1현재’ 문서 중 목록 ‘기존리스트-149명’은 문체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배제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

(1)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16.2. 1현재’ 문서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김OO이 2014년 경 부터 김OO 국장에게 전해준 리스트로 오OO이 김국장으로 부터 전달 받아 작성해왔던 블랙리스트(특검 오OO 진술조서 2016. 12. 26. 10면, 증거목록 4731면.)이다. 이 문서 13~14쪽 목록 ‘기존리스트-149명’은 오OO이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은 리스트 라며 2014년 4~5월 경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관리하라고 김OO 사무관에게 전달한 바 있는 목록의 리스트이다(김OO 진술조서 2018. 3. 8.). 김OO은 “2014년 4~5월 경 처음 리스트를 받은 후 공연과 사무관들이 각자 자기 파트 담당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한 사업에서 리스트에 추가 되었는데 다른 담당자에게 업데이트된 리스트가 공유가 안 되어서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되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창구가 오OO 사무관으로 일원화 된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고 진술하였다.

기존 관리리스트 -149명에 대하여 오OO은 ‘2015년 문예기금 사업 이 외에 BH에서 내려 온 문건 등에 지원 배제 대상 등으로 언급된 민예총, 작가회의, 지역문화재단 등 인물이나 단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연과 김OO 사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했다(특검 오OO 2회 진술조서 2016. 12. 27.).

(2) 국정원 개혁위가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2017. 10. 30)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간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명의 인물검증 요청을 받아, 이 중 민주당·舊 통진당 黨員, 정부 비판·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통보

5) 2014년 당시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최OO은 국외(미국) 연수중이라 조사하지 못함.

하였음.’이라고 하고 ‘2014년(1,400명 요청, 102명 통보), 2015년(3,700명 요청, 177명 통보), 2016년(3,400명 요청, 69명 통보) 등 총 348명 통보’ 하였다 하며 ‘위 인원수(8,500여명 요청, 348명 선별·통보)는 전체 실적취합을 위해 작성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문체부 I/O는 외부 유출에 대비 선별된 명단을 전화로 불러주고 별도로 문서자료를 남기지 않아 선별·통보 대상자 실명이 모두 기재된 자료는 보존되어 있지 않음’ 이라고 밝히며 ‘다만, 특정 인물 선별·통보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국정원 내 잔존 보고서와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 등 종합 결과,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348명中 181명의 실명을 확인하였음’ 이라고 하였다. ‘실명 181명은 특검이 문체부에서 압수하여 공소제기한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부분 일치’ 라고 하였는데, 기존 관리리스트에 등재된 신청인(최용배)은 국정원 문서 기록에 없었다.

마.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리스트에 대하여

(1) 9473인 블랙리스트

합계	총 9,473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608인 (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9473인 블랙리스트 문서 표지)

위 블랙리스트⁶⁾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8. 1. 31.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다. 위 리스트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에 대한 언론 보도, 블로그 스크랩 목록으로 60쪽 분량이며 총 합계 9,473인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에 ‘최용배(영화제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문서는 2015. 5. 6~7. 자 출력물이며 000(당시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는 당시“조 OO 사무관과 함께 위 문서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고 진술((진술조서 2018. 1.29))하였고, 문서는 000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하였다.

000은 “2015. 5 경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등 카테고리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 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되어 이표로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며 제가 김OO 국장에게 “전국에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16,000명 정도인데, 9,500명 정도를 빼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자, 김OO 국장도 웃으면서 ‘말도 안되는 얘긴데 어떻게 하겠냐 장관께 보고하고 보내자’고 했고, 김OO 국장이 ‘장관 보고 됐으니까 보내라’고 해서 내부 메일에 앞 표와 사이트 주소창(URL)을 붙여서 메일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했다(특검 000 2회 진술조서 2016. 12. 27.).

000은 영상콘텐츠산업과, 국제문화과, 지역전통문화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 디자인과, 문화산업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에도 위 리스트를 전달한 바 있는냐는 질문에 “각 과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받아갔습니다. 전달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2. 7.).

김OO은 “2015년 여름 즈음 블랙리스트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김OO 국장이 전보

6) 한국일보에서 특종 보도한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2016.10.12.)’ 기사로 블랙리스트 문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바 있는데, 당시 보도는 ‘문서 표지’로 내용을 추측해서 기사화 했으며, 블랙리스트 문서 출처를 청와대, 블랙리스트 문서 분량을 100쪽 등으로 기술되어 사실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조치될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인가에 문재인 지지 명단 등 9,473명의 명단이 내려왔는데 제가 예술의전당 경영 평가 자리에서 예술의전당 본부장들(U 본부장, 박OO 본부장 등)에게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청와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후 앞으로 조심하자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 했다(김OO 진술조서 2018. 3. 8.).

(2)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인 2,665명 리스트

2015. 5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는 영화인 2,665명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이 문서는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데, 파일의 제목은 ‘작업중(중요).xls’이고 문서 정보에 의하면, 만든날짜는 2015. 5. 19.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2015. 7. 6. 이다. 위 리스트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8. 1. 31.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던 9,473명의 명단(2015. 5. 6~7. 출력물)과 일치한다.

검사 이용복이 증인 이OO(2016. 7.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에게 ‘영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본(2665명)’을 제시하고 이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라고 하자 이OO는 ‘청와대에서 다이빙벨 이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리스트가 발표되면 그 리스트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비판적인 영화는 별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당시 손OO 사무관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이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7. 5. 2. 사건번호2017고합102).

제4절 |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피해사실

- (1) 신청인은 국정원 보고 문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3. 15.)에 <영화 26년(이하 26년)>이 지목된 한바 있고, 2014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에 신청인이 <26년> 제작자라는 사유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의 관리를 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에서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명단 '총 26명'에 신청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2014년 심사위원에 선정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실행 현황이 확인된다. 한편,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26년> 상영기록이 없는바 상영 배제 의혹이 있으나 관련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음으로 확정하기는 힘들다.

- (2)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 16.2. 1현재' 문서, 기존리스트-149명은 청와대에서 전달된 것으로 공연전통예술과 김OO과 예술정책과 오OO이 관리 했던 것인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배제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 즉,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배제 명단을 청와대가 문체부에 다시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 (3)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에 신청인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오OO이 2015년 5월 경 위 명단이 포함된 9,473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공연전통예술과, 해외문화홍보원 등 다수 부서에 전달되었다.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2015. 5. 19. 경 그 기록 중 영화인만 추려서 2,665명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신청인도 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실 2008. 8. 27.)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정인철 재임 시기(2008. 6. ~2010. 7.)에 작성된 문서로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 사례로 영화사청어람(주)이 제작한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2006)'과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이발사(2004)'가 기재되어 있다. 2008년 당시 신청인은 영화 <26년> 제작 관련하여 KT-Global 뉴미디어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OOOOOOOO와 2008년 6월 27일 영화 <26년> 투자 관련하여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 투자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매우 크나, 현재 관련 당사자들이 다수 민간인들이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2014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에서 배제 실행 과정

관련 기록,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면 문체부의 지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 만화 스토리 산업팀 등이 관여 된 것으로 보이거나 확증을 할 수는 없었다.

다. 신청인 세무조사 관련

우리 위원회 기능상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6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지원 축소 의혹 사건



86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지원 축소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영18[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 지원 축소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0년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교부금 집행이 미루어진 사유와 2011년 지원 금액이 축소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① 2010인디애니페스트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교부금 집행이 미루어진 것과 2011인디애니페스트 보조금 지원 금액이 축소된 사실은 블랙리스트 실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② 신청단체,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단체의 회장 나기용, 이사 장형윤, 사무국장 최유진은 블랙리스트에 등재 되어 있었다.

③ 이사 장형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에서 배제된 피해사실이 있다.

붙임 :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 지원 축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사 진] 2017영18,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 지원 축소 의혹 사건
[신청인]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은 2010년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교부금 집행이 미루어진 사유와 2011년 지원 금액이 축소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2017영18[2017영18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 지원 축소 등 사건]은 2018년 1월 19일 「23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에 따라, 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1) 2010년 인디애니페스트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금 집행이 8월로 미루어진 이유가 블랙리스트 실행 때문인지,

- (2) 2011년 인디애니페스트 사업 국고보조금 금액이 축소된 사실이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44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1	인디애니페스트 2010 국고보조금 교부의뢰 2010. 8. 24.	문체부	2017. 1. 17.	
2	인디애니페스트 2010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010. 8. 24.	위 같음	2018. 1. 17.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2010. 8.	위 같음	2018. 1. 17.	
4	인디애니페스트 2010 사업계획안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2010. 8.	위 같음	2018. 1. 17.	
5	인디애니페스트 2010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통보 2011. 7. 8.	위 같음	2018. 1. 17.	
6	인디애니페스트 2010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고지서 2011. 7. 11.	위 같음	2018. 1. 17.	
7	인애니페스트 2010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010. 8.24.	위 같음	2018. 1. 17.	
8	인디애니페스트 2011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2011. 6. 5.	위 같음	2018. 1. 17.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2011. 5. 2.	위 같음	2018. 1. 17.	
10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1. 1.	위 같음	2018. 1. 17.	
11	인디애니페스트 2011 국고보조금 교부의뢰 2011. 6. 21.	위 같음	2018. 1. 17.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12	인디애니페스트 2011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통지 2012. 5. 31.	위 같음	2018. 1. 17.	
13	인디애니페스트 2010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고지서 2012. 6. 5.	위 같음	2018. 1. 17.	
14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사영회 사업계획서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2011. 4.	위 같음	2018. 1. 17.	
15	인디애니페스트2010 및 순회사영 국고보조금 신청건 2010. 2. 25.	위 같음	2018. 1. 17.	
16	인디애니페스트2010 사업기간 연장 신청의 건 2010. 10. 28.	위 같음	2018. 1. 17.	
17	인디애니페스트2010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의 건 2011. 6. 30.	위 같음	2018. 1. 17.	
18	인디애니페스트2011 국고보조금 예산변경 신청 및 축사 요청의 건 2011. 8. 23.	위 같음	2018. 1. 17.	
19	문체부 장관 정병국 축사 2011.	위 같음	2018. 1. 17.	
20	인디애니페스트2011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의 건 2011. 12. 28.	위 같음	2018. 1. 17.	
21	인디애니페스트2011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2011. 4. 29.	위 같음	2018. 1. 17.	
22	2010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본(Ⅲ-1)일반.특별회계 111-121P. 2011. 3. 30.	위 같음	2018. 1. 17.	
23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2017. 9. 11.	국정원	2018. 1. 17	
24	MB 블랙리스트 82명 명단을 공개합니다. 2017. 9. 13.	이데일리	2018. 1. 17	
25	인디애니페스트 2009	문체부	2018. 2. 26.	
26	인디애니페스트 2012 국고보조금 결정통지 2012. 4. 3.	위 같음	2018. 2. 26.	
27	인디애니페스트 2013 국고보조금 결정통지 2013. 4. 29.	위 같음	2018. 3. 26.	
28	인디애니페스트 2010 개최보고	위 같음	2018. 3. 27.	
29	인디애니페스트 2010 유인촌 축사	위 같음	위 같음	
30	2014,2015 인디애니페스트 국고보조금 의뢰	위 같음	위 같음	
31	인디애니페스트 2005~17 요약 자료	한 독 애 협	위 같음	
32	문화부 애니 예산 등 82.2% 증액 2011. 10.	문체부	위 같음	
33	4대강 살리기와 타예산 삭감은 별개 2009. 10.	연합뉴스	위 같음	
3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5	국회법률정보	위 같음	
35	잃어버린 10년 보수의 극장 환수운동	한겨레21	위 같음	
36	문화예술계 531 지지선언 2006. 5. 23.	레디앙	위 같음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37	[대법원 2015.11.27.,선고,2013다6759,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3. 30.	
38	2009~2012-관련 일반회계자료	문체부	위 같음	
39	2010,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교부 통지	위 같음	2018. 3. 31	
40	2010,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교부 의뢰	위 같음	위 같음	
41	2010,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교부	위 같음	위 같음	
42	수사보고[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실에서 압수된 영화 예술계 블랙리스트(2,655명) 등 2017. 1. 6.]	법원	2018. 4. 1.	
43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16.9.27현재'문서 1쪽과 7쪽	문체부	2018. 4. 1.	
44	블랙리스트문건 입수보고 2018. 1. 31. 및 문서표지.	문체부	2018. 4. 1.	
45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	국정원	2018. 4. 1.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8인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당시 직위(급)	제목
1	김OO	영상콘텐츠과 과장	전화진술 청취 (2018. 1. 17.)
2	김OO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위 같음
3	전OO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위 같음
4	OOO	영상콘텐츠과 주무관	위 같음
5	OOO	영상콘텐츠과 주무관	위 같음
6	박OO	영상콘텐츠과 과장	위 같음
7	OOO	영상콘텐츠과 주무관	진술조서 (2018. 2. 26.)
8	최OO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무국장	진술조서 (2018. 2. 27.)
9	박OO	영상콘텐츠과 과장	진술조서 (2018. 3. 20.)
10	전OO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2차 전화진술 청취 (2018. 3. 27.)
11	강OO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3. 28.)
12	유OO	문화콘텐츠정책실장	전화 진술청취 (2018. 3. 3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지원 사업

‘인디애니페스트’는 2005년부터 시작한 독립애니메이션 영화제이며 영화제가 끝 난 후 전국을 순회하며 영화제 출품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2005~2007년까지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이하 영상콘텐츠과)에서 직접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되었다.

나.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2004년 7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2005년 6월 사단법인이 된, 애니메이션 작가, 시나리오 작가, PD 들의 단체이다. 2005년부터 독립애니메이션 영화제(인디애니페스트)를 주최해오고 있다.

다.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근거

문체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한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왔으며 예산과목은: 061-1200-1231-303-320-01(전략콘텐츠산업 육성, 2010), 1232-301-320-01(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015) 등으로 변화 되었다.

2. 조사내용

가. MB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 검토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실 2008. 8. 27.)

위 문서에는 소위 ‘좌파 문화권력 실태’를 언급하며, 그 예로 ‘민예총, 문화연대, 문성

근, 명계남, 이창동 등을 언급'하고 '제도권 내에 좌파세력화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 좌파실무자들에 대한 청산과 좌파 자금줄을 차단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추진체계에서 청와대가 총괄기획하고 문화부(현 문체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향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역할,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지원. 등이 기술되어 있다.

(2) 국정원 개혁위 'MB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자료1)' (2017. 9. 11.)

위 보도자료에는 '원세훈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 선동 등을 사유로 각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하였음.'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표-3] MB정부 블랙리스트 82명

구분	강성성향(69명)	온건성향(13명)
문화계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배우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영화감독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및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모 등 (총 52명)	
방송인	김미화, 노정열, 오종록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철수, 황현희
가수	윤도현, 신해철,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위 문서에 첨부된 MB블랙리스트 82명 명단 중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모 등」 52명의 명단에는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당시 사무차장 최유진이 포함되어 있다.

1) 보도자료 제목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작' 관련 조사결과 발표.

(3) MB정부 시기 블랙리스트에 관한 진술

박OO(진술조서 2018. 3. 20.), 전OO(진술청취. 2018. 3. 27.) 모두 당시 영상콘텐츠과 근무시 특정 단체 배제 지시를 받았거나 분위기를 느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OO는 “이명박 정부때는 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실무진까지 지시가 내려왔던 것은 아니어서 지원하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박OO이) 당시 유OO 실장과 사이가 안좋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시러 가는 것도 싫어 하셨었구요.” 라는 진술을 했다(진술조서 2018. 3. 28.).

한편 유OO(문화콘텐츠정책실장)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특정 단체를 불이익 또는 배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진술청취 2018. 3. 30.).

나.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이 늦어진 의혹에 대하여

(1) 2010~2015 인디애니페스트 관련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 시점

[표-4] 국고보조금 지급 시점 비교.

사업명	보조금 신청 시기	결정 통지 시기	영상콘텐츠과 담당자
2010년 인디애니페스트 9. 30. ~ 10. 5.	2010. 2. 25.	2010. 8. 24.	이OO/전OO/박OO
2011년 인디애니페스트 9. 22. ~ 9. 27.	2011. 4. 29.	2011. 6. 15.	이OO/김OO/김OO
2012년 인디애니페스트 9. 20. ~ 9. 25.	2012. 3. 19.	2012. 4. 3.	표OO/김OO/박OO
2013년 인디애니페스트 9. 26. ~ 9. 30.	2013. 3. 29.	2013. 4. 30.	표OO/장OO
2014년 인디애니페스트 9. 25. ~ 9. 30.	2014. 4. 10.	2014. 5. 28.	표OO/김OO
2015년 인디애니페스트 9. 17. ~ 9. 22.	2015. 5. 19.	2015. 6. 4.	표OO/채OO

국고보조금 신청 후 보통 2개월 안에 결정 통지가 나는데, 2010년의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걸렸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5.) 제17조²⁾ 위반 여부

위 법은 「보조금관리법」(법률 제1431호, 1963.11.1., 제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제17조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 조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법률 제3874호, 1986.12.31., 전부개정)을 하면서 신설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 2011.7.25.,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무원의 느린 행정 처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법정 처리 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 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3다6759, 판결]

(3) 2010년 국고보조금 교부 단체 사례

(가)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10 국고보조금 교부 사례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위원장 김현호)는 6월 1일, 보조금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 5천만 원을 교부 의뢰하였으나 박OO은 7월 23일 인건비, 1천 20만원과 초창비 5백만 원을 삭감하여 2천3백5십만원 지원 검토를 지시하였고, 실무진에서 9월 24일 재기안하여 3천8백7십만 원 교부를 결정하였다. 영화제의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0월이었다.

박OO이 9. 30. 발령을 받게 되고 신임 과장 김OO이 10. 1. 부임하자, 영상콘텐츠과에서는 3천8백7십만원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전OO이 책정된 예산대로 5천만원 교부를 전결 결재하였다. 영화제 사업기간은 9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다.

2)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년 당시 시행 규정).

(나) 대한민국라이브뮤직 페스티벌 2010 국고보조금 교부 사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위원장 강한영)는 5월 4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신청한 액수(7천만원)대로 5월 26일 교부를 결정하였다.

영화제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이었다.

(4) 2010년 인디애니페스트 국고 보조금 지급이 늦은 사유에 대한 진술

신청인은 “당시 편성예산은 있었는데, 결재가 안 난다고 전OO(당시 영상콘텐츠과) 사무관에게서 들은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진술조서 2018. 2. 27.).

전OO은 당시, ‘부임 이전 사무관들이 6개월, 3개월 등 짧게 일을 하고 떠나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고 하며 큰 용역사업 부분들이 지체된 것이 커서 그 일을 수습하여 진행하고 심형래 감독³⁾에 대한 콘텐츠진흥원 예산 지원 등 큰 사건이 있어서 행정 이 밀린 영향을 받았던 같다’고 했다(진술 청취 2018. 1. 17.). OOO(당시 영상콘텐츠과 주무관)은 ‘박OO 과장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여 늦어졌을 것이다’라고 했다(진술 청취 2018. 1. 17.).

강OO(당시 영상콘텐츠과 사무관)는 “(박OO 과장이) 사람과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시는 편이었고 몇 달 동안 사무관 세명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며 “결재에 까다로웠습니다. 계속 반려해서 늦어진 것이죠. 제가 애니 파트 일은 잘 몰라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2차 진술조서 2018. 3. 28.).

한편, 박OO(당시 영상콘텐츠과 과장)은 당시 일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진술조서 2018. 3. 20.) 진술하였다.

3) 당시, 영화 ‘라스트갯파더’ 관련하여 영구아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2억원 지원 받았었다.

다. 2010~2011년 인디애니페스트 국고보조금 삭감 의혹에 대하여

(1) 인디애니페스트 2010 개최 보고 (2010. 9. 6./영상콘텐츠산업과) 문서

[표-5] 인디애니페스트 2010 개최 보고 문서 중 관련 부분 인용.

□ 부대행사(예정)

- 인디애니페스트 전국순회상영회 : 전국 11개 지역 순회상영('10 하반기)
- 인디애니페스트 해외순회상영회 : 일본 도쿄 오사카 등('10 하반기)
- 인디플라이 : 감독 해외행사 참가 지원('10 하반기)
 - ※ 문체부 주 행사인 「인디애니페스트 2010」 행사내용 지원(5천만원)

□ 문체부 지원 : 영화제 행사경비 5천만원 지원, 행사후원, 작품집 장관 축하

- ※ '09 1억원, '08 9천8백만원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10. 9월)

□ 검토내용

- 재정적자 절감을 위한 예산절감 등의 국가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단체 스스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요청한 1억원 중 **해외상영, 국내 순회상영 부문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5천만원)**하여 영화제 행사경비 5천만원 교부
 - ※ 삭감한 국내순회·해외상영 부문은 자체 부담하도록 권고(2011년 지원예산 전액 삭감)

위 문서 작성자 전OO은 '기재부에서 2011년 문체부 예산을 일괄로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고, 정확히 얼마나 줄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동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며, 자신이 2010년 경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 받게 했던 기억도 있어서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정황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고 'MB 정부 때는 과 단위에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지는 않다며, 혹시 국장급에 그런 배제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무진에서는 전혀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하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다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진술청취 2018. 3. 27.).

한편 박OO은 지원 삭감에 관하여 블랙리스트 이유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3. 20.).

(2) 2009~2012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관련 분석(문체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⁴⁾

(가) 2009~2012년 국고보조금 연속 교부 4개 단체 비교

(단위: 백만원)

단체명	2009년 (예산 15,171) 집행내역	2010년 (예산 22,389) 집행내역	2011년 (예산 19,001) 집행내역	2012년 (예산 29,369) 집행내역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102	288	87	95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100	50	15	94
한국만화출판협회	255	185	185	235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120	310	230	220

2009~2012년 정부 출연기관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연속 교부를 받은 민간단체는 위 네 곳이었다. 2011년 경우 사업 예산이 약 12%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보조금이 줄었다.

2012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의 보조금을 늘게 된 이유에 대하여 000(영상콘텐츠 주무관)은 “현장에 가 보았더니 증액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늘리는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2. 26.).

(나) 2009~2012년 출연·보조사업 등 집행 내역 비교

2009년은 14곳, 2010년은 23곳, 2011년은 13곳, 2013년은 12곳 등이 출연·보조사업 대상자였으며 애니메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도의 경우 2009년에 없었던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2011년의 경우는 위 3개 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2012년에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 부산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보조금을 받았다.

4) 문체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14.08.13. 등록 자료.

라.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와 피해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블랙리스트 문서 및 법원 증거목록 등에서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체 사무국장 최유진, 이사 장형윤(애니메이션 감독)은 2009년 경 국정원 문서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있었고, 장형윤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 16.9.27현재’ 문서 7쪽, 문화예술 명예교사(6.21)에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⁵⁾에도 있다. 2018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 사전 조사 결과⁶⁾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최종명단 100인 중 위 문건에서 기재된 블랙리스트 인사 장형윤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장형윤은 나기용((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회장), 최유진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 9천473명의 명단 및 영상콘텐츠과 2655명 관리 리스트 에 등재 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년 이후 인디애니페스트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2. 27.).

제4절 |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가. 2010년 국고보조금 집행이 늦어진 것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009년 경 MB 블랙리스트 82명에 신청 단체 관련자가 2명이 있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은 있었으나 2010년도 보조금 집행이 늦어진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이지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5) 국정원 보도자료 2017. 10. 30.

6) 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블랙리스트 적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8. 1. 18.

나. 2011년 보조금 삭감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2009년 경 MB 블랙리스트 82명에 신청 단체 관련자가 2명이 있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은 있었으나 관련 예산 문서에서 2011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 정도 줄었고 2009~2012년 보조금 교부 단체들의 증감 부분을 검토한 결과,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지원 받았던 애니메이션 단체 3곳은 아예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보조금 삭감도 컸기 때문에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를 특정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다.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피해 사실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는 블랙리스트 문서에서 등재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단체의 회장 나기용, 이사 장형윤, 사무국장 최유진 등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1) 나기용: 9,473인 블랙리스트, 영상콘텐츠과 2,655명 관리 리스트 .
- (2) 장형윤: MB 블랙리스트 82명, 9,473인 블랙리스트, 영상콘텐츠과 2,655명 관리 리스트,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 16.9.27현재’ 문서,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2016년 6월 2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선정에서 배제 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
- (3) 최유진: MB 블랙리스트 82명, 9,473인 블랙리스트, 영상콘텐츠과 2,655명 관리 리스트.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부록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370

ISBN 979-11-6357-037-0

ISBN 979-11-6357-035-6 (세트)